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725-01

정책보고서 2020-11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



이태진
김미곤 · 김기태 · 송태민 · 우선희 · 김선 · 이정윤

【책임연구자】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공저)

【공동연구진】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송태민 삼육대학교 교수

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 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정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제출문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04월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32
제3절 기대 효과 및 연구의 한계	39
제2장 보건복지정책 관련 환경 변화와 복지 수요	41
제1절 보건복지정책 관련 환경 변화	43
제2절 보건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53
제3장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분석틀	63
제1절 보건복지정책 관련 인식조사 검토	65
제2절 조사표 구성 및 분석틀	87
제4장 보건복지정책 인식조사 분석 결과	99
제1절 복지정책 분야 분석 결과	101
제2절 인구정책 분야 분석 결과	157
제3절 보건의료정책 분야 분석 결과	194
제5장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복지정책 미래신호 예측	257
제1절 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259
제2절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261
제3절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 미래신호 탐색	277
제4절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 미래신호 예측	292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301
제1절 요약 및 함의	303
제2절 정책 제언	312
참고문헌	317
부록	323
부록 1. 연도별 보건복지정책 수요 및 인식조사 문항 비교	325
부록 2.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조사표	365
부록 3.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조사표	379
부록 4.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기초분석 결과표	393
부록 5.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기초분석 결과표	509

표 목차

〈표 3-1〉 2010~2016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개요	65
〈표 3-2〉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개요	68
〈표 3-3〉 사회조사 개요(최근 4년)	70
〈표 3-4〉 한국복지패널조사 개요	73
〈표 3-5〉 연도별 ISSP 및 KGSS의 핵심질문모듈	76
〈표 3-6〉 미시건 공공정책조사 개요	84
〈표 3-7〉 국민용 수요조사 설문지 문항 구성과 적용 원칙	91
〈표 4-1〉 [국민] 집단별 삶의 만족도	102
〈표 4-2〉 [국민] 집단별 분배 인식	104
〈표 4-3〉 [국민] 집단별 걱정거리(불안요인)	106
〈표 4-4〉 [국민] 집단별 보건복지 수준 인식 및 정책 만족도	109
〈표 4-5〉 [국민] 집단별 강화해야 할 복지정책 방향	112
〈표 4-6〉 [국민] 보건복지정책 확대와 세금(보험료) 부담 증가 동의 정도 교차 분석	116
〈표 4-7〉 [국민] 집단별 세금(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반대 이유	118
〈표 4-8〉 [전문가] 보건복지정책 확대 및 세금(보험료) 증가 동의 정도 교차 분석	129
〈표 4-9〉 [전문가] 연도별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원 방향	135
〈표 4-10〉 [전문가] 연도별 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139
〈표 4-11〉 [전문가] 연도별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144
〈표 4-12〉 [국민] 집단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평가	158
〈표 4-13〉 [국민] 집단별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160
〈표 4-14〉 [국민] 연도별 출산장려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61
〈표 4-15〉 [국민] 집단별 육아지원정책 방향	164
〈표 4-16〉 [국민] 집단별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대한 인식	166
〈표 4-17〉 [국민] 집단별 아동의 놀 권리 정책 확대에 대한 인식	168
〈표 4-18〉 [국민] 노후 생활에 있어 가장 염려되는 부분	170
〈표 4-19〉 [국민] 연도별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173
〈표 4-20〉 [국민] 집단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인지 여부	177
〈표 4-21〉 [국민] 집단별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정책	197
〈표 4-22〉 [국민] 집단별 동네 의원(의원급) 이용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1순위)	202
〈표 4-23〉 [국민] 집단별 동네 의원(의원급) 이용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2순위)	204
〈표 4-24〉 [국민] 연도별 의료서비스 항목별(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 만족도	206
〈표 4-25〉 [국민] 집단별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방안 선호도	209

〈표 4-26〉 [국민] 집단별 라돈침대, 액상 전자담배 등과 관련한 정부 개입에 대한 생각	213
〈표 4-27〉 [국민] 집단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	215
〈표 4-28〉 [국민] 집단별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	219
〈표 4-29〉 [전문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2014~2019년)	225
〈표 4-30〉 [전문가] 연도별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방안	227
〈표 4-31〉 [전문가] 연도별 의료서비스 항목별(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 만족도 및 평가	230
〈표 4-32〉 [전문가] 집단별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정책 선호도	234
〈표 4-33〉 [전문가] 집단별 향후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향	235
〈표 4-34〉 [전문가] 연도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선호도	237
〈표 4-35〉 [전문가] 집단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 선호도	238
〈표 4-36〉 [전문가] 집단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선호도	239
〈표 4-37〉 [전문가]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선호도	240
〈표 4-38〉 [전문가] 집단별 국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선호도	243
〈표 4-39〉 [전문가] 집단별 정부의 라돈침대, 액상 전자담배 등에 대한 개입 필요성 인식	244
〈표 4-40〉 [전문가] 집단별 좋은 죽음(웰다잉)을 위한 정책 선호도	245
〈표 4-41〉 [전문가] 집단별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	247
〈표 4-42〉 [전문가] 집단별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책 선호도	248
〈표 5-1〉 보건복지 관련 온라인문서(버즈) 현황	269
〈표 5-2〉 보건복지 관련 온라인문서(버즈) 현황_분기별	271
〈표 5-3〉 보건복지 관련 정책과 대상의 수요(감정) 교차분석	272
〈표 5-4〉 보건복지 관련 분야와 주요 이슈의 수요(감정) 교차분석	274
〈표 5-5〉 온라인 채널의 보건복지 정책과 주요 이슈의 키워드 분석	278
〈표 5-6〉 온라인 채널의 보건복지 정책과 주요 이슈의 분기별 키워드 순위변화(TF기준)	279
〈표 5-7〉 보건복지 정책과 주요 이슈의 가시성(DoV) 평균증가율과 평균단어 빈도	282
〈표 5-8〉 보건복지 정책과 주요 이슈의 확산성(DoD) 평균증가율과 평균문서 빈도	283
〈표 5-9〉 보건복지 정책과 주요 이슈 관련 키워드의 감정 분석과 대응방향(DoD 평균증가율 기준)	287
〈표 5-10〉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감성과 증가율	288
〈표 5-11〉 보건복지 정책과 주요 이슈 관련 키워드의 미래신호	291
〈표 5-12〉 2018년과 2019년의 보건복지 정책과 주요 이슈 관련 키워드의 미래신호 비교	292
〈표 5-13〉 보건복지 수요에 영향을 주는 정책요인	294
〈표 5-14〉 보건복지정책 수요예측 의사결정나무 모형에 대한 이익도표	296

그림 목차

[그림 1-1] 국민 조사표 구성 체계도	38
[그림 1-2] 전문가 조사표 구성 체계도	38
[그림 2-1] 주요국의 1850~2010년 소득 상위 5% 점유율 변화	44
[그림 2-2] OECD 국가의 노인 부양 비율	46
[그림 2-3] 경제성장률 장기 전망	49
[그림 2-4] 전세가격 지수 추이	50
[그림 2-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비 변화 추이	55
[그림 2-6] OECD 국가의 저임금근로자 비중(2018년 기준)	57
[그림 2-7] OECD 국가의 비임금근로자 비중	57
[그림 2-8] 소득불평등과 건강 및 사회문제	58
[그림 2-9] 사회적 이동성과 소득불평등간의 관계	59
[그림 3-1] 2010~2014년 정부 신뢰도와 정부의 사회보장 역할 인식	80
[그림 3-2] 2019년 보건복지정책 인식조사연구의 분석틀	97
[그림 4-1] [국민] 삶의 만족도	101
[그림 4-2] [국민] 분배 인식	103
[그림 4-3] [국민] 걱정거리(불안요인)	105
[그림 4-4] [국민] 보건복지 수준 인식 및 정책 만족도	108
[그림 4-5] [국민] 복지정책별 만족도	110
[그림 4-6] [국민] 강화해야 할 복지정책 방향	111
[그림 4-7] [국민] 보건복지정책 확대 시 중점 대상	114
[그림 4-8] [국민]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정책 확대 시 중점 대상	114
[그림 4-9]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인식	115
[그림 4-10] [국민] 보건복지정책 확대 및 세금(보험료) 부담 증가 동의 정도	116
[그림 4-11] [국민] 세금(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반대 이유	117
[그림 4-12] [국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동의 정도	119
[그림 4-13] [국민] 지역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동의 정도	119
[그림 4-14] [국민] 월평균 가구소득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동의 정도	120
[그림 4-15] [국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안정성에 대한 인식	120

[그림 4-16] [국민] 지역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안정성에 대한 인식	121
[그림 4-17] [국민]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및 신청 용이성에 대한 인식	122
[그림 4-18] [국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대상	122
[그림 4-19] [국민]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123
[그림 4-20] [국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124
[그림 4-21] [국민] 커뮤니케어를 위한 정책 방향	125
[그림 4-22] [전문가] 보건복지 수준 및 정책성과 평가	126
[그림 4-23] [전문가] 복지정책별 성과 평가	126
[그림 4-24] [전문가] 강화해야 할 복지정책 방향	127
[그림 4-25] [전문가] 국민들의 걱정거리(불안요인)	128
[그림 4-26] [전문가] 보건복지정책 확대 및 세금(보험료) 증가에 대한 동의 정도	129
[그림 4-27] [전문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동의 정도	130
[그림 4-28] [전문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안정성에 대한 인식	130
[그림 4-29] [전문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인식	131
[그림 4-30] [전문가] 생계급여의 개선을 위해 시급한 문제: 대상자 확대 vs. 급여수준 인상	132
[그림 4-31] [전문가] 자활급여 인상에 대한 동의 정도	132
[그림 4-32] [전문가] 수급자 및 차상위층에 대한 일자리 및 훈련 효과 인식	133
[그림 4-33] [전문가] 근로능력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원 방향	134
[그림 4-34] [전문가] 보건복지정책 확대 시 중점 대상	136
[그림 4-35] [전문가] 취약계층 보건복지정책 확대 시 중점 대상	137
[그림 4-36] [전문가] 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138
[그림 4-37] [전문가] 소득지원 정책 중 중점 추진 분야	140
[그림 4-38] [전문가] 서비스지원 정책 중 중점 추진 분야	141
[그림 4-39] [전문가]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책 개선 방향: 질 제고 vs. 제공기관 확충	141
[그림 4-40] [전문가]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142
[그림 4-41] [전문가]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142
[그림 4-42] [전문가] 커뮤니케어를 위한 정책 방향	143
[그림 4-43] [전문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대상	145
[그림 4-44] [국민-전문가] 보건복지수준 및 정책만족도(성과 평가)	146

[그림 4-45] [국민-전문가] 복지정책별 만족도(성과 평가)	147
[그림 4-46] [국민] 강화해야 할 복지정책 방향	148
[그림 4-47] [전문가] 강화해야 할 복지정책 동의 정도	148
[그림 4-48] [국민-전문가] 국민들의 걱정거리(불안요인)	149
[그림 4-49] [국민-전문가] 보건복지정책 확대 시 중점 대상	150
[그림 4-50] [국민-전문가] 취약계층 보건복지정책 확대 시 중점 대상	151
[그림 4-51] [국민-전문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에 대한 인식	151
[그림 4-52] [국민-전문가]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152
[그림 4-53] [국민-전문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대상	153
[그림 4-54] [국민-전문가]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153
[그림 4-55] [국민-전문가]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정책 방향	154
[그림 4-56] [국민-전문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 인식	155
[그림 4-57] [국민-전문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인식	155
[그림 4-58] [국민-전문가] 보건복지정책 확대 및 세금(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인식	156
[그림 4-59] [국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평가	157
[그림 4-60] [국민]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159
[그림 4-61] [국민] 육아지원정책 방향	163
[그림 4-62] [국민]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대한 인식	165
[그림 4-63] [국민] 아동의 놀이권 정책 확대에 대한 인식	167
[그림 4-64] [국민] 노후 생활에 있어 가장 염려되는 부분	169
[그림 4-65] [국민]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171
[그림 4-66] [국민] 집단별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172
[그림 4-67] [국민] 노후 준비방법 선호	174
[그림 4-68] [국민] 월평균 가구 소득별 노후 준비방법 선호(주된 방법)	175
[그림 4-69] [국민]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인지 여부	176
[그림 4-70] [국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에 대한 인식	178
[그림 4-71] [국민]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때 필요한 정부의 지원 선호	179
[그림 4-72] [국민] 지역별 노인을 부양할 때 필요한 정부의 지원 선호	179
[그림 4-73] [국민] 노인이 되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의 생활 계획	180

[그림 4-74] [국민] 집단별 노인이 되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의 생활 계획	181
[그림 4-75] [전문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평가	182
[그림 4-76] [전문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	182
[그림 4-77] [전문가] 육아지원정책 방향	183
[그림 4-78] [전문가] 아동의 놀이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인식	184
[그림 4-79] [전문가] 소속별 아동의 놀이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인식	185
[그림 4-80] [전문가]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185
[그림 4-81] [전문가] 기초연금 확대에 대한 인식	186
[그림 4-82] [전문가] 정치적 성향별 기초연금 확대에 대한 인식	187
[그림 4-83] [전문가]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방향	187
[그림 4-84] [전문가] 전공별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방향	188
[그림 4-85] [전문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189
[그림 4-86] [전문가]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때 필요한 정부의 지원 방향	189
[그림 4-87] [전문가] 전공별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때 필요한 정부의 지원 방향	190
[그림 4-88] [국민-전문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	191
[그림 4-89] [국민-전문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191
[그림 4-90] [국민-전문가] 육아지원정책 방향	192
[그림 4-91] [국민-전문가]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193
[그림 4-92] [국민-전문가]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때 필요한 지원 선호	194
[그림 4-93] [국민] 보건의료정책별 만족도	195
[그림 4-94] [국민]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정책	196
[그림 4-95] [국민] 동네(시·군·구 내)에 믿고 갈 수 있는 의료 기관 유무	198
[그림 4-96] [국민] 거주 지역별 동네(시·군·구 내)에 믿고 갈 수 있는 의료 기관 유무	199
[그림 4-97] [국민] 주관적 소득계층별 동네(시·군·구 내)에 믿고 갈 수 있는 의료 기관 유무	200
[그림 4-98] [국민] 동네 의원(의원급) 이용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1순위)	201
[그림 4-99] [국민] 동네 의원(의원급) 이용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2순위)	203
[그림 4-100] [국민]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동의	205
[그림 4-101] [국민] 의료서비스 항목별(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 만족도	205
[그림 4-102] [국민] 거주 지역별 의료서비스 항목별(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 만족도	207

[그림 4-103] [국민]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방안 선호도	208
[그림 4-104]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시 우선되어야 할 부분	210
[그림 4-105] [국민] 집단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시 우선되어야 할 부분	211
[그림 4-106] [국민] 라돈침대, 액상 전자담배 등과 관련한 정부 개입에 대한 생각	212
[그림 4-107] [국민]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부	214
[그림 4-108] [국민]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참여의향	216
[그림 4-109] [국민] 집단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참여의향	217
[그림 4-110] [국민] 집단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부별 참여의향	217
[그림 4-111] [국민]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	218
[그림 4-112] [국민]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상담 전화 서비스 인지도부	220
[그림 4-113] [국민] 연령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상담 전화 서비스 인지도부	221
[그림 4-114] [전문가] 전문가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수준에 대한 평가	222
[그림 4-115] [전문가] 지난 3년간(2017~2019)의 보건의료정책 영역 성과에 대한 평가	222
[그림 4-116] [전문가] 정부가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	223
[그림 4-117] [전문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	224
[그림 4-118] [전문가]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방안	226
[그림 4-119] [전문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동의	227
[그림 4-120] [전문가] 소속별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동의	228
[그림 4-121] [전문가] 의료서비스 항목별(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 평가	229
[그림 4-122] [전문가] 소속별 의료의 보장성 평가	229
[그림 4-123] [전문가] 동네의원 신뢰 및 이용 편리성 개선을 위한 방안	231
[그림 4-124] [전문가]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선호도	231
[그림 4-125] [전문가] 저소득층 의료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232
[그림 4-126] [전문가]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정책 선호도	233
[그림 4-127] [전문가] 향후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향	234
[그림 4-128] [전문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선호도	236
[그림 4-129] [전문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선호도	239
[그림 4-130] [전문가] 국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선호도	242
[그림 4-131] [전문가] 정부의 라돈침대, 액상 전자담배 등에 대한 개입 필요성 인식	243
[그림 4-132] [전문가] 좋은 죽음(웰다잉)을 위한 정책 선호도	245

[그림 4-133] [전문가]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	246
[그림 4-134] [전문가]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책 선호도	247
[그림 4-135] [전문가] 감염병 예방 관련 과제 중요도	249
[그림 4-136] [전문가] 의료서비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기술	250
[그림 4-137] [국민-전문가] 보건의료정책별 만족도(성과평가)	251
[그림 4-138] [국민]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정책	252
[그림 4-139] [전문가]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	252
[그림 4-140] [국민-전문가] 의료서비스 항목별(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 만족도 및 평가	253
[그림 4-141] [국민-전문가] 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생각	254
[그림 4-142] [국민-전문가] 정부의 라돈침대, 액상 전자담배 등에 관한 정부 개입에 대한 인식	254
[그림 4-143] [국민-전문가]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	255
[그림 5-1] 보건복지 주제 분류 분석 절차	264
[그림 5-2] 보건복지 소셜 빅데이터 분석 절차 및 방법	265
[그림 5-3] 보건복지 관련 정책과 대상의 수요(감정) 변화	273
[그림 5-4] 보건복지 관련 분야와 주요 이슈의 수요(감정) 변화	276
[그림 5-5] 보건복지 정책과 주요 이슈의 분기별 키워드 변화	281
[그림 5-6] 보건복지 관련 정책과 주요 이슈에 대한 감성과 증가율(DoV 평균증가율 기준)	286
[그림 5-7] 보건복지 관련 정책과 주요 이슈에 대한 감성과 증가율(DoD 평균증가율 기준)	286
[그림 5-8] 보건복지 관련 정책과 주요 이슈 키워드 KEM(중요도)	290
[그림 5-9] 보건복지 관련 정책과 주요 이슈 키워드 KIM(확산도)	290
[그림 5-10] 랜덤포레스트 모델의 보건복지정책의 중요도	293
[그림 5-11] 보건복지정책 수요 예측의 의사결정나무 모형	296
[그림 5-12] 보건복지정책의 수요예측 연관규칙	298

1. 연구 목적 및 분석 자료

□ 본 연구는 현 정부의 후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보건복지정책 방향의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정책 국정과제 및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욕구 파악을 위해 국민과 보건복지 관련 경제·사회·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전반기 정책성과와 미진한 점 및 보완할 점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함.

-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통계적 방법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추출하였으며, 보건복지정책 현안 진단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대상 조사를 함께 수행함.
- 또한 조사표를 통한 국민 및 전문가 인식조사 이외에도 온라인에서 형성되는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여 2019년 기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다각도로 확인함.

□ 분석자료

○ 국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 국민인식 조사
 - 대상: 만 19세 이상의 국민 1,000명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한 조사원 면접조사
 - 표본 추출: 주민등록 인구통계자료(2019년 10월 기준)를 모집단으로 성, 연령, 지역, 취업 등의 인구비례를 고려한 다단계 층화추출법
 - 조사 기간: 2019년 12월
 - 신뢰 수준: 95%±3.1%p

- 전문가 조사

- 대상: 경상·법정, 인문·사회, 보건·의료 등 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과 언론사 소속 전문가 풀을 이용한 임의표집 전문가 120명(121명 완료)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한 자기응답식 웹메일조사
- 조사 기간: 2019년 12월

○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 분석

- 분석 자료: 총 315개의 트위터 등의 온라인 채널에서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를 수집하기 위해 원하는 특정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크롤러, Crawler)을 이용
- 자료 수집 기간: 2019년 1월~9월

2. 대국민 및 전문가 인식조사 주요 결과

가. 복지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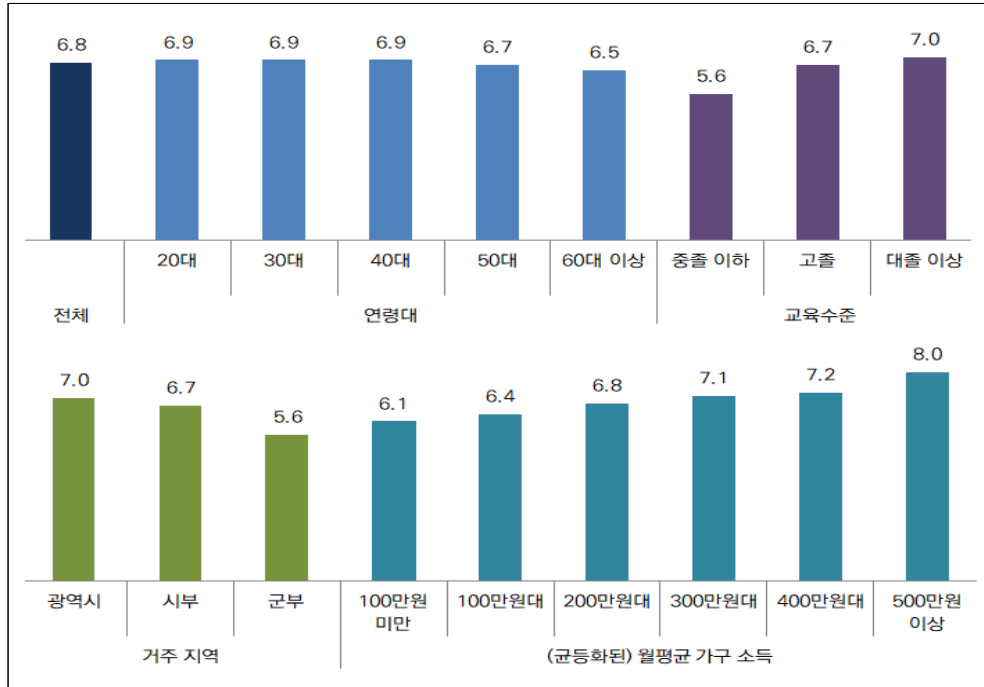
□ 2019년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11점 만점에 평균 6.8점으로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 결과 6.6점(김미곤 외, 2018)보다 다소 상승함.

○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소득계층 및 균등화된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또한 시부와 군부보다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비정규직 보다 정규직인 경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반면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요약 그림 1] 삶의 만족도

(단위: 점)



주: “귀하는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에 대해 ‘①전혀 만족하지 않는다~⑩매우 만족한다’ 11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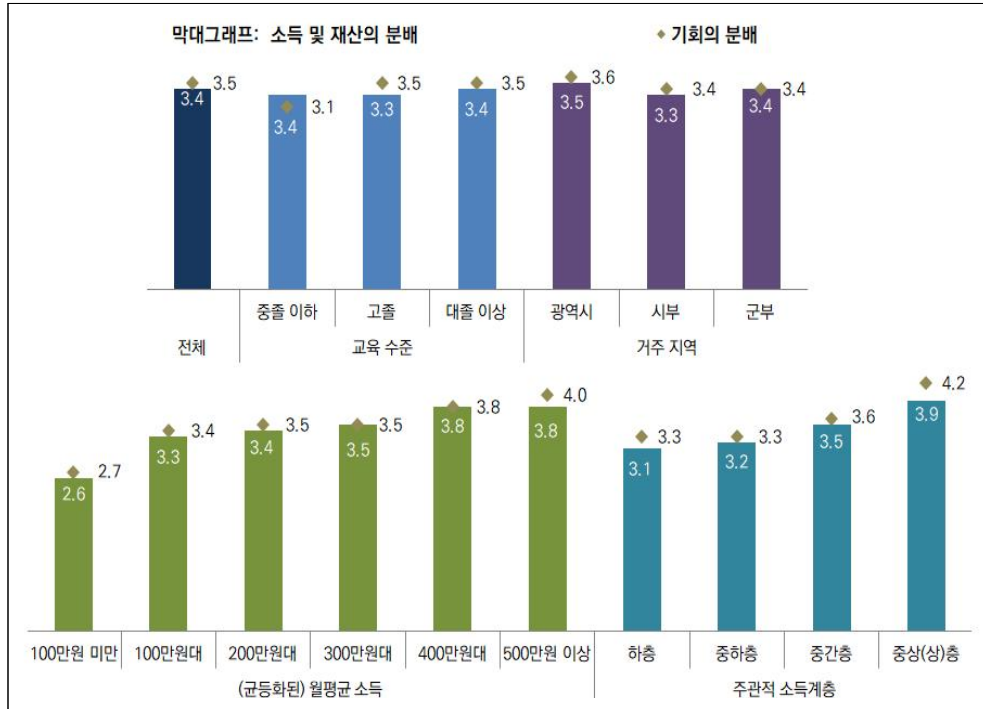
□ 소득 및 재산, 그리고 기회의 평등(공평) 인식은 각각 3.4점, 3.5점으로 나타남(6점 만점). 아주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기회의 분배가 소득 및 재산의 분배보다 약간 더 평등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음.

○ 균등화된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분배 인식은 집단별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 및 재산, 그리고 기회의 분배가 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또한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시 및 군부보다 분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남.

○ 한편,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소득 및 재산 분배 인식의 집단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나, 기회의 분배 인식에 있어서는 집단별 차이가 발견됨.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회의 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함.

[요약 그림 2] 소득 및 재산, 기회의 분배 인식

(단위: 점)



주: “귀하는 우리나라의 소득 및 재산의 분배, 그리고 기회가 얼마나 평등(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불평등하다~⑥매우 평등하다’ 6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복지 수준 인식과 정책 만족도는 각각 평균 4.2점, 4.1점으로 ‘다소 높다(4.0점)’, ‘다소 만족(4.0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남(6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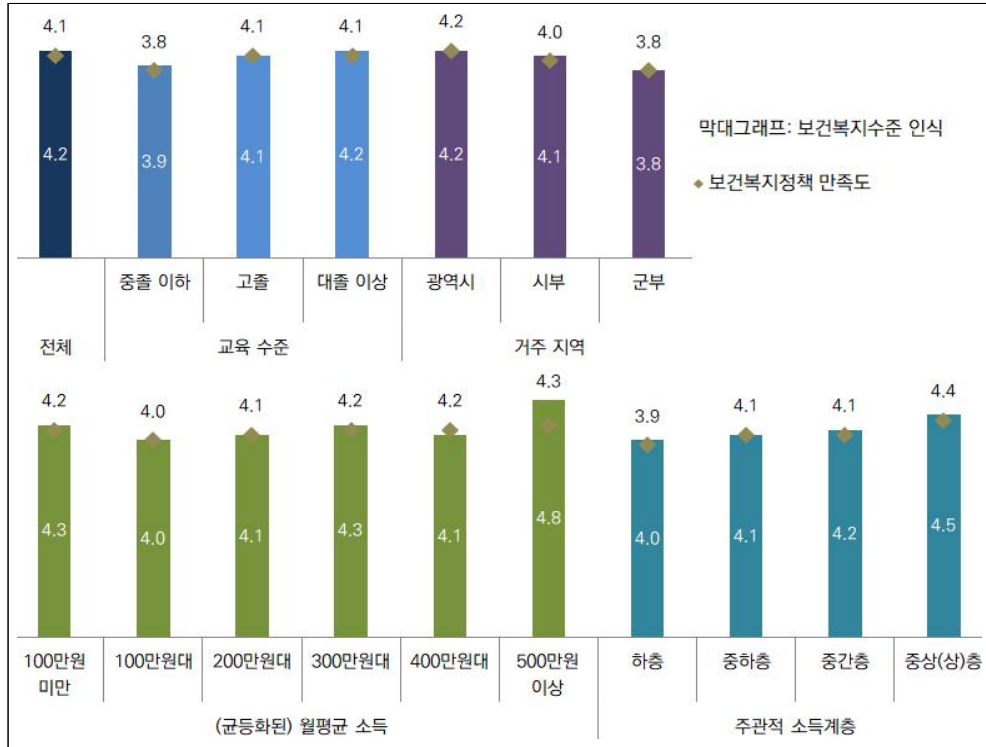
○ 보건복지 수준 및 정책 만족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광역시나 시부에 비해 군부의 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단, 균등화된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그 경향성을 찾을 수 없음.

○ 성별과 연령, 가구원 수, 경제활동상태 및 고용안정성 등에 따라서는 보건복지 수준 인식 및 정책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요약 그림 3] 보건복지 수준인식 및 정책 만족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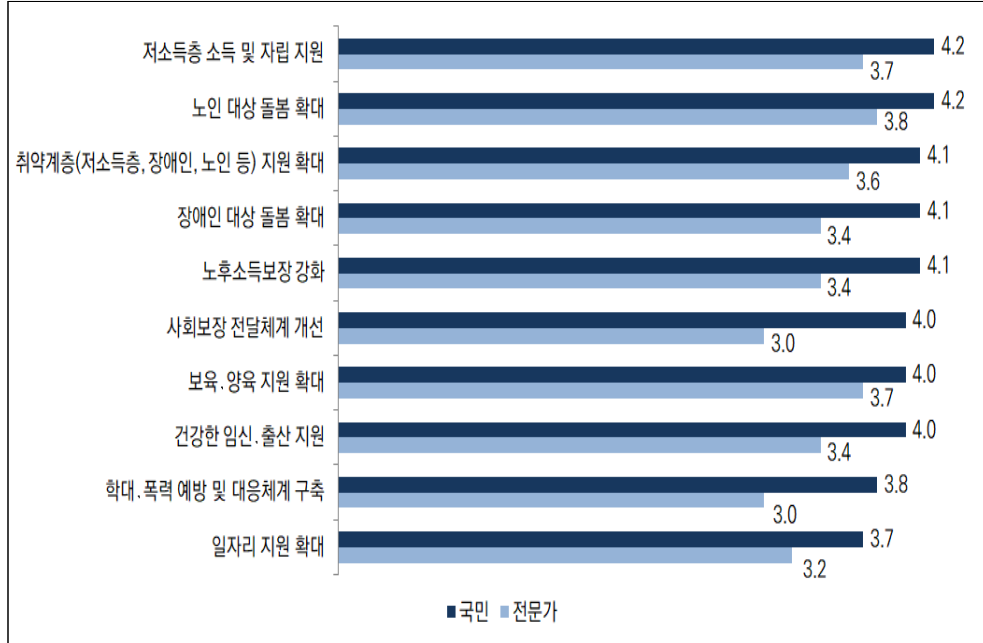
주: “귀하는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낮다~⑥매우 높다’, “귀하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불만족~⑥매우 만족’ 6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국민은 전문가보다 복지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복지정책의 정책 만족도(성과 평가)에 있어 국민과 전문가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발견됨.
- 국민은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4.2점), ‘노인 대상 돌봄 확대’(4.2점) 정책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전문가는 ‘노인 대상 돌봄 확대’(3.8점)의 성과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6점 만점).
- 또한 가장 만족도(성과)가 낮은 정책도 국민은 ‘일자리 지원 확대’(3.7점), 전문가는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3.0점),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3.0점)으로 의견의 차이를 보임(6점 만점).

[요약 그림 4] 복지정책별 만족도(성과 평가)

(단위: 점)



주: 1) 국민은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음의 복지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불만족~⑥매우 만족’ 6점 척도로 측정됨.

2) 전문가는 “귀하는 전문가로서 다음의 각 복지정책 영역의 지난 3년간(2017-2019)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미흡~⑥매우 우수’ 6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국민들이 느끼는 걱정거리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일자리’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다만 일자리라고 응답한 비율이 국민은 27.4%, 전문가 60.3%로 나타나 국민 스스로보다 전문가가 일자리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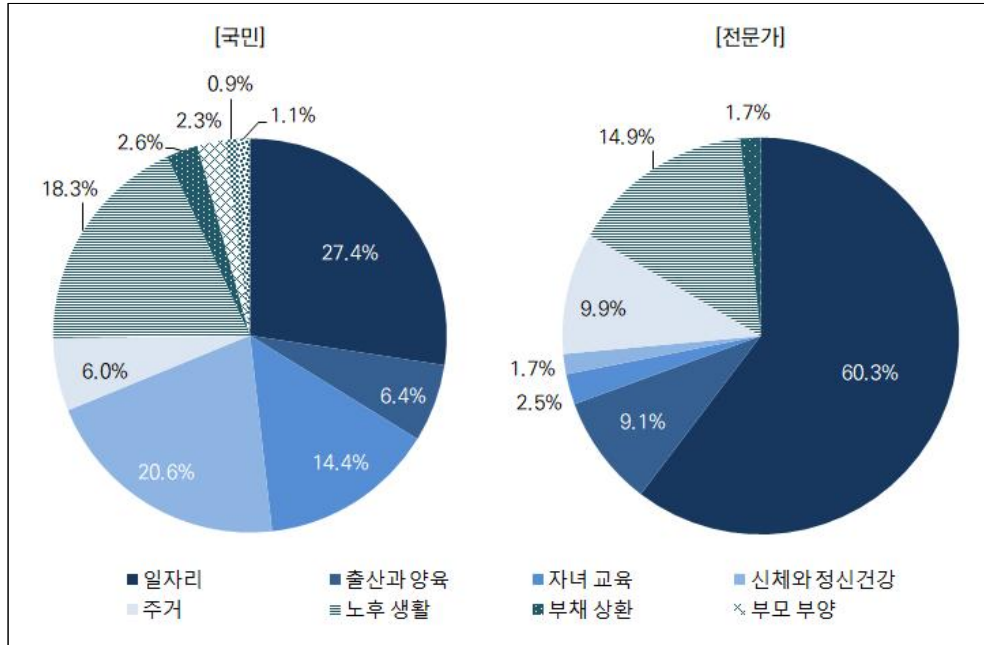
○ 또한 일자리 다음 걱정거리로 국민은 ‘신체와 정신건강’(20.6%)을 꼽았으나 전문가는 이에 대해 1.7%로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자녀교육’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국민과 전문가의 걱정거리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민은 ‘일자리’(27.4%) > ‘신체와 건강’(20.6%) > ‘노후 생활’(18.3%) > ‘자녀 교육’(14.4%) 순으로 나타나고, 전문가는 ‘일자리’(60.3%) > ‘노후 생활’(14.9%) > ‘주거’(9.9%) > ‘출산과 양육’(9.1%) 순으로 나타남.

[요약 그림 5] 국민들의 걱정거리(불안요인)

(단위: %)



주: 1) 국민은 “귀하가 느끼는 현재의 걱정거리(불안요인)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2) 전문가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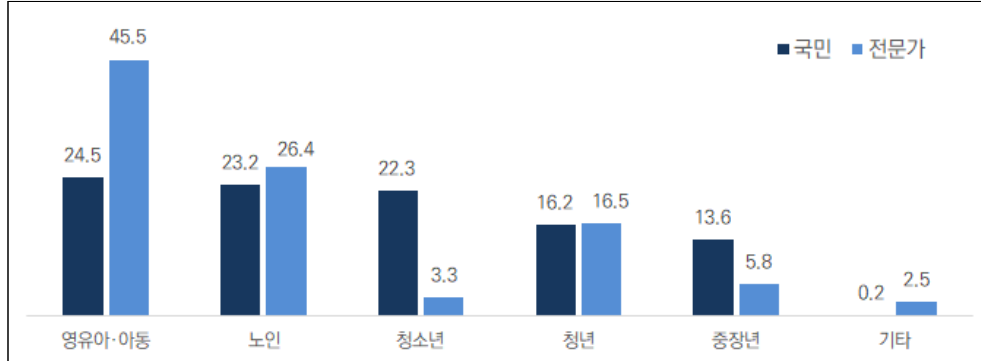
□ 보건복지정책 확대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으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영유아·아동’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한편 전문가는 국민보다 영유아·아동에 대한 정책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국민 24.5%, 전문가 45.5%).

○ 또한 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국민과 전문가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청소년이 주요 대상이라고 보는 국민은 22.3%이지만 전문가는 3.3%에 불과함.

[요약 그림 6] 보건복지정책 확대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보건복지정책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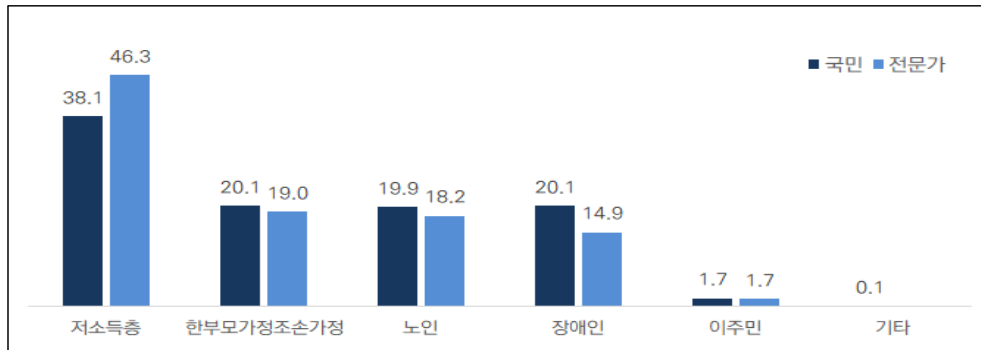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을 좁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정책 확대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저소득층’으로 모아짐(국민 38.1%, 전문가 46.3%).

○ 한부모가정·조손가정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인식은 국민과 전문가가 유사한 수준을 보이지만, 장애인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의 주요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국민이 전문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각각 20.1%, 14.9%).

[요약 그림 7] 취약계층 대상 보건복지정책 확대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정책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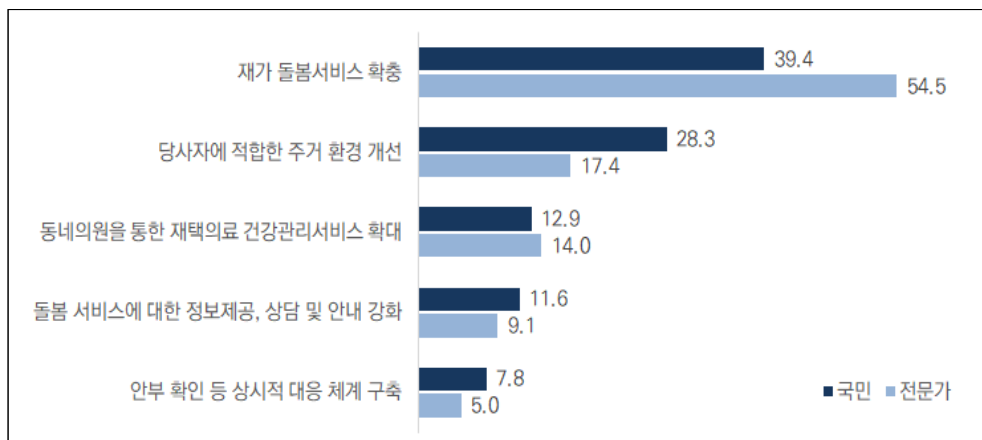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방향으로 국민과 전문가 모두 ‘재가 돌봄 서비스 확충’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국민 39.4%, 전문가 54.5%).

○ 다음으로는 ‘당사자에 적합한 주거 환경 개선’ > ‘동네 의원을 통한 재택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안내 강화’ > ‘안부 확인 등 상시적 체계 구축’ 순으로 국민과 전문가의 정책 선호가 일치함.

[요약 그림 8]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정책 방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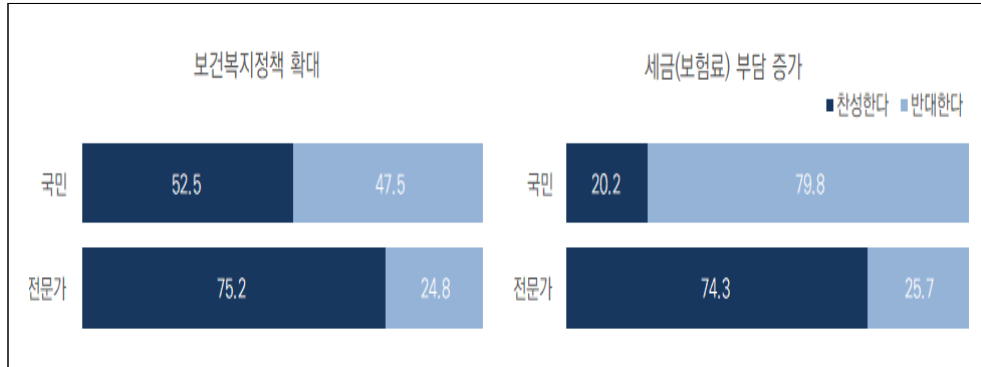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커뮤니티케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보건복지정책 확대에 대해 국민은 52.5%, 전문가는 75.2%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세금(보험료) 부담에 대한 동의 정도는 국민은 79.8%, 전문가는 25.7%가 ‘반대’한다고 응답함.

○ 국민의 경우, 복지확대는 찬성하지만 세금 부담 증가는 반대하는 집단이 전체 응답자의 34.2%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이는 2018년 49.5%였던 것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음(김미곤 외, 2018).

[요약 그림 9] 보건복지정책 확대 및 세금(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1) 보건복지정책 확대는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반대한다~⑥매우 찬성한다’, 세금(보험료) 부담 증가는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반대한다~⑥매우 찬성한다’ 6점 척도로 측정됨.

2) ‘찬성한다’는 ‘다소 찬성한다+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매우 반대한다+반대한다+다소 반대한다’로 응답한 비율의 합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나. 인구정책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해 국민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반해, 전문가의 평가는 부정적이었음.

○ 국민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해 다소 우수(37.2%), 우수(14.7%), 매우 우수(5.2%)로 답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57.2%이었음. 반면 전문가는 미흡(38.8%), 다소 미흡(31.0%), 매우 미흡(23.1%)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92.9%이었음.

○ 이를 6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국민은 평균 3.7점, 전문가는 2.2점으로 평가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평가결과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소득계층, 최종학력, 경제활동 상태,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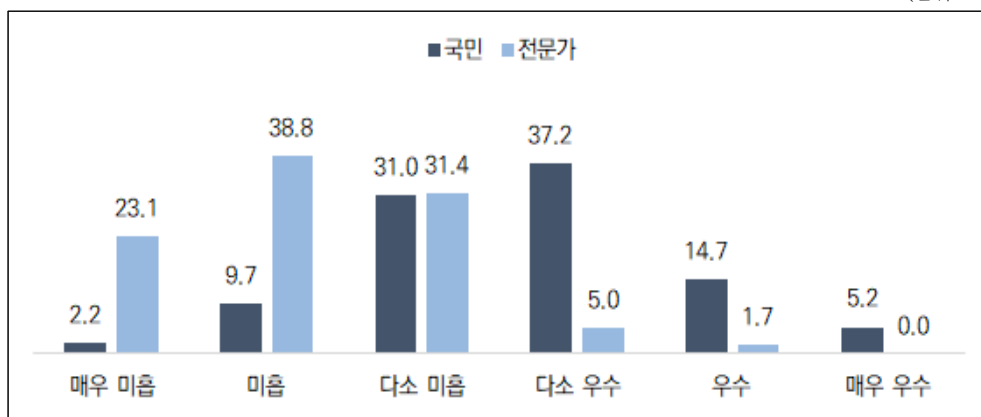
- 고졸(60.3%), 중상층(71.7%), 광역시 거주(64%), 가구원 4명 이상 가구

(51.6%),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59.3%)의 경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았음.

- 반면, 중졸이하(60.3%), 하층(59.7%), 시부 거주(49.9%), 가구원 2명 가구(52.3%), 임시일용직(48.5%), 소득 400만원대 가구의 경우는 정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남.

[요약 그림 1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미흡~⑥매우 우수’ 6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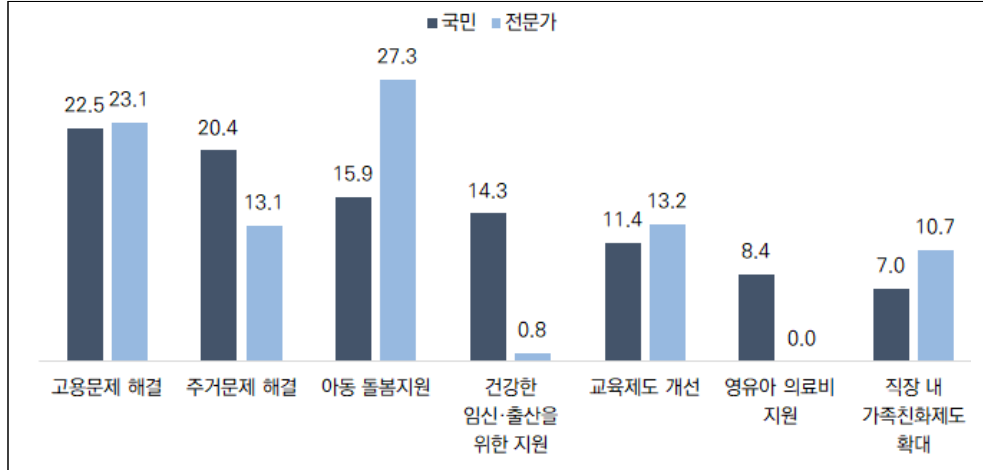
□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정부가 노력할 부분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는 공통적으로 ‘고용문제 해결’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았음.

○ 국민은 ‘고용문제 해결’(22.5%)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주거문제 해결’(20.4%), ‘아동 돌봄지원’(15.9%),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14.3%), ‘교육제도 개선’(11.4%), ‘영유아 의료비 지원’(8.4%),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7.0%) 순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전문가는 ‘아동 돌봄지원’(27.3%)이 저출산 해소를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고용문제 해결’(23.1%), ‘주거문제 해결’(13.1%), ‘교육제도 개선’(13.2%), ‘기타’(11.6%), ‘직장 내 가족 친화제도 확대’(10.7%) 순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요약 그림 11]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노인 일자리 확대’에 대한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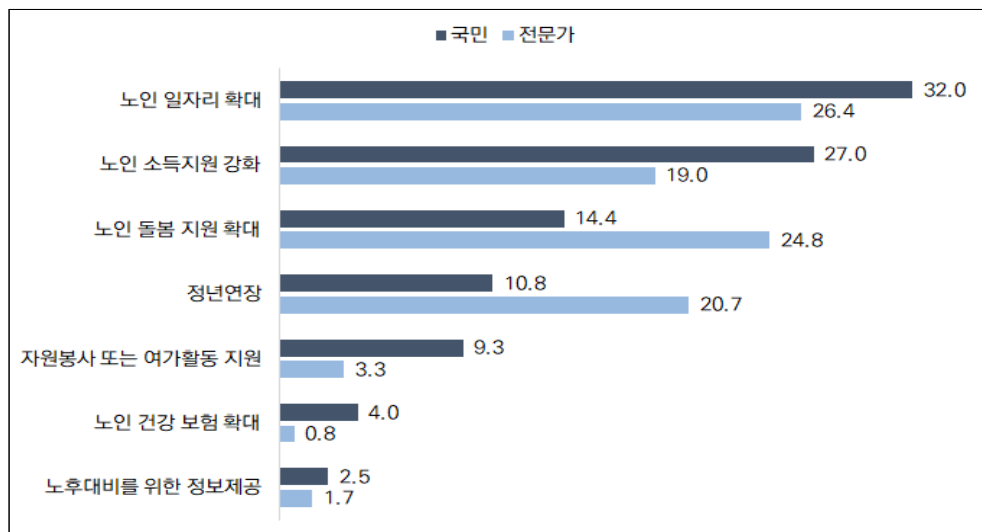
○ 국민은 ‘노인 일자리 확대’(32.0%), ‘노인 소득지원 강화’(27.0%), ‘노인 돌봄 지원 확대’(14.4%), ‘정년연장’(10.8%),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9.3%), ‘노인 건강 보험 확대’(4.0%), ‘노후대비를 위한 정보제공’(2.5%) 순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전문가는 ‘노인 일자리 확대’(26.4%), ‘노인 돌봄 지원 확대’(24.8%), ‘정년 연장’(20.7%), ‘노인 소득 지원 강화’(19.0%), ‘자원봉사 또는 여가 활동 지원’(3.3%), ‘노후대비를 위한 정보 제공’(1.7%), ‘노인 건강 보험 확대’(0.8%) 순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음.

○ 2018년 조사(김미곤 외, 2018)에서도 국민, 전문가 모두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이 고령화 대응 시 가장 필요한 지원이라고 응답한 바 있어, 노인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음.

[요약 그림 12]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때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 국민은 ‘경제적 지원’(38.6%)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는 ‘재가요양·돌봄 서비스’(62.0%)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국민은 ‘경제적 지원’ 다음으로 ‘재가요양·돌봄 서비스 확대’(26.3%), ‘간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18.2%), ‘양질의 요양시설 확대’(16.7%) 순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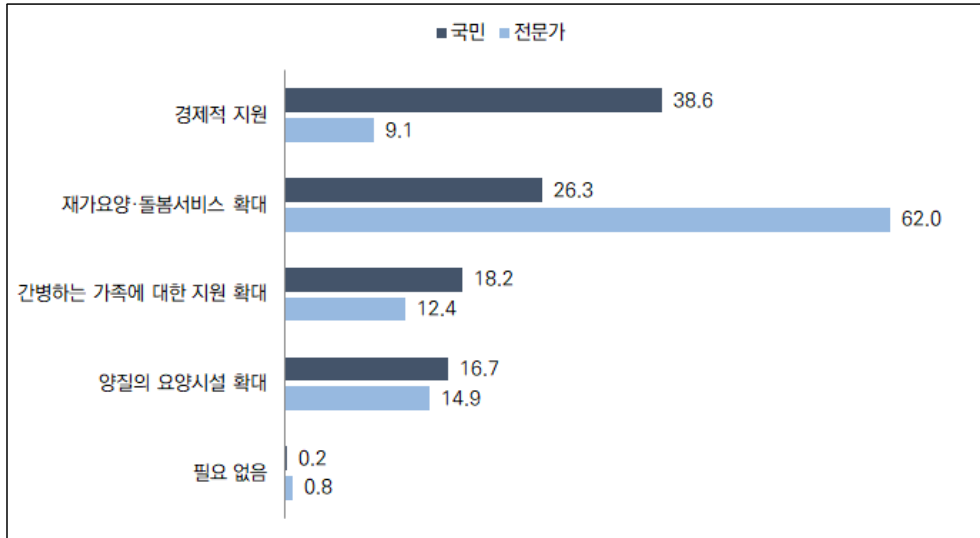
○ 전문가는 ‘재가요양·돌봄서비스 확대’ 다음으로 ‘양질의 요양시설 확대’(14.9%), ‘간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12.4%), ‘경제적 지원’(9.1%), ‘필요 없음’(0.8%) 순으로 응답함.

○ 노인 부양에 따른 욕구는 거주 지역에 따라 통계적 차이가 있었는데, 광역시, 시부 거주자일 경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7.1%, 44.0%로 높게 나타난 반면, 군부 거주자의 경우 ‘재가요양·돌봄 서비스 확대’(30.4%), ‘간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29.1%)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군부에서 경제적인 지원 보다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여전히 노인 돌봄 인프라가 미흡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요약 그림 13]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때 필요한 지원 선호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때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다. 보건의료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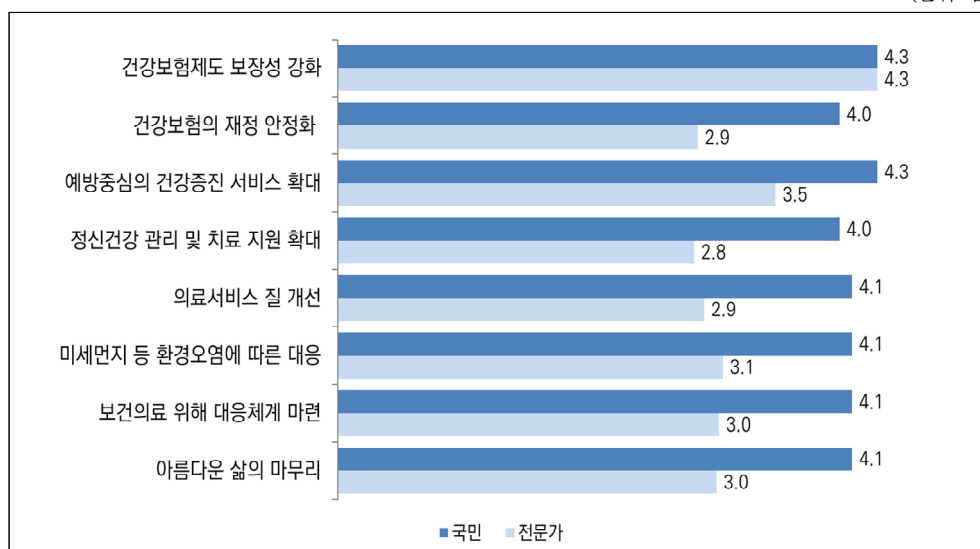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국민에게는 만족도를, 전문가에게는 지난 3년간(2017~2019년)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하였음. 국민은 평균 4.1점, 전문가는 평균 3.2점으로 나타남(6점 만점).

○ 국민은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와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등)’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4.3점으로 가장 높았음. 전문가 성과 평가도 ‘건강 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가 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국민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정책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와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 확대(자살예방,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등)’(각각 4.0점)로 나타남. 전문가 평가도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 확대(자살예방,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등)’에서 2.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요약 그림 14] 보건의료정책별 만족도(국민), 성과(전문가)

(단위: 점)



주: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음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전문가로서 각 보건의료정책 영역의 지난 3년간(2017-2019)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에 대해 ‘① 매우 불만족(매우 미흡)~⑥ 매우 만족(매우 우수)’ 6점 척도로 측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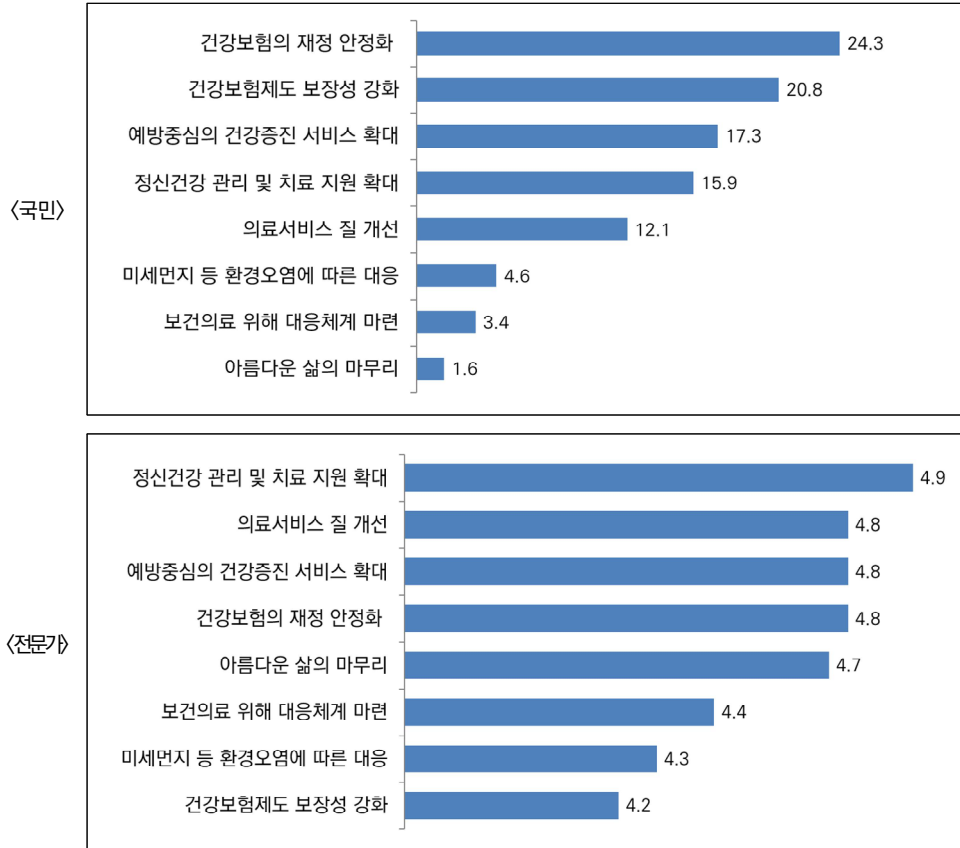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국민은 가장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24.3%로 가장 많이 선택함. 전문가는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 확대(자살예방,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등)’에 대한 동의 정도가 4.9점(6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응답은 2018년 조사결과(김미곤 외, 2018)와 대체로 유사하나 국민과 전문가 모두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음.

[요약 그림 15]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정책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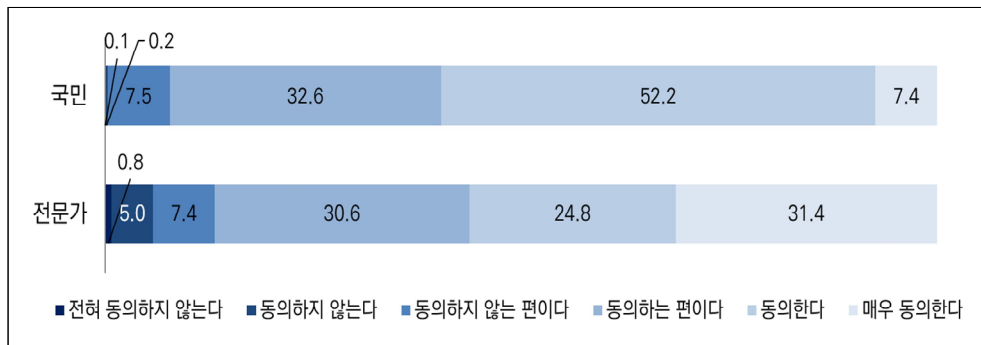
주: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보건의료정책 중 보다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이며,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다음의 보건의료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해주시오.”에 대해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⑥ 매우 동의함’ 6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대해서 국민은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2.2%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가는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국민과 전문가 모두 동의하는 쪽의 응답 비율이 92.2%, 86.8%로 매우 높게 나타나 정부의 보건의료 인력 확충 노력의 시급성을 확인할 수 있음.

[요약 그림 16]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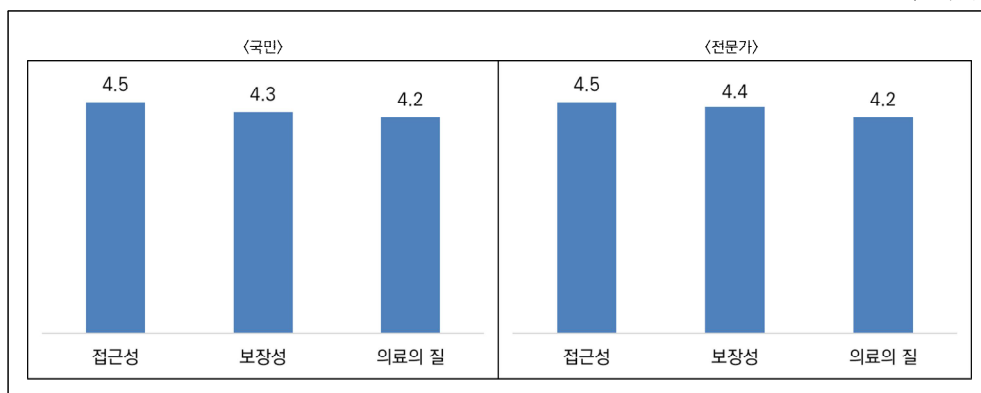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의료서비스 항목(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에 대한 국민 만족도 및 전문가 평가는 ‘의료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

○ 다음으로 ‘의료의 보장성’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가 각각 4.3점, 4.4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의 질’에 대해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각각 4.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

[요약 그림 17] 의료서비스 항목별(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 만족도 및 평가

(단위: 점)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의료와 관련한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평가)하십니까?”에 대해 ‘① 매우 불만족(매우 부정적)~⑥ 매우 만족(매우 긍정적)’ 6점 척도로 측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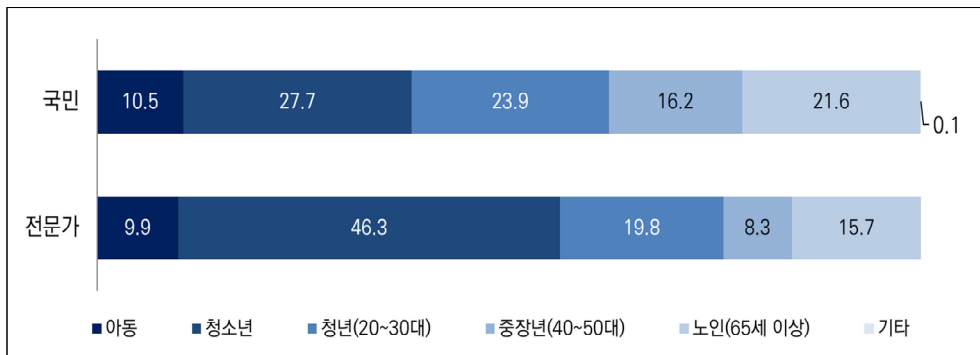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으로 국민과 전문가 모두 ‘청소년’을 꼽음(각각 27.7%, 46.3%).

○ 청소년 다음으로 국민은 ‘청년’(23.9%), ‘노인’(21.6%), ‘중장년’(16.2%), ‘아동’(10.5%)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전문가는 ‘청년’(19.8%), ‘노인’(15.7%), ‘아동’(9.9%), ‘중장년’(8.3%) 순으로 응답하였음.

[요약 그림 18]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

(단위: %)



주: “귀하는(전문가로서)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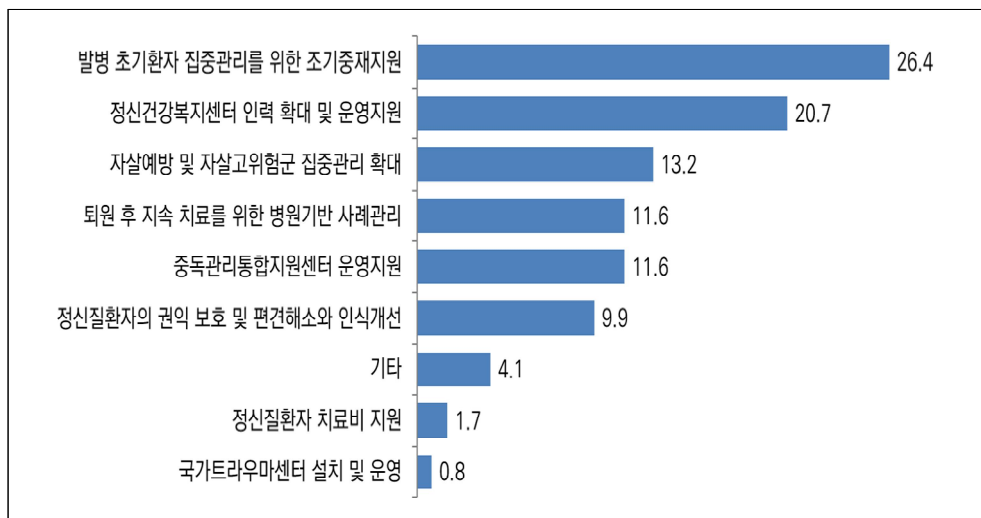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는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발병 초기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중재지원’(26.4%)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대 및 운영지원’도 20.7%로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살 예방 및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확대’(13.2%), ‘퇴원 후 지속 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11.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11.6%)도 10.0%이상의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음.

[요약 그림 19]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책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는 감염병 예방 관련 과제 중에서 ‘초기격리조치, 조기 역학조사 등 확대’(50.4%)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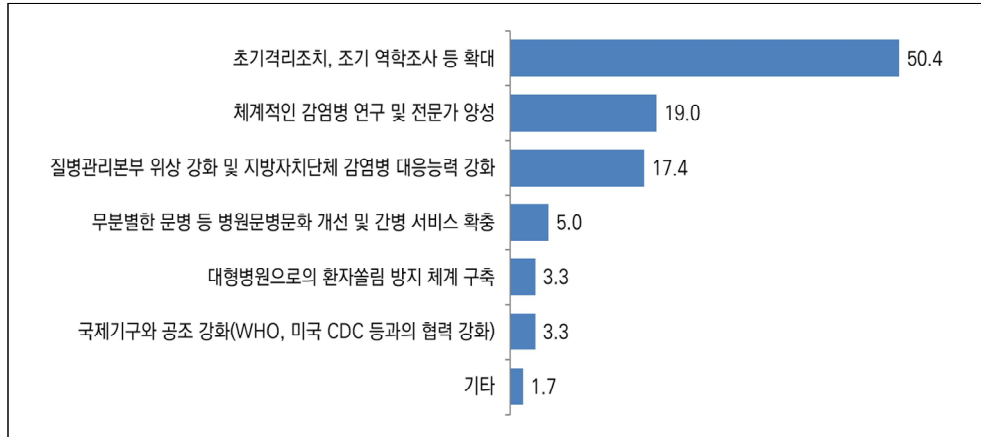
○ 다음으로는 ‘체계적인 감염병 연구 및 전문가 양성’(19.0%), ‘질병관리본부 위상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17.4%) 등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 다시 말해, 정부는 감염 의심자들에 대한 빠른 검사를 통해 초기에 확진자를 선별 및 격리 조치하는 동시에 정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 또한 초기에 격리하는 등 감염병 확산에 대해 초기 대응에 집중하고 있음.

[요약 그림 20] 감염병 예방 관련 과제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다음의 감염병 예방 관련 과제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3.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 정책 미래신호 예측

□ 분석자료 및 대상

- 본 분석에서는 292개의 온라인 뉴스사이트, 4개의 블로그(네이버, 티스토리, 네이트, 다음), 2개의 카페(네이버, 다음), 1개의 SNS(트위터), 16개의 게시판(네이버지식인, 네이트지식, 네이트톡, 네이트판 등)의 총 315개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집 가능한 텍스트 기반의 웹문서(버즈)를 소셜 빅데이터로 정의하였음.
- 보건복지 관련 토픽의 수집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9. 1. 1~2019. 9. 30까지 해당 채널에서 요일, 주말, 휴일을 고려하지 않고 매 시간단위로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총 3,176,017건(2019년 1/4분기: 956,885건, 2019년 2/4분기: 891,203건, 2019년 3/4분기: 1,327,929건)의 텍스트(Text) 문서를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시켰음.

□ 분석결과1 : 감성분석 결과

- 긍정 감정과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모두 높은 영역인 1사분면은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가 주요 정책 방안이 될 수 있음.

- 1사분면에 속하는 사례를 긍정 감정이 높은 순서에 따라 나열하면, 희망사다리, 헬스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노인복지, 무상복지, 방문요양, 4차산업혁명, 돌봄요양, 공공보건의료, AI, 의료서비스, 의료정보, 건강증진, 장애인복지의 순임.
- 2사분면은 긍정 감정은 상대적으로 높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으로, 이 경우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국민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자립지원, 사회서비스,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정책, 복지자원, 보건산업, 기초생활보장, 아동복지, 보육정책, 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급여가 2사분면에 속함.
- 3사분면은 긍정 감정과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모두 낮은 영역으로, 이 경우 긍정 감정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에 대한 검토 및 정책 설계에서 잘못이 없는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
 - 여기에 속하는 키워드는 건강보험, 기초연금, 생명윤리, 국민연금, 일자리, 청년실업, 출산율, 정신건강, 연명의료, 자살, 성폭력, 스튜어드십, 포폴리즘임.
- 4사분면은 긍정 감정이 상대적으로 낮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으로서, 이 경우 정책이 국민의 반감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으므로(특히, 반대 감정이 더 높은 경우) 정책설계를 보완 및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여기에 속하는 키워드는 출산정책, 원격의료, 비만, 개인정보, 감염병관리, 담배, 정신질환자, 부정수급, 인권학대, 아동학대, 생리대임.

〈요약 표 1〉 보건복지 정책과 주요 이슈 관련 키워드의 감정 분석과 대응방향

구분	예상되는 리스크 관리	정책 홍보 강화	정책설계 점검	정책설계 보완
	1/4 분면	2/4 분면	3/4 분면	4/4 분면
주요 키워드	희망사다리, 헬스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노인복지, 무상복지, 방문요양, 4차산업혁명, 돌봄요양, 공공보건의료, AI, 의료서비스, 의료정보, 건강증진, 장애인복지	자립지원, 사회서비스,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정책, 복지자원, 보건산업, 기초생활보장, 아동복지, 보육정책, 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급여	건강보험, 기초연금, 생명윤리, 국민연금, 일자리, 청년실업, 출산율, 정신건강, 연명의료, 자살, 성폭력, 스튜어드십, 포폴리즘	출산정책, 원격의료, 비만, 개인정보, 감염병관리, 담배, 정신질환자, 부정수급, 인권학대, 아동학대, 생리대

□ 분석결과2 : 키워드 미래 탐색

○ KEM과 KIM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강신호(1사분면)에는 4차산업혁명, AI, 노인복지, 돌봄요양, 비만, 장애인복지, 담배, 감염병 관리, 치매국가책임제, 무상복지, 개인정보가 포함되었고, 약신호(2사분면)에는 생리대, 원격의료, 정신 질환자, 방문요양, 희망사다리, 의료정보, 공공보건의료, 인권학대, 부정수급, 아동학대, 헬스케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약신호인 2사분면에는 생리대 이슈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들 키워드가 시간이 지나면 강신호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KIM의 4사분면에만 나타난 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는 국민연금, 복지자원, 보육정책,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일자리, 아동복지, 사회서비스로 나타났으며, KIM의 3사분면에만 나타난 잠재신호는 포폴리즘, 자립지원, 보건의료정책, 성폭력, 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급여, 출산율, 청년실업, 연명의료, 생명윤리, 실손의료보험, 기초연금, 스튜어드십으로 나타났다.

- 비만 이슈는 강신호이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연명의료와 생명윤리는 중요도(KEM)와 확산도(KIM) 측면에서 모두 잠재신호로 나타나 연명의료와 생명윤리 대한 지속적인 정책 개발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요약 표 2〉 보건복지 정책과 주요 이슈 관련 키워드의 미래신호

구분	잠재신호 (Latent signal)	약신호 (Weak Signal)	강신호 (Strong signal)	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 (Strong but low increasing signal)
	3/4 분면	2/4 분면	1/4 분면	4/4 분면
중요도 (KEM)	포플리즘, 자립지원, 보건의료정책, 성폭력, 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급여, 출산율, 청년실업, 연명의료, 생명윤리, 실손의료보험, 기초연금, 스튜어디십	생리대, 원격의료, 정신질환자, 방문요양, 희망사다리, 의료정보, 공공보건의료, 인권학대, 부정수급, 아동학대, 헬스케어	4차산업혁명, AI, 노인복지, 돌봄요양, 보건산업, 비만, 장애인복지, 담배, 감염병관리, 정신건강, 자살, 치매국가책임제, 무상복지, 개인정보	국민연금, 복지자원, 건강증진, 보육정책,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일자리, 출산정책, 아동복지, 의료서비스, 사회서비스
확산도 (KIM)	자립지원, 간병통합서비스, 보건의료정책, 포플리즘, 출산율, 성폭력, 의료급여, 청년실업, 연명의료, 생명윤리, 실손의료보험, 기초연금, 스튜어디십	생리대, 의료정보, 헬스케어, 방문요양, 희망사다리, 정신질환자, 부정수급, 원격의료, 공공보건의료, 인권학대, 아동학대	4차산업혁명, AI, 무상복지, 노인복지, 건강증진, 출산정책, 장애인복지, 돌봄요양, 비만, 개인정보, 감염병관리, 담배, 의료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복지자원, 기초생활보장, 보육정책, 국민연금, 건강보험, 일자리, 아동복지, 사회서비스, 보건산업 정신건강, 자살
주요 신호	포플리즘, 자립지원, 보건의료정책, 성폭력, 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급여, 출산율, 청년실업, 연명의료, 생명윤리, 실손의료보험, 기초연금, 스튜어디십	생리대, 원격의료, 정신질환자, 방문요양, 희망사다리, 의료정보, 공공보건의료, 인권학대, 부정수급, 아동학대, 헬스케어	4차산업혁명, AI, 노인복지, 돌봄요양, 비만, 장애인복지, 담배, 감염병관리, 치매국가책임제, 무상복지, 개인정보	국민연금, 복지자원, 보육정책,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일자리, 아동복지, 사회서비스

□ 분석결과 3: 랜덤포레스트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보건복지정책 예측

○ 랜덤포레스트 분석 결과 보건복지 수요(찬성, 반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노인복지’ 정책이었음.

- 그 뒤를 이어 복지자원, 감염병관리, 인권학대, 일자리, 무상복지, 4차산업혁명, 보육정책, 국민연금, 사회서비스, 건강증진, 기초생활보장, 아동복지 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랜덤포레스트의 중요도로 나타난 정책요인들이 보건복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4차산업혁명, 건강증진, 공공보건의료, 보건산업, 보건의료, 의료서비스,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보육정책, 무상

복지, 복지자원, 사회서비스, 아동복지, 돌봄요양, 자립지원, 장애인복지, 출산 정책은 반대보다 찬성 감정의 확률이 높았음.

- 건강보험, 감염병관리, 의료급여, 정신건강, 생명윤리, 국민연금, 기초연금, 인권학대, 일자리 정책은 찬성보다 반대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분석결과 4: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한 보건복지정책 수요예측

- 뿌리마다 하단의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정책요인이 종속변수에 영향력이 가장 높은 요인(관련성이 깊은)으로 ‘노인복지’ 정책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복지’ 정책이 있고 ‘4차산업혁명’ 정책이 있는 경우 찬성은 83.0%에서 88.3%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는 17.0%에서 11.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건복지정책의 반대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경우는 ‘노인복지 정책이 없고, 복지자원 정책이 있고, 인권학대 정책이 있는’ 경우의 조합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정책의 찬성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경우는 ‘노인복지 정책이 있고, 4차 산업혁명 정책이 있고, 복지자원 정책이 없는’ 경우의 조합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 5 : 연관분석을 통한 보건복지정책 수요예측

- {일자리, 자립지원} → {찬성} 세 변수의 연관성은 지지도 0.003, 신뢰도는 0.92, 향상도는 1.3으로 2,211건의 문서에서 이와 같은 규칙이 나타났음.
 - 이는 온라인 문서에서 ‘일자리, 자립지원’ 정책 요인이 언급되면 찬성할 확률이 92%이며, 이는 ‘일자리, 자립지원’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문서보다 찬성할 확률이 약 1.3배 높아지는 것임.
- {인권학대, 아동복지} → {반대} 세 변수의 연관성은 지지도 0.004, 신뢰도는 0.76, 향상도는 2.58로 3,011건의 문서에서 이와 같은 규칙이 나타났음.
 - 이는 온라인 문서에서 ‘인권학대, 아동복지’ 정책 요인이 언급되면 반대할 확률이 76%이며, 이는 ‘인권학대, 아동복지’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문서보다 반대할 확률이 약 2.58배 높아지는 것임.

□ 2018년과 2019년 정책에 대한 감성과 증가율 비교

- 2018년에는 정책 홍보 강화가 필요했던 치매, 인공지능, 4차 혁명이 2019년에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정책으로 변동되었음. 또한 2018년에는 정책설계 보완이 필요했던 아동복지, 국민연금도 각각 정책홍보 강화, 정책설계 점검이 필요한 정책으로 변동되었음.
- 정책설계 점검이 필요했던 출산율, 출산정책은 정책설계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변화하였으며, 정책 홍보 강화가 필요하던 감염병 관련 정책 역시 정책설계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변화하였음.

〈요약 표 3〉 2018년과 2019년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감성과 증가율

2018년 사회보장 관련 키워드 ¹⁾		2019년 보건복지 정책 주요 이슈 관련 키워드 ²⁾	
정책 홍보 강화	예상되는 리스크 관리	정책 홍보 강화	예상되는 리스크 관리
2/4 분면	1/4 분면	2/4 분면	1/4 분면
치매, 자살예방, 인공지능, 보건산업, 감염병정책 , 일자리, 기초생활보장, 기초의료보장, 건강증진, 정신건강, 장애인복지, 4차 산업혁명 , 보육정책	응급의료, 사회서비스 , 자립지원, 요양보험, 의료보장, 의료자원, 올림픽, 무상	자립지원, 사회서비스 ,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정책, 복지지원, 보건산업, 기초생활보장, 아동복지 , 보육정책, 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급여	희망사다리, 헬스케어, 치매국가책임제 , 노인복지, 무상복지, 방문요양, 4차산업혁명 , 돌봄요양, 공공보건의료 , AI , 의료서비스, 의료정보, 건강증진, 장애인복지
정책설계 점검	정책설계 보완	정책설계 점검	정책설계 보완
3/4 분면	4/4 분면	3/4 분면	4/4 분면
출산율, 아동학대, 기초연금 , 복지급여, 사회보장, 부정부패, 출산정책	건강보험, 미세먼지, 보건의료 , Metoo, 우울, 부정수급, 간병, 노인정책, 아동복지 , 국민연금 , 군복무, 여성혐오, 문재인케어	건강보험, 기초연금 , 생명윤리, 국민연금 , 일자리, 청년실업, 출산율, 정신건강, 연명의료, 자살, 성폭력, 스튜어드십, 포폴리즘	출산정책, 원격의료, 비만, 개인정보, 감염병관리 , 담배, 정신질환자, 부정수급, 인권학대, 아동학대, 생리대

주: 1) 2017년 7월~2018년 6월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

2) 2019년 1월~2019년 9월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

3) 1사분면은 긍정감정과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 2사분면은 긍정 감정이 상대적으로 높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 3사분면은 긍정 감정과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모두 낮은 영역, 4사분면은 긍정 감정이 상대적으로 낮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

자료: 김미곤 외(2018)의 〈표 5-8〉(p.251)와 본 보고서의 연구 결과(표 5-9)를 비교해 제시하였음.

□ 2018년도에 수행한 분석(김미곤 외, 2018)에서 사회보장 관련 키워드의 미래신호 강도를 도식화한 결과와 2019년 연구 결과를 비교하면 <표 5-13>과 같음.

○ 2019년 강신호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살펴보면, 2018년에 잠재신호였던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감염병 관련 정책, 치매가 강신호가 되었음.

○ 반면 국민연금, 사회서비스의 경우 2018년에 강신호로 나타났으나, 2019년에는 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로 나타남.

○ 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였던 기초연금은 2019년에 잠재신호가 되었음.

<요약 표 4> 2018년과 2019년의 보건복지 정책과 주요 이슈 관련 키워드의 미래신호 비교

2018년 사회보장 관련 키워드 ¹⁾		2019년 보건복지 정책 관련 키워드 ²⁾	
약신호 [사전대책] (Weak Signal) [빈도↓, 증가율↑]	강신호 [즉각대책] (Strong signal) [빈도↑, 증가율↑]	약신호 [사전대책] (Weak Signal) [빈도↓, 증가율↑]	강신호 [즉각대책] (Strong signal) [빈도↑, 증가율↑]
2/4 분면	1/4 분면	2/4 분면	1/4 분면
군복무, 문재인 케어, 여성혐오, 건강보험, 부정수급, 응급의료, 무상	미세먼지, 아동복지 , 올림픽, Metoo, 우울, 국민연금 ,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 노인정책	생리대, 원격의료, 정신질환자, 방문요양, 희망사다리, 의료정보, 공공보건의료, 인권학대, 부정수급, 아동학대, 헬스케어	4차 산업혁명 , AI , 노인복지, 돌봄요양, 비만, 장애인복지, 담배, 감염병 관리 , 치매국가책임제 , 무상복지 , 개인정보
잠재신호 [정책설계점검] (Latent signal) [빈도↓, 증가율↓]	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 [홍보필요] (Strong but low increasing signal) [빈도↑, 증가율↓]	잠재신호 [정책설계점검] (Latent signal) [빈도↓, 증가율↓]	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 [홍보필요] (Strong but low increasing signal) [빈도↑, 증가율↓]
3/4 분면	4/4 분면	3/4 분면	4/4 분면
정신건강, 보건산업, 출산율, 인공지능 , 감염병 정책 , 4차 산업혁명 , 치매 , 자살예방	기초생활보장, 기초의료보장, 기초연금 , 일자리, 사회보장, 보육정책, 복지급여, 건강증진	포플리즘, 자립지원, 보건의료정책, 성폭력, 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급여, 출산율, 청년실업, 연명의료, 생명윤리, 실손의료보험, 기초연금 , 스튜어디스	국민연금 , 복지지원, 보육정책,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일자리, 아동복지 , 사회서비스

주: 1) 2017년 7월~2018년 6월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

2) 2019년 1월~2019년 9월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

자료: 김미곤 외(2018)의 <표 5-9>(p.254)와 본 보고서의 연구 결과 <표 5-11>을 비교해 제시하였음.

*주요용어: 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인구정책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 효과 및 연구의 한계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2017년 5월 집권을 시작하여 일성으로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의 정의로움”으로 포용성장, 혁신적 포용국가 등을 강조하였고, 보건복지부는 현 정부의 복지를 포용적 복지(Inclusive Welfare)라고 규정하였음.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사에서 포용적 복지가 규정되었음.
 - 포용국가는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이 자신의 역할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따라서 포용적 복지의 개념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누리는 상태”가 될 수 있음.
 -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라는 문구에는 보편주의, 사회통합, 분배정의, 공생 등의 철학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고, 그 기반은 물질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음(김미곤, 2019).
- 2018년 9월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개인의 관점에서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재구조화하는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하였음.
-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그 간의 정책성과를 토대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사회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비전을 밝혔음.
-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국민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영역에서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 행복한 일상생활을 누리기 위해 기본적

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임.

□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중에서 보건복지 예산비중 역시 2017년 14.4%(57.7조 원/400.5조 원)에서 2020년 16.1%(82.8조 원/513.5조 원)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0년은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3055억 원 증가(14.2%)로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2019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생계비, 병원비, 일자리 걱정을 덜고,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적극지원하며, 업무혁신을 통한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함.

○ 이어 2020년 예산 편성 방향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저소득층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강화, 국민건강증진투자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에 두었음.

□ 보건복지정책의 여건 및 환경 변화로 보건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변화, 분배구조 변화, 기술의 발전 등의 환경변화는 전반적으로 보건복지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

- 경제 성장률의 하락, 노동소득분배율 감소, 빈곤 및 분배 악화 등이 보건복지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음.
- 저출산·고령화는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부양비 증가, 의료비 증가 등을 유발하여 보건복지 수요를 증가시킴.
-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화로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대체됨으로써 보건복지 수요증가로 이어짐.

□ 우리나라는 보건복지정책 제도적인 측면에서 2018년 아동수당의 실시로 건강

보험의 상병급여를 제외하고 복지선진국들과 비교하여 거의 모든 보건복지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여전히 긴 근로시간, 낮은 삶의 만족도와 높은 자살률, 노인의 높은 빈곤율, 아동의 낮은 행복수준 등의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민의 보건복지 만족도 및 행복도는 높지 않음.

○ 보건복지 만족도 및 국민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우선순위별로 파악하여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것임.

- 국민들의 보건복지 욕구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므로, 객관적인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근거중심의 보건복지정책 방향 설정 및 개발이 필요함.

○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에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차기 년도 및 중장기 보건복지 정책수립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음.

□ 이러한 배경과 연구의 연속성 하에 본 연구는 현 정부의 후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정책 방향의 도출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과제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첫째, 환경변화에 따른 거시적 측면의 보건복지 수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둘째, 미시적인 측면에서 국민·전문가의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정책 국정과제 및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과 보건복지 관련 경제·사회·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전반기 정책성과와 미진한 점 및 보완할 점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함.

○ 국민조사를 통해 전국민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의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통계적 표본추출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단일 조사만으로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온라인에서 형성되는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여 2019년 기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다각도로 확인함.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먼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건복지 관련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보건복지 수요를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정책 대안 모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다음으로 미시적인 측면에서 국민과 전문가의 보건복지 정책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포용국가 보건복지정책 개발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지속적인 거시/미시 분석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고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 내용

□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중장기 환경 분석과 그에 따른 보건복지 욕구 분석

-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다양한 가족 출현
-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감소, 불안정 노동 증가, 탈노동(탈시장) 제도 욕구 분출
- (사회적 지속가능성 저하) 세계 최저 출산율, 최고 자살률, 낮은 행복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여성/남성, 원청/하청 등
- (사회이동성 저하) 사회이동성 저하→희망의 상실→경제적·사회적 활력 저하
- (사회보장여건 악화) 2040년 중반 복지지출 21.4%로 추계

□ 선행연구 검토 및 조사표 개발

- 보건복지 관련 국민의식 및 수요와 관련한 국내 문헌 분석

- 동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수행된 보건복지 및 사회보장정책 수요조사 연구인 신영석 외(2010), 최성은 외(2011), 김태완 외(2012), 김미곤 외(2014), 김미곤 외(2015), 김미곤 외(2016), 김미곤 외(2018) 등과 함께 통계청의 사회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 등을 검토함.

○ 국외의 주요 공공 인식조사 분석

-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동아시아사회조사(East Asia Social Survey, EASS), 세계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 WVS)와 미국의 공공정책 인식조사, 영국의 사회태도조사 등을 검토함

○ 기 수행된 조사의 공통문항을 검토하고 분야별 현안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조사표 개발

-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 문항) 총괄적인 복지인식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여 복지욕구 및 정책만족도 문항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활용
- (보건복지정책 체감도 문항)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 및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접근성 및 용이성 등을 통해 현 보건복지부 정책에 대한 체감도 평가
- (생애주기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문항) 노인 및 아동 등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등에 대한 평가 문항을 통해 대상별 중점추진과제 발굴에 활용
- (세부 보건복지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문항) 세부적인 보건복지정책(생계급여, 자활사업,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에 대한 만족도 등의 문항을 통해 해당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
- (국민과 전문가 조사 차별화) 국민에 대한 조사 문항은 제도에 대한 인식여부, 체감도,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전문가(교수, 연구자, 언론인 등) 조사는 국민의 인식과 비교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되, 보다 구체적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위주로 구성

○ 국민 및 전문가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 의뢰하여 수행함.

□ 보건복지정책 인식조사 결과 분석

- 보건복지수준 및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평가 분석
- 사회복지정책, 인구정책,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 및 전문가 성과 평가 분석
 - 국민의 보건복지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세부 보건복지정책 우선순위 분석
 - 향후 보건복지정책 과제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평가 분석
 -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 분석
- 온라인에서 발생한 2019년 3/4 분기까지 기간(1월 ~ 9월)의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Social Bigdata) 활용을 통한 보건복지정책 미래신호예측 분석
 - 보건복지와 관련한 소셜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주제분석(text mining)과 감성분석(opinion mining) 등을 실시
 - 보건복지와 관련한 주요 키워드를 분류하고 주요 정책과 이슈에 대한 신호를 탐지하여 국민의 정책수요 예측 등에 활용
- 보건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 및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함의를 도출하고 포용국가 보건복지정책 과제 개발을 위한 정책적 제언

2. 연구방법

□ 국내외 보건복지정책 인식조사 관련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

- 국내외에서 실시되었던 인식조사 관련 문헌들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분석

□ 사회복지, 인구,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 보건복지정책 현안 진단 및 향후 정책방향 등 관련 조사표 개발 및 분석결과 함의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 국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 국민인식 조사

- 대상: 만 19세 이상의 국민 1,000명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한 조사원 면접조사
- 표본 추출: 주민등록 인구통계자료(2019년 10월 기준)를 모집단으로 성, 연령, 지역, 취업 등의 인구비례를 고려한 다단계 층화추출법
- 조사 기간: 2019년 12월
- 신뢰 수준: 95%±3.1%p
- 조사 기관: (주)능률협회컨설팅

○ 전문가 조사

- 대상: 경상·법정, 인문·사회, 보건·의료 등 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과 언론사 소속 전문가 풀을 이용한 임의표집 전문가 120명(121명 완료)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한 자기응답식 웹메일조사
- 조사 기간: 2019년 12월
- 조사 기관: (주)능률협회컨설팅

□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 분석

- 분석 자료: 총 315개의 트위터 등의 온라인 채널에서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를 수집하기 위해 원하는 특정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크롤러, Crawler)을 이용
- 자료 수집 기간: 2019년 1월~9월
- 자료 수집 및 생산 기관: (주)RSN,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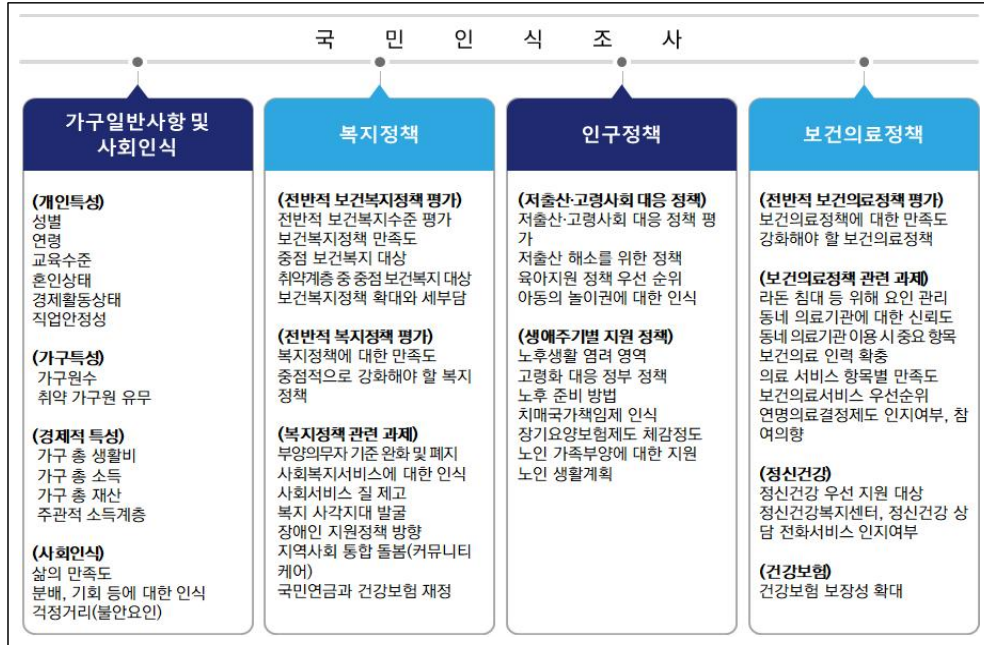
□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주요내용

- 가구 일반 사항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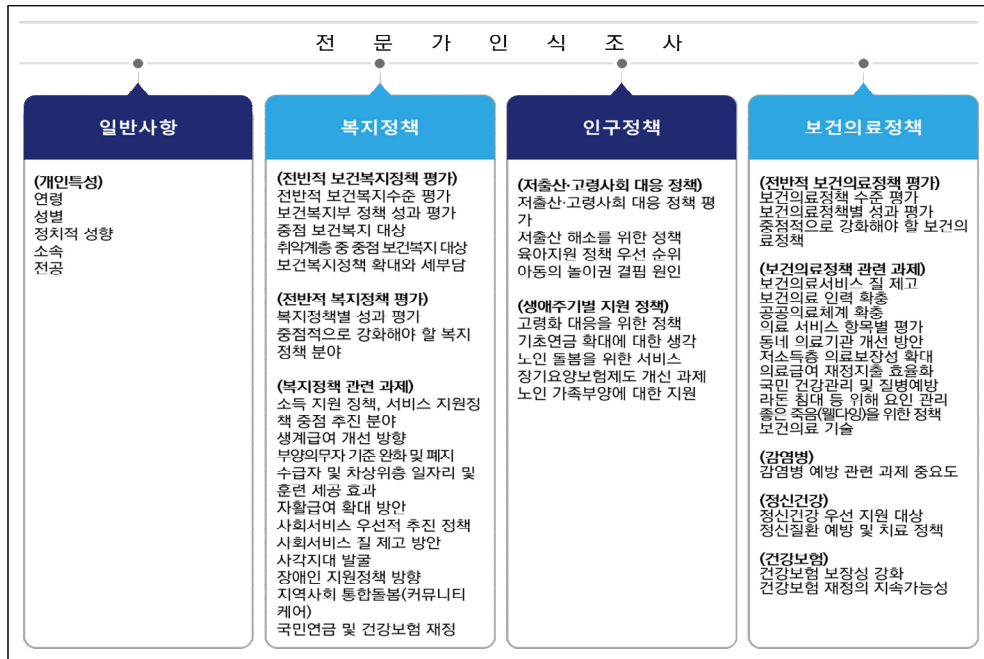
- 연령
- 교육수준
- 혼인상태
- 경제활동상태
- 직업안정성
- 가구 총 생활비, 총 소득, 총 재산
- 주관적 소득계층
- 사회 인식
 - 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 소득 및 재산 분배, 기회 등에 대한 전반적 인식
 -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
- 전반적 보건복지정책 평가
 - 전반적 보건복지수준 평가
 -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
 - 중점을 두어야 할 보건복지 대상
 - 더 중점을 두어야 할 취약계층 중 보건복지 대상
- 사회복지정책
 - 세부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
 -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복지정책
 -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및 폐지에 대한 인식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절차에 대한 인식
 - 사회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정책
 -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중요한 역할
 - 장애인 지원 정책 방향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 복지정책 확대와 세 부담
- 인구정책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
 -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 육아지원 정책 우선순위
 - 아동의 놀이권에 대한 인식
 - 노후생활에 있어 염려되는 부분
 - 고령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
 - 노후 준비를 위한 방법
 -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인식
 - 장기요양보험제도 체감정도
 - 노인 가족부양에 있어 필요한 지원
 - 노후 생활계획
- 보건의료정책
 -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만족도
 -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 라돈침대 등 위해 요인 관리
 - 동네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
 - 동네 의료기관 이용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 보건의료 인력 확충
 - 의료 서비스 항목별 만족도
 - 보건의료서비스 우선순위
 - 연명의료결정제도 인지여부, 참여의향

[그림 1-1] 국민 조사표 구성 체계도



[그림 1-2] 전문가 조사표 구성 체계도



제3절 기대 효과 및 연구의 한계

1. 기대 효과

- 국민의 수요와 현 정책(제도)과의 차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정책 수립에 기여
 - 인식조사를 통해 도출된 보건복지정책 욕구 및 성과, 개선 방안들은 2020년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수립에 활용
-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차세대 보건복지정책 개발의 기준지표 제시
 -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정책의 방향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

2. 연구의 한계

- 국민 조사의 경우 선행연구(2010, 2011, 2012)는 유선 전화조사이었으나, 2014~2016년의 조사는 무선 전화조사로 수행하였고, 2018년 조사와 본 조사는 면접조사이므로 선행연구와의 연차별 비교에서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편의 외에도 신뢰수준이 95%±3.1%p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함.
 - 인식조사의 경우 조사 직전의 사회경제적인 사건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부 조사항목의 경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조사는 델파이 조사로서 표본의 대표성이 약하므로 선행 연구와의 연도별 비교는 의미가 없을 수 있음.
-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 조사의 경우 온라인 채널에 의견(흔적)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대한 인식분석이므로 대표성에 다소 문제가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제 2 장

보건복지정책 관련 환경 변화와 복지 수요

제1절 보건복지정책 관련 환경 변화

제2절 보건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2

보건복지정책 관련 환경 변화와 << 복지 수요

제1절 보건복지정책 관련 환경 변화¹⁾

1. 보건복지정책의 이념적 토대의 후퇴

□ (추이) 복지국가라는 사회적 실험이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 외 (2017)의 책 이름처럼 『거대한 후퇴(Die große Regression)』 상태에 직면함.

○ 『거대한 후퇴』의 핵심은 민주주의 후퇴와 신자유주의 득세로 요약됨.

- 민주주의가 포퓰리즘(populism)을 앞세운 권위주의 정치로 이행되고 있음.
- 한편, 1970년대 후반 이후의 신자유주의 득세로 국가 간 무한경쟁→승자와 패자→양극화→사회적 지속가능성 저해로 이어지고 있음.

○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 등이 분석한 1850~2010년 소득 상위 5%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위 황금 시대(golden age) 시기에는 그 점유율이 매우 낮고, 1970년 후반부터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망) 이러한 세계사적인 흐름(거대한 후퇴)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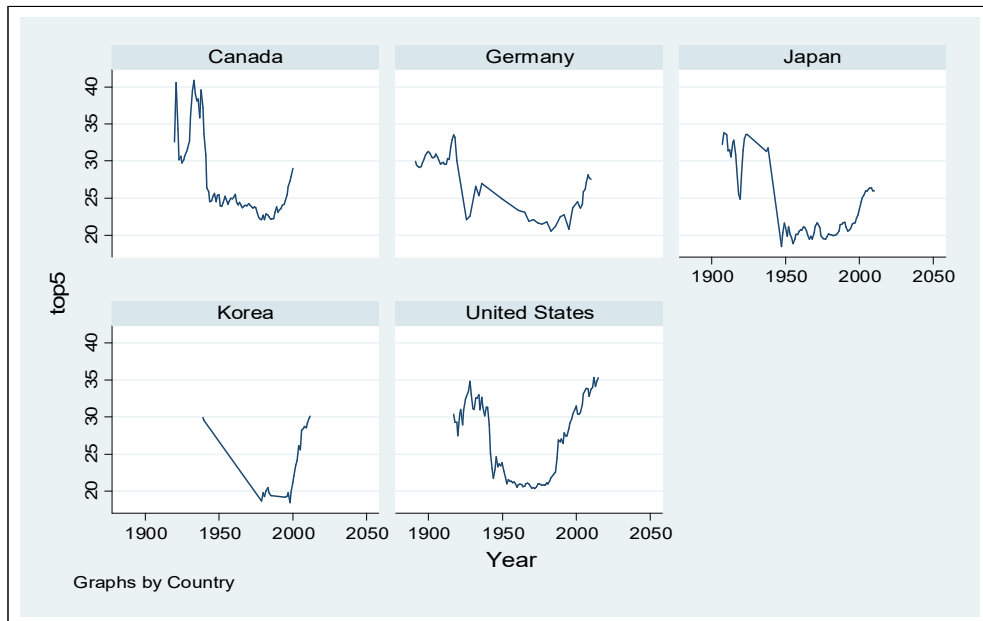
○ 2008년 국제 금융위기는 지성인에게 신자유주의에 대한 성찰적 기회를 제공 하였으나, 현재도 신자유주의는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자본의 속성은 자본의 이윤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신자유주가 지닌 모순의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대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낮음.

1) 김미곤 외(2018)의 「2018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힘.

- 신자유주의 득세와 민주주의 후퇴는 동전의 양면이므로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 후퇴 또한 지속될 전망이다.
- 평등을 우선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1인 1표)의 후퇴는 효율을 우선 가치로 하는 자본주의(1주 1표)의 득세와 맥을 같이 함. 그러므로 신자유주의가 지속되는 한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 또한 후퇴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1] 주요국의 1850~2010년 소득 상위 5% 점유율 변화



자료: The World Wealth and Income Database (www.wid.world/#Database: 2016.7.12. 인출)

- (파급효과) 민주주의 후퇴와 신자본주의 득세는 보건복지정책의 이념적 토대를 약화시킴.
- 이 결과 빈곤·불평등·사회갈등·사회병리 현상 증가, 사회이동성 저하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2.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

□ 추이 및 전망

○ 인구구조의 변화

- (저출산) 합계출산율 1.3 미만인 초저출산 현상이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
- 인구학자 볼프강 루츠는 ‘저출산의 덫’을 설명하면서, 출산율은 가임여성 인구수(인구학적 요인), 청년세대의 이상 자녀수(문화적 요인), 미래 기대 소득(경제적 요인)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어느 요인도 긍정적이지 않은 현실임.
- (고령화) 2000년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7%)에 진입한 이후 2017년 노인 인구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2025년에는 20%대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게 됨.
- 또한,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38.2%로 급증하여 일본 (39.6%) 다음으로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OECD 평균 25.8%).

○ 가족구조의 변화

- 2005년까지는 4인가구가 최빈 가구이었으나, 2010년에는 2인가구가, 그리고 2015년에는 1인가구가 최빈 가구(27.2%)로 등장함.
- 국제간의 교류확대에 따른 다문화 가족, 이민자 가족의 증가와 동성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욕구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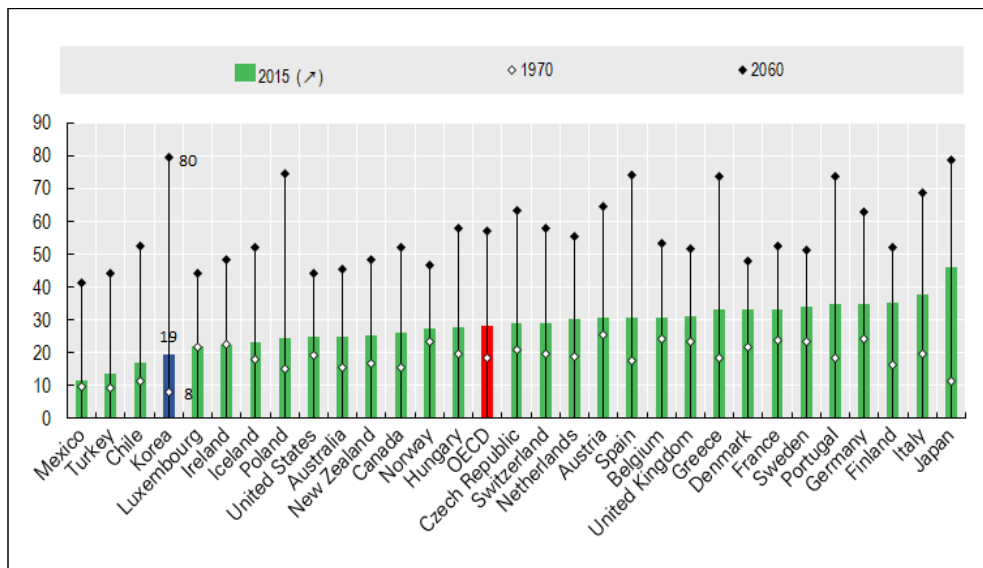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 초저출산으로 총인구는 2030년 52,160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60년에는 43,959천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 2012년 생산가능 인구 비중은 73.1%로 정점(생산가능 인구수는 2016년에 3,704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 노인부양비의 급등

- 2015년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 평균 20세~64세 사이의 인구 100명 당 65세 이상 인구는 28명을 차지함(1970년 18명).
-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노인 부양 비율이 20% 이하로 멕시코, 터키, 칠레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2060년의 부양 비율은 80%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4배 증가). 이는 OECD 비교 국가 중 일본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임(OECD, 2019).
-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보건의료 및 연금에 대한 공공지출 증가에 기여함.

[그림 2-2] OECD 국가의 노인 부양 비율



자료: OECD(2019).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 p.83(표 4.13. 수정)

○ 1인가구의 급증과 빈곤화, 돌봄 수요 확대

- 2018년 1인가구의 빈곤율은 시장소득 중위 50% 기준으로 58.9%로 나타남. 이는 같은 기준으로 전체 가구 평균 21.0%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임(소득 보장정책연구실, 2019)

- 향후 고령사회 및 초고령 사회 등을 감안하면 노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돌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 노인빈곤율도 59.9%로 매우 높은 수준임.

3. 4차 산업혁명

□ 추이 및 전망

○ 기술의 발전과 노동수요의 감소

-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하지만, 창출되는 일자리 보다 더 많은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2016년 1월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은 『고용의 미래(The Future of Jobs)』 보고서에서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함으로써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약 5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였음(정원호 외, 2016).

○ 플랫폼 노동, 불안정·비정규 노동자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 확대

- ICT 발전으로 노동관계는 전통적인 사용자-근로자 고용형태에서 ‘다수의 사용자-무소속 다수 근로자 간의 경쟁(예, 깃(gig) 노동자)’ 형태의 플랫폼 노동이 증가
- 여기에 종사하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들은 근로시기의 삶이 불안정하여 노후 준비할 여력이 미흡함.

○ 깃(gig) 이코노미의 확대로 기여를 바탕으로 설계되는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기초보장제도의 하층은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됨.

□ 파급효과

○ 4차 산업혁명과 복지제도 개편 요구

- 오늘날의 복지제도는 제2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부분적으로 치유하는데 기여하였음.

- 그러나 여름옷을 겨울에 입을 수 없듯이, 2차 산업혁명(여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태어난 근대적 복지제도로는 4차 산업혁명(겨울)을 맞이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함. 예를 들면, Occupy the Wall Street, 트럼프 현상, Brexit, 헬조선 등임.
- 이 결과 복지제도에 대한 개편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단기적으로는 사각지대 해소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탈 노동 복지제도인 기본소득제도 도입요구로 이어질 수 있음.

4. 사회적 지속가능성

□ 추이 및 전망

○ 사회적 지속가능성 저하

- 우리 사회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떨어뜨리는 지표로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청년들의 희망 빈곤(3포, 5포, N포, 헬조선), 세계 최고수준의 노인 자살률 등을 들 수 있음.
- 사회적 지속가능성 저하의 문제는 그동안 우리사회가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임.
-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세계 11위 내외 수준인 반면에 삶의 만족도(행복 수준)는 조사대상 157개국 중 58위,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는 29위 (UN, 2016세계행복보고서) 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이들 압축성장의 후유증인 압착 위기의 징표들은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낮으나, '경제중심 정책에서 사람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음.

□ 시사점

-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사람 중심'이라는 정책적 지향이 필요함. 이는 지도자의 철학이 국정 목표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무시할 필요는 없고, 양자 간의 조화가 필요함.

5. 경제 성장 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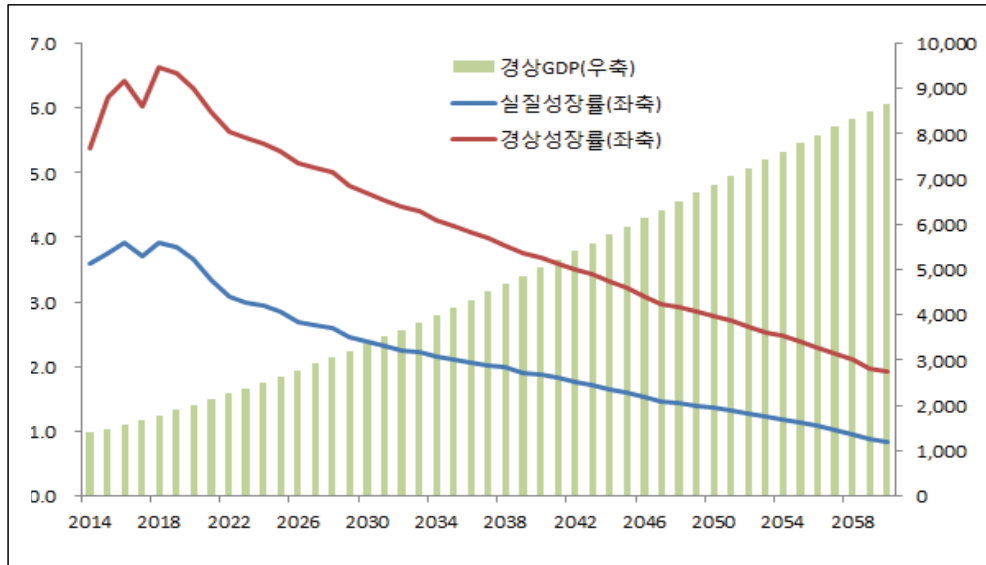
□ 추이 및 전망

○ 중장기 잠재성장률 하락(New Normal²⁾)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 제조업 경쟁력 저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2014)의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대에서 2030년 후반에는 1%대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함.

[그림 2-3] 경제성장률 장기 전망

(단위: 조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4), 2014~2060년 장기 전망, p.13.

2) 뉴 노멀(New Normal)은 “글로벌 경제의 모든 나라에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고부채 등의 상태가 정착되어 있고, 이에 대처할 방향은 어떤 나라도 아직 확실하게 잡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조순, 2016, p.17).

○ 부채 및 전세의 월세 전환 증가

- 국가채무 및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최근 5년 간 33.9%(2014)에서 36.6%(2018)로 증가하였고(기획재정부 월간동향, 한국은행 국민계정),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0년 147.5%에서 2018년 184.2%로 증가하였음(기획재정부, 2019).
- 전세가격 급등과 전세의 월세 전환 증가로 인해 소비성향이 높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가중됨.
 - 전세가격은 지수 상으로 12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18년 이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9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한국감정원, 2019).
 - 이러한 전세가격 증가와 함께 저금리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전세의 월세 전환 증가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2008년 월세 비율이 18.2%인 것에 비해 2018년 23.1%로 상승함(강미나 외, 2019).

[그림 2-4] 전세가격 지수 추이



자료: 한국감정원(2019). 주택가격동향보고서. p.11.

□ 경제와 복지 관계

○ 분배상태가 악화되면 경제성장률이 저하됨.

- 31개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OECD 마이클 포스터의 연구(2016)에 따르면, 지니계수가 1p가 증가하는 경우 경제성장률은 -0.12%p 감소함.
- 선진국과 신흥국 4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박용정 연구(2017)는 지니계수가 1단위 개선되었을 때 경제성장률은 0.1%p 상승 가능한 것으로 추정함.

○ 경제성장과 복지지출

- 도구변수법과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한 차병섭 외(2013)의 연구에서는 복지지출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함.
- Barro(1990)의 연구에서도 사회복지지출이 표준편차인 5.9%만큼 증가 시 연간 경제성장률도 0.8~1.1%p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함.

6. 노동시장 구조

□ 추이 및 전망

○ 노동시장의 양극화

-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읽는 열쇠 말은 이중구조(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여성/남성, 원청/하청 등), 높은 저임금근로자 비율, 높은 자영업자 비율, 증가하고 있는 청년실업 등임.
- 33% 내외로 움직이고 있는 비정규직 비율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으로 단기에는 개선될 수 있으나,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일자리의 감소 등을 감안하면 중기적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낮음.

○ 비정규직의 빈곤화 가능성

-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19년 8월 현재 37.9%로 정규직(87.5%)의 절반이하이고, 건강보험을 제외하면 연도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ICT 등의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노동자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 등이 증가될 가능성 높으므로 정책적 개입이 없는 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 일자리 수요 공급

- 인구구조라는 측면만 고려하면, 2020년대 중반까지 일자리 부족, 2030년 이후 인력부족으로 전망됨.
- 인구구조, 고용률, 잠재성장률, 1% 경제성장시 창출되는 일자리 수 등을 감안하면, 2020년대 중반 정도에 부분적으로 일자리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추계함(김미곤, 2016).
- 따라서 2020년대 중반까지는 소위 '88만원' 세대로 대표되는 청년 실업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움.

○ 4차 산업혁명과 통일이 일자리 수급에 미치는 영향

-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앞선다는 특이점 도달(레이 커즈와일에 의하면 2045년에 『특이점(singularity)이 온다』) → 매뉴얼 잡의 자동화 →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짐.
- 통일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일자리라는 측면에서는 일자리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임.

□ 시사점

○ 경제정책-노동정책-복지정책을 분절적으로 접근하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움.

- 그 이유는 노동이 본(本)이라면 복지는 말(末)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노동시장의 분절화 등 노동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빈곤·불평등 등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이윤주도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는 한계가 있음. 즉,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소득주도 성장 등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해결될 가능성이 낮음.

- 그리고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은 국정운영 목표에 영향을 받는 철학의 문제임. 철학의 근저에는 교육이 자리 잡고 있음.

○ 결국 교육-철학-경제-노동-복지를 한 묶음으로 보고, 이를 관통하는 패러다임 설정이 필요함.

○ 일자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2020년 중·후반까지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과 함께,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사회서비스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매우 긴요함.

제2절 보건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1. 경제 환경변화가 복지수요에 미치는 영향

□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므로 이로 인한 복지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 저출산·고령화 등은 경제성장을 낮출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지수요를 증가시키므로 미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함.

□ 한편 경제성장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1993년 이후 경제성장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사라졌음.

- 경제성장의 몫이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살펴본 여유진 외(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낙수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선도 산업·부문·계층이 잘되면 그 효과가 후발 산업·부문·계층으로 확산된다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지속되었으나, 1993년 이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인구구조 변화가 복지수요에 미치는 영향

□ 저출산·고령화가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사회보장비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자명하며, 이의 진전에 따라 사회보장비가 누적적으로 증가한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

○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위험 요인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음.

- 저출산은 학령인구 감소, 병역자원 감소,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고령화는 노인인구 증가, 인구역전 현상, 85세 이상의 후기 노인의 증가로 나타남.
- 이 결과 소비위축,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부담 증가, 경제성장 둔화를 야기하여 국가 차원에서는 지속발전 가능성이 저해되고,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함.

□ 부양비³⁾ 증가

○ 2000~2011년까지는 총부양비가 감소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2012년 최저를 기록한 후 증가함.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총부양률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노년부양비도 2010년 15.2%에서 2050년 71.0%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함 (통계청, KOSIS).
- 부양비 증가는 가구의 생활수준 저하 및 실질적 빈곤 증가로 이어져, 복지수요를 증가시킴.

○ 따라서 우리나라는 2000~2020년간의 저부양비 기간을 활용한 성장 모멘텀 확보 및 국민통합 기반 마련이 긴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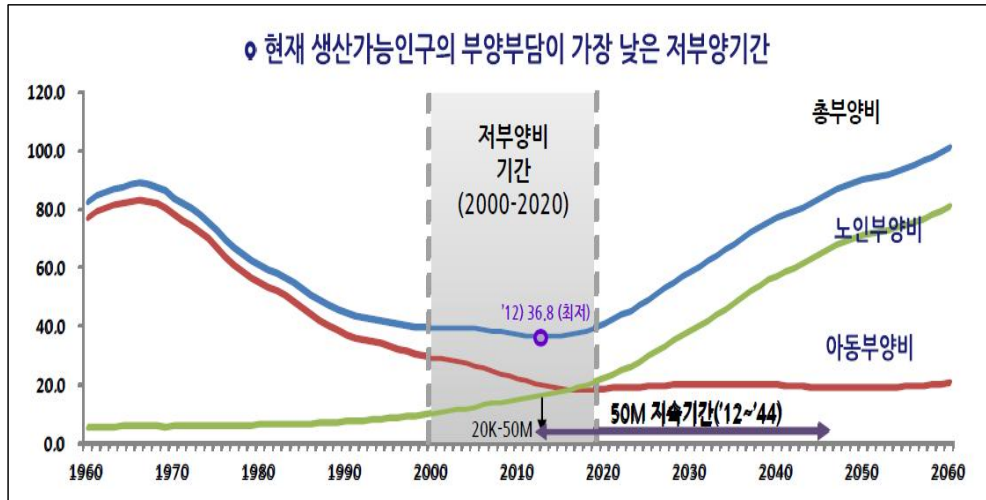
3) 부양비(Dependency ratio)는 다음의 정의에 따른 총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로 구성된다.

※ 총부양비 = 유소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 유소년부양비 = 유소년인구(0~14세) ÷ 생산가능인구(15~64세) × 100

※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가능인구(15~64세) × 100

[그림 2-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비 변화 추이



주: 저부양기간의 20K는 소득 2만불, 50M은 총인구수 5천만 명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2010). 장래인구추계.

□ 사회보장부담 증가

- 인구고령화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의 각종 급여 지출 수준에 이미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또는 누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39년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54년에 소진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고(국회예산정책처, 2019), 건강보험 적자폭은 2015년 4.8조에서 2030년 47.7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0).
 -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10년 2.5조원(GDP 대비 0.23%)에서 2030년 13.8조원(GDP 대비 0.66%)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됨(박일수 외, 2010).

3. 노동시장 변화가 복지수요에 미치는 영향

□ 상대적으로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잠재적 복지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됨.

○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근로자의 약 절반 정도임.

- 2019년 8월 현재 국민연금의 가입률은 정규직 87.5%, 비정규직 37.9%로 나타나 비정규직의 노후 빈곤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복지 수요 증가로 이어짐.
- 고용보험의 가입률도 정규직 87.2%, 비정규직 44.9%로 나타나 비정규직의 경우 실업 시 최소한의 공적 안전망이 미흡한 상태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19년 8월 현재 정규직 평균임금은 316.5만원,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172.9만원으로 나타나 정규직 임금의 54.6%수준에 머물고 있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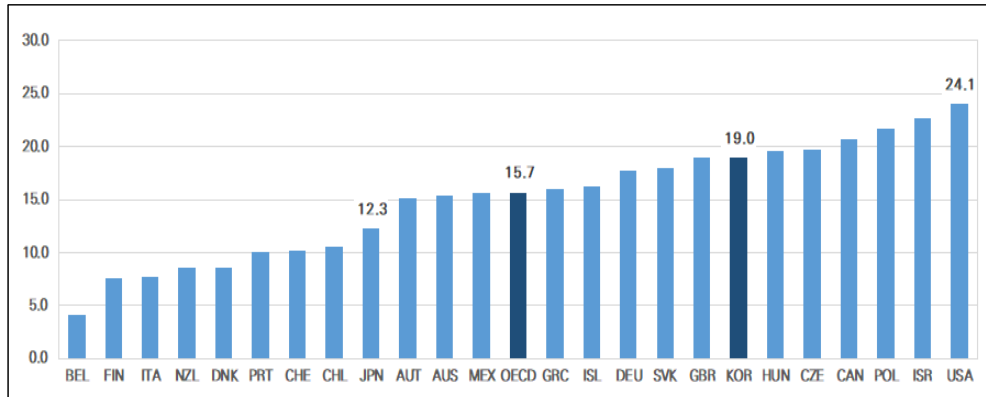
- 다만, 2008년 이후로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이 꾸준히 개선되는 양상을 보임.

□ 고용구조 악화에 따른 소득분배구조 악화로 사회보장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1차 노동시장에서의 고른 소득분배는 2차 복지영역에서의 지출요인을 감소시키지만, 일자리의 양극화는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이 2/3미만) 비중을 증가시킴.

- 한국의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000년 24.6%, 2010년 24.7%, 2015년 23.5%, 2018년 19.0%를 차지해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OECD 평균 15.7%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OECD, 2020).

[그림 2-6] OECD 국가의 저임금근로자 비중(2018년 기준)



주: 정규직(full-time) 근로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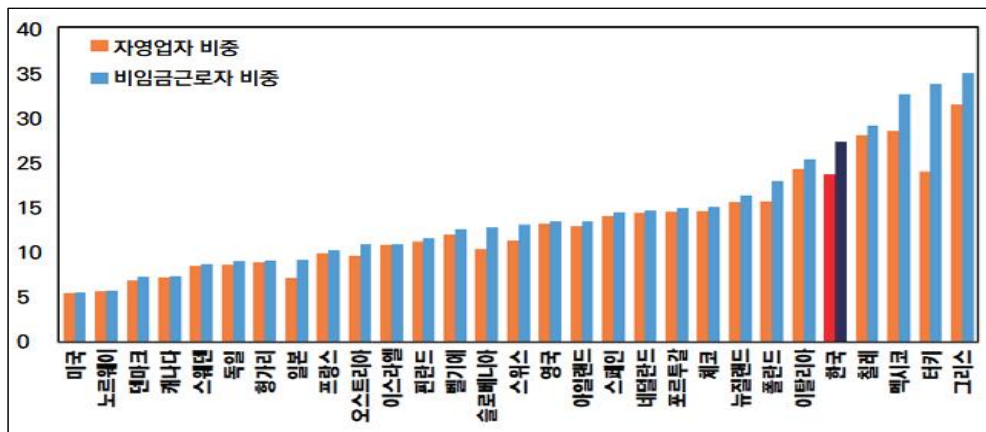
자료: OECD (2020), Wage levels (indicator). doi: 10.1787/0a1c27bc-en (Accessed on 16 April 2020)

□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창업대비 높은 폐업률은 복지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추론됨.

○ 우리나라의 비임금 근로자(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포함)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임(장근호, 2019).

- 그리스, 터키,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높음.

[그림 2-7] OECD 국가의 비임금근로자 비중



주: 15-64세, 2017년 기준

자료: OECD Labour Statistics. 장근호(2019)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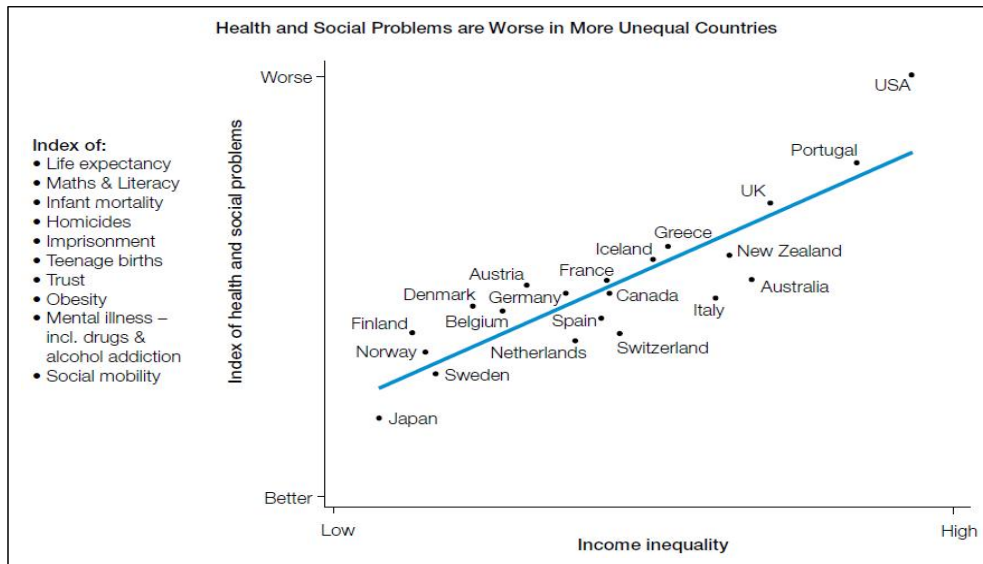
- 내수위축, 과다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2018년 개인사업자 기준 연간 창업률 대비 폐업률은 66.9%에 달하며, 특히 음식업 폐업률은 91.4%에 이름(국세청, 2019).

4. 빈곤 및 분배구조 변화가 복지수요에 미치는 영향

□ 건강·사회문제로 증가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Wilkinson과 Pickett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이 높은 사회일수록 건강 및 사회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Wilkinson and Pickett, 2009).
 - 건강 및 사회문제에 대한 개별적 영향뿐만 아니라 지수를 형성하여 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지수에는 기대수명, 문맹, 수감률, 유아 사망률, 십대 출생, 신뢰도, 비만, 정신 건강 문제 등이 포함됨. 이 지수는 부유한 국가의 평균소득과는 상관관계가 없지만, 소득불평등과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줌.
 - 불평등이 높은 미국의 경우 건강 사회 문제가 많고, 불평등 수준이 낮은 일본 및 북유럽국가의 경우 문제가 적음.

[그림 2-8] 소득불평등과 건강 및 사회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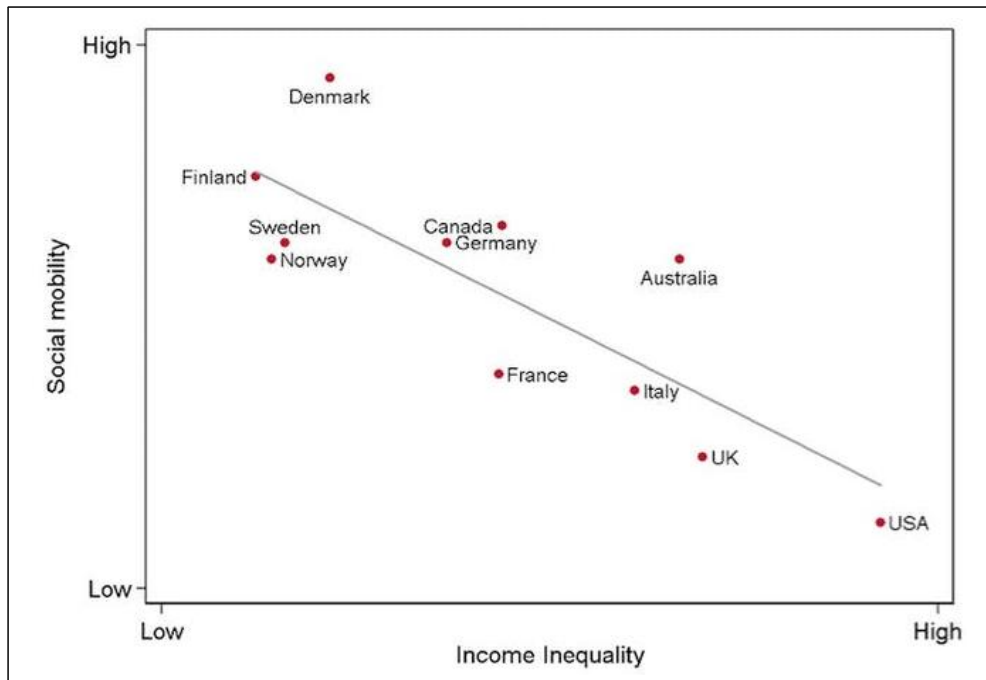


자료: Wilkinson and Pickett(2009)

□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의 저하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

- 경제성장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이지만, 그 자체로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소득불평등 증가는 경제 활력의 핵심요소인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국제적으로, 세대 간 소득이동성은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됨.
 - 사회이동성이란 사회적 지위 변화정도를 의미하며, 사회이동성이 낮을 경우 계층적 위화감이 증가될 수 있으며 국민통합을 저해함. 이는 아래 그림과 같이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이태리, 영국, 미국)일수록 사회이동성 (social mobility)이 낮다는 것으로부터 확인이 가능함(Wilkinson & Pickett, 2011).

[그림 2-9] 사회적 이동성과 소득불평등간의 관계



자료: Wilkinson and Pickett(2011)

5. 기타 요인이 복지수요에 미치는 영향

□ 기술진보와 빈곤·불평등 변화

- 2015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은 초지능, 초연결 사회로의 연결과 시간적·공간적 유연성이 확대되어 인간 삶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 홀로세(Holocene)에서 인간세 그리고 인공지능세로 진전될 것임.
 - 복지제도 측면에서는 마치 여름 옷(2차 산업혁명)을 입고 겨울(4차 산업혁명)에 맞이하는 상태로도 볼 수 있음.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복지체계에 대한 고민 필요함.
- 또한 기술진보에 따라 숙련위주로 분배되는 경향이 강하고, 규제개혁과 제도 변화는 경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은 향상되겠지만 저숙련자 취업기회 감소, 영세자 영업자 소득감소 등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OECD, 2013).

□ 신자유주의와 빈곤·불평등 변화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황금기(golden age)에는 대부분 국가들의 불평등 수준이 매우 낮았음.
 - 이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었으나, 국가 개입을 강조하는 케인즈 주의, 높은 효율의 조세체계, 경제성장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등이 주요 요인이었음.
- 그러나 1970년 후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빈곤 및 불평등을 악화시킴.
 - 승자독식, 국경 없는 무한 경쟁으로 표상되는 신자유주의는 승자와 패자간의 불평등과 패자의 빈곤화로 이어짐.
- 2008년 국제금융위기는 지성인에게 신자유주의에 대한 성찰적 기회를 제공 하였으나, 이후에도 신자유주의는 지속되고 있음.

- 자본의 속성은 자본의 이윤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임계점' 전에는 대안이 도입될 가능성은 낮음.
- 신자유주의 체계가 지속되는 한 적어도 시장 소득기준의 빈곤 및 불평등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은 팬데믹(pandemic,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 경제위기 → 공동체 위기(community crisis)의 경로를 거쳐 복지 수요 증가로 이어짐.

제 3 장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분석틀

제1절 보건복지정책 관련 인식조사 검토

제2절 조사표 구성 및 분석틀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분석틀 <<

제1절 보건복지정책 관련 인식조사 검토

1. 국내 조사

가.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보건복지정책 수요 조사를 수행함.
- 국민과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사회인식과 보건복지정책 만족도 및 욕구, 그리고 재원 등을 조사함.
- 국민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전문가는 100명을 대상으로 웹메일 조사로 이루어짐.

〈표 3-1〉 2010~2016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개요⁴⁾

구분		2010	2011	2012	2014	2015	2016
조사 대상	국민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전문가	100명					
조사 방법	국민	전화조사 (시도별 인명전화번호 자료 기반)			전화조사 (RDD 방식이 적용된 CATI 시스템 활용)		
	전문가	자기기입형 웹메일조사					
표본 추출	국민	성, 연령, 지역, 인구비례를 고려한 다단계 층화추출법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풀을 활용한 임의표집					
조사 시기		10.26.-11.5.	① 9.21.- 9.27. ② 11.2.-11.11.	11.21.-12.5.	10.14.-11.2.	11.09.-11.29.	10.30.-11.11.

자료: 김미곤 외(2016, p.280)의 자료를 재인용

4) 신영석 외(2010). 보건복지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최성은(2011),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방안, 김태완 외(2012),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김미곤 외(2014), 2014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김미곤 외(2015), 2015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김미곤 외(2016), 2016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 주요 조사 문항은 일반인식에서 삶의 만족도, 걱정거리, 소득 및 재산의 평등 정도, 보건 분야에서 의료의 접근성·보장성·의료의 질 등에 대한 평가, 보건의료 중 가장 중요한 분야, 복지 분야에서 중점 대상 및 분야, 출산장려정책 선호도 등을 포함함. 또한 보건복지정책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복지 확대 및 조세 부담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함.

○ 전문가 조사는 국민 조사 문항을 포함하되 보다 세부적인 정책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문항 개발 및 조사가 이루어짐.

□ 조사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으나 조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삶의 만족도는 2012년 3.84점에서 2015년 4.08점으로 상승하였으나 2016년 다시 3.95점으로 하락함(6점 만점).

○ 현재 느끼는 대표적인 걱정거리로 전문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일자리’라고 응답한 비율(각각 55.0%, 75.0%, 81.0%)이 가장 높은 반면, 국민은 3개년 모두 ‘건강’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각각 23.0%, 25.2%, 24.3%)을 보임. 전문가와 달리 국민의 걱정거리는 ‘건강’과 더불어 ‘일자리’ 및 ‘노후생활’, ‘자녀교육’ 등에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임.

○ 전반적 복지수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평가가 국민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국민은 2010년 3.25점에서 2015년 2.96점으로 하락하였다가 2016년 3.02점으로 다소 상승한 반면, 전문가는 2010년 2.57점으로 낮았지만 2015년 2.82점으로 상승하였다가 2016년 소폭 하락하여 2.70점으로 나타남(6점 만점).

○ 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정책분야로 전문가는 201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응답 비율(34.0%)이 가장 높았고, 2016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응답 비율이 35.0%로 동일하게 높게 나타남. 반면 국민은 2015년, 2016년 모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응답 비율(각각 35.2%, 35.6%)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보건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정책 분야로는 전문가와 국민 모두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완화’를 꼽음. 이러한 결과는 2015년과 2016년 2개년도 조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남. 전문가는 각각 39.0%, 34.0%로 응답하였으며, 국민은 49.1%, 39.3%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조세 부담은 보건복지 확대를 위한 동력이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세 부담 증가에 대한 동의 정도와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전반적으로 보건복지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가 조세 부담 증가에 대한 동의 정도보다 높게 나타남.

- 조세 부담 증가 동의 정도가 보건복지 확대 동의 정도와 같거나 큰 경우는 2012년 41%, 2014년 38.5%, 2015년 42.9%, 2016년 40.1%로 나타남.

나.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를 수행함.

-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까지 수행한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와 맥을 같이하는 조사로 볼 수 있으며,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 범위를 ‘사회보장’으로 확대하고, 현재 뿐만 아니라 5년 후 사회보장 전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 조사대상은 국민 1,000명, 전문가 100명이며, 국민 조사의 경우 기존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가 전화조사로 수행된 것과 달리 면접조사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행됨.

〈표 3-2〉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국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전문가	100명
조사 방법	국민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한 조사원 면접조사
	전문가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한 자기응답식 웹메일조사
표본 추출	국민	성, 연령, 지역, 취업여부별 인구비례를 고려한 다단계 층화추출
	전문가	사회, 보건, 경상 분야별 사회정책 전문가 풀을 이용한 임의표집
조사 시기	국민	2018. 07. 07. ~ 08. 24.
	전문가	2018. 07. 18. ~ 08. 16.

자료: 김미곤 외(2018), pp.40~41 내용을 표로 정리함.

□ 주요 조사 문항은 국민 조사의 경우, 가구일반 사항 및 경제적 특성, 생활만족 및 사회인식, 사회보장인식, 미래전망 등이 포함되며, 전문가 조사의 경우 개인적 특성, 사회 및 사회보장인식, 보건정책, 복지 및 인구정책, 일자리 및 주거정책, 사회 보장재정 등이 포함됨.

○ 국민 조사는 면접방식으로 수행됨에 따라 응답자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사회보장 인식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해짐.

○ 전문가 조사에서는 각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데 초점을 맞춤.

□ 조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사회신뢰 수준에 대해 국민은 6.6점, 전문가는 5.3점으로 평가하고 있음(10점 만점). 국민이 전문가보다 사회 신뢰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 국민은 3.5점, 전문가는 3.3점으로 평가하고 있음(6점 만점). 사회신뢰 수준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수준 역시 국민이 전문가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5년 전(2013년), 현재(2018년), 5년 후(2023년)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5년 전에 비해 현재, 현재에 비해 5년 후의 사회보장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장 확대 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으로 전문가는 노인(44.0%), 영유아·아동(24.0%), 청년(18.0%) 순으로 응답한 반면, 국민은 노인(33.5%), 청년(21.0%), 중장년(19.3%) 순으로 응답함. 전문가가 국민보다 영유아·아동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회보장 분야에서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 중 정부가 더 우선을 두어야 하는 방식에 대해 국민은 74.2%가 소득보장을 선호한 반면, 전문가는 그 보다 낮은 55.0%가 소득보장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보장 중점 정책으로는 전문가와 국민 모두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 지원 강화’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보장 중점 정책으로는 전문가의 경우 ‘건강보장’과 ‘보건의료 분야’를 선택했으나 국민은 ‘고용분야’를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전문가와 국민은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보건의료 분야의 중점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노후지원 정책으로는 전문가와 국민 모두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과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육 및 아동 돌봄 정책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으로는 전문가와 국민 모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육정책 중에서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 주거 취약가구를 위한 정책 중에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

다. 사회조사

- 통계청은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인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매년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사회조사는 1977년 ‘한국의 사회지표’의 주관적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처음 실시되었으며, 초기 8개 영역(소득/소비, 고용/노사, 교육, 보건, 주택/환경, 사회, 문화/여가, 공안)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사회변화에 맞춰 주기적으로 개편되어옴.
- 현재 10개 부문 중 매년 5개 부문에 대해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홀수 해에는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을 조사하고, 짝수 해에는 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 부문을 조사함.
- 사회조사 대상은 표본 가구 내 만 13세 이상 모든 가구원(2010년 만 15세)으로서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구를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함.

〈표 3-3〉 사회조사 개요(최근 4년)

구분	2016	2017	2018	2019
조사 대상	전국 25,233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8,600명	전국 25,704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9,000명	전국 25,843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9,000명	전국 27,336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7,000명
조사 방법	가구 방문 면접조사(응답자가 희망하는 가구에 한하여 응답자 기입, 인터넷 조사방식 병행)			
표본 추출	27개 지역별 층화 및 분류지표에 따라 정렬 후 층별로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 확률비례계통추출방법			
조사 시기	2016. 5. 18.~6. 2.	2017. 5. 16.~6. 2.	2018. 5. 16.~5. 31.	2019.5.15~5.3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보도자료(각 년도)

□ 각 부문별 주요 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짝수 해 조사의 경우, 가족 부문에서는 가족 관계 만족도,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결혼 및 결혼식 문화에 대한 인식 등, 교육 부문에서는 학교 생활 만족도, 교육 기회의 충족도 등, 보건 부문에서는 건강평가, 의료 서비스 만족도, 자살 충동 등, 안전 부문에서는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사회의 주된 불안 요인 등, 환경 부문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환경보호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
- 홀수 해 조사의 경우, 복지 부문에서는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및 복지서비스,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노후 준비방법, 장애인 복지사업 등, 사회참여

부문에서는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정도, 계층 이동 및 이동 인식 등, 문화와 여가 부문에서는 여가 활동 만족 여부, 레저시설 이용 등, 소득과 소비 부문에서는 소득 및 소비 생활 만족도, 가구 소득과 부채의 변화, 우선적으로 줄일 지출항목 등, 노동 부문에서는 고용의 안전성,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근로 여건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있음.

□ 본 연구의 조사와 관련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보건 부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라고 평가한 사람은 2016년 47.1%에 비해 2018년 48.8%로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60.7%에서 2018년 80.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의료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응답 비율은 2년 전(2016년)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보건소(71.5%), 종합병원(57.7%), 한의원·한방병원(57.0%), 병의원(54.2%), 치과병의원(52.1%), 약국·한약국(41.6%) 순으로 나타남.
- 환경 부문에서 기후변화(49.3%), 유해 화학 물질(53.5%), 방사능(54.9%), 농약 및 화학비료(45.6%), 수돗물(30.4%)보다 미세먼지(82.5%)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6년에도 황사, 미세먼지 유입(79.4%)으로 나타난 바 있음.
- 가족 부문에서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2008년 38.0%, 2016년 29.2%, 2018년 27.1%),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 또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2008년 40.7%, 2016년 30.8%, 2018년 26.7%).
- 복지 부문에서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제도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에 대해 2년 전(2017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음. 2019년 사회보장 제도는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8%, 보건의료서비스는 58.7%로 나타남.
 - 2019년 향후 더 늘려야 할 공공시설은 보건의료시설(23.2%), 사회복지시설(16.5%),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15.9%) 순이고, 복지서비스는 고용

(취업지원)(32.5%), 보건의료·건강관리(18.7%), 소득지원(16.4%) 순으로 나타남. 2017년 순위와 동일함.

-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2017년 65.4%, 2019년 65.1%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준비 방법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에 두 해 모두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음. 2017년에는 53.3%, 2019년에는 55.2%로 약간 증가함.

○ 소득과 소비 부문에서 2019년 소득 있는 사람 중에서 소득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은 14.1%로 2년 전(2017년)보다 0.8%p 증가함. 한편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대하여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16.8%로 2년 전(2017년)보다 1.4%p 증가함.

- 2019년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육아부담이 50.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적 편견(17.7%)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7년에도 동일한 순위를 보이지만, 육아부담이 2017년 45.9%에서 4.7%p 증가, 사회적 편견은 23.4%에서 5.7%p 감소한 수준임.

라. 한국복지패널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통해 3년 주기로 복지인식 및 정책평가, 복지재원 관련 인식을 조사하고 있음.

○ 한국복지패널조사는 국민의 경제·사회적 행태변화 및 빈곤층의 규모·실태 변화, 정책욕구 및 수요,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전 등에 대한 체계적 파악을 통해 복지정책의 개선 및 중장기적 재정수요 파악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지금까지 복지인식 부가조사(2차, 5차, 8차, 11차, 14차)는 2020년 현재까지 5차례 수행되었음.

〈표 3-4〉 한국복지패널조사 개요

구분	2007(2차)	2010(5차)	2013(8차)	2016(11차)	2019(14차)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인 가구원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한 조사원 면접조사				
표본 추출	1차 패널 표본 가구 중 지역별 층화 단순임의추출법에 따라 총 1,259가구(1,694명) 추출	2차 연도 부가조사에 응답했던 가구를 중심으로 4차 연도 패널 표본 가구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총 1,444가구(2,366명) 추출	7차 전체 표본 가구 중 지역별, 계층별로 확률 비례 추출법에 따라 2,399가구(5,050명)추출	8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 대상자 중 11차 연도 표본에 포함된 가구 2,121가구(3,634명) 추출	11차 연도 복지인식 부가조사 대상자 중 13차 연도 표본에 포함된 가구원(2,001명)과 추가로 13차 기준 만 18~21세에 속하는 가구원(387명)을 추출
조사 시기	2007.4.24.~7.20	2010.5.18.~8.31	2013.1.12.~6.8.	2016.3.2.~6.30	2019.2.18.~5.3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각년도)

□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복지 재원 및 대상 범위, 정치 참여와 성향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함.

○ 주요 조사 문항은 소득 및 재산 분배의 평등성, 빈곤의 원인, 각 정책분야별 지출 확대 동의 정도, 세금 부담 증가 동의 정도, 사회정책 영역별 평가, 복지 재원 마련 방법, 사회문제별 지출 우선순위 등을 조사하고 있음.

□ 주요 문항에 대한 5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동의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7년 37.9%, 2010년 41.3%, 2013년 43.0%, 2016년 31.2%, 2019년 33.5%로 나타남.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16년 11.8%p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동의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7년 52.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조사에서는 23.3%로 급격히 감소함. 2010년 40.9%, 2013년 35.5%, 2016년 33.2%으로 나타남. 반대한다(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는 의견도 증가하였으나,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보류의 의견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노동 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최소 생계를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07년 조사 이래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 동의한다(매우 동의하다+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2007년 45.1%, 2010년 44.9%, 2013년 43.8%, 2016년 38.9%, 2019년 45.6%로 나타남. 반면,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유보적 응답이 2007년 12.2%에서 2019년 24.9%로 증가하였고, 반대한다(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2007년 42.7%, 2019년 29.5%로 감소함.
-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최소한의 서비스로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각자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반대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7년 53.9%, 2010년 78.8%, 2013년 75.8%, 2016년 71.3%, 2019년 73.5%로 나타남. 2007년에는 과반이 약간 넘는 비율을 보이지만, 2010년 이후 꾸준히 70%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 마련 방법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마련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개년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 2007년 35.8%, 2010년 40.2%, 2013년 43.3%, 2016년 44.1%, 2019년 44.1%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2013년까지 3차례 조사에서는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가 두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나, 2019년에는 국민보다 '기업이 세금, 기부금 등을 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남 (22.3% < 25.8%).

2. 해외의 공공 인식조사(Public Opinion Survey) 현황

가. 국제 비교가 가능한 사회조사

1)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

□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s, ISSP)은 사회과학연구에 있어 중요한 주제를 매년 지속적으로 다루는 다국적 협동 프로젝트임⁵⁾.

5) 김미곤 외(2016, pp. 99-104)의 내용을 수정 보완함.

- 1972년에 시작된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를 모태로, 1983년 이후 가입국을 대상으로 공통 모듈의 조사표를 활용해 동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43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 회원국은 매년 개최하는 총회에서 공동으로 조사 주제 및 설문문항을 결정하고 조사함.
- 조사내용은 ISSP 전체의 주제모듈과 국가별 특별주제모듈로 구성하며, ISSP와 동아시아사회조사(East Asia Social Survey, EASS),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구성함.
- EASS (동아시아 사회 조사)⁶⁾는 동아시아의 학술 조사 데이터 세트를 생성 및 배포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되는 사회 조사 프로젝트로, GSS 조사를 통해 동아시아 사회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비교 연구 수행.
 - 2003년에 시작된 EASS는 소수의 국제 사회 설문 조사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엔 가족, 2008년 문화, 2010년 건강, 2012년 사회적 자본에 대해 주제 모듈을 가지고 조사되었음.
 - 동아시아 사회 조사 (EASS)는 중국 일반 사회 조사 (CGSS), 일본 일반 사회 조사 (JGSS), 한국 일반 사회 조사 (KGSS) 및 대만 사회 변화 조사 (TSCS)를 기반으로 하였음.
-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urvey, KGSS)⁷⁾는 2003년에 시작한 사회조사로,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GSS)의 ‘한국판’ 조사임.
 - 한국종합사회조사는 한국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여러 핵심적 내용들을 포괄하여 매년 조사하는 반복핵심설문(replicating core questions), 국가 간 비교 사회조사(cross-national survey research)인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와 EASS(East Asian Social Survey),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모듈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설문을 구성함.

6) EASS 홈페이지(<http://www.eassda.org/>)에서 2020. 3. 19에 인출

7)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2018)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 General Social Survey, KGSS)에서 참조

□ ISSP와 동아시아사회조사(East Asia Social Survey, EASS),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의 핵심질문모듈은 다음 표와 같음.

○ ISSP 주제모듈은 ①정부역할, ②사회적 관계망, ③사회적 불평등, ④가족과 성역할, ⑤일, ⑥종교, ⑦환경, ⑧국가정체성, ⑨시민성, ⑩여가와 스포츠, ⑪건강 11개로, 시기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순환, 운영하고 있음.

〈표 3-5〉 연도별 ISSP 및 KGSS의 핵심질문모듈

ISSP	연도	KGSS	
		EASS주제모듈	특별주제모듈
		동아시아4개국(한국, 일본, 대만, 중국)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정부역할 I	1985	해당 사항 없음	
사회적관계망 I	1986		
사회적 불평등 I	1987		
가족과 성역할 I	1988		
일 I	1989		
정부역할II	1990		
종교 I	1991		
사회적 불평등II	1992		
환경 I	1993		
가족과 성역할II	1994		
국가정체성 I	1995		
정부역할III	1996		
일II	1997		
종교III	1998		
사회적 불평등III	1999		
환경 II	2000		
사회적 관계망II	2001		
가족과 성역할III	2002		
국가정체성 II	2003		일(ISSP-1997), 사회적 불평등(ISSP-1999), 가족과 성역할 (ISSP-2002)
시민성 I	2004		사회적 관계망(ISSP-2001)
일III	2005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정부역할IV	2006	동아시아의 가족1	
여가와 스포츠 I	2007		문화산업과 소비
종교III	2008	동아시아의 문화와 전지구화	
사회적 불평등IV	2009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환경III	2010	건강	

ISSP	연도	KGSS	
		EASS주제모듈	특별주제모듈
		동아시아4개국(한국, 일본, 대만, 중국)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건강 I	2011		인권, 연령주의(ageism)
가족과 성역할Ⅳ	2012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인터넷, SNS 사용, 정신건강
국가정체성Ⅲ	2013		SNS, 일자리, 노동가치
시민Ⅱ	2014		위험사회, 불평등과 공정성
일Ⅳ	2015		
정부역할Ⅴ	2016	가족	원자력발전/SNS 활용, 불평등과 정치참여, 유교/인간본성, 낙관주의/희망
사회적 관계망Ⅲ	2017		
종교Ⅳ	2018		불평등과 정치참여, 인권의식 확산, ISSP 종교, 결혼, 가조, 출산에 대한 세대 간 인식변화, 연령주의, 인권의식 확산, 종교, 일자리 및 소득정책, 여론조사, 국민성/지역사회의 활성화, ISSP 종교/낙관주의
사회적 불평등Ⅴ	2019		
환경 Ⅳ	2020		
건강과 건강관리Ⅱ(예정)	2021		
가족과 성역할 변화(예정)	2022		

주: 공란은 해당연도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김미곤 외(2016 p. 101)의 보고서 내용을 2019년 기준으로 보완하였음.

ISSP 홈페이지(<http://w.issp.org/>)에서 20.3.18에 인출

□ 2019년 조사에서는 사회적 불평등(Social Inequality)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구체적인 질문 문항은 다음과 같음.

○ 앞서가기(Getting ahead), 직업 수익 (Actual/Should occupational earnings), 불평등에 대한 염려(Concerns about inequality), 사회정책과 재분배(Social policy and redistribution), 시장 행위자에 의한 불평등 감소(Reducing inequality by market actors), 정부의 비효율(Government inefficacy), 세금(Taxation), 사회서비스에서 시장 불평등(Market inequality in social services), 글로벌 불평등 인식(Perceptions of global inequality), 사회 갈등(Social conflict), 주관적 사회 계급/계급 이동성(Subjective

social class/class mobility), 지불 기준(Pay criteria), 사회의 종류(Types of society), 불평등의 경험(Lived experience of inequality), 경제 불안(Economic insecurity), 사회 신뢰(Social trust), 객관적인 사회적 이동성(Objective social mobility) :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 응답자의 직업, 배우자 / 파트너의 직업, 불평등에 대한 설명(Lay explanations of inequality)

○ 현재 2017년 데이터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2018, 2019, 2020년 데이터는 개발 중에 있음.

□ 본 연구와 관련 있는 항목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⁸⁾.

○ Markus Hadler외(2020)는 ISSP에 참여한 주요 나라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응답자는 44,492명이었음.

-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정부라는 답변이 81%로 가장 높았고, 가족, 친지 또는 친구가 9%로 뒤를 이었음.
- ‘노인을 돌보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부가 64%, 가족은 24% 라고 응답하였음.

2) 세계가치관 조사 (World Values Survey)⁹⁾

□ 세계가치관 조사는 1981년 이후로 약 100개의 국가에서 사회문화적, 윤리적, 종교적, 정치적 가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1981년 당시 연구 대상은 선진국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 증가로 6개 대륙에 위치한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수행됨.

□ 2015년에 WVS는 7번째 웨이브 조사를 세계적으로 착수하였으며, 웨이브는 5년마다 계획됨.

8) Markus Hadler, Florian Gundl, Bostjan Vrecar. (2020), The ISSP 2017 Survey on Social Networks and Social Resources: An Overview of Country-Level Results

9) WVS 홈페이지(<http://www.worldvaluessurvey.org/>)에서 2020. 3. 19에 인출

○ wave1은 1981년부터 1984년, wave2는 1990년부터 1994년, wave3은 1995년부터 1998년, wave5는 2005년부터 2009년, wave6은 2010년부터 2014년에 수행되었음.

○ wave7의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영토 적용 범위를 60개국에서 80개국으로 확대
- 국제 개발 커뮤니티 내 협력강화
- NGO, 교육 기관 및 연구 재단 내 협력 강화
- 새로운 사회적 현상과 새로운 가치 변화 과정을 다루는 새로운 주제와 항목으로 설문지를 업데이트
- 개발도상국의 조사현장 잡업을 위한 역량 및 지원 확대

□ WVS-7의 설문지는 아래와 같이 인구 통계학을 포함한 14개의 주제에 대한 하위 섹션에 따라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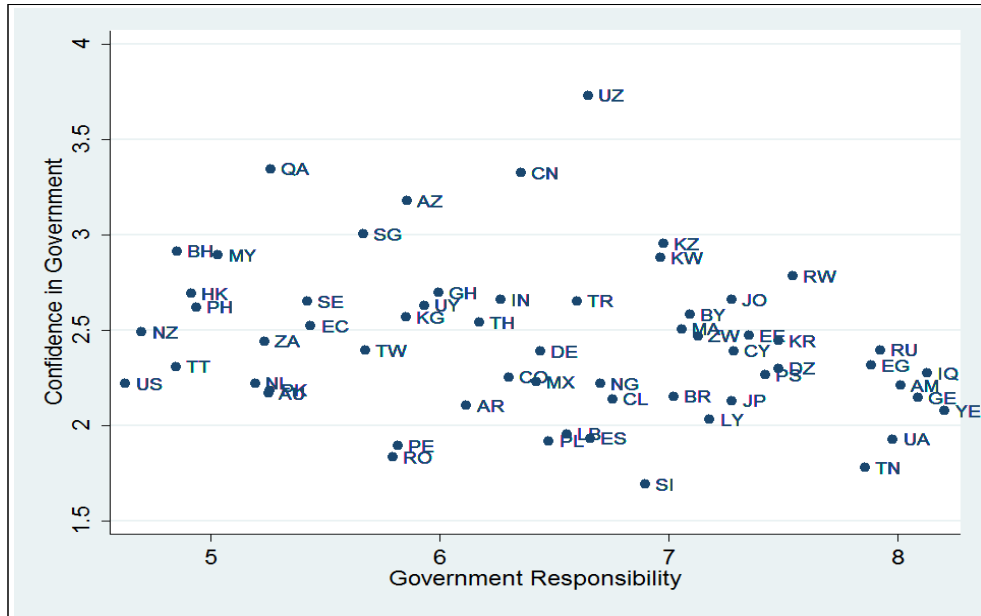
○ 사회적 가치, 태도 및 고정 관념(45개), 사회 복지(11개), 사회적 자본, 신탁 및 조직 구성원(49개), 경제적 가치(6개), 부패(9개), 이민(10개), 포스트 유물론자 인덱스(6개), 과학 기술(6개), 종교적 가치(12개), 보안(21개), 윤리적 가치와 규범(23개), 정치적 관심 및 참여(36개), 정치 문화 및 체제(25개), 인구 통계(31개)

□ 본 연구와 관련 있는 항목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인 제6차 웨이브 조사(2010~2014년)에서는 정부의 신뢰도 및 사회보장 역할 인식 문항을 포함하여 국가의 평균 점수를 제시하고 있음.

○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의 사회보장 역할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정부의 신뢰도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3-1] 2010~2014년 정부 신뢰도와 정부의 사회보장 역할 인식



주: 1) 정부 신뢰도(Confidence in Government)는 '(1)전혀 신뢰하지 않는다'~'(4)전적으로 신뢰한다'의 4점 척도의 평균이고, 정부의 사회보장 책임(Government Responsibility)은 '(1)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10)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의 11점 척도임.

2)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44점이고, 정부의 사회보장 역할 인식은 7.48점임.

3) 이 그래프는 6차 웨이브(2010~2014년) 기간 동안 해당 문항을 조사한 60개국을 대상으로 함.

자료: 1) WVS (2015). World Value Study 1981-2014 Longitudinal Aggregate v.20150418, 2015.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www.worldvaluessurvey.org). Aggregate File Producer: JDSystems Data Archive, Madrid, Spain.

2) 김미곤 외(2018, p. 96)에서 재인용

나. 미국의 공공정책 인식조사

□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수행하는 인식조사와 주정부의 정책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식조사가 있음.

○ 여기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사회조사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함.

1) 주요 미국 정책인식 조사 (Major U.S. Political Opinion Sources)

□ 아메리칸 트렌드 패널 웨이브 (American Trends Panel Wave, ATP)¹⁰⁾

-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는 "비당파적 팩트 탱크(nonpartisan tank)로서, ATP는 퓨리서치 센터가 구성한 무작위로 선택된 미국 성인의 전국 대표 패널임.
 - ATP는 2014년에 처음 만들어진 조사로, 첫 번째 패널 집단에 대해서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진행된 대규모 유선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과 2017년에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 대상에 대한 추가 모집이 수행됨.
 - 2014년, 2015년, 2017년 조사에서 총 19,718명의 성인에 대해 조사 요청을 하였으며, 그 중 9,942명이 조사에 응하였음.
 - 현재까지 41개의 wave가 공개되어 있으며, wave1부터 wave9는 2014년에, wave10부터 13은 2015년에, wave14부터 23까지는 2016년, wave 24부터 30까지 2017년, wave 31부터 41까지 2018년에 수행되었음.
 - Wave1은 2014년 3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주제는 미디어 소비(Media consumption)였음.
 - 2019년 현재 가장 최신의 wave는 wave 41로, 2018년 12월 10일부터 23일까지 2050년 미국 전망에 대해 조사함.
 - 본 조사에서는 인터넷과 기술,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히스패닉, 미국과 그 밖의 공공 생활에서 종교의 역할, 미국의 사회 및 인구 통계적 경향, 글로벌 인식(global attitude)을 다루고 있음.
- 랜드 아메리칸 라이프 패널 설문 조사(Rand American Life Panel Survey, ALP)¹¹⁾
- ALP는 18세 이상의 미국 성인 6000명 이상을 조사한 전국 대표 확률 기반 패널 조사로, 인터넷 기반 도구를 통해 조사가 수행되어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높은 품질의 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 2003년에 RAND Corporation은 노인 고령자 사이에서 인터넷 인터뷰의 방법론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National Aging Institute에서 5년간 보조금을 받아 조사를 수행하였음.

10) ATP홈페이지(<https://www.pewresearch.org/american-trends-panel-datasets/>)에서 2020.3.19에 인출

11) 랜드 아메리칸 라이프 패널 홈페이지(<https://alpdata.rand.org/>)에서 2020. 3. 13에 인출

- ALP는 조사대상자를 2003년 40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를, 2006년에 18세 이상 6000명 이상으로 확대하였음.
- ALP는 재정적 의사 결정, 자기보고 복지에 대한 정치적 사건의 영향, 인플레이션 기대, 공동 퇴직 결정, 퇴직 선호, 건강 의사 결정, 사회 보장 지식 및 기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450개 이상의 설문 조사를 수행함.

2) 주정부의 미국 정책인식 조사

□ PPIC Statewide Survey

- 캘리포니아의 공공 정책 연구소(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 PPIC)에서 수행한 조사로, 2010년 6월에 재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던 5개 주(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및 뉴욕)에서 실시되었음.
- 설문조사는 미국 퓨 리서치 센터와 협력하여 수행되었으며, 해당 데이터는 5개 주의 공공 태도 및 재정에 반영되었음¹²⁾.
- 조사내용은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범죄, 경제, 교육, 환경, 복지, 여권 등), 각 주정부가 직면한 이슈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정부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음.

□ 미시건 공공정책조사(The Michigan Public Policy Survey, MPPS)¹³⁾

- 미시건 공공정책조사(The Michigan Public Policy Survey, 이하 MPPS)는 미국 미시건대학교 지방/주/도시정책 센터에서 운용하는 주 단위 서베이조사 프로그램으로, 주정부 정책 결정과정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 인식을 조사함.

12) PPIC 홈페이지

<https://www.ppic.org/data-set/ppic-statewide-survey-special-survey-on-public-attitudes-and-fiscal-realities-in-five-stressed-states/>에서 2020.3.13.에 인출

13) 김미곤 외(2016)의 보고서를 수정·보완함.

- 미시건대학교에서 조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카운티 연합(the Michigan Association of Counties), 미시건 시 연합(Michigan Municipal League), 미시건 지역 연합(Michigan Townships Association)이 공동 주관하여 응답자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음.
- 조사내용은 주정부의 재정정책 운용방식 및 상태에 대한 견해, 공공분야 보상, 인력개발, 지방정부와의 관계, 정부 간 협력, 경제개발전략, 정책 발전방향 및 경제 재구조화 방안,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에너지 이슈, 정부 신뢰, 주정부 정책결정자의 업무 평가, 연방정부 활성화(Federal Stimulus Program, ARRA) 효과성 평가, 주지사 및 주정부 직무 평가, 주정부 정책방향 등을 포함함.
 - 매년 봄 조사에서는 재정 운용방식 및 주지사/주정부 직무 평가, 주정부 정책방향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연도별 응답 비교를 가능하게 함.
- MPPS는 2009년에 시작하여 연2회, 봄과 가을에 각각 수행되며, 2019년 봄 조사까지 총 18회기 진행되었음.
 - 봄 조사는 핵심질문, 즉 재정정책 운용관련 질문을 포함하고, 가을조사는 시의성을 고려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됨.

〈표 3-6〉 미시간 공공정책조사 개요

조사회기	조사내용
2019년 봄	연간 재정 운용 정책, 지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경제 불황, 에너지 문제, 2020년 미국 인구 조사, 주지사 및 주정부의 직무 수행 평가
2018년 봄	연간 재정 운용 정책, 지역 사회 빈곤; 지방 정부 관계, 의료용 마리화나, 주지사 및 주정부의 직무수행 평가, 관찰권, 주정부 정책 방향
2017년 가을	토지 이용 계획 및 구역 설정, 주택, 성능 측정 및 관리
2017년 봄	연간 재정 운용 정책, 선거 관리, 주지사 및 주정부의 직무 수행 평가, 정부의 정책 방향 평가
2016년 봄	연간 재정 운용 정책, 조세 납부 의사와 정책 패키지, 지방정부 재정 체계, 식수 이슈 및 기반시설, 재산세 견해, 주지사 및 주정부의 직무 수행 평가, 주정부 정책 방향
2015년 가을	공공 안전 이슈, 공공 서비스,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소방 서비스, 응급 의료 서비스
2015년 봄	연간 재정 운용 정책, 정책 실행, 은퇴자 건강 돌봄, 연금, 주지사 및 주정부의 직무 수행 평가, 주정부 정책방향
2014년 가을	도로(도로 상태, 유지, 재정), 개인 도로, 운송, 카운티 도로 위원회 평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 윤리
2014년 봄	연간 재정 운용 정책, 민영화, 정부 재정 장교 협회(GFOA)의 재정 정책, 주지사 및 주정부의 직무 수행 평가, 주정부 정책 방향, 투표 제안, 주민 투표, 시간제 입법부
2013년 가을	에너지 및 환경 이슈, 5대호, 풍력 발전, 수력 발전, 에너지원, 환경의 지속가능성, 디트로이트 파산
2013년 봄	연간 재정 운용 정책, 정책 실행, 은퇴자 건강 돌봄, 공공 분야 노동조합 및 협의, 일할 수 있는 권리의 입법, 재산세 면제, 경제 정책 발전 방향, 기업가 정신, 주지사 및 주정부의 직무 수행 평가, 주정부 정책 방향, 정부 신뢰
2012년 가을	시민 참여, 기술 관련 이슈
2012년 봄	연간 재정 운용 정책, 정책 실행, 공공 분야 노동조합 및 협의, 조세 납부 의사와 정책 패키지, 지방정부 재정 체계, 개인 재산세, 응급 관리법,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교육 제도, 주지사 및 주정부의 직무 수행 평가, 주정부 정책 방향
2011년 가을	정책성과 측정 및 관리,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데이터 활용, 경제적 인센티브 프로그램, 정책 대시 보드
2011년 봄	연간 재정 운용 정책, 정책 실행, 고용 보상, 은퇴자 건강 돌봄, 연금, 특별세 관리 당국, 카운티 정부의 과세, 응급 관리법 정책성과 측정 및 관리, 정책 대시보드, 연방 정부 활성화, 주지사 및 주정부의 직무 수행 평가, 주정부 정책 방향
2010년 가을	정부 간 협력 및 통합, 서비스 공유, 지방 정부 환경 리더십, 에너지 효율성, 지구 온난화
2010년 봄	연간 재정 운용정책, 정책 실행, 고용 보상, 은퇴자 건강 돌봄, 연금, 조세 납부 의사와 정책 패키지, 경제 정책 조정, 조세 공유 및 지방 세무 당국, 독립적재구획 위원회, 미국 인구 조사, 연방 정부 활성화
2009년 가을	인력 개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교육제도, 두뇌 유출, 공공 안전 조합 협상을 위한 미시간 공공법 312, 주 의회 협약, 임기 제한, 주지사 및 주정부의 직무 수행 평가, 연방정부 활성화
2009년 봄	연간 재정 운용 정책, 정책 실행, 제반 사회 이슈, 경제 발전, 발전 방향, 정부 신뢰, 정부 간 협력, 토지 이용 계획, 연방정부 활성화

자료: 김미곤 외(2016 p. 97)의 표를 2019년 현재 기준으로 보완 및 수정

미시간 공공 정책 조사 홈페이지(<http://closup.umich.edu/michigan-public-policy-survey/mpps-data-tables.php>)에서 2020. 3. 19에 인출

□ 본 연구와 관련 있는 항목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¹⁴⁾.

- 지역 공무원의 44 %가 주민 5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7%는 대다수의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함.
 - 지역별로는 북부일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도농 지역, 농촌 지역의 경우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8가지 유형의 서비스(약물 치료 프로그램, 직업 훈련/인력개발, 저렴한 주택, 대중교통, 비상 주택, 의료 보조금, 보육 프로그램, 비상 식품)에 관해 지역별 충족 정도를 확인하였음.
 - 약물 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모든 지역에 미충족 되고 있었는데, 특히 북부 지역(-43%)과 중북 지역(-41%)에서 두드러짐.
 - 북부 지역과 중북 지역은 위의 8가지 유형의 서비스 중 5가지가 미충족 되고 있는 반면, 남서부 지역에는 4가지 유형의 서비스 미충족이 나타남.
 - 이에 비해 미시간 남동부 지역은 1가지 유형의 서비스(약물 치료 프로그램)만 미충족인 것으로 확인됨.

다. 영국의 사회태도조사 (British Social attitude Survey)

- 영국 사회태도조사는 1983년 이후 영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가계, 정치적 성향, 공공지출 및 사회보장, 보건, 고등교육, 유럽연합, 교통, 주거, 고용, 배우자 고용, 은퇴 및 연금, 통계 신뢰, 채식, 계층 의식, (노후)자산, 국민 정체성, 종교, 장애, 교육, 소득과 급여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¹⁵⁾.
- BSA는 영국의 대중 인식에 대한 권위 있는 데이터로서,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확률 표본 추출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고 있음.

14) Michigan Public Policy Survey(2019). The center for local, State, and Urban Policy

15)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에서 2020.04.02.에 인출

- 2017년에 GEO(Government Equalities Office)는 교육부(DfE)와 성 전환자에 대한 적대적 태도 및 감정(transphobia), 결혼 및 동성애, 노동의 성 분담, 직업 분리, 자기 이미지, 괴롭힘(harassment)과 관련해 대중의 태도를 조사하였음¹⁶⁾.
- 2017년에는 7월~11월 사이에 영국, 웨일즈, 스코틀랜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대면 방식으로 3,011개의 문항이 조사되었고, 이 중 2,474개가 분석에 활용되었음.
- 데이터는 선택 확률이 같지 않고 결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중치가 부여되었으며, 연령, 성별 및 지역을 기준으로 인구 비율에 맞게 조정되었음.
-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사회태도 조사의 조사항목은 노동과 아동 돌봄에 대한 젠더 역할 분담(Gender divisions of labour and Childcare)으로,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아이가 있는 여성의 경우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학령기 아동의 경우 49%, 학령기 이전 아동 38%), 학령기 이전 아동의 경우에는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견이 33%로 나타남.
 -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가 어떻게 나눠가져야 하나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54%)이 어머니가 휴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취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0%가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16) Government Equalities Office. (2019). Attitudes to equalities : The British Social Attitudes Survey. 2017.

제2절 조사표 구성 및 분석틀

1. 조사표 구성의 원칙

- 본 조사연구는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과 기존 정책과 제도에 대한 성과 및 체감도 평가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있음.
- 이러한 조사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표의 구성에서 포괄성과 배타성, 정책적 시의성, 응답 용이성, 기존조사와의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 조사방법의 조응성 등의 원칙을 견지하려고 노력하였음.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표 구성의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조사표 구성에서 ‘배타성과 포괄성의 원칙’이란, 문항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조사표가 보건복지의 영역을 중복이나 누락 없이 최대한 담고 있어야 함을 의미함.
 - 본 연구는 특정 보건복지영역에 대한 심층적 분석보다는, 보건복지 전반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따라서 조사표는 전반적인 보건복지 인식과 복지, 보건의료, 인구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자 하였음.
 - 만족도와 성과평가, 정책(방향) 우선순위 문항을 균형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영역(분야)별 문항수를 고르게 분배하고자 하였음. 다만, 본 조사는 국민의 인식을 포착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정책성과 평가보다는 인식과 선호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문항을 구성하였음.
 - 또한 각 영역(분야)에 대한 하위정책을 보다 포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 관련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 문항의 포괄성을 높이하고자 노력하였음.
- ‘정책적 시의성 원칙’이란,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이슈, 국민인식과 관심영역, 최근 도입된 정책이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정책, 현재 정치적·정책적 쟁점이 되는 사안 등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고, 이를 문항에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보건복지 정책수립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 본 연구는 2010년 이래 계속해서 진행되는 조사 연구인만큼, 지난 한 해 동안의 환경과 정책 변화, 특히 새롭게 제기되는 주요 국정비전이나 주요 현안 과제를 문항에 포함하고자 노력하였음.
- 현 정부가 추진한 보건복지정책 중 특히 국민 행복 향상에 효과적인 정책에 대한 평가와 사회서비스 질 제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저출산 대응 정책,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라돈침대 등 건강 위해 요인 관리, 정신 건강, 연명 의료, 보건 의료 기술 발달에 대한 의견 등의 문항이 시의성을 반영하는 문항으로 볼 수 있음.
- ‘응답 용이성 원칙’은 응답자에게 응답을 부탁하면서, 이들이 기꺼이 응답을 해줄 것인지, 이들이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지, 응답자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고려하여 질문을 구성하는 것임(고성호 외, 2014, pp.347-350).
 - 예를 들어, 청소년 및 청년에게 노후생활과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적절성, 만족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기는 어려움.
 - 또한 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이 사회보장 영역의 수요, 미래 전망에 대해 이 해당자가 응답할 경우, 응답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기존조사와의 일관성 또는 비교가능성 원칙’이란, 기 연구된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유사한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수행되었던 기존 국내외 조사 연구의 질문 문항, 척도의 수준, 나아가 하위 항목의 내용을 동일하게 또는 유사하게 구성함으로써 기존 조사연구와 비교 가능한 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함.
 - 기존 자료와의 일관성 혹은 비교가능성은 국민과 전문가의 인식과 평가, 선호도의 변화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원칙임.
 - 본 연구는 상당수의 문항을 기 시행된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구성함으로써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예컨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복지수준에 대한 인식, 보건복지 분야 중 중점 추진 분야 우선순위, 공공의료체계 확충, 의료서비스 항목별 만족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관련 문항 등은 2010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가 시행된 이래 지속적으로 포함되었던 문항임.

- 다만, 선호도 파악,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과제 등과 같은 일부 문항은 정책적 시의성과 비교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선택지에 변화를 주었음.
- 예를 들면,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성과평가에 있어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보육·양육 지원 확대, 노인 대상 돌봄 확대,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등의 선택지를 추가하고 수정하였으며,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 확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따른 대응, 보건의료 위해 대응체계 마련,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등의 선택지를 추가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음.

○ 마지막으로, ‘조사방법의 조응성’이란 문항의 구성, 난이도, 항목 수 등을 조사 방법과 조사 대상에 적합하게 구성함을 의미함.

- 조사방법은 크게 대면 설문조사, 전화조사, 웹메일 설문조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은 국민,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각 조사방법에 따라 응답의 신뢰도와 타당도, 응답 거부율, 무응답률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이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설문 문항의 수와 구성 등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또, 대상에 따라서 해당 설문에 대한 이해도와 순응도 등이 상이한 점도 설문지 구성에서 감안하여야 함.
- 본 조사연구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면 설문조사와 경상·법정, 인문·사회, 보건·의료 등 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 언론사 소속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웹메일 설문조사를 동시에 수행함.
- 국민에 대한 보건복지정책 인식조사의 경우 대면 설문조사의 어려움 (조사문항 수, 개인적이거나 어려운 질문 제외 등)을 감안하여 정책평가 보다는 정책만족도, 정책 및 제도 인지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표를 개발

하였음. 서열변수의 경우 과거 조사와의 일관성을 위하여 6점 척도로 통일함(단, 주관적 소득계층 등을 포함한 일부 문항은 제외).

-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웹메일 설문조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높은 점, 웹메일 설문조사의 경우 조사문항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책평가와 정책수요 문항을 골고루 포함시켰으며, 정책의 개선 방향성 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국민 대상의 설문문항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음.

○ 만 19세 이상의 국민 설문지의 문항 구성과 원칙은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음.

〈표 3-7〉 국민용 수요조사 설문지 문항 구성과 적용 원칙

구분		문항	적용원칙	비고 (본조사포함)
사회 인식	계층의식	A5. 주관적 계층의식(5점 척도)	일관성 비교가능성	7개년 계속문항
	일반인식	B1. 현재의 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6점 척도)	일관성 비교가능성	6개년 계속문항
	일반인식	B6. 현재의 걱정거리(불안요인)(1, 2순위). ① 일자리, ② 출산과 양육, ③ 자녀교육, ④ 신체와 정신건강, ⑤ 주거, ⑥ 노후생활, ⑦ 부채 상황, ⑧ 부채 상황, ⑧ 부모 부양, ⑨ 환경, ⑩ 안전	항목포괄성 시의성 비교가능성 조용성	6개년 선택지 일부수정문항
	일반인식	B2. 우리나라의 소득 및 재산의 분배, 기회 평등(공평)에 대한 인식(6점 척도)	일관성 시의성 비교가능성	6개년 계속문항
보건 복지 정책 일반	보건복지 인식	B3.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복지수준에 대한 인식 (6점 척도)	일관성 시의성 비교가능성	8개년 계속문항 (11년 척도수정), 2018년(사회 보장 수준), 2019년(보건 복지수준) 일부 수정
	보건복지 정책 만족도	B4.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6점 척도)	시의성 조용성	신규문항 (전문가_보건 복지성과 평가 문항과 조응)
	보건복지 대상 우선순위	B7. 보건복지정책 확대 시 중점 대상(1, 2순위) ① 영유아·아동 ② 청소년 ③ 청년 ④ 중장년 ⑤ 노인 ⑥ 기타()	항목포괄성 시의성	2개년 연속문항 (2019년 취약계층 분리, 보기항목 수정)
		B8.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정책 확대 시 중점 대상 (1, 2순위) ① 저소득층 ② 장애인 ③ 한부모가정·조손가정 ④ 노인 ⑤ 이주민(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⑥ 기타()	항목포괄성 시의성	
	복지정책 확대	B15. 보건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생각	시의성 비교가능성	2개년 연속문항 (2019년 보건복지정책 으로 문항 수정)
		B16. 보건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세금(이나 보험료) 부담에 대한 생각 B16-1. 보건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세금(이나 보험료) 부담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 ① 고소득자가 지금보다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② 정부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므로		

구분	문항	적용원칙	비고 (본조사포함)
	③ 정부가 제도를 공평하게 운영할 능력이 없으므로 ④ 보건복지정책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므로 ⑤ 내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더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복지정책	B5. 2019년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6점 척도) ① 일자리 지원 확대(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②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등) ③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④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⑤ 보육·양육 지원 확대 ⑥ 노인 대상 돌봄 확대 ⑦ 장애인 대상 돌봄 확대 ⑧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지원 확대 ⑨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⑩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항목포괄성 시의성 비교가능성	2개년 연속문항 (2019년 복지부 주요 추진 정책 항목 추가)
	B5-1. 2019년 복지정책 우선순위 ① 일자리 지원 확대(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②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등) ③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④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⑤ 보육·양육 지원 확대 ⑥ 노인 대상 돌봄 확대 ⑦ 장애인 대상 돌봄 확대 ⑧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지원 확대 ⑨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⑩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8개년 연속문항 (2019년 복지부 주요 추진 정책 항목 추가)
	B12. 장애인 지원정책 방향(1, 2순위) ①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② 의료, 재활, 건강관리 지원 강화 ③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인프라의 확대 ④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 ⑤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및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⑥ 장애인 학대 예방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 강화 ⑦ 기타()	항목포괄성 시의성 비교가능성	2개년 연속문항 (2019년 보기항목 수정)
	B13.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1, 2순위) ① 재가 돌봄서비스 확충 ② 당사자에 적합한 주거 환경 개선 ③ 동네의원을 통한 재택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④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안내 강화 ⑤ 안부 확인 등 상시적 대응 체계 구축 ⑥ 기타()	항목포괄성 시의성 비교가능성	2개년 연속문항 (2019년 보기항목 수정)
	부양의무자 기준 B8.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및 폐지	시의성	신규문항
	사회복지서비스 B9.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청절차 편의성	시의성	신규문항

구분	문항	적용원칙	비고 (본조사포함)
	사회서비스 B10.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 ②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③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④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⑤ 공공적 성격을 갖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대(기관운영의 투명성 확대, 제공인력 고용 안정 강화)	시의성	신규문항
	사각지대 발굴 B11.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중요한 역할 담당자 ① 지역주민 ②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③ 학교 및 민간 복지기관 종사자 ④ 방문형 사업기관(도시락 배달 등) 종사자 ⑤ 기타()	시의성	신규문항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재정 B14.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생각 B15.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생각	시의성	신규문항
보건 의료 정책	보건의료 정책 만족도 D1. 2019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만족도(6점 척도) ①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등) ②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③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감염병 등) ④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 확대(자살예방,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등) ⑤ 의료서비스 질 개선(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 인력 공급 확충, 공공의료체계 확충 등) ⑥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따른 대응(어린이집, 경로당 등 공기정화시설설치 등) ⑦ 보건의료 위해 대응체계 마련(생활용품 및 식·의약품 불안 등) ⑧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웰다잉(well-dying), 연명의료 결정제도 등)	항목포괄성 시의성 비교가능성	2개년 연속문항 (2019년 복지부 주요 추진 정책 항목 추가)
	보건의료 정책 우선순위 D1-1. 2019년 보건의료정책 우선순위 ①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등) ②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③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감염병 등) ④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 확대(자살예방,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등) ⑤ 의료서비스 질 개선(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 인력 공급 확충, 공공의료체계 확충 등) ⑥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따른 대응(어린이집, 경로당 등 공기정화시설설치 등) ⑦ 보건의료 위해 대응체계 마련(생활용품 및 식·의약품 불안 등) ⑧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웰다잉(well-dying), 연명의료 결정제도 등)		8개년 연속문항 (2019년 복지부 주요 추진 정책 항목 추가)

구분	문항	적용원칙	비고 (본조사포함)
의료서비스 만족도	D5. 의료 관련 다음 항목에 대한 평가(6점 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접근성) •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보장성) •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의료의 질) 	항목포괄성 일관성	6개년 계속문항
의료 전달체계	D2. 동네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급(30병상 미만) • 병원급 • 대형병원급(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 D3. 동네 의료기관 이용 시 중요 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속적 진료를 통한 나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가 있는 것 ② 신뢰할 만한 경력이 있는 의사나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 ③ 대형 병원과의 협진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것 ④ 건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진료나 상담을 해 주는 것 ⑤ 첨단 시설·장비를 갖추는 것 ⑥ 동네 의원을 이용할 의향 없음 ⑦ 기타(_____) 	시의성	신규문항
보건의료 인력확충	D4.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생각	시의성	신규문항
보건의료 서비스	D6. 보건의료 서비스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까운 곳에 진료 받을 수 있는 의원(또는 병원)이 있는 것 ② 응급 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이 충분한 것 ③ 암 등 중대한 질병이라도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이용을 하는 것 ④ 지속적 진료를 통해 전반적 건강 상태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주치의가 있는 것 ⑤ 내 증상과 치료 계획에 대해 의사에게 충분히 질문하고 설명을 듣는 것 ⑥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진료 받을 수 있는 것 ⑦ 스마트폰, 기기 등을 활용하여 진료, 처방, 건강관리를 받는 것 ⑧ 의사나 병원의 치료 성적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신뢰감을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⑨ 서울 등 수도권에 가지 않더라도 어디에서나 우수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 ⑩ 기타(_____) 	시의성	신규문항
건강보험 보장성	D7.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한 부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인, 노인, 소아 등 건강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 늘려야 한다 ② 경증 질환(감기 등)보다 중증 질환(암, 난치병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③ 계층, 질병 경중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치료, 검사에 대한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④ 기타(_____) 	시의성	신규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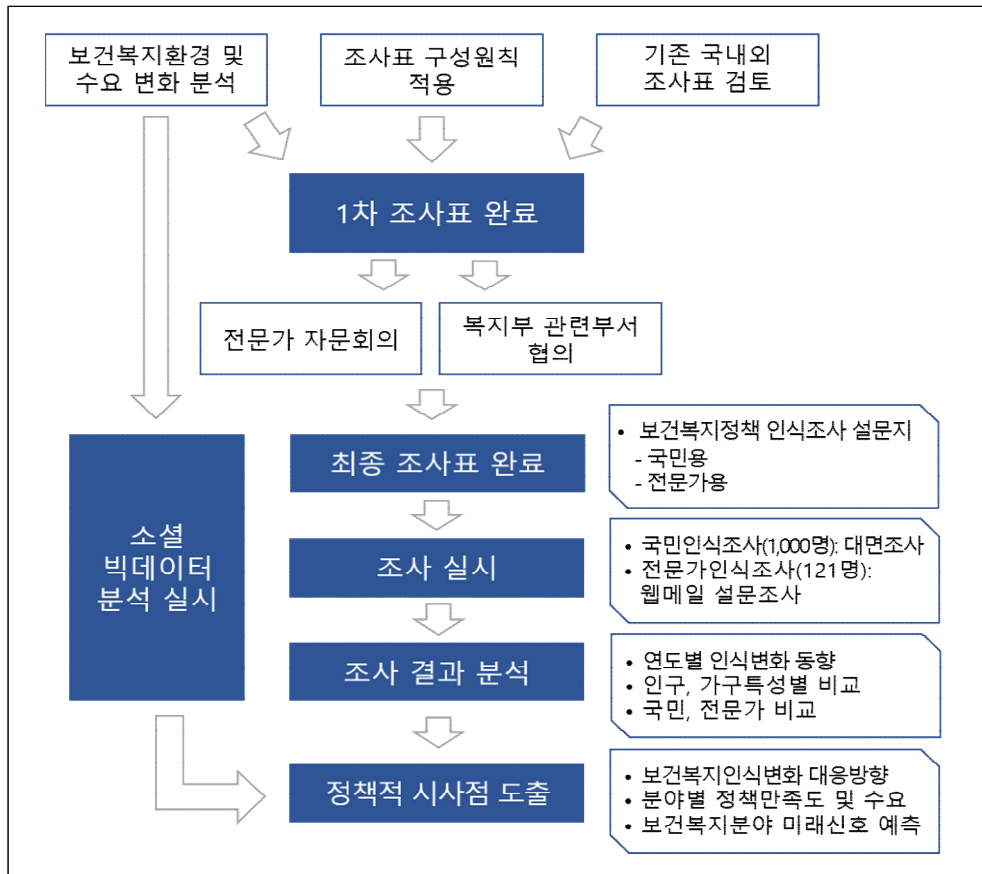
구분		문항	적용원칙	비고 (본조사포함)
	보건의료 위해 대응체계	D8. 라돈침대, 액상 전자담배 등에 대한 정부 개입에 대한 생각	시의성	신규문항
	연명의료 결정제도	D9. 연명의료결정제도 인지도 및 참여의향	시의성	신규문항
	정신건강	D10. 정신건강문제에 있어 시급하게 초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 ① 아동 ② 청소년 ③ 청년(20~30대) ④ 중장년(40~50대) ⑤ 노인(65세 이상) ⑥ 기타(_____)	시의성	신규문항
		D11.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상담 전화서비스 인지도	시의성	신규문항
인구 정책	노후준비 지원	C7.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방법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원 연금 등) ② 사적연금(은행, 보험회사 등을 통한 개인연금) ③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④ 금융 자산(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주식, 채권 등) ⑤ 부동산 운용(주택연금, 역모기지제도 등) ⑥ 자녀들의 부모 부양(사적이전)	항목포괄성 시의성 비교가능성	8개년 연속문항 (선택지 수정)
	고령화 대응	C6.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① 노인 소득지원 강화(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제도 확대) ② 노인 일자리 확대 ③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 ④ 정년 연장 ⑤ 노인 돌봄 지원 확대(노인 방문건강 서비스 확대, 노인 돌봄서비스, 치매 국가책임제 등) ⑥ 노인건강보험 확대 ⑦ 노후대비를 위한 정보제공 ⑧ 기타(_____)	항목포괄성 시의성	2개년 연속문항 (선택지 수정)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 평가	C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	시의성	신규문항
	저출산 해소	C2.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할 부분 ① 고용문제 해결 ② 주거문제 해결 ③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④ 영유아 의료비 지원 ⑤ 아동 돌봄지원(어린이집 돌봄, 아동돌봄서비스, 초등 돌봄교실, 다함께돌봄 확대 등) ⑥ 교육제도 개선(사교육) ⑦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확대 ⑧ 기타(_____)	시의성	신규문항

구분	문항	적용원칙	비고 (본조사포함)
육아지원 정책	C3. 육아지원 정책 우선순위 ① 아동수당 확대 (아동수당 금액 인상 및 수혜 대상 확대) ② 국공립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 ③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 ④ 시간연장, 시간제, 24시간 등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 ⑤ 가정양육 관련 지원(아이돌봄서비스 등) 확대 ⑥ 육아휴직제 정착 등 고용관련 제도 개선 ⑦ 육아정보·상담관련 정보 제공 ⑧ 보육·양육 지원 관련 현금지원 확대 ⑨ 기타(_____)	시의성	신규문항
아동 놀이권	C4. 아동의 놀이권에 대한 인식 • 국내 아동의 놀이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 아동의 놀권리를 위한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시의성	신규문항
노후생활 염려영역	C5. 노후생활에 있어 가장 염려되는 부분 ① 노후생활비 부족 ② 노후 건강 ③ 사회활동 단절 ④ 인간관계 단절 ⑤ 배우자나 가족과의 관계 ⑥ 기타(_____)	시의성	신규문항
노후 준비방법	C6. 노후 준비를 위한 방법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원 연금 등) ② 사적연금(은행, 보험회사 등을 통한 개인연금) ③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④ 금융 자산(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주식, 채권 등) ⑤ 부동산 운용(주택연금, 역모기지제도 등) ⑥ 자녀들의 부모 부양(사적이전)	시의성	신규문항
치매국가 책임제	C8. 치매국가책임제 인지여부	시의성	신규문항
장기요양 보험제도	C9. 장기요양보험제도 체감 정도	시의성	신규문항
노인 가족부양 지원	C10.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때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① 경제적 지원 ② 재가요양돌봄서비스 확대 ③ 간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④ 양질의 요양시설 확대 ⑤ 필요 없음	시의성	신규문항
노인 생활계획	C11. 노인이 되어 혼자 생활이 어려워질 경우, 생활계획 ① 자녀로부터의 돌봄 ② 친자이웃·친구로부터의 돌봄 ③ 요양간병 등 재가서비스 이용 ④ 시설 입소(양로시설,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⑤ 기타(_____)	시의성	신규문항

2. 분석틀: 보건복지정책 인식조사 연구의 분석 흐름도

□ 본 조사연구는 크게 최종 조사표 완료→조사 실시→조사결과 분석→정책적 시사점 도출의 순으로 진행되었음.

[그림 3-2] 2019년 보건복지정책 인식조사연구의 분석틀



○ 본 연구는 2016, 2018년 연구와 유사하게 대면조사 및 웹메일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음.

-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 분석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참여자의 생각과 의견을 확인할 수 있어 사회과학 분야에서 여론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활용도가 높음. 또한 조사를 통한 기존의 오프라인 정보수집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소셜 미디어에 남긴 다양한 정책 의제를 분석하여 정책 수요를 예측하기에 적합한 분석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조사표 개발은 앞서 제시한 조사표의 구성 원칙과 부록에 담은 바와 같이 지속 연구 문항들을 반영하고 일차적으로 작성된 조사표를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와의 협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완성하였음.
- 조사 결과는 연도별 인식변화 동향, 인구·가구·특성별 정책만족도 및 선호도 등에 대한 비교 분석, 국민 조사 결과와 전문가 조사 결과의 비교 분석, 보건복지 키워드 검색을 통한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미래신호 예측 등에 초점을 맞춤.
 - 앞서 기존 조사와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성된 설문 문항들을 중심으로 인식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비교 분석 시, 집단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고, 유의성이 있는 집단 간 차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음.
- 최종적으로 보건복지정책 인식조사 결과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관련 조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단기적인 정책 수요와 과제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되, 전반적인 보건복지인식의 흐름, 분야별 보건복지수요, 정책만족도와 우선순위를 감안한 중장기적인 보건복지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측되는 미래의 보건복지 분야의 핵심 쟁점을 사전에 포착해봄으로써 정책의 선제적 대응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추가로 제시하였음.

제 4 장

보건복지정책 인식조사 분석 결과

제1절 복지정책 분야 분석 결과

제2절 인구정책 분야 분석 결과

제3절 보건의료정책 분야 분석 결과

4

보건복지정책 인식조사 분석결과¹⁷⁾ <<

제1절 복지정책 분야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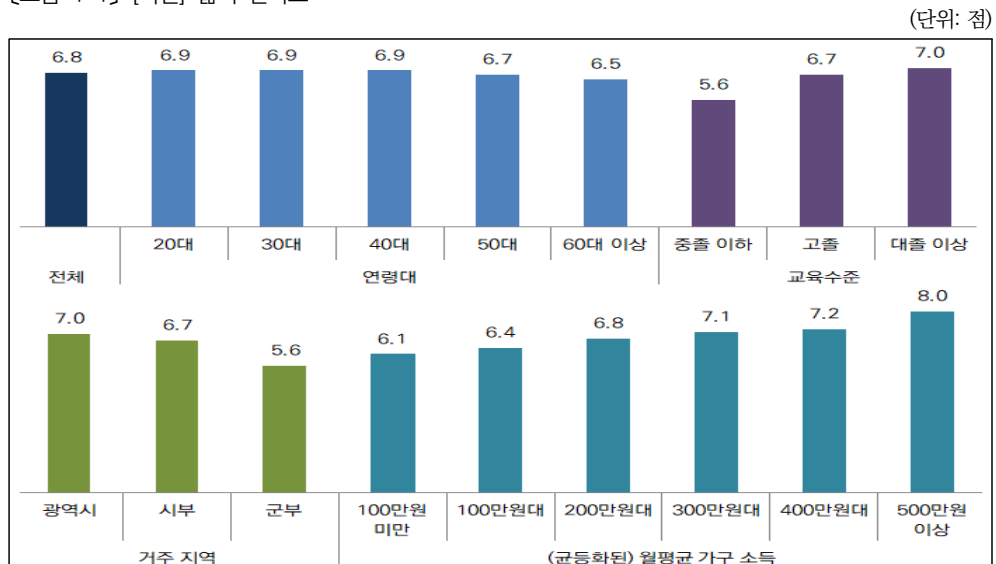
1.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 2019년 인식조사 결과, 국민 전체의 삶의 만족도는 11점 만점에 6.8점으로 나타남.

○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거주지역 등에 따라 삶의 만족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삶의 만족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균등화된 월평균 가구소득이나 주관적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또한 시부나 군부보다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인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그림 4-1] [국민] 삶의 만족도



주: “귀하는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에 대해 ‘①전혀 만족하지 않는다~⑩매우 만족한다’ 11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17) 본 조사결과와 분포는 비율을 낸 후 소수점 한자리로 제공하므로 합계가 100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음.

〈표 4-1〉 [국민] 집단별 삶의 만족도

(단위: 점)

구분		평균 점수	F Value
전체		6.8	
성별	남성	6.8	0.18
	여성	6.7	
연령대	20대	6.9	3.89**
	30대	6.9	
	40대	6.9	
	50대	6.7	
	60대 이상	6.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6	25.34***
	고졸	6.7	
	대졸 이상	7.0	
가구원 수	1인	6.4	7.73***
	2인	6.4	
	3인	6.8	
	4인 이상	6.9	
거주 지역	광역시	7.0	35.97***
	시부	6.7	
	군부	5.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¹⁾	100만원 미만	6.1	13.49***
	100만원대	6.4	
	200만원대	6.8	
	300만원대	7.1	
	400만원대	7.2	
	500만원 이상	8.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8	32.39***
	중하층	6.5	
	중간층	7.0	
	중상(상)층	7.8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1	10.5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2	
	고용주 및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6.5	
	실업자	6.3	
	비경제활동인구	6.7	
고용 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7.1	12.09***
	비정규직	6.4	

주: 1) 월평균 가구소득은 가구 내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기 위해, 월평균 가구소득을 루트값($= \sqrt{\text{가구원수}}$)으로 나누어 균등화했음.

2) * $p < 0.05$, ** $p < 0.01$, *** $p < 0.001$

3) “귀하는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매우 만족한다’ 11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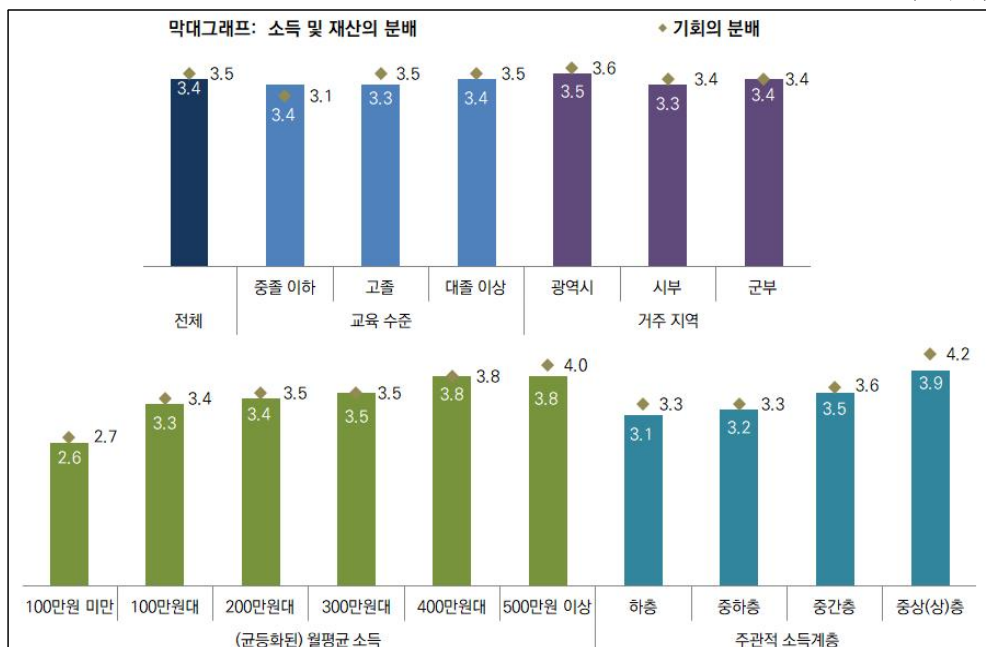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소득 및 재산, 그리고 기회가 얼마나 평등(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거주 지역,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 등에 따라 집단별 차이가 발견됨.

○ 소득 및 재산 분배의 평등(공평)성에 대해서는 3.4점, 기회의 분배는 3.5점으로 나타남. 기회의 분배가 소득 및 재산 분배의 평등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6점 만점).

- 균등화된 월평균 가구소득과 주관적 소득계층은 분배 인식의 집단별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데,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소득 및 재산, 그리고 기회의 분배가 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또한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시 및 군부보다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한편,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소득 및 재산 분배 인식의 집단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나, 기회의 분배 인식에 있어서는 집단별 차이가 발견됨.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회의 분배가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 [국민] 분배 인식

(단위: 점)



주: “귀하는 우리나라의 소득 및 재산의 분배, 그리고 기회가 얼마나 평등(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①매우 불평등하다~⑥매우 평등하다’ 6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경제활동상태에 따라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각각 3.5점, 3.6점으로 높게 나타나며,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분배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6점 만점).
- 단, 직관적 예측과는 달리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기회의 분배 인식이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임.

〈표 4-2〉 [국민] 집단별 분배 인식

(단위: 점)

구분		소득 및 재산 분배		기회의 분배	
		평균 점수	F Value	평균 점수	F Value
전체		3.4		3.5	
성별	남성	3.4	0.23	3.4	0.37
	여성	3.4		3.5	
연령대	20대	3.4	0.47	3.4	1.13
	30대	3.3		3.3	
	40대	3.5		3.5	
	50대	3.3		3.5	
	60대 이상	3.3		3.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3	1.26	3.1	3.25*
	고졸	3.3		3.5	
	대졸 이상	3.4		3.5	
가구원 수	1인	3.5	2.49	3.5	2.55
	2인	3.2		3.3	
	3인	3.4		3.4	
	4인 이상	3.4		3.6	
거주 지역	광역시	3.5	4.16*	3.6	7.00***
	시부	3.3		3.4	
	군부	3.4		3.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6	11.69***	2.7	11.03***
	100만원대	3.3		3.4	
	200만원대	3.4		3.5	
	300만원대	3.5		3.5	
	400만원대	3.8		3.8	
	500만원 이상	3.8		4.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1	12.41***	3.3	20.42***
	중하층	3.2		3.3	
	중간층	3.5		3.6	
	중상(상)층	3.9		4.2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5	3.90**	3.6	2.5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2		3.3	
	고용주 및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3.2		3.3	
	실업자	3.3		3.5	
	비경제활동인구	3.3		3.5	
고용 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3.5	4.70*	3.6	5.31*
	비정규직	3.2		3.2	

주: 1) *p<0.05, **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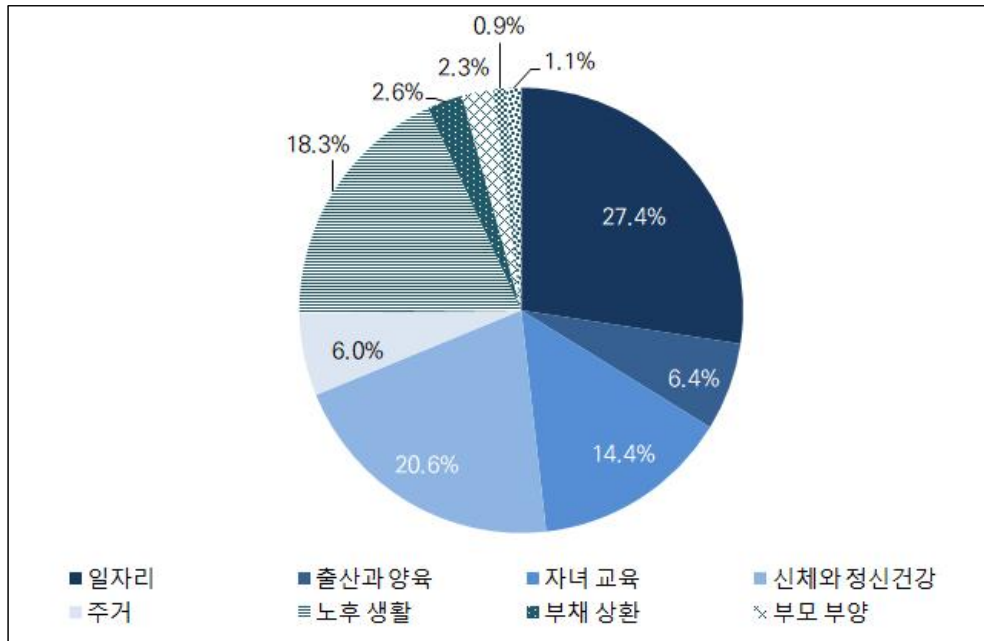
2) “귀하는 우리나라의 소득 및 재산의 분배, 그리고 기회가 얼마나 평등(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인. ‘①매우 불평등하다~⑥매우 평등하다’ 6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국민들은 현재 느끼는 가장 큰 걱정거리(불안요인)로 ‘일자리’(27.4%)를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신체와 정신건강’(20.6%), ‘노후 생활’(18.3%), ‘자녀 교육’(14.4%)을 걱정거리로 응답하였음.

[그림 4-3] [국민] 걱정거리(불안요인)

(단위: %)



주: “귀하가 느끼는 현재의 걱정거리(불안요인)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국민들의 걱정거리(불안요인)는 연령대, 교육수준, 가구원 수,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연령대에 따라서는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걱정거리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20대는 ‘일자리’ 걱정이 68.2%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30~40대는 ‘자녀교육’이 각각 25.9%, 32.9%로 가장 큰 걱정거리로 나타남. 한편 50대는 ‘신체와 정신건강’에 대한 걱정이 30.0%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에는 39.4%가 ‘노후생활’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경향은 각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중졸 이하의 경우,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이 34.5%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과 대졸 이상에서는 ‘일자리’ 걱정이 각각 30.7%, 24.8%로 높았음.
- 가구원수와 거주 지역에 따른 걱정거리의 차이는 2인가구와 군부에서 특이점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본 조사 자료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본 조사 자료의 2인가구의 67.5%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나 이들의 연령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군부에 거주하는 경우도 50대 이상이 전체의 55.7%를 차지함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집단별 차이는 월소득이 높은 400만원대 이상에서는 ‘일자리’와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 모두 20.8%로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상위계층인 500만원대 이상에서는 경제적 문제보다는 ‘신체와 정신건강’에 대한 걱정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상태에 따라서는 다른 경제활동상태의 경우 ‘일자리’를 걱정거리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와 달리 고용주와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 포함)의 경우는 ‘신체와 정신건강’을 걱정거리로 응답한 비율이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3〉 [국민] 집단별 걱정거리(불안요인)

(단위: %)

구분		일자리	출산과 양육	자녀 교육	신체와 정신 건강	주거	노후 생활	부채 상황	부모 부양	환경	안전	χ^2
전체		27.4	6.4	14.4	20.6	6.0	18.3	2.6	2.3	0.9	1.1	16.26
성별	남성	30.6	5.7	14.4	20.6	7.1	15.6	2.8	2.2	0.4	0.6	
	여성	24.1	7.1	14.4	20.7	4.9	21.1	2.4	2.4	1.4	1.6	
연령대	20대	68.2	2.9	2.9	10.0	6.5	2.9	1.2	0.6	1.8	2.9	475.99***
	30대	19.0	20.1	25.9	12.6	9.8	6.9	1.7	1.2	1.7	1.2	
	40대	16.2	4.6	32.9	14.4	5.1	14.8	6.0	4.2	0.9	0.9	
	50대	23.8	2.6	9.3	30.0	4.9	22.0	3.1	3.1	0.4	0.9	
	60대 이상	16.9	3.8	0.9	31.9	4.7	39.4	0.5	1.9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4.1	3.5	0.0	31.0	3.5	34.5	1.7	1.7	0.0	0.0	100.32***
	고졸	30.7	4.0	8.1	23.3	4.9	23.8	2.2	2.0	0.2	0.7	
	대졸 이상	24.8	8.9	21.8	16.9	7.3	11.5	3.0	2.6	1.6	1.6	

구분		일자리	출산과 양육	자녀 교육	신체와 정신 건강	주거	노후 생활	부채 상황	부모 부양	환경	안전	χ^2
가구원 수	1인	26.0	9.1	0.0	31.2	7.8	20.8	1.3	1.3	0.0	2.6	108.50***
	2인	19.3	6.3	1.7	26.7	7.4	33.5	2.8	2.3	0.0	0.0	
	3인	29.2	7.6	18.4	18.1	5.1	13.4	2.2	2.2	1.1	2.9	
	4인 이상	29.6	5.3	19.2	18.1	5.7	15.1	3.0	2.6	1.3	0.2	
거주 지역	광역시	26.7	7.3	15.0	21.0	5.9	17.3	2.1	1.8	1.4	1.6	17.38
	시부	29.3	5.6	14.1	18.9	6.2	18.5	2.9	3.1	0.6	0.8	
	군부	20.3	6.3	12.7	29.1	5.1	22.8	3.8	0.0	0.0	0.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5.4	3.0	16.4	17.9	3.0	20.9	7.5	6.0	0.0	0.0	105.78***
	100만원대	28.0	5.8	10.9	22.9	4.7	24.7	1.5	1.1	0.4	0.0	
	200만원대	28.5	7.3	18.6	17.7	6.6	14.1	3.5	1.4	0.5	1.9	
	300만원대	26.9	4.6	9.7	21.1	7.4	20.6	1.1	5.1	2.3	1.1	
	400만원대	20.8	16.7	20.8	16.7	4.2	8.3	0.0	0.0	8.3	4.2	
	500만원 이상	20.6	8.8	5.9	44.1	8.8	8.8	0.0	2.9	0.0	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5.4	4.5	4.5	29.9	7.5	22.4	1.5	1.5	1.5	1.5	39.02
	중하층	29.5	5.3	11.8	16.9	8.3	20.7	3.3	2.8	0.5	1.0	
	중간층	26.0	7.3	18.1	21.8	4.3	16.2	2.4	1.9	0.9	1.3	
	중상(상)층	26.9	9.0	13.4	25.4	3.0	14.9	1.5	3.0	3.0	0.0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3.1	9.0	20.9	15.8	9.0	13.2	3.1	2.5	1.4	2.0	95.9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2.4	6.1	6.1	21.2	6.1	15.2	0.0	0.0	0.0	3.0	
	고용주 및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19.8	3.1	14.8	27.8	3.1	23.5	4.3	3.7	0.0	0.0	
	실업자	49.2	3.4	5.1	27.1	3.4	10.2	1.7	0.0	0.0	0.0	
	비경제활동인구	29.9	5.9	10.5	21.0	4.9	22.3	1.8	2.1	1.0	0.8	
고용 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22.2	9.3	21.0	16.0	9.0	13.7	2.9	2.3	1.5	2.0	13.31
	비정규직	44.4	4.4	8.9	17.8	6.7	11.1	2.2	2.2	0.0	2.2	

주: 1) *p<0.05, **p<0.01, ***p<0.001

2) “귀하가 느끼는 현재의 걱정거리(불안요인)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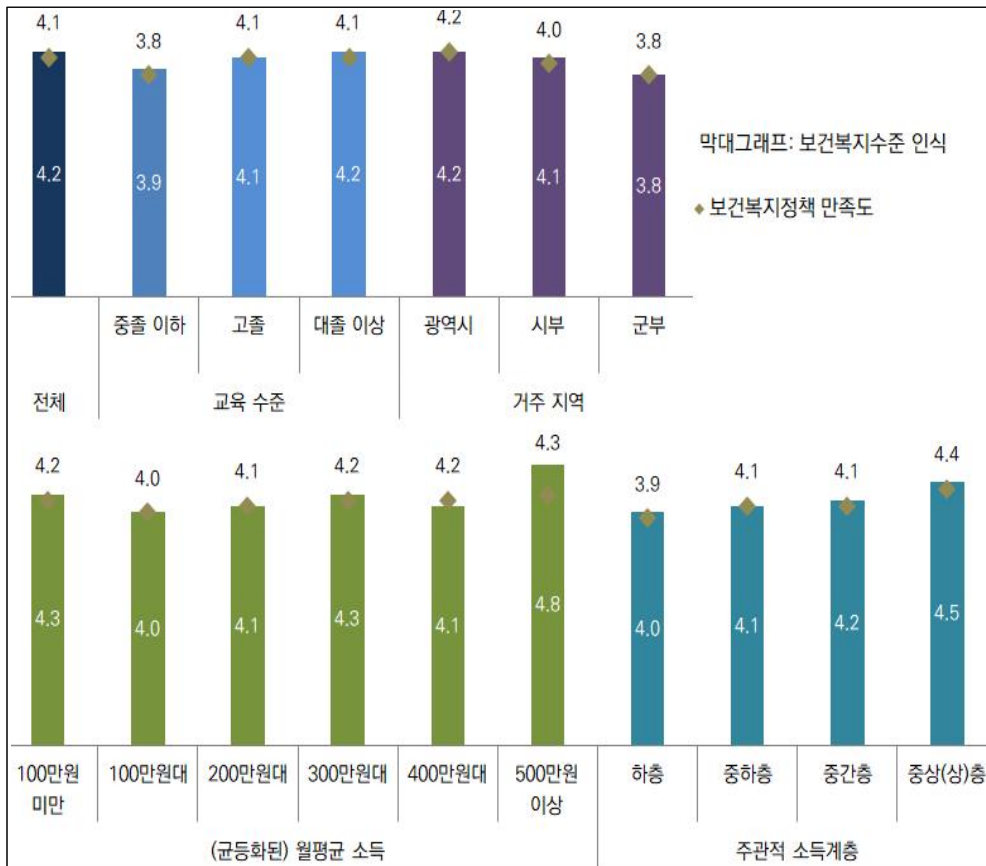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복지 수준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평균 4.2점으로 ‘다소 높다’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전체 평균 4.1점으로 ‘다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6점 만점).

○ 보건복지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는데, 광역시나 시부에 비해 군부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보건복지정책 만족도에서도 같은 경향을 볼 수 있음.

- 소득계층의 경우,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은 집단별 차이가 발견되나 그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반해, 주관적 소득계층은 보건복지 수준 및 정책 만족도에 있어 집단별 차이를 보여줌과 동시에 주관적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보건복지 수준 및 정책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성별과 연령, 가구원 수, 경제활동상태 및 고용안정성 등에 따라서는 보건복지 수준 인식 및 정책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그림 4-4] [국민] 보건복지 수준 인식 및 정책 만족도

(단위: 점)



주: 보건복지 수준은 “귀하는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낮다~⑥매우 높다’, 정책 만족도는 “귀하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불만족~⑥매우 만족’ 6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표 4-4〉 [국민] 집단별 보건복지 수준 인식 및 정책 만족도

(단위: 점)

구분		보건복지 수준 인식		보건복지정책 만족도	
		평균 점수	F Value	평균 점수	F Value
전체		4.2		4.1	
성별	남성	4.2	0.15	4.1	0.54
	여성	4.1		4.1	
연령대	20대	4.0	1.30	4.0	1.14
	30대	4.2		4.2	
	40대	4.1		4.0	
	50대	4.2		4.1	
	60대 이상	4.2		4.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9	3.50*	3.8	4.15*
	고졸	4.1		4.1	
	대졸 이상	4.2		4.1	
가구원 수	1인	4.1	0.90	4.1	0.26
	2인	4.1		4.1	
	3인	4.1		4.1	
	4인 이상	4.2		4.1	
거주 지역	광역시	4.2	10.34***	4.2	11.12***
	시부	4.1		4.0	
	군부	3.8		3.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6.66***	4.2	1.63
	100만원대	4.0		4.0	
	200만원대	4.1		4.1	
	300만원대	4.3		4.2	
	400만원대	4.1		4.2	
	500만원 이상	4.8		4.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0	54.093***	3.9	4.37***
	중하층	4.1		4.1	
	중간층	4.2		4.1	
	중상(상)층	4.5		4.4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2	2.21	4.1	0.3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9		4.0	
	고용주 및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4.2		4.1	
	실업자	4.0		4.1	
	비경제활동인구	4.1		4.1	
고용 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4.2	3.48	4.1	0.30
	비정규직	4.0		4.0	

주: 1) *p<0.05, **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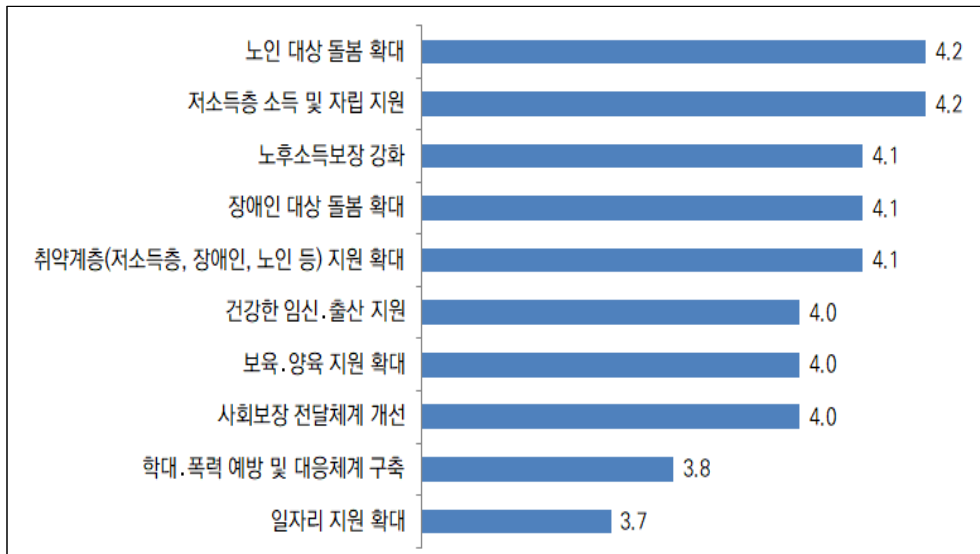
2) 보건복지 수준은 “귀하는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낮다~⑥매우 높다’, 정책 만족도는 “귀하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불만족~⑥매우 만족’ 6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 중에서 국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노인대상 돌봄 확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자활사업 등의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 정책으로 나타남(6점 만점에 각각 4.2점).
- ‘노후소득보장 강화’, ‘장애인 대상 돌봄 확대’,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지원 확대’는 4.1점,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보육·양육 지원 확대’,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은 4.0점으로 나타나 ‘다소 만족(4점)’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정책 구축’과 ‘일자리 지원 확대’ 정책은 각각 3.8점, 3.7점으로 나타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두 영역 정책의 실효성 및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함.

[그림 4-5] [국민] 복지정책별 만족도

(단위: 점)



주: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음의 복지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불만족~⑥매우 만족’ 6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정책 만족도의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정책인 ‘일자리 지원 확대’ 정책이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복지정책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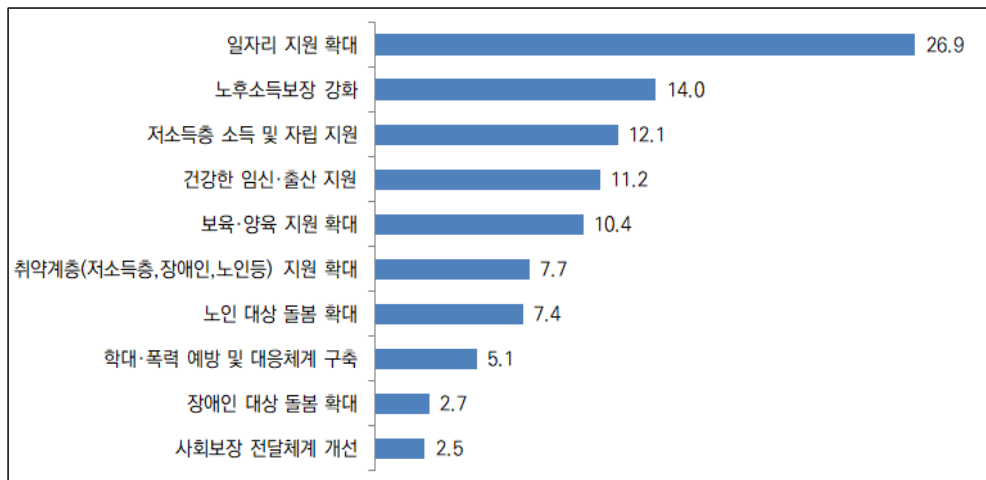
○ 그러나 만족도가 낮았던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5.1%로 낮아 정책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일자리 지원 확대’ 정책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의 ‘노후소득보장 강화’(14.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사업 등의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12.1%),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11.2%), ‘보육·양육 지원 확대’(10.4%) 순으로 정책 욕구가 나타남.

○ 특정 대상에 대한 지원 및 돌봄보다는 전반적인 일자리나 소득지원, 그리고 출산 및 양육 지원 등의 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6] [국민] 강화해야 할 복지정책 방향

(단위: %)



주: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아래의 복지정책 중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국민들의 정책 욕구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연령대와 교육수준, 가구원수,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할 복지정책으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정책은 ‘일자리 지원 확대(표 구분 1)’로 나타나나, 균등화된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보육·양육 지원 확대(표 구분 5)’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한편, 강화해야 할 정책으로 응답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것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표 구분 3)’로 나타나나, 생애주기에 따라 정책 욕구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 즉, 20대의 경우는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표 구분 2)’과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표 구분 4)’, 30대는 ‘보육·양육 지원 확대(표 구분 5)’ 정책이 두 번째로 정책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 [국민] 집단별 강화해야 할 복지정책 방향

(단위: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χ^2
전체		26.9	12.1	14.0	11.2	10.4	7.4	2.7	7.7	5.1	2.5	
성별	남성	28.5	12.5	13.6	11.7	9.9	6.7	2.2	7.3	5.9	1.8	6.99
	여성	25.3	11.7	14.4	10.7	10.9	8.1	3.2	8.1	4.3	3.2	
연령대	20대	40.0	10.0	5.3	10.0	8.8	5.3	1.8	4.7	8.8	5.3	124.14**
	30대	24.1	9.8	15.5	14.4	21.8	4.0	2.3	2.3	3.5	2.3	
	40대	27.3	13.0	17.1	12.0	5.6	5.1	2.3	9.3	6.9	1.4	
	50대	24.7	16.7	16.7	11.0	7.9	7.9	1.8	7.1	4.4	1.8	
	60대 이상	20.7	9.9	13.6	8.9	9.9	13.6	5.2	13.6	2.4	2.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4.1	13.8	20.7	6.9	8.6	12.1	1.7	8.6	1.7	1.7	30.36*
	고졸	28.3	11.7	12.3	10.5	8.1	9.6	3.6	9.2	3.8	2.9	
	대졸 이상	26.0	12.3	14.7	12.3	12.7	4.8	2.0	6.3	6.7	2.2	
가구원 수	1인	22.1	14.3	15.6	5.2	11.7	5.2	2.6	13.0	6.5	3.9	50.52**
	2인	27.3	10.8	14.2	4.0	10.2	13.6	2.3	11.4	3.4	2.8	
	3인	28.2	11.2	11.9	14.4	12.6	5.1	4.0	3.6	6.9	2.2	
	4인 이상	26.8	12.8	14.9	13.0	8.9	6.8	2.1	7.9	4.5	2.3	
거주 지역	광역시	21.6	13.0	14.6	14.1	11.9	8.7	2.5	7.1	3.9	2.7	31.20*
	시부	30.9	10.8	12.9	9.8	10.2	6.0	2.9	7.9	6.0	2.7	
	군부	31.7	15.2	17.7	3.8	3.8	8.9	2.5	10.1	6.3	0.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9.9	6.0	9.0	3.0	17.9	7.5	3.0	10.5	13.4	0.0	84.83***
	100만원대	28.0	12.7	10.6	9.5	12.4	9.5	3.3	8.7	2.6	2.9	
	200만원대	27.8	13.4	13.9	11.8	9.2	6.4	3.1	6.6	5.7	2.4	
	300만원대	25.1	12.0	21.7	14.9	5.1	6.9	1.1	5.1	4.0	4.0	
	400만원대	33.3	8.3	4.2	12.5	8.3	8.3	4.2	8.3	12.5	0.0	
	500만원 이상	5.9	5.9	20.6	14.7	23.5	5.9	0.0	20.6	2.9	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1.3	11.9	9.0	6.0	17.9	7.5	1.5	6.0	7.5	1.5	39.32
	중하층	27.5	13.6	12.3	8.3	10.3	9.1	4.0	8.1	3.5	3.3	
	중간층	26.4	10.0	15.6	14.3	9.6	5.5	1.9	7.9	6.6	2.1	
	중상(상)층	22.4	17.9	17.9	11.9	9.0	10.5	1.5	6.0	1.5	1.5	

구분		1	2	3	4	5	6	7	8	9	10	χ^2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2.8	13.0	16.3	14.4	11.6	4.2	2.3	6.8	6.8	2.0	44.4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0.3	18.2	15.2	9.1	3.0	6.1	3.0	3.0	9.1	3.0	
	고용주 및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포함)	29.6	14.2	14.2	6.8	8.0	7.4	3.1	10.5	4.3	1.9	
	실업자	37.3	6.8	13.6	8.5	13.6	10.2	0.0	3.4	3.4	3.4	
	비경제활동인구	27.6	10.7	11.8	10.7	10.5	10.0	3.3	8.4	3.8	3.1	
고용 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22.2	13.1	16.3	14.9	11.1	4.4	2.3	7.0	7.0	1.8	7.23
	비정규직	33.3	15.6	15.6	6.7	8.9	4.4	2.2	2.2	6.7	4.4	

주: 1) * $p < 0.05$, ** $p < 0.01$, *** $p < 0.001$

2)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아래의 복지정책 중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3) 1-일자리 지원 확대, 2-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3-노후소득보장 강화, 4-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5-보육·양육 지원 확대, 6-노인 대상 돌봄 확대, 7-장애인 대상 돌봄 확대, 8-취약계층 지원 확대, 9-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0-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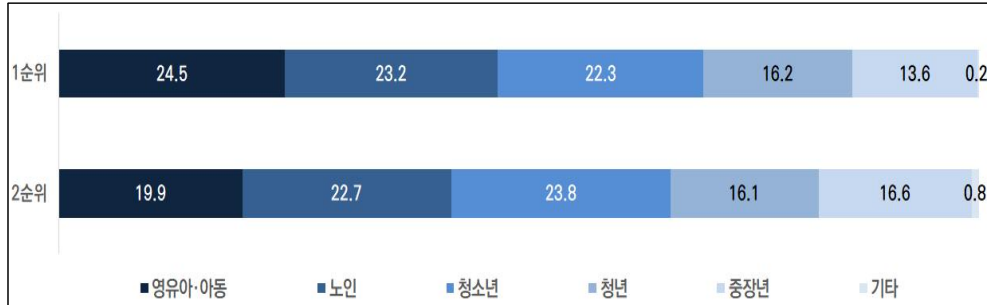
□ 국민은 보건복지정책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 1순위로 ‘영유아·아동’을 꼽음.

○ 영유아·아동은 24.5%로 보건복지정책 확대 시 중점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노인이 23.2%로 두 번째, 청소년, 청년, 중장년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남(1순위 기준).

- 2순위 기준으로는 청소년이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노인(22.7%)이 그 다음으로 나타남.

[그림 4-7] [국민] 보건복지정책 확대 시 중점 대상

(단위: %)



주: “귀하는 정부가 보건복지정책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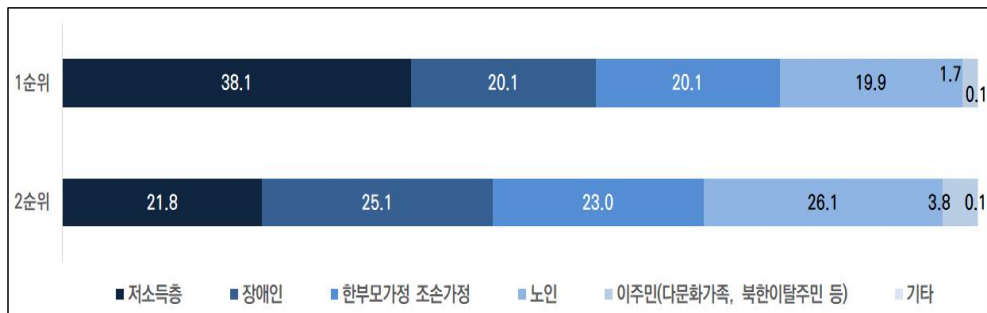
○ 한편, 보건복지정책 중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노인, 이주민 등)에 대한 정책을 확대할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 1순위로는 저소득층이 38.1%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장애인과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이 각각 20.1%, 노인이 19.9%로 유사한 응답 비율을 보임.

• 2순위 응답으로는 노인과 장애인이 각각 26.1%, 25.1%로 높게 나타남.

[그림 4-8] [국민]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정책 확대 시 중점 대상

(단위: %)



주: “귀하는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정책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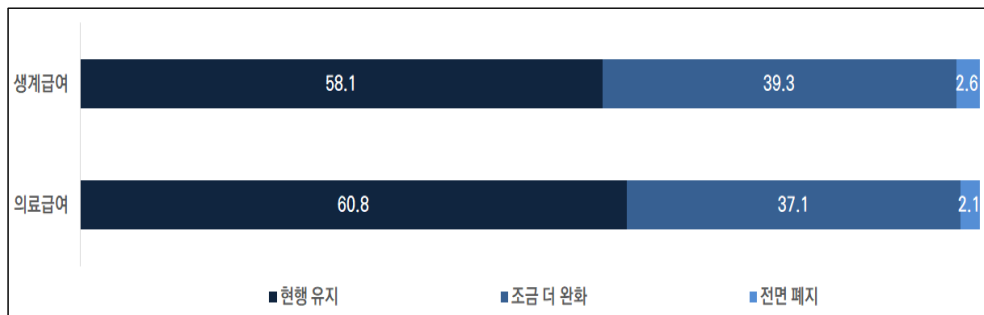
□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정책의 확대 시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인 저소득층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할 수 있음.

정부는 동 제도의 대상자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적정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음.

- 정부는 대상자 확대 측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2019년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에 해당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
- 국민은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및 폐지에 대해 과반이상이 현행 유지를 선호했으며(생계급여 58.1%, 의료급여 60.8%), ‘조금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생계급여는 39.3%, 의료급여는 37.1%만이 동의를 보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 정도가 2%대로 매우 낮게 나타남.

[그림 4-9]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및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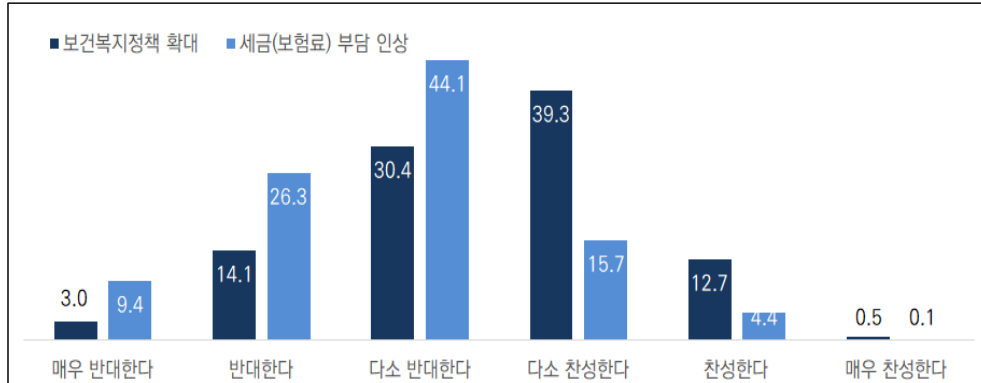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반적인 보건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해서 국민은 찬성이 52.5%, 반대가 47.5%로 찬성 의견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보건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세금(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79.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정책 확대에 대해서는 ‘다소 찬성한다’는 의견이 39.3%로 가장 높으나 세금(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다소 반대한다’는 의견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10] [국민] 보건복지정책 확대 및 세금(보험료) 부담 증가 동의 정도

(단위: %)



주: “귀하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십니까?”, “귀하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보건복지정책의 확대와 세금(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동의 정도를 교차분석해보면, 정책의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와 그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동의정도가 일치하는 집단(찬성-찬성, 반대-반대)은 응답자의 63.9%로 나타남.

- 반면, 복지확대에 대한 동의와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동의가 반대되는 경향을 갖는 집단은 응답자의 36.1%로 나타남.

- 이중 복지확대는 찬성하지만 세금 부담 증가는 반대하는 집단은 34.2%로 나타나는데, 이는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김미곤 외, 2018)에서 49.5%였던 것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음.

〈표 4-6〉 [국민] 보건복지정책 확대와 세금(보험료) 부담 증가 동의 정도 교차 분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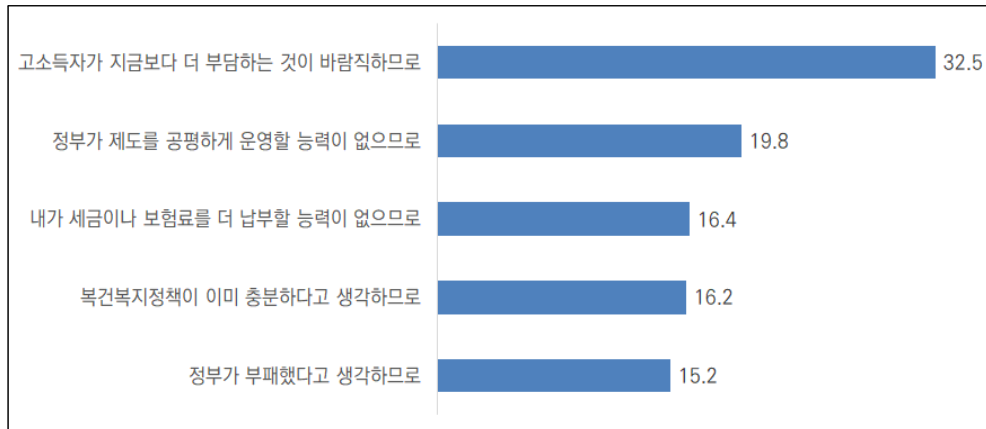
구분		세금(보험료) 증가 동의 정도					
		매우 반대	반대	다소 반대	다소 찬성	찬성	매우 찬성
보건복지정책 확대 동의 정도	매우 반대	2.8	0.1	0.1	0.0	0.0	0.0
	반대	1.7	9.5	2.8	0.0	0.1	0.0
	다소 반대	2.9	7.2	18.5	1.7	0.1	0.0
	다소 찬성	1.7	6.8	17.3	10.9	2.5	0.1
	찬성	0.3	2.6	5.1	3.1	1.6	0.0
	매우 찬성	0.0	0.1	0.3	0.0	0.1	0.0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세금(보험료)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고소득자가 지금보다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가 32.5%, ‘정부가 제도를 공평하게 운영할 능력이 없으므로’가 19.8%로 나타남.

[그림 4-11] [국민] 세금(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반대 이유

(단위: %)



주: “귀하가 보건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을 더 부담하시는 것에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한편, 이러한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반대 이유는 거주지역과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및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 집단별 차이가 확인되어 복지재정 마련을 위한 조세 정책에 있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고소득자가 지금보다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역에 관계없이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나, 군부에서는 ‘내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더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28.2%)가 2위인 반면, 광역시 및 시부는 ‘정부가 제도를 공평하게 운영할 능력이 없으므로’가 각각 19.9%, 22.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또한 광역시 및 시부에 거주하는 경우 ‘정부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므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4.2%, 17.3%로 군부 8.5%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소득계층에 따라서도 집단 간 세금 부담 증가 반대 이유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고소득자가 지금보다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월소득 500만원 이상, 하층 제외).

- 이러한 결과는 소득계층별 세부담 차별화, 광역시 및 시부 거주 국민을 위한 정부신뢰 제고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줌.

〈표 4-7〉 [국민] 집단별 세금(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반대 이유

(단위: %)

구분		고소득자가 지금보다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정부가 제도를 공평하게 운영할 능력이 없으므로	내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더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보건복지 정책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므로	정부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므로	χ^2
전체		32.5	19.8	16.4	16.2	15.2	-
거주 지역	광역시	29.5	19.9	18.2	18.2	14.2	28.712***
	시부	33.3	22.6	12.6	14.2	17.3	
	군부	42.3	4.2	28.2	16.9	8.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8.3	23.3	18.3	30.0	20.0	50.835***
	100만원 대	34.2	13.5	22.5	14.9	14.9	
	200만원 대	33.6	21.6	14.3	13.7	16.7	
	300만원 대	36.4	24.0	11.6	18.6	9.3	
	400만원 대	50.0	30.0	10.0	10.0	0.0	
	500만원 이상	24.0	12.0	16.0	20.0	28.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0.4	14.0	26.3	8.8	10.5	35.677***
	중하층	28.2	18.1	20.6	13.8	19.3	
	중간층	33.3	22.6	11.6	20.4	12.1	
	중상(상)층	44.2	17.3	13.5	9.6	15.4	

주: 1) * $p < 0.05$, ** $p < 0.01$, *** $p < 0.001$

2) “귀하가 보건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을 더 부담하시는 것에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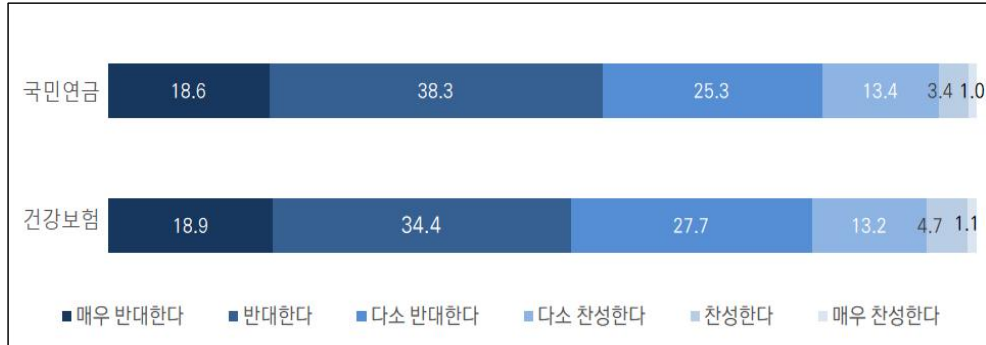
□ 좀 더 세부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각각 응답자의 82.2%, 81.0%가 반대의견을 보임. 이는 앞서 살펴본 보건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세금 부담 반대 의견(79.8%)과 유사한 수준임.

○ 집단별로는 연령, 교육수준, 거주 지역, 균등화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주관적 소득계층, 그리고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의견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대체로 연령과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보험료 인상에 반대 의견이 높고, 군부에 거주하는 경우, 임시일용직인 경우, 고졸인 경우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2] [국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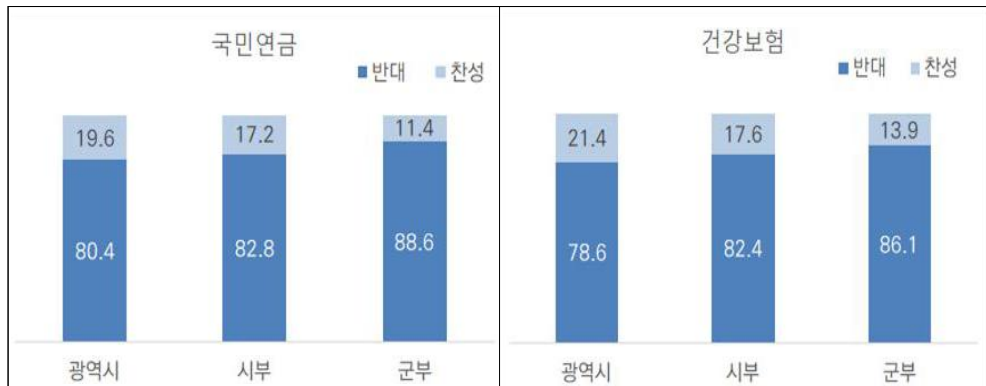
주: “귀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군부에 거주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광역시 및 시부보다 높은 반대의견을 보이는데, 각각 88.6%, 86.1%가 반대(매우반대+반대+다소반대)하고 있음. 군부 다음으로 시부, 광역시 순으로 반대의견 응답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그림 4-13] [국민] 지역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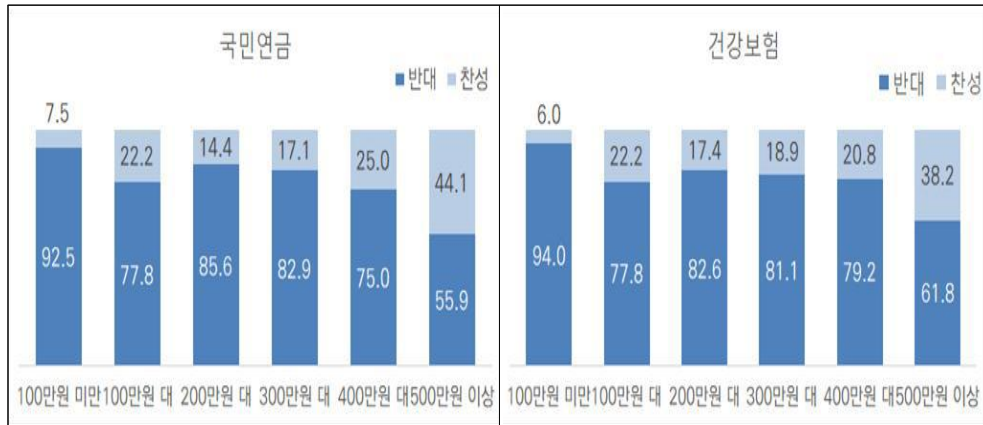
주: “귀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또한 균등화된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견은 전반적으로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반대 의견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14] [국민] 월평균 가구소득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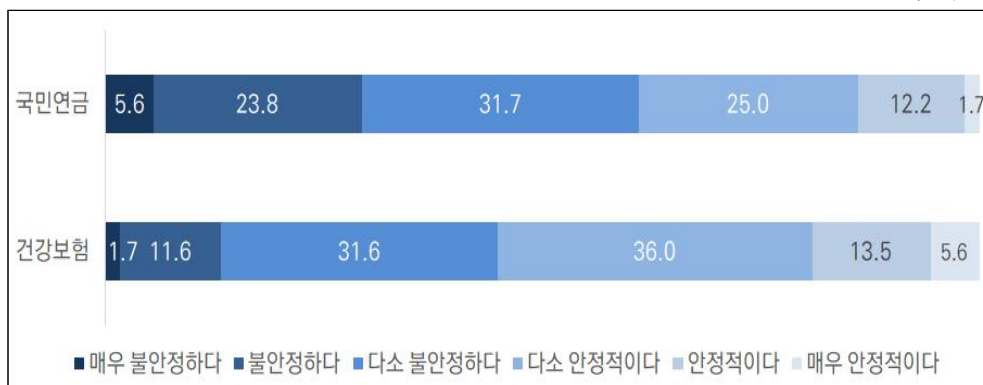


주: “귀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보험료 인상에 대해 대다수가 반대의견을 보였으나, 중장기적 재정안정성에 대해 국민연금은 응답자의 61.1%, 건강보험은 44.9%가 불안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보다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 4-15] [국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안정성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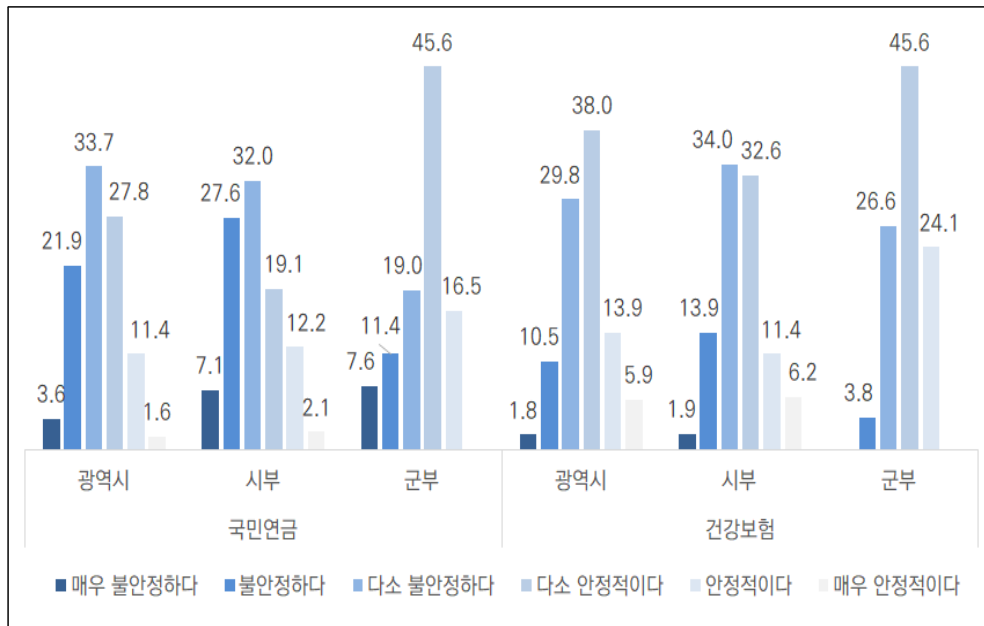


주: “귀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중장기적 재정의 안정성(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중장기적 재정안정성에 대한 인식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집단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시부에 거주하는 경우 재정안정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은 시부 66.7%, 광역시 59.2%, 군부 38.0%, 건강보험은 시부 49.8%, 광역시 42.1%, 군부 30.4%가 중장기적 재정이 불안정하다고 응답함.

[그림 4-16] [국민] 지역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안정성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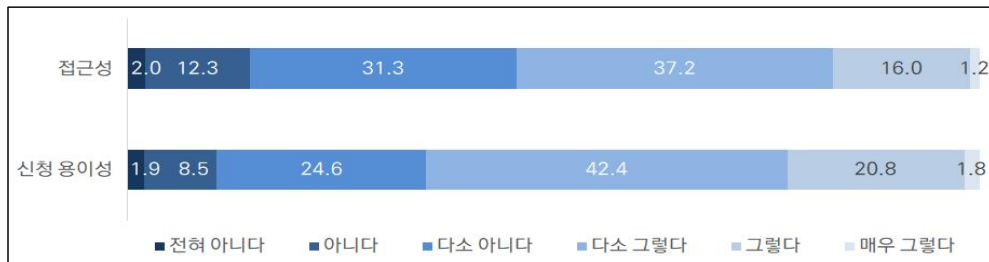
주: “귀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중장기적 재정의 안정성(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근성 및 신청 용이성,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해 전달체계 개편 및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여러 해 노력해오고 있음. 그러나 조사결과는 여전히 서비스의 접근성 및 신청 용이성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줌.
- 응답자의 54.4%가 ‘신청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신청하러 가기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65.0%는 ‘신청절차가 복잡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 4-17] [국민]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및 신청 용이성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귀하는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청절차가 얼마나 편리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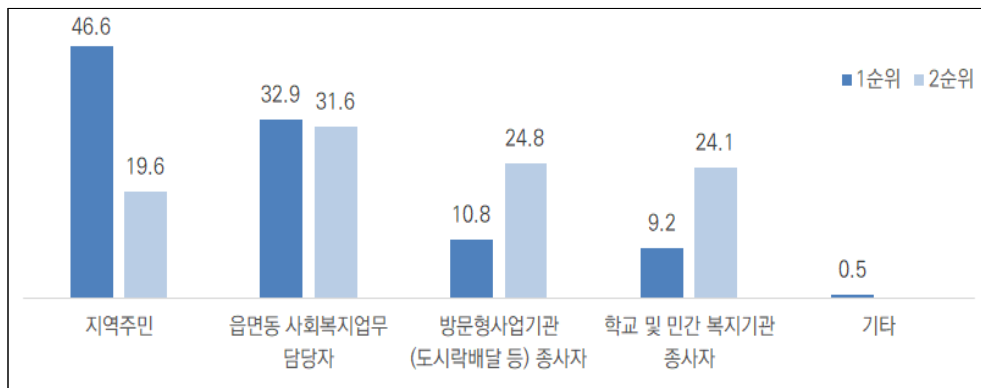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다양한 발굴 체계 구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보다 효과적인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대상으로 응답자의 46.6%가 지역주민이라고 응답함(1순위 기준).

- 지역주민 다음으로는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32.9%, 방문형 사업 기관 종사자가 10.8%로 나타남. 2019년 9월 보건복지부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이 중 이웃 및 생활업종종사자 등이 함께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확대 계획은 효과적인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음(보건복지부, 2019b).

[그림 4-18] [국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대상

(단위: %)



주: “귀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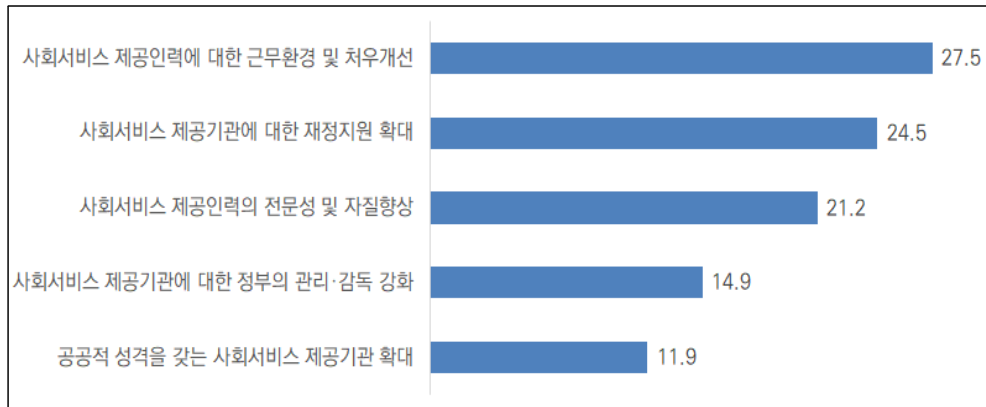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한편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27.5%)이라고 응답하였음.

○ 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24.5%),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21.2%)이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으로 지목됨.

[그림 4-19] [국민]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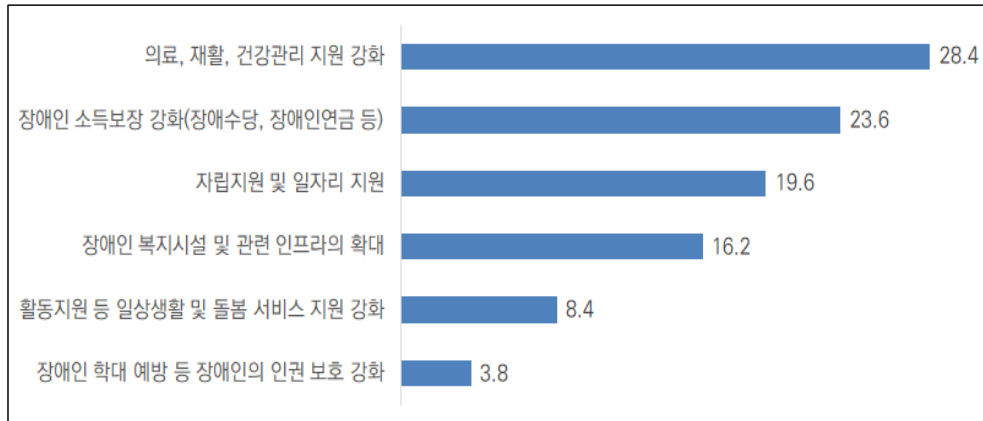


주: “귀하는 향후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장애인 지원정책의 방향으로는 ‘의료, 재활, 건강관리 지원 강화’가 28.4%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등의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23.6%),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19.6%)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0] [국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단위: %)



주: “귀하는 향후 정부의 장애인 지원정책 방향으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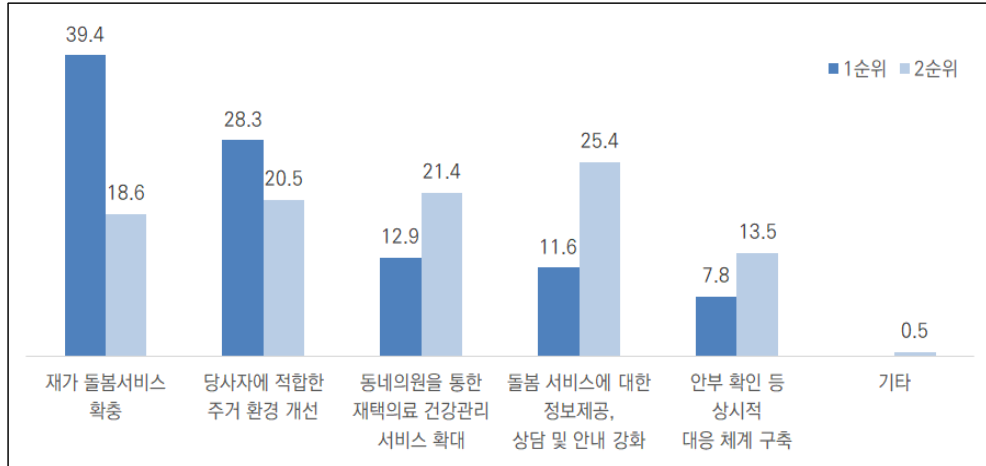
□ 또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 ‘재가 돌봄서비스 확충’(39.4%)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그 다음으로는 ‘당사자에 적합한 주거 환경 개선’(28.3%), ‘동네의원을 통한 재택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12.9%)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필요한 정책 2순위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정책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안내 강화’(25.4%)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4-21] [국민] 커뮤니티케어 위한 정책 방향

(단위: %)



주: “귀하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 (커뮤니티케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나. 복지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

□ 전문가는 대체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2017-2019)의 보건복지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수준에 대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62.0%,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38.0%로 나타남.

- ‘다소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46.3%로 가장 높았으며, ‘다소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23.1%로 그 다음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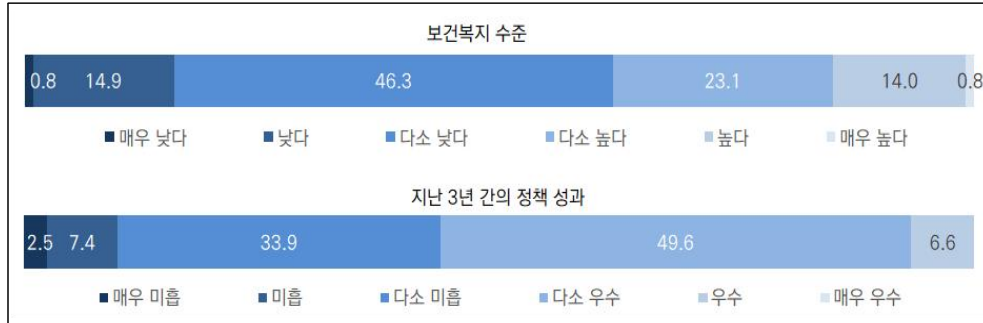
○ 한편 지난 3년간의 정책성과에 대해서는 우수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6.2%로 미흡하다는 응답 비율 43.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응답자의 49.6%가 ‘다소 우수’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소 미흡이 33.9%로 나타남.

- ‘매우 미흡’으로 평가한 전문가는 2.5%로 나타나지만 ‘매우 우수’로 평가한 전문가는 없음.

[그림 4-22] [전문가] 보건복지 수준 및 정책성과 평가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복지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전문가로서 지난 3년간(2017-2019)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정책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지난 3년간의 개별 복지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노인 대상 돌봄 확대’(3.8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사업 등의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3.7점), ‘보육·양육 지원 확대’(3.7점),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의 ‘취약계층 지원 확대’(3.6점)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음.

[그림 4-23] [전문가] 복지정책별 성과 평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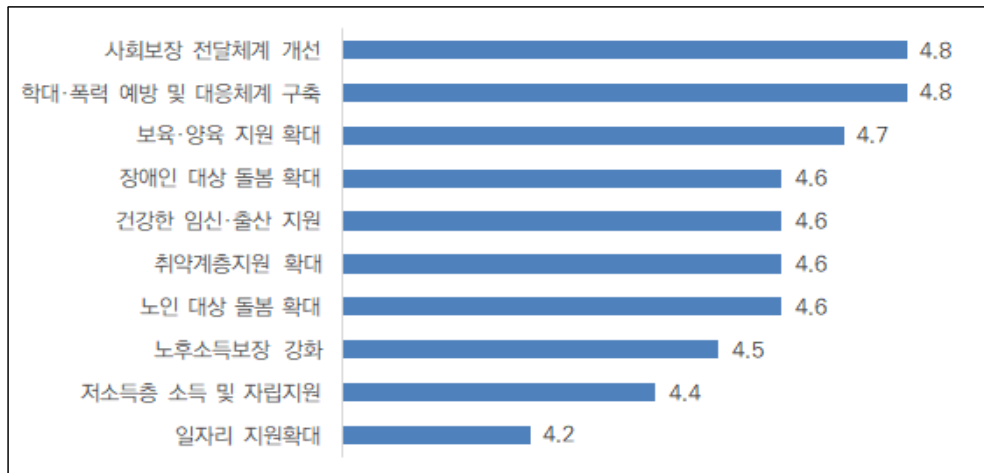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다음의 각 복지정책 영역의 지난 3년간(2017-2019)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미흡~⑥매우 우수’ 6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한편, 앞으로 정부가 더욱 강화해야 할 복지정책으로 전문가들은 성과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4.8점),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4.8점)을 꼽음.

- 다음으로는 ‘보육·양육 지원 확대’가 4.7점으로 강화해야 할 복지정책으로서 동의 정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림 4-24] [전문가] 강화해야 할 복지정책 방향

(단위: 점)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복지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해주시시오”에 대해 ‘①전혀 동의하지 않음~⑥매우 동의함’ 6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전문가가 생각하는 국민들의 걱정거리(불안요인)는 ‘일자리’ 응답 비율이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남(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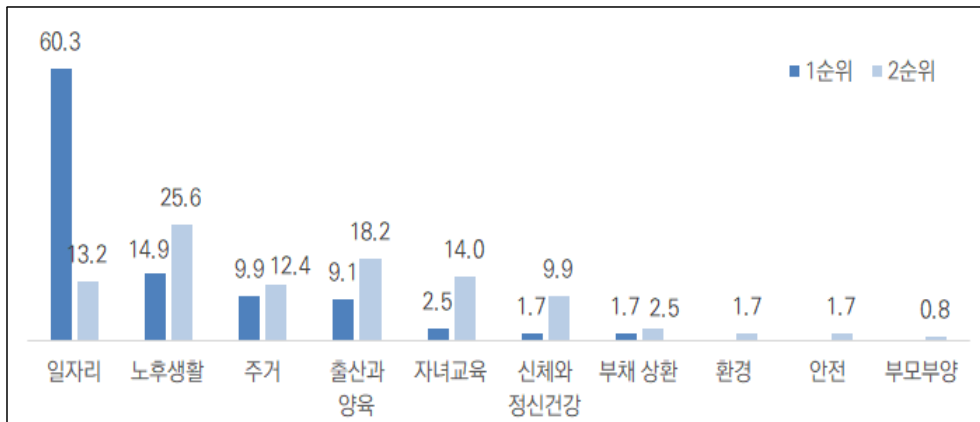
○ 일자리 다음으로 ‘노후생활(14.9%)’, ‘주거’(9.9%), ‘출산과 양육’(9.1%) 등이 전문가가 생각하는 국민들의 걱정거리고 꼽혔으며, ‘환경’, ‘안전’, ‘부모부양’ 등은 낮은 응답비율을 보임.

○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일자리를 꼽았으나, 앞서 살펴본 향후 강화해야 할 복지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에서는 ‘일자리 지원확대’가 4.2점으로 낮은 동의 정도를 보인 점은 눈여겨 볼만한 점이라 할 수 있음.

- 즉, 국민의 욕구가 높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지원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은 사실은 ‘일자리 지원 확대’에 대한 지난 3년간의 성과가 낮게 평가된 점을 고려할 때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그림 4-25] [전문가] 국민들의 걱정거리(불안요인)

(단위: %)



주: “전문가적 입장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 확대와 세금(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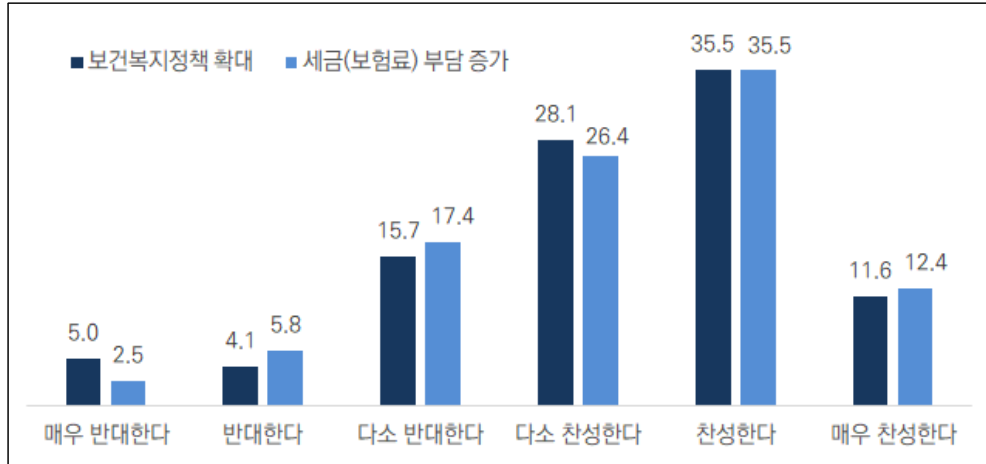
○ 보건복지정책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75.2%로 반대 의견 24.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세금(이나 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74.3%가 찬성 의견을 보임.

○ 보건복지정책 확대와 세금(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동의 정도를 교차 분석해 보면, 정책의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와 그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동의 정도가 일치하는 집단은 응답자의 71.1%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정책 확대는 동의하지만 세금 부담은 반대하는 전문가는 4.1%, 그 반대의 경우는 3.4%로 나타남.

[그림 4-26] [전문가] 보건복지정책 확대 및 세금(보험료) 증가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십니까?”,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표 4-8〉 [전문가] 보건복지정책 확대 및 세금(보험료) 증가 동의 정도 교차 분석

(단위: %)

구분		세금(보험료) 부담 증가 동의 정도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다소 반대한다	다소 찬성한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보건복지정책 확대 동의 정도	매우 반대한다	1.7	0.8	0.8	1.7	0.0	0.0
	반대한다	0.8	2.5	0.8	0.0	0.0	0.0
	다소 반대한다	0.0	2.5	11.6	0.0	1.7	0.0
	다소 찬성한다	0.0	0.0	3.3	18.2	5.8	0.8
	찬성한다	0.0	0.0	0.8	6.6	25.6	2.5
	매우 찬성한다	0.0	0.0	0.0	0.0	2.5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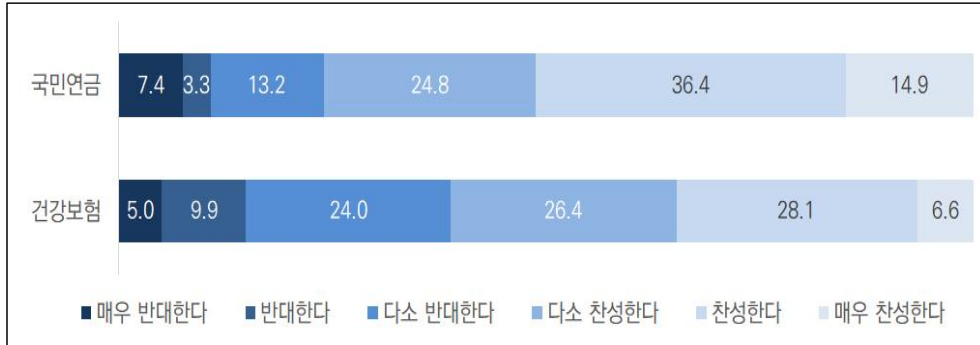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찬성 의견이 각각 76.1%, 61.1%로 반대 의견에 비해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보다 찬성 의견이 많음.

[그림 4-27] [전문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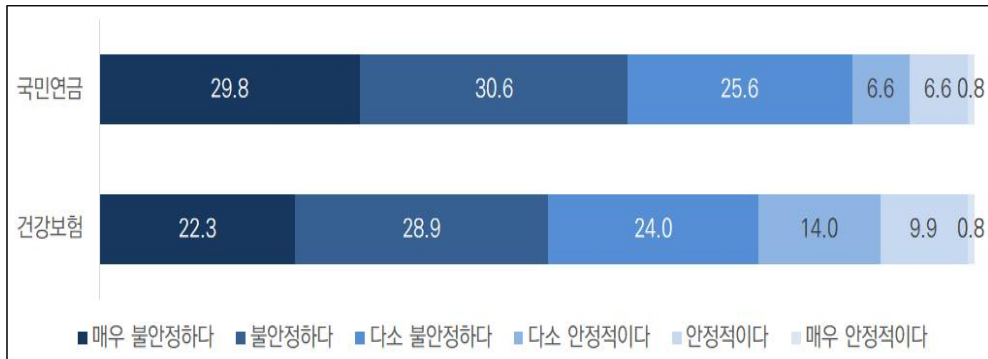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위와 같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찬반의견은 두 제도의 재정안정성과 관련될 것인데,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에 대해 86.0%가 불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75.2%가 불안하다고 응답함.

○ 즉, 전문가들은 건강보험의 중장기적 재정안정성이 국민연금보다 다소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이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찬성의견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배경이라 볼 수 있음.

[그림 4-28] [전문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안정성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중장기적 재정의 안정성(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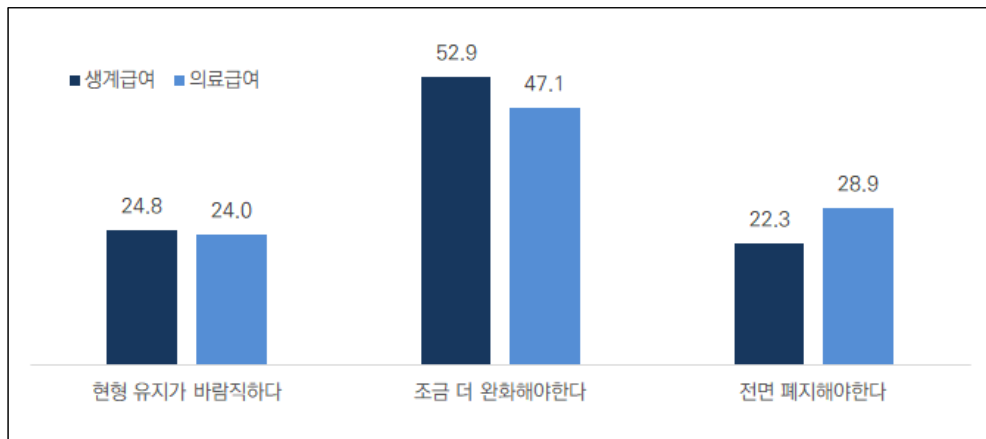
□ 한편,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발생 원인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행보다 기준을 완화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금 더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은 의료급여보다 생계급여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은 반대로 나타남.

- 생계급여의 경우, ‘조금 더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이 52.9%로 가장 높고,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4.8%,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22.3%로 나타남.
-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조금 더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이 47.1%로 가장 높고, 생계급여와 달리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28.9%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나며,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24.0%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4-29] [전문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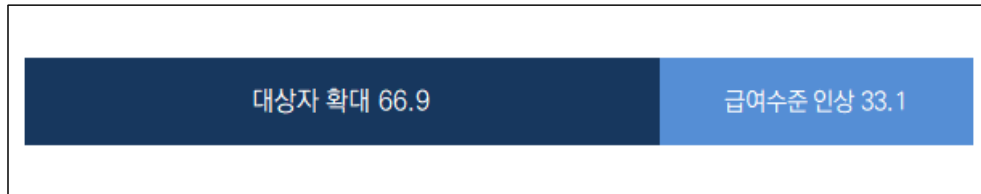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또한 생계급여의 개선을 위해 시급한 문제로 전문가들은 ‘급여수준 인상’(33.1%)보다 ‘대상자 확대’(66.9%)가 시급하다고 응답함.

[그림 4-30] [전문가] 생계급여의 개선을 위해 시급한 문제: 대상자 확대 vs. 급여수준 인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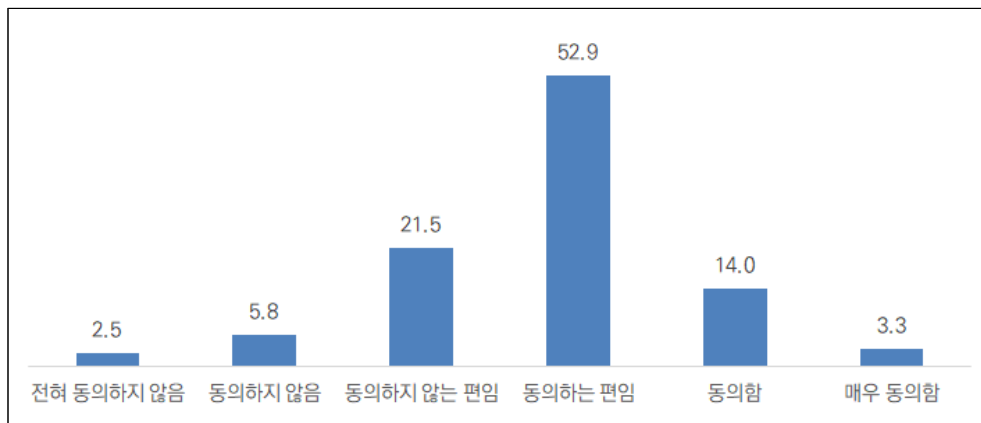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개선을 위해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수급자 및 차상위층의 자활급여 인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응답자의 70.2%가 동의를 표하고 있음.

- ‘동의하는 편임’으로 응답한 전문가가 전체의 52.9%로 과반 이상이며, ‘동의하지 않는 편임’으로 응답한 전문가는 21.5%임.

[그림 4-31] [전문가] 자활급여 인상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층의 자활급여 인상에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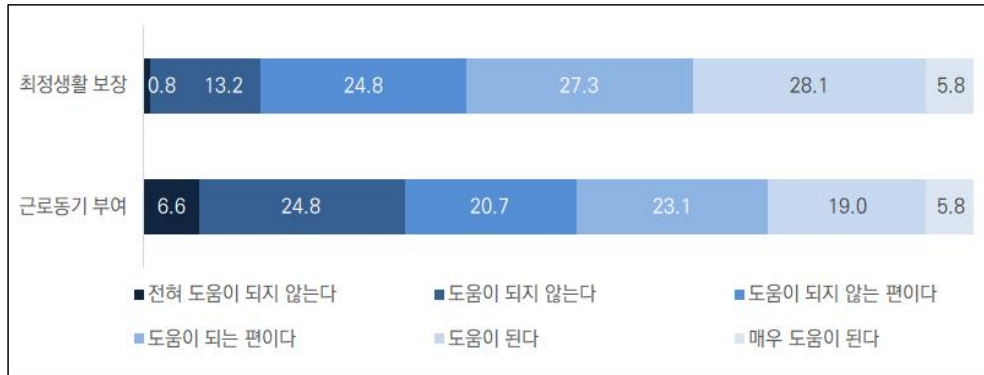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들은 수급자 및 차상위층에 대한 일자리 및 훈련 제공이 참여자의 최저생활 보장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로동기 부여에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임.

- 한편 최저생활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응답자의 61.2%이나 근로동기 부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47.9%로 과반에 미치지 못함.

[그림 4-32] [전문가] 수급자 및 차상위층에 대한 일자리 및 훈련 효과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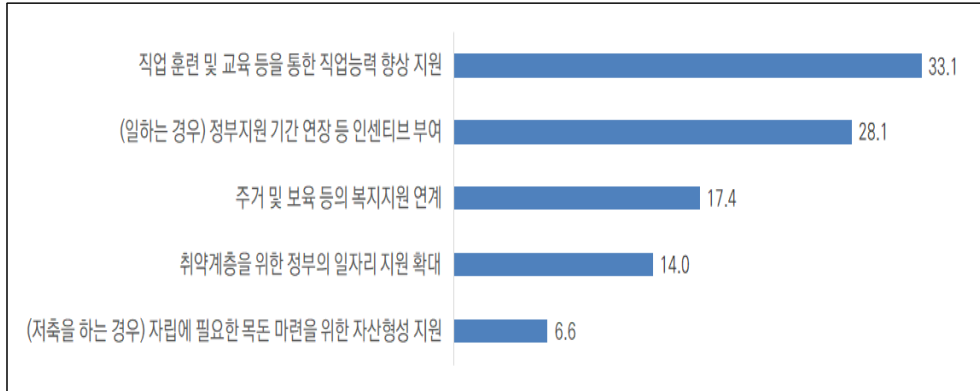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층에 대한 일자리 및 훈련 제공이 참여자의 근로동기 부여 및 최저생활보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일자리 및 훈련제공이 수급자 및 차상위층의 근로동기 부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정부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 ‘직업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지원’(33.1%)이라고 응답함.
- ‘일하는 경우 정부 지원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28.1%), ‘주거 및 보육 등의 복지지원 연계’(17.4%)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3] [전문가] 근로능력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원 방향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정부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이러한 결과는 비교에 한계가 있으나, 기존 수행된 보건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및 인식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2019년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인 ‘직업 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지원’(33.1%)과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일하는 경우) 정부지원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28.1%)는 2012년 이후 꾸준히 20%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정책임.
- 2012년 가장 응답비율이 높았던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40.0%)는 2018년에도 36.0%의 비율을 보이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14.0%로 그 선호가 상당히 낮아짐.

〈표 4-9〉 [전문가] 연도별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원 방향

(단위: %)

구분		1순위
2012년	자산지원 형성 지원	8.0
	일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기간 연장	30.0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40.0
	소액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2.0
	직업능력향상 지원	20.0
	기타	0.0
	합계	100.0
2014년	자산지원 형성	7.0
	일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기간 연장	37.0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27.0
	소액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1.0
	직업능력향상 지원	28.0
	기타	0.0
	합계	100.0
2015년	자산지원 형성	6.0
	일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기간 연장	33.0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확대	36.0
	소액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0.0
	직업능력향상 지원	25.0
	합계	100.0
2016년	자산지원 형성	10.0
	일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기간 연장	30.0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확대	29.0
	소액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1.0
	직업능력향상 지원	30.0
	합계	100.0
2018년	(저축을 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6.0
	(일하는 경우) 정부지원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	20.0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	36.0
	소액 대출 및 금융지원 확대	0.0
	직업 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지원	27.0
	주거 및 보육 등의 복지지원 연계	11.0
	합계	100.0
2019년	(저축을 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6.6
	(일하는 경우) 정부지원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	28.1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	14.0
	직업 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지원	33.1
	주거 및 보육 등의 복지지원 연계	1.4
	기타	0.8
	합계	100.0

자료: 1) 김태완 외(2012), 김미곤 외(2014), 김미곤 외(2015), 김미곤 외(2016), 김미곤 외(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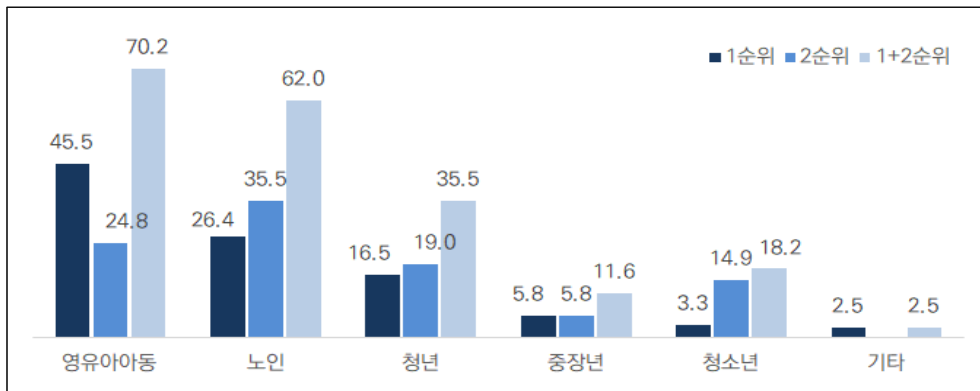
2)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건복지정책 확대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 1순위로 ‘영유아·아동’(45.5%)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노인’(26.4%), ‘청년’(16.5%), ‘중장년’(5.8%), ‘청소년’(3.3%) 순으로 중요도를 두고 있음.

○ 2순위로는 ‘노인’(35.5%), ‘영유아·아동’(24.8%), ‘청년’(19.0%), ‘청소년’(14.9%), ‘중장년’(5.8%) 순으로 나타나며, 1,2순위를 모두 고려하면 ‘영유아·아동’, ‘노인’, ‘청년’, ‘청소년’ 순임.

[그림 4-34] [전문가] 보건복지정책 확대 시 중점 대상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복지정책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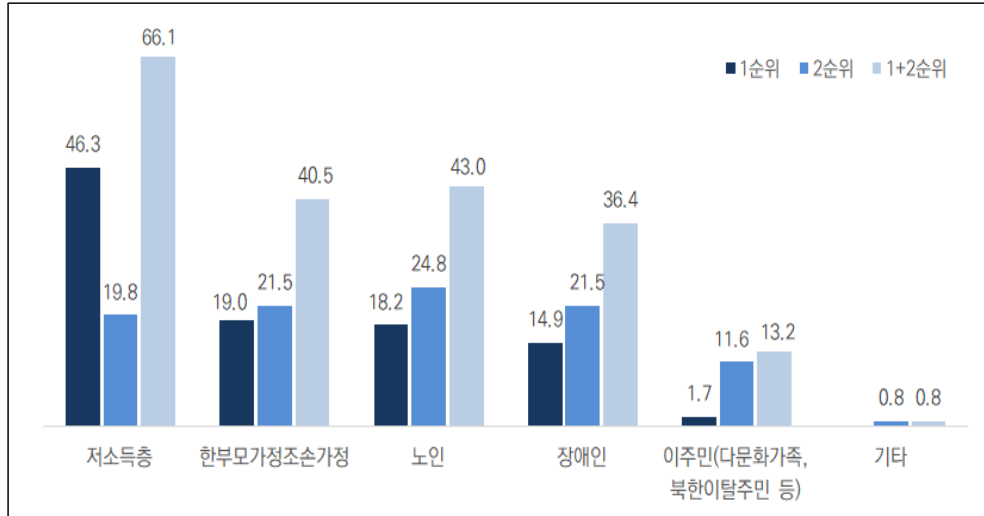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확대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 1순위로는 ‘저소득층’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정·조손가정’이 19.0%, ‘노인’이 18.2%로 그 뒤를 이음.

- 2순위로는 ‘노인’이 24.8%로 가장 높았으며, ‘한부모가정·조손가정’과 ‘장애인’이 21.5%로 동일하게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 1,2순위를 모두 고려하면 ‘저소득층’(66.1%), ‘노인’(43.0%), ‘한부모가정·조손가정’(40.5%), ‘장애인’(36.4%)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5] [전문가] 취약계층 보건복지정책 확대 시 중점 대상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정책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현행 복지제도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30.6%)라고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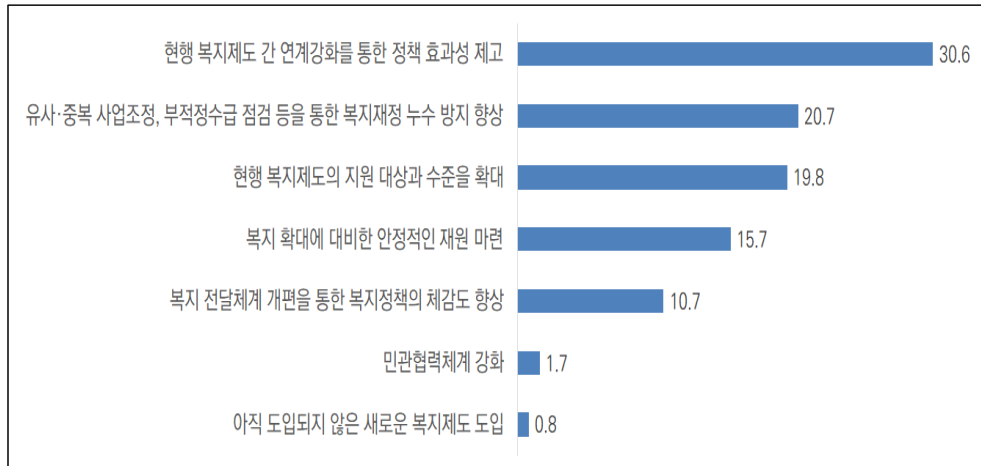
○ 그 다음으로는 ‘유사·중복 사업조정, 부적정 수급 점검 등을 통한 복지재정 누수 방지 향상’(20.7%)과 ‘현행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19.8%)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0.8%로 낮은 수준임.

○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발전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 보다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4-36] [전문가] 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이러한 결과는 비교에 한계가 있으나, 기존 수행된 보건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및 인식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2016년 이후, ‘현행 복지제도 간 연계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가장 선호되고 있음.
- 한편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정책 체감도 향상’은 2016년까지 복지제도 간 연계강화와 유사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나(25~30%), 2018년과 2019년 조사에서는 각각 19.0%, 10.7%로 그 중요도가 상당히 감소하였음.

〈표 4-10〉 [전문가] 연도별 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단위: %)

구분		1순위
2012년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20.0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정책 체감도 향상	30.0
	현행 제도 지원 대상 및 수준 대폭 확대	13.0
	제도 간 연계강화	30.0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7.0
	합계	100.0
2014년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20.0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정책 체감도 향상	36.0
	제도 지원 대상 및 수준 대폭 확대	13.0
	제도 간 연계강화	27.0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3.0
	기타	1.0
2015년	합계	100.0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정책 체감도 향상	29.0
	복지제도 연계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26.0
	복지재정 누수 방지	22.0
	복지제도 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	23.0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0.0
2016년	합계	100.0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정책 체감도 향상	25.0
	민관협력체계 강화	7.0
	복지제도 연계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25.0
	복지재정 누수 방지	17.0
	복지제도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	12.0
2018년	복지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13.0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1.0
	합계	100.0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정책의 체감도 향상	19.0
	민관협력체계 강화	2.0
	현행 복지제도 간 연계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34.0
2019년	유사·중복 사업조정, 부적정수급 점검 등을 통한 복지재정 누수 방지	22.0
	현행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	8.0
	복지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11.0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1.0
	기타	3.0
	합계	100.0
2019년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정책의 체감도 향상	10.7
	민관협력체계 강화	1.7
	현행 복지제도 간 연계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30.6
	유사·중복 사업조정, 부적정수급 점검 등을 통한 복지재정 누수 방지 향상	20.7
	현행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	19.8
	복지 확대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15.7
2019년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0.8
	합계	100.0

자료: 1) 김태완 외(2012), 김미곤 외(2014), 김미곤 외(2015), 김미곤 외(2016), 김미곤 외(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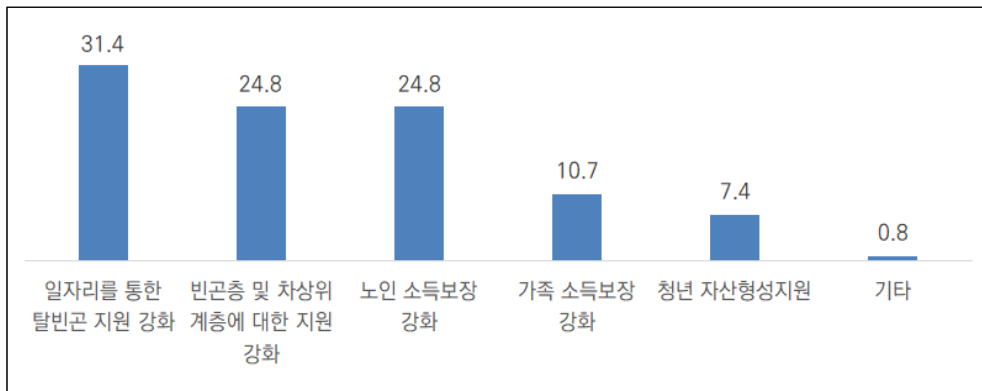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들은 소득지원 정책 중에서는 자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의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 지원 강화’(31.4%)를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분야로 인식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의 ‘노인 소득보장 강화’(24.8%)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됨.

[그림 4-37] [전문가] 소득지원 정책 중 중점 추진 분야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향후 소득지원 정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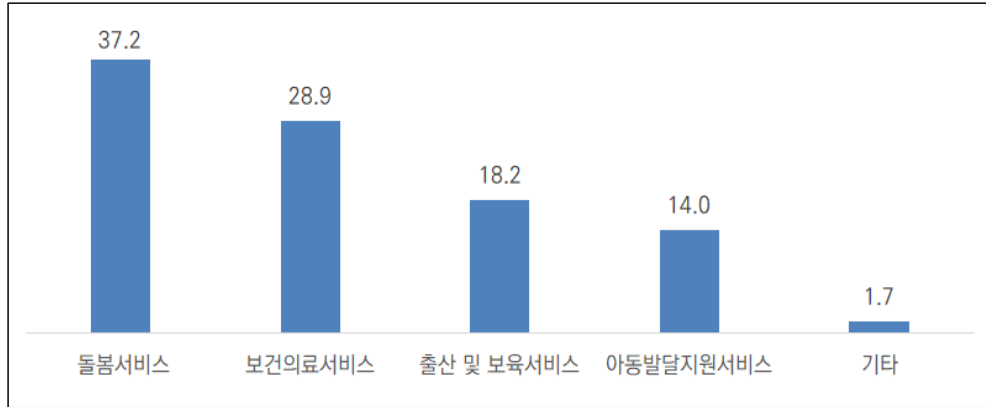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서비스지원 정책 중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37.2%)의 중요성이 가장 높게 평가됨.

○ 치매안심센터운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의 ‘보건의료서비스’가 28.9%로 두 번째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선택되었고, 난임 시술비 지원, 종일보육 등의 ‘출산 및 보육서비스’(18.2%)가 다음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8] [전문가] 서비스지원 정책 중 중점 추진 분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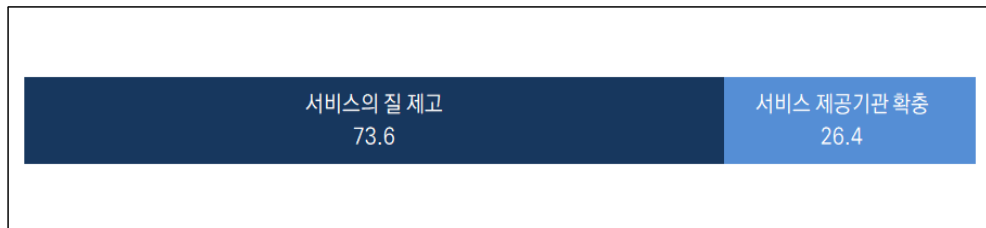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향후 서비스지원 정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들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 제고’(73.6%) 노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그림 4-39] [전문가]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책 개선 방향: 질 제고 vs. 제공기관 확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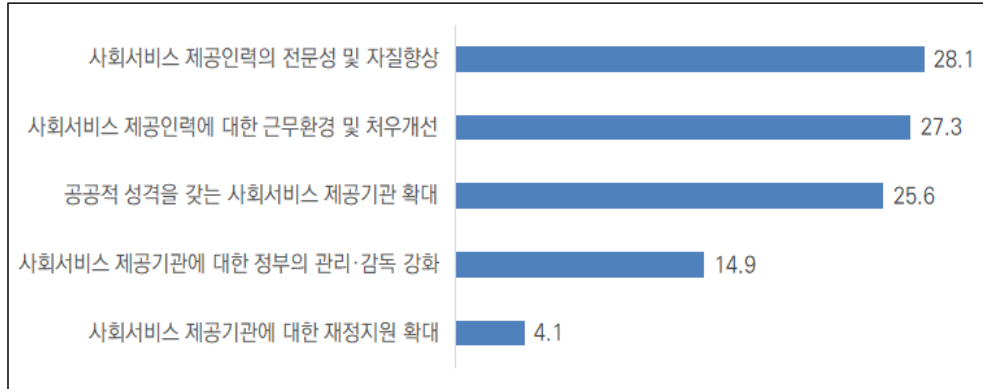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28.1%)이 가장 중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27.3%), ‘공공적 성격을 갖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대’(25.6%)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4-40] [전문가]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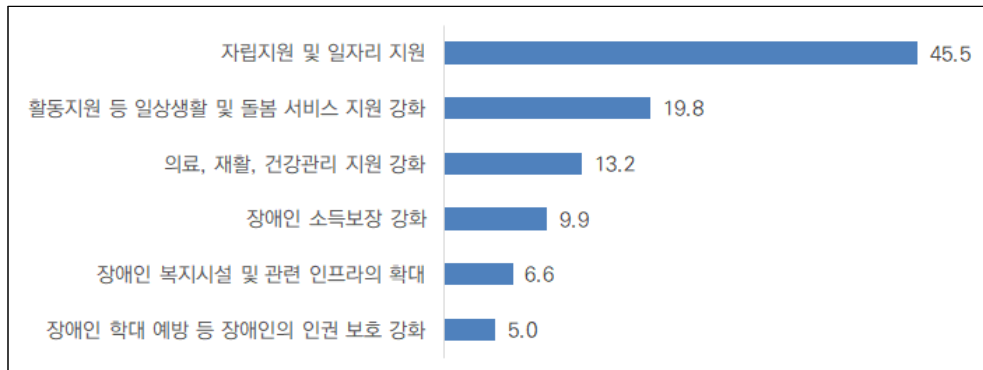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장애인 지원정책 방향으로 전문가들은 일자리 확대 등의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45.5%)이 가장 요구된다고 응답하였으며,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및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19.8%)를 두 번째로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4-41] [전문가]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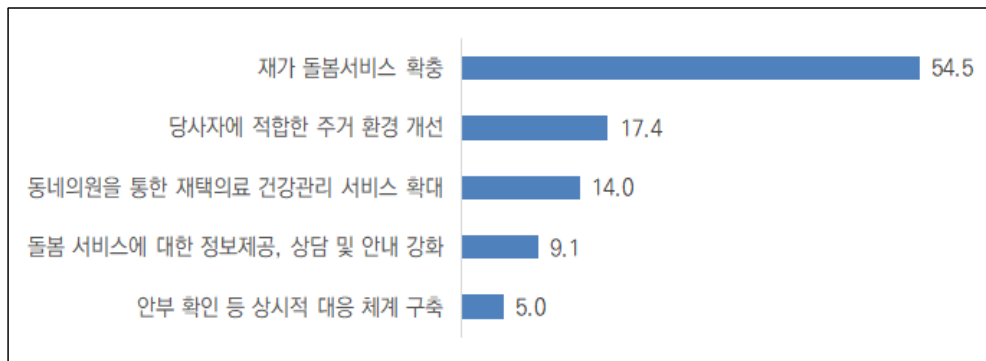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향후 정부의 장애인 지원 정책 방향으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또한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재가 돌봄서비스 확충’이 54.5%로 가장 선호가 높음.

○ ‘당사자에 적합한 주거 환경 개선’은 17.4%, ‘동네의원을 통한 재택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는 14.0%로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됨.

[그림 4-42] [전문가]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정책 방향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커뮤니티케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이러한 결과는 비교에 한계가 있으나, 기존 수행된 보건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및 인식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비교가 가능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장애인 지원 정책으로 가장 선호가 높은 정책은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해당 정책은 2012년에도 53.0%에 이름.
- 그러나 ‘장애인 소득보장강화’는 최근으로 올수록 정책 선호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012년 응답자의 30.0%가 선호했으나, 2018년에는 18.0%, 2019년에는 9.9%로 낮아짐.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연금 등의 대상 및 수준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지원 정책 방향으로서의 요구가 낮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임.

〈표 4-11〉 [전문가] 연도별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단위: %)

구분	1순위
2012년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의료 및 재활 지원 강화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인프라 확대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기타
	합계
2014년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의료 및 재활 지원 강화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인프라 확대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기타
	합계
2015년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의료 및 재활 지원 강화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인프라 확대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합계
2016년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의료, 재활, 건강관리 지원 강화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인프라 확대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
	일상생활 및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장애인의 인권 보호 강화
	장애등급제 개편
	합계
2018년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의료, 재활, 건강관리 지원 강화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인프라의 확대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일자리 확대 포함)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및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장애인 학대 예방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 강화
	장애등급제 개편
	합계
2019년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의료, 재활, 건강관리 지원 강화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인프라의 확대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일자리 확대 포함)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및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장애인 학대 예방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 강화
	합계

자료: 1) 김태완 외(2012), 김미곤 외(2014), 김미곤 외(2015), 김미곤 외(2016), 김미곤 외(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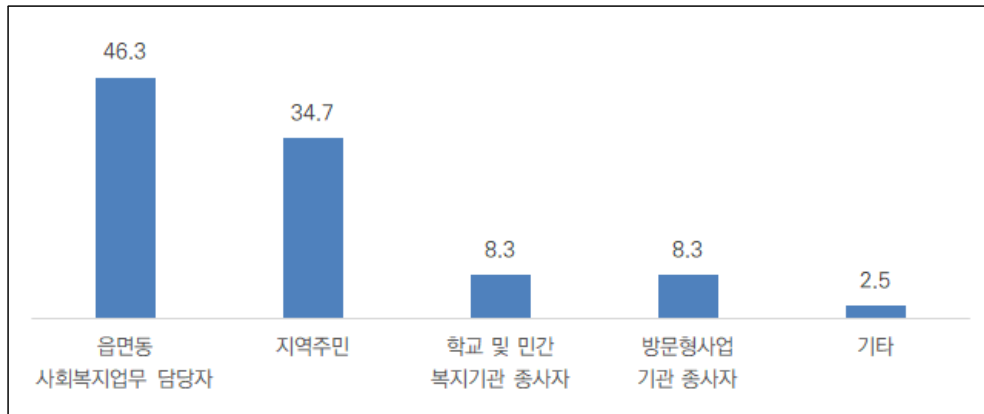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으로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46.3%)를 꼽음.

○ 그 다음으로는 ‘지역주민’(34.7%)이 위기 가구의 발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4-43] [전문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대상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다.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인식의 비교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복지 수준 및 정책 만족도(성과)는 국민이 전문가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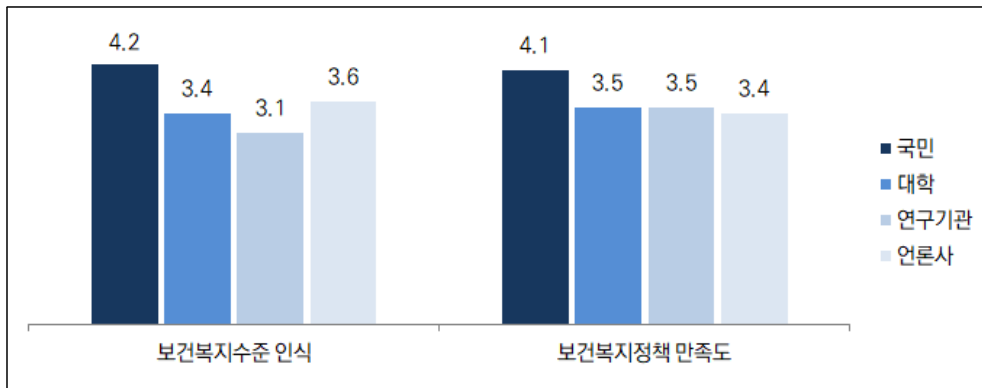
○ 전반적인 보건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은 평균 4.2점으로 ‘다소 높다’에 가까운 평가를 하고 있으나, 전문가는 평균 3.4점으로 ‘다소 낮다’에 가까운 평가를 하고 있음.

- 보건복지 수준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는 전문가 소속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는데, 언론사 소속 전문가가 3.6점으로 가장 높고,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가 3.1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는 만족도를, 전문가에게는 지난 3년(2017-2019)간의 정책성과를 물었는데, 국민의 정책만족도는 평균 4.1점(‘다소 만족’ 4점)으로 나타난 반면, 전문가의 정책성과 평가는 3.5점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4-44] [국민-전문가] 보건복지수준 및 정책만족도(성과 평가)

(단위: 점)



주: 1) 보건복지수준 인식은 “귀하는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① 매우 낮다~⑥매우 높다’ 6점 척도로 측정됨.

2) 보건복지정책 만족도는 국민의 경우 “귀하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불만족~⑥매우 만족’, 전문가의 경우 “귀하는 전문가로서 지난 3년간(2017-2019)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정책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미흡~⑥매우 우수’ 6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개별 복지정책들에 대한 만족도(평가) 또한 국민이 전문가보다 높게 나타남. 국민의 만족도는 대체로 평균 3.7점~4.2점(‘다소 만족’ 4점) 수준을 보였으나, 전문가는 3.2점~3.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6점 만점).

- 국민과 전문가 모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정책은 ‘노인 대상 돌봄 확대’인 반면 모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정책은 ‘일자리 지원 확대’임.
-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의 경우, 국민은 평균 4.0점으로 ‘다소 만족’하고 있으나, 전문가는 평균 3.0점으로 ‘다소 불만족’하고 있음. 국민과 전문가의 정책별 만족도(평가)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4-45] [국민-전문가] 복지정책별 만족도(성과 평가)

(단위: 점)



주: 국민의 경우 “귀하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불만족~⑥매우 만족’, 전문가의 경우 “귀하는 전문가로서 지난 3년간(2017-2019)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정책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미흡~⑥매우 우수’ 6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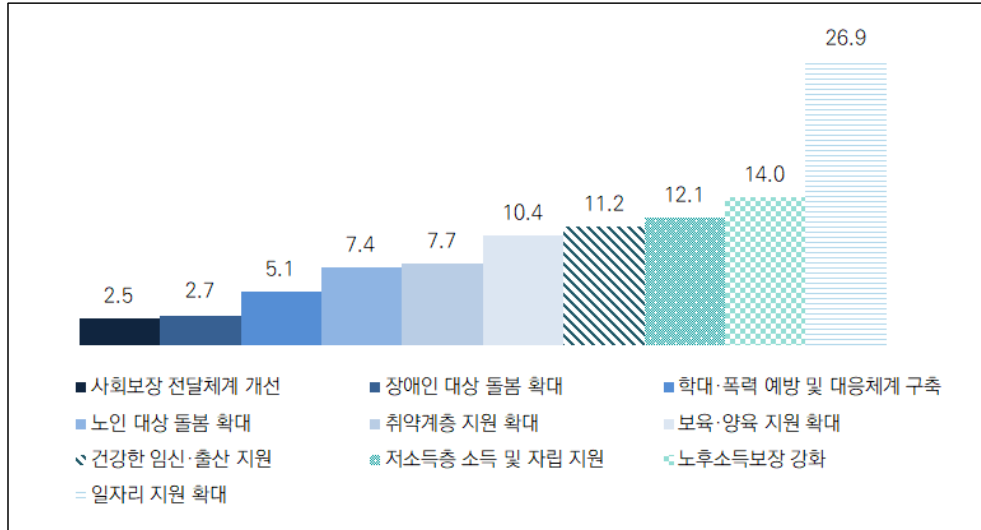
□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정책으로 국민은 ‘일자리 지원 확대’(26.9%)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였으나, 전문가는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과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평균 4.8점) 강화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남.

○ 국민과 전문가의 응답 방식의 차이로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일자리 지원 확대’에 대한 만족도(평가)와 강화해야 할 정책으로서의 ‘일자리 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의 인식 차이는 눈여겨 볼 만함.

- 즉, 국민은 일자리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지만 여전히 일자리 지원 확대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전문가는 일자리 지원 확대 정책의 성과가 낮다고 보고 강화해야 할 정책으로 보고 있지 않음.
- 이러한 결과는 ‘일자리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 수요자 및 공급자 양 측면에서 접근하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함.

[그림 4-46] [국민] 강화해야 할 복지정책 방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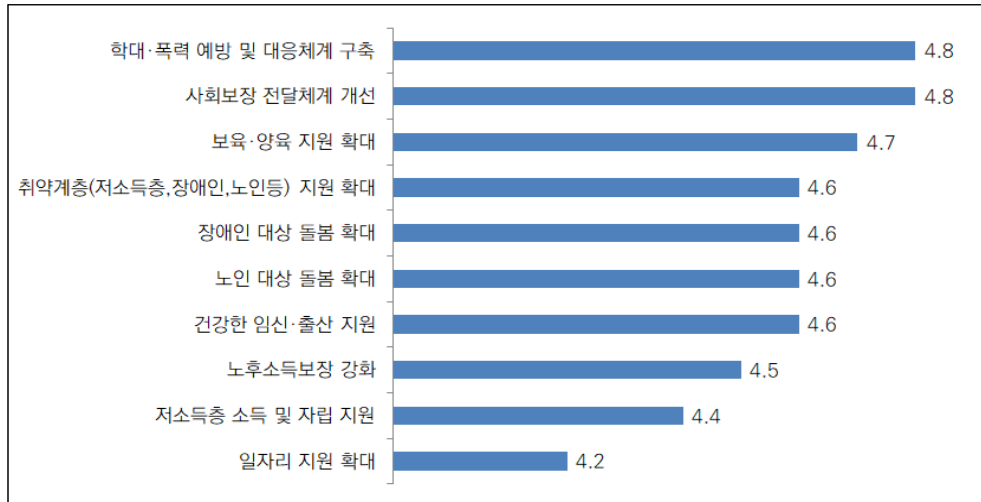


주: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아래의 복지정책 중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4-47] [전문가] 강화해야 할 복지정책 동의 정도

(단위: 점)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복지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해주십시오”에 대해 ‘①전혀 동의하지 않음~⑥매우 동의함’ 6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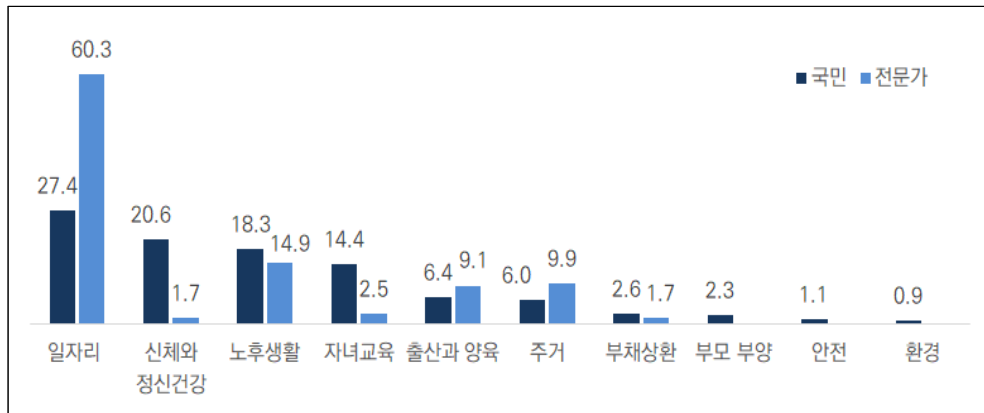
□ 국민들이 느끼는 걱정거리(불안요인)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 모두 ‘일자리’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음. 그러나 ‘신체와 건강’, ‘자녀교육’은 국민과 전문가의 인식차를 확인할 수 있음(1순위 기준).

○ 국민은 응답자의 27.4%가 일자리로 응답하였으나, 전문가는 응답자의 60.3%가 응답하여 일자리는 국민 스스로보다 전문가가 생각하는 국민의 걱정거리로 더욱 크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 또한 국민은 일자리 다음으로 ‘신체와 정신건강’(20.6%)을 걱정거리로 응답한 비율이 높지만 전문가는 1.7%로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자녀교육’도 동일한 경향을 보임.

[그림 4-48] [국민-전문가] 국민들의 걱정거리(불안요인)

(단위: %)



주: “귀하가 느끼는 현재의 걱정거리(불안요인)은 무엇입니까?” 혹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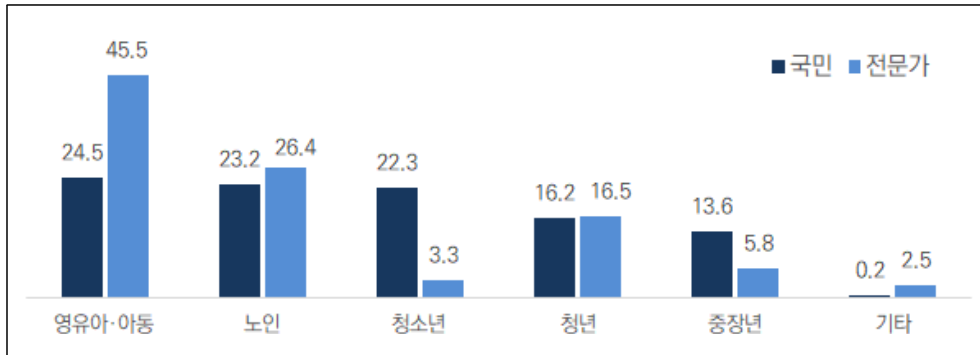
□ 보건복지정책 확대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으로 국민과 전문가 모두 ‘영유아·아동’을 꼽음(1순위 기준).

○ 그러나 ‘영유아·아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국민은 24.5%인 것에 비해 전문가는 45.5%로 나타나, 전문가가 국민보다 영유아·아동에 대한 정책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국민과 전문가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국민은 정책 확대 시 중점 대상으로 응답자의 22.3%가 ‘청소년’으로 보고 있으나, 전문가는 3.3%에 불과함. 이러한 경향은 국민의 경우, 응답자 본인 및 자녀 등 가구의 상황에 따른 정책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4-49] [국민-전문가] 보건복지정책 확대 시 중점 대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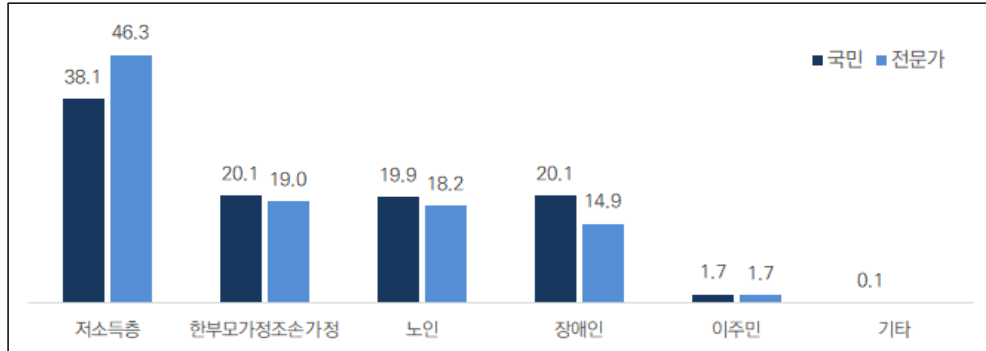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보건복지정책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확대 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으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저소득층’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각각 38.1%, 46.3%).
 - 이외의 ‘한부모가정·조손가정’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인식은 국민과 전문가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다만, ‘장애인’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의 주요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국민이 전문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각각 20.1%, 14.9%).

[그림 4-50] [국민-전문가] 취약계층 보건복지정책 확대 시 중점 대상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정책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으로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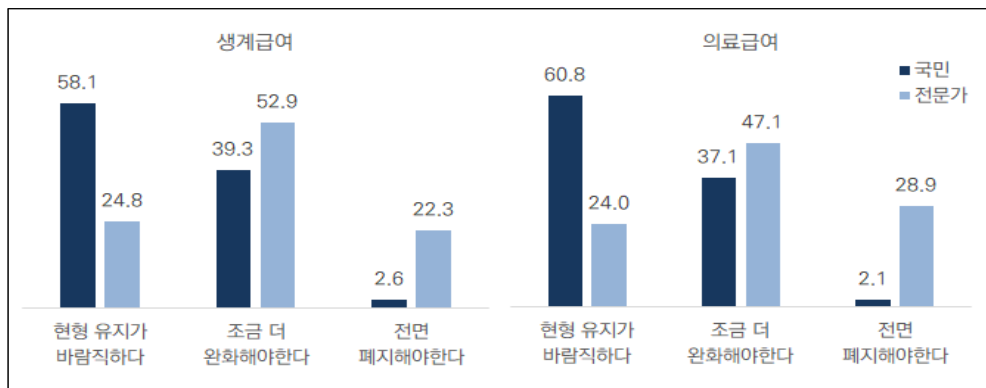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국민은 대체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생계급여 58.1%, 의료급여 60.8%), 전문가는 ‘조금 더 완화해야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생계급여 52.9%, 의료급여 47.1%).

○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폐지에 대해 국민은 생계급여 2.6%, 의료급여 2.1% 만이 동의했지만, 전문가는 각각 22.3%, 28.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가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에 더욱 호의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51] [국민-전문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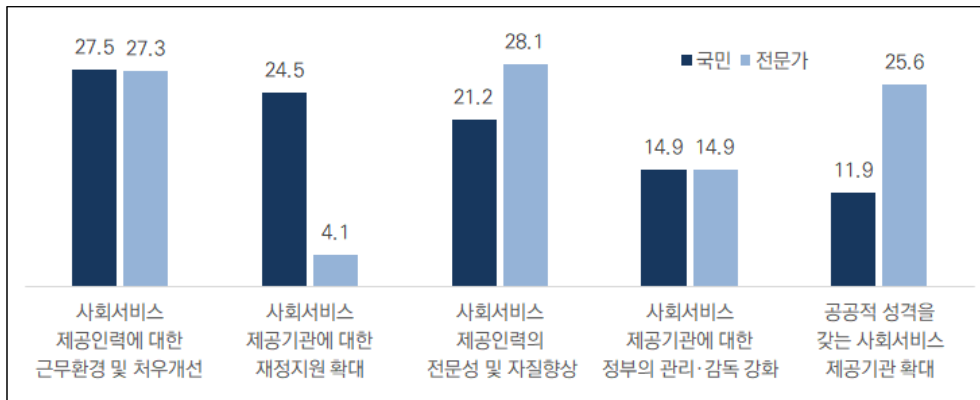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정책에 대한 응답에서도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국민 27.5%, 전문가 27.3%로 유사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국민 24.5%, 전문가 4.1%)와 ‘공공적 성격을 갖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대’(국민 11.9%, 전문가 25.6%)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은 다소 상반되게 나타남.

[그림 4-52] [국민-전문가]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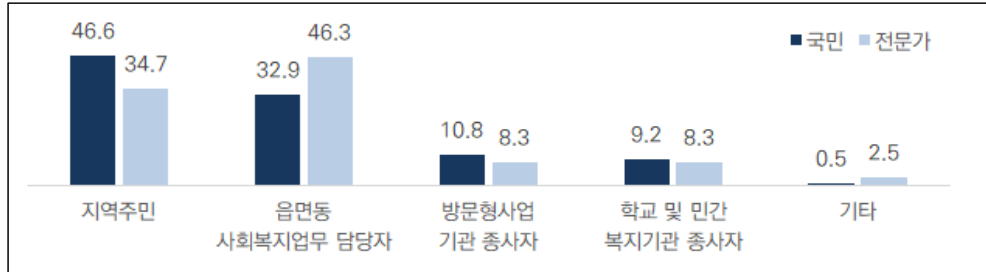
주: “귀하는(전문가로서)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대상으로 국민은 46.6%가 ‘지역 주민’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전문가는 46.3%가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라고 응답함(1순위 기준).

○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는 국민에 비해 공공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4-53] [국민-전문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대상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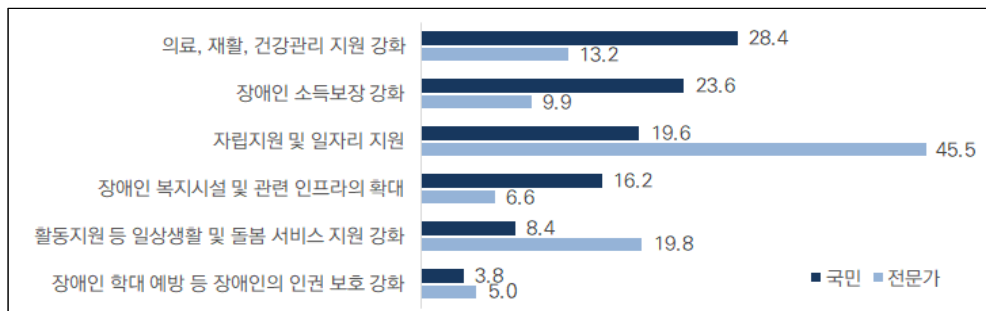
□ 장애인 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 사이에 상당한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국민은 ‘의료, 재활, 건강관리 지원 강화’,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전문가는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및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순으로 선호를 나타냄.

- 국민은 ‘의료, 재활, 건강관리 지원 강화’(28.4%)를 가장 선호했으나, 전문가는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45.5%)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민은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23.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전문가는 9.9%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4-54] [국민-전문가]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향후 정부의 장애인 지원정책 방향으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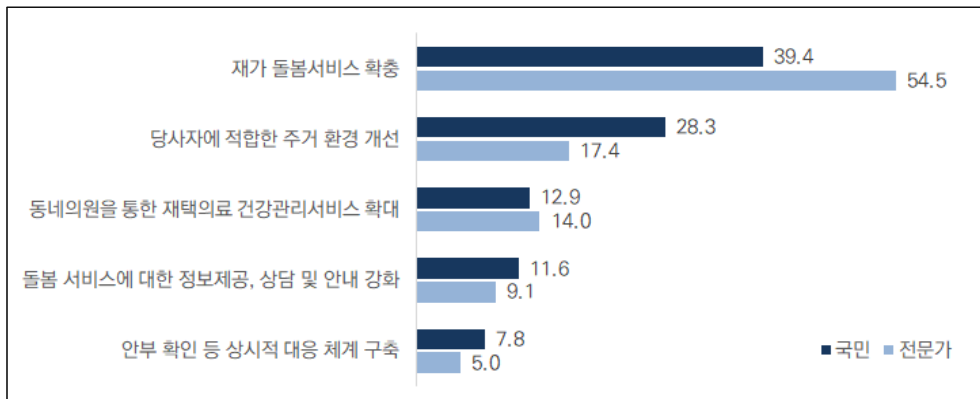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정책 욕구는 장애인 정책과 달리 국민과 전문가의 인식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임.

○ 국민과 전문가 모두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 확충’(국민 39.4%, 전문가 54.5%)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당사자에 적합한 주거 환경 개선’(국민 28.3%, 전문가 17.4%)이 높게 나타남.

[그림 4-55] [국민-전문가]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정책 방향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커뮤니티케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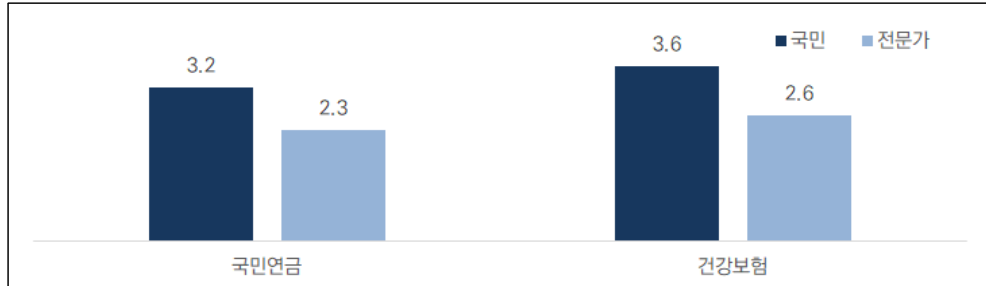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중장기적 재정안정성에 대해 전문가가 국민보다 더 불안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에 대한 평가 점수가 국민은 평균 3.2점, 전문가는 평균 2.3점으로 나타나, 국민과 전문가 모두 재정안정성에 대해 3.5점(중간값) 이하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건강보험 역시 국민은 평균 3.6점, 전문가는 2.6점으로 나타나, 국민과 전문가 모두 재정 안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56] [국민-전문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 인식

(단위: 점)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중장기적 재정의 안정성(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불안정하다~ ⑥매우 안정적이다’ 6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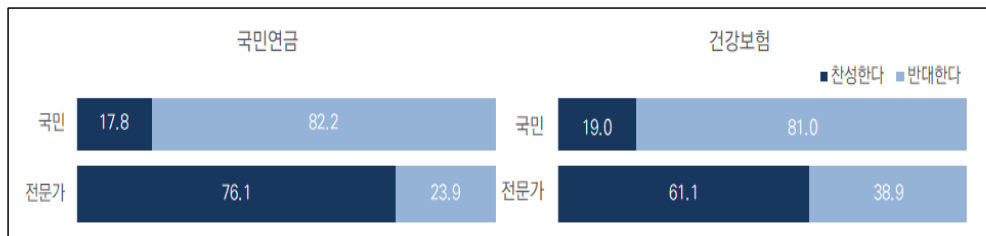
□ 국민과 전문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앞서 살펴보았듯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중장기적 재정안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국민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각각 17.8%, 19.0% 만이 찬성하고 있으나, 전문가는 각각 76.1%, 61.1%가 보험료 인상에 찬성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재정안정성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보험료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결과로 사회보험료 인상 등의 제도 개편이 쉽지 않은 일임을 시사함. 이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성 제고 노력 등의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4-57] [국민-전문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1) “귀하는 (전문가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반대한다~⑥매우 찬성한다’ 6점 척도로 측정됨.

2) ‘찬성한다’는 ‘다소 찬성한다+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매우 반대한다+반대한다+다소 반대한다’로 응답한 비율의 합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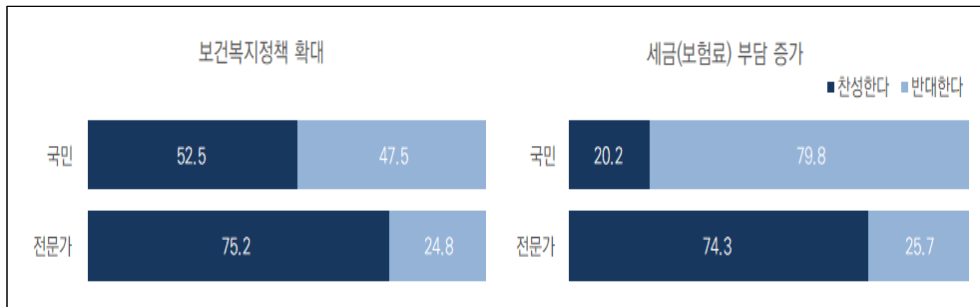
□ 또한 보건복지정책 전반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보다 전문가가 확대 및 세금(보험료) 부담 증가에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국민은 52.5%가 복지정책 확대에 찬성하지만 전문가는 75.2%가 찬성하고 있음.

○ 한편, 세금(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해 국민은 20.2%만이 찬성했지만 전문가는 74.3%가 찬성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견과 같이 국민과 전문가 사이에 인식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

[그림 4-58] [국민-전문가] 보건복지정책 확대 및 세금(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1) 보건복지정책 확대는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반대한다~⑥매우 찬성한다’, 세금(보험료) 부담 증가는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반대한다~⑥매우 찬성한다’ 6점 척도로 측정됨.

2) ‘찬성한다’는 ‘다소 찬성한다+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매우 반대한다+반대한다+다소 반대한다’로 응답한 비율의 합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인구정책 분야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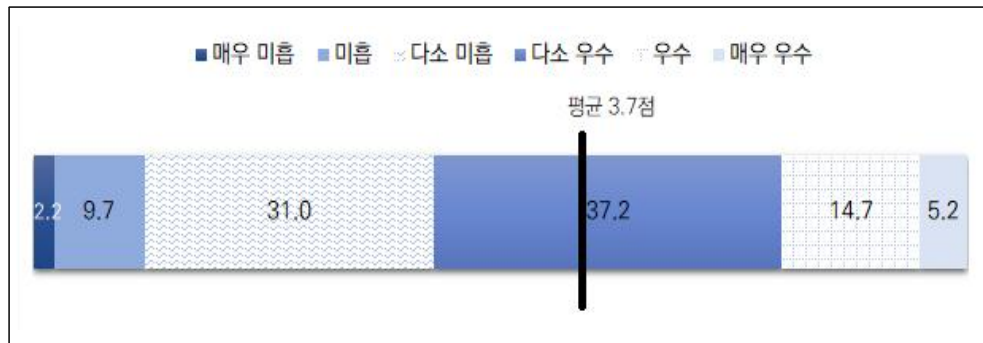
1. 인구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해서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국민은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국민보다 다소 많은 편이었음.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해 국민은 다소 우수(37.2%), 우수(14.7%), 매우 우수(5.2%)라고 답하여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국민이 과반 수 이상인 57.2%이었으며, 이를 6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균 3.7점이었음.

[그림 4-59] [국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 점, %)



주: “귀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미흡~⑥매우 우수’ 6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평가는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소득계층, 최종학력, 경제활동 상태,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최종 학력이 고졸(60.3%), 소득계층은 중상층(71.7%), 광역시 거주(64%), 가구원 4명 이상(51.6%), 경제활동 상태가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59.3%)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음.
- 가구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100만원 이하(65.7%)의 저소득자,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76.5%)가 정책을 우수하다고 평가하여 중산층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최종학력이 중졸이하(60.3%), 소득계층은 하층(59.7%), 시부에 거주(49.9%), 가구원 2명(52.3%), 임시일용직(48.5%), 소득 400만원 대 가구의 평가는 부정적이었음.

〈표 4-12〉 [국민] 집단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χ^2
전체		2.2	9.7	31.0	37.2	14.7	5.2	-
가구원수	1명	3.9	13.0	26.0	40.3	9.1	7.8	35.125**
	2명	4.0	9.7	38.6	31.3	15.9	0.6	
	3명	0.7	11.9	31.4	36.8	15.9	3.2	
	4명 이상	2.1	7.9	28.7	39.1	14.5	7.7	
거주지역	광역시	0.9	6.6	28.5	40.5	17.8	5.7	43.398***
	시부	3.7	11.6	34.6	31.5	13.1	5.4	
	군부	0.0	15.2	22.8	53.2	7.6	1.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	16.4	41.8	28.4	11.9	0.0	40.193***
	중하층	3.5	8.3	30.5	37.0	15.4	5.3	
	중간층	1.1	10.4	31.6	38.0	12.4	6.6	
	중상(상)층	3.0	6.0	19.4	41.8	29.9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7	17.2	41.4	34.5	5.2	0.0	29.607***
	고졸	2.0	7.8	29.8	40.8	16.6	2.9	
	대졸 이상	2.4	10.5	30.8	34.3	14.1	7.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7	9.9	30.7	36.3	11.5	9.9	40.380**
	임시일용직	3.0	6.1	39.4	39.4	9.1	3.0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3.1	11.7	25.9	44.4	13.0	1.9	
	실업자	0.0	6.8	35.6	35.6	18.6	3.4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6	9.5	32.0	35.0	18.2	2.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5	7.5	25.4	37.3	26.9	1.5	98.043***
	100만원 대	2.9	10.5	31.3	42.5	10.5	2.2	
	200만원 대	1.9	10.8	31.1	38.6	15.1	2.6	
	300만원 대	2.3	7.4	34.9	30.9	13.1	11.4	
	400만원 대	4.2	4.2	37.5	16.7	16.7	20.8	
	500만원 이상	0.0	8.8	14.7	23.5	26.5	26.5	

주: 1) +p<0.1, *p<0.05, **p<0.01, ***p<0.001

2) “귀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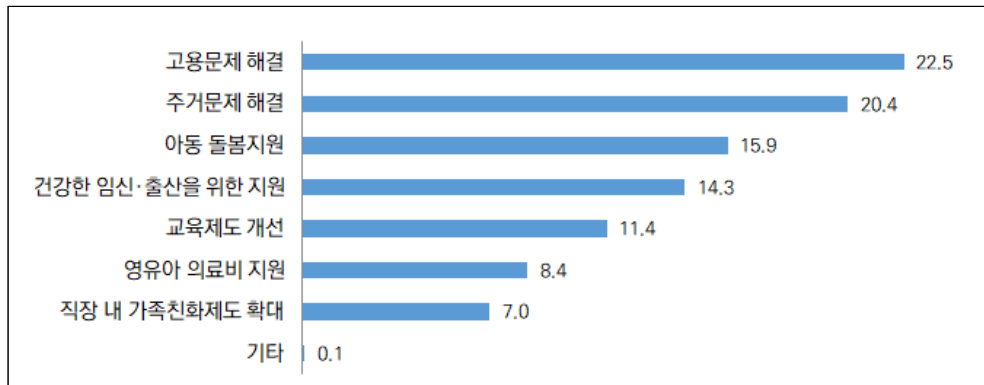
□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용문제 해결’(22.5%)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다음으로 저출산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주거문제 해결’(20.4%), ‘아동 돌봄지원’(15.9%),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14.3%), ‘교육제도 개선’(11.4%), ‘영유아 의료비 지원’(8.4%),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7.0%) 순으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기존에 선행된 다수의 연구(강영주 외, 2018; 이삼식 외, 2010)에서도 고용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이 저출산의 큰 원인이라고 밝힌바 있어, 고용문제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음.

[그림 4-60] [국민]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단위: %)



주: “귀하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소득계층, 최종학력,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임.

- 가구원 수는 단독가구일 경우 ‘주거문제 해결’(26.0%), 가구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고용문제 해결’(21.6%)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음.
- 광역시 거주자일 경우 ‘고용문제 해결’(25.1%), 시부일 경우 ‘주거문제 해결’(21.6%), 군부일 경우 ‘아동돌봄 지원’(25.3%)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소득계층에서 하층과 중하층은 ‘주거문제 해결’(각각 26.9%, 21.2%), 중간층과 중상층은 ‘고용문제 해결’(각각 27.3%, 23.9%)을 가장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았음.
-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100만원 미만은 ‘교육문제 해결’(26.9%),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고용문제 해결’(각각 25.1%, 24.0%), 300만원 이상은 ‘주거문제 해결’(각각 23.4%, 25.0%)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음.
- 특히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주거문제 해결’(41.2%)이 가장 필요하다고 한 사람의 비율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높은 편이었음.

〈표 4-13〉 [국민] 집단별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단위: %)

구분		1	2	3	4	5	6	7	8	X ²
전체		22.5	20.4	15.9	14.3	11.4	8.4	7.0	0.1	-
가구원수	1명	14.3	26.0	15.6	13.0	9.1	11.7	9.1	1.3	31.187+
	2명	21.6	20.5	19.3	9.7	10.8	6.8	11.4	0.0	
	3명	23.1	20.6	15.2	14.1	11.9	9.0	6.1	0.0	
	4명 이상	23.8	19.4	15.1	16.4	11.7	8.1	5.5	0.0	
거주지역	광역시	25.1	21.9	12.3	13.9	10.5	10.7	5.5	0.2	41.944***
	시부	19.9	21.6	17.6	13.5	12.9	7.3	7.3	0.0	
	군부	24.1	5.1	25.3	21.5	7.6	2.5	13.9	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2.4	26.9	14.9	3.0	9.0	9.0	14.9	0.0	44.598**
	중하층	16.6	21.2	17.4	12.6	15.1	10.1	7.1	0.0	
	중간층	27.3	19.6	14.3	16.8	9.0	6.6	6.2	0.2	
	중상(상)층	23.9	14.9	19.4	17.9	9.0	10.4	4.5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9.3	12.1	15.5	20.7	1.7	13.8	6.9	0.0	22.545+
	고졸	23.8	20.9	18.4	11.7	11.9	6.7	6.7	0.0	
	대졸 이상	20.6	21.0	13.7	15.9	12.1	9.3	7.3	0.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4	25.4	17.9	9.0	8.9	8.9	15.6	0.0	87.926***
	100만원 대	25.1	17.8	14.9	17.5	26.9	4.5	6.0	0.0	
	200만원 대	24.0	18.1	17.4	14.4	8.7	10.9	5.1	0.0	
	300만원 대	21.7	23.4	17.7	9.7	11.5	6.6	8.0	0.0	
	400만원 대	16.7	25.0	0.0	25.0	10.3	9.7	7.4	0.0	
	500만원 이상	14.7	41.2	2.9	14.7	12.5	12.5	8.3	0.0	

주: 1) +p<0.1, *p<0.05, **p<0.01, ***p<0.001

2) “귀하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3) 1-‘고용문제해결’, 2-‘주거문제해결’, 3-‘아동돌봄지원’, 4-‘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4-‘영유아 의료비 지원’, 5-‘직장내 가족 친화제도 확대’, 6-‘기타’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가 있지만, 기존 수행된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의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2014년과 2015년 전문가 조사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각각 34.0%, 26.0%)와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각각 32.0%, 32.0%)이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나, 2016년과 2018년 조사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양립 정책 강화’(각각 37.0%, 31.0%)와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등 결혼지원정책’(각각 26.0%, 20.0%)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4-14〉 [국민] 연도별 출산장려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구분		1순위
2014년	임신·출산 의료비용 지원 강화	5.0
	보육서비스 질 제고	34.0
	가정양육 지원강화	8.0
	육아기 근로 지원	15.0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32.0
	결혼비용 감소	4.0
	기타	2.0
	합계	100.0
2015년	임신·출산 의료비용 지원 강화	8.0
	보육서비스 질제고	26.0
	가정양육 지원강화	13.0
	육아기 근로 지원	17.0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32.0
	결혼비용 감소	4.0
	합계	100.0
2016년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등 결혼지원정책	26.0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양립 정책 강화	37.0
	사교육 부담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23.0
	임신, 출산 의료비용 지원 강화	2.0
	보육서비스의 질제고	6.0
	아이돌봄비, 초등돌봄교실 등 보육서비스 이외의 돌봄 확대	6.0
	합계	100.0

구분		1순위
2018년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등 결혼지원정책	20.0
	임신·출산 의료비용 지원 강화	2.0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양립 정책 강화	31.0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예, 맞춤형 보육,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충 등)	15.0
	아이돌봄비, 초등돌봄교실 등 보육서비스 이외의 돌봄 확대	6.0
	사교육 부담 경감 및 공교육의 양적·질적 강화	20.0
	기타	6.0
	합계	100.0
2019년	고용문제 해결	22.5
	주거문제 해결	20.4
	아동 돌봄지원	15.9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14.3
	교육제도 개선 (사교육)	11.4
	영유아 의료비 지원	8.4
	직장 내 가족 친화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확대	7.0
	기타	0.1
	합계	100.0

자료: 1) 김미곤 외(2014), 김미곤 외(2015), 김미곤 외(2016), 김미곤 외(2018).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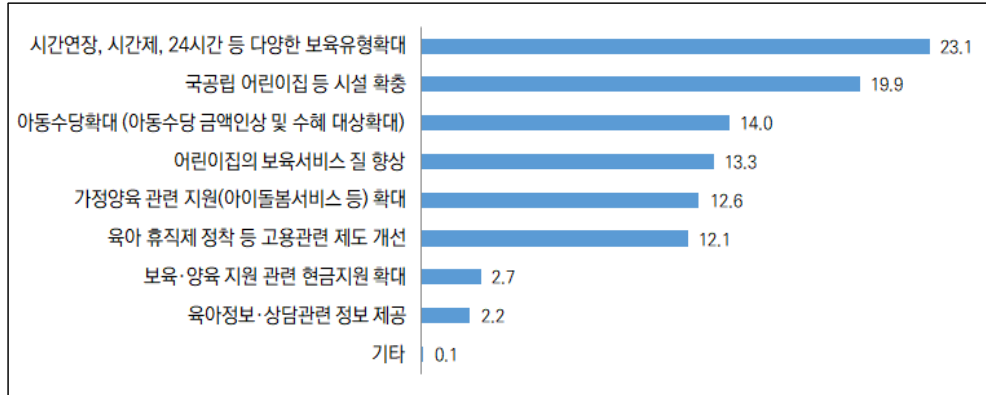
□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가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서는 '시간연장, 시간제, 24시간 보육 등 다양한 보육유형확대'(23.1%)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육아지원정책이라고 보았음.

○ 그 다음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 시설확충'(19.9%)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18년에 수행된 전국 출산력 및 가구보건·복지 실태조사(이소영 외, 2018)에서의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자녀의 주간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돌봄 유형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보임.

○ 그 다음으로는 '아동수당 확대'(14.0%),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13.3%), '가정양육 관련 지원 확대'(12.6%), '육아 휴직제 정착 등 고용관련 제도 개선'(12.1%), '보육·양육 지원 관련 현금지원 확대'(2.7%), '육아정보 상담 관련 정보 제공'(2.2%) 순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4-61] [국민] 육아지원정책 방향

(단위: %)



주: “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가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육아지원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육아지원정책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소득계층, 최종학력,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육아지원정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을 연령층에 해당하는 만 30~39세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24.1%)을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만 40~49세의 경우에는 ‘시간 연장, 시간제 24시간 등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24.5%)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음.
- 가구원 수에 따라서는 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시간 연장, 시간제, 24시간 등 다양한 보육 유형 확대’(30.1%)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시간 연장 보육, 국공립 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군부 거주자의 경우 ‘가정양육 관련 지원 확대’(27.8%)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에 따라서는 중졸 이하인 경우 고졸과 대졸이상인 경우에 비해 ‘시간 연장, 시간제, 24시간 등 다양한 보육 유형 확대’(31.0%), ‘국공립 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27.6%)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100만원 미만은 ‘가정양육 관련 지원 확대’(25.4%), 400만원 대는 ‘시간 연장 등 다양한 보육 유형 확대’(37.5%),

500만원 이상은 ‘아동수당확대’(26.5%)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육아지원정책으로 인식하였음.

〈표 4-15〉 [국민] 집단별 육아지원정책 방향

(단위: %)

구분		1	2	3	4	5	6	7	8	9	X ²
전체		23.1	19.9	14.0	13.3	12.6	12.1	2.7	2.2	0.1	-
연령	20대	23.5	17.1	10.6	11.8	15.9	15.3	2.9	2.9	0.0	47.102*
	30대	23.0	24.1	14.9	9.8	9.2	14.4	2.9	1.7	0.0	
	40대	24.5	15.3	16.2	19.4	8.8	10.6	1.9	2.8	0.5	
	50대	19.4	20.7	15.4	14.1	10.6	14.1	3.5	2.2	0.0	
	60대 이상	25.4	22.5	12.2	10.3	18.8	7.0	2.3	1.4	0.0	
가구원수	1명	11.7	24.7	18.2	11.7	20.8	10.4	0.0	2.6	0.0	40.556*
	2명	30.1	18.2	8.0	13.1	16.5	10.8	2.8	0.6	0.0	
	3명	21.7	20.9	16.6	10.5	11.9	11.6	4.7	2.2	0.0	
	4명 이상	23.2	19.1	14.0	15.3	10.2	13.2	1.9	2.8	0.2	
거주 지역	광역시	24.8	18.9	16.6	14.8	10.7	10.5	2.1	1.6	0.0	41.611***
	시부	20.5	20.7	13.1	12.4	11.8	14.5	3.7	2.9	0.2	
	군부	29.1	20.3	5.1	10.1	27.8	6.3	0.0	1.3	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4.9	25.4	11.9	7.5	19.4	13.4	4.5	3.0	0.0	30.285
	중하층	23.7	19.4	12.6	12.1	12.3	12.6	4.0	3.0	0.3	
	중간층	24.7	19.2	14.3	14.1	12.4	12.2	1.7	1.5	0.0	
	중상(상)층	16.4	22.4	22.4	20.9	9.0	7.5	0.0	1.5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1.0	27.6	5.2	8.6	19.0	6.9	0.0	1.7	0.0	27.702*
	고졸	22.9	16.8	15.7	13.0	15.7	11.0	2.7	2.2	0.0	
	대졸 이상	22.4	21.8	13.5	14.1	9.1	13.7	3.0	2.2	0.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8.6	20.0	15.5	14.9	10.1	14.1	3.9	2.5	0.3	54.905+
	임시일용직	21.2	24.2	9.1	15.2	18.2	9.1	3.0	0.0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포함)	33.3	13.6	11.1	14.2	16.0	7.4	1.2	3.1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3.0	20.2	14.8	12.3	12.8	8.5	3.4	1.7	0.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0.9	13.4	6.0	9.0	25.4	6.7	4.4	4.4	0.0	8.730
	100만원 대	24.4	20.7	13.1	13.5	14.2	11.9	3.0	9.0	1.5	81.986***
	200만원 대	24.7	21.2	13.4	13.9	9.6	8.7	4.4	1.1	0.0	
	300만원 대	17.7	21.1	17.1	12.6	12.6	12.5	2.1	2.6	0.0	
	400만원 대	37.5	8.3	16.7	4.2	8.3	16.0	2.3	0.6	0.0	
	500만원 이상	14.7	11.8	26.5	23.5	14.7	20.8	0.0	4.2	0.0	

주: 1) +p<0.1, *p<0.05, **p<0.01, ***p<0.001

2) “귀하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3) 1-시간연장, 시간제, 24시간 등 다양한 보육 유형 확대, 2-국공립 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 3-아동수당확대(아동수당 금액인상 및 수혜 대상 확대), 4-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 5-가정양육 관련 지원(아이돌봄 서비스 등) 확대, 6-육아휴직제 정착 등 고용관련 제도 개선, 7-보육·양육 지원 관련 현금지원 확대, 8-육아 정보·상담관련 정보 제공, 9-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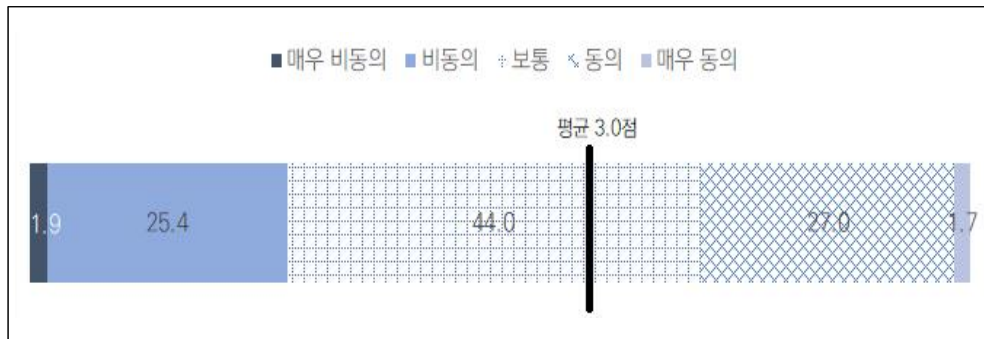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아동의 놀이 인식을 국민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첫 번째로 질문한 ‘아동의 놀이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5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3.0점이었음.

- 아동의 놀 권리(놀이권)란, 아동의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 아동이 놀이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동의한 국민이 27.0%, 매우 동의가 1.9%로, 동의하는 비율이 28.9%로 나타났고, 비동의 하는 비율은 25.4%, 매우 비동의가 1.7%로 총 26.7%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0%로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나, 아동의 놀이권에 대해 국민은 뚜렷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그림 4-62] [국민]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대한 인식

(단위: 점, %)



주: “국내 아동의 놀이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 ‘①매우 비동의 ~ ⑤매우 동의’ 5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아동의 놀이권 보장 인식은 응답자의 거주지역과 소득계층, 최종학력,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시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비동의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32.4%), 광역시 거주자(31.6%)가 비교적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음.
 -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비동의 하는 비율이 낮아졌으며, 특히 중상층의 경우 동의하는 비율(43.3%)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중졸 이하가 비동의(36.2%)하는 비율이 높고, 고졸이 동의(29.5%)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100만원 미만과 400만원 대 소득가구의 비동의 응답 비율이 월등히 높아, 이들에 대한 이유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4-16〉 [국민] 집단별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전체		1.9	25.4	44.0	27.0	1.7	-
가구원수	1명	2.6	31.2	50.6	15.6	0.0	16.617
	2명	3.4	24.4	43.8	26.7	1.7	
	3명	1.8	29.2	43.0	24.2	1.8	
	4명 이상	1.3	22.6	43.6	30.6	1.9	
거주지역	광역시	0.5	22.8	45.1	29.8	1.8	24.694**
	시부	2.7	29.7	41.3	24.7	1.7	
	군부	5.1	13.9	54.4	25.3	1.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0	28.4	41.8	20.9	0.0	48.609***
	중하층	1.5	28.5	41.8	28.0	0.3	
	중간층	1.3	23.2	47.3	25.8	2.3	
	중상(상)층	1.5	19.4	35.8	35.8	7.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6.9	29.3	39.7	22.4	1.7	22.092**
	고졸	1.6	22.2	46.6	29.1	0.4	
	대졸 이상	1.6	27.8	42.1	25.6	2.8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9	25.5	42.3	28.2	2.1	6.670
	별거/사별/이혼	1.7	22.0	47.5	28.8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1.8	26.1	48.6	22.5	0.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0	47.8	38.8	7.5	0.0	92.723***
	100만원 대	2.2	21.5	42.5	33.1	0.7	
	200만원 대	0.9	24.0	46.6	27.8	0.7	
	300만원 대	1.7	22.9	46.9	24.6	4.0	
	400만원 대	8.3	54.2	29.2	4.2	4.2	
	500만원 이상	0.0	23.5	29.4	35.3	11.8	

주: 1) +p<0.1, *p<0.05, **p<0.01, ***p<0.001

2) “국내 아동의 놀이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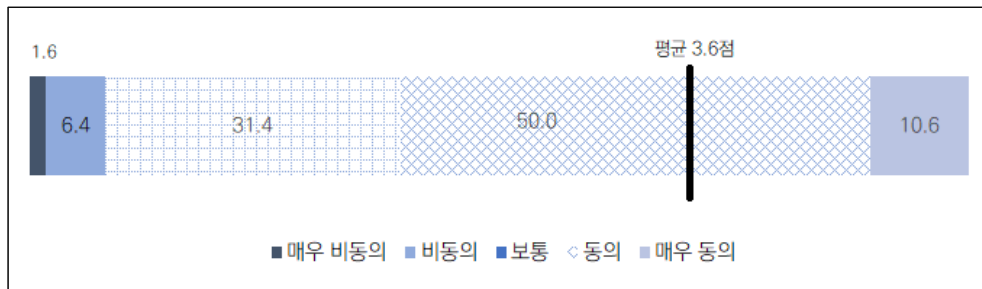
□ 아동의 놀이 인식을 국민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번째로 질문한 ‘아동의 놀권리를 위한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정도는 응답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의 놀권리를 위한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 비율이 60.6%, 보통은 31.4%, 비동의한 비율은 8.0%로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였음.

○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아동의 놀권리 정책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는 평균 3.6점이었음.

[그림 4-63] [국민] 아동의 놀권리 정책 확대에 대한 인식

(단위: 점, %)



주: “아동의 놀권리를 위한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 ‘①매우 비동의 ~ ⑤매우 동의’ 5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아동의 놀권리를 위한 정책 확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거주지역, 소득계층,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시부 거주자의 동의하는 비율(69.1%)이 가장 높았으며, 광역시와 군부 거주자의 동의하는 비율은 각각 52.7%, 53.2%로 비슷한 수준이었음.
-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하층(62.7%)이 가장 동의하는 비율이 높고, 상층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100만원 미만 소득계층(70.2%)이 가장 동의하는 비율이 높고 소득이 올라갈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낮아지다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17〉 [국민] 집단별 아동의 놀 권리 정책 확대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매우 동의 한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χ^2
전체		1.6	6.4	31.4	50.0	10.6	-
거주지역	광역시	1.8	8.0	37.6	41.5	11.2	34.142***
	시부	1.7	4.8	24.5	58.7	10.4	
	군부	0.0	7.6	39.2	44.3	8.9	
소득계층	하층	0.0	10.4	26.9	44.8	17.9	28.719**
	중하층	2.3	5.5	30.2	49.4	12.6	
	중간층	0.6	6.6	33.5	52.0	7.2	
	중상(상)층	6.0	6.0	28.4	44.8	14.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3.0	26.9	64.2	6.0	33.721*
	100만원 대	1.5	4.7	32.7	50.2	10.9	
	200만원 대	0.7	7.5	31.5	51.5	8.7	
	300만원 대	3.4	6.9	30.9	44.0	14.9	
	400만원 대	8.3	8.3	41.7	29.2	12.5	
	500만원 이상	2.9	8.8	23.5	47.1	17.6	

주: 1) +p<0.1, *p<0.05, **p<0.01, ***p<0.001

2) “귀하는 우리나라 아동의 놀이 인식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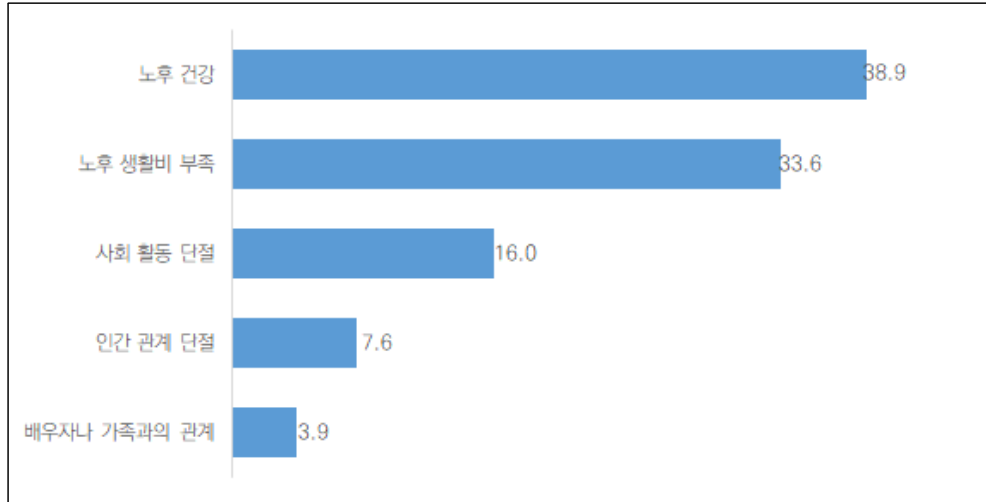
□ 다가올 노후생활에 있어서 국민은 ‘노후 건강’(38.9%)이 가장 염려된다고 응답하여, 건강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노후 생활비 부족’(33.6%)에 대한 응답률이 다른 항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아,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한 염려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다음으로는 ‘사회활동 단절’(16.0%), ‘인간관계 단절’(7.6%), ‘배우자나 가족과의 관계’(3.9%) 순이었음.

[그림 4-64] [국민] 노후 생활에 있어 가장 염려되는 부분

(단위: %)



주: “귀하는 다가올 노후생활에 있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노후생활에 있어 염려되는 부분은 가구원 수, 거주 지역, 혼인상태,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 1인 가구의 경우 ‘노후 건강’(58.4%)을 염려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 가족의 돌봄이 제공 되지 않은 단독가구, 특히 전체의 약 20%에 이르는 노인 단독 가구(정경희 외, 2017)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 별거/사별/이혼 가구에서도 ‘노후 건강’(52.5%)을 가장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 300만원 대, 500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노후 건강’(각각 48.6%, 64.7%)을 가장 염려하고 있었음.
- ‘노후 생활비 부족’에 대해서는 군부 거주자의 경우(48.1%),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400만원 대(41.7%) 소득을 가진 국민이 가장 염려하고 있었음.
- 월평균 가구소득은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다른 항목에 비해 ‘노후 건강’(64.7%)을 염려하고 있었으며, 100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노후 생활비 부족’(28.4%)을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더 염려하고 있었음.

〈표 4-18〉 [국민] 노후 생활에 있어 가장 염려되는 부분

(단위: 명, %)

구분		노후 건강	노후 생활비 부족	사회 활동 단절	인간 관계 단절	배우자나 가족과의 관계	X ²
전체		38.9	33.6	16.0	7.6	3.9	-
가구원수	1명	58.4	22.1	11.7	6.5	1.3	21.791*
	2명	38.1	36.9	14.8	5.7	4.5	
	3명	33.6	32.5	19.9	9.4	4.7	
	4명 이상	39.1	34.9	14.9	7.4	3.6	
거주 지역	광역시	38.5	30.5	16.6	9.1	5.2	19.215*
	시부	39.0	34.0	16.4	7.3	3.3	
	군부	40.5	48.1	10.1	1.3	0.0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38.0	33.1	17.0	7.0	5.0	16.804*
	별거/사별/이혼	52.5	25.4	10.2	10.2	1.7	
	미혼 (미혼 부·모 포함)	38.3	37.4	14.4	9.0	0.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5.4	28.4	17.9	20.9	7.5	70.553***
	100만원 대	40.7	34.5	16.4	6.5	1.8	
	200만원 대	34.4	34.6	19.3	8.5	3.3	
	300만원 대	48.6	34.3	8.6	3.4	5.1	
	400만원 대	29.2	41.7	12.5	0.0	16.7	
	500만원 이상	64.7	14.7	8.8	5.9	5.9	

주: 1) +p<0.1, *p<0.05, **p<0.01, ***p<0.001

2) “귀하는 다가올 노후생활에 있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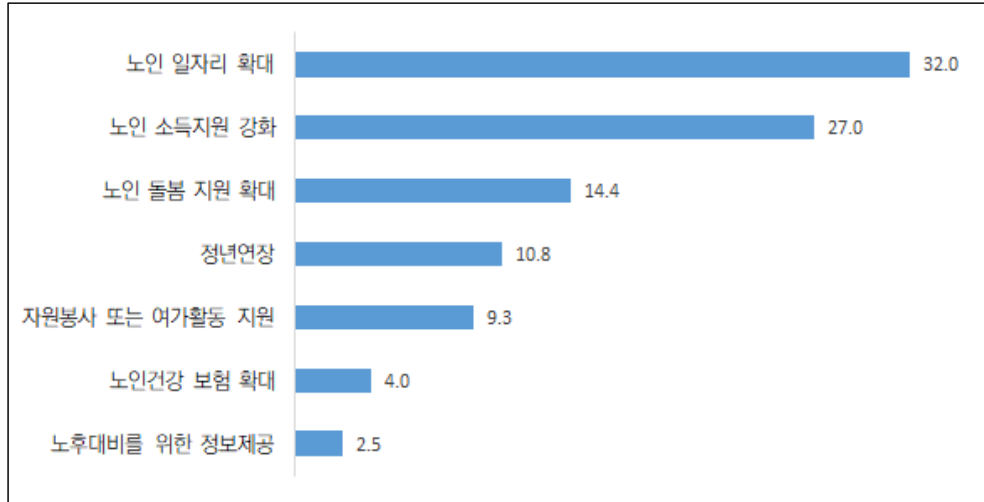
□ 정부는 노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 국민은 ‘노인 일자리 확대’(32.0%)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노인 소득지원 강화’(27.0%)에 대한 응답 비율이 역시 높게 나타나, 국민은 노인의 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고령화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음으로는 ‘노인 돌봄 지원 확대’(14.4%), ‘정년 연장’(10.8%),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9.3%), ‘노인건강 보험 확대’(4.0%), ‘노후 대비를 위한 정보 제공’(2.5%) 순으로 나타남.

[그림 4-65] [국민]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단위: %)



주: “귀하는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고령화 대응 정책은 가구원 수, 거주지역, 소득수준 등 집단별로 다양한 접근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1인 가구의 경우, ‘노인 소득지원 강화’(41.6%)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2~4명인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 확대’(각각 31.8%, 36.8%, 31.1%)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100만원대~400만원대의 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5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의 경우 ‘노인 소득지원 강화’(41.2%)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음.
- 군부 지역 거주자는 ‘노인 돌봄 지원 확대’(32.9%)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데 반해 시부와 광역시 거주자는 ‘노인 일자리 확대’(각각 30.3%, 34.0%)가 가장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았음.

[그림 4-66] [국민] 집단별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단위: %)

구분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 소득 지원 강화	노인 돌봄 지원 확대	정년 연장	자원 봉사 또는 여가 활동 지원	노인 건강 보험 확대	노후 대비를 위한 정보제공	X ²
전체		32.0	27.0	14.4	10.8	9.3	4.0	2.5	-
가구원수	1명	20.8	41.6	19.5	7.8	9.1	1.3	0.0	30.629*
	2명	31.8	22.2	17.0	9.1	10.2	5.7	4.0	
	3명	36.8	26.7	10.8	8.3	10.1	4.3	2.9	
	4명 이상	31.1	26.6	14.7	13.4	8.5	3.6	2.1	
거주지역	광역시	30.3	28.5	11.4	12.5	10.9	3.9	2.5	47.200***
	시부	34.0	27.8	14.1	10.0	8.5	2.9	2.7	
	군부	29.1	13.9	32.9	6.3	5.1	11.4	1.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7.3	25.4	7.5	10.4	13.4	3.0	3.0	58.362**
	100만원 대	37.8	26.5	13.8	8.0	10.5	1.8	1.5	
	200만원 대	27.5	27.5	15.8	11.3	9.2	6.4	2.4	
	300만원 대	34.3	26.3	14.9	14.9	5.1	2.3	2.3	
	400만원 대	25.0	12.5	12.5	12.5	16.7	4.2	16.7	
	500만원 이상	23.5	41.2	14.7	5.9	8.8	2.9	2.9	

주: “귀하는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가 있지만, 기존 수행된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의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2012년, 2014년, 2015년 조사 모두 ‘은퇴 후 취업·창업 지원’(각각 48.0%, 37.0%, 38.0%)이 노후 지원 정책방안으로 선호되었으나, 2016년에는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33.0%)이 약간 높게 나타남.
- 2019년 역시 이와 유사하게 ‘노인 일자리 지원’(32.0%), ‘노인 소득지원 강화’(27.0%)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19〉 [국민] 연도별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단위: %)

구분		1순위
2012년	은퇴 후 취업·창업 지원	48.0
	노인소득지원	29.0
	자원봉사·여가활동 지원	3.0
	노인 주거 시설 확충	3.0
	장기요양 등 의료서비스 지원	10.0
	노인 대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7.0
	합계	100.0
2014년	은퇴 후 취업·창업 지원	37.0
	노인소득지원	24.0
	자원봉사·여가활동 지원	6.0
	치매·독거·학대노인 돌봄 강화	16.0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	11.0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	6.0
	기타	0.0
	합계	100.0
2015년	은퇴 후 취업·창업 지원	38.0
	노인소득지원	27.0
	자원봉사·여가활동 지원	8.0
	치매·독거·학대노인 돌봄 강화	10.0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	11.0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	6.0
	기타	0.0
	합계	100.0
2016년	은퇴 후 취업·창업 지원	26.0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33.0
	자원봉사·여가활동 지원	8.0
	치매·독거·학대노인 돌봄 강화	6.0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	18.0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7.0
	노후대비를 위한 정보제공	2.0
	합계	100.0
2018년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교육, 훈련 등)	24.0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24.0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	9.0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17.0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11.0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인하)	7.0
	노후대비를 위한 정보 제공	5.0
	기타	3.0
	합계	100.0

구분		1순위
2019년	노인 일자리 확대	32.0
	노인 소득지원 강화	27.0
	노인 돌봄 지원 확대	14.4
	정년연장	10.8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	9.3
	노인건강 보험 확대	4.0
	노후대비를 위한 정보제공	2.5
	합계	100.0

자료: 1) 김태완 외(2012), 김미곤 외(2014), 김미곤 외(2015), 김미곤 외(2016), 김미곤 외(2018).

2)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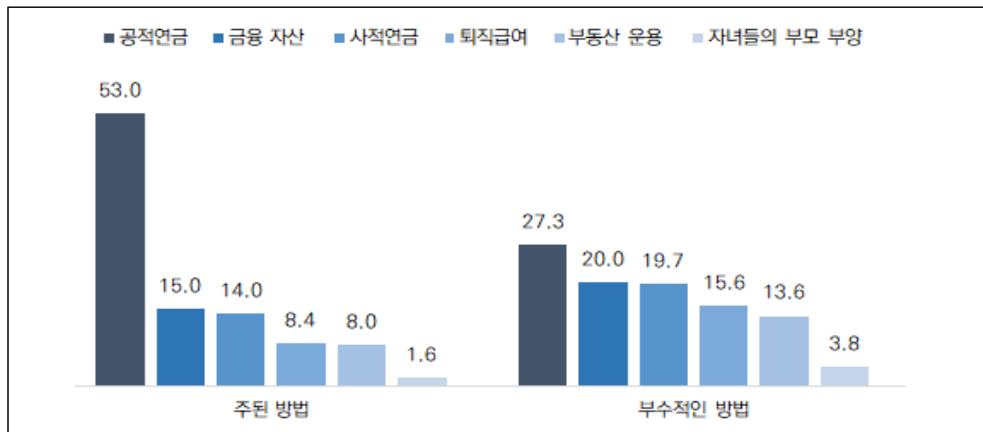
□ 국민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주된 방법으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공적연금'(53.0%)을 선택했으며, 부수적인 방법으로서도 응답자의 27.3%가 공적연금을 선택함.

○ 이는 국민이 노후 준비 방법으로서 공적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반면 부수적인 방법으로는 '금융자산'(20%), '사적연금'(19.7%)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노후 준비를 위해 부수적으로는 사적자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음

[그림 4-67] [국민] 노후 준비방법 선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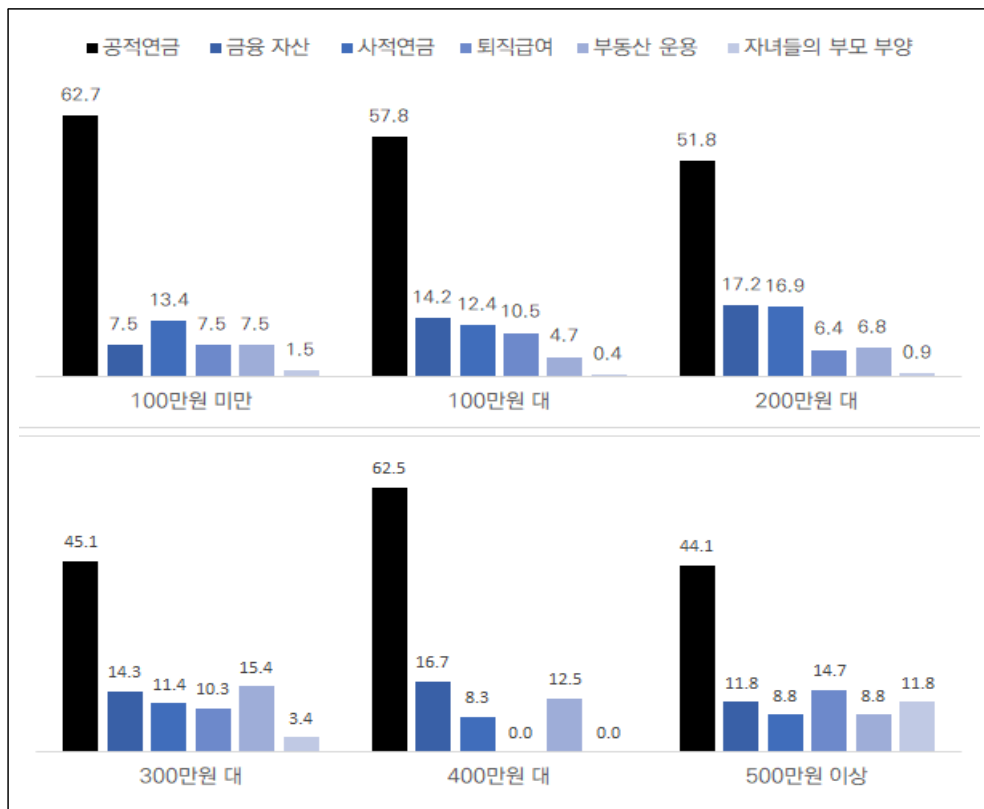
주: “귀하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은 소득계층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우선순위를 보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적연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00만원 미만과 400만원 대 소득계층에서는 응답 비율이 62.7%, 62.5%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그림 4-68] [국민] 월평균 가구 소득별 노후 준비방법 선호(주된 방법)

(단위: %)



주: “귀하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문항에 대해서 국민은 대부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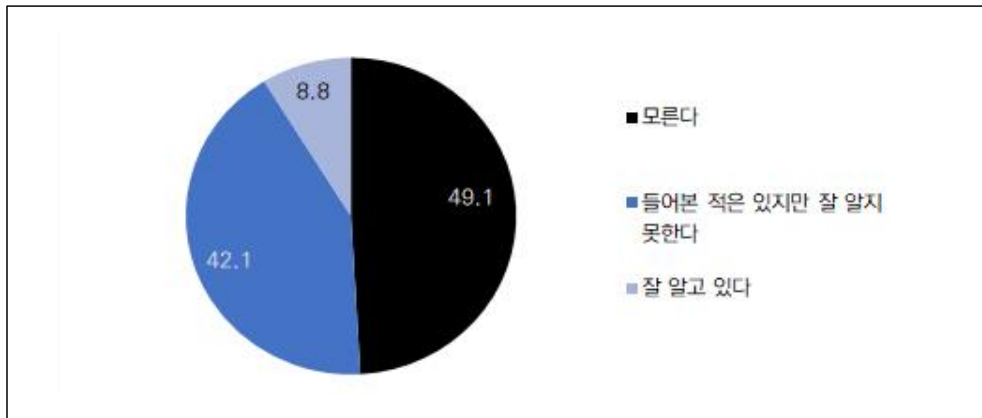
○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49.1%,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42.1%로 나타나, 대부분의 국민이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 잘 알고 있는 경우는 8.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정책 홍보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69] [국민]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인지 여부

(단위: %)



주: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인지여부는 연령, 혼인상태,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 연령이 높을수록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군부지역 거주자인 경우 인지 비율이 더 높았음. 이는 군부지역에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수혜할 노인의 비율이 높은 것에 따른 결과로 추측할 수 있음.
-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미혼일 경우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 모르는 비율이 높았음(59.9%).
- 400만원 대(66.7%), 500만원 대(52.9%)의 고소득층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00만원 미만의 경우 잘 알고 있는 비율(37.3%)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20〉 [국민] 집단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모른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잘 알고 있다	χ^2
전체		49.1	42.1	8.8	-
성별	남	50.0	41.5	8.5	0.362
	여	48.2	42.7	9.1	
연령	만 19-29세	60.6	34.1	5.3	21.418**
	만 30-39세	46.0	48.3	5.7	
	만 40-49세	47.2	45.4	7.4	
	만 50-59세	44.9	41.9	13.2	
	만 60세 이상	48.8	40.4	10.8	
가구원수	1명	46.8	42.9	10.4	15.820*
	2명	50.6	35.8	13.6	
	3명	44.0	49.8	6.1	
	4명 이상	51.9	39.8	8.3	
거주 지역	광역시	51.3	42.4	6.4	16.602**
	시부	47.9	42.9	9.1	
	군부	44.3	35.4	20.3	
소득계층	하층	62.7	32.8	4.5	11.374+
	중하층	46.1	44.3	9.6	
	중간층	48.4	43.3	8.3	
	중상(상)층	58.2	29.9	11.9	
최종 학력	중졸 이하	48.3	39.7	12.1	1.996
	고졸	47.3	43.7	9.0	
	대졸 이상	50.8	40.9	8.3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46.2	44.1	9.7	14.090**
	별거/사별/이혼	44.1	47.5	8.5	
	미혼(미혼 부·모 포함)	59.9	34.2	5.9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48.5	44.8	6.8	16.236*
	임시일용직	39.4	42.4	18.2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40.7	46.9	12.3	
	실업자	52.5	42.4	5.1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53.5	37.6	9.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48.4	44.9	6.7	4.412
	비정규직	42.2	42.2	15.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5.4	37.3	37.3	86.763***
	100만원 대	49.5	44.0	6.5	
	200만원 대	50.4	43.3	6.4	
	300만원 대	51.4	43.4	5.1	
	400만원 대	66.7	20.8	12.5	
	500만원 이상	52.9	29.4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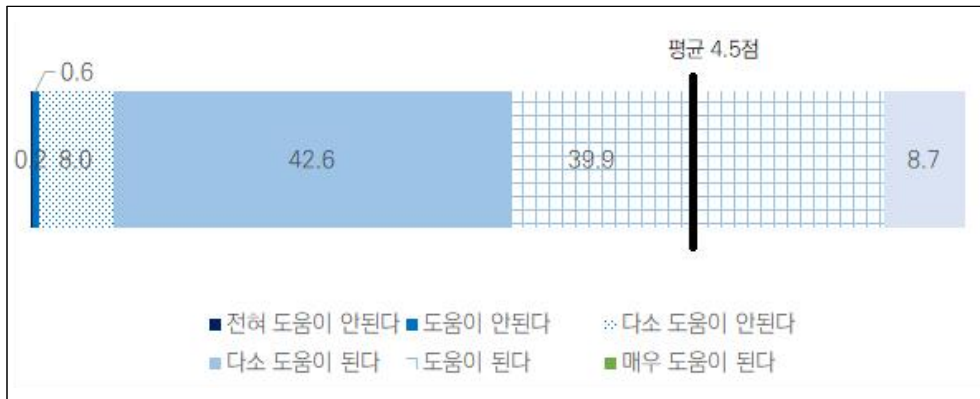
주: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남(91.2% > 8.2%).
-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국민은 91.2%로 대부분의 국민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를 6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4.5점으로, 국민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70] [국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에 대한 인식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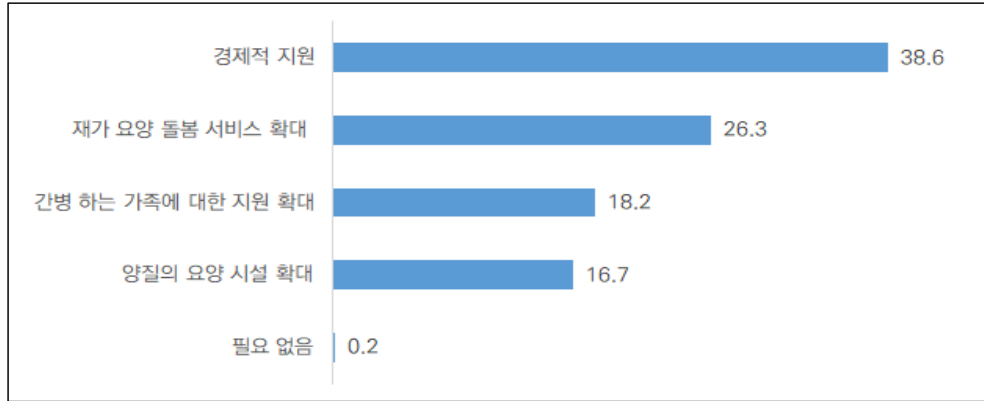
주: “귀하께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①전혀 도움이 안된다 ~ ⑥매우 도움이 된다’ 6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 대해 국민은 ‘경제적 자원’(38.6%)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이는 앞서 질문한 노후 생활에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 노인의 생활비 부족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경제적 여건 개선에 대한 정책적 필요가 높음을 시사함.
- 다음으로는 ‘요양 돌봄 서비스 확대’(26.3%), ‘간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18.2%), ‘양질의 요양시설 확대’(16.7%) 순이었음.

[그림 4-71] [국민]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때 필요한 정부의 지원 선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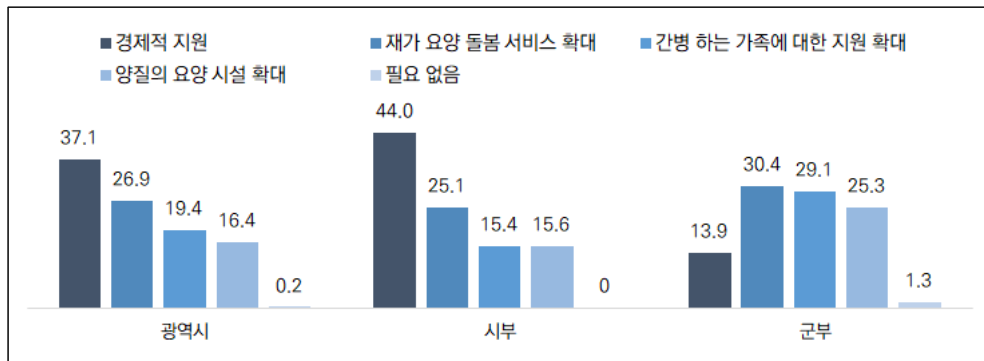


주: “귀하는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때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때, 정부의 지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이 광역시, 시부인 경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각각 37.1%, 44.0%)고 응답한 반면, 군부 거주자의 경우 ‘재가 요양돌봄 서비스 확대’(30.4%), ‘간병 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29.1%)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이는 상대적으로 노인 돌봄을 위한 인프라가 미흡한 군부의 경우, 경제적인 지원 보다는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의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그림 4-72] [국민] 지역별 노인을 부양할 때 필요한 정부의 지원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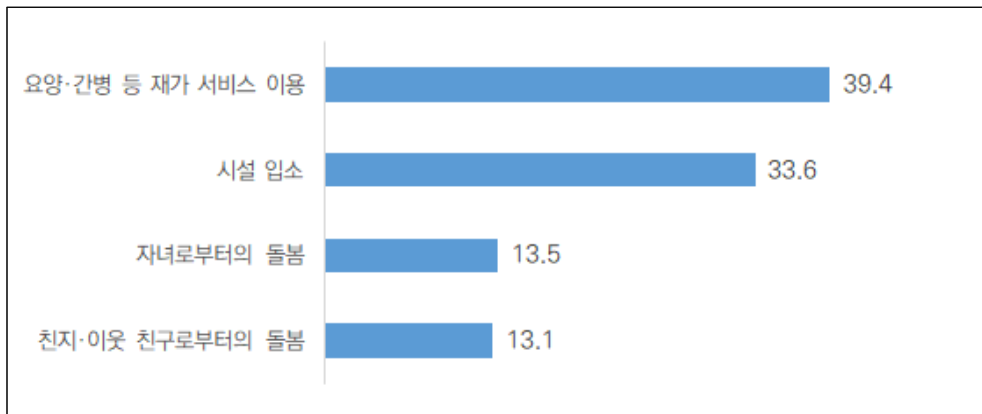


주: “귀하는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때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노인이 되어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질 경우 생활 계획에 대해, 국민은 가족 및 지인의 돌봄보다는 재가 서비스, 시설 입소 등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요양간병 등 ‘재가 서비스 이용’(39.4%)과 ‘시설입소’(33.6%)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자녀로부터의 돌봄’(13.5%)과 ‘친지·이웃·친구로부터의 돌봄’(13.1%)이라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았음.
- 이는 국민이 노인 돌봄에 대해 가족 보다는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임.

[그림 4-73] [국민] 노인이 되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의 생활 계획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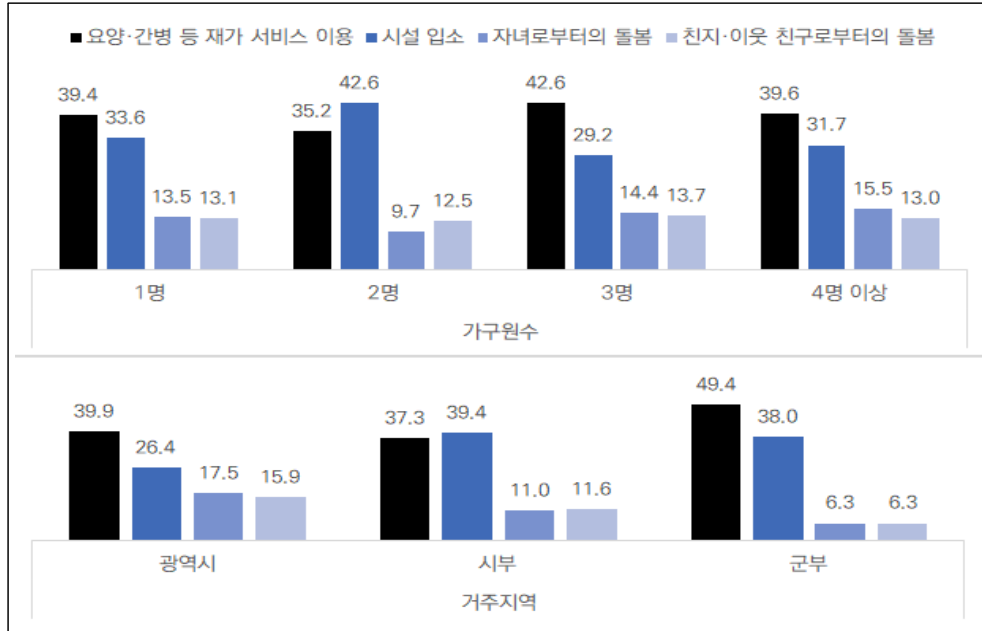


주: “귀하는 노인이 되어 혼자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질 경우, 어떻게 생활하실 계획이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노인이 되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의 계획에 대한 응답은 가구원 수,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군부에 거주할 경우, 가구원이 3명일 경우 ‘요양·간병 등 재가 서비스 이용’을 더 필요로 하였음(각각 49.4%, 42.6%).
 - 시부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시설 입소’를 더 필요로 하였으며, 가구원이 2명인 경우에도 ‘시설 입소’를 다른 자원에 비해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각각 39.5%, 42.6%).

[그림 4-74] [국민] 집단별 노인이 되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의 생활 계획

(단위: %)



주: “귀하는 노인이 되어 혼자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질 경우, 어떻게 생활하실 계획이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나. 인구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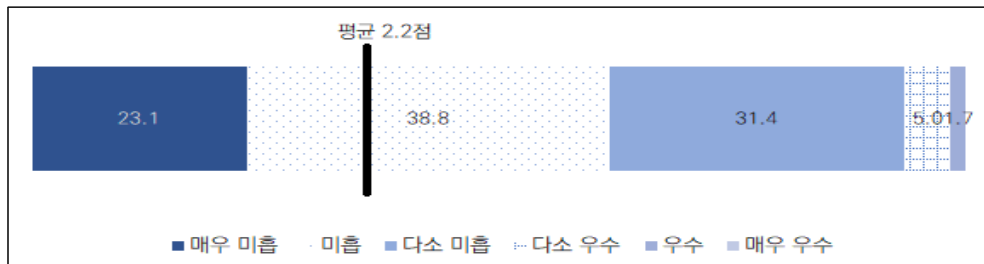
□ 전문가는 지난 3년간(2017-2019)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하였음.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해 미흡(38.8%), 다소 미흡(31.4%), 매우 미흡(23.1%)하다고 평가하여,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93.3%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는 6.7%에 그침.

○ 이를 6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균 2.2점으로 나타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75] [전문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 점,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지난 3년간(2017-2019)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①매우 미흡~⑥매우 우수’ 6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전문가는 정부가 ‘아동 돌봄 지원’(27.3%), ‘고용 문제 해결’(23.1%)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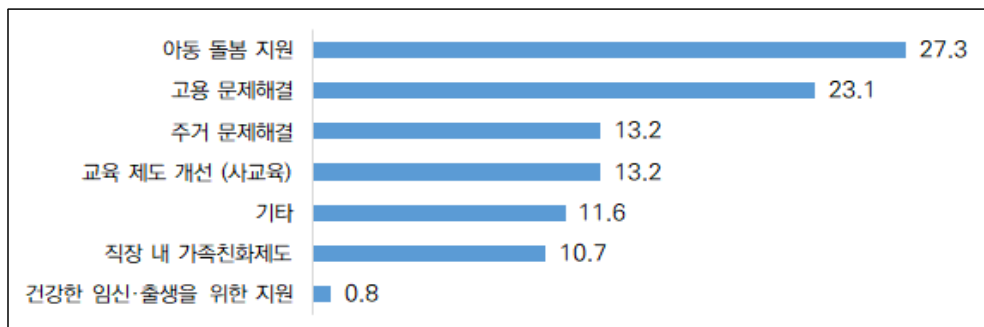
○ 이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행한 기존의 선행연구(이혁우, 2016)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보육·육아 교육 지원, 고용문제 해결(정규직 전환, 임금격차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임.

○ 다음으로는 ‘주거문제 해결’(13.2%), ‘교육제도 개선’(13.2%), ‘기타’(11.6%), ‘직장 내 가족 친화제도 확대’(10.7%) 순이었음.

○ 기타 응답으로는 사회전반의 불평등/불안정 완화, 육아휴직 외 노동시간 축소, 평등한 가정 문화 확대 등이 제시되었음.

[그림 4-76] [전문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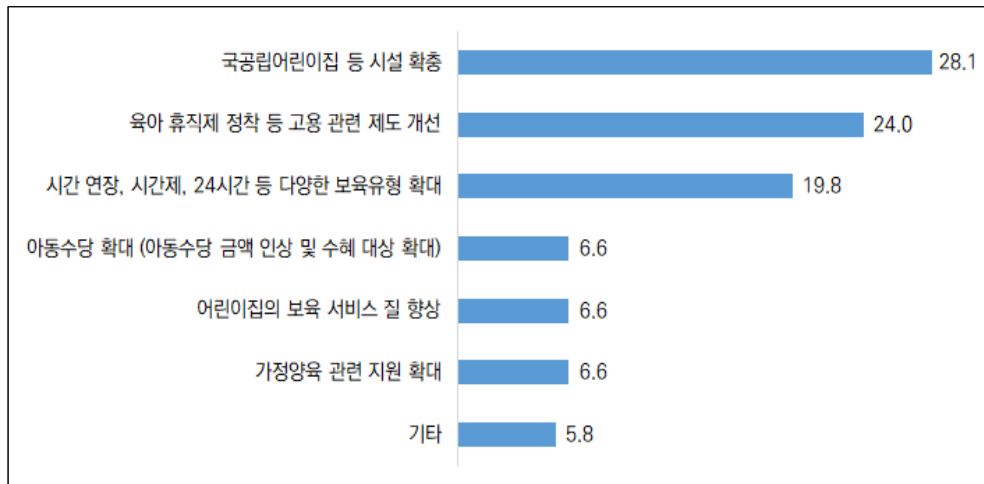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가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육아지원정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28.1%)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음.
- 2018년에 수행된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김미곤 외, 2018. p.179)에서도 전문가는 아동 돌봄 분야 우선 정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47.0%)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음.
- 다음으로는 ‘육아 휴직제 정착 등 고용관련 제도 개선’(24.0%), ‘시간 연장, 시간제, 24시간 등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19.8%)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음.
- 앞서 언급한 이혁우(2016)의 연구에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돌봄 지원체계 강화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정책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그림 4-77] [전문가] 육아지원정책 방향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가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육아지원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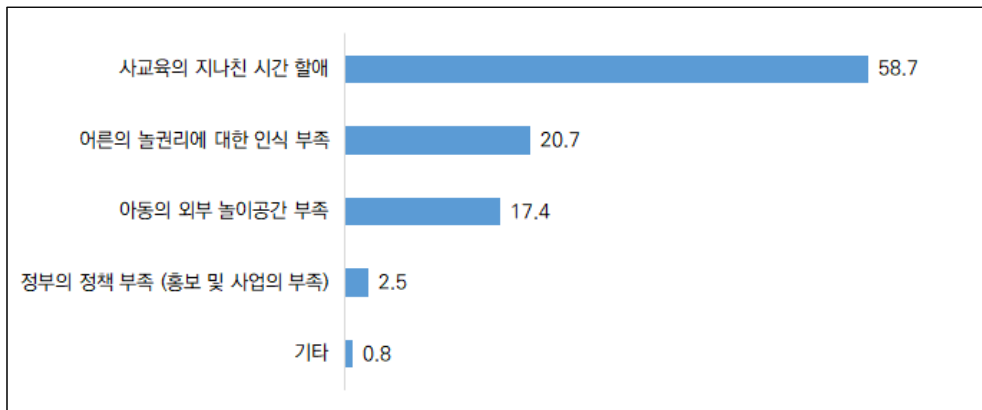
□ 전문가는 아동의 놀이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사교육의 지나친 시간 할애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았음.

○ 아동의 놀이권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문가는 ‘사교육의 지나친 시간 할애’(58.7%)가 이러한 아동의 놀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다음으로는 ‘어른의 놀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20.7%), ‘아동의 외부 놀이공간 부족’(17.4%), ‘정부의 정책 부족’(2.5%) 순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4-78] [전문가] 아동의 놀이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아동의 놀이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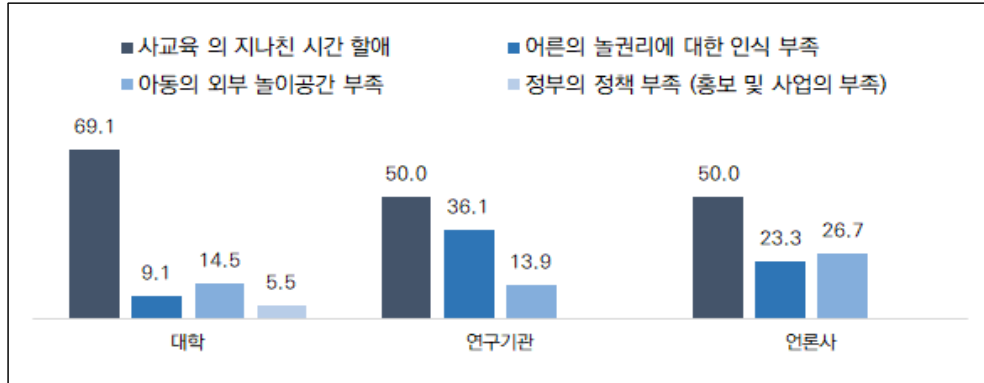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아동의 놀이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은 전문가 소속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 대학 소속의 전문가는 아동의 놀이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사교육의 지나친 시간 할애’(69.1%)라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 반면, 연구기관과 언론사 소속 전문가는 과반이 ‘사교육의 지난친 할애’라고 응답하면서도 ‘어른의 놀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36.1%), ‘아동의 외부 놀이 공간 부족’(26.7%)을 큰 이유로 인식하고 있었음.

[그림 4-79] [전문가] 소속별 아동의 놀이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아동의 놀이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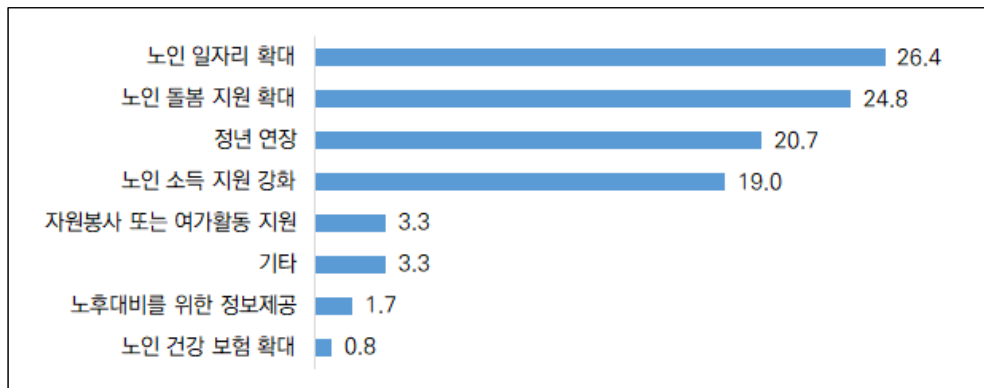
□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노일 일자리 확대’(26.4%), ‘노인 돌봄 지원 확대’(24.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다음으로는 ‘정년 연장’(20.7%), ‘노인 소득 지원 강화’(19.0%),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3.3%), ‘노후대비를 위한 정보 제공’(1.7%) 순이었음.

○ 기타 응답값(3.3%)으로는 노인보건 의료 전달체계 확립, 노인보건법 제정 등 노인 보건과 관련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그림 4-80] [전문가]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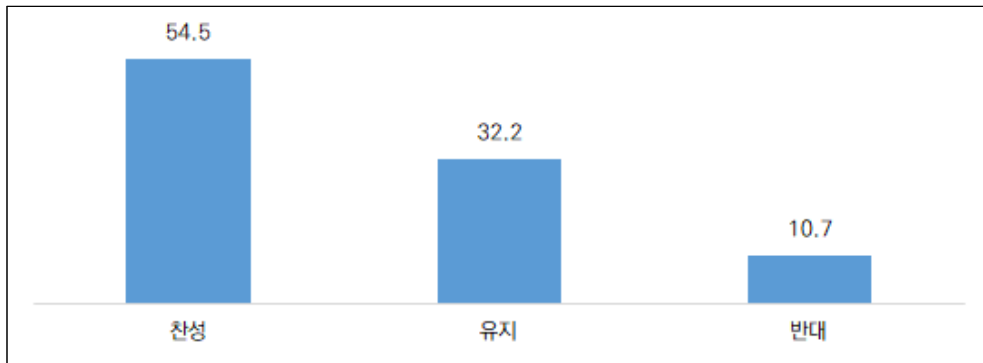
□ 기초연금의 확대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한 대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과반 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연금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54.5%,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32.3%, 반대하는 응답 비율이 10.7%로 나타남.

○ 기타 의견(2.6%)으로는 대상을 축소하 인상,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지원, 보편적 소득보장제도 정착화가 제시되었음.

[그림 4-81] [전문가] 기초연금 확대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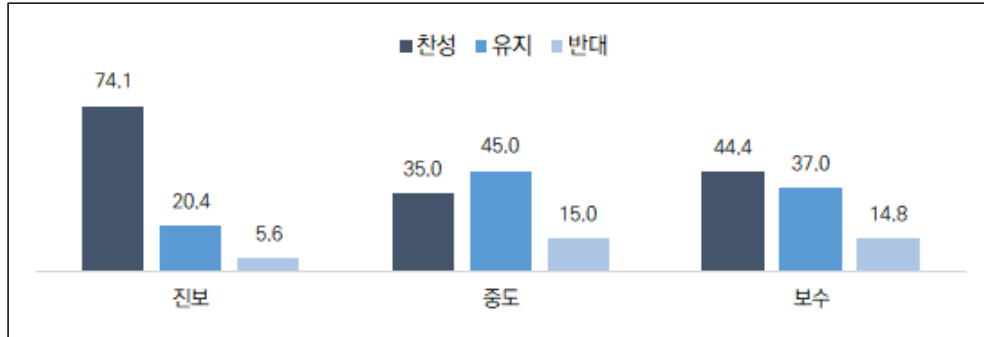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기초연금의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기초연금의 확대에 대한 생각은 전문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진보 성향을 가진 전문가의 경우 기초연금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74.1%로 가장 높았고, 보수 성향 전문가는 44.4%가 확대에 찬성하고, 37.0%가 유지, 14.8%가 확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도 성향 전문가는 현상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5.0%로 가장 높았음.

[그림 4-82] [전문가] 정치적 성향별 기초연금 확대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기초연금의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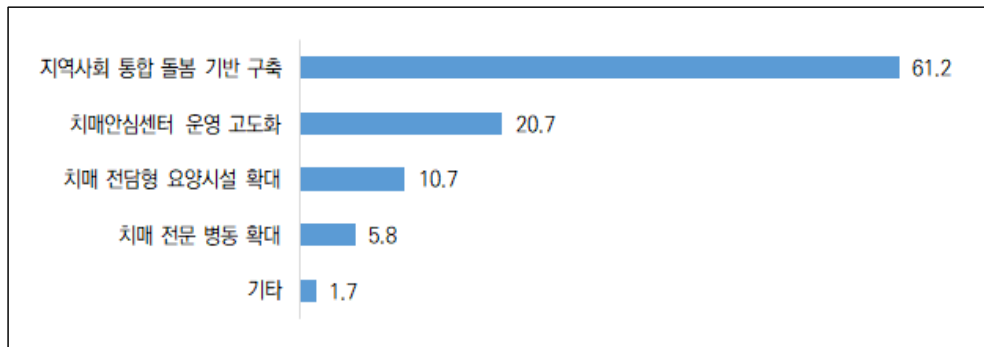
□ 전문가는 노인 돌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기반 구축(61.2%)’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는 2019년 6월부터 지역자율형 통합 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문가의 노인돌봄을 위한 필요 서비스 인식은 위와 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일치함.

[그림 4-83] [전문가]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방향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노인 돌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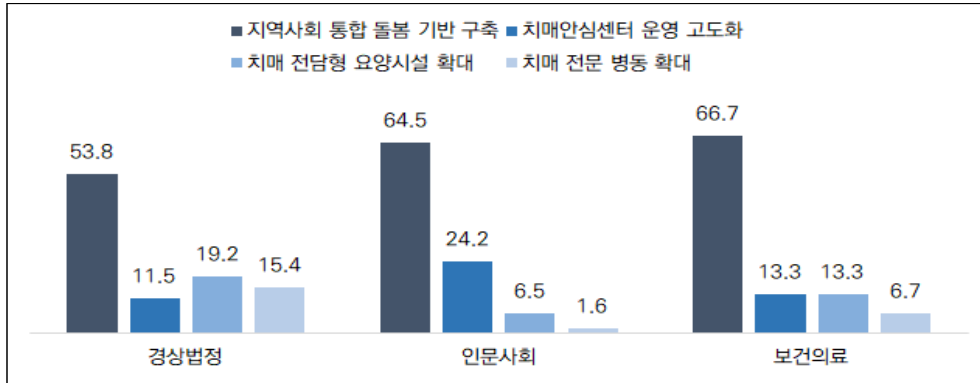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노인 돌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문가 전공에 따라 유의미한 의견 차이가 나타남.

- 공통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가장 중요시 하였으나, 보건의료 전공자의 경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타 전공자에 비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66.7%), 인문사회 전공자의 경우에는 ‘치매 안심센터 운영 고도화’(25.2%)를, 경상법정 전공자는 ‘치매 전담형 요양 시설 확대’(19.2%)를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음.

[그림 4-84] [전문가] 전공별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방향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노인 돌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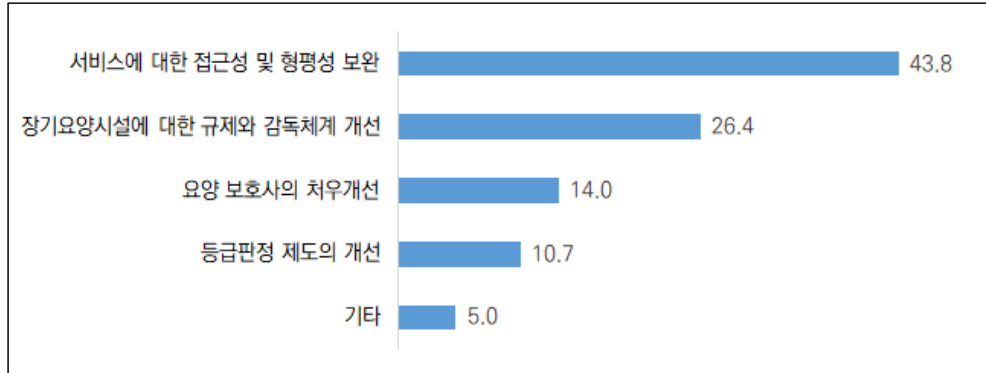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어 2019년 기준 정책 도입 11년째를 맞이하였음. 이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전문가가 생각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형평성 보완’(43.8%)으로 나타남.

○ 전문가가 생각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급한 과제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형평성 보완’(43.8%),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규제와 감독체계 개선’(26.4%), ‘요양 보호사의 처우 개선’(14.0%), ‘등급판정 제도의 개선’(10.7%) 순이었음.

○ 기타 응답(5.0%)으로는 방문간호사의 전문화, 양질의 시설 확충 등 서비스의 질적 측면의 개선을 제시한 경우가 있었음.

[그림 4-85] [전문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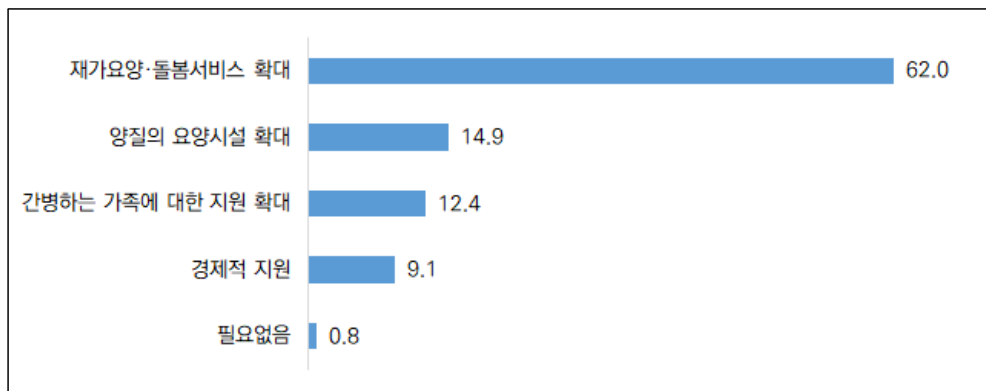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는 가족이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재가요양·돌봄서비스 확대’(62.0%)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앞서 지역사회통합 돌봄 기반 구축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임.

○ 다음으로는 ‘양질의 요양시설 확대’(14.9%), ‘간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12.4%), ‘경제적 지원’(9.1%) 순이었음.

[그림 4-86] [전문가]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때 필요한 정부의 지원 방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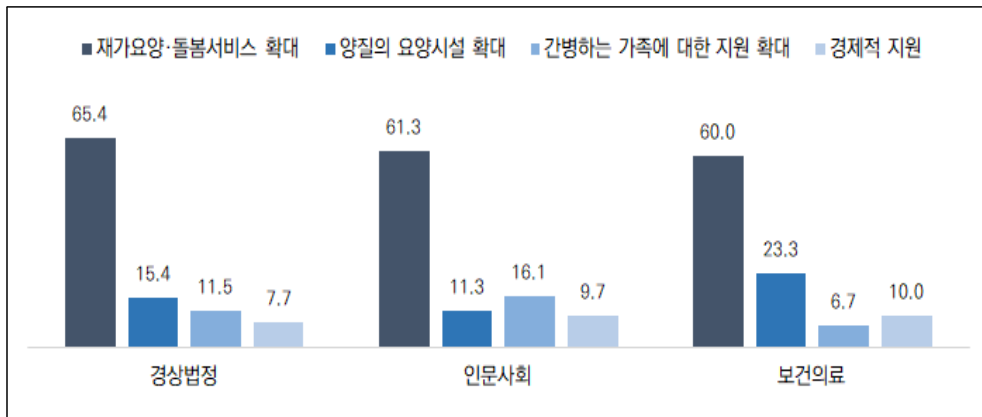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때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때 필요한 정부의 지원 방향은 전문가의 전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 경상법정 전공자는 ‘재가요양·돌봄서비스 확대’(65.4%)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보건의료 전공자는 ‘양질의 요양시설 확대’(23.3%)에 대해 타 전공자에 비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그림 4-87] [전문가] 전공별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때 필요한 정부의 지원 방향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때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다. 인구정책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의 인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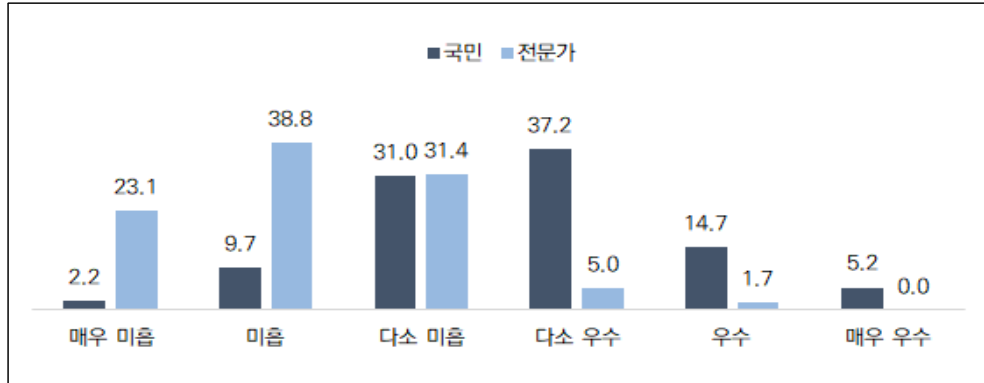
□ 국민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전문가는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음.

○ 국민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57.1%가 우수하다고 평가한데 반해, 전문가는 93.3%가 미흡하다고 평가하였음.

○ 이를 6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국민은 평균 3.7점, 전문가는 2.2점으로 평가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평가결과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88] [국민-전문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미흡~⑥매우 우수’로 6점 척도로 측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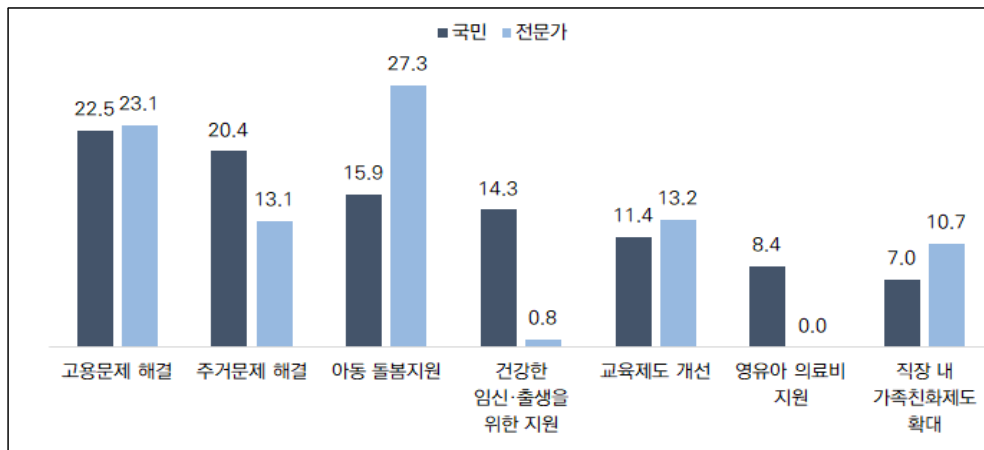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할 부분에 대해 국민은 ‘고용문제 해결’(22.5%)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전문가는 고용문제 해결보다 ‘아동 돌봄지원’이 저출산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7.3%로 높게 나타남.

○ 다만, 전문가의 역시 ‘고용문제 해결’(23.1%)을 ‘아동 돌봄지원’ 다음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그림 4-89] [국민-전문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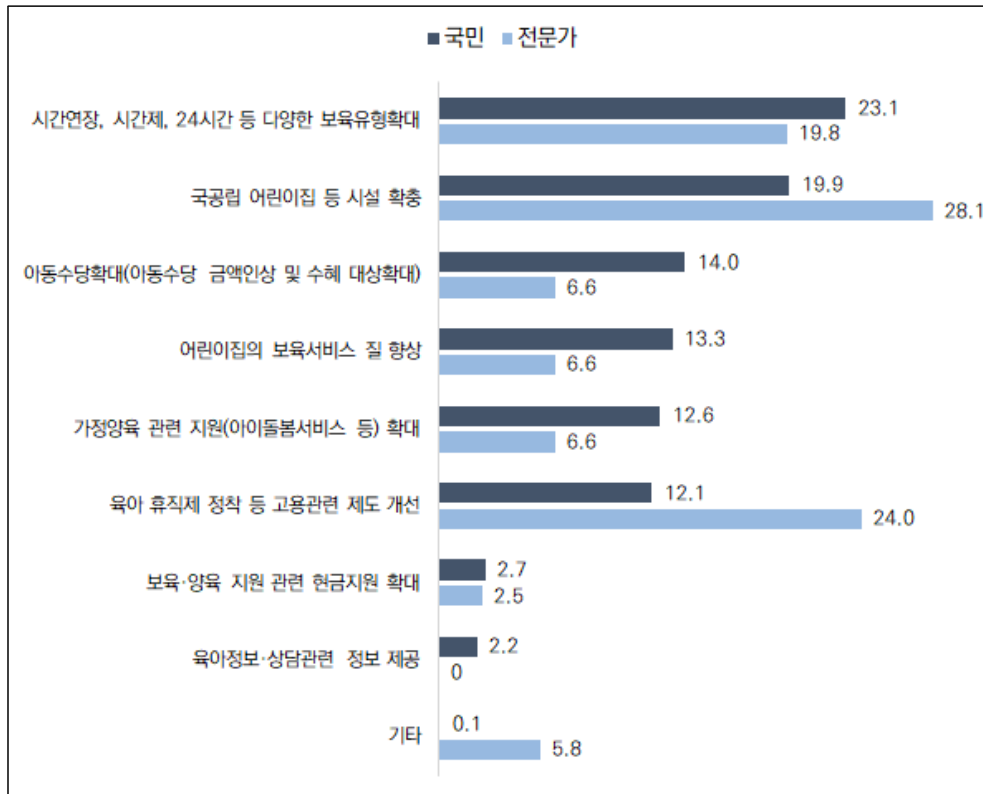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국민과 전문가 모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한 육아지원정책은 ‘시간 연장 및 시간제, 24시간 등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각각 23.1%, 19.8%), ‘국공립 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각각 19.9%, 28.1%) 등으로 나타남.

○ 국민은 ‘시간 연장, 시간제, 24시간 등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23.1%)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 반면, 전문가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28.1%), ‘육아 휴직제 정착 등 고용제도 개선’(24.0%) 등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그림 4-90] [국민-전문가] 육아지원정책 방향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가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육아지원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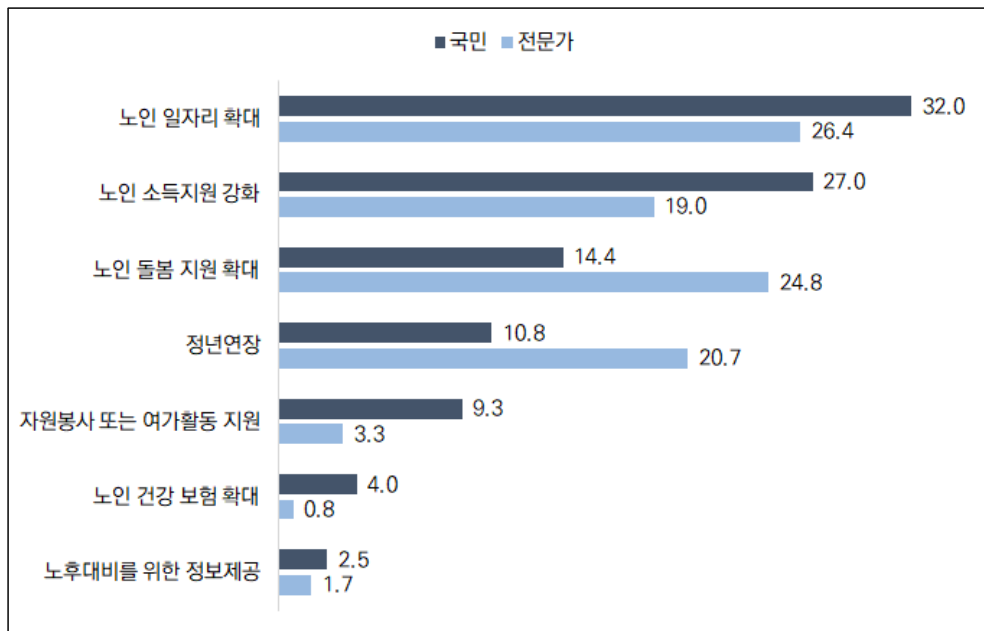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국민과 전문가 모두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확대’(각각 32.0%, 26.4%)에 대한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음.

○ 노인 일자리 확대 다음으로는 국민은 ‘노인 소득지원 강화’(27.0%), 전문가는 ‘노인 돌봄 지원 확대’(24.8%)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그림 4-91] [국민-전문가]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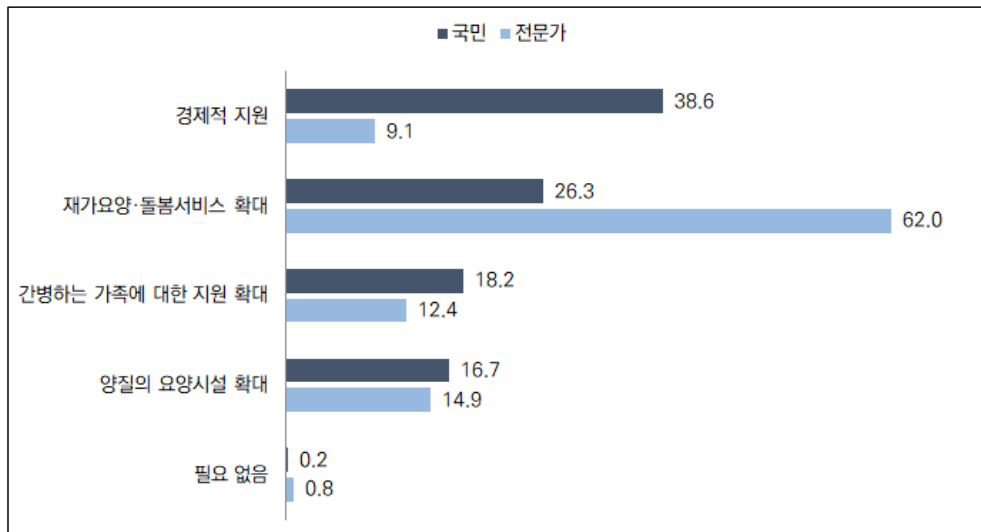
□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때 필요한 지원에 대해 국민은 ‘경제적 지원’(38.6%), 전문가는 ‘재가요양·돌봄서비스 확대’(62.0%)를 가장 필요한 지원이라고 인식하였음.

○ 국민이 생각하는 노인을 부양할 때 필요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38.6%), ‘재가 요양·돌봄 서비스 확대’(26.3%), ‘간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18.2%), ‘양질의 요양시설 확대’(16.7%) 순이었음.

○ 전문가는 ‘재가요양·돌봄서비스 확대’(62.0%), ‘양질의 요양시설 확대’(14.9%), ‘간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12.4%) 순이었음.

[그림 4-92] [국민-전문가]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때 필요한 지원 선호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때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제3절 보건의료정책 분야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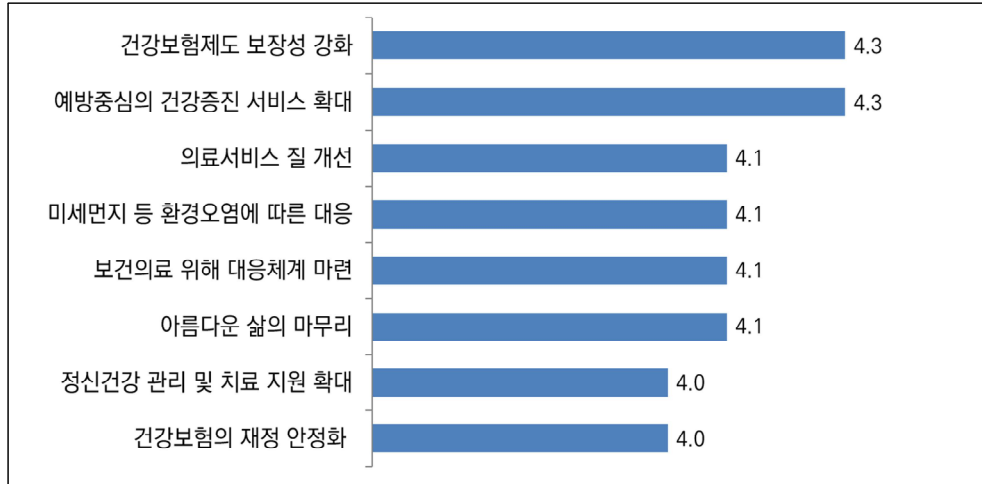
1.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보건의료정책 중에서 국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와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등)’ 정책으로 나타남(6점 만점에 각각 4.3점).

○ 반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와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 확대(자살예방,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등)’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4.0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만족수준이 가장 낮았음.

[그림 4-93] [국민] 보건의료정책별 만족도

(단위: 점)



주: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음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에 대해 ‘① 매우 불만족~⑥매우 만족’ 6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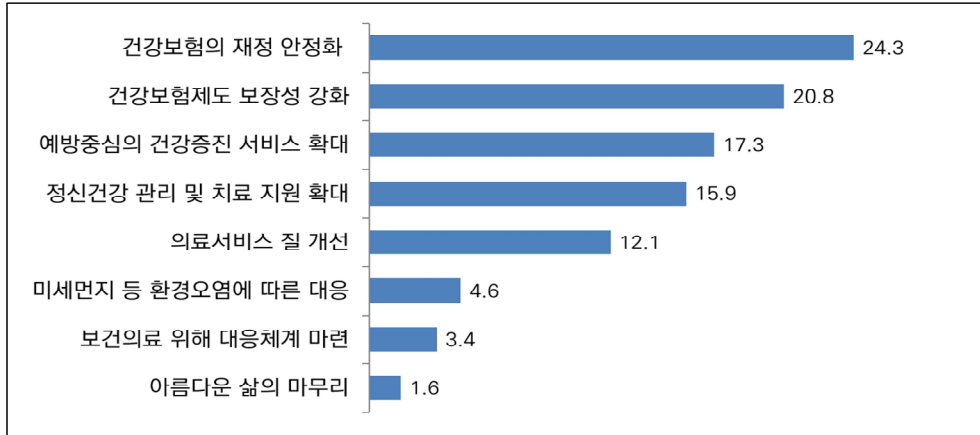
□ 보건의료정책 중 보다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가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웰다잉(well-dying), 연명의료결정제도 등)’가 1.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정책 다음으로는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20.8%,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등)’ 17.3%,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 확대(자살예방,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등)’ 15.9% 순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나 보장성 강화,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민의 정책 욕구가 높게 나타남. 주목할 점은 2018년 조사결과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정책에 대한 욕구가 1.7%로 가장 낮았던 것에 반해(김미곤 외, 2018) 2019년에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정책 욕구가 크게 증대된 것임.

[그림 4-94] [국민]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정책

(단위: %)



주: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보건의료정책 중 보다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국민들의 정책 욕구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가구원수, 거주 지역, 주관적 소득계층,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특히 광역시와 시부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광역시 24.8%, 시부 26.3%)를 강화해야 할 정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군부에 거주하는 경우는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40.5%)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소득계층별로는 중상(상)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하층 26.9%, 중하층 25.4%, 중간층 23.7%)를 가장 강화해야 할 정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중상(상)층은 ‘정신건강 관리 및 증진서비스 확대’(22.4%)를 가장 많이 선택함.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 100만원대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500만원 이상 35.3%, 300만원대 29.7%, 200만원대 26.4%, 400만원대 25.0%)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100만원 미만은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23.9%)를, 100만원대는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29.8%)를 가장 많이 선택함.

〈표 4-21〉 [국민] 집단별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정책

(단위: %)

구분		1	2	3	4	5	6	7	8	χ^2
전체		24.3	20.8	17.3	15.9	12.1	4.6	3.4	1.6	-
성별	남	20.0	24.1	16.0	15.6	13.8	5.1	4.0	1.4	5.815
	여	21.7	24.5	18.6	16.2	10.3	4.0	2.8	1.8	
연령	20대	20.6	27.1	13.5	20.6	10.6	5.3	2.4	0.0	34.342
	30대	14.9	24.7	18.4	20.7	10.3	6.9	2.9	1.1	
	40대	21.8	22.2	19.4	17.1	11.6	2.8	2.3	2.8	
	50대	23.3	23.8	18.9	11.9	11.9	4.8	3.5	1.8	
	60대 이상	22.1	24.4	15.5	11.3	15.5	3.8	5.6	1.9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4.1	20.7	17.2	13.8	19.0	1.7	1.7	1.7	10.540
	고졸	22.0	23.3	17.7	16.1	11.7	3.8	4.3	1.1	
	대졸 이상	19.4	25.6	16.9	15.9	11.7	5.6	2.8	2.0	
가구원수	1명	18.2	24.7	23.4	16.9	13.0	2.6	1.3	0.0	40.371**
	2명	22.7	22.2	19.3	14.2	10.8	4.5	4.5	1.7	
	3명	22.4	23.8	14.8	14.8	14.1	1.8	7.2	1.1	
	4명 이상	19.6	25.3	17.0	17.0	11.3	6.6	1.1	2.1	
거주지역	광역시	17.1	24.8	18.9	18.0	10.7	6.4	2.5	1.6	48.095***
	시부	21.0	26.3	16.2	13.9	13.7	3.7	4.1	1.0	
	군부	40.5	8.9	15.2	16.5	10.1	0.0	3.8	5.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4.9	10.4	23.9	14.9	20.9	3.0	9.0	3.0	104.811***
	100만원대	29.8	19.6	16.7	15.3	12.7	2.9	1.1	1.8	
	200만원대	20.7	26.4	16.5	16.9	11.5	4.7	2.8	0.5	
	300만원대	12.6	29.7	19.4	13.1	11.4	5.7	4.6	3.4	
	400만원대	12.5	25.0	16.7	20.8	4.2	0.0	20.8	0.0	
주관적 소득계층	500만원 이상	8.8	35.3	8.8	20.6	5.9	17.6	0.0	2.9	51.915***
	하층	31.3	26.9	17.9	9.0	11.9	0.0	3.0	0.0	
	중하층	19.6	25.4	18.1	14.1	12.3	3.8	5.5	1.0	
	중간층	21.5	23.7	17.1	17.5	11.5	4.3	2.1	2.3	
	중상(상)층	11.9	19.4	13.4	22.4	14.9	16.4	0.0	1.5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4.8	16.1	19.4	15.8	13.8	5.4	3.1	1.7	29.7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0.3	24.2	12.1	15.2	15.2	3.0	0.0	0.0	
	고용주 및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21.6	21.0	16.0	14.2	14.2	6.8	3.1	3.1	
	실업자	32.2	28.8	8.5	16.9	10.2	0.0	3.4	0.0	
	비경제활동인구	23.3	23.5	17.6	16.6	9.7	3.8	4.1	1.3	
고용 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6.6	24.8	19.0	15.2	14.0	5.5	3.2	1.7	4.011
	비정규직	17.8	28.9	17.8	20.0	13.3	2.2	0.0	0.0	

주: 1) +p<0.1, *p<0.05, ** p<0.01, ***p<0.001

2)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아래의 보건의료정책 중 보다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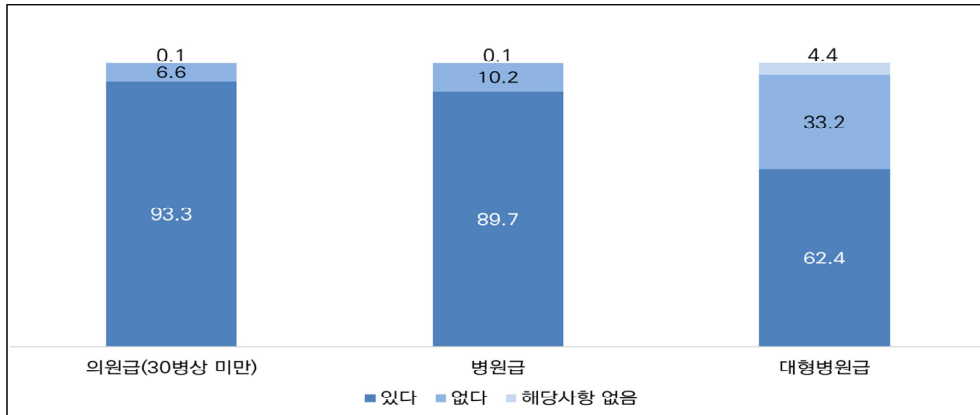
3) 1-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2-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3-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4-정신건강 관리 및 증진서비스 확대, 5-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6-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따른 대응, 7-보건의료 위해 대응체계 마련, 8-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국민은 동네(시·군·구 내)에 믿고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의원급(30병상 미만)’ 93.3%, ‘병원급’ 89.7%, ‘대학 병원급(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 62.4% 순으로 나타남.

[그림 4-95] [국민] 동네(시·군·구 내)에 믿고 갈 수 있는 의료 기관 유무

(단위: %)



주: 1) “귀하는 동네(시·군·구 내)에 믿고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해당사항 없음’은 지역에 해당 의료기관이 없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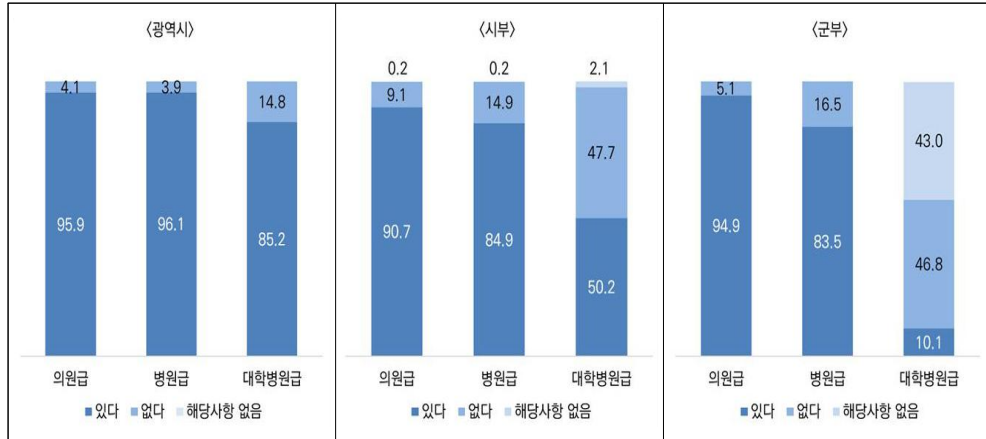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집단별로 동네에 믿고 갈 수 있는 ‘의원급(30병상 미만)’, ‘병원급’, ‘대학병원급 (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 의료기관의 유무를 살펴보면, 거주 지역,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의원급(30병상 미만)’ 의료기관이 있다는 비율은 광역시, 시부, 군부에서 모두 높게 나타남(각각 95.9%, 90.7%, 94.9%). 그러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있다는 비율은 광역시(85.2%)에 비해 시부(50.2%), 군부(10.1%)에서는 급격히 떨어짐.
- 특히 광역시, 시부와 달리 군부에서는 동네에 믿고 갈 수 있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자체가 없다는 응답이 43.0%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군부 지역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열악함을 보여주는데, 대학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지역 상급병원의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나 동네 의원 및 병원급의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림 4-96] [국민] 동네(시·군·구 내)에 믿고 갈 수 있는 의료 기관 유무(거주 지역별)

(단위: %)



주: 1) “귀하는 동네(시·군·구 내)에 믿고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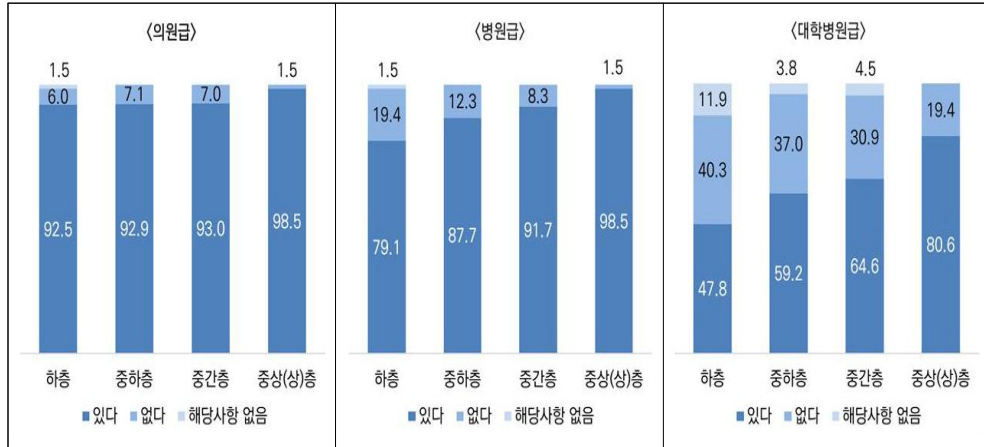
2) ‘해당사항 없음’은 지역에 해당 의료기관이 없음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동네에 믿고 갈 수 있는 ‘의원급(3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유무는 주관적 소득 계층에 따라 중상(상)층(98.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하층(92.5%)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중상(상)층(98.5%)의 경우 믿고 갈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하층(79.1%)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또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중상(상)층(80.6%)에서 가장 높았고, 하층(47.8%)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리고 하층에서는 ‘대학 병원급’ 의료기관 자체가 없다는 응답도 11.9%로 높게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소득계층에 따른 거주 지역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임.

[그림 4-97] [국민] 동네(시·군·구 내)에 믿고 갈 수 있는 의료 기관 유무(주관적 소득계층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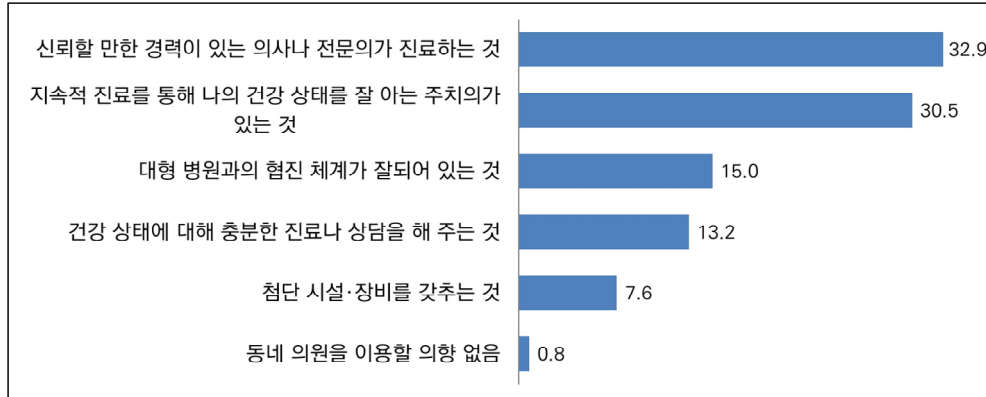


주: “귀하는 동네(시·군·구)에 믿고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국민이 동네 의원(의원급) 이용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1순위)은 ‘신뢰할 만한 경력이 있는 의사나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32.9%)이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 ‘지속적 진료를 통해 나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가 있는 것’(30.5%), ‘대형 병원과의 협진 체계가 잘되어 있는 것’(15.0%), ‘건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진료나 상담을 해 주는 것’(13.2%)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첨단시설·장비를 갖추는 것’(7.6%)이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은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국민은 동네 의원 이용에 있어 첨단시설 및 장비보다는 질 높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그림 4-98] [국민] 동네 의원(의원급) 이용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1순위)

(단위: %)



주: “귀하는 향후 동네 의원(의원급)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중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1순위)”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동네 의원(의원급) 이용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1순위)은 응답자의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소득, 경제활동상태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시부, 광역시와 달리 군부에 거주하는 경우 ‘지속적 진료를 통해 나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가 있는 것’(59.5%)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는 군부 거주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상담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여 주치의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대체로 ‘신뢰할 만한 경력이 있는 의사나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러나 100만원대 계층에서는 ‘지속적 진료를 통해 나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가 있는 것’(35.6%)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또한 경제활동상태에 따라서는 임시일용직, 고용주 및 자영업자, 실업자는 ‘지속적 진료를 통해 나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가 있는 것’(각각 39.4%, 37.7%, 27.1%)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이러한 결과는 군부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낮거나, 경제활동 상태가 취약한 집단에서 ‘지속적 진료를 통해 나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가 있는 것’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줌.

〈표 4-22〉 [국민] 집단별 동네 의원(의원급) 이용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1순위)

(단위: %)

구분		1	2	3	4	5	6	χ^2
전체		30.5	32.9	15.0	13.2	7.6	0.8	-
성별	남	30.6	32.0	15.6	12.3	8.7	0.8	2.821
	여	30.4	33.8	14.4	14.2	6.5	0.8	
연령	20대	30.6	37.1	13.5	10.6	8.2	0.0	19.921
	30대	25.3	33.3	16.1	13.8	9.2	2.3	
	40대	30.1	34.7	14.8	13.4	6.9	0.0	
	50대	31.7	28.6	17.2	13.2	8.8	0.4	
	60대 이상	33.8	31.9	13.1	14.6	5.2	1.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1.0	37.9	15.5	10.3	3.4	1.7	17.339+
	고졸	33.6	32.5	13.5	14.8	5.2	0.4	
	대졸 이상	27.6	32.7	16.3	12.1	10.3	1.0	
가구원수	1명	33.8	33.8	10.4	9.1	9.1	3.9	16.951
	2명	32.4	34.1	13.1	11.9	8.0	0.6	
	3명	28.2	32.1	17.0	14.4	7.2	1.1	
	4명 이상	30.6	32.8	15.3	13.6	7.4	0.2	
거주 지역	광역시	26.2	29.6	17.8	15.3	10.7	0.5	55.329***
	시부	29.7	38.0	13.3	12.0	5.8	1.2	
	군부	59.5	20.3	10.1	8.9	1.3	0.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2.4	37.3	19.4	13.4	7.5	0.0	37.580+
	100만원대	35.6	31.6	11.6	13.5	7.6	0.0	
	200만원대	32.5	33.2	13.9	12.7	6.1	1.6	
	300만원대	24.6	32.0	17.1	14.9	10.9	0.6	
	400만원대	12.5	45.8	33.3	0.0	8.3	0.0	
	500만원 이상	23.5	26.5	23.5	17.6	8.8	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8.4	35.8	16.4	11.9	7.5	0.0	6.196
	중하층	30.2	34.0	15.1	13.1	6.5	1.0	
	중간층	31.3	31.8	14.9	13.6	7.7	0.6	
	중상(상)층	28.4	31.3	13.4	11.9	13.4	1.5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6.8	39.4	14.9	8.5	9.6	0.8	34.88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9.4	12.1	18.2	21.2	9.1	0.0	
	고용주 및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37.7	27.2	13.0	14.2	6.8	1.2	
	실업자	27.1	25.4	22.0	18.6	6.8	0.0	
	비경제활동인구	30.7	32.2	14.6	15.6	6.1	0.8	
고용 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26.5	39.1	15.2	8.7	9.6	0.9	7.204
	비정규직	37.8	22.2	15.6	15.6	8.9	0.0	

주: 1) +p<0.1, *p<0.05, ** p<0.01, ***p<0.001

2) “귀하는 향후 동네 의원(의원급)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중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에 대한 응답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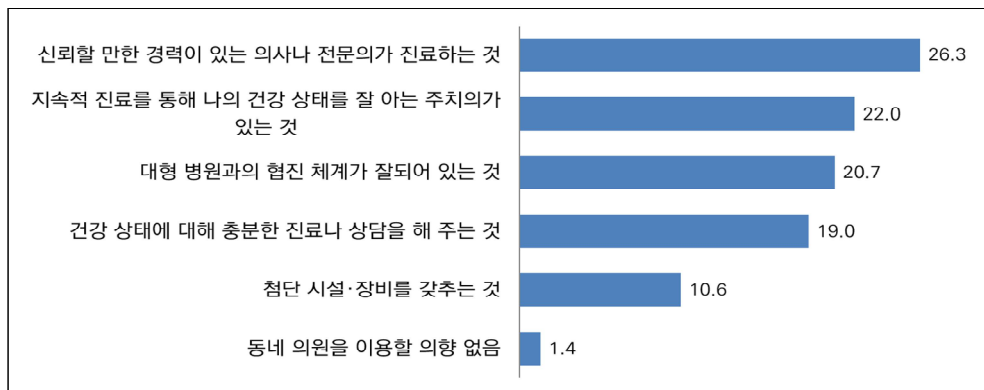
3) 1-지속적 진료를 통해 나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것, 2-신뢰할 만한 경력이 있는 의사나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 3-대형 병원과의 협진 체계가 잘되어 있는 것, 4-건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진료나 상담을 해 주는 것, 5-첨단 시설·장비를 갖추는 것, 6-동네 의원을 이용할 의향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국민은 동네 의원(의원급) 이용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2순위)으로 ‘신뢰할 만한 경력이 있는 의사나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26.3%)을 가장 많이 선택함.
- 1순위와 같이 ‘지속적 진료를 통해 나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가 있는 것’(22.0%) 또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그림 4-99] [국민] 동네 의원(의원급) 이용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2순위)

(단위: %)



주: “귀하는 향후 동네 의원(의원급)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중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2순위)”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응답자 특성별 동네 의원(의원급) 이용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2순위)은 최종학력,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소득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100만원대, 200만원대, 300만원대는 ‘신뢰할 만한 경력이 있는 의사나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각각 24.5%, 27.9%, 25.1%)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100만원 미만, 400만원대, 500만원대는 ‘지속적 진료를 통해 나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가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하층을 제외하고 중하층, 중간층, 중상(상)층에서는 ‘신뢰할 만한 경력이 있는 의사나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각각 23.6%, 29.6%, 25.4%)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하층에서는 ‘지속적 진료를 통해 나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가 있는 것’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23〉 [국민] 집단별 동네 의원(의원급) 이용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2순위)

(단위: %)

구분	1	2	3	4	5	6	χ^2
전체	19.0	26.3	22.0	20.7	10.6	1.4	-
성별	남	17.5	23.9	24.3	21.7	10.9	1.8
	여	20.5	28.9	19.7	19.7	10.2	1.0
연령	20대	17.6	22.9	24.7	23.5	10.0	1.2
	30대	18.4	24.1	19.0	23.0	13.8	1.7
	40대	20.1	30.4	19.6	19.2	8.9	1.9
	50대	15.9	26.1	25.7	19.0	11.5	1.8
	60대 이상	22.7	27.0	20.9	19.9	9.0	0.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2.8	15.8	21.1	29.8	10.5	0.0
	고졸	20.4	28.8	22.0	18.2	9.4	1.1
	대졸 이상	17.2	25.4	22.1	21.9	11.6	1.8
가구원수	1명	18.4	27.6	21.1	22.4	10.5	0.0
	2명	18.9	22.9	20.6	25.7	10.9	1.1
	3명	20.7	26.1	23.2	14.5	13.4	2.2
	4명 이상	18.2	27.6	22.0	22.2	8.8	1.3
거주 지역	광역시	19.9	24.0	21.7	23.1	9.1	2.3
	시부	19.0	27.3	21.7	18.8	12.5	0.8
	군부	14.3	33.8	26.0	8.9	6.5	0.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1.8	28.8	12.1	16.7	10.6	0.0
	100만원대	20.9	24.5	19.8	22.3	12.5	0.0
	200만원대	13.7	27.9	25.8	22.0	9.2	1.4
	300만원대	19.4	25.1	22.9	18.9	11.4	2.3
	400만원대	29.2	25.0	4.2	12.5	12.5	16.7
	500만원 이상	35.3	23.5	20.6	14.7	5.9	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1.3	20.9	20.9	14.9	11.9	0.0
	중하층	21.1	23.6	22.6	21.3	10.7	0.8
	중간층	14.8	29.6	21.8	21.8	9.9	2.1
	중상(상)층	23.9	25.4	20.9	14.9	13.4	1.5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2	22.3	24.6	24.6	9.0	2.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8.2	27.3	27.3	18.2	9.1	0.0
	고용주 및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15.2	26.5	22.5	19.9	13.9	2.0
	실업자	11.1	33.3	22.2	33.3	0.0	0.0
	비경제활동인구	25.4	37.3	20.3	11.9	5.1	0.0
고용 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21.3	21.9	19.3	18.8	11.8	0.8
	비정규직	17.5	28.9	24.9	24.6	8.8	2.3

주: 1) +p<0.1, *p<0.05, ** p<0.01, ***p<0.001

2) “귀하는 향후 동네 의원(의원급)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중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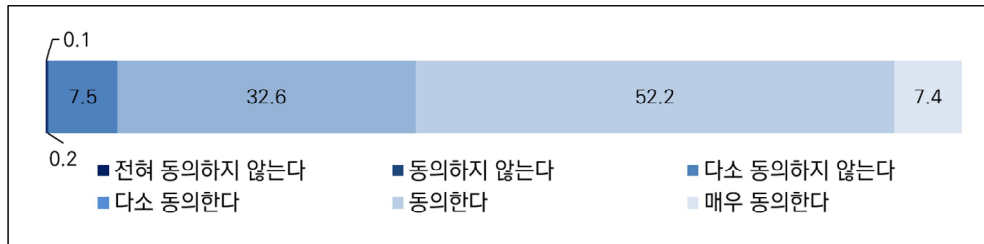
3) 1-지속적 진료를 통해 나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가 있는 것, 2-신뢰할 만한 경력에 있는 의사나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 3-대형 병원과의 협진 체계가 잘되어 있는 것, 4-건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진료나 상담을 해 주는 것, 5-첨단 시설·장비를 갖추는 것, 6-동네 의원을 이용할 의향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국민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2.2%로 가장 높았으며, ‘다소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2.6%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동의하는 쪽의 응답 비율이 84.8%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4-100] [국민]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동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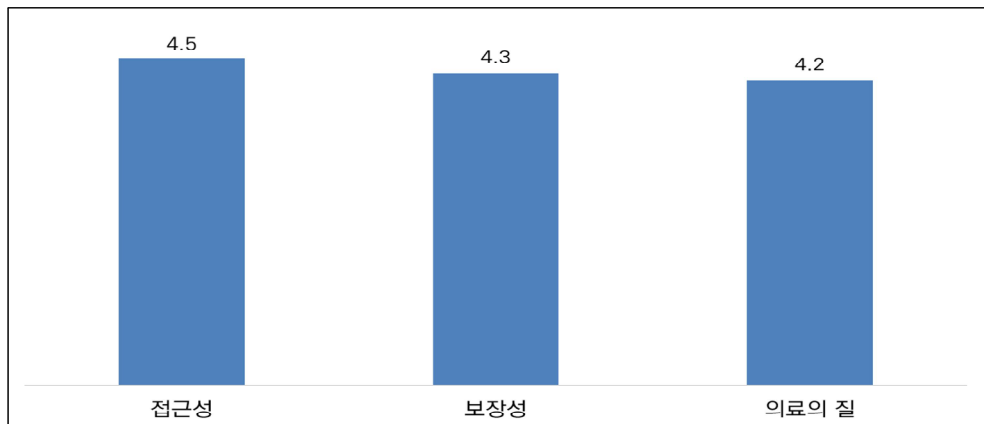
주: “귀하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보장성, 그리고 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평균 4점 이상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6점 만점).

○ ‘의료의 접근성’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4.5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료의 보장성’에 대한 만족도는 4.3점, ‘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4.2점으로 나타남.

[그림 4-101] [국민] 의료서비스 항목별(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 만족도

(단위: 점)



주: “귀하는 의료와 관련한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① 매우 불만족~⑥ 매우 만족’ 6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의료서비스 항목별(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 만족도는 기존 수행된 ‘보건복지 정책 수요조사’의 공통된 조사 항목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2014년, 2015년, 2016년 조사결과와 같이 2019년에도 ‘의료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2019년에는 2016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 항목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특히 ‘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2016년(56.4%) 대비 25.8%p 증가하여 국민의 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음.

〈표 4-24〉 [국민] 연도별 의료서비스 항목별(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 만족도

(단위: %)

연도	구분	만족	불만족
2014년	의료의 접근성	68.5	31.5
	의료의 보장성	56.6	34.1
	의료의 질	58.9	43.4
2015년	의료의 접근성	72.7	27.3
	의료의 보장성	60.5	39.5
	의료의 질	59.4	40.6
2016년	의료의 접근성	66.8	33.2
	의료의 보장성	59.7	40.3
	의료의 질	56.4	43.6
2019년	의료의 접근성	92.5	7.5
	의료의 보장성	79.7	20.3
	의료의 질	82.2	17.8

자료: 1) 김미곤 외(2014); 김미곤 외(2015); 김미곤 외(2016)

2)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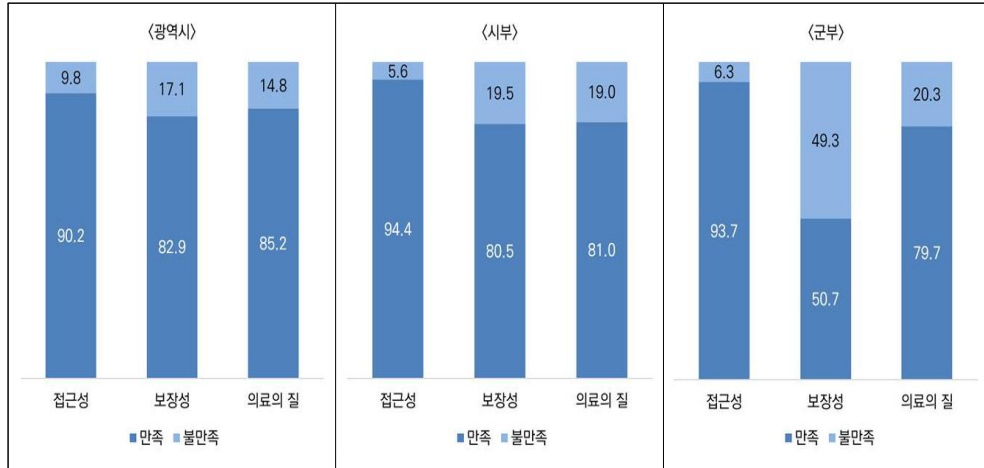
□ ‘의료의 접근성’, ‘의료의 보장성’, ‘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거주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광역시와 시부, 군부 모두 ‘의료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90.2%, 94.4%, 93.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러나 ‘의료의 보장성’에 대한 만족도는 광역시(82.9%), 시부(80.5%)에 비해 군부에서 50.7%로 낮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군부지역 거주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높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군부 지역 의료서비스 이용자 분석을 통한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4-102] [국민] 거주 지역별 의료서비스 항목별(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 만족도

(단위: %)



주: “귀하는 의료와 관련한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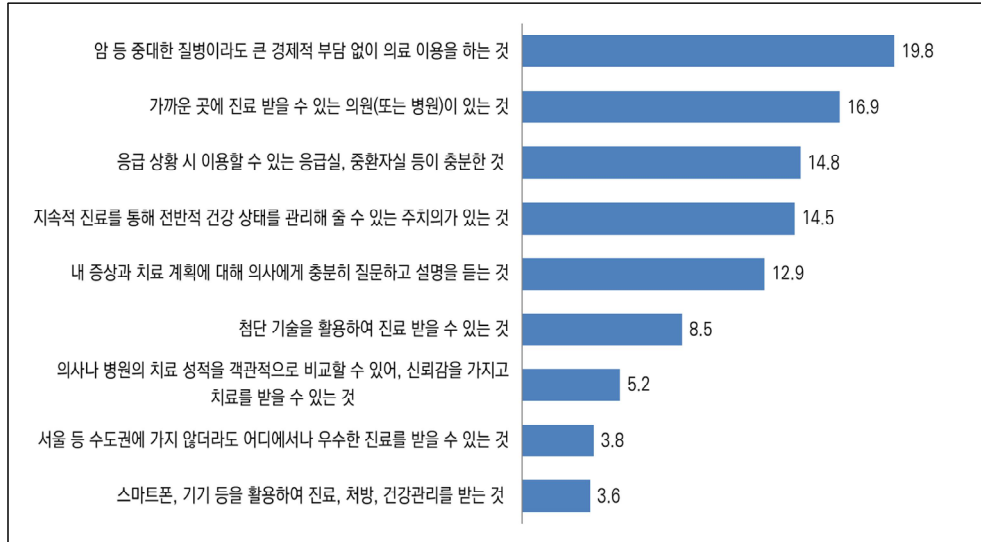
□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방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은 결과, 국민은 ‘암 등 중대한 질병이라도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이용을 하는 것’(19.8%)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음. 정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가까운 곳에 진료 받을 수 있는 의원(또는 병원)이 있는 것’(16.9%), ‘응급 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이 충분한 것’(14.8%), ‘지속적 진료를 통해 전반적 건강 상태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주치의가 있는 것’(1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03] [국민]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방안 선호도

(단위: %)



주: “귀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에 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방안 선호도에 대한 응답을 국민 집단별로 살펴보면, 거주 지역과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광역시, 시부, 군부 모두 ‘암 등 중대한 질병이라도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이용을 하는 것’(각각 18.0%, 19.1%, 34.2%)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욕구는 특히 군부에서 매우 높게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대 이하인 응답자들은 ‘암 등 중대한 질병이라도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이용을 하는 것’(의료의 보장성)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400만원대, 500만원 이상의 응답자는 ‘응급 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이 충분한 것’과 ‘가까운 곳에 진료 받을 수 있는 의원(또는 병원)이 있는 것’(의료의 접근성)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남.

〈표 4-25〉 [국민] 집단별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방안 선호도

(단위: %)

구분		1	2	3	4	5	6	7	8	9	χ^2
전체		16.9	14.8	19.8	14.5	12.9	8.5	3.6	5.2	3.8	-
성별	남	18.8	14.0	18.6	14.4	14.8	8.1	3.2	5.5	2.6	11.288
	여	15.0	15.6	21.1	14.6	10.9	8.9	4.0	4.9	5.1	
연령	20대	18.8	14.1	15.9	12.9	14.1	9.4	5.3	5.3	4.1	28.016
	30대	14.4	16.7	23.0	12.1	15.5	7.5	4.0	3.4	3.4	
	40대	19.4	15.3	20.4	13.0	13.9	6.5	2.3	6.5	2.8	
	50대	13.7	15.4	20.3	16.3	9.7	9.3	4.8	4.4	6.2	
	60대 이상	18.3	12.7	19.2	17.4	12.2	9.9	1.9	6.1	2.3	
최종 학력	중졸 이하	8.6	10.3	27.6	19.0	13.8	12.1	0.0	6.9	1.7	14.602
	고졸	16.1	15.2	18.8	16.1	12.3	8.1	4.0	4.7	4.5	
	대졸 이상	18.5	14.9	19.8	12.5	13.3	8.5	3.6	5.4	3.4	
가구원수	1명	23.4	15.6	11.7	18.2	11.7	7.8	2.6	6.5	2.6	27.570
	2명	14.2	13.6	21.6	13.1	11.9	9.7	4.0	7.4	4.5	
	3명	13.7	14.8	16.6	17.3	17.0	6.5	4.7	4.7	4.7	
	4명 이상	18.7	15.1	22.3	12.8	11.1	9.4	3.0	4.5	3.2	
거주 지역	광역시	16.2	13.7	18.0	17.8	12.1	10.0	4.8	4.8	2.7	46.173***
	시부	18.3	18.0	19.1	12.2	13.3	6.4	2.1	5.6	5.0	
	군부	12.7	1.3	34.2	10.1	15.2	12.7	6.3	5.1	2.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9	11.9	17.9	13.4	17.9	4.5	1.5	7.5	7.5	56.181*
	100만원대	14.2	13.5	16.4	19.3	14.5	9.8	4.4	5.1	2.9	
	200만원대	17.2	13.2	21.2	12.9	13.4	8.7	4.0	5.6	3.8	
	300만원대	18.3	19.4	24.0	13.1	6.3	7.4	1.7	5.1	4.6	
	400만원대	12.5	33.3	16.7	16.7	16.7	0.0	0.0	0.0	4.2	
	500만원 이상	29.4	14.7	14.7	2.9	14.7	14.7	8.8	0.0	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6.4	25.4	20.9	10.4	9.0	9.0	1.5	4.5	3.0	34.934+
	중하층	20.2	12.8	19.4	16.6	11.8	7.1	3.0	5.5	3.5	
	중간층	14.9	14.7	19.2	13.6	15.6	8.3	4.5	4.7	4.5	
	중상(상)층	11.9	16.4	25.4	11.9	4.5	17.9	3.0	7.5	1.5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9.7	16.9	19.4	12.1	14.4	7.3	2.3	4.8	3.1	41.75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1.2	18.2	21.2	12.1	9.1	6.1	6.1	6.1	0.0	
	고용주 및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14.8	10.5	16.7	23.5	13.6	9.9	3.7	4.9	2.5	
	실업자	11.9	18.6	18.6	23.7	11.9	10.2	1.7	1.7	1.7	
	비경제활동인구	15.6	13.8	21.5	11.8	11.8	9.0	4.9	6.1	5.6	
고용 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9.5	17.5	19.5	12.0	14.6	7.0	2.3	4.4	3.2	5.527
	비정규직	22.2	13.3	20.0	13.3	8.9	8.9	4.4	8.9	0.0	

주: 1) +p<0.1, *p<0.05, ** p<0.01, ***p<0.001

2) “귀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에 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3) 1-가까운 곳에 진료 받을 수 있는 의원(또는 병원)이 있는 것, 2-응급 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이 충분한 것, 3-암 등 중대한 질병이라도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이용을 하는 것, 4-지속적 진료를 통해 전반적 건강 상태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주치의가 있는 것, 5-내 증상과 치료 계획에 대해 의사에게 충분히 질문하고 설명을 듣는 것, 6-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진료 받을 수 있는 것, 7-스마트폰, 기기 등을 활용하여 진료, 처방, 건강관리를 받는 것, 8-의사나 병원의 치료 성적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신뢰감을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9-서울 등 수도권에 가지 않더라도 어디에서나 우수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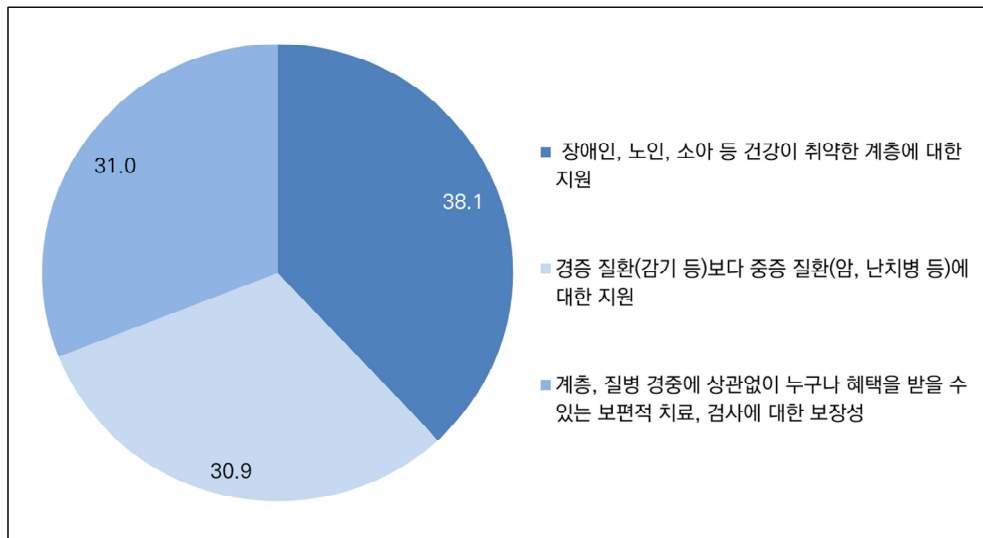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국민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장애인, 노인, 소아 등 건강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38.1%)을 가장 많이 선택함.

○ 다음으로 ‘계층, 질병 경중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치료, 검사에 대한 보장성’(31.0%), ‘경증 질환(감기 등)보다 중증 질환(암, 난치병 등)에 대한 우선적 지원’(30.9%) 순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그림 4-104]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시 우선되어야 할 부분

(단위: %)



주: “귀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우선적으로 어떤 부분부터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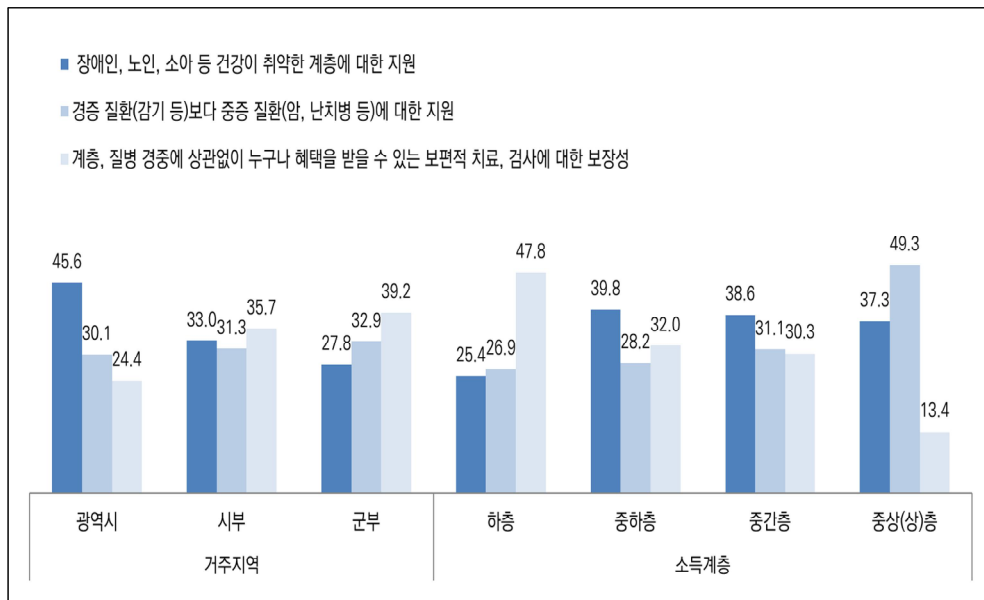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시에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응답은 거주 지역,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광역시와 달리 시부와 군부는 ‘계층, 질병 경중에 상관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치료, 검사에 대한 보장성’(각각 35.7%, 39.2%)을 가장 우선해야한다고 응답함.

-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하층은 ‘계층, 질병 경중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치료, 검사에 대한 보장성’(47.8%)이 가장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하층, 중간층은 ‘장애인, 노인, 소아 등 건강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각각 39.8%, 38.6%)을 가장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함. 중상(상)층은 ‘경증 질환(감기 등)보다 중증 질환(암, 난치병 등)에 대한 우선적 지원’(49.3%)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하며 차이를 보임.

[그림 4-105] [국민] 집단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시 우선되어야 할 부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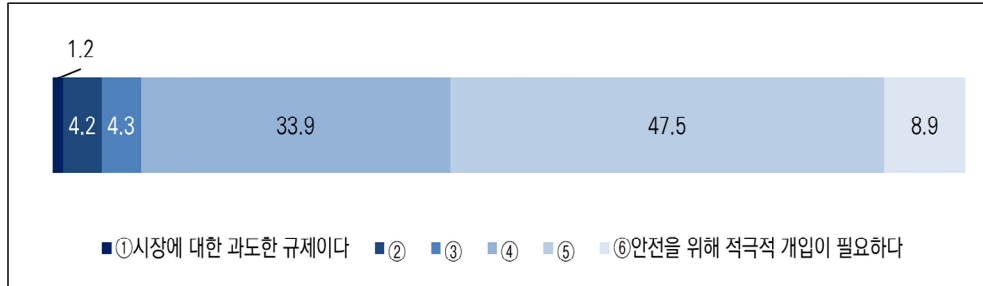
주: “귀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우선적으로 어떤 부분부터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국민건강을 위한 라돈침대, 액상 전자담배 등에 대한 정부의 개입(제조 및 판매, 수입규제 등) 필요성에 대해 국민은 ‘안전을 위해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쪽의 응답이 90.3%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그림 4-106] [국민] 라돈침대, 액상 전자담배 등과 관련한 정부 개입에 대한 생각

(단위: %)



주: “귀하는 국민건강을 위한 라돈침대, 액상 전자담배 등에 대한 정부 개입(제조 및 판매, 수입규제 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다~⑥ 안전을 위해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6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라돈침대, 액상 전자담배 등에 대한 정부 개입은 성별과 거주 지역, 경제활동상태,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91.3%로 남성(89.3%)보다 정부개입에 대하여 조금 더 긍정적임.

○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군부(94.9%), 시부(90.5%), 광역시(89.3%) 순으로 나타나, 군부 거주자가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함.

○ 경제활동상태에 따라서는 비경제활동인구(91.9%), 상용직(91.0%), 고용주 및 자영업자(89.0%), 실업자(86.5%), 임시일용직(78.8%) 순으로 정부개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100만원 미만(95.5%), 500만원 이상(94.1%) 소득계층에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정부 개입에 필요성을 크게 인식함.

〈표 4-26〉 [국민] 집단별 라돈침대, 액상 전자담배 등과 관련한 정부 개입에 대한 생각

(단위: %)

구분		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다	②	③	④	⑤	⑥ 안전을 위해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χ^2
전체		1.2	4.2	4.3	33.9	47.5	8.9	-
성별	남	2.4	4.0	4.3	34.4	47.2	7.7	13.594*
	여	0.0	4.5	4.3	33.4	47.8	10.1	
연령	20대	0.6	3.5	1.8	39.4	44.7	10.0	27.213
	30대	2.3	8.0	2.9	28.7	50.6	7.5	
	40대	0.9	3.2	4.2	35.2	47.2	9.3	
	50대	1.3	4.0	4.0	35.7	44.9	10.1	
	60대 이상	0.9	2.8	8.0	30.5	50.2	7.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0	1.7	10.3	37.9	44.8	5.2	18.170+
	고졸	0.4	3.1	4.9	33.6	48.4	9.4	
	대졸 이상	2.0	5.4	3.0	33.7	47.0	8.9	
가구원수	1명	0.0	5.2	3.9	39.0	39.0	13.0	12.684
	2명	0.6	2.3	6.8	30.7	51.7	8.0	
	3명	1.4	5.1	4.0	34.7	47.3	7.6	
	4명 이상	1.5	4.3	3.6	33.8	47.4	9.4	
거주 지역	광역시	0.9	4.6	5.2	38.0	46.7	4.6	87.219***
	시부	1.7	4.6	3.3	30.1	51.7	8.7	
	군부	0.0	0.0	5.1	34.2	26.6	34.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0.0	4.5	34.3	56.7	4.5	59.072***
	100만원대	0.0	1.8	5.5	35.6	45.8	11.3	
	200만원대	1.2	4.2	3.8	35.8	46.8	8.2	
	300만원대	4.0	8.6	3.4	25.7	50.9	7.4	
	400만원대	0.0	16.7	4.2	29.2	29.2	20.8	
	500만원 이상	0.0	0.0	5.9	41.2	47.1	5.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	6.0	4.5	23.9	52.2	13.4	15.476
	중하층	1.5	2.8	4.8	34.3	49.6	7.1	
	중간층	1.3	5.5	3.8	35.2	44.6	9.6	
	중상(상)층	0.0	1.5	4.5	32.8	50.7	10.4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0	5.1	2.0	36.9	46.2	7.9	41.28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0	3.0	18.2	27.3	39.4	12.1	
	고용주 및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1.9	3.7	5.6	34.0	42.0	13.0	
	실업자	0.0	5.1	8.5	37.3	47.5	1.7	
	비경제활동인구	0.5	3.6	4.1	31.2	51.7	9.0	
고용 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2.0	5.2	2.0	36.2	46.9	7.6	19.533**
	비정규직	0.0	2.2	13.3	35.6	35.6	13.3	

주: 1) +p<0.1, *p<0.05, ** p<0.01, ***p<0.001

2) “귀하는 국민건강을 위한 라돈침대, 액상 전자담배 등에 대한 정부 개입(제조 및 판매, 수입규제 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다~⑥ 안전을 위해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6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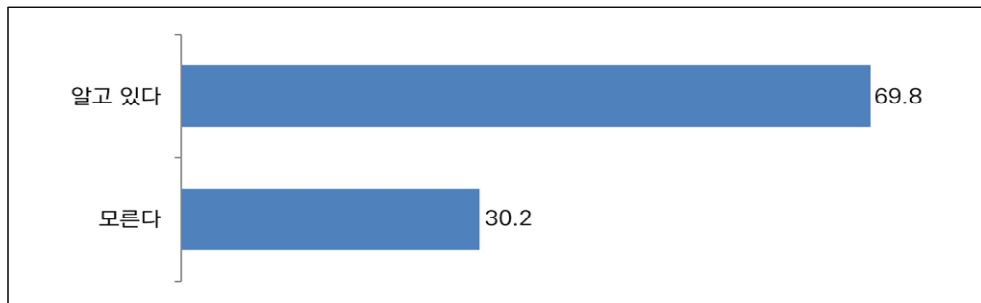
□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국민은 69.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데 있어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 보호하는 제도임.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처음 시행된 이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음(보건복지부, 2020).

○ 그러나 응답자의 30.2%는 여전히 제도에 대해 모르는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4-107] [국민]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

(단위: %)



주: “귀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고 있거나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연명의료결정제도 인지도에 대한 응답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연령과 주관적 소득계층,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연령에 따라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20대(67.6%)와 60대 이상(56.8%)에서 낮게 나타남. 60대 이상 연령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고령자에 대한 제도 안내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중상(상)층(77.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층(46.3%)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500만원 이상(52.9%)과 100만원 미만(47.8%)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4-27〉 [국민] 집단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부

(단위: %)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χ^2
전체		69.8	30.2	-
성별	남	70.9	29.1	0.641
	여	68.6	31.4	
연령	20대	67.6	32.4	31.550***
	30대	77.6	22.4	
	40대	79.2	20.8	
	50대	68.7	31.3	
	60대 이상	56.8	43.2	
최종 학력	중졸 이하	60.3	39.7	20.677***
	고졸	63.7	36.3	
	대졸 이상	76.4	23.6	
가구원수	1명	71.4	28.6	5.351
	2명	63.1	36.9	
	3명	69.3	30.7	
	4명 이상	72.3	27.7	
거주 지역	광역시	70.4	29.6	2.033
	시부	68.3	31.7	
	군부	75.9	24.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7.8	52.2	24.230***
	100만원대	70.5	29.5	
	200만원대	71.8	28.2	
	300만원대	73.7	26.3	
	400만원대	83.3	16.7	
	500만원 이상	52.9	47.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6.3	53.7	22.325***
	중하층	68.5	31.5	
	중간층	73.1	26.9	
	중상(상)층	77.6	22.4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3.8	26.2	7.41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9.7	30.3	
	고용주 및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72.8	27.2	
	실업자	67.8	32.2	
	비경제활동인구	65.2	34.8	
고용 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74.1	25.9	0.544
	비정규직	68.9	31.1	

주: 1)+p<0.1, *p<0.05, **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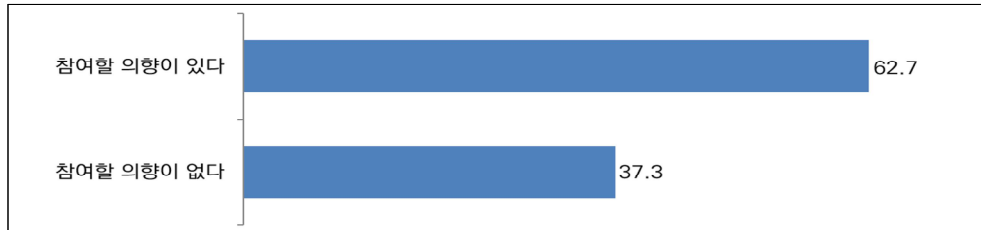
2) “귀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고 있거나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민은 ‘참여할 의향이 있다’(62.7%)고 응답한 비율이 ‘참여할 의향이 없다’(37.3%) 보다 더 높게 나타남.

[그림 4-108] [국민]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참여의향

(단위: %)



주: “귀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고 있거나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의향에 대한 응답은 연령과 최종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연령에 따라서는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0대(69.5%), 50대(64.8%), 40대(64.4%), 20대(58.8%), 60대 이상(56.3%) 순으로 나타남. 60대 이상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할 의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아 고령자에 대한 제도 안내와 참여를 돕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대졸 이상(63.9%), 고졸 (63.2%), 중졸 이하(48.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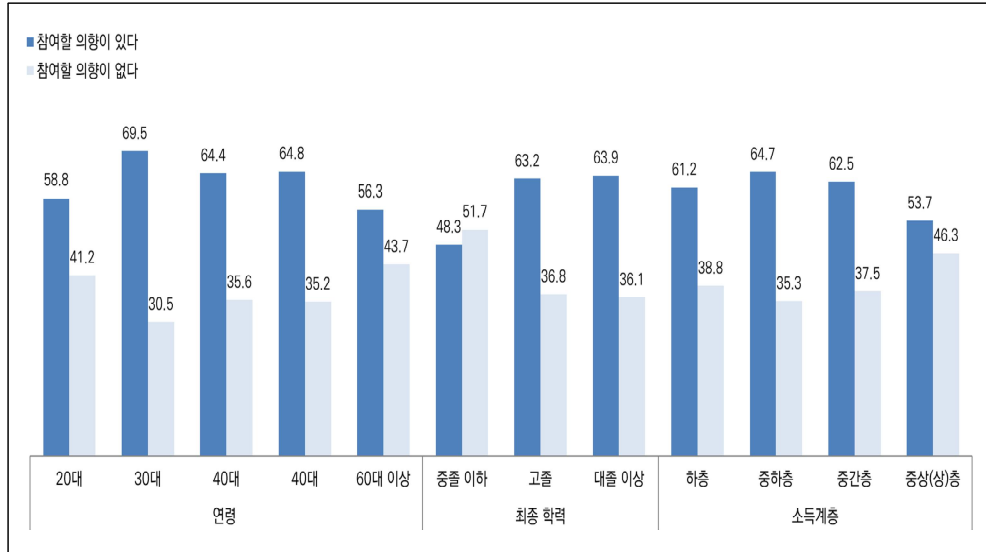
-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인지여부와 참여의향을 교차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알고 있으면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6%로 나타나고, 알고는 있으나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8.4%로 나타남.

- 반대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 중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 (57.9%)고 응답한 비율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42.1%)고 응답한 비율보다 더 높았음.

- 이러한 결과는 제도에 대한 인지여부가 참여의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보건복지부(2019a)는 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제도 이행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음.

[그림 4-109] [국민] 집단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참여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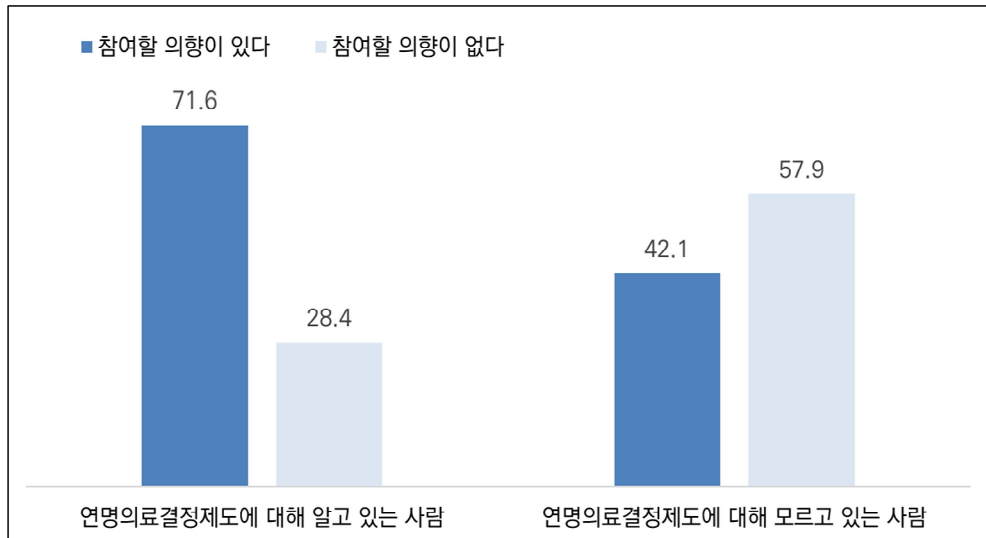
(단위: %)



주: “귀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고 있거나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4-110] [국민] 집단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지여부별 참여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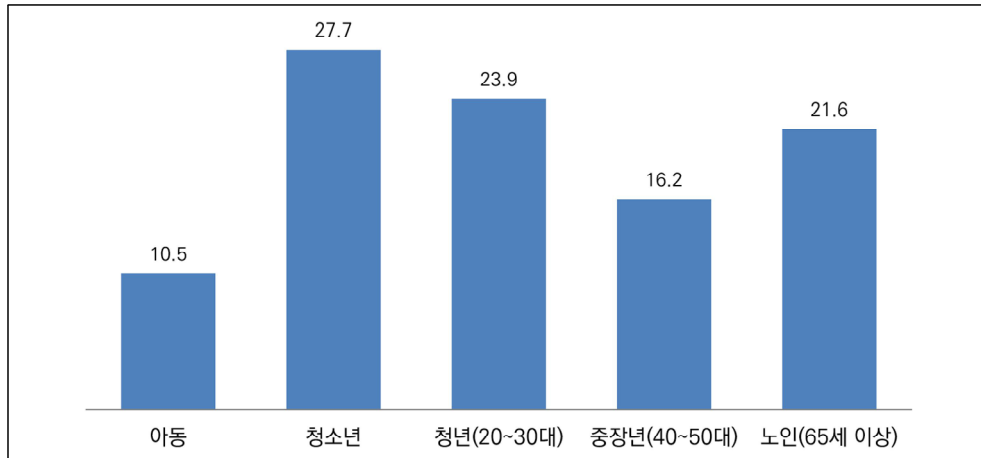


주: “귀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고 있거나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으로 ‘청소년’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23.9%), ‘노인’(21.6%), ‘중장년’(16.2%), ‘아동’(10.5%)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11] [국민]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

(단위: %)



주: “귀하는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연령, 최종학력,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연령에 따라서는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으로 30대, 40대, 50대는 ‘청소년’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20대는 ‘청년’을 42.4%, 60대 이상은 ‘노인’을 39.4%로 가장 많이 꼽음.
-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고졸과 대졸 이상은 ‘청소년’을 각각 27.6%, 29.2%로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중졸 이하는 ‘노인’을 53.4%로 가장 많이 꼽음.
-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유배우/사실혼인 경우 ‘청소년’을 28.5%, 별거/사별/이혼인 경우 ‘노인’을 37.3%, 미혼(미혼 부·모 포함)은 ‘청년’을 38.3%로 가장 많이 선택함.

- 경제활동상태에 따라서는 상용직, 비경제활동인구, 임시일용직은 ‘청소년’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고용주 및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실업자는 ‘노인’을 각각 30.2%, 32.2%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음.

〈표 4-28〉 [국민] 집단별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

(단위: %)

구분		청소년	청년 (20~30대)	노인 (65세 이상)	중장년 (40~50대)	아동	기타	χ^2
전체		27.7	23.9	21.6	16.2	10.5	0.1	-
성별	남	29.1	25.5	19.8	15.6	9.9	0.2	4.933
	여	26.3	22.3	23.5	16.8	11.1	0.0	
연령	20대	25.9	42.4	10.6	9.4	11.8	0.0	125.228***
	30대	26.4	27.0	15.5	13.2	17.8	0.0	
	40대	38.0	17.6	14.8	18.5	10.6	0.5	
	50대	24.7	23.3	24.2	19.4	8.4	0.0	
	60대 이상	23.0	13.6	39.4	18.3	5.6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5.5	5.2	53.4	17.2	8.6	0.0	54.748***
	고졸	27.6	24.4	24.0	15.7	8.3	0.0	
	대졸 이상	29.2	25.6	15.7	16.5	12.7	0.2	
가구원수	1명	23.4	16.9	22.1	16.9	19.5	1.3	4.933***
	2명	23.3	21.6	34.7	13.1	7.4	0.0	
	3명	30.0	23.1	22.7	14.1	10.1	0.0	
	4명 이상	28.7	26.4	16.0	18.5	10.4	0.0	
거주 지역	광역시	26.0	22.8	22.3	19.4	9.3	0.2	125.228
	시부	29.5	23.9	21.2	14.7	10.8	0.0	
	군부	26.6	30.4	20.3	7.6	15.2	0.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8.4	14.9	37.3	11.9	7.5	0.0	42.844*
	100만원대	28.0	20.7	27.6	16.7	6.9	0.0	
	200만원대	26.6	25.6	17.9	16.5	13.2	0.2	
	300만원대	26.3	29.1	20.0	13.7	10.9	0.0	
	400만원대	33.3	20.8	12.5	25.0	8.3	0.0	
주관적 소득계층	500만원 이상	41.2	20.6	2.9	23.5	11.8	0.0	23.582+
	하층	35.8	16.4	19.4	19.4	7.5	1.5	
	중하층	25.7	24.9	21.9	17.6	9.8	0.0	
	중간층	27.9	24.1	22.6	14.5	10.9	0.0	
	중상(상)층	29.9	23.9	14.9	16.4	14.9	0.0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4	29.9	25.4	15.2	15.2	0.0	64.06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1	24.2	21.2	24.2	21.2	3.0	
	고용주 및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8.6	28.4	19.1	13.6	30.2	0.0	
	실업자	3.4	16.9	23.7	23.7	32.2	0.0	
	비경제활동인구	9.2	27.4	24.8	16.4	22.3	0.0	
고용 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30.6	23.9	15.7	15.2	14.6	0.0	13.626*
	비정규직	20.0	33.3	15.6	22.2	6.7	2.2	

주: 1) +p<0.1, *p<0.05, ** p<0.01, ***p<0.001

2) “귀하는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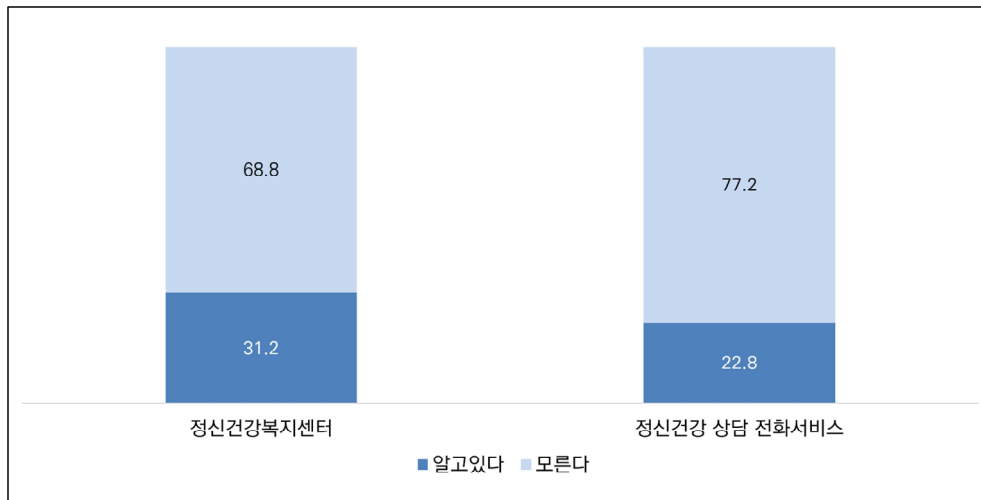
□ 국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상담 전화서비스 인지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1.2%, 정신건강 상담 전화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2.8%로 다소 낮게 나타남.

○ 정부는 2016년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 2. 25)’을 발표한 이후 정신보건법 정부개정안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제정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함(전진아 외, 2017; 전진아 외, 2019). 그러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법률을 일부 개정함(보건복지부, 2019c).

○ 실제로 전진아 외(2019)에 따르면, 정신건강 문제 관련 서비스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상담 전화서비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지정도는 아직까지 낮은 편이라고 분석하며, 정책 홍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그림 4-112] [국민]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상담 전화 서비스 인지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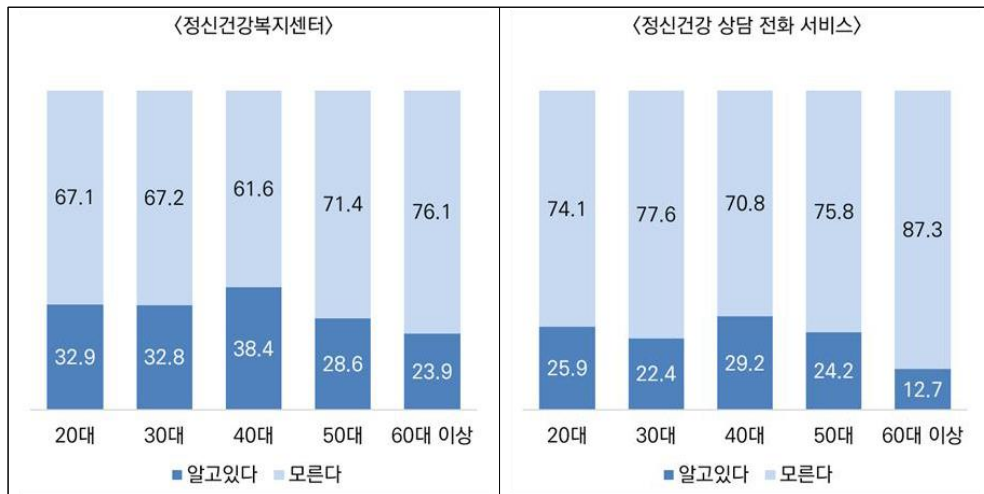
주: “귀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상담 전화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 상담 전화 서비스 인지 여부는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0대에서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에서 23.9%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정신건강 상담 전화 서비스 또한 40대에서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60대 이상에서 12.7%로 낮게 나타남.

[그림 4-113] [국민] 연령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상담 전화 서비스 인지여부

(단위: %)



주: “귀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상담 전화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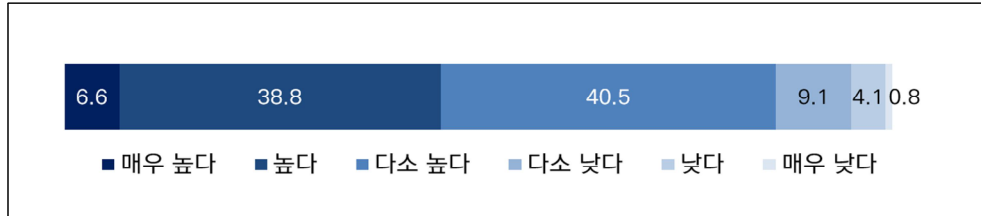
□ 전문가는 전반적인 보건의료 수준에 대해 대체로 높게 평가하였으나, 지난 3년간 (2017-2019)의 보건의료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음.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에 대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86.0%,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14.0%로 나타남.

- ‘다소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40.5%로 가장 높았으며,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38.8%로 그 다음으로 높음.

[그림 4-114] [전문가] 전문가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수준에 대한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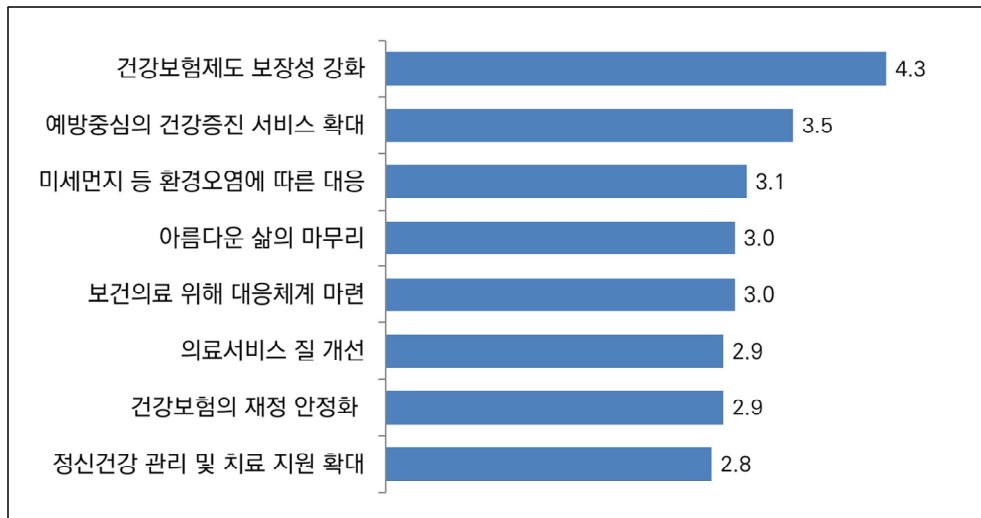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한편 지난 3년간(2017~2019)의 보건의료정책 영역별 성과 평가에 대한 응답은 6점 만점에 평균 3.2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

- 보건복지정책 영역별 평가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가 4.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등)’가 3.5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음.

[그림 4-115] [전문가] 지난 3년간(2017~2019)의 보건의료정책 영역 성과에 대한 평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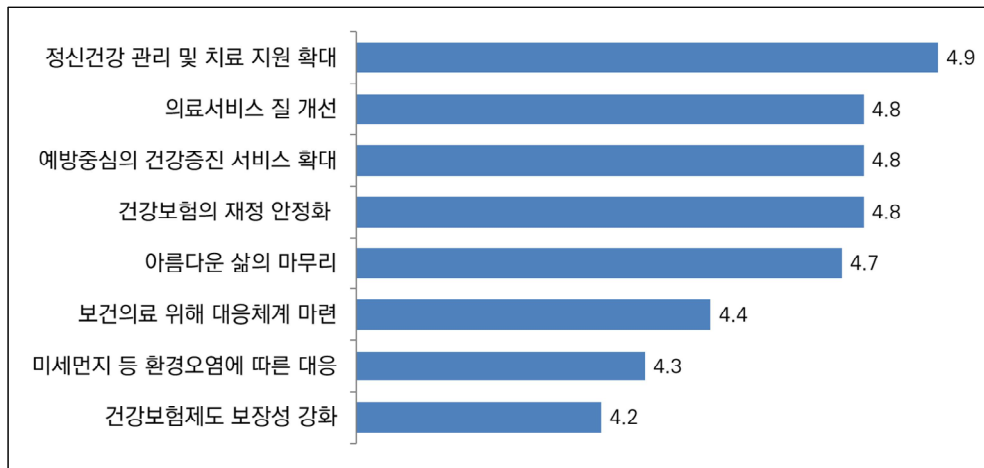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각 보건의료정책 영역의 지난 3년간(2017-2019)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에 대해
① 매우 미흡~⑥ 매우 우수’ 6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정책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가 동의하는 정도는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 확대(자살예방,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등)’가 4.9점으로 가장 높았음(6점 만점).
- 다음으로 ‘의료서비스 질 개선(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 인력 공급 확충, 공공 의료체계 확충 등)’,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등)’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가 각각 4.8점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보건의료 위해 대응체계 마련(생활용품 및 식·의약품 불안 등)’이 4.4점,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따른 대응(어린이집, 경로당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이 4.3점,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는 4.2점으로 다른 정책에 비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4-116] [전문가] 정부가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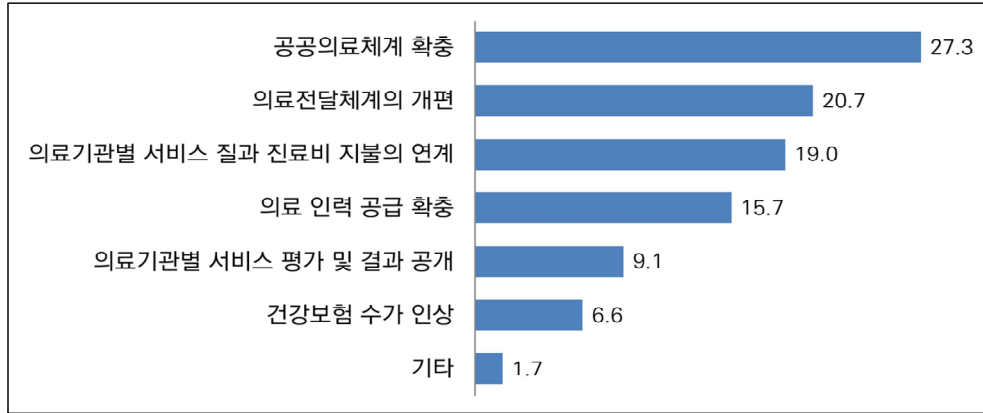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다음의 보건의료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해주시요.”에 대해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⑥ 매우 동의함’ 6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공공의료체계 확충’(27.3%)이 가장 요구된다고 보았음.
- 다음으로는 ‘의료전달체계의 개편’(20.7%),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19.0%), ‘의료 인력 공급 확충’(15.7%)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17] [전문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기존 조사와 달리 2019년에는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을 1, 2순위로 구분하지 않고 물었으므로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기존 수행된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의 1순위 응답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2014년, 2015년, 2016년 전문가 조사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으로 ‘공공의료체계 확충’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음. 이러한 경향은 2019년 조사에서도 동일하였으나, 그 비율은 27.3%로 2016년 41.0%에 비해 대비 감소함.
- 2016년 대비 2019년 조사에서는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는 응답 비율이 상당히 증가한 반면, ‘의료기관별 서비스 평가 및 결과 공개’에 대한 비율은 상당히 감소하였음.

〈표 4-29〉 [전문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2014~2019년) (단위: %)

연도	구분	만족
2012년	의료 인력 공급 확충	12.0
	건강보험 수가 인상	11.0
	공공의료체계 확충	31.0
	의료기관별 서비스 평가 및 결과 공개	22.0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	15.0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9.0
	기타	0.0
	합계	100.0
2014년	의료 인력 공급 확충	15.0
	건강보험 수가 인상	10.0
	공공의료체계 확충	35.0
	의료기관별 서비스 평가 및 결과 공개	19.0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	12.0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9.0
	기타	0.0
	합계	100.0
2015년	의료 인력 공급 확충	14.0
	건강보험 수가 인상	3.0
	공공의료체계 확충	46.0
	의료기관별 서비스 평가 및 결과 공개	9.0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	10.0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18.0
	합계	100.0
2016년	의료 인력 공급 확충	13.0
	건강보험 수가 인상	4.0
	공공의료체계 확충	41.0
	의료기관별 서비스 평가 및 결과 공개	18.0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	10.0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14.0
	합계	100.0
2019년	의료 인력 공급 확충	15.7
	건강보험 수가 인상	6.6
	공공의료체계 확충	27.3
	의료기관별 서비스 평가 및 결과 공개	9.1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	19.0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20.7
	기타	1.7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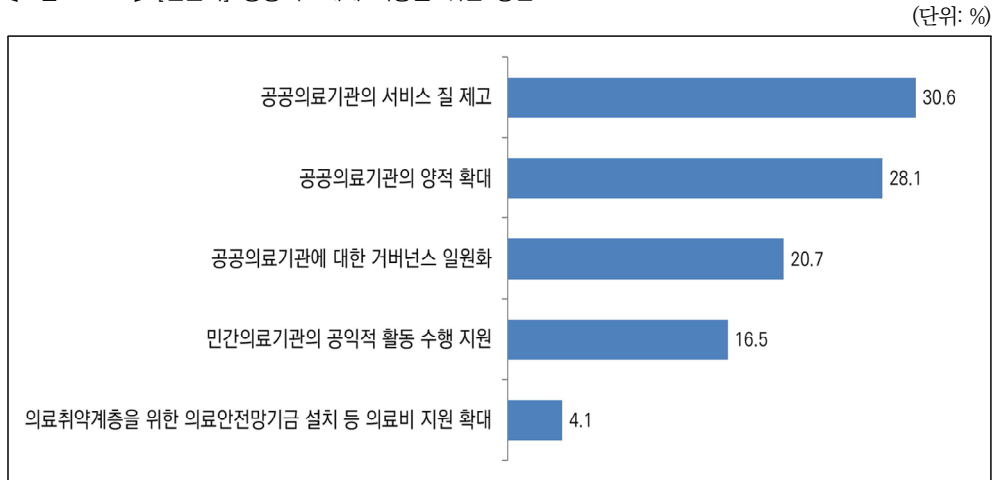
자료: 1) 김태완 외(2012), 김미곤 외(2014), 김미곤 외(2015), 김미곤 외(2016).

2)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에게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의 질 제고’가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대’가 28.1%,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거버넌스 일원화’가 20.7%로 높게 나타남.

[그림 4-118] [전문가]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방안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기존 수행된 조사와의 공통 항목으로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안에 대한 응답을 비교하면, 전문가는 2018년과 2019년 모두 ‘공공의료기관의 질 제고’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2019년에도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하였으나 2018년 44.0%에 비해 30.6%로 크게 감소하였음. 반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거버넌스 일원화’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18년 13.0%에서 크게 증가하였음.

〈표 4-30〉 [전문가] 연도별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방안

(단위: %)

연도	구분	비율
2018년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대	25.0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	44.0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활동 수행 지원	12.0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등 의료비 지원 확대	5.0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거버넌스 일원화	13.0
	기타	1.0
	합계	100.0
2019년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대	28.1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	30.6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활동 수행 지원	16.5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등 의료비 지원 확대	4.1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거버넌스 일원화	20.7
	기타	0.0
	합계	100.0

자료: 1) 김미곤 외(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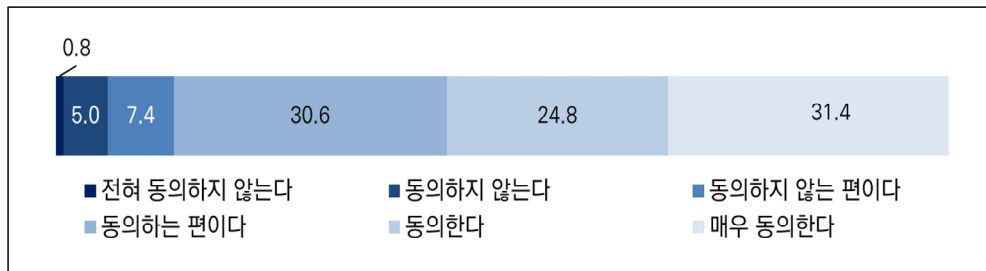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는 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86.8%).

○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1.4%,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0.6%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19] [전문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동의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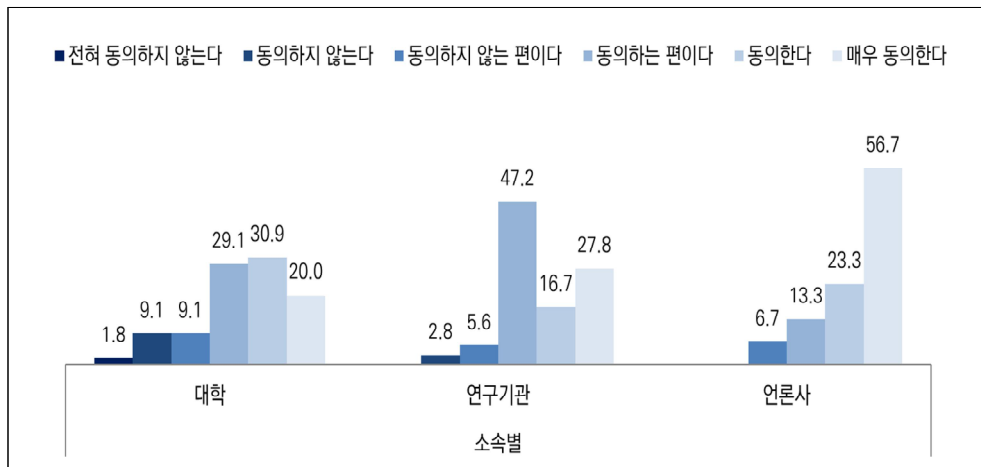
□ 전문가의 소속에 따라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한 응답 비율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언론사 소속 전문가는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56.7%로 가장 높았으며,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는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7.2%로 가장 높았음.

○ 이에 반해 대학 소속 전문가는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언론사와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에 비해 동의하는 쪽(‘매우 동의한다’+‘동의한다’+‘동의하는 편이다’)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4-120] [전문가] 소속별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동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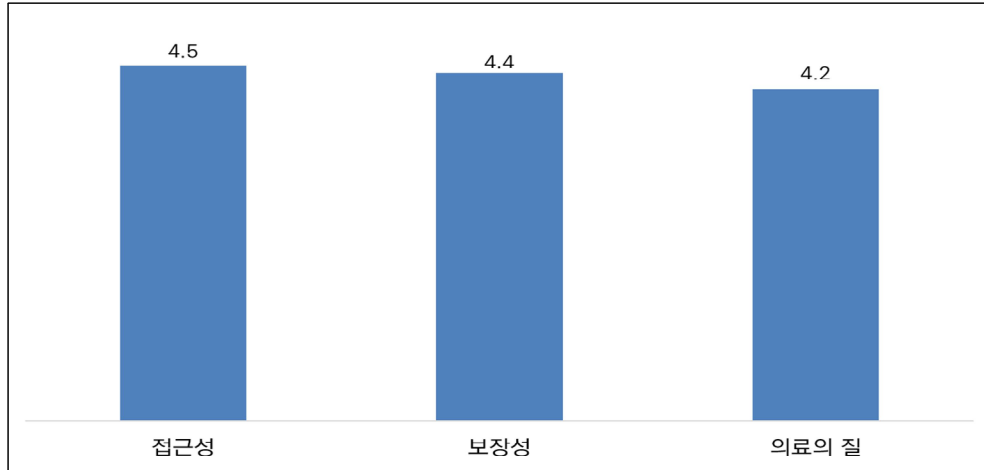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의료서비스 항목별 평가는 6점 만점에 ‘의료의 접근성’이 4.5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료의 보장성’은 4.4점, ‘의료의 질’은 4.2점으로 나타남.

[그림 4-121] [전문가] 의료서비스 항목별(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 평가

(단위: 점)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의료와 관련한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에 대해 ‘① 매우 부정적~⑥ 매우 긍정적’ 6점 척도로 측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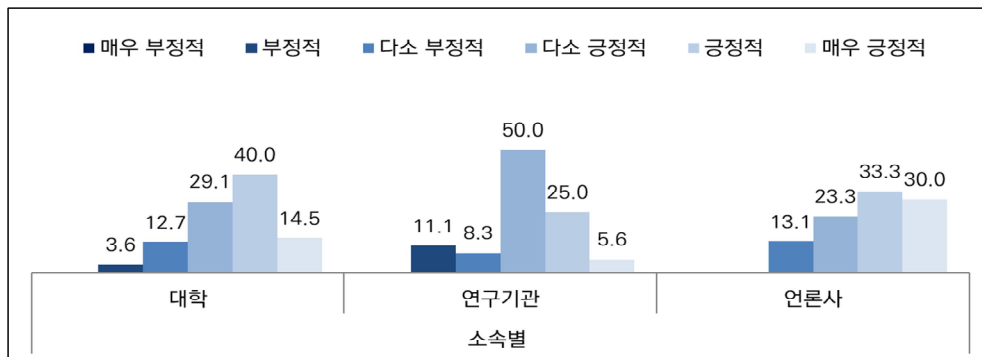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의료서비스 항목 중 ‘의료의 보장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의 소속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대학, 연구기관, 언론사 소속 전문가 모두 ‘의료의 보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각각 83.6%, 80.6%, 86.7%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언론사 소속 전문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0%로 높게 나타남.

[그림 4-122] [전문가] 소속별 의료의 보장성 평가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의료와 관련한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기존 조사에서는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물었으나, 2019년 본 연구 조사에서는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기존 수행된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의 공통된 조사 항목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모든 조사에서 ‘의료의 접근성’에 대한 평가가 의료의 보장성이나 의료의 질적 측면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남.

○ 또한 2019년 조사 결과는 ‘의료의 접근성’, ‘의료의 보장성’, ‘의료의 질’ 모든 측면에서 기존 조사 결과보다 긍정적 평가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 4-31〉 [전문가] 연도별 의료서비스 항목별(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 만족도 및 평가

(단위: %)

연도	구분	긍정적 평가
2014년	의료의 접근성	84.0
	의료의 보장성	60.0
	의료의 질	64.0
2015년	의료의 접근성	79.0
	의료의 보장성	55.0
	의료의 질	61.0
2016년	의료의 접근성	74.0
	의료의 보장성	57.0
	의료의 질	50.0
2019년	의료의 접근성	86.0
	의료의 보장성	83.5
	의료의 질	80.2

자료: 1) 김미곤 외(2014), 김미곤 외(2015), 김미곤 외(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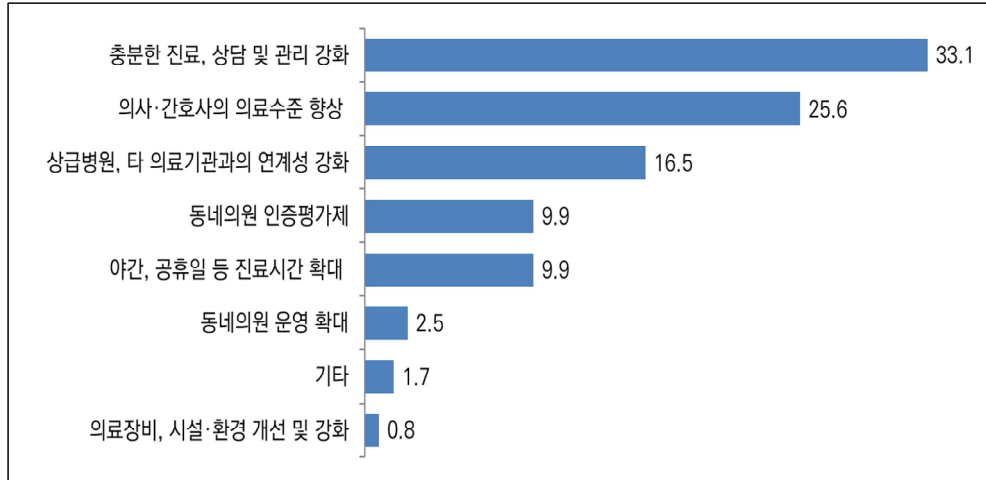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가 생각하는 동네의원 신뢰 및 이용 편리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충분한 진료, 상담 및 관리 강화’(33.1%), ‘의사·간호사의 의료수준 향상’(25.6%)이 높게 나타남.

○ 반면, ‘동네의원 운영 확대’(2.5%), ‘의료장비, 시설·환경 개선 및 강화’(0.8%) 등은 낮게 나타남.

[그림 4-123] [전문가] 동네의원 신뢰 및 이용 편리성 개선을 위한 방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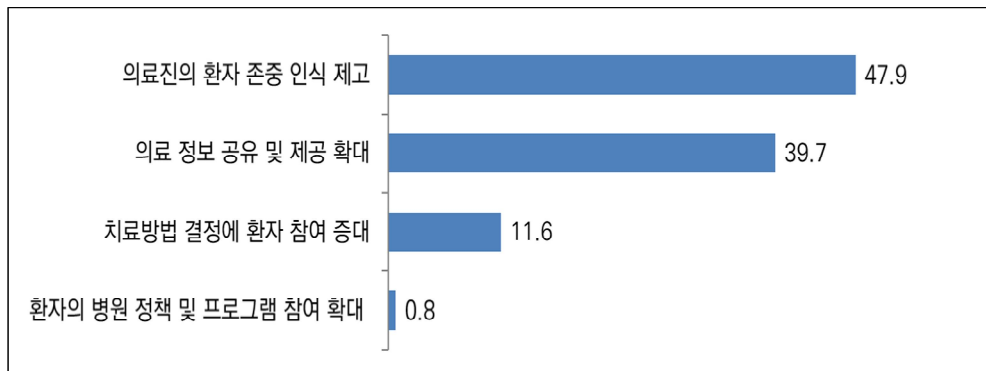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동네의원 신뢰 및 이용 편리성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는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환자 존중의 인식 개선’(47.9%)과 ‘의료 정보 공유 및 제공 확대’(39.7%)를 많이 선택함.

[그림 4-124] [전문가]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선호도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의료기관이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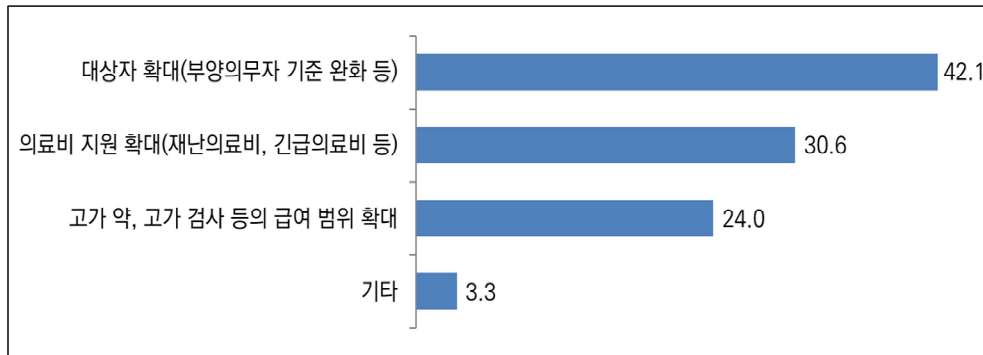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성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대상자 확대’(42.1%)를 꼽음.

○ 다음으로는 ‘의료비 지원 확대’(30.6%), ‘고가 약, 고가 검사 등의 급여 범위 확대’(24.0%) 순으로 우선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4-125] [전문가] 저소득층 의료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저소득층 의료보장성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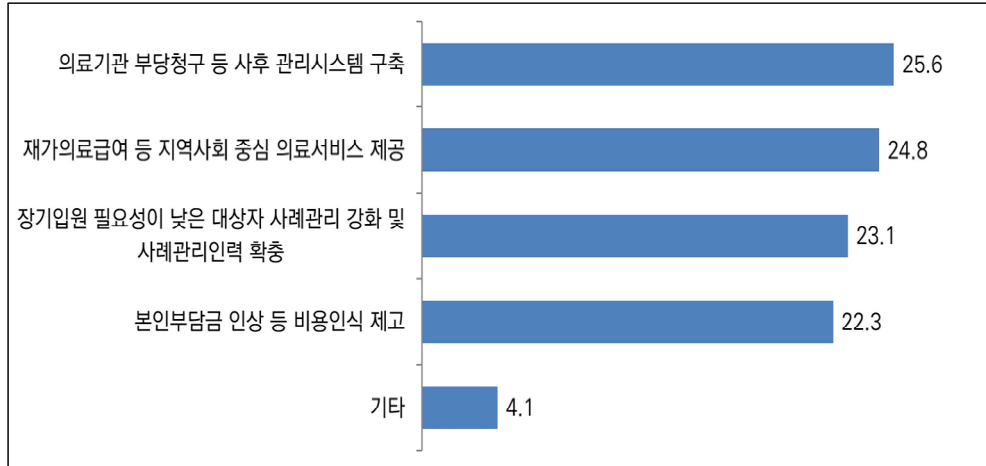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는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의료기관 부담청구 등 사후 관리시스템 구축’(25.6%) 을 가장 많이 선택함.

○ 다음으로는 ‘재가의료급여 등 지역사회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24.8%),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은 대상자 사례관리 강화 및 사례관리인력 확충’(23.1%), ‘본인부담금 인상 등 비용인식 제고’(22.3%)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26] [전문가]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정책 선호도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선호를 전문가 집단별로 살펴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경상법정 계열 전문가는 ‘본인부담금 인상 등 비용인식 제고’(42.3%)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인문사회 계열과 보건의료 계열 전문가는 ‘재가의료급여 등 지역사회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각각 29.0%, 33.3%)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살펴보면, 보수 성향의 전문가는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은 대상자 사례관리 강화 및 사례관리인력 확충’(33.3%), 중도 성향의 전문가는 ‘본인부담금 인상 등 비용인식 제고’(45.0%), 진보 성향의 전문가는 ‘재가의료급여 등 지역사회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37.0%)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남.

〈표 4-32〉 [전문가] 집단별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정책 선호도

(단위: %)

구분		재가의료 급여 등 지역사회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 인상 등 비용인식 제고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은 대상자 사례관리 강화 및 사례관리 인력 확충	의료기관 부담청구 등 사후 관리시스템 구축	기타	χ^2
전체		24.8	22.3	23.1	25.6	4.1	-
성별	남	24.3	24.3	18.9	27.0	5.4	2.724
	여	25.5	19.1	29.8	23.4	2.1	
전공별	경상법정	7.7	42.3	23.1	26.9	0.0	20.706+
	인문사회	29.0	21.0	22.6	24.2	3.2	
	보건의료	33.3	10.0	23.3	26.7	6.7	
	기타	0.0	0.0	33.3	33.3	33.3	
소속별	대학	36.4	16.4	23.6	18.2	5.5	12.151
	연구기관	22.2	27.8	19.4	27.8	2.8	
	언론사	6.7	26.7	26.7	36.7	3.3	
정치적 성향	보수	22.2	18.5	33.3	18.5	7.4	25.286**
	중도	10.0	45.0	17.5	25.0	2.5	
	진보	37.0	7.4	22.2	29.6	3.7	

주: 1) +p<0.1, *p<0.05, ** p<0.01, ***p<0.001

2) “귀하는 전문가로서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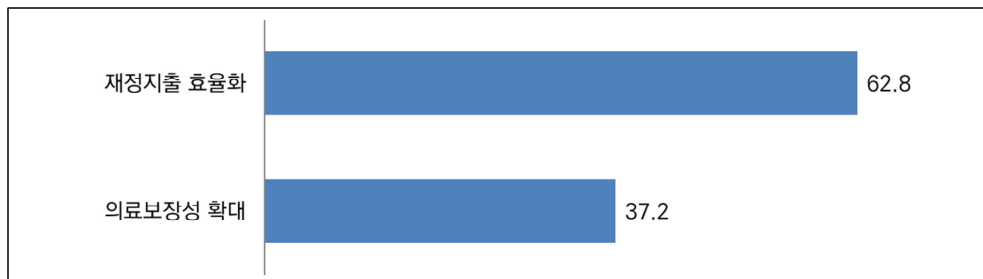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향후 의료급여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재정지출 효율화’가 의료보장성 확대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62.8%를 차지함.

○ 의료보장성 확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37.2%로 나타남.

[그림 4-127] [전문가] 향후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향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향후 의료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전공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보수와 중도 성향의 전문가는 ‘재정지출 효율화’(각각 74.1%, 75.0%)를 선택한 비중이 높았으나 진보 성향의 전문가는 ‘의료보장성 확대’(51.9%)를 선택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한편, 전공에 따라서는 경상법정, 보건의료, 인문사회 계열 전문가 모두 ‘재정 지출 효율화’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단, 재정 지출 효율화를 선택한 전문가 비율은 경상법정, 보건의료, 인문사회 순으로 낮아지고 있음(76.9%, 66.7%, 53.2%).

〈표 4-33〉 [전문가] 집단별 향후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향

(단위: %)

구분		의료보장성 확대	재정지출 효율화	χ^2
전체		37.2	62.8	-
성별	남	33.8	66.2	0.946
	여	42.6	57.4	
전공별	경상법정	23.1	76.9	6.622+
	인문사회	46.8	53.2	
	보건의료	33.3	66.7	
	기타	0.0	100.0	
소속별	대학	43.6	56.4	2.419
	연구기관	36.1	63.9	
	언론사	26.7	73.3	
정치적 성향	보수	25.9	74.1	8.981*
	중도	25.0	75.0	
	진보	51.9	48.1	

주: 1) +p<0.1, *p<0.05, **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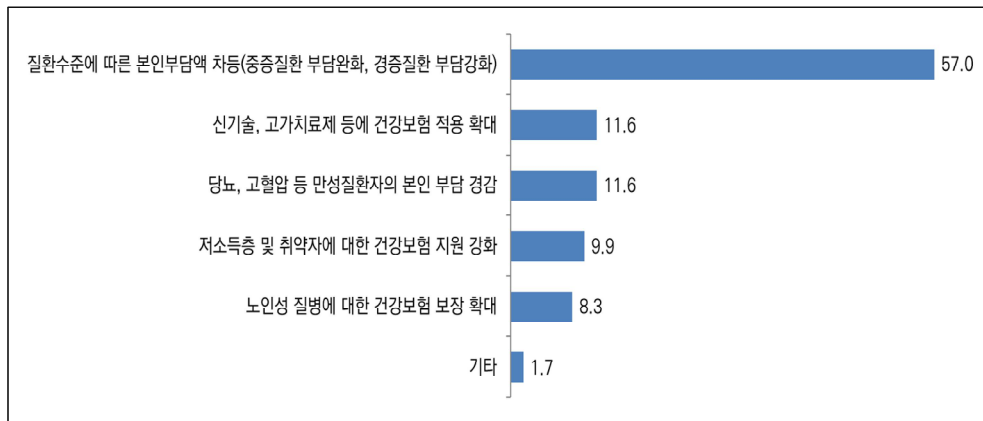
2) “귀하는 전문가로서 향후 의료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질환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등’을 꼽은 전문가의 비중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남(57.0%).

○ 한편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신기술, 고가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각각 11.6%), ‘저소득층 및 취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9.9%), ‘노인성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8.3%)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4-128] [전문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선호도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기존 수행된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2012년과 2014년에는 ‘중증질환 보장 확대’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난 반면,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에는 ‘질환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등’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남.

○ ‘질환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등’ 보기 문항이 포함된 2015년 이후 조사를 살펴보면, 2018년까지 30%대에 머물렀던 본인부담액 차등에 대한 선호가 2019년 57.0%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34〉 전문가] 연도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선호도

(단위: %)

연도	구분	비율
2012년	중증질환 보장 확대	49.0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10.0
	노인성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4.0
	신기술, 고가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7.0
	본인부담액 연간 상한액 지정	30.0
	기타	0.0
	합계	100.0
2014년	중증질환 보장 확대	48.0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9.0
	노인성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8.0
	신기술, 고가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6.0
	본인부담액 연간 상한액 지정	28.0
	기타	1.0
	합계	100.0
2015년	신기술, 고가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0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18.0
	저소득층 및 취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17.0
	본인부담액 연간 상한액 지정	13.0
	질환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등	32.0
	합계	100.0
2016년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17.0
	노인성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7.0
	신기술, 고가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16.0
	저소득층 및 취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24.0
	질환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등	36.0
	기타	0.0
	합계	100.0
2018년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12.0
	노인성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22.0
	신기술, 고가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8.0
	저소득층 및 취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18.0
	질환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등	39.0
	기타	1.0
	합계	100.0
2019년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11.6
	노인성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8.3
	신기술, 고가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11.6
	저소득층 및 취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9.9
	질환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등	57.0
	기타	1.7
	합계	100.0

자료: 1) 김태완 외(2012), 김미곤 외(2014), 김미곤 외(2015), 김미곤 외(2016), 김미곤 외(2018)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선호를 전문가 집단별로 살펴보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단, ‘질환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중도 성향의 전문가는 80.0%가 해당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보수와 진보 성향의 전문가는 각각 40.7%, 48.1%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표 4-35〉 [전문가] 집단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 선호도

(단위: %)

구분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노인성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신기술, 고가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저소득층 및 취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질환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등	기타	χ^2
전체		11.6	8.3	11.6	9.9	57.0	1.7	-
성별	남	12.2	9.5	12.2	9.5	54.1	2.7	2.050
	여	10.6	6.4	10.6	10.6	61.7	0.0	
전공별	경상법정	11.5	3.8	15.4	3.8	65.4	0.0	10.323
	인문사회	12.9	11.3	9.7	11.3	51.6	3.2	
	보건의로	6.7	6.7	13.3	10.0	63.3	0.0	
	기타	33.3	0.0	0.0	33.3	33.3	0.0	
소속별	대학	12.7	12.7	12.7	12.7	47.3	1.8	12.925
	연구기관	8.3	8.3	5.6	2.8	75.0	0.0	
	언론사	13.3	0.0	16.7	13.3	53.3	3.3	
정치적 성향	보수	11.1	3.7	22.2	18.5	40.7	3.7	22.441*
	중도	5.0	5.0	10.0	0.0	80.0	0.0	
	진보	16.7	13.0	7.4	13.0	48.1	1.9	

주: 1) +p<0.1, *p<0.05, ** p<0.01, ***p<0.001

2) “귀하는 전문가로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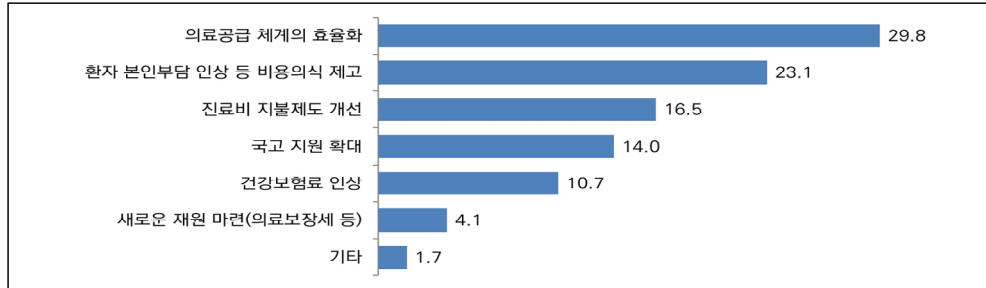
□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응답 비율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비용의식 제고’(23.1%),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16.5%), ‘국고 지원 확대’(14.0%)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건강보험료 인상’(10.7%), ‘새로운 재원 마련’(4.1%)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4-129] [전문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선호도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 방안에 대한 응답은 전문가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전문가의 전공에 따라 경상법정계열 전문가는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비용의식 제고’(38.5%), 인문사회계열 전문가는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33.9%), 보건 의료계열 전문가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30.0%)을 가장 많이 선택함.

〈표 4-36〉 [전문가] 집단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선호도

(단위: %)

구분	구분	국고 지원 확대	건강 보험료 인상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새로운 재원 마련 (의료 보장세 등)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비용의식 제고	기타	x ²
전체		14.0	10.7	29.8	16.5	4.1	23.1	1.7	-
성별	남	14.9	9.5	25.7	18.9	4.1	24.3	2.7	3.493
	여	12.8	12.8	36.2	12.8	4.3	21.3	0.0	
전공별	경상법정	11.5	7.7	26.9	11.5	3.8	38.5	0.0	32.095*
	인문사회	14.5	11.3	33.9	12.9	4.8	21.0	1.6	
	보건의료	13.3	10.0	26.7	30.0	3.3	16.7	0.0	
	기타	33.3	33.3	0.0	0.0	0.0	0.0	33.3	
소속별	대학	16.4	12.7	29.1	12.7	5.5	23.6	0.0	15.539
	연구기관	11.1	11.1	30.6	27.8	5.6	13.9	0.0	
	언론사	13.3	6.7	30.0	10.0	0.0	33.3	6.7	
정치적 성향	보수	7.4	7.4	40.7	18.5	0.0	18.5	7.4	20.176+
	중도	7.5	7.5	25.0	22.5	5.0	32.5	0.0	
	진보	22.2	14.8	27.8	11.1	5.6	18.5	0.0	

주: 1) +p<0.1, *p<0.05, ** p<0.01, ***p<0.001

2) “귀하는 전문가로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생각을 기존 수행된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의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기존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2019년 조사결과도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비용의식 제고’에 대한 응답 비율이 11.1%(2018년)에서 23.1%(2019년)로 크게 증가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료공급 체계 효율화 못지않게 환자 본인부담액의 인상을 통한 수요자의 비용의식 제고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4-37〉 [전문가]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선호도

(단위: %)

연도	구분	비율
2012년	국고 지원 확대	12.0
	건강보험료 인상	11.0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31.0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22.0
	새로운 재원 마련(의료보장제 등)	15.0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비용의식 제고	9.0
	기타	0.0
	합계	100.0
2014년	국고 지원 확대	24.0
	건강보험료 인상	10.0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39.0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18.0
	새로운 재원 마련(의료보장제 등)	5.0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비용의식 제고	4.0
	기타	0.0
	합계	100.0
2015년	국고 지원 확대	19.0
	건강보험료 인상	7.0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41.0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16.0
	새로운 재원 마련(의료보장제 등)	5.0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비용의식 제고	12.0
	합계	100.0

연도	구분	비율
2016년	국고 지원 확대	25.0
	건강보험료 인상	3.0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37.0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20.0
	새로운 자원 마련(의료보장제 등)	4.0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비용의식 제고	11.0
	합계	100.0
2018년	국고 지원 확대	16.0
	건강보험료 인상	11.0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29.0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22.0
	새로운 자원 마련(의료보장제 등)	9.0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비용의식 제고	11.0
	기타	2.0
	합계	100.0
2019년	국고 지원 확대	14.0
	건강보험료 인상	10.7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29.8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16.5
	새로운 자원 마련(의료보장제 등)	4.1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비용의식 제고	23.1
	기타	0.0
	합계	100.0

자료: 1) 김태완 외(2012), 김미곤 외(2014), 김미곤 외(2015), 김미곤 외(2016), 김미곤 외(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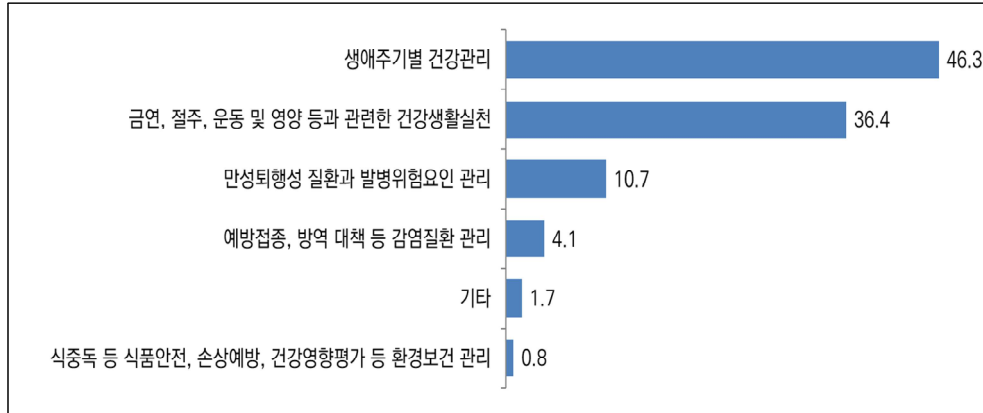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는 국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46.3%)라고 응답하였음.

○ 전문가는 '금연, 절주, 운동 및 영양 등과 관련한 건강생활실천'(36.4%), '만성 퇴행성 질환과 발병위험요인 관리'(10.7%), '예방접종, 방역 대책 등 감염질환 관리'(4.1%) 보다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임신·수유부, 성인, 노인 등의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그림 4-130] [전문가] 국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선호도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국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응답은 전문가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경상법정 및 인문사회계열 전문가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각각 61.5%, 56.5%)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보건의료계열 전문가는 ‘금연, 절주, 운동 및 영양 등과 관련한 건강생활실천’(60.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또한 보수와 진보적 성향의 전문가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각각 44.4%, 57.4%)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중도적 성향의 전문가는 ‘금연, 절주, 운동 및 영양 등과 관련한 건강생활실천’(42.5%)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4-38〉 [전문가] 집단별 국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선호도

(단위: %)

구분		금연, 절주, 운동 및 영양 등과 관련한 건강생활실천	만성 퇴행성 질환과 발병위험요인 관리	예방접종, 방역 대책 등 감염질환 관리	식중독 등 식품안전, 손상예방, 건강영향평가 등 환경보건 관리	생애주기별 인구집단 (모성, 영유아, 노인인구) 건강관리	기타	χ^2
전체		36.4	10.7	4.1	0.8	46.3	1.7	-
성별	남	44.6	6.8	5.4	1.4	40.5	1.4	9.212
	여	23.4	17.0	2.1	0.0	55.3	2.1	
전공별	경상법정	30.8	3.8	3.8	0.0	61.5	0.0	79.623***
	인문사회	29.0	11.3	3.2	0.0	56.5	0.0	
	보건의료	60.0	13.3	6.7	0.0	16.7	3.3	
	기타	0.0	33.3	0.0	33.3	0.0	33.3	
소속별	대학	38.2	7.3	3.6	0.0	49.1	1.8	6.039
	연구기관	33.3	13.9	5.6	0.0	47.2	0.0	
	언론사	36.7	13.3	3.3	3.3	40.0	3.3	
정치적 성향	보수	37.0	7.4	3.7	0.0	44.4	7.4	18.722*
	중도	42.5	15.0	10.0	0.0	32.5	0.0	
	진보	31.5	9.3	0.0	1.9	57.4	0.0	

주: 1) +p<0.1,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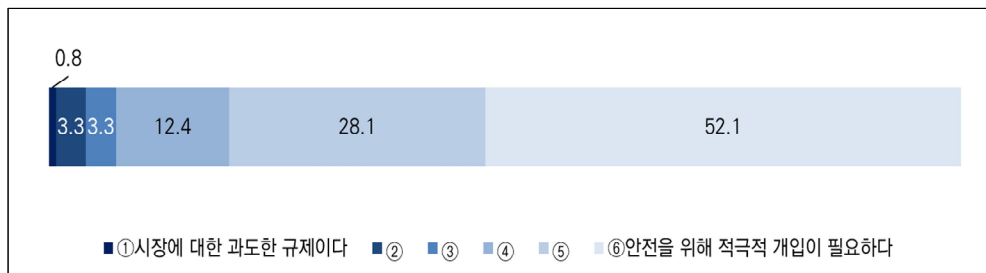
2) “귀하는 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는 라돈침대, 액상 전자담배 등에 대한 정부의 개입(제조 및 판매, 수입규제 등)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가 ‘안전을 위해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함(92.6%).

〔그림 4-131〕 [전문가] 정부의 라돈침대, 액상 전자담배 등에 대한 개입 필요성 인식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국민건강을 위한 라돈침대, 액상 전자담배 등에 대한 정부 개입(제조 및 판매, 수입규제 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라돈침대, 액상 전자담배 등에 대한 정부 개입(제조 및 판매, 수입규제 등)에 대한 응답은 전문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보수적 성향의 전문가는 ‘안전을 위해 개입이 필요하다’고 74.1%가 응답하였으며, 중도적 성향의 전문가는 95.0%, 진보성향의 전문가는 100.0%가 응답함.

〈표 4-39〉 [전문가] 집단별 정부의 라돈침대, 액상 전자담배 등에 대한 개입 필요성 인식

(단위: %)

구분		①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다	②	③	④	⑤	⑥안전을 위해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χ^2
전체		0.8	3.3	3.3	12.4	28.1	52.1	-
성별	남	1.4	5.4	4.1	13.5	27.0	48.6	4.195
	여	0.0	0.0	2.1	10.6	29.8	57.4	
전공별	경상법정	0.0	7.7	7.7	11.5	38.5	34.6	13.799
	인문사회	1.6	1.6	3.2	16.1	27.4	50.0	
	보건의료	0.0	3.3	0.0	6.7	23.3	66.7	
	기타	0.0	0.0	0.0	0.0	0.0	100.0	
소속별	대학	1.8	3.6	1.8	10.9	25.5	56.4	3.925
	연구기관	0.0	2.8	2.8	13.9	27.8	52.8	
	언론사	0.0	3.3	6.7	13.3	33.3	43.3	
정치적 성향	보수	3.7	11.1	11.1	18.5	18.5	37.0	24.082**
	중도	0.0	2.5	2.5	15.0	35.0	45.0	
	진보	0.0	0.0	0.0	7.4	27.8	64.8	

주: 1) +p<0.1, *p<0.05, ** p<0.01, ***p<0.001

2) “귀하는 전문가로서 국민건강을 위한 라돈침대, 액상 전자담배 등에 대한 정부 개입(제조 및 판매, 수입규제 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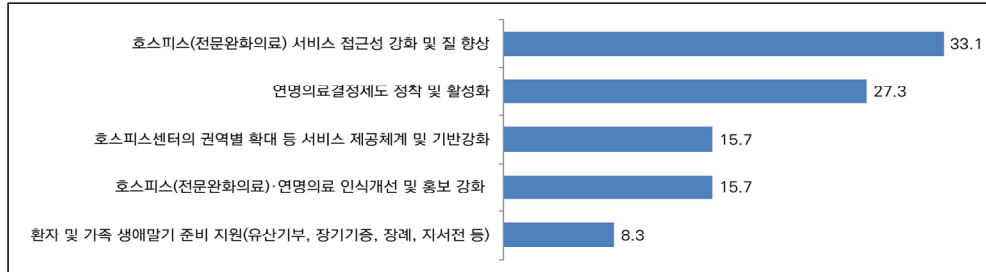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는 좋은 죽음(웰다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호스피스(전문완화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질 향상’을 꼽음(33.1%).

○ 다음으로 좋은 죽음을 위해 중요한 정책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27.3%), ‘호스피스(전문완화의료)·연명의료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와 ‘호스피스센터의 권역별 확대 등 서비스 제공체계 및 기반강화’(각각 15.7%)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32] [전문가] 좋은 죽음(웰다잉)을 위한 정책 선호도

(단위: %)



주: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증대로 인해 죽음의 질 확보를 위한 좋은 죽음(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귀하는 전문가로서 좋은 죽음(웰다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좋은 죽음(웰다잉)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응답은 전문가 소속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대학 소속 전문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29.1%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연구기관과 언론사 소속 전문가는 ‘호스피스(전문완화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질 향상’을 각각 47.2%, 33.3%로 가장 많이 선택함.

〈표 4-40〉 [전문가] 집단별 좋은 죽음(웰다잉)을 위한 정책 선호도

(단위: %)

구분		호스피스 연명의료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질 향상	연명의료결 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환자 및 가족 생애말기 준비 지원	호스피스센터의 권역별 확대 등 서비스 제공체계 및 기반강화	x ²
전체		15.7	33.1	27.3	8.3	15.7	-
성별	남	16.2	33.8	25.7	9.5	14.9	0.655
	여	14.9	31.9	29.8	6.4	17.0	
전공별	경상법정	11.5	46.2	30.8	3.8	7.7	14.999
	인문사회	12.9	25.8	29.0	12.9	19.4	
	보건의료	23.3	36.7	23.3	0.0	16.7	
	기타	33.3	33.3	0.0	33.3	0.0	
소속별	대학	20.0	23.6	29.1	5.5	21.8	13.801+
	연구기관	2.8	47.2	25.0	13.9	11.1	
	언론사	23.3	33.3	26.7	6.7	10.0	
정치적 성향	보수	25.9	14.8	37.0	7.4	14.8	7.584
	중도	15.0	40.0	22.5	7.5	15.0	
	진보	11.1	37.0	25.9	9.3	16.7	

주: 1) +p<0.1, *p<0.05, ** p<0.01, ***p<0.001

2)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증대로 인해 죽음의 질 확보를 위한 좋은 죽음(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귀하는 전문가로서 좋은 죽음(웰다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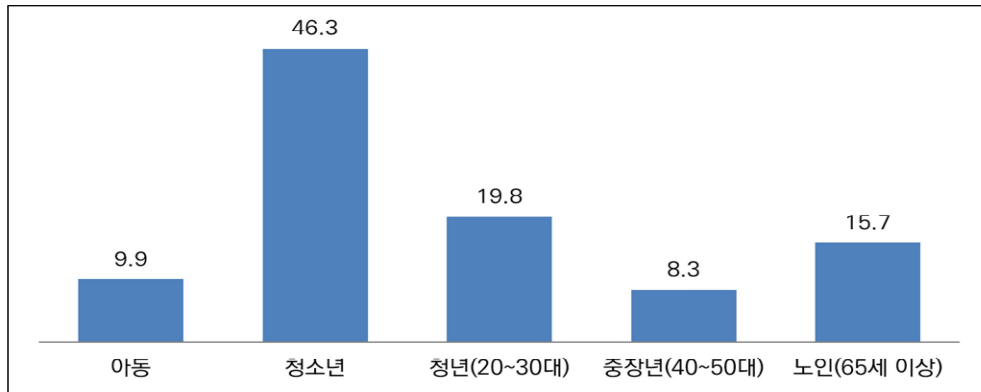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는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이 ‘청소년’ (46.3%)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다음으로 중요한 대상의 우선순위는 ‘청년’(19.8%), ‘노인’(15.7%) ‘아동’(9.9%), ‘중장년’(8.3%)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33] [전문가]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에 대한 응답은 전문가의 전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경상법정계열과 보건의료계열 전문가는 ‘청소년’을 가장 시급한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각각 61.5%, 63.3%), 인문사회계열 전문가는 ‘청소년’(30.6%) 못지않게 ‘청년’을 정신건강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보고 있음(29.0%).

□ 전문가는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발병 초기 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중재지원’(26.4%)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대 및 운영지원’(20.7%)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자살예방 및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확대’(13.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등)’, ‘퇴원 후 지속 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각각 11.6%)가 다음 순으로 나타남.

〈표 4-41〉 [전문가] 집단별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

(단위:%)

구분		아동	청소년	청년 (20~30대)	중장년 (40~50대)	노인 (65세 이상)	χ^2
전체		9.9	46.3	19.8	8.3	15.7	-
성별	남	10.8	54.1	13.5	6.8	14.9	7.088
	여	8.5	34.0	29.8	10.6	17.0	
전공별	경상법정	7.7	61.5	11.5	7.7	11.5	21.744*
	인문사회	16.1	30.6	29.0	6.5	17.7	
	보건의료	0.0	63.3	10.0	10.0	16.7	
	기타	0.0	66.7	0.0	33.3	0.0	
소속별	대학	5.5	45.5	16.4	10.9	21.8	12.857
	연구기관	16.7	44.4	13.9	11.1	13.9	
	언론사	10.0	50.0	33.3	0.0	6.7	
정치적 성향	보수	3.7	51.9	18.5	14.8	11.1	4.107
	중도	12.5	45.0	20.0	5.0	17.5	
	진보	11.1	44.4	20.4	7.4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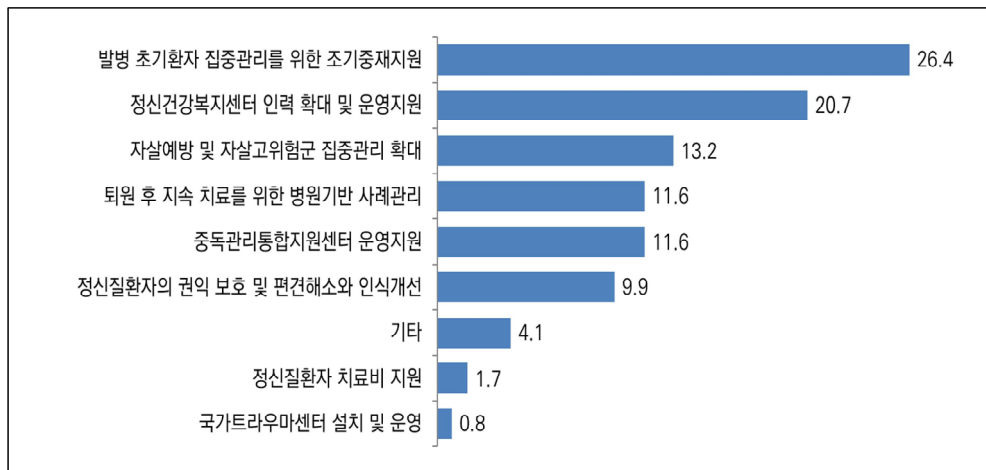
주: 1) +p<0.1, *p<0.05, ** p<0.01, ***p<0.001

2) “귀하는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4-134] [전문가]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책 선호도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신질환자(우울증, 조현병 등)에 의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책에 대한 응답은 전문가의 전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경상법정과 인문사회계열 전문가는 ‘발병 초기 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 중재지원’을 각각 26.9%, 29.0%로 가장 선호하였으며, 보건의료계열 전문가는 ‘자살예방 및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확대’를 26.7%로 가장 선호함.

〈표 4-42〉 [전문가] 집단별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책 선호도

(단위:%)

구분	1	2	3	4	5	6	7	8	9	χ^2
전체	20.7	0.8	11.6	13.2	1.7	26.4	11.6	9.9	4.1	-
성별	남	17.6	1.4	16.2	14.9	2.7	21.6	8.1	12.2	12.096
	여	25.5	0.0	4.3	10.6	0.0	34.0	17.0	6.4	
전공별	경상법정	19.2	0.0	23.1	7.7	0.0	26.9	3.8	15.4	77.947***
	인문사회	22.6	0.0	8.1	9.7	0.0	29.0	16.1	9.7	
	보건의료	20.0	0.0	10.0	26.7	3.3	23.3	10.0	3.3	
	기타	0.0	33.3	0.0	0.0	33.3	0.0	0.0	33.3	
소속별	대학	23.6	0.0	14.5	21.8	0.0	20.0	9.1	7.3	20.195
	연구기관	19.4	2.8	16.7	2.8	2.8	27.8	11.1	13.9	
	언론사	16.7	0.0	0.0	10.0	3.3	36.7	16.7	10.0	
정치적 성향	보수	7.4	0.0	14.8	14.8	3.7	25.9	22.2	7.4	17.732
	중도	12.5	0.0	10.0	15.0	2.5	32.5	12.5	12.5	
	진보	33.3	1.9	11.1	11.1	0.0	22.2	5.6	9.3	

주: 1) +p<0.1, *p<0.05, ** p<0.01, ***p<0.001

2)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신질환자(우울증, 조현병 등)에 의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3) 1-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대 및 운영지원, 2-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및 운영, 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등), 4-자살예방 및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확대, 5-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6-발병 초기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중재지원, 7-퇴원 후 지속 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 관리, 8-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및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9-기타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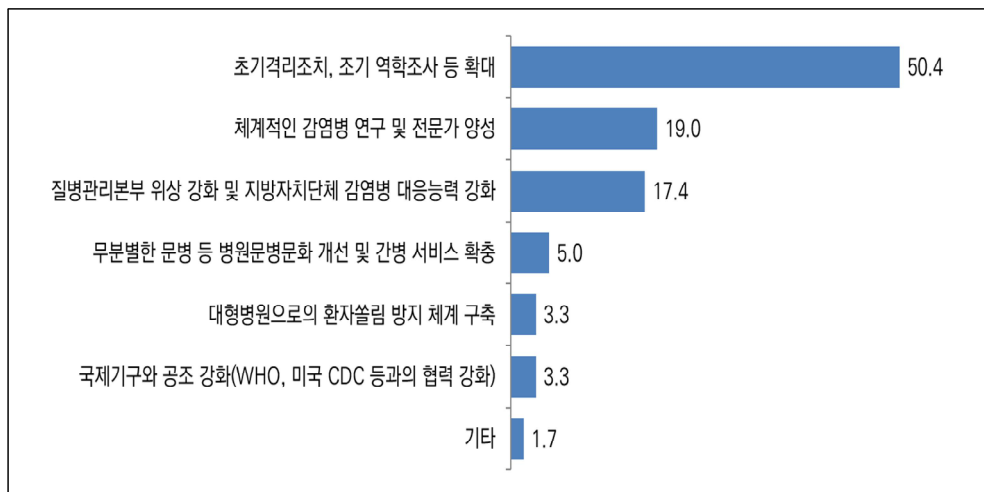
□ 감염병 예방 관련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전문가의 50.7%가 ‘초기격리조치, 조기 역학조사 등 확대’라고 응답함.

○ ‘체계적인 감염병 연구 및 전문가 양성’(19.0%), ‘질병관리본부 위상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17.4%) 등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됨.

- 초기 격리조치와 조기 역학조사 확대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과 같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발생한 감염병 확산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입국 관리를 통한 감염병 유입 차단과 감염 환자 조기 발견, 정밀한 역학 조사를 통한 접촉자 격리를 통해 확산을 차단하는 등 초기 대응에 집중하고 있음.

[그림 4-135] [전문가] 감염병 예방 관련 과제 중요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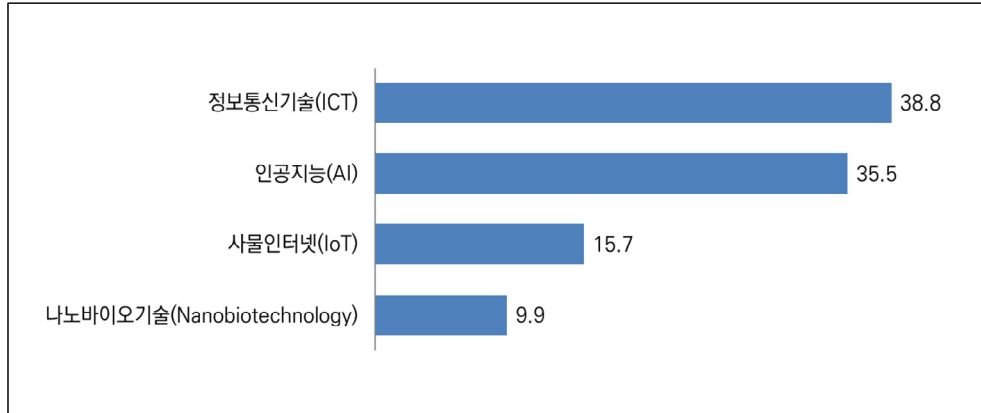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다음의 감염병 예방 관련 과제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는 의료서비스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보건의료 기술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공지능(AI)’이 35.5%로 유사하게 나타남.
- 윤강재 외(2016)에 따르면, ICT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융합은 의료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AI 기반 의료기기는 기존 의료기기보다 성능, 효율, 질 등을 높일 수 있을 기대되고 있음(의료기기산업팀, 2018).

[그림 4-136] [전문가] 의료서비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기술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의료서비스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보건의료 기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다.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의 인식 비교

□ 국민에게는 보건의료 정책 만족도를, 전문가에게는 지난 3년(2017-2019)간의 보건의료 정책성과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국민은 평균 4.1점으로 ‘다소 만족’에 가까운 만족도를 보였으나, 전문가는 평균 3.2점으로 ‘다소 미흡’에 가깝게 평가하였음(6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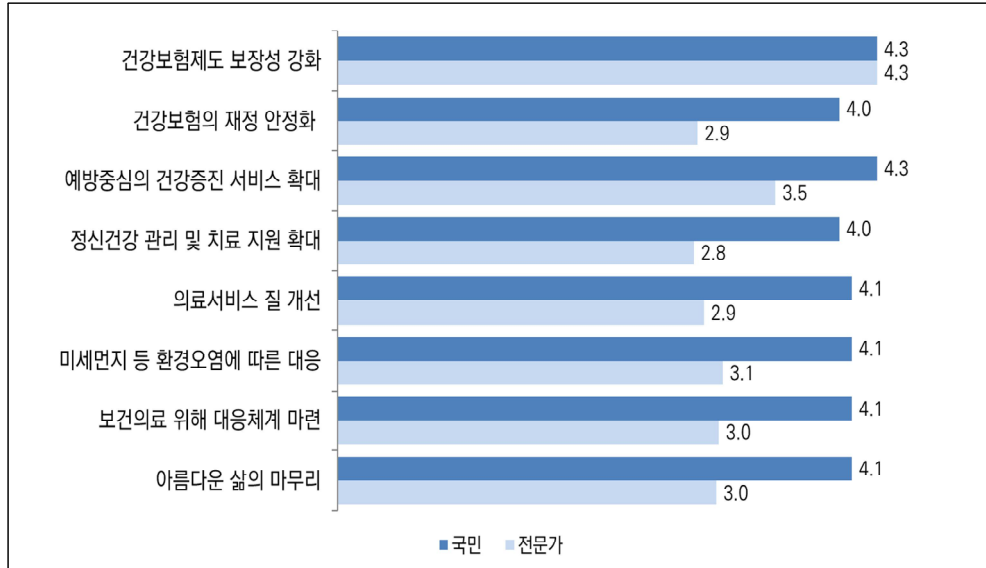
○ 보건의료정책별 만족도(평가)를 보면, 국민과 전문가 모두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부여함.

- 국민은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와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정책에 대한 만족도(각각 4.3점)가 가장 높았으며, 전문가는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4.3점)에 대한 지난 3년간의 성과가 ‘다소 우수’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음.

• 전문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외의 보건의료 정책들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보고 있음.

[그림 4-137] [국민-전문가] 보건의료정책별 만족도(성과평가)

(단위: 점)



주: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음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에 대해 ‘① 매우 불만족~⑥ 매우 만족’, “귀하는 전문가로서 각 보건의료정책 영역의 지난 3년간(2017~2019)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미흡~⑥매우 우수’ 6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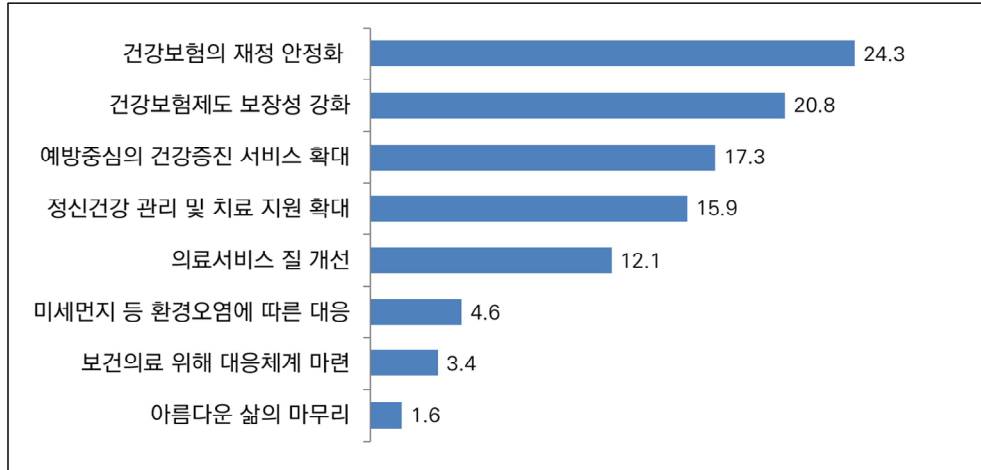
□ 국민은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24.3%)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전문가는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 확대’(4.9점)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음.

○ 국민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다음으로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20.8%)를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가는 정신건강 관리 관련 정책 다음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함(각각 4.8점).

○ 비록 국민과 전문가가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정책은 달랐지만, 전문가와 국민 모두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138] [국민]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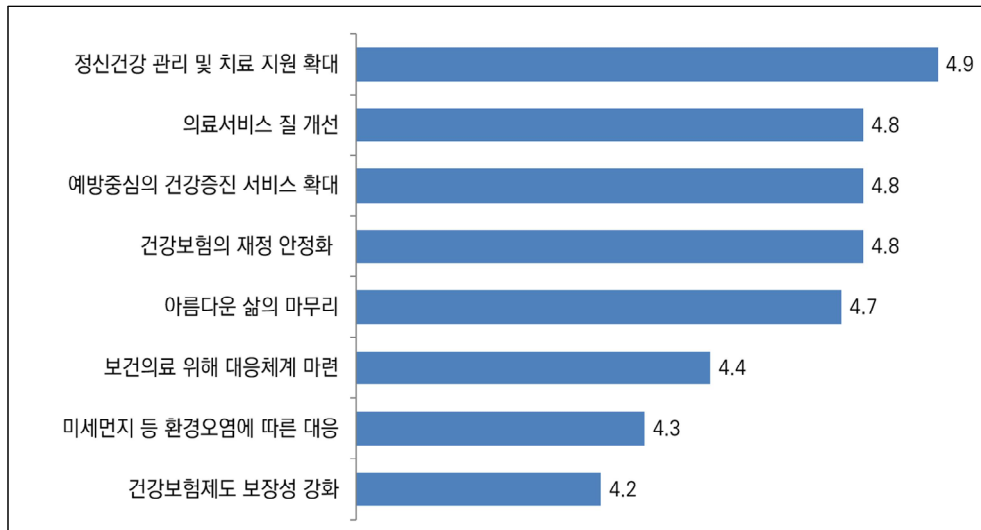


주: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보건의료정책 중 보다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4-139] [전문가]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다음의 보건의료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해주시요.”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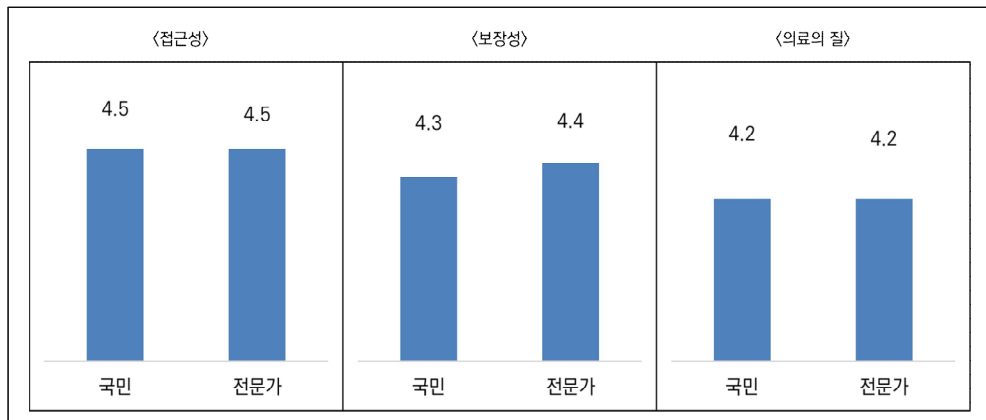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의료서비스 항목별로 만족도(평가)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의료의 접근성’(각각 4.5점), ‘의료의 보장성’(각각 4.3점, 4.4점), ‘의료의 질’(각각 4.2점) 순으로 나타남.

○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국민은 ‘의료의 보장성’에 대한 체감 만족도가 다 전문가의 평가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음.

○ 한편, ‘의료의 질’은 국민의 만족도와 전문가의 평가 점수가 모두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4-140] [국민-전문가] 의료서비스 항목별(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 만족도 및 평가 (단위: 점)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의료와 관련한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평가)하십니까?”에 대해 ‘① 매우 불만족(매우 부정적)~⑥ 매우 만족(매우 긍정적)’ 6점 척도로 측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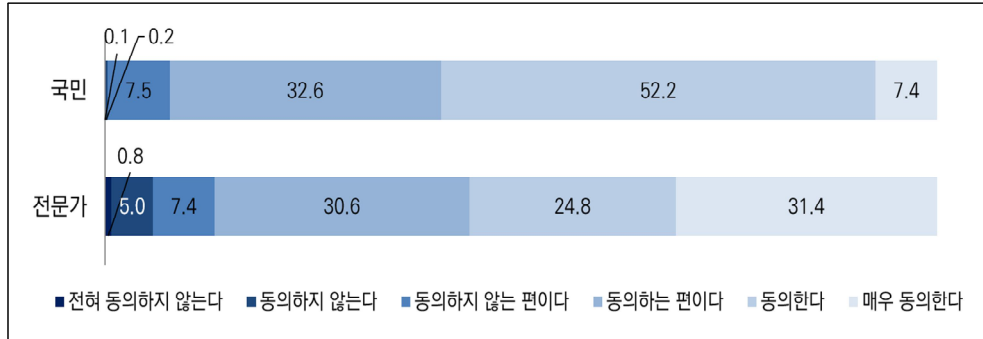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쪽의 응답이 국민 92.2%, 전문가 86.8%로 과반 이상으로 높음.

○ 실제로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대비 약 66%이고 1인당 업무 강도는 OECD 평균 대비 3배 이상 높으며, 간호사의 수도 OECD 대비 약 48%에 불과하고 1인당 업무 강도도 OECD 평균보다 약 4배 이상으로 보고됨(신영석 외, 2018).

[그림 4-141] [국민-전문가] 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생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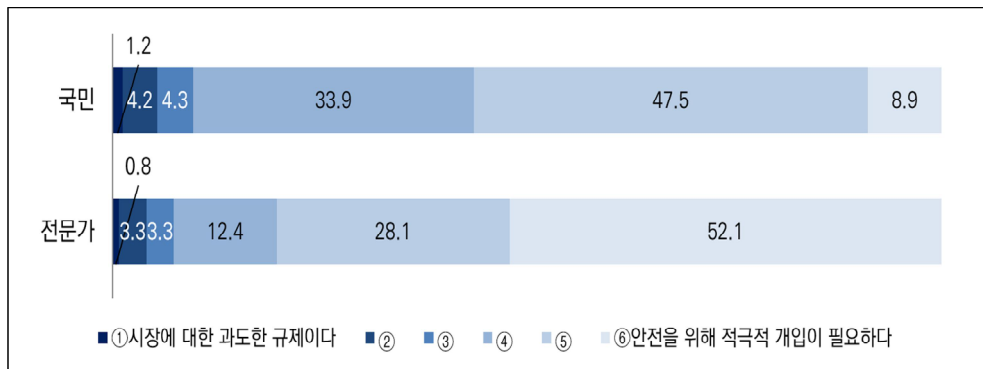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국민건강을 위한 라돈침대, 액상 전자담배 등에 대한 정부 개입(제조 및 판매, 수입규제 등)에 대하여 ‘안전을 위해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0.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국민은 90.3%(33.9%+47.5%+8.9%), 전문가는 92.6%(12.4%+28.1%+52.1%)가 개입의 필요성에 동의함.

[그림 4-142] [국민-전문가] 정부의 라돈침대, 액상 전자담배 등에 관한 정부 개입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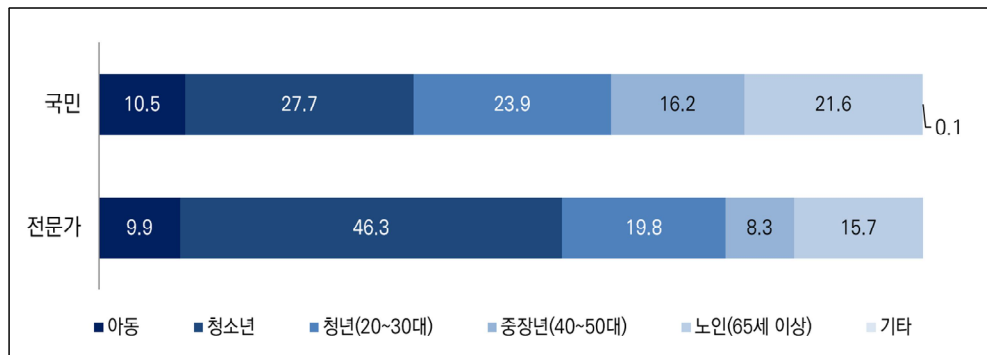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국민건강을 위한 라돈침대, 액상 전자담배 등에 대한 정부 개입(제조 및 판매, 수입규제 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으로 국민과 전문가 모두 ‘청소년’을 꼽음(각각 27.7%, 46.3%).

○ 청소년 다음으로 초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으로는 ‘청년’(각각 23.9%, 19.8%), ‘노인’(각각 21.6%, 15.7%), ‘중장년’(각각 16.2%, 8.3%), ‘아동’(각각 10.5%, 9.9%)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43] [국민-전문가]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 (단위: %)



주: “귀하는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제 5 장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복지정책 미래신호 예측

제1절 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제3절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 미래신호 탐색

제4절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 미래신호 예측

5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 보건복지정책 미래신호 예측

- 본 장에서는 2019년 1월 ~ 2019년 9월(3분기)기간 동안 트위터 등 315개 온라인 채널로부터 수집한 3,176,017건의 비정형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보건복지정책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음.
- 미래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변화를 예감할 수 있는 약신호(weak signal)를 탐지하는 것임(Yoon, 2012; 박찬국·김현재, 2015).
- 약신호는 '미래에 가능한 변화의 징후'(Ansoff, 1975)로 시간이 흐르면서 강신호(strong signal)로, 강신호는 다시 트렌드(trend)나 메가트렌드(mega trend)로 발전할 수 있음.

제1절 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1. 분석의 필요성

-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핵심주제로 선정된 4차 산업 혁명의 돌풍은 우리사회의 대변혁을 예측하고 있음(송주영 & 송태민, 2019).
-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임.
- 정부는 보건복지정책에서 빅데이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 플랫폼 구축, 법·제도 검토, 대국민 서비스 방안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음(오미애, 2019).

- 미래예측(foresight)은 기술, 시장, 조직, 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래의 상황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일련의 전략을 제시하는 가치 창조적 행위로 (Georghhiou et al., 2008), 미래변화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미래의 핵심기술을 선별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주기적으로 국가의 미래트렌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정근하, 2010).
- 그동안 미래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 왔으나 대부분 전문가의 지식과 의견에 따라 미래를 전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음(Yoo et al., 2009).
 - 최근 SNS를 비롯한 온라인 채널에서 생산되는 텍스트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가 실제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예측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수집기술과 분석기술의 어려움으로 활발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송태민·송주영, 2017).
- 현 정부는 인구구조의 변화, 제4차 산업혁명, 저성장양극화 등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건설하고, ‘복지-고용-성장’ 간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목표와 추진전략(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을 제시함(교육부, 2019).
 -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를 개혁하고,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을 추진하며,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등 발전을 추진함.
 -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을 존중함.
 - 혁신 능력 배양 및 구현을 위해, 인적자본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를 혁신하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추진함.

2. 분석의 목적

- 우리나라에서 수집가능한 모든 온라인 채널에서 언급된 보건복지 관련 문서를 수집하여 주제 분석과 감성분석을 통하여 보건복지 주요 키워드를 분류하고 보건복지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주요 정책과 이슈에 대한 미래신호를 탐지하여 예측모형을 제시하고자 함.
- 이장의 분석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건복지와 관련한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주제분석(text mining)과 감성분석(opinion mining)을 실시함.
 - 단어빈도와 문서빈도를 활용하여 보건복지 정책과 주요 이슈에 대한 신호를 탐지함.
 - 머신러닝 분석을 통하여 탐지된 보건복지 주요 신호에 대한 미래신호를 예측함.

제2절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1. 분석개요

- 오늘날 미래의 환경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미래의 변화를 예감할 수 있는 약신호(weak signal)를 탐지하는 것임(Yoon, 2012; 박찬국·김현제, 2015).
- 약신호는 ‘미래에 가능한 변화의 징후’(Ansoff, 1975)로 시간이 흐르면서 강신호(strong signal)로, 강신호는 다시 트렌드(trend)나 메가트렌드(mega trend)로 발전할 수 있음.
- Hiltunen(2008)은 약신호를 미래신호(future sign)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미래신호를 신호(signal), 이슈(issue), 이해(interpretation)와 같이 3차원의 미래신호 공간으로 설명하였음.

□ 온라인 채널에서 수집된 텍스트 형태의 문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마이닝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문서 내에서 출현하는 단어별 빈도를 산출해야 함.

○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위해서는 단어빈도(Term Frequency, TF)와 문서빈도(Document Frequency, DF) 산출해야 함.

- 단어빈도의 산출은 각 문서에서 단어별 출현빈도를 산출하고, 문서별 출현 빈도를 합산하여 산출할 수 있음.
- 문서빈도는 특정단어가 출현하는 문서의 수를 나타내며, 텍스트마이닝에서 중요한 정보의 추출을 위해서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TF-IDF는 여러 문서로 이루어진 문서군이 있을 때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임(정근하, 2010).

- Spärck(1972)는 희귀한 단어일수록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역문서 빈도(Inverse Document Frequency, $IDF_j = \log_{10}(\frac{N}{DF_j})$)를 제안하였음.
- 단어빈도 분석에서 희귀한 단어일수록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 단어빈도와 역 문서빈도를 결합하여 'TF-IDF= $TF_{ij} \times IDF_j$ ' 를 산출하여 가중치(단어의 중요도 지수)를 적용함.

□ Yoon(2012)은 웹 뉴스의 문서를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생성된 단어빈도(Term Frequency, TF)와 문서빈도(Document Frequency, DF)를 Hiltunen(2008)의 신호와 이슈로 각각 연계하였음.

○ 단어빈도, 문서빈도, 발생빈도 증가율을 이용하여 KEM(Keyword Emergence Map)과 KIM(Keyword Issue Map)의 키워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작성된 키워드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여 약신호를 선별하였음.

- KEM은 가시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DoV(degree of visibility)를 산출하고, KIM은 확산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DoD(degree of diffusion)를 산출할 수 있음.

$$DoV_{ij} = \left(\frac{TF_{ij}}{NN_j} \right) \times \{1 - tw \times (n - j)\} \quad \text{--- 식 1}$$

$$DoD_{ij} = \left(\frac{DF_{ij}}{NN_j} \right) \times \{1 - tw \times (n - j)\} \quad \text{--- 식 2}$$

- 여기서 NN 은 전체 문서수를 의미하고, TF 는 단어빈도, DF 는 문서빈도, tw 는 시간가중치(본 연구에서 시간가중치는 0.05를 적용), n 은 전체시간구간, j 는 시점을 의미함.

2. 분석자료 및 대상

□ 본 절에서는 국내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 블로그, 카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게시판 등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소셜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 본 분석에서는 292개의 온라인 뉴스사이트, 4개의 블로그(네이버, 티스토리, 네이트, 다음), 2개의 카페(네이버, 다음), 1개의 SNS(트위터), 16개의 게시판(네이버지식인, 네이트지식, 네이트톡, 네이트판 등)의 총 315개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집 가능한 텍스트 기반의 웹문서(버즈)를 소셜 빅데이터로 정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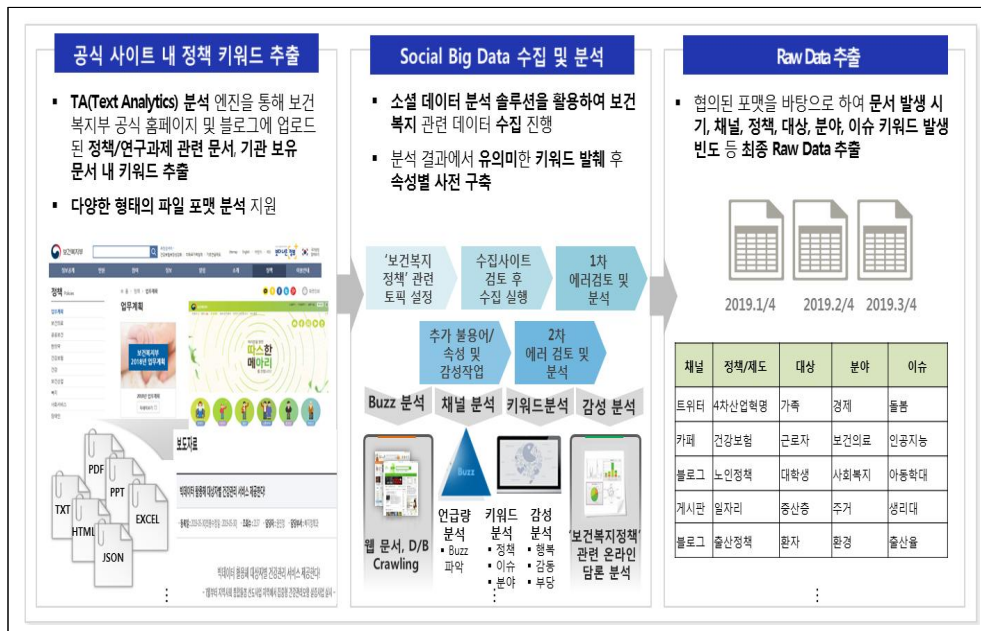
○ 보건복지 관련 토픽의 수집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9. 1. 1~2019. 9. 30까지 해당 채널에서 요일별, 주말, 휴일을 고려하지 않고 매 시간단위로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총 3,176,017건(2019년 1/4분기: 956,885건, 2019년 2/4분기: 891,203건, 2019년 3/4분기: 1,327,929건)의 텍스트(Text) 문서를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시켰음.

○ 본 연구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의 수집은 크롤러(Crawler)를 사용하였고, 토픽의 분류는 주제분석(text mining)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보건복지 토픽 및 토픽 유사어는 모든 관련 문서를 수집하기 위해 ‘보건복지, 보건, 복지, 사회보장, 복지정책, 헬스케어, 의료, 보건의료’를 사용하였음.

○ 온라인 문서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불용어는 ‘보건대, 보건의료관리과, 뷰티케어’ 등을 사용하였음.

□ 보건복지 관련 소셜 빅데이터의 수집 및 분류는 [그림 5-1]과 같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크롤링하여 자연어처리와 주제분석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정책과 이슈를 도출하여 분류하였음.

〔그림 5-1〕 보건복지 주제 분류 분석 절차



3. 분석방법

□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미래신호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림 5-2]와 같이 소셜 빅데이터(SNS, 온라인 뉴스 사이트, 블로그, 카페, 게시판)를 수집하여 분석해야 함.

○ 첫째, 소셜 빅데이터에서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특정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크롤러(Crawler)라는 로봇을 이용함.

○ 둘째, 수집된 정보는 텍스트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연어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기술과 온라인 문서 속에 담긴 감정(긍정/중립/부정)을 분석하기 위한 감성분석(opinion mining) 기술이 필요하고, 텍스트형태의 키워드 분석을 실시함.

- 셋째, 문서에서 분류된 키워드는 텍스트 형태로 통계분석과 데이터마이닝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키워드를 숫자형태로 코딩하여 정형데이터로 변환해야 함.
- 넷째, 미래신호(미래에 보건복지정책의 수요에 변화를 주는 요인)를 탐색하고 예측하는 단계로 미래신호를 탐색하기 위해 단어빈도(TF), 문서빈도(DF), TF-IDF(단어의 중요도 지수)를 분석하고, 키워드의 중요도(KEM)와 확산도(KIM)을 분석하여 미래신호를 탐색함.
- 다섯째, 미래신호를 예측하는 단계로 우선적으로 머신러닝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탐색된 미래신호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정책 수요 감정과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는 미래신호를 찾아냄.

[그림 5-2] 보건복지 소셜 빅데이터 분석 절차 및 방법



□ 여기에서는 한국의 보건복지정책 수요를 설명하는 가장 효율적인 예측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머신러닝의 지도학습(랜덤포레스트 모형, 의사결정나무 모형, 로지스틱회귀 모형)과 비지도학습(연관분석)을 사용하였음.

- 랜덤포레스트(Breiman, 2001)는 기계학습의 분류기법 중 하나로 자료로부터 여러 개의 예측모형을 만든 후, 예측모형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최종 모형을 만들어 보건복지정책 수요에 연관성이 높은 정책요인을 찾을 수 있음.

○ 머신러닝의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방대한 자료 속에서 종속변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측모형을 자동적으로 산출해 줌으로써 각기 다른 속성을 가진 보건복지정책 수요에 대한 요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의사결정나무 형성을 위한 분석 알고리즘으로는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를 사용하였음.
- CHAID는 이산형인 종속변수의 분리기준으로 카이제곱(χ^2 -검정)을 사용하며, 모든 가능한 조합을 탐색하여 최적분리를 찾음.
- 정지규칙(stopping rule)으로 관찰치가 충분하여 상위노드(부모마디)의 최소케이스 수는 100으로 하위노드(자식마디)의 최소 케이스 수는 50으로 설정하였고, 나무깊이는 3수준으로 정하였음.

□ 이 장의 기술분석, 다중응답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의사결정나무분석은 IBM SPSS 23.0을 사용하였고 머신러닝 분석과 시각화는 R 3.6.1을 사용하였음.

4. 분석도구

□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주제분석(text mining)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정형화 데이터로 코드화하여 사용하였음.

□ 보건복지 관련 수요

○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찬성(긍정), 반대(부정)]의 정의는 감정 키워드에 대한 주제 분석 과정을 거쳐 ‘가능, 감면, 강화, 개선, 개편, 검토, 경감, 공급, 기부, 노력, 높은, 누릴, 늘리고, 늘림, 늘어, 다양, 도와, 도움, 도입, 마련, 무료, 발굴, 벗어나, 보호망, 설치, 소중, 수급, 수립, 시행, 신속, 신청, 신청, 실시, 실현, 연장, 완화, 준비, 중요, 증진, 지급, 지원, 진행, 참여, 찾아, 최고, 최우선, 추가, 추진, 추천, 편안, 필요, 해소, 행복, 혜택, 확대, 회복’은 찬성의 감정으로, ‘갈등, 거짓말, 걱정, 고갈, 논란, 농성, 눈물, 무시, 문제, 반대, 복지 잔치, 부담, 부적절, 부족, 불신, 불안, 불안, 비판, 사회문제, 상승, 숨진, 심화, 어려움, 억울, 외면, 저지, 주장, 지적, 축소, 폐지’는 반대의 감정으로 정의하였음.

□ 보건복지 관련 정책

- 보건복지 관련 정책의 정의는 주제 분석의 과정을 거쳐 ‘4차산업혁명, 건강보험, 건강증진, 공공보건의료, 감염병관리, 보건산업, 보건의료정책, 의료서비스, 의료급여, 정신건강, 생명윤리,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노인복지, 보육정책, 무상복지, 복지자원, 사회서비스, 인권학대, 아동복지, 돌봄요양, 일자리, 자립지원, 장애인복지, 출산정책’의 26개 정책으로 해당 정책이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드화하였음.

□ 보건복지 관련 주요 이슈

- 보건복지 관련 주요 이슈의 정의는 주제분석의 과정을 거쳐 ‘고독사, AI, 간병 서비스, 고령화, 치매책임제, 바이오, 복지사각, 돌봄, 개인정보, 거버넌스, 결핵, 결혼, 담배, 연명의료, 무상보육, 방문요양, 방문진료, 베이비부머, 의료정보, 부정수급, 복지카드, 비만, 빈곤, 사회안전망, 생리대, 성폭력, 스튜어드십, 신약, 실손보험, 아동학대, 양극화,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자살, 장애등급제, 정신질환자, 청년수당, 청년실업, 출산율, 탈시설화, 통합서비스, 틀니, 포폴리즘, 플랫폼, 학대, 헬스케어, 희망사다리’의 47개 이슈로 정의하였음.
- 정의된 모든 이슈는 해당 대상이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드화하였음.

□ 보건복지 관련 대상

- 보건복지 관련 대상의 정의는 주제분석의 과정을 거쳐 ‘가족, 국민, 군인, 근로자, 기초수급자, 노숙인, 노인, 독거인, 비정규직, 새터민, 아동, 여자, 영유아, 예술인, 외국인, 의료인, 임산부, 종교인, 종사자, 중년, 신혼부부, 청소년, 취약계층, 피해자, 환자, 청년, 노동자, 서민, 장애인’의 29개 대상으로 정의하였음.
- 정의된 모든 대상은 해당 대상이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드화하였음.

□ 보건복지 관련 분야

- 보건복지 관련 분야의 정의는 주제 분석의 과정을 거쳐 ‘가정, 경제, 노동, 공공

서비스, 교육, 교통, 국민건강, 범죄, 예산, 보건산업, 보건위생, 보건의료, 보육, 보험, 다문화, 노인복지, 복지정보, 빈곤, 사회보장, 에너지, 기초생활, 기초연금,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아동복지, 안전, 요양, 응급의료, 의료기관, 의료자원, 의료정보, 인구, 일·가정양립, 자립지원, 자살, 장애인복지, 정신건강, 종교, 주거복지, 지역복지, 질병, 출산, 통일, 한의약, 환경, 건강, 국민연금, 나눔, 기금, 복지시설, 일자리, 치매'의 52개로 정의하였음.

- 정의된 모든 분야는 해당 분야가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드화하였음.

5. 자료현황

□ 보건복지 관련 온라인 문서 현황은 <표 5-1>과 같음.

- 보건복지 관련 수요는 찬성의 감정을 가진 버즈는 65.9%(2019년 1/4분기: 63.0%, 2019년 2/4분기: 69.5%, 2019년 3/4분기: 65.6%)로 나타났음.
- 보건복지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4차산업혁명(10.7%), 복지자원(9.0%), 무상복지(8.2%), 건강증진(6.3%), 노인복지(6.0%), 기초생활보장(5.5%), 일자리(5.1%), 국민연금(5.1%), 건강보험(5.0%) 등의 순임.
- 보건복지 관련 대상으로는 국민(10.6%), 노인(10.3%), 가족(9.5%), 아동(8.9%), 여자(7.9%), 의료인(7.4%), 환자(6.7%), 취약계층(6.1%), 장애인(5.5%), 근로자(4.2%) 등의 순임.
- 보건복지 관련 주요 분야로는 국민건강(7.8%), 건강(7.8%), 가정(6.8%), 교육(6.4%), 환경(6.2%), 안전(5.8%), 경제(5.2%), 노동(5.1%), 질병(4.1%), 보험(4.0%) 등의 순임.
- 보건복지 관련 주요 이슈로는 AI(18.4%), 결혼(7.4%), 비만(6.8%), 돌봄(5.9%), 고령화(4.3%), 담배(3.9%), 개인정보(3.7%), 바이오(3.3%), 플랫폼(3.2%) 등의 순임.
- 보건복지 관련 수집채널로는 트위터(37.1%), 블로그(30.8%), 카페(18.1%), 뉴스(10.1%), 게시판(3.9%) 순임.

〈표 5-1〉 보건복지 관련 온라인문서(버즈) 현황

구분	항목	N(%)	구분	항목	N(%)
채널	뉴스	32,0962(10.1)	감정	반대	679,186(34.1)
	블로그	979,234(30.8)		찬성	1,312,272(65.9)
	카페	573,658(18.1)		계	1,991,458
	게시판	125,182(3.9)	대상	가족	29,1454(9.5)
	트위터	1,176,981(37.1)		국민	323,656(10.6)
	계	3,176,017		군인	26,473(0.9)
정책	4차산업혁명	191,767(10.7)		근로자	127,415(4.2)
	건강보험	89,211(5.0)		기초수급자	20,045(0.7)
	건강증진	113,271(6.3)		노숙인	7,144(0.2)
	공공보건의료	5,428(0.3)		노인	314,851(10.3)
	감염병관리	38,125(2.1)		독거인	31,407(1.0)
	보건산업	57,356(3.2)		비정규직	15,014(0.5)
	보건의료정책	19,022(1.1)		새터민	948(0.0)
	의료서비스	32,554(1.8)		아동	270,829(8.9)
	의료급여	16,645(0.9)		여자	243,132(7.9)
	정신건강	32,359(1.8)		영유아	43,917(1.4)
	생명윤리	5,257(0.3)		예술인	7,267(0.2)
	국민연금	92,015(5.1)		외국인	40,098(1.3)
	기초생활보장	98,283(5.5)		의료인	225,034(7.4)
	기초연금	19,084(1.1)		임산부	101,180(3.3)
	노인복지	108,524(6.0)		종교인	3,179(0.1)
	보육정책	105,213(5.9)		종사자	43,806(1.4)
	무상복지	147,132(8.2)		중년	1,630(0.1)
	복지자원	161,183(9.0)		신혼부부	26,868(0.9)
	사회서비스	47,916(2.7)		청소년	111,513(3.6)
	인권학대	10,957(0.6)		취약계층	185,604(6.1)
	아동복지	79,319(4.4)		피해자	33,025(1.1)
	돌봄요양	64,654(3.6)		환자	205,649(6.7)
	일자리	90,973(5.1)		청년	115,602(3.8)
	자립지원	14,494(0.8)		노동자	44,710(1.5)
	장애인복지	67,128(3.7)		서민	28,682(0.9)
	출산정책	86,165(4.8)		장애인	168,715(5.5)
	계	1,794,035		계	3,058,847
분야	가정	421,802(6.8)	이슈	고독사	5,101(0.6)
	경제	323,129(5.2)		AI	162,678(18.4)
	노동	319,015(5.1)		간병통합서비스	20,724(2.3)
	공공서비스	151,427(2.4)		고령화	38,029(4.3)
	교육	394,558(6.4)		치매국가책임제	22,231(2.5)
	교통	3,847(0.1)		바이오	28,810(3.3)
	국민건강	483,369(7.8)		복지사각	43,391(4.9)
	범죄	55,200(0.9)		돌봄	51,928(5.9)
	예산	325(0.0)		개인정보	32,814(3.7)

구분	항목	N(%)	구분	항목	N(%)
분야	보건산업	57,356(0.9)	이슈	거버넌스	3,471(0.4)
	보건위생	10,695(0.2)		결핵	10,225(1.2)
	보건의료	81,574(1.3)		결혼	64,952(7.4)
	보육	44,824(0.7)		담배	34,116(3.9)
	보험	246,273(4.0)		연명의료	3,506(0.4)
	다문화	23,171(0.4)		무상보육	801(0.1)
	노인복지	108,524(1.8)		방문요양	13,562(1.5)
	복지정보	7,786(0.1)		방문진료	741(0.1)
	빈곤	27,711(0.4)		베이비부머	1,630(0.2)
	사회보장	78,770(1.3)		의료정보	4,875(0.6)
	에너지	80,069(1.3)		부정수급	4,088(0.5)
	기초생활보장	98,283(1.6)		복지카드	18,789(2.1)
	기초연금	19,084(0.3)		비만	60,360(6.8)
	의료보장	3,338(0.1)		빈곤	27,711(3.1)
	사회서비스	47,916(0.8)		사회안전망	7,823(0.9)
	아동복지	79,319(1.3)		생리대	14,106(1.6)
	안전	359,114(5.8)		성폭력	19,214(2.2)
	요양	88,048(1.4)		스튜어디스	2,614(0.3)
	응급의료	11,290(0.2)		신약	10,332(1.2)
	의료기관	64,761(1.0)		실손의료보험	6,764(0.8)
	의료자원	1,273(0.0)		아동학대	8,702(1.0)
	의료정보	4,309(0.1)		양극화	8,764(1.0)
	인구	107,535(1.7)		원격의료	1,913(0.2)
	일가정양립	513(0.0)		의료민영화	1,313(0.1)
	자립지원	30,561(0.5)		자살	26,393(3.0)
	자살	26,393(0.4)		장애등급제	8,678(1.0)
	장애인복지	67,128(1.1)		정신질환자	8,141(0.9)
	정신건강	32,359(0.5)		청년수당	1,714(0.2)
	종교	3,179(0.1)		청년실업	2,256(0.3)
	주거복지	156,677(2.5)		출산율	8,384(0.9)
	지역복지	94,387(1.5)		탈시설화	1,410(0.2)
	질병	252,553(4.1)		통합서비스	4,245(0.5)
	출산	164,892(2.7)		틀니	6,868(0.8)
	통일	40,531(0.7)		포폴리즘	7,040(0.8)
	한의학	2,089(0.0)		플랫폼	28,226(3.2)
	환경	383,813(6.2)		학대	25,511(2.9)
	건강	483,312(7.8)		헬스케어	15,430(1.7)
	국민연금	32,689(0.5)		희망사다리	2,333(0.3)
	나눔	228,992(3.7)		계	882,707
	기금	56,803(0.9)			
	복지시설	94,907(1.5)			
	일자리	176,735(2.9)			
	치매	63,555(1.0)			
	계	6,195,763			

〈표 5-2〉 보건복지 관련 온라인문서(버즈) 현황_분기별

기간 \ 감정	반대	찬성	계
2019년 1/4분기	228,461(37.0)	388,569(63.0)	617,030
2019년 2/4분기	172,006(30.0)	391,300(69.5)	563,306
2019년 3/4분기	278,719(34.4)	532,403(65.6)	811,122
계	679,186(34.1)	1,312,272(65.9)	1,991,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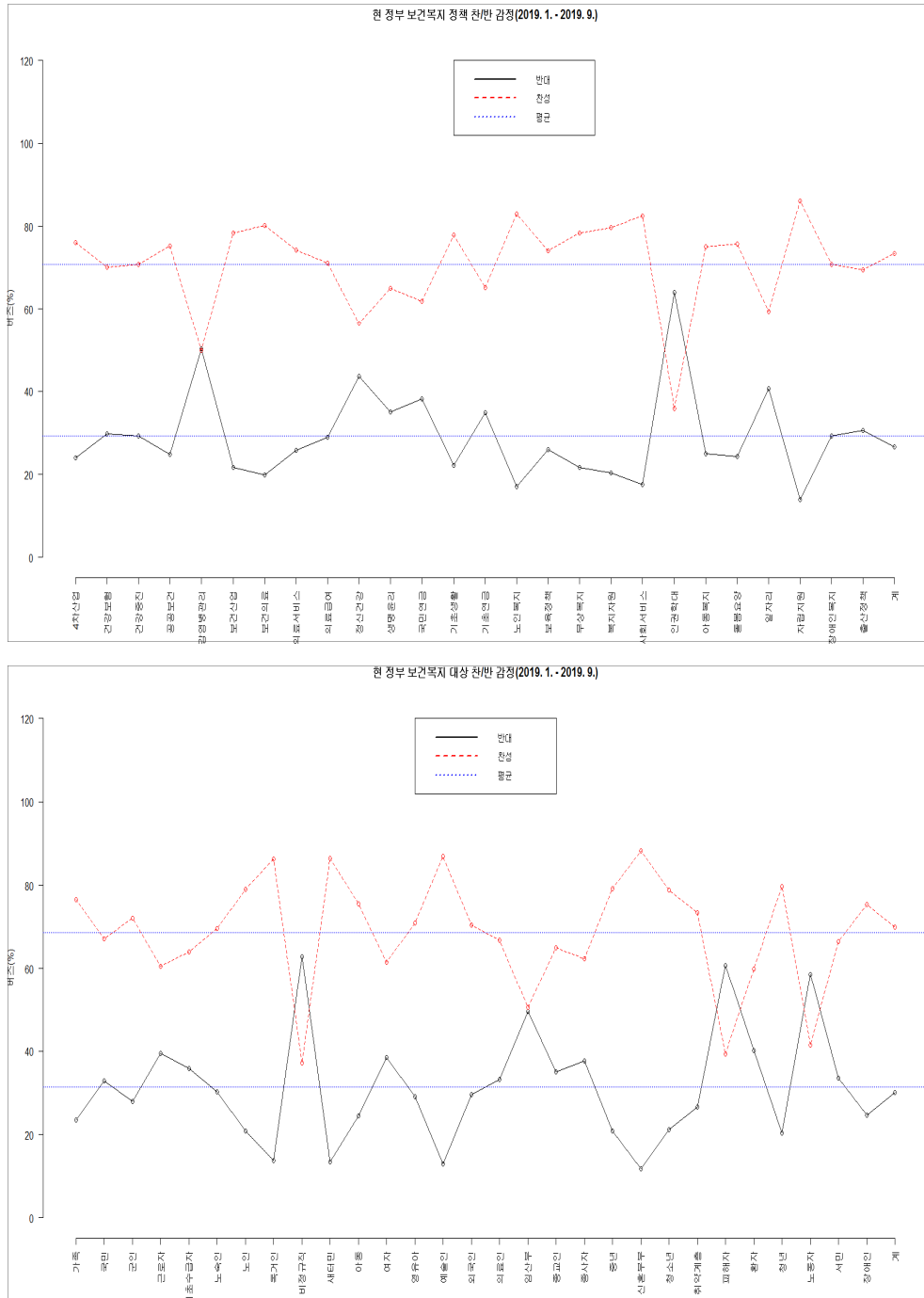
□ 보건복지 관련 수요(감정) 분석 결과는 〈표 5-3〉, 〈표 5-4〉, [그림 5-3], [그림 5-4]와 같음.

- 보건복지 관련 정책에 대한 찬성 감정은 자립지원, 노인복지,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복지자원, 보건산업, 무상복지, 기초생활, 4차산업, 돌봄요양, 공공 보건, 아동복지, 의료서비스, 보육정책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대의 감정은 인권학대, 감염병관리, 정신건강, 일자리, 국민연금, 생명윤리, 기초연금, 출산 정책, 건강보험, 건강증진, 장애인복지, 의료급여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보건복지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찬성 감정은 통합서비스, 거버넌스, 플랫폼, 방문진료, 희망사다리, 헬스케어, 바이오, 치매책임제, 돌봄, 틀니, 실손보험, 신약, 베이비부머, 고령화, 복지사각, 사회안전망, 방문요양, AI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대의 감정은 포플리즘, 스튜어드십, 생리대, 아동학대, 성폭력, 의료민영화, 부정수급, 학대, 결핵, 청년수당, 정신질환자, 담배, 양극화, 장애 등급제, 개인정보, 자살, 연명의료, 청년실업, 출산율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보건복지 관련 대상에 대한 찬성 감정은 신혼부부, 예술인, 새터민, 독거인, 청년, 중년, 노인, 청소년, 가족, 아동, 장애인, 취약계층, 군인, 영유아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대의 감정은 비정규직, 피해자, 노동자, 임산부, 환자, 근로자, 여자, 종사자, 기초수급자, 종교인, 서민, 의료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보건복지 관련 분야에 대한 찬성 감정은 복지정보, 일가정양립, 지역복지, 예산, 나눔, 다문화, 교통, 자립지원, 에너지, 사회보장, 노인복지, 사회서비스, 통일, 주거복지, 교육, 보건산업, 기초생활, 한의약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대의 감정은 범죄, 질병, 자살, 국민연금, 정신건강, 빈곤, 출산, 의료기관, 노동, 종교, 기초연금, 보건의료, 치매, 보험, 보건위생, 요양, 일자리, 장애인복지, 안전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5-3〉 보건복지 관련 정책과 대상의 수요(감정) 교차분석

정책	감정		계	대상	감정		계
	반대	찬성			반대	찬성	
4차산업혁명	29,282(24.0)	92,957(76.0)	122,239	가족	43,968(23.5)	143,448(76.5)	187,416
건강보험	15,491(29.8)	36,486(70.2)	51,977	국민	68,983(32.8)	141,049(67.2)	210,032
건강증진	20,897(29.3)	50,352(70.7)	71,249	군인	4,573(27.9)	11,837(72.1)	16,410
공공보건의료	973(24.8)	2,954(75.2)	3,927	근로자	32,731(39.4)	50,313(60.6)	83,044
감염병관리	13,113(50.2)	13,016(49.8)	26,129	기초수급자	5,077(35.9)	9,055(64.1)	14,132
보건산업	7,908(21.7)	28,496(78.3)	36,404	노숙인	1,398(30.3)	3,209(69.7)	4,607
보건의료정책	2,766(19.9)	11,156(80.1)	13,922	노인	43,106(20.9)	163,573(79.1)	206,679
의료서비스	5,342(25.8)	15,383(74.2)	20,725	독거인	3,252(13.7)	20,564(86.3)	23,816
의료급여	3,019(28.9)	7,429(71.1)	10,448	비정규직	6,533(62.9)	3,860(37.1)	10,393
정신건강	9,229(43.6)	11,933(56.4)	21,162	새터민	92(13.5)	590(86.5)	682
생명윤리	1,166(35.0)	2,170(65.0)	3,336	아동	45,109(24.4)	139,511(75.6)	184,620
국민연금	20,792(38.2)	33,592(61.8)	54,384	여자	57,109(38.4)	91,781(61.6)	148,890
기초생활보장	15,209(22.2)	53,301(77.8)	68,510	영유아	8,574(29.0)	21,005(71.0)	29,579
기초연금	4,012(34.8)	7,501(65.2)	11,513	예술인	572(13.0)	3,838(87.0)	4,410
노인복지	12,666(17.0)	62,040(83.0)	74,706	외국인	7,177(29.5)	17,181(70.5)	24,358
보육정책	19,654(25.9)	56,306(74.1)	75,960	의료인	45,276(33.2)	91,001(66.8)	136,277
무상복지	21,955(21.7)	79,295(78.3)	101,250	임산부	33,148(49.5)	33,834(50.5)	66,982
복지자원	22,494(20.3)	88,512(79.7)	111,006	종교인	402(35.0)	748(65.0)	1,150
사회서비스	6,043(17.6)	28,275(82.4)	34,318	종사자	10,065(37.6)	16,731(62.4)	26,796
인권학대	5,261(64.1)	2,952(35.9)	8,213	중년	217(20.8)	827(79.2)	1,044
아동복지	12,487(24.9)	37,698(75.1)	50,185	신혼부부	2,280(11.8)	17,057(88.2)	19,337
돌봄요양	11,208(24.3)	34,876(75.7)	46,084	청소년	17,003(21.1)	63,680(78.9)	80,683
일자리	23,926(40.6)	34,962(59.4)	58,888	취약계층	35,991(26.6)	99,208(73.4)	135,199
자립지원	1,468(13.9)	9,115(86.1)	10,583	피해자	13,578(60.7)	8,781(39.3)	22,359
장애인복지	13,182(29.3)	31,801(70.7)	44,983	환자	48,725(40.1)	72,909(59.9)	121,634
출산정책	15,787(30.5)	36,158(69.5)	52,036	청년	15,815(20.3)	61,988(79.7)	77,803
				노동자	15,658(58.6)	11,058(41.4)	26,716
				서민	5,849(33.5)	11,597(66.5)	17,446
				장애인	29,098(24.6)	89,044(75.4)	118,142
계	315,421 (26.6)	868,716 (73.4)	1,184,137	계	601,359 (30.1)	1,399,277 (69.9)	2,000,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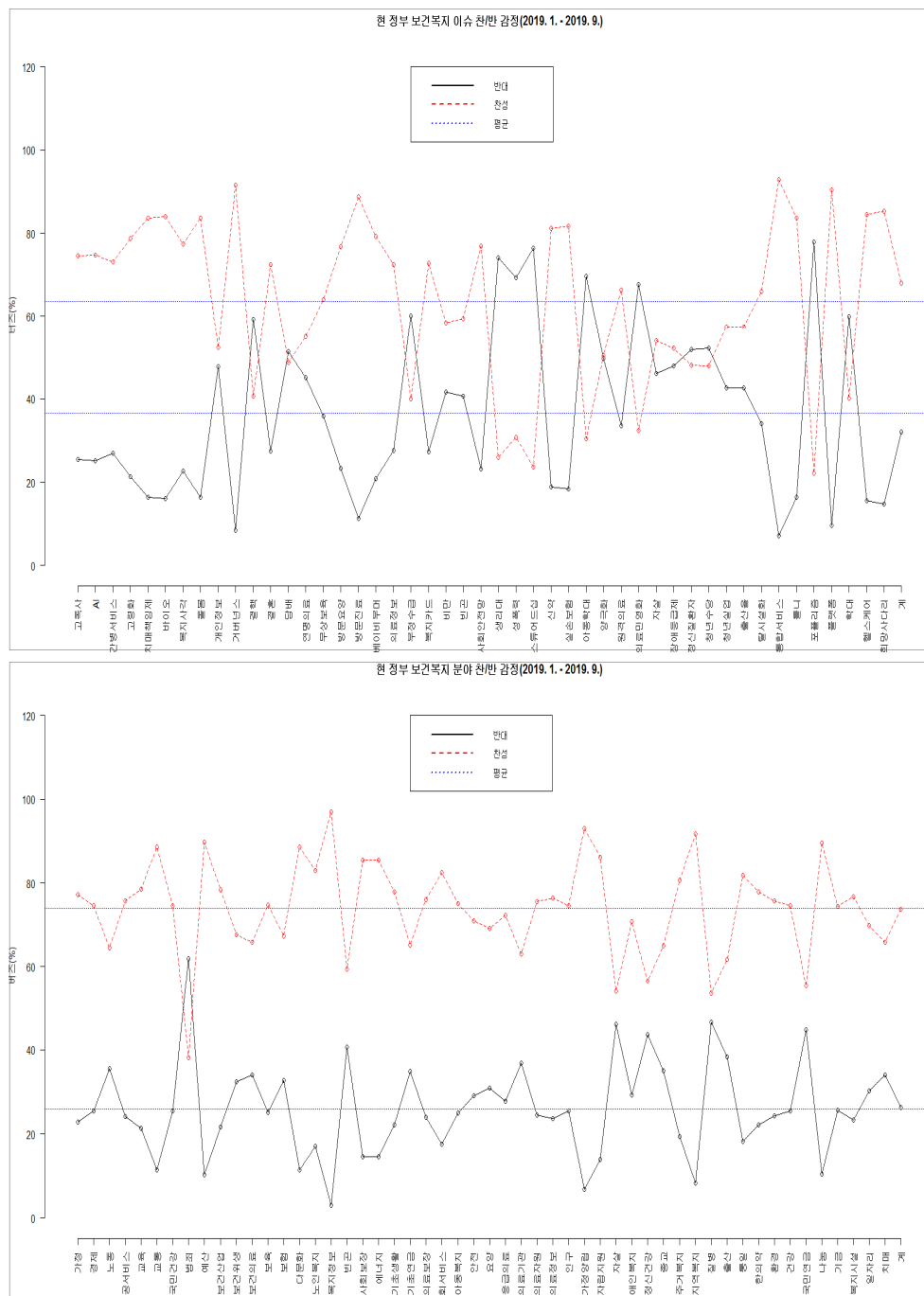
[그림 5-3] 보건복지 관련 정책과 대상의 수요(감정) 변화



〈표 5-4〉 보건복지 관련 분야와 주요 이슈의 수요(감정) 교차분석

분야	감정		계	이슈	감정		계
	반대	찬성			반대	찬성	
가정	61,764(22.8)	208,723(77.2)	270,487	고독사	930(25.5)	2,718(74.5)	3,648
경제	55,427(25.5)	162,254(74.5)	217,681	AI	26,100(25.2)	77,392(74.8)	103,492
노동	73,199(35.5)	133,081(64.5)	206,280	간병통합서비스	3,033(26.9)	8,263(73.1)	11,296
공공서비스	25,681(24.2)	80,645(75.8)	106,326	고령화	4,946(21.3)	18,320(78.7)	23,266
교육	58,763(21.4)	215,205(78.6)	273,968	치매국가책임제	2,543(16.4)	12,968(83.6)	15,511
교통	353(11.5)	2,708(88.5)	3,061	바이오	3,135(16.1)	16,325(83.9)	19,460
국민건강	77,570(25.5)	226,880(74.5)	304,450	복지사각	7,346(22.6)	25,150(77.4)	32,496
범죄	21,350(61.8)	13,177(38.2)	34,527	돌봄	6,367(16.4)	32,572(83.6)	38,939
예산	22(10.3)	191(89.7)	213	개인정보	10,256(47.7)	11,246(52.3)	21,502
보건산업	7,908(21.7)	28,496(78.3)	36,404	거버넌스	228(8.4)	2,494(91.6)	2,722
보건위생	2,305(32.4)	4,802(67.6)	7,107	결핵	3,443(59.3)	2,359(40.7)	5,802
보건의료	17,732(34.1)	34,233(65.9)	51,965	결혼	10,526(27.5)	27,808(72.5)	38,334
보육	8,340(25.2)	24,705(74.8)	33,045	담배	10,324(51.3)	9,785(48.7)	20,109
보험	47,642(32.7)	98,228(67.3)	145,870	연명의료	970(45.0)	1,184(55.0)	2,154
다문화	2,006(11.4)	15,611(88.6)	17,617	무상보육	160(35.9)	286(64.1)	446
노인복지	12,666(17.0)	62,040(83.0)	74,706	방문요양	2,183(23.3)	7,203(76.7)	9,386
복지정보	207(3.0)	6,630(97.0)	6,837	방문진료	63(11.3)	496(88.7)	559
빈곤	6,898(40.6)	10,089(59.4)	16,987	베이비부머	217(20.8)	827(79.2)	1,044
사회보장	8,213(14.6)	48,193(85.4)	56,406	의료정보	881(27.6)	2,315(72.4)	3,196
에너지	5,981(14.5)	35,177(85.5)	41,158	부정수급	1,608(60.1)	1,066(39.9)	2,674
기초생활보장	15,209(22.2)	53,301(77.8)	68,510	복지카드	3,147(27.2)	8,424(72.8)	11,571
기초연금	4,012(34.8)	7,501(65.2)	11,513	비만	10,284(41.6)	14,423(58.4)	24,707
의료보장	439(23.9)	1,396(76.1)	1,835	빈곤	6,898(40.6)	10,089(59.4)	16,987
사회서비스	6,043(17.6)	28,275(82.4)	34,318	사회안전망	1,179(23.1)	3,920(76.9)	5,099
아동복지	12,487(24.9)	37,698(75.1)	50,185	생리대	7,162(74.0)	2,516(26.0)	9,678
안전	70,732(29.0)	173,413(71.0)	244,145	성폭력	9,302(69.3)	4,129(30.7)	13,431
요양	18,462(30.9)	41,276(69.1)	59,738	스튜어드십	1,208(76.4)	373(23.6)	1,581
응급의료	1,843(27.8)	4,784(72.2)	6,627	신약	1,177(18.8)	5,096(81.2)	6,273
의료기관	13,911(36.9)	23,776(63.1)	37,687	실손의료보험	451(18.4)	2,001(81.6)	2,452
의료자원	192(24.5)	592(75.5)	784	아동학대	4,602(69.6)	2,008(30.4)	6,610
의료정보	667(23.7)	2,146(76.3)	2,813	양극화	2,375(49.7)	2,403(50.3)	4,778
인구	16,982(25.5)	49,588(74.5)	66,570	원격의료	400(33.6)	792(66.4)	1,192
일가정양립	28(6.9)	376(93.1)	404	의료민영화	547(67.7)	261(32.3)	808
자립지원	3,167(13.9)	19,557(86.1)	22,724	자살	7,218(46.0)	8,461(54.0)	15,679
자살	7,218(46.0)	8,461(54.0)	15,679	장애등급제	2,619(47.8)	2,855(52.2)	5,474
장애인복지	13,182(29.3)	31,801(70.7)	44,983				
정신건강	9,229(43.6)	11,933(56.4)	21,162				
종교	402(35.0)	748(65.0)	1,150				

분야	감정		계	이슈	감정		계
	반대	찬성			반대	찬성	
주거복지	21,291(19.4)	88,478(80.6)	109,769	정신질환자	2,577(51.9)	2,392(48.1)	4,969
지역복지	6,364(8.3)	70,763(91.7)	77,127	청년수당	546(52.2)	500(47.8)	1,046
질병	63,457(46.5)	72,865(53.5)	136,322	청년실업	557(42.6)	749(57.4)	1,306
출산	37,859(38.3)	61,039(61.7)	98,898	출산율	2,133(42.6)	2,870(57.4)	1,306
통일	5,075(18.2)	22,777(81.8)	27,852	탈시설화	299(34.0)	581(66.0)	880
한의학	327(22.2)	1,147(77.8)	1,474	통합서비스	246(7.2)	3,165(92.8)	3,411
환경	60,604(24.3)	189,162(75.7)	249,766	틀니	624(16.4)	3,184(83.6)	3,808
건강	77,548(25.5)	226,869(74.5)	304,417	포폴리즘	2,897(77.8)	829(22.2)	3,726
국민연금	8,652(44.7)	10,712(55.3)	19,364	플랫폼	2,046(9.6)	19,322(90.4)	21,368
나눔	17,942(10.5)	152,980(89.5)	170,922	학대	10,394(59.9)	6,954(40.1)	17,348
기금	9,851(25.6)	28,656(74.4)	38,507	헬스케어	1,377(15.5)	7,507(84.5)	8,884
복지시설	15,062(23.3)	49,495(76.7)	64,557	희망사다리	181(14.7)	1,050(85.3)	1,231
일자리	36,598(30.2)	84,547(69.8)	121,145				
치매	13,508(34.1)	26,084(65.9)	39,592				
계	1,062,370 (26.2)	2,993,264 (73.8)	4,055,634	계	1777,705 (32.0)	377,631 (68.0)	555,336



제3절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 미래신호 탐색

1. 보건복지 관련 키워드의 단어 및 문서 빈도 분석

□ 단어빈도(TF), 문서빈도(DF), 단어의 중요도 지수를 고려한 문서빈도(TF-IDF)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보건복지 관련 정책과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변화는 <표 5-5>와 같음.

○ 단어빈도에서는 4차산업혁명 명, 국민연금, 복지자원, 무상복지, AI, 건강증진, 보육정책, 노인복지, 돌봄요양, 건강보험, 일자리, 기초생활보장, 보건산업, 비만, 아동복지, 출산정책,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담배, 감염병관리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책은 4차산업혁명, 국민연금, 복지자원, 무상복지, 건강증진, 보육정책, 노인복지, 돌봄요양, 건강보험, 일자리, 기초생활보장, 보건산업, 아동복지, 출산정책,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감염병관리 등이 우선이고 주요 이슈는 AI, 비만, 담배, 자살, 치매국가책임제, 개인정보 등이 우선인 것으로 나타났음.

○ 문서빈도는 단어 빈도와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이 단어빈도에서는 12위인 반면 문서빈도에서는 8위로 나타나 키워드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단어빈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이 중요하지 않으나 주제의 확산을 나타내는 문서빈도에서는 높아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반면 국민연금은 단어빈도에서는 2위인 반면 문서빈도에서는 12위로 나타나 국민연금이 중요한 정책임에도 확산은 낮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중요도 지수를 고려한 단어 빈도에서는 정책은 국민연금, 4차산업혁명, 돌봄요양, 건강증진, 보육정책, 무상복지, 복지자원, 노인복지, 건강보험, 일자리, 기초생활보장, 보건산업, 아동복지, 출산정책,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의료서비스, 감염병관리, 정신건강, 기초연금 등이 우선이고 주요이슈는 AI, 비만, 담배, 자살, 치매국가책임제, 개인정보 등이 우선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5-5〉 온라인 채널의 보건복지 정책과 주요 이슈의 키워드 분석

순위	단어빈도		문서빈도		단어빈도-역문서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1	4차산업혁명	365,794	4차산업혁명	191767	국민연금	400700
2	국민연금	287,577	AI	162678	4차산업혁명	393028
3	복지자원	279,755	복지자원	161183	돌봄요양	345199
4	무상복지	276,766	무상복지	147132	건강증진	338671
5	AI	273,357	건강증진	113271	보육정책	329266
6	건강증진	259,895	노인복지	108524	무상복지	329218
7	보육정책	246,612	보육정책	105213	복지자원	321692
8	노인복지	242,446	기초생활보장	98283	노인복지	320441
9	돌봄요양	223,194	국민연금	92015	AI	313239
10	건강보험	222,342	일자리	90973	건강보험	312792
11	일자리	221,421	건강보험	89211	일자리	309616
12	기초생활보장	221,233	출산정책	86165	기초생활보장	301927
13	보건산업	176,482	아동복지	79319	보건산업	282132
14	비만	176,162	장애인복지	67128	비만	277715
15	아동복지	167,879	돌봄요양	64654	아동복지	244742
16	출산정책	166,763	비만	60360	출산정책	237119
17	장애인복지	153,631	보건산업	57356	장애인복지	235105
18	사회서비스	102,657	사회서비스	47916	담배	176558
19	담배	96,783	감염병관리	38125	사회서비스	172130
20	감염병관리	90,826	담배	34116	의료서비스	165418
21	의료서비스	89,676	개인정보	32814	감염병관리	161308
22	정신건강	77,177	의료서비스	32554	정신건강	142564
23	자살	67,350	정신건강	32359	자살	130,372
24	치매국가책임제	62,542	자살	26,393	치매국가책임제	125726
25	개인정보	54,640	치매국가책임제	22231	기초연금	101299
26	기초연금	48,782	간병통합서비스	20724	개인정보	100601
27	간병통합서비스	44,705	성폭력	19214	방문요양	93355
28	성폭력	43,839	기초연금	19084	간병통합서비스	91232
29	방문요양	41,959	보건의료정책	19022	성폭력	90905
30	의료급여	35,746	의료급여	16645	인권학대	77077
31	생리대	34,707	헬스케어	15,430	생리대	76627
32	인권학대	33,258	자립지원	14494	의료급여	76351
33	헬스케어	30,647	생리대	14106	헬스케어	66,469
34	보건의료정책	29,926	방문요양	13562	아동학대	66,001
35	자립지원	29,466	인권학대	10957	자립지원	64708
36	아동학대	27,300	아동학대	8,702	보건의료정책	62185

순위	단어빈도		문서빈도		단어빈도-역문서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37	정신질환자	21,085	출산율	8,384	생명윤리	55219
38	생명윤리	20,944	정신질환자	8,141	정신질환자	51,585
39	출산율	18,715	포플리즘	7,040	출산율	45,548
40	연명의료	15,036	실손의료보험	6764	연명의료	42287
41	실손의료보험	11,910	공공보건의료	5428	실손의료보험	30097
42	포플리즘	10,975	생명윤리	5257	부정수급	27811
43	부정수급	10,129	의료정보	4875	포플리즘	27,543
44	공공보건의료	9,511	부정수급	4088	공공보건의료	24943
45	의료정보	8,094	연명의료	3506	의료정보	21605
46	스튜어드십	6,979	스튜어드십	2614	스튜어드십	20518
47	원격의료	6,327	희망사다리	2,333	원격의료	19,459
48	희망사다리	5,458	청년실업	2,256	희망사다리	16,316
49	청년실업	2,836	원격의료	1,913	청년실업	8,519
	합계	5,151,294	합계	2,276,279	합계	7,724,938

□ <표 5-6>과 같이 키워드의 분기별 순위 변화를 보면 일자리는 2019년 1/4분기에는 5위로 중요한 키워드로 나타나다가 2019년 2/4분기에는 13위, 2019년 3/4분기에는 12로 하락하여 시간이 갈수록 일자리 정책의 관심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복지 2019년 1/4분기에는 11위로 중요한 키워드로 나타나다가 2019년 2/4분기에는 7위, 2019년 3/4분기에는 6로 상승하여 시간이 갈수록 노인복지 정책의 관심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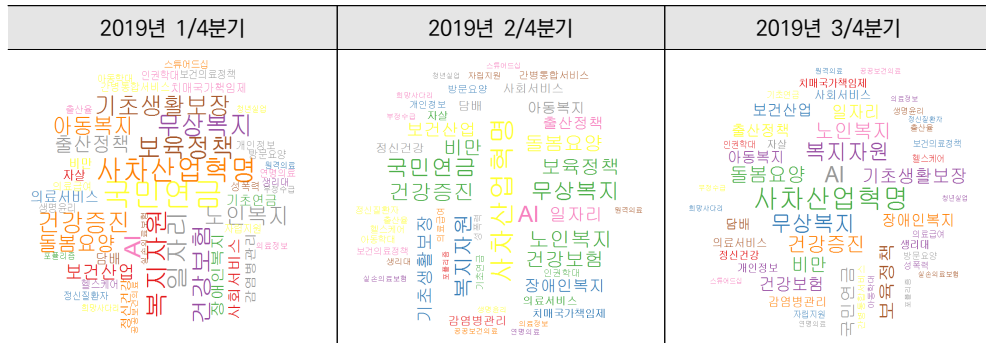
○ AI 이슈는 2019년 1/4분기에는 10위로 나타나다가 2019년 2/4분기 부터 2위로 상승하여 시간이 갈수록 AI 이슈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온라인 채널의 보건복지 정책과 주요 이슈의 분기별 키워드 순위변화(TF기준)

순위	2019년 1/4분기	2019년 2/4분기	2019년 3/4분기
1	국민연금	4차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2	4차산업혁명	AI	AI
3	복지자원	국민연금	무상복지
4	보육정책	무상복지	복지자원
5	일자리	건강증진	건강증진

순위	2019년 1/4분기	2019년 2/4분기	2019년 3/4분기
6	무상복지	복지자원	노인복지
7	건강증진	노인복지	돌봄요양
8	기초생활보장	보육정책	보육정책
9	건강보험	비만	비만
10	AI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11	노인복지	돌봄요양	국민연금
12	아동복지	기초생활보장	일자리
13	돌봄요양	일자리	건강보험
14	출산정책	보건산업	보건산업
15	보건산업	장애인복지	출산정책
16	장애인복지	출산정책	장애인복지
17	사회서비스	아동복지	아동복지
18	의료서비스	사회서비스	담배
19	기초연금	담배	감염병관리
20	담배	정신건강	사회서비스
21	감염병관리	감염병관리	의료서비스
22	비만	의료서비스	자살
23	정신건강	치매국가책임제	정신건강
24	자살	자살	개인정보
25	치매국가책임제	간병통합서비스	생리대
26	성폭력	방문요양	치매국가책임제
27	간병통합서비스	개인정보	방문요양
28	개인정보	성폭력	성폭력
29	의료급여	인권학대	간병통합서비스
30	자립지원	의료급여	의료급여
31	생명윤리	기초연금	자립지원
32	방문요양	정신질환자	인권학대
33	보건의료정책	헬스케어	헬스케어
34	인권학대	아동학대	기초연금
35	헬스케어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정책
36	연명의료	자립지원	아동학대
37	아동학대	생리대	출산율
38	출산율	출산율	생명윤리
39	생리대	실손의료보험	정신질환자
40	스튜어드십	생명윤리	연명의료
41	정신질환자	부정수급	포플리즘
42	실손의료보험	포플리즘	의료정보
43	포플리즘	공공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
44	부정수급	연명의료	부정수급
45	공공보건의료	의료정보	원격의료
46	의료정보	희망사다리	실손의료보험
47	원격의료	원격의료	희망사다리
48	희망사다리	스튜어드십	청년실업
49	청년실업	청년실업	스튜어드십

[그림 5-5] 보건복지 정책과 주요 이슈의 분기별 키워드 변화



2. 보건복지 관련 키워드의 미래신호 탐색

□ <표 5-7>과 같이 보건복지 관련(정책, 주요 이슈) 키워드에 대한 DoV(가시성) 증가율과 평균단어 빈도를 산출한 결과 국민연금 정책은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DoV 증가율은 중앙값(0.09) 보다 낮게 나타나(-2.213) 시간이 갈수록 신호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자원, 건강증진, 보육정책, 건강보험, 일자리, 기초생활보장, 아동복지, 출산정책, 의료서비스는 평균단어 빈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DoV 증가율은 중앙값 보다 낮게 나타나 시간이 갈수록 신호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4차산업혁명, AI, 노인복지, 돌봄요양, 비만, 장애인복지, 담배, 감염병관리, 정신건강, 자살, 치매국가책임제, 개인정보는 평균단어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DoV 증가율은 중앙값 보다 높게 나타나 시간이 갈수록 신호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8>과 같이 DoD(확산성) 증가율과 평균단어 빈도를 산출한 결과 아동복지 정책은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DoD 증가율은 중앙값(0.07) 보다 높게 나타나(-0.156) 시간이 갈수록 신호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자원, 무상복지, 건강증진, 보육정책,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일자리, 건강보험, 아동복지, 보건산업, 사회서비스, 정신건강, 자살은 평균단어 빈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DoD 증가율은 중앙값 보다 낮게 나타나 시간이 갈수록 신호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앞에서 제시한 미래신호 탐색절차와 같이 DoV의 평균단어빈도와 DoD의 평균 문서빈도를 X축으로 설정하고 DoV와 DoD의 평균증가율을 Y축으로 설정한 후, 각 값의 중앙값으로 분면을 나누면 2사분면에 해당하는 영역의 키워드는 약신호가 되고 1사분면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강신호가 됨.

○ 빈도수 측면에서는 상위 10위에 DoV는 4차산업혁명, 국민연금, 복지자원, 무상복지, AI, 건강증진, 보육정책, 노인복지, 돌봄요양, 건강보험 순으로 포함되었고, DoD에는 4차산업혁명, AI, 복지자원, 무상복지, 건강증진, 노인복지, 보육정책,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일자리의 순으로 포함되었음.

○ DoV의 증가율의 중앙값(0.09)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키워드는 4차산업혁명, AI, 노인복지, 돌봄요양, 보건산업, 비만, 담배, 감염병관리, 정신건강, 자살, 치매국가책임제, 개인정보 등으로 나타났으며, DoD의 증가율의 중앙값(0.07)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키워드는 4차산업혁명, 무상복지, 건강증진, 노인복지, 출산정책, 장애인복지, 돌봄요양, 감염병관리, 담배, 개인정보, 의료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등으로 나타났음.

○ 특히 정신건강 정책과 자살의 이슈는 DoV증가율을 중앙값 보다 높은 반면 DoD의 증가율은 중앙값보다 낮게 나타나 정신건강 정책과 자살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의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표 5-7〉 보건복지 정책과 주요 이슈의 가시성(DoV) 평균증가율과 평균단어 빈도

키워드	DoV			평균증가율	평균단어빈도
	2019년 1/4분기	2019년 2/4분기	2019년 3/4분기		
4차산업혁명	108,394	128,279	129,121	0.156	121,931
국민연금	124,264	94,444	68,869	-0.213	95,859
복지자원	95,515	88,929	95,311	0.059	93,252
무상복지	90,016	91,005	95,745	0.090	92,255
AI	79,444	95,398	98,515	0.179	91,119
건강증진	84,638	89,312	85,945	0.066	86,632
보육정책	93,399	79,334	73,879	-0.059	82,204
노인복지	74,277	86,498	81,671	0.113	80,815
돌봄요양	64,744	76,823	81,627	0.188	74,398
건강보험	82,128	76,992	63,222	-0.071	74,114
일자리	90,962	67,097	63,362	-0.110	73,807
기초생활보장	82,757	67,613	70,863	-0.013	73,744
보건산업	54,451	64,215	57,816	0.097	58,827

키워드	DoV			평균증가율	평균단어빈도
	2019년 1/4분기	2019년 2/4분기	2019년 3/4분기		
비만	24,345	78,135	73,682	1.183	58,721
아동복지	68,486	47,975	51,418	-0.062	55,960
출산정책	61,709	49,949	55,105	0.012	55,588
장애인복지	42,906	57,475	53,250	0.195	51,210
사회서비스	36,623	33,428	32,606	-0.002	34,219
담배	26,810	31,520	38,453	0.266	32,261
감염병관리	26,771	29,464	34,591	0.202	30,275
의료서비스	33,909	25,403	30,364	0.030	29,892
정신건강	21,960	30,416	24,801	0.160	25,726
자살	20,143	20,669	26,538	0.222	22,450
치매국가책임제	18,682	22,532	21,328	0.136	20,847
개인정보	14,597	15,524	24,519	0.399	18,213
기초연금	27,385	12,074	9,323	-0.357	16,261
간병통합서비스	14,602	17,171	12,932	0.017	14,902
성폭력	15,245	14,017	14,577	0.036	14,613
방문요양	10,039	16,333	15,587	0.361	13,986
의료급여	12,460	12,295	10,991	-0.007	11,915
생리대	6,988	5,626	22,093	1.515	11,569
인권학대	9,454	13,483	10,321	0.155	11,086
헬스케어	9,182	11,673	9,792	0.113	10,216
보건의료정책	9,843	10,807	9,276	0.032	9,975
자립지원	11,409	7,731	10,326	0.067	9,822
아동학대	7,971	11,476	7,853	0.119	9,100
정신질환자	5,284	11,995	3,806	0.358	7,028
생명윤리	11,125	4,282	5,537	-0.109	6,981
출산율	7,438	5,453	5,824	-0.047	6,238
연명의료	8,578	2,691	3,767	-0.089	5,012
실손의료보험	4,813	4,852	2,245	-0.226	3,970
포폴리즘	3,620	3,680	3,675	0.065	3,658
부정수급	3,075	3,835	3,219	0.100	3,376
공공보건의료	2,777	3,399	3,335	0.164	3,170
의료정보	2,430	2,295	3,369	0.277	2,698
스튜어드십	5,317	904	758	-0.464	2,326
원격의료	1,694	1,650	2,983	0.474	2,109
희망사다리	1,367	2,235	1,856	0.299	1,819
청년실업	1,159	842	835	-0.091	945
중앙값				0.09	18,213

〈표 5-8〉 보건복지 정책과 주요 이슈의 확산성(DoD) 평균증가율과 평균문서 빈도

키워드	DoD			평균증가율	평균문서빈도
	2019년 1/4분기	2019년 2/4분기	2019년 3/4분기		
4차산업혁명	58,277	66,311	67,179	0.131	63,922
AI	48,534	56,070	58,074	0.152	54,226
복지자원	56,607	50,681	53,895	0.030	53,728
무상복지	47,388	50,543	49,201	0.073	49,044

키워드	DoD			평균증가율	평균문서빈도
	2019년 1/4분기	2019년 2/4분기	2019년 3/4분기		
건강증진	35,749	40,242	37,280	0.079	37,757
노인복지	33,708	37,236	37,580	0.111	36,175
보육정책	39,650	32,827	32,736	-0.040	35,071
기초생활보장	34,813	31,177	32,293	0.016	32,761
국민연금	34,428	33,516	24,071	-0.111	30,672
일자리	35,785	27,803	27,385	-0.073	30,324
건강보험	31,494	30,397	27,320	-0.020	29,737
출산정책	28,636	26,923	30,606	0.093	28,722
아동복지	35,794	21,838	21,687	-0.156	26,440
장애인복지	17,103	24,727	25,298	0.298	22,376
돌봄요양	21,099	21,279	22,276	0.081	21,551
비만	12,028	24,528	23,804	0.581	20,120
보건산업	18,016	21,677	17,663	0.061	19,119
사회서비스	17,389	16,038	14,489	-0.040	15,972
감염병관리	10,975	12,038	15,112	0.237	12,708
담배	10,870	11,114	12,132	0.112	11,372
개인정보	8,472	7,914	16,428	0.585	10,938
의료서비스	11,057	9,995	11,502	0.081	10,851
정신건강	10,669	12,304	9,386	0.007	10,786
자살	8,946	8,693	8,754	0.041	8,798
치매국가책임제	6,589	7,933	7,709	0.144	7,410
간병통합서비스	6,499	8,212	6,013	0.049	6,908
성폭력	7,081	6,185	5,948	-0.035	6,405
기초연금	10,793	4,613	3,678	-0.355	6,361
보건의료정책	6,214	6,937	5,871	0.032	6,341
의료급여	6,037	5,847	4,761	-0.063	5,548
헬스케어	3,979	5,958	5,493	0.271	5,143
자립지원	5,668	3,766	5,060	0.057	4,831
생리대	2,489	2,377	9,240	1.552	4,702
방문요양	3,727	4,621	5,214	0.245	4,521
인권학대	3,341	4,179	3,437	0.089	3,652
아동학대	2,704	3,315	2,683	0.070	2,901
출산율	3,216	2,546	2,622	-0.042	2,795
정신질환자	2,205	4,180	1,756	0.215	2,714
포퓰리즘	2,421	2,446	2,173	-0.002	2,347
실손의료보험	2,836	2,918	1,010	-0.278	2,255
공공보건의료	1,751	1,766	1,911	0.100	1,809
생명윤리	2,291	1,398	1,568	-0.088	1,752
의료정보	1,493	1,258	2,124	0.333	1,625
부정수급	1,178	1,639	1,271	0.138	1,363
연명의료	1,673	848	985	-0.121	1,169
스튜어드십	1,984	350	280	-0.485	871
희망사다리	647	835	851	0.214	778
청년실업	882	698	676	-0.074	752
원격의료	633	582	698	0.115	638
중앙값				0.07	7,410

□ 다음 [그림 5-6]와 [그림 5-7]은 보건복지 관련 정책과 이슈에 대한 감성분석 결과 (<표 5-3>, <표 5-4>)와 각 정책과 이슈의 평균 증가율(<표 5-7>, <표 5-8>)을 교차하여 살펴본 것임.

○ 각 그림에서 1사분면은 긍정 감정과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모두 높은 영역임. 이 영역에 속하는 정책의 경우 예상되는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가 주요 정책 방안이 될 수 있음.

- 1사분면에 속하는 사례를 긍정 감정이 높은 순서에 따라 나열하면, 희망사다리, 헬스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노인복지, 무상복지, 방문요양, 4차산업혁명, 돌봄요양, 공공보건의료, AI, 의료서비스, 의료정보, 건강증진, 장애인복지의 순임.

○ 2사분면은 긍정 감정은 상대적으로 높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임. 이 경우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국민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자립지원, 사회서비스,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정책, 복지자원, 보건산업, 기초생활보장, 아동복지, 보육정책, 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급여가 2사분면에 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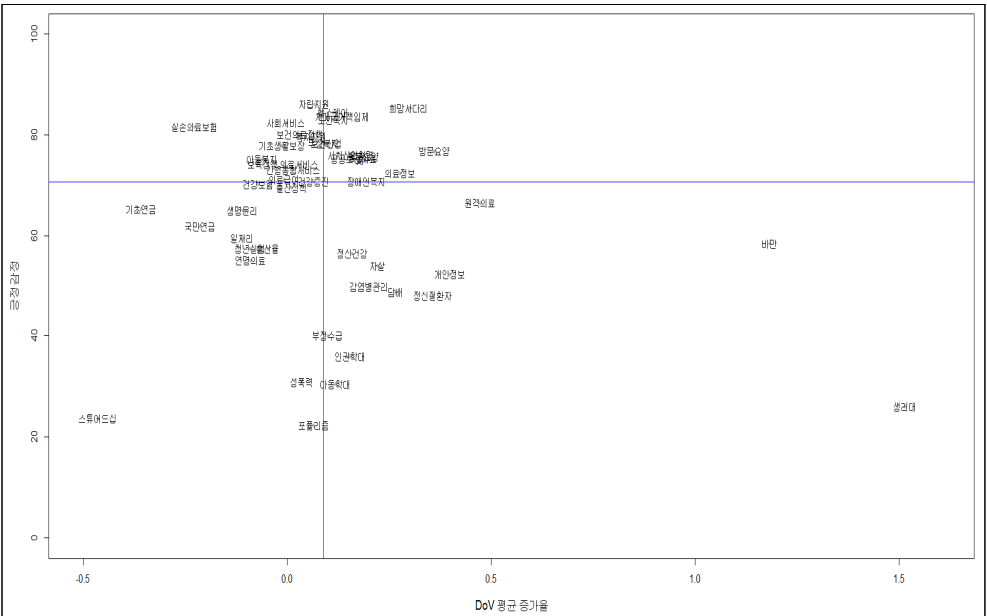
○ 3사분면은 긍정 감정과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모두 낮은 영역임. 이 경우 긍정 감정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아울러 정책 설계에서 잘못이 없는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부분임.

- 여기에 속하는 키워드는 건강보험, 기초연금, 생명윤리, 국민연금, 일자리, 청년실업, 출산율, 정신건강, 연명의료, 자살, 성폭력, 스튜어드십, 포폴리즘임.

○ 4사분면은 긍정 감정이 상대적으로 낮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임. 이 경우 정책이 국민의 반감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으므로(특히, 반대 감정이 더 높은 경우) 정책설계를 보완 및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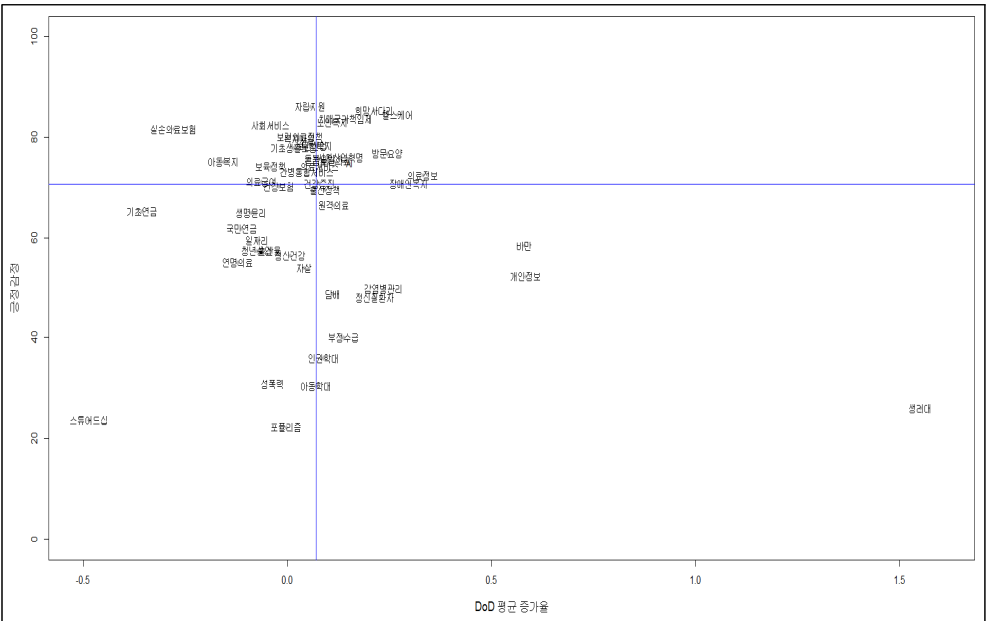
- 여기에 속하는 키워드는 출산정책, 원격의료, 비만, 개인정보, 감염병관리, 담배, 정신질환자, 부정수급, 인권학대, 아동학대, 생리대임.

[그림 5-6] 보건복지 관련 정책과 주요 이슈에 대한 감성과 증가율(DoV 평균증가율 기준)



주: X축과 Y축의 실선은 중앙값임

[그림 5-7] 보건복지 관련 정책과 주요 이슈에 대한 감성과 증가율(DoD 평균증가율 기준)



주: X축과 Y축의 실선은 중앙값임

〈표 5-9〉 보건복지 정책과 주요 이슈 관련 키워드의 감정 분석과 대응방향(DoD 평균증가율 기준)

구분	예상되는 리스크 관리	정책 홍보 강화	정책설계 점검	정책설계 보완
	1/4 분면	2/4 분면	3/4 분면	4/4 분면
주요 키워드	희망사다리, 헬스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노인복지, 무상복지, 방문요양, 4차산업혁명, 돌봄요양, 공공보건의료, AI, 의료서비스, 의료정보, 건강증진, 장애인복지	자립지원, 사회서비스,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정책, 복지지원, 보건산업, 기초생활보장, 아동복지, 보육정책, 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급여	건강보험, 기초연금, 생명운리, 국민연금, 일자리, 청년실업, 출산율, 정신건강, 연명의료, 자살, 성폭력, 스튜어디스, 포플리즘	출산정책, 원격의료, 비만, 개인정보, 감염병관리, 담배, 정신질환자, 부정수급, 인권학대, 아동학대, 생리대

주: 긍정 감정이 높은 순서로 배열한 것임.

□ 2018년과 2019년 정책에 대한 감성과 증가율 비교

- 2018년에는 정책 홍보 강화가 필요했던 치매, 인공지능, 4차 혁명이 2019년에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정책으로 변동되었음.
- 2018년에는 정책설계 점검이 필요했던 출산율, 출산정책은 정책설계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변화하였으며, 정책설계 보완이 필요했던 아동복지, 국민연금은 각각 정책홍보 강화, 정책설계 점검이 필요한 정책으로 변동되었음.
- 2018년에 정책 홍보 강화가 필요하였던 감염병 관련 정책은 정책 설계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변화하였으나, 보건의료 영역은 정책설계 보완이 필요한 영역에서 예상되는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변동되었음.;
- 예상되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했던 사회서비스는 2019년 정책홍보 강화가 필요한 영역으로 변화하였으며, 무상복지는 2018년과 동일하게 2019년에도 예상되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변동이 없었음.

〈표 5-10〉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감성과 증가율

2018년 사회보장 관련 키워드 ¹⁾		2019년 보건복지 정책 주요 이슈 관련 키워드 ²⁾	
정책 홍보 강화	예상되는 리스크 관리	정책 홍보 강화	예상되는 리스크 관리
2/4 분면	1/4 분면	2/4 분면	1/4 분면
치매, 자살예방, 인공지능, 보건산업, 감염병정책 , 일자리, 기초생활보장, 기초의료보장, 건강증진, 정신건강, 장애인복지, 4차 산업혁명 , 보육정책	응급의료, 사회서비스 , 자립지원, 요양보험, 의료보장, 의료자원, 올림픽, 무상	자립지원, 사회서비스 ,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정책, 복지지원, 보건산업, 기초생활보장, 아동복지 , 보육정책, 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급여	희망사다리, 헬스케어, 치매국가책임제 , 노인복지, 무상복지 , 방문요양, 4차산업혁명 , 돌봄요양, 공공보건의료 , AI, 의료서비스, 의료정보, 건강증진, 장애인복지
정책설계 점검	정책설계 보완	정책설계 점검	정책설계 보완
3/4 분면	4/4 분면	3/4 분면	4/4 분면
출산율, 아동학대, 기초연금 , 복지급여, 사회보장, 부정부패, 출산정책	건강보험, 미세먼지, 보건의료 , Metoo, 우울, 부정수급, 간병, 노인정책, 아동복지 , 국민연금 , 군복무, 여성혐오, 문재인케어	건강보험, 기초연금 , 생명윤리, 국민연금 , 일자리, 청년실업, 출산율, 정신건강, 연명의료, 자살, 성폭력, 스튜어디스, 포폴리즘	출산정책, 원격의료, 비만, 개인정보, 감염병관리 , 담배, 정신질환자, 부정수급, 인권학대, 아동학대, 생리대

주: 1) 2017년 7월~2018년 6월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

2) 2019년 1월~2019년 9월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

3) 1사분면은 긍정감정과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 2사분면은 긍정 감정이 상대적으로 높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 3사분면은 긍정 감정과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모두 낮은 영역, 4사분면은 긍정 감정이 상대적으로 낮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

자료: 김미곤 외(2018)의 〈표 5-8〉(p.251)와 본 보고서의 연구 결과〈표 5-9〉를 비교해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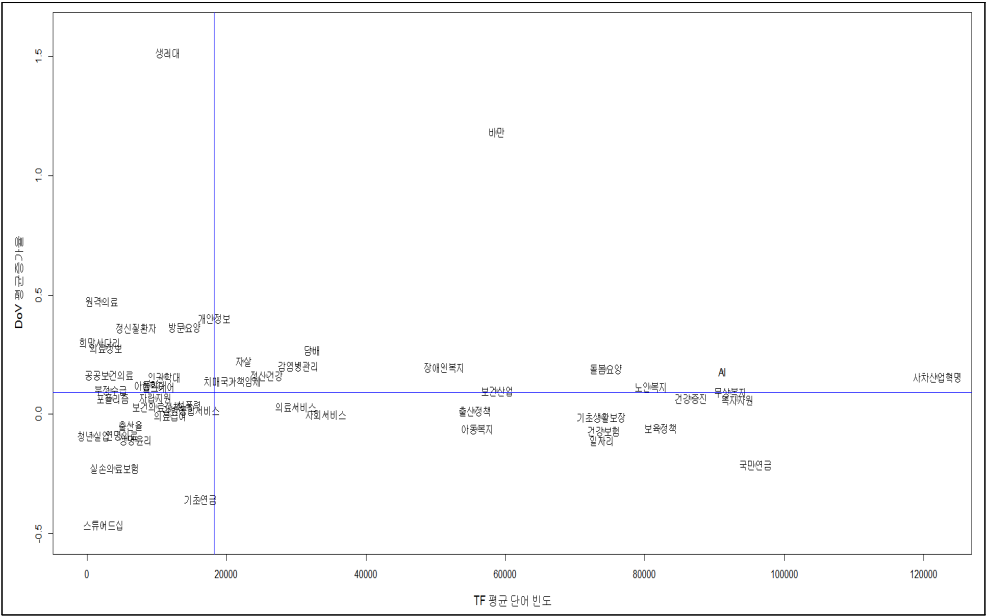
□ [그림 5-8], [그림 5-9]은 보건복지 관련 정책과 주요 이슈 키워드의 미래신호 강도를 도식화한 것임. 출산정책은 KEM에서는 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로 나타난 반면 KIM에서는 강신호로 나타났음.

□ 〈표 5-11〉과 같이 KEM과 KIM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강신호(1사분면)에는 4차산업혁명, AI, 노인복지, 돌봄요양, 비만, 장애인복지, 담배, 감염병관리, 치매 국가책임제, 무상복지, 개인정보가 포함되었고, 약신호(2사분면)에는 생리대, 원격의료, 정신질환자, 방문요양, 희망사다리, 의료정보, 공공보건의료, 인권학대, 부정수급, 아동학대, 헬스케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약신호인 2사분면에는 생리대 이슈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들 키워드가 시간이 지나면 강신호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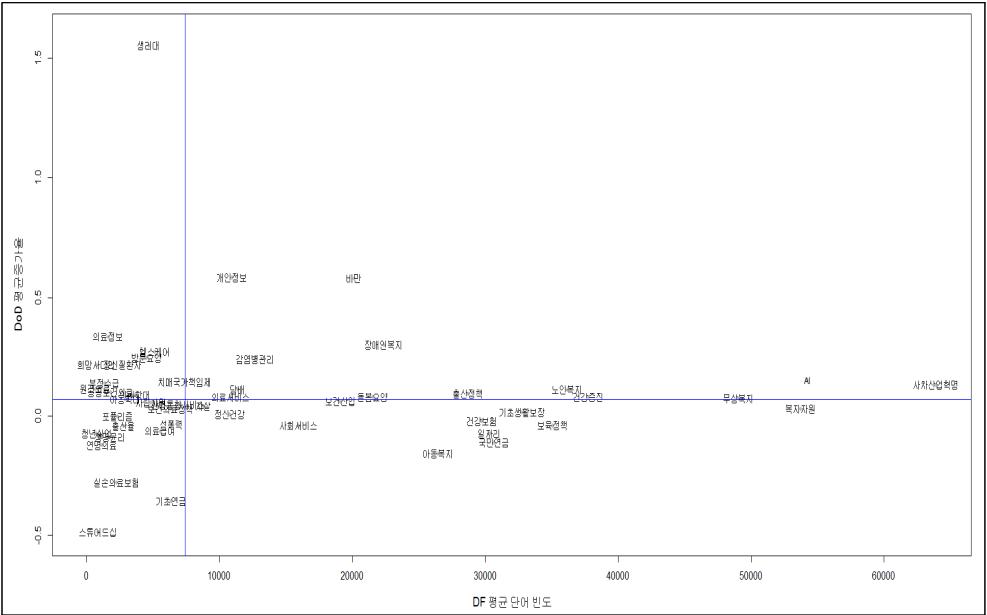
- KIM의 4사분면에만 나타난 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는 국민연금, 복지자원, 보육정책,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일자리, 아동복지, 사회서비스로 나타났으며, KIM의 3사분면에만 나타난 잠재신호는 포퓰리즘, 자립지원, 보건의료정책, 성폭력, 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급여, 출산율, 청년실업, 연명의료, 생명윤리, 실손의료보험, 기초연금, 스튜어드십으로 나타났다.
- 비만 이슈는 강신호이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연명의료와 생명윤리는 중요도(KEM)와 확산도(KIM) 측면에서 모두 잠재신호로 나타나 연명의료와 생명윤리 대한 지속적인 정책 개발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슈의 일반적인 흐름은 잠재신호(빈도와 증가율이 낮은 상태)→약신호(빈도는 낮지만 증가율이 높은 상태)→강신호(빈도와 증가율이 높은 상태)→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빈도는 높지만 증가율이 높지 않은 상태)로 이행됨.
- 빈도와 증가율이 낮은 상태는 본격적으로 이슈화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잠재신호로 해석할 수 있음.
- 반면, 빈도는 낮지만 증가율이 높은 상태인 약신호의 경우 향후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감성분석 결과 부정적 감성이 높은 정책의 경우 사전 대책 수립이 필요함.
- 또한 빈도와 증가율이 높은 상태인 강신호의 경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임. 특히 감성분석 결과 부정적 감성이 높은 정책의 경우 즉각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빈도는 높지만 증가율이 높지 않은 상태인 4사분면의 경우 감성분석 결과에서 긍정적 감성이 높은 경우는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홍보가 필요하며, 반대로 부정적 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의 경우 정책설계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림 5-8] 보건복지 관련 정책과 주요 이슈 키워드 KEM(중요도)



주: X축과 Y축의 실선은 중앙값임

[그림 5-9] 보건복지 관련 정책과 주요 이슈 키워드 KIM(확산도)



주: X축과 Y축의 실선은 중앙값임

〈표 5-11〉 보건복지 정책과 주요 이슈 관련 키워드의 미래신호

구분	잠재신호 (Latent signal)	약신호 (Weak Signal)	강신호 (Strong signal)	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 (Strong but low increasing signal)
	3/4 분면	2/4 분면	1/4 분면	4/4 분면
중요도 (KEM)	포플리즘, 자립지원, 보건의료정책, 성폭력, 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급여, 출산율, 청년실업, 연명의료, 생명윤리, 실손의료보험, 기초연금, 스튜어디십	생리대, 원격의료, 정신질환자, 방문요양, 희망사다리, 의료정보, 공공보건의료, 인권학대, 부정수급, 아동학대, 헬스케어	4차산업혁명, AI, 노인복지, 돌봄요양, 보건산업, 비만, 장애인복지, 담배, 감염병관리, 정신건강, 자살, 치매국가책임제, 무상복지, 개인정보	국민연금, 복지자원, 건강증진, 보육정책,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일자리, 출산정책, 아동복지, 의료서비스, 사회서비스
확산도 (KIM)	자립지원, 간병통합서비스, 보건의료정책, 포플리즘, 출산율, 성폭력, 의료급여, 청년실업, 연명의료, 생명윤리, 실손의료보험, 기초연금, 스튜어디십	생리대, 의료정보, 헬스케어, 방문요양, 희망사다리, 정신질환자, 부정수급, 원격의료, 공공보건의료, 인권학대, 아동학대	4차산업혁명, AI, 무상복지, 노인복지, 건강증진, 출산정책, 장애인복지, 돌봄요양, 비만, 개인정보, 감염병관리, 담배, 의료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복지자원, 기초생활보장, 보육정책, 국민연금, 건강보험, 일자리, 아동복지, 사회서비스, 보건산업, 정신건강, 자살
주요 신호	포플리즘, 자립지원, 보건의료정책, 성폭력, 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급여, 출산율, 청년실업, 연명의료, 생명윤리, 실손의료보험, 기초연금, 스튜어디십	생리대, 원격의료, 정신질환자, 방문요양, 희망사다리, 의료정보, 공공보건의료, 인권학대, 부정수급, 아동학대, 헬스케어	4차산업혁명, AI, 노인복지, 돌봄요양, 비만, 장애인복지, 담배, 감염병관리, 치매국가책임제, 무상복지, 개인정보	국민연금, 복지자원, 보육정책,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일자리, 아동복지, 사회서비스

□ 2018년도에 수행한 분석(김미곤 외, 2018)에서 사회보장 관련 키워드의 미래신호 강도를 도식화한 결과와 2019년 연구 결과를 비교하면 〈표 5-13〉과 같음.

○ 2019년 강신호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살펴보면, 2018년에 잠재신호였던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감염병 관련 정책, 치매가 강신호가 되었음.

○ 반면 국민연금, 사회서비스의 경우 2018년에 강신호였던 반면, 2019년에는 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로 나타남.

○ 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였던 기초연금은 2019년에 잠재신호가 되었음.

〈표 5-12〉 2018년과 2019년의 보건복지 정책과 주요 이슈 관련 키워드의 미래신호 비교

2018년 사회보장 관련 키워드 ¹⁾		2019년 보건복지 정책 관련 키워드 ²⁾	
약신호 [사전대책] (Weak Signal) [빈도 ↓, 증가율 ↑]	강신호 [즉각대책] (Strong signal) [빈도 ↑, 증가율 ↑]	약신호 [사전대책] (Weak Signal) [빈도 ↓, 증가율 ↑]	강신호 [즉각대책] (Strong signal) [빈도 ↑, 증가율 ↑]
2/4 분면	1/4 분면	2/4 분면	1/4 분면
군복무, 문재인 케어, 여성혐오, 건강보험, 부정수급, 응급의료, 무상	미세먼지, 아동복지 , 올림픽, Metoo, 우울, 국민연금 ,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 노인정책	생리대, 원격의료, 정신질환자, 방문요양, 희망사다리, 의료정보, 공공보건의료, 인권학대, 부정수급, 아동학대, 헬스케어	4차 산업혁명 , AI , 노인복지, 돌봄요양, 비만, 장애인복지, 담배, 감염병 관리 , 치매국가책임제 , 무상복지 , 개인정보
잠재신호 [정책설계점검] (Latent signal) [빈도 ↓, 증가율 ↓]	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 [홍보필요] (Strong but low increasing signal) [빈도 ↑, 증가율 ↓]	잠재신호 [정책설계점검] (Latent signal) [빈도 ↓, 증가율 ↓]	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 [홍보필요] (Strong but low increasing signal) [빈도 ↑, 증가율 ↓]
3/4 분면	4/4 분면	3/4 분면	4/4 분면
정신건강, 보건산업, 출산율, 인공지능 , 감염병 정책 , 4차 산업혁명 , 치매 , 자살예방	기초생활보장, 기초의료보장, 기초연금 , 일자리, 사회보장, 보육정책, 복지급여, 건강증진	포플리즘, 자립지원, 보건의료정책, 성폭력, 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급여, 출산율, 청년실업, 연명의료, 생명윤리, 실손의료보험, 기초연금 , 스튜어디십	국민연금 , 복지자원, 보육정책,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일자리, 아동복지 , 사회서비스

주: 1) 2017년 7월~2018년 6월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

2) 2019년 1월~2019년 9월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

자료: 김미곤 외(2018)의 〈표 5-9〉(p.254)와 본 보고서의 연구 결과(표 5-11)를 비교해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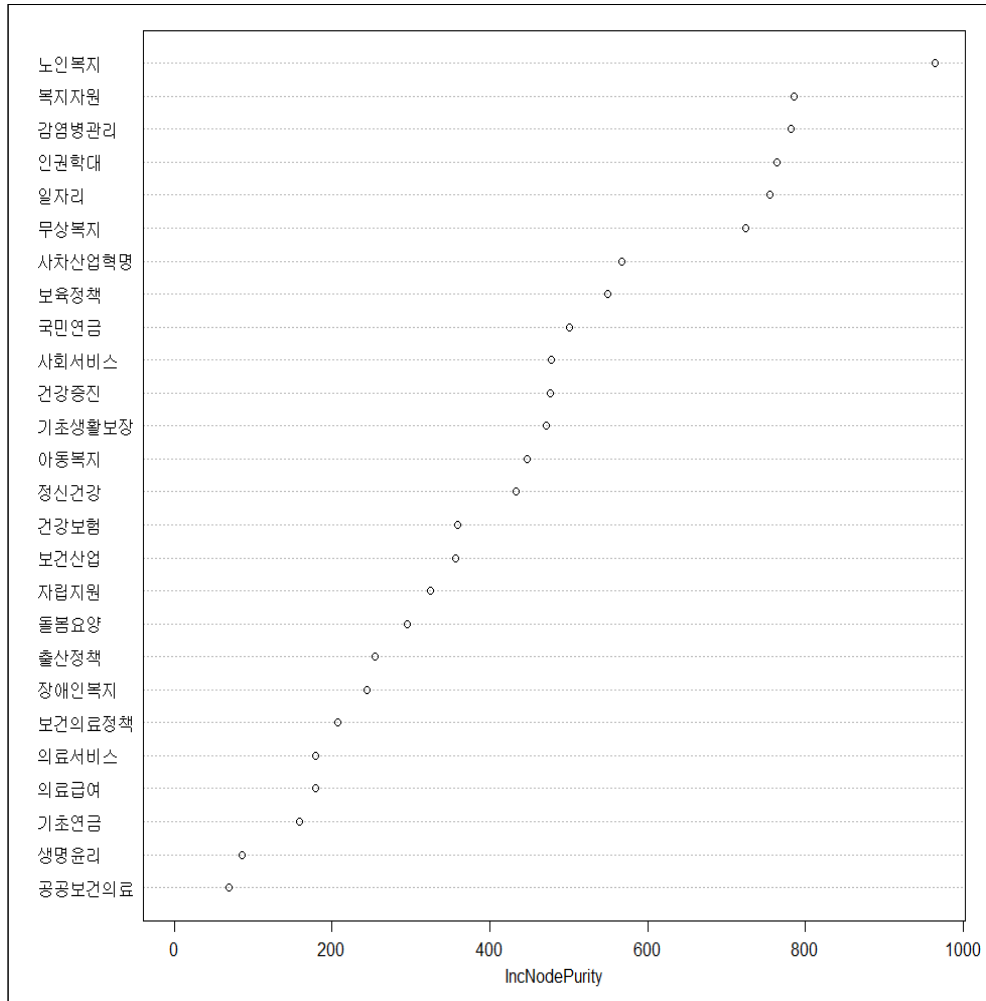
제4절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 미래신호 예측

1. 랜덤포레스트 분석을 통한 보건복지정책 예측

□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하여 보건복지 태도에 영향을 주는 정책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5-10]과 같음.

○ 랜덤포레스트의 중요도(IncNodePurity) 그림(Importance)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수요(찬성, 반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연관성이 높은) 정책은 ‘노인복지’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복지자원, 감염병관리, 인권학대, 일자리, 무상복지, 4차산업혁명, 보육정책, 국민연금, 사회서비스, 건강증진, 기초생활보장, 아동복지 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5-10] 랜덤포레스트 모델의 보건복지정책의 중요도



2.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보건복지정책 예측

□ 랜덤포레스트의 중요도로 나타난 정책요인들이 보건복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4차산업혁명, 건강증진, 공공보건의료, 보건산업, 보건의료, 의료서비스,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보육정책, 무상복지, 복지자원, 사회서비스, 아동복지, 돌봄요양, 자립지원, 장애인복지, 출산 정책은 반대보다 찬성 감정의 확률이 높으며, 건강보험, 감염병관리, 의료급여, 정신건강,

생명윤리, 국민연금, 기초연금, 인권학대, 일자리 정책은 찬성보다 반대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5-13〉).

〈표 5-13〉 보건복지 수요에 영향을 주는 정책요인

Variables in the Equation							95% C.I. for EXP(B)	
	B	S.E.	Wald	df	Sig.	Exp(B)	Lower	Upper
Step 1 ^a								
사차산업혁명	.513	.008	4257.681	1	.000	1.671	1.645	1.697
건강보철	-.104	.011	92.451	1	.000	.902	.883	.921
건강증진	.231	.009	624.639	1	.000	1.260	1.237	1.283
공공보건의료	.185	.039	22.883	1	.000	1.203	1.115	1.298
감염병관리	-.775	.013	3408.020	1	.000	.461	.449	.473
보건산업	.609	.013	2043.640	1	.000	1.839	1.791	1.888
보건의료정책	.570	.022	664.581	1	.000	1.769	1.694	1.848
의료서비스	.171	.017	102.324	1	.000	1.186	1.147	1.226
의료급여	-.096	.023	17.492	1	.000	.908	.868	.950
정신건강	-.489	.015	1095.569	1	.000	.613	.596	.631
생명윤리	-.218	.038	33.762	1	.000	.804	.747	.865
국민연금	-.354	.011	1083.333	1	.000	.702	.688	.717
기초생활보장	.392	.010	1471.194	1	.000	1.480	1.451	1.510
기초연금	-.090	.023	15.052	1	.000	.914	.873	.956
노인복지	.867	.011	6654.910	1	.000	2.379	2.330	2.430
보육정책	.265	.009	808.708	1	.000	1.304	1.280	1.328
무상복지	.578	.009	4507.171	1	.000	1.782	1.752	1.812
복지자원	.497	.009	3369.330	1	.000	1.644	1.616	1.672
사회서비스	.636	.015	1800.847	1	.000	1.889	1.834	1.945
인권학대	-1.611	.025	4240.052	1	.000	.200	.190	.210
아동복지	.347	.012	853.585	1	.000	1.415	1.382	1.448
돌봄요양	.138	.012	132.549	1	.000	1.148	1.121	1.175
일자리	-.443	.009	2231.326	1	.000	.642	.630	.654
자립지원	.839	.029	822.670	1	.000	2.314	2.185	2.450
장애인복지	.045	.011	15.949	1	.000	1.046	1.023	1.069
출산정책	.113	.010	119.050	1	.000	1.120	1.097	1.143
Constant	.509	.006	8498.420	1	.000	1.664		

a. 참조범주: 반대

3.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한 보건복지정책 수요예측

□ 보건복지정책 수요예측모형에 대한 의사결정나무는 [그림 5-11]과 같음.

○ 나무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뿌리나무는 예측변수(독립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종속변수의 빈도임. 뿌리마디의 보건복지에 대한 감정의 비율을 보면 보건복지에 대해 찬성은 70.6%, 반대는 29.4%로 나타났음. 뿌리마다 하단의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정책요인이 종속변수에 영향력이 가장 높은 요인(관련성이 깊은)으로 ‘노인복지’ 정책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온라인 문서에 ‘노인복지’ 정책이 있는 경우 찬성은 이전의 70.6%에서 83.0%로 증가한 반면, 반대는 이전의 29.4%에서 17.0%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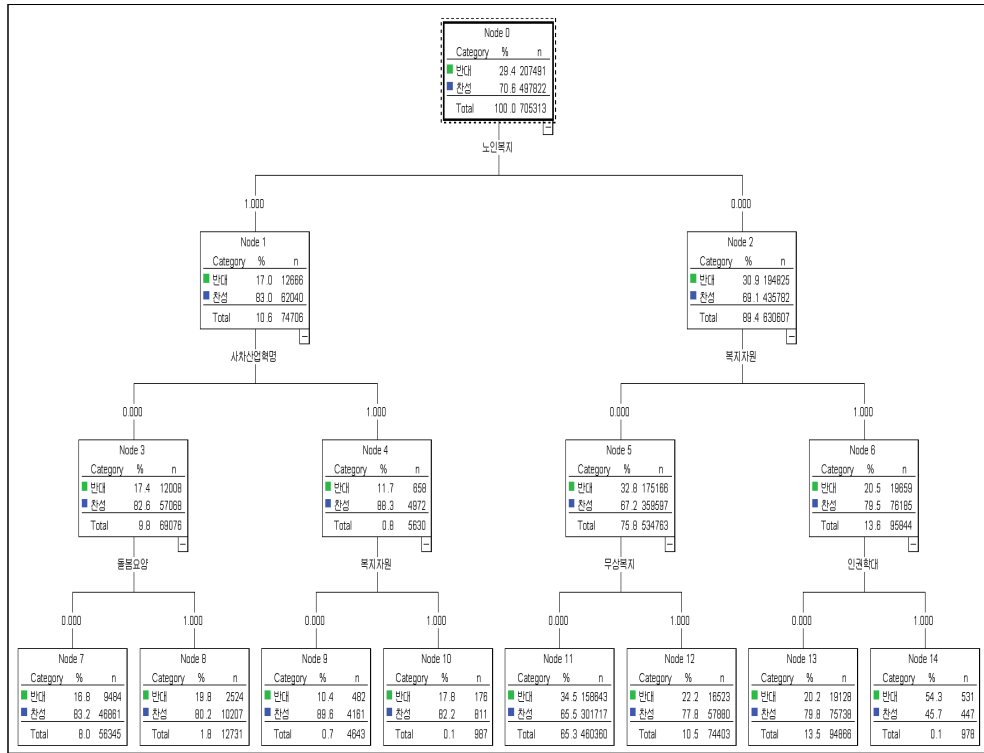
○ ‘노인복지’ 정책이 있고 ‘4차산업혁명’ 정책이 있는 경우 찬성은 83.0%에서 88.3%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는 17.0%에서 11.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정책 수요예측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이익도표는 <표 5-14>와 같음.

○ 보건복지정책의 반대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경우는 ‘노인복지 정책이 없고, 복지자원정책이 있고, 인권학대 정책이 있는’ 경우의 조합으로 나타남. 즉, 14번 노드의 지수가 184.6%로 뿌리마디와 비교했을 때 14번 노드의 조건을 가진 집단이 보건복지정책에 반대할 확률이 1.85배로 나타남.

○ 보건복지정책의 찬성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경우는 ‘노인복지 정책이 있고, 4차산업혁명 정책이 있고, 복지자원 정책이 없는’ 경우의 조합으로 나타남. 즉, 9번 노드의 지수가 127.0%로 뿌리마디와 비교했을 때 9번 노드의 조건을 가진 집단이 보건복지정책에 찬성할 확률이 1.27배로 나타남.

[그림 5-11] 보건복지정책 수요 예측의 의사결정나무 모형



<표 5-14> 보건복지정책 수요예측 의사결정나무 모형에 대한 이익도표

Target Category: .00 반대

Gains for Nodes												
Node	Node-by-Node						Cumulative					
	Node		Gain		Response	Index	Node		Gain		Response	Index
	N	Percent	N	Percent			N	Percent	N	Percent		
14	978	0.1%	531	0.3%	54.3%	184.6%	978	0.1%	531	0.3%	54.3%	184.6%
11	460360	65.3%	158643	76.5%	34.5%	117.1%	461338	65.4%	159174	76.7%	34.5%	117.3%
12	74403	10.5%	16523	8.0%	22.2%	75.5%	535741	76.0%	175697	84.7%	32.8%	111.5%
13	94866	13.5%	19128	9.2%	20.2%	68.5%	630607	89.4%	194825	93.9%	30.9%	105.0%
8	12731	1.8%	2524	1.2%	19.8%	67.4%	643338	91.2%	197349	95.1%	30.7%	104.3%
10	987	0.1%	176	0.1%	17.8%	60.6%	644325	91.4%	197525	95.2%	30.7%	104.2%
7	56345	8.0%	9484	4.6%	16.8%	57.2%	700670	99.3%	207009	99.8%	29.5%	100.4%
9	4643	0.7%	482	0.2%	10.4%	35.3%	705313	100.0%	207491	100.0%	29.4%	100.0%
Growing Method: CHAID												
Dependent Variable: Attitude												

Growing Method: CHAID
Dependent Variable: Attitude

Target Category: 1.00 찬성

Gains for Nodes												
Node	Node-by-Node						Cumulative					
	Node		Gain		Response	Index	Node		Gain		Response	Index
	N	Percent	N	Percent			N	Percent	N	Percent		
9	4643	0.7%	4161	0.8%	89.6%	127.0%	4643	0.7%	4161	0.8%	89.6%	127.0%
7	56345	8.0%	46861	9.4%	83.2%	117.8%	60988	8.6%	51022	10.2%	83.7%	118.5%
10	987	0.1%	811	0.2%	82.2%	116.4%	61975	8.8%	51833	10.4%	83.6%	118.5%
8	12731	1.8%	10207	2.1%	80.2%	113.6%	74706	10.6%	62040	12.5%	83.0%	117.7%
13	94866	13.5%	75738	15.2%	79.8%	113.1%	169572	24.0%	137778	27.7%	81.3%	115.1%
12	74403	10.5%	57880	11.6%	77.8%	110.2%	243975	34.6%	195658	39.3%	80.2%	113.6%
11	460360	65.3%	301717	60.6%	65.5%	92.9%	704335	99.9%	497375	99.9%	70.6%	100.0%
14	978	0.1%	447	0.1%	45.7%	64.8%	705313	100.0%	497822	100.0%	70.6%	100.0%

Growing Method: CHAID
Dependent Variable: Attitu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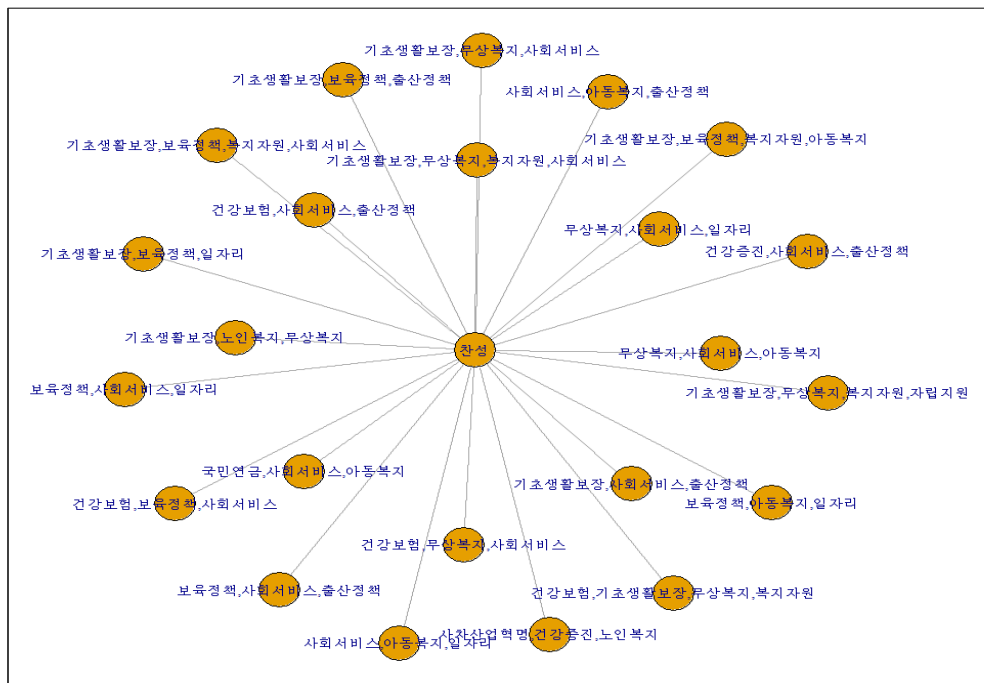
4. 연관분석을 통한 보건복지정책 수요예측

- 소셜 빅데이터 분석에서 연관분석은 하나의 온라인 문서에 포함된 둘이상의 단어들에 대한 상호관련성을 발견하는 것임.
- 여기서는 [그림 5-12]와 같이 하나의 문서에 나타난 정책요인 수요(찬성, 반대)에 대한 연관규칙을 분석하였음.
 - {일자리, 자립지원} → {찬성} 세 변인의 연관성은 지지도 0.003, 신뢰도는 0.92, 향상도는 1.3으로 2,211건의 문서에서 이와 같은 규칙이 나타났음.
 - 이는 온라인 문서에서 ‘일자리, 자립지원’ 정책 요인이 언급되면 찬성할 확률이 92%이며, 이는 ‘일자리, 자립지원’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문서보다 찬성할 확률이 약 1.3배 높아지는 것임.
 -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찬성보다 반대의 확률이 높았던 건강보험 정책은 연관 분석에서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자립지원} → {찬성}으로 나타났음.
 - {인권학대, 아동복지} → {반대} 세 변인의 연관성은 지지도 0.004, 신뢰도는 0.76, 향상도는 2.58로 3,011건의 문서에서 이와 같은 규칙이 나타났음.
 - 이는 온라인 문서에서 ‘인권학대, 아동복지’ 정책 요인이 언급되면 반대할 확률이 76%이며, 이는 ‘인권학대, 아동복지’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문서보다 반대할 확률이 약 2.58배 높아지는 것임.
 -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찬성보다 반대의 확률이 높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정책은 연관분석에서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 {반대}의 확률이 1.62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키워드 간의 관계는 ‘{기초연금} → {국민연금}’, ‘{사회서비스} → {돌봄요양}’ 등으로 상호 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12] 보건복지정책의 수요예측 연관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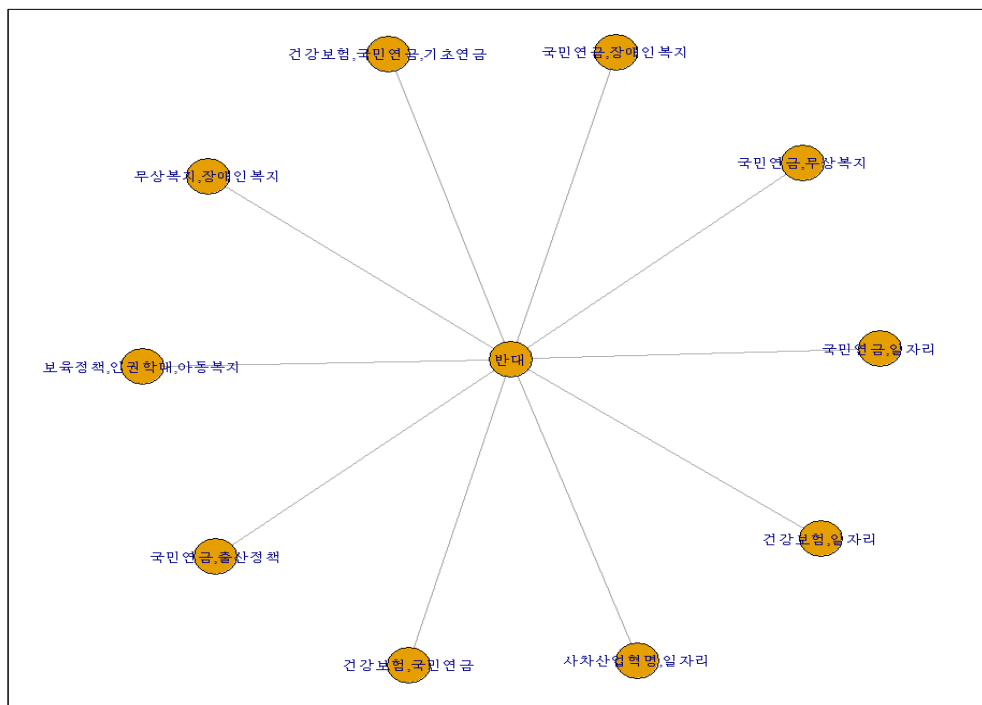
〈찬성〉

lhs	rhs	support	confidence	lift	count
[1] {일자리, 자립지원}	=> {찬성}	0.003134778	0.9200999	1.303595	2211
[2] {노인복지, 자립지원}	=> {찬성}	0.001120070	0.9196740	1.302992	790
[3] {사차산업혁명, 자립지원}	=> {찬성}	0.001526982	0.9220890	1.306414	1077
[4] {보건정책, 복지지원}	=> {찬성}	0.001074700	0.9594937	1.359408	758
[5] {보건산업, 사회복지}	=> {찬성}	0.001293043	0.9411765	1.333457	912
[6] {보건산업, 복지지원}	=> {찬성}	0.001029330	0.9189873	1.302019	726
[7]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 자립지원}	=> {찬성}	0.001317146	0.9290000	1.316205	929
[8] {복지지원, 일자리, 자립지원}	=> {찬성}	0.001162604	0.9447005	1.338449	820
[9]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자립지원}	=> {찬성}	0.001183872	0.9329609	1.321817	835
[10] {기초생활보장, 무상복지, 자립지원}	=> {찬성}	0.002605935	0.9176236	1.300087	1838
[11] {무상복지, 복지지원, 자립지원}	=> {찬성}	0.001485865	0.9249779	1.310506	1048
[12] {건강증진, 보건정책, 의료서비스}	=> {찬성}	0.001023659	0.9197452	1.303093	722
[13] {사차산업혁명,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	=> {찬성}	0.001084625	0.9261501	1.312167	765
[14] {건강증진, 보건산업, 의료서비스}	=> {찬성}	0.001656002	0.9291965	1.316483	1168
[15] {사차산업혁명, 보건산업, 의료서비스}	=> {찬성}	0.002536463	0.9179066	1.300488	1789
[16] {의료서비스, 사회복지, 불복요양}	=> {찬성}	0.001016570	0.9348110	1.324438	717
[17] {사회서비스, 아동복지, 출산정책}	=> {찬성}	0.001008063	0.9306283	1.318512	711
[18] {건강보험, 사회복지, 출산정책}	=> {찬성}	0.001318564	0.9318637	1.320262	930
[19] {건강증진, 사회복지, 출산정책}	=> {찬성}	0.001195214	0.9546999	1.352616	843
[20] {보육정책, 사회복지, 출산정책}	=> {찬성}	0.002014708	0.9416832	1.334175	1421
[21]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 출산정책}	=> {찬성}	0.001811961	0.9459660	1.340242	1278
[22] {사회서비스, 아동복지, 일자리}	=> {찬성}	0.001009481	0.9713506	1.376207	712
[23] {보육정책, 사회복지, 일자리}	=> {찬성}	0.001318564	0.9577755	1.356974	930
[24] {무상복지, 사회복지, 일자리}	=> {찬성}	0.001060522	0.9361702	1.326364	748
[25] {국민연금, 사회복지, 아동복지}	=> {찬성}	0.001120070	0.9393579	1.330880	790
[26] {무상복지, 사회복지, 아동복지}	=> {찬성}	0.001383783	0.9286394	1.315694	976
[27] {건강보험, 보육정책, 사회복지}	=> {찬성}	0.001060522	0.9234568	1.308351	748
[28] {건강보험, 무상복지, 사회복지}	=> {찬성}	0.001783605	0.9270450	1.313435	1258
[29] {기초생활보장, 무상복지, 사회복지}	=> {찬성}	0.002332298	0.9246768	1.310080	1645
[30] {기초생활보장, 보건정책, 출산정책}	=> {찬성}	0.002632874	0.9397773	1.331474	1857
[31] {보육정책, 아동복지, 일자리}	=> {찬성}	0.001390872	0.9237288	1.308737	981
[32] {기초생활보장, 보육정책, 일자리}	=> {찬성}	0.002196188	0.9209275	1.304768	1549
[33] {사차산업혁명, 건강증진, 노인복지}	=> {찬성}	0.001086043	0.9296117	1.317072	766
[34]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무상복지}	=> {찬성}	0.002163578	0.9181709	1.300862	1526
[35] {기초생활보장, 무상복지, 복지지원, 자립지원}	=> {찬성}	0.001129995	0.9278231	1.314537	797
[36] {기초생활보장, 무상복지, 사회복지}	=> {찬성}	0.001023659	0.9197452	1.303093	722
[37] {기초생활보장, 무상복지, 복지지원, 아동복지}	=> {찬성}	0.001127159	0.9352941	1.325122	795
[38] {기초생활보장, 보육정책, 아동복지}	=> {찬성}	0.001505714	0.9194805	1.302718	1062
[39]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무상복지, 복지지원}	=> {찬성}	0.001027912	0.9200508	1.303526	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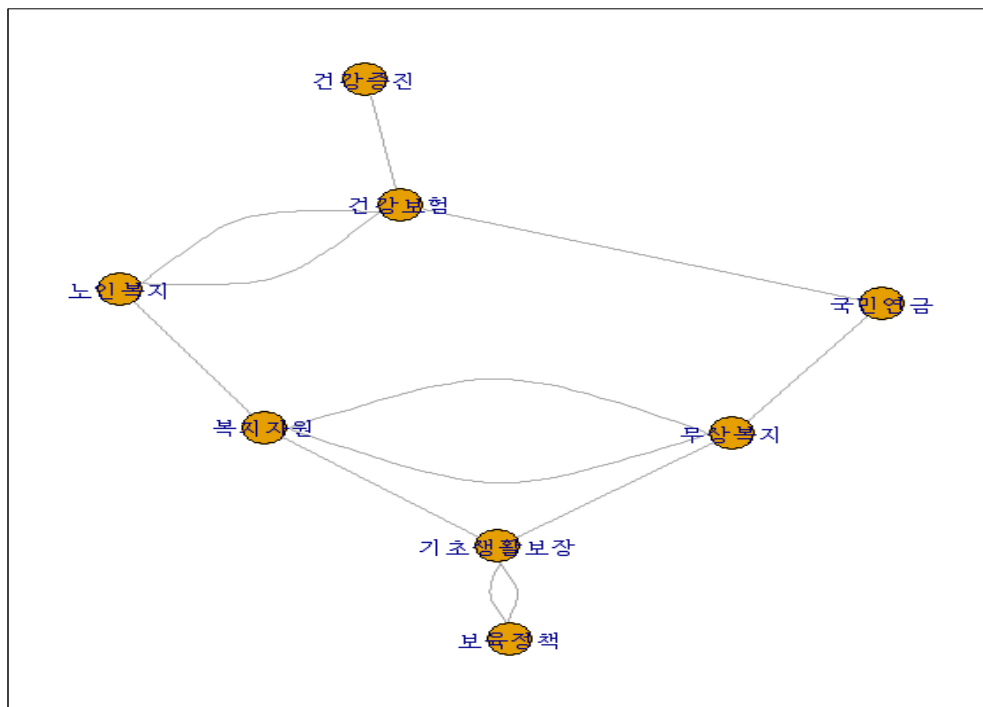
〈반대〉

	lhs	rhs	support	confidence	lift	count
[1]	{인권학대, 아동복지}	=> {반대}	0.004269027	0.7601616	2.583976	3011
[2]	{보육정책, 인권학대, 아동복지}	=> {반대}	0.001236331	0.7278798	2.474243	872
[3]	{보육정책, 인권학대}	=> {반대}	0.001894194	0.6469734	2.199222	1336
[4]	{인권학대}	=> {반대}	0.007459100	0.6405698	2.177455	5261
[5]	{건강증진, 감염병관리}	=> {반대}	0.004522815	0.5155972	1.752642	3190
[6]	{감염병관리}	=> {반대}	0.018591746	0.5018562	1.705933	13113
[7]	{건강보험, 기초연금}	=> {반대}	0.001953743	0.4779743	1.624752	1378
[8]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 {반대}	0.001953743	0.4779743	1.624752	1378
[9]	{정신건강}	=> {반대}	0.013084971	0.4361119	1.482452	9229
[10]	{일자리}	=> {반대}	0.033922528	0.4062967	1.381103	23926
[11]	{국민연금}	=> {반대}	0.029479111	0.3823183	1.299594	20792
[12]	{사차산업혁명, 감염병관리}	=> {반대}	0.001325653	0.3665229	1.245902	935
[13]	{국민연금, 일자리}	=> {반대}	0.003731677	0.3645429	1.239171	2632
[14]	{생명윤리}	=> {반대}	0.001653167	0.3495204	1.188106	1166
[15]	{기초연금}	=> {반대}	0.005688255	0.3484756	1.184554	4012
[16]	{국민연금, 기초연금}	=> {반대}	0.005688255	0.3484756	1.184554	4012
[17]	{사차산업혁명, 일자리}	=> {반대}	0.003106422	0.3369214	1.145279	2191
[18]	{건강보험, 일자리}	=> {반대}	0.001195214	0.3266176	1.110254	843
[19]	{국민연금, 출산정책}	=> {반대}	0.001677270	0.3251787	1.105362	1183
[20]	{국민연금, 장애인복지}	=> {반대}	0.002009037	0.3229262	1.097706	1417
[21]	{국민연금, 무상복지}	=> {반대}	0.004504383	0.3192002	1.085040	3177
[22]	{건강보험, 국민연금}	=> {반대}	0.004278951	0.3148998	1.070422	3018
[23]	{출산정책}	=> {반대}	0.022511991	0.3051349	1.037229	15878
[24]	{무상복지, 장애인복지}	=> {반대}	0.002196188	0.3021849	1.027201	1549
[25]	{건강보험, 의료급여}	=> {반대}	0.001782187	0.3015835	1.025157	1257
[26]	{건강보험}	=> {반대}	0.021963299	0.2980357	1.013097	15491



〈키워드 간 관계〉

	lhs	rhs	support	confidence	lift	count
[1]	{기초연금}	=> {국민연금}	0.01632325	1.0000000	12.969127	11513
[2]	{국민연금}	=> {기초연금}	0.01632325	0.2116983	12.969127	11513
[3]	{보건산업}	=> {사회산업혁명}	0.01224421	0.2372267	1.368786	8636
[4]	{장애인복지}	=> {복지자원}	0.01523295	0.2388458	1.517585	10744
[5]	{사회서비스}	=> {돌봄요양}	0.01304244	0.2680518	4.102517	9199
[6]	{돌봄요양}	=> {사회서비스}	0.01304244	0.1996137	4.102517	9199
[7]	{일자리}	=> {무상복지}	0.01479060	0.1771498	1.234035	10432
[8]	{아동복지}	=> {보육정책}	0.01512804	0.2126133	1.974183	10670
[9]	{아동복지}	=> {복지자원}	0.03138039	0.4410282	2.802217	22133
[10]	{복지자원}	=> {아동복지}	0.03138039	0.1993856	2.802217	22133
[11]	{돌봄요양}	=> {건강보험}	0.01405901	0.2151723	2.919826	9916
[12]	{건강보험}	=> {돌봄요양}	0.01405901	0.1907767	2.919826	9916
[13]	{돌봄요양}	=> {노인복지}	0.01925812	0.2947444	2.782736	13583
[14]	{노인복지}	=> {돌봄요양}	0.01925812	0.1818194	2.782736	13583
[15]	{돌봄요양}	=> {복지자원}	0.01308355	0.2002430	1.272310	9228
[16]	{국민연금}	=> {건강보험}	0.01358829	0.1762283	2.391368	9584
[17]	{건강보험}	=> {국민연금}	0.01358829	0.1843892	2.391368	9584
[18]	{국민연금}	=> {무상복지}	0.01411147	0.1830134	1.274881	9953
[19]	{건강보험}	=> {건강증진}	0.01290207	0.1750774	1.733139	9100
[20]	{건강보험}	=> {노인복지}	0.01875621	0.2545164	2.402936	13229
[21]	{노인복지}	=> {건강보험}	0.01875621	0.1770808	2.402936	13229
[22]	{노인복지}	=> {복지자원}	0.02149684	0.2029556	1.289545	15162
[23]	{보육정책}	=> {기초생활보장}	0.02613875	0.2427067	2.498674	18436
[24]	{기초생활보장}	=> {보육정책}	0.02613875	0.2690994	2.498674	18436
[25]	{기초생활보장}	=> {무상복지}	0.01781762	0.1834331	1.277805	12567
[26]	{기초생활보장}	=> {복지자원}	0.01707611	0.1757992	1.116998	12044
[27]	{무상복지}	=> {복지자원}	0.03018234	0.2102519	1.335904	21288
[28]	{복지자원}	=> {무상복지}	0.03018234	0.1917734	1.335904	21288



제 6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및 함의

제2절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및 함의

1. 보건복지정책 환경변화와 함의

□ 거대한 후퇴

- 복지국가는 일종의 거대한 사회 실험임.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 등 (2017)은 복지국가가 그들의 책이름처럼 『거대한 후퇴(Die große Regression)』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함.
- 『거대한 후퇴』 저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가 후퇴하여, 포퓰리즘을 앞세운 권위주의 정치로 이행되면 경제주권의 약화, 사회정책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음.

□ 인구구조의 변화

- 저출산은 학령인구 감소, 병역자원 감소,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고령화는 노인인구 증가, 인구역전 현상, 85세 이상의 후기 노인의 증가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2050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38.2%로 급증하여 일본(39.6%) 다음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경제성장과 빈곤·불평등 변화

- 김미곤 외(200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3년 이후 경제성장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분배상태가 악화되면 경제성장률이 저하됨. OECD 마이클 포스터(2016)에 의하면, 지니계수가 1포인트가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0.12% 포인트 감소함.

□ 노동시장과 빈곤·불평등 변화

-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읽는 열쇠 말은 이중구조(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여성/남성, 원청/하청 등), 높은 자영업자 비율, 증가하고 있는 청년실업 등임.
- 일자리 수급 전망
 - 인구구조 변화와 잠재성장률만을 고려하면, 2020년대 중반까지 일자리가 부족하고, 2030년 이후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수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나,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주장이 우세함.

□ 기술진보와 빈곤·불평등 변화

- 2015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은 초지능, 초연결 사회로의 연결이 확대되어 시간적·공간적 유연성이 확대되어 인간 삶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가 예고됨.
- 복지제도 측면에서는 마치 여름 옷(2차 산업혁명이후 복지제도)을 입고 겨울(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상태로도 볼 수 있음.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걸 맞는 복지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공적이전과 빈곤·불평등 변화

- 우리나라는 조세 및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개선효과는 약 14.1%(2012년)로 나타나 OECD 주요 국가들의 빈곤율 개선효과 약 59.9%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 이러한 빈곤 및 불평등 개선정도는 향후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공적이전지출이 증가하면, 그 개선도가 높아질 것으로 추론되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이 위에서 아래로(top-down 방식)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고, 저소득층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임.

2. 보건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 복지수요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보건복지관련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 저출산·고령화, 경제성장률 하락, 높은 비정규직 및 자영업 비율, 빈곤 및 분배구조 변화,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복지수요가 증가할 것임.

○ 연금제도의 성숙 등 보건복지제도 성숙에 따른 수요 증가

-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지라도, 제도 성숙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SOCX기준)은 2060년에 GDP 대비 약 25.8%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보사연 내부자료).

○ 새로운 보건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수요 증가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기 도입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수요 증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병수당 등이 도입된다면 이에 따른 복지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보편복지 등의 보건복지제도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

-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복지수요를 증가시킴.

□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 필요

○ 2000~2020년간 인구구조상 저부양비 기간이므로 동 기간 내에 세출구조 조정, 세금 인상 등의 사회적 대타협 필요함.

3. 보건복지정책 인식조사 결과 및 함의

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및 함의

-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삶의 만족도는 평균 6.8점으로 2018년 6.6점보다 다소 상승함(김미곤 외, 2018).
 -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 수준은 연령대별로 40대가 낮은 U자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50대부터 낮아지면서 60대 이상에서 삶의 만족 수준이 제일 낮은 수준의 특징을 보임.
 - 또한 광역시 거주 국민이 평균 7.0점인 반면 군부에 거주하는 국민은 5.6점으로 나타나 군부 지역 거주 국민의 낮은 삶의 만족도를 알 수 있음.
- 국민의 소득 및 재산의 분배, 그리고 기회가 얼마나 평등(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질문에 아주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지만 기회의 분배가 소득 및 재산의 분배보다 약간 더 평등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음.
 -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소득 및 재산, 그리고 기회의 분배가 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소득 및 재산 분배 인식의 집단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나, 기회의 분배 인식에 있어서는 집단별 차이가 발견됨.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회의 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함.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복지 수준 및 정책 만족도(성과)에 대해 국민은 전문가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 광역시나 시부에 거주하는 국민보다 군부 지역의 거주 국민의 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주관적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국민은 전문가보다 복지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주요 복지 정책과제별 정책 만족도(성과 평가) 있어서는 국민과 전문가 사이의 의견의 차이가 나타남.

- 국민은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4.2점), ‘노인 대상 돌봄 확대’(4.2점) 정책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전문가는 ‘노인 대상 돌봄 확대’(3.8점)의 성과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가장 만족도(성과)가 낮은 정책도 국민은 ‘일자리 지원 확대’(3.7점), 전문가는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3.0점),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3.0점)으로 의견의 차이를 보임.
- 국민들이 느끼는 걱정거리에 대해서는 국민 스스로와 전문가가 생각하는 문제가 ‘일자리’로 일치함. 다만, 응답 비율이 국민은 27.4%, 전문가는 60.3%로 나타나 전문가는 국민 스스로가 느끼는 것보다 일자리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국민과 전문가의 걱정거리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민은 일자리 > 신체와 건강 > 노후 생활 > 자녀 교육 순
 - 전문가는 일자리 > 노후 생활 > 주거 > 출산과 양육 순
- 보건복지정책 확대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으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영유아·아동’으로 인식하고 있음.
-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을 좁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정책 확대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저소득층’으로 일치함(국민 38.1%, 전문가 46.3%).
- 지역사회 안정적인 지속거주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커뮤니티케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방향으로 국민과 전문가 모두 ‘재가 돌봄 서비스 확충’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다음으로는 ‘당사자에 적합한 주거 환경 개선’ > ‘동네 의원을 통한 재택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안내 강화’ > ‘안부 확인 등 상시적 체계 구축’ 순으로 국민과 전문가의 정책 선호가 일치함.

□ 보건복지정책 확대에 대해 국민은 52.5%, 전문가는 75.2%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세금(보험료) 부담에 대한 동의 정도는 국민은 79.8%, 전문가는 25.6%가 ‘반대’한다고 응답함.

○ 국민의 경우, 복지확대는 찬성하지만 세금 부담 증가는 반대하는 집단이 전체 응답자의 34.2%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이는 2018년 49.5%였던 것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음(김미곤 외, 2018).

나.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및 함의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해 국민은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반면, 전문가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정부가 노력할 부분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는 공통적으로 고용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다음으로 국민은 주거문제 해결(20.4%)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전문가는 아동돌봄지원(27.3%)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이는 기존에 선행된 다수의 연구 보고서(강영주 외, 2018; 이삼식 외, 2010)에서도 고용문제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이 저출산에 큰 원인이라고 밝힌바 있어, 고용문제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2014년과 2015년 전문가 조사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와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2016년과 2018년 조사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양립 정책 강화’와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등 결혼지원정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확대에 대한 노력이 국민과 전문가 모두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음.

- 다음으로 국민은 노인 소득지원 강화(27.0%), 전문가는 노인 돌봄 지원 확대(24.8%)로 응답함.

- 2018년에 국민과 전문가 모두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이 고령화 대응 시 가장 필요한 지원이라고 보았음(김미곤 외, 2018).

□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때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국민은 경제적 지원을 38.6%로, 전문가는 재가 요양·돌봄 서비스 확대를 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국민은 재가 요양 돌봄 서비스 확대(26.3%)를, 전문가는 양질의 요양 시설 확대(14.9%)를 응답함.

다.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 및 함의

□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국민은 평균 4.1점(6점 척도), 전문가는 평균 3.2점(6점 척도)으로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전문가가 더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과 전문가 모두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음.

□ 향후 가장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가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전문가는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 확대(자살예방,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등)’이 4.9점(6점 척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2018년 조사결과와 대체로 유사하며 국민과 전문가 모두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증가하였음(김미곤 외, 2018).

□ 의료서비스의 항목별(의료의 접근성, 의료의 질, 의료의 보장성) 평가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 모두 의료의 접근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은 ‘의료의 접근성’(92.5%), ‘의료의 질’(82.2%), ‘의료의 보장성’(79.7%) 순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전문가는 ‘의료의 접근성’(86.0%), ‘의료의 보장성’(83.5%), ‘의료의 질’(80.2%)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정부가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 모두 ‘청소년’이 우선적인 대상이라고 응답함.
- 전문가는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우선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관리’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인식함.
- 전문가가 인식하는 감염병 예방 관련 과제는 ‘초기격리조치 및 조기 역학조사 등 확대’에 대해 50.4%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함.
- 다음으로 ‘체계적인 감염병 연구 및 전문가 양성’(19.0%), ‘질병관리본부 위상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17.4%)로 나타남.

라.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복지정책 미래신호 예측

-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찬성 감정은 자립지원, 노인복지,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복지자원, 보건산업, 무상복지, 기초생활, 4차 산업혁명, 돌봄 요양, 공공보건, 아동복지, 의료서비스, 보육정책 등 순으로 나타났음.
- 반대의 감정은 인권학대, 감염병관리, 정신건강, 일자리, 국민연금, 생명윤리, 기초연금, 출산정책, 건강보험, 건강증진, 장애인복지, 의료급여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보건복지 이슈에 대한 찬성 감정은 통합서비스, 거버넌스, 플랫폼, 방문진료, 희망 사다리, 헬스케어, 바이오, 치매책임제, 돌봄, 틀니, 실손보험, 신약, 베이비부머, 고령화, 복지사각, 사회안전망, 방문요양, AI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반대의 감정은 포퓰리즘, 스튜어드십, 생리대, 아동학대, 성폭력, 의료민영화, 부정수급, 학대, 결핵, 청년수당, 정신질환자, 담배, 양극화, 장애등급제, 개인 정보, 자살, 연명의료, 청년실업, 출산율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보건복지 관련 정책과 주요 이슈에 대한 감성분석과 평균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예상되는 리스크는 희망사다리, 헬스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노인복지, 무상복지, 방문요양, 4차산업혁명, 돌봄요양, 공공보건의료, AI, 의료서비스, 의료정보, 건강증진, 장애인복지로 나타남.

- 보건복지 관련 정책과 주요 이슈의 미래신호 분석에서는 4차 산업혁명, AI, 노인 복지, 돌봄요양, 비만, 장애인복지, 담배, 감염병관리, 치매국가책임제, 무상복지, 개인정보가 강신호로 분류되었음.
- 특히, 비만 이슈는 강신호이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생리대, 원격의료, 정신질환자, 방문요양, 희망사다리, 의료정보, 공공보건 의료, 인권학대, 부정수급, 아동학대, 헬스케어는 약신호로 분류되었음.
 - 그럼에도 생리대 이슈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들 키워드가 시간이 지나면 강신호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봄.
- 포플리즘, 자립지원, 보건의료정책, 성폭력, 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급여, 출산율, 청년실업, 연명의료, 생명윤리, 실손의료보험, 기초연금, 스튜어드십은 잠재신호로 분류되었음.
- 특히 연명의료와 생명윤리는 중요도(KEM)와 확산도(KIM) 측면에서 모두 잠재신호로 나타나 연명의료와 생명윤리 대한 지속적인 정책 개발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찬성보다 반대의 확률이 높았던 건강보험 정책은 연관 분석에서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자립지원} → {찬성}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노인복지’ 정책이 있고 ‘4차 산업혁명’ 정책이 있는 경우 찬성은 83.0%에서 88.3%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정책의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018년과 2019년의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의 주요 키워드 분석결과 비교를 통하여 차이를 나타낸 정책들 중심으로 정책방안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감성과 증가율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2018년에는 정책 홍보 강화가 필요했던 2/4분면의 치매, 인공지능, 4차 혁명이 2019년에는 1/4분면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정책으로 변동되었음.
 - 2018년에는 정책설계 보완이 필요했던 4/4분면의 아동복지, 국민연금 등 각각 정책홍보 강화, 정책설계 점검이 필요한 정책으로 이동하였음.
 - 3/4분면의 정책설계 점검이 필요했던 출산율, 출산정책은 2019년에는 각각 정책설계 점검과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변화하였으며, 정책 홍보 강화가 필요하던 감염병 관련 정책 역시 정책 설계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변화하였음.
- 또한 키워드의 미래신호 강도 즉, 빈도와 증가율 측면에서의 2018년과 2019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특히 2019년에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강신호를 나타내는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감염병 관련 정책, 치매 등은 2018년에 잠재신호이었음.
 - 국민연금, 사회서비스의 경우 2018년에 강신호이었던 반면, 2019년에는 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로 나타나 향후 홍보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함.
 - 한편 2018년에 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에 있던 기초연금은 2019년에 빈도도 낮고 증가율도 낮은 잠재신호로 이동되었음.

제2절 정책 제언

- 2019년 국민 전체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8점으로 2018년 6.6점 보다는 다소 상승한 편이지만,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집단이 연령 60대 이상의 국민과 군부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나타나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 ‘사람 중심’이라는 정책적 지향이 요구되며 이는 국정목표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전문가의 62.0%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국민은 소득 및 재산의 분배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가에 대해 중간 값보다 낮은 3.4점으로

불평등하게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복지지출 확대 및 불평등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이는 OECD 평균의 약 절반 수준인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3055억 원 증가(14.2%)한 것으로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국민들의 복지 만족도 및 행복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우선순위별로 파악하여,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함.

□ 복지지출 확대 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하여 영역(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분배정의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분야, 복지욕구가 높은 분야, 과거 성과가 낮은 분야, 보건복지관련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복지수요를 증가시키는 분야, 즉 정신질환 및 감염병 예방 분야 등이 이에 해당함.

- 국민과 전문가 모두 국민이 느끼는 가장 큰 걱정거리인 일자리와 두 집단에서 주요 걱정거리로 인식한 노후생활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및 고용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면서 건강정책 및 인구정책은 주요 정책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실효성이 높은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의 국민부담률로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증가시키고, 늘어나는 복지 욕구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2000~2020년간의 저부양비 기간에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고,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국민통합 기반을 마련해야 함.

○ 국민의 보건복지정책의 확대와 세금(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동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복지확대는 찬성하지만 세금 부담 증가는 반대하는 집단은 전체 응답자의 34.2%로 나타남.

○ 그러나 이는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김미곤 외, 2018)에서 복지

확대는 찬성하면서도 세금 증가 부담은 반대하는 집단이 49.5%였던 것에 비해 낮아져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음.

○ 바람직한 미래 한국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발전에 대해 전문가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전문가는 우리나라 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현행 복지제도 간 연계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30.6%)라고 인식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는 ‘유사·중복 사업조정, 부적정 수급 점검 등을 통한 복지재정 누수 방지 향상’(20.7%)과 ‘현행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19.8%) 순으로 응답함.

-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0.8%로 낮은 수준임.

○ 이러한 결과는 2016년 이후의 유사한 연구결과로, ‘현행 복지제도 간 연계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냄.

□ 비정형 빅데이터 지속적인 분석과 인식조사 결과 간의 연계분석의 함의

○ 본 연구에서 2018년과 2019년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의 비교는 주요 세부 정책과제별의 정책적 대응방안의 방향 설정에 유의미한 함의 점을 줌.

- 연도별의 변화를 나타낸 주요 보건복지 정책과제별로 즉각적인 대책 수립, 정책설계 보완, 정책설계 점검, 홍보강화, 사전대책 수립 필요 등의 적절한 대응방안들을 모색하고 그 원인을 점검해야 할 것임.

○ 또한 인식조사에서 보건복지정책의 분야별 즉, 사회복지정책, 인구정책, 보건 의료정책의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의 만족도와 향후 보다 강화해야 할 정책, 국민의 걱정거리와 욕구 등의 조사결과와 소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연계한 체계적인 점검은 매우 유용함.

- 따라서 보건복지정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인식조사가 이루어져야하고, 관련 포털에 동향분석 결과가 시계열로 제공되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감안한 정책은 근거중심 정책수립의 기본이고, 부수적으로 조사를 통해 복지체감도를 증진 시킬 수 있으므로 매년 체계적인 복지인식조사 및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함.
-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수를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방식으로 매년 진행하여 차년도 보건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비정형 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미래 복지욕구 등을 예측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 강미나·김혜승·김근용·이수옥·박미선·이재춘...박승환. (2019).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 국토교통부.
- 강신욱·손창균·남상호·김계연·손기철·신재동...조상은. (2010). 2010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영주·최지민. (2018). 저출산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교육부(2019. 2. 19.).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 국세청. (2019). 2019년 국세통계연보
- 국회예산정책처. (2014). 2014~2060년 장기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 (2019).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 기획재정부. (2019). 국가채무 통계정보보고서.
- 김문길·김태완·오미애·박형준·신재동·정희선...함선유. (2016). 2016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2019). 포용적 복지의 개념과 철학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송태민·여유진·정홍원·고제이·유진영·김성아·김가희. (2016). 2016년 보건복지정책 수요 조사 및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여유진·김성아. (2014). 2014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김미곤·여유진·김성아·김진희·최민정. (2015). 2015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보건 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여유진·손창균·김문길·유현상·서봉균...지은정. (2007). 2007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초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이태진·송태민·우선희·김성아.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 보건 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김미곤·김문길·이윤경·김성아·이주미. (2012).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보건 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레이 커즈와일. (2007). 특이점이 온다. 김영사
- 박용정. (2017). 한국, 더 이상 경제성장의 모범국가가 아닌가? 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경제주평. 17-19(통권 744호). 현대경제연구원.
- 박일수·이동현. (2010). 건강보험 중 · 장기 재정전망 연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박찬국·김현제. (2015). 사물인터넷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발전방향 연구 -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미래 신호 탐색. 에너지경제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9a). 연명의료결정제도 1년,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도왔다. 보도자료(2019. 02. 14).
- 보건복지부. (2019b). 복지 위기가구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체계 강화한다. 보도자료(2019.09.15.)
- 보건복지부. (2019c).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2019. 10. 14).
- 보건복지부. (2020).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년, 제도 이용 지속적으로 증가. 보도자료(2020. 2. 4).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 서베이 리서치센터. (2018).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 General Social Survey, KGSS).
- 소득보장정책연구실. (2019). 2019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송주영·송태민. (2019).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개발. 황소걸음 아카데미.
- 송태민·송주영. (2017). 머신러닝을 활용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과 미래신호 예측. 한나래아카데미.
- 신영석·변용찬·오영호·이상영·정경희·이삼식...남궁은하. (2010). 보건복지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영석·윤강재·김소운·이나경·임재우·이진형·김진호 (2018).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신영석·정홍원·김태완·강희정·김대중·강은나...정현진. (2014). 2014 보건복지정책 현안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김미곤·김태완·양시현·최현수. (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오미애·이병재·최준영·이주미·김근혜...김정욱. (2019).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미애. (2019). 보건복지 정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전략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274, 29-40.
- 윤강재·송태민·최성은·정연·이기호. (2016). 정보통신기술(ICT)과 보건의료서비스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정경희. (2010).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김은정·박종서·변수정·오미애·이상림·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혁우. (2016).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배재대학교
- 이현주·노대명·오미애·전지현·신재동·정희선...이혜림. (2013).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의료기기산업팀. (2018).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현황 및 이슈(Ⅰ). 보건의료산업브리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장근호. (2019).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 배경 및 국제비교. 한은 금요강좌(5.31). 한국은행.
- 전진아·이난희·김진호. (2017).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과 최근의 정책적 변화.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진아·전민경·김남희·박재현·이용주·윤시문·유혜영·김보은. (2019). 수요자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 전략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오영희·강은나·김경래·이윤경·오미애...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근하. (2010). 텍스트마이닝과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미래예측 방법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정원호·이상준·김남훈. (2016).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순. (2016). 우리의 뉴노말(New Normal)-그 본질과 처방. 한국경제포럼, 9(1), 17-24.
- 지그문트 바우만·슬라보예 지젝·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낸시 프레이저·에바 일루즈. (2017). 거대한 후퇴(Die große Regression). 살림출판사.
- 차병섭·이영. (2013).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 도구변수법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재정학연구, 6(4), 109-149.
- 최성은·김태일·여유진·임완섭·이기주. (2011).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2010).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2016). 사회조사 보도자료.
- 통계청. (2017). 사회조사 보도자료.
- 통계청. (2018). 사회조사 보도자료.
- 통계청. (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국감정원. (2019). 주택가격동향보고서.
- 황도경·안수인. (2018).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Ansoff, H. I. (1975). Managing strategic surprise by response to weak signals. *Californian Management Review*, 18(2), 21-33.
- Barro, R. J. (1990). Government spending in a simple model of endogenous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Part 2), S103-S125.
- Breiman, L. (2001). *Random forest, Machine learning*. 45(1), pp. 5-32.
- Georghiou, L. et al. (2008). *The Handbook of Technology Foresight. Edward Edgar Publishing Limited. USA.*
- Government Equalities Office. (2019). Attitudes to equalities : *The British Social Attitudes Survey*. 2017.
- Hiltunen, E. (2008). The future sign and its three dimensions. *Futures* 40, 247-260.
- Markus Hadler, Florian Gundl, Bostjan Vrecar. (2020), The ISSP 2017 Survey on Social Networks and Social Resources, *An Overview of Country-Level Results*
- Michigan Public Policy Survey. (2019). The center for local, State, and Urban Policy
- OECD. (2020). OECD National Accounts,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20.1
- OECD. (2019).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 *OECD publishing*, p.83
- OECD. (2013). Fact Book 2013: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publishing*.
- OECD, Wage levels (indicator). doi: 10.1787/0a1c27bc-en (Accessed on 16 April 2020)
- Spärck Jones, K. (1972). A Statistical Interpretation of Term Specificity and Its Application in Retrieval. *Journal of Documentation*, 28, 11-21. doi:10.1108/eb026526.
- UN, (2016). World Happiness Report.
- Yoo, S.-H., Park, H.-W., & Kim, K.-H. (2009). A study on exploring weak signals of technology innovation using informetrics.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17(2), 109-130.
- Yoon, J. (2012). Detecting weak signals for long-term business opportunities using text mining of Web news, *Journal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39(16), 12543-125
- Wilkinson, R. and Pickett, K. (2011). *The spirit level*. Tantor Media, Incorporated.
- Wilkinson, R. and Pickett, K. (2009) *The Spirit Level: Why More Equal Societies Almost Always Do Better*. London: Penguin

랜드 아메리칸 라이프 패널 홈페이지

(<https://alpdata.rand.org/index.php?page=data>)에서 2020. 3. 13에 인출

미시간 공공 정책 조사 홈페이지

(<http://closup.umich.edu/michigan-public-policy-survey/>) 에서 2020. 3. 19에 인출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에서 2020.04.02.에 인출

ATP홈페이지(<https://www.pewresearch.org/american-trends-panel-datasets/>)에서

2020.3.19.에 인출

EASS홈페이지(<http://www.eassda.org/>)에서 2020. 3. 19.에 인출

PPIC 홈페이지

(<https://www.ppic.org/data-set/ppic-statewide-survey-special-survey-on-public-attitudes-and-fiscal-realities-in-five-stressed-states/>) 에서 2020.3.13.에 인출

The World Wealth and Income Database (www.wid.world/#Database)에서 2016.7.12.에 인출

WVS 홈페이지(<http://www.worldvaluessurvey.org/>)에서 2020. 3. 19에 인출

WVS. (2015). World Value Survey 1981-2014 Longitudinal Aggregate v.20150418,

2015.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www.worldvaluessurvey.org).

부록 1. 연도별 보건복지정책 수요 및 인식조사 문항 비교

부록 2.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조사표

부록 3.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조사표

부록 4.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기초분석 결과표

부록 5.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기초분석 결과표

부록 1. 연도별 보건복지정책 수요 및 인식조사 문항 비교

1. 대국민 조사

□ 연도별 문항 구성

2010	2011	2012	2014	2015	2016	2018	2019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일반 인식 및 정책방향		일반 인식 및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				일반 인식 및 사회보장 인식	일반 인식 및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
보건복지 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 복지, 보건의료, 저출산 고령화사회	보건복지 정책방향: 일반, 보건분야, 복지분야	보건복지 정책방향: 보건분야, 복지분야				사회보장 정책 방향 및 미래전망	보건복지 정책방향: 사회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인구정책
재원 및 기타							
일반사항							

□ 연도별 조사표 세부구성

○ 일반 인식 및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1.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일반 인식 및 정책방향	1.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일반 인식 및 평가	1. 일반 인식 및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	1. 일반 인식 및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
		2. 귀하는 현재 본인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6점 척도)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럽다 ③ 다소 불만족스럽다 ④ 다소 만족스럽다 ⑤ 만족스럽다 ⑥ 매우 만족스럽다	2. 귀하는 현재 본인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6점 척도)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럽다 ③ 다소 불만족스럽다 ④ 다소 만족스럽다 ⑤ 만족스럽다 ⑥ 매우 만족스럽다
		7. 귀하께서 생활하는데 느끼는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일자리(조기퇴직, 자영업 폐업 등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 ② 자녀교육(학벌위주 사회의 입시경쟁 속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 ③ 건강의료(질병, 사고 시 치료비 및 간병 부담으로 인한 빈곤층 추락우려) ④ 노후(은퇴 후 연금수급 등 소득, 건강에 대한 불안) ⑤ 안전(먹거리 안전, 주거, 범죄 등에 대한 불안)	7. 귀하께서 생활하는데 느끼는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일자리(조기퇴직, 자영업 폐업 등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 ② 자녀교육(학벌위주 사회의 입시경쟁 속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 ③ 건강의료(질병, 사고 시 치료비 및 간병 부담으로 인한 빈곤층 추락우려) ④ 노후(은퇴 후 연금수급 등 소득, 건강에 대한 불안) ⑤ 안전(먹거리 안전, 주거, 범죄 등에 대한 불안)
2.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해 전반적인 복지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1. 귀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점 척도)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다소 낮다 ④ 다소 높다 ⑤ 높다 ⑥ 매우 높다	1. 귀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점 척도)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다소 낮다 ④ 다소 높다 ⑤ 높다 ⑥ 매우 높다	3. 귀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점 척도)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다소 낮다 ④ 다소 높다 ⑤ 높다 ⑥ 매우 높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1.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일반 인식 및 정책방향	1.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일반 인식 및 평가	1. 일반 인식 및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	1. 일반 인식 및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
		23.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보건 및 복지 정책 확대에 동의하십니까? ① 적극 동의한다 ② 동의한다 ③ 반대한다 ④ 적극 반대한다	13.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보건 및 복지 정책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점 척도)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다소 반대한다 ④ 다소 찬성한다 ⑤ 찬성한다 ⑥ 매우 찬성한다
7. 보건 및 복지 정책 강화를 위한 재정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 및 복지 증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① 적극 동의한다 ② 동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반대한다 ⑤ 적극 반대한다	22. 만약, 정부가 세금을 줄이는 것과 사회복지비를 증가시키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귀하는 어느 쪽을 지지하십니까? ① 사회복지 혜택이 감소하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을 지지한다 ② 세금이 늘더라도 사회복지 혜택 증가를 지지한다	24. 보건 및 복지 정책 강화를 위한 재정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 및 복지 증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① 적극 동의한다 ② 동의한다 ③ 반대한다 ④ 적극 반대한다	14.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보건 및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점 척도)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다소 반대한다 ④ 다소 찬성한다 ⑤ 찬성한다 ⑥ 매우 찬성한다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구분
1. 일반 인식 및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	1. 일반 인식 및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	1. 일반 인식 및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	1. 일반 인식 및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	
	7. 귀하는 현재 복지 확대가 가장 필요한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동 ② 청년 ③ 중장년 ④ 노인 ⑤ 장애인 ⑥ 저소득 취약계층 ⑦ 여성		B7. 귀하는 정부가 보건복지 정책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 2순위) ① 영유아·아동 ② 청소년 ③ 청년 ④ 중장년 ⑤ 노인 ⑥ 기타() B7-1. 귀하는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정책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1, 2순위) ① 저소득층 ② 장애인 ③ 한부모가정·조손가정 ④ 노인 ⑤ 이주민(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⑥ 기타()	2개년 선택지 수정문항
15.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보건 및 복지 정책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점 척도)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다소 반대한다 ④ 다소 찬성한다 ⑤ 찬성한다 ⑥ 매우 찬성한다	15.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보건 및 복지 정책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점 척도)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다소 반대한다 ④ 다소 찬성한다 ⑤ 찬성한다 ⑥ 매우 찬성한다	C15. _님께서는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십니까?(6점 척도)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다소 반대한다 ④ 다소 찬성한다 ⑤ 찬성한다 ⑥ 매우 찬성한다	B15. 귀하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십니까?(6점 척도)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다소 반대한다 ④ 다소 찬성한다 ⑤ 찬성한다 ⑥ 매우 찬성한다	5개년 척도 수정문항 2018년 사회보장정책 문항
16.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보건 및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점 척도)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다소 반대한다 ④ 다소 찬성한다 ⑤ 찬성한다 ⑥ 매우 찬성한다	16.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보건 및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점 척도)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다소 반대한다 ④ 다소 찬성한다 ⑤ 찬성한다 ⑥ 매우 찬성한다	C16. _님께서는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확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점 척도)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다소 반대한다 ④ 다소 찬성한다 ⑤ 찬성한다 ⑥ 매우 찬성한다	B16. 귀하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십니까?(6점 척도)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다소 반대한다 ④ 다소 찬성한다 ⑤ 찬성한다 ⑥ 매우 찬성한다	7개년 선택지 수정문항 2018년 사회보장정책 문항

○ 보건복지정책방향: 보건의료정책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 보건복지 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 - 보건의료 분야	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2-1.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2-1.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p>10.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p> <p>① 의료비 부담 완화</p> <p>②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유도</p> <p>③ 공공병원 확충</p> <p>④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설명: 경증인 경우 동네의원 이용, 중증인 경우 상급종합병원 이용 등)</p> <p>⑤ 기타()</p>	<p>13. 2012년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p> <p>②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p> <p>③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p> <p>④ 공공의료체계 확충</p> <p>⑤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p> <p>⑥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확대</p>	<p>14. 2013년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p> <p>②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p> <p>③ 공공의료체계 확충</p> <p>④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p> <p>⑤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확대</p> <p>⑥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p>	<p>8. 2015년에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p> <p>②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p> <p>③ 공공의료체계 확충 (취약계층, 취약지역, 취약분야)</p> <p>④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p> <p>⑤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확대(예, 술, 담배 등 생활습관 관리)</p> <p>⑥ 재난응급 의료체계 강화</p> <p>⑦ 기타()</p>
	<p>12. 다음에 볼러드릴 각각의 항목들이 귀하에게 있어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 전반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를 6점 척도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p> <p>① 매우 불만족</p> <p>② 불만족</p> <p>③ 다소 불만족</p> <p>④ 다소 만족</p> <p>⑤ 만족</p> <p>⑥ 매우 만족</p> <p>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것 (접근성)</p> <p>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보장성)</p> <p>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의료의 질)</p>	<p>13. 귀하에게 있어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다음에 볼러드릴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6점 척도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p> <p>① 매우 불만족</p> <p>② 불만족</p> <p>③ 다소 불만족</p> <p>④ 다소 만족</p> <p>⑤ 만족</p> <p>⑥ 매우 만족</p> <p>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것 (접근성)</p> <p>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보장성)</p> <p>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의료의 질)</p>	<p>9. 의료와 관련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점 척도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p>① 매우 불만족</p> <p>② 불만족</p> <p>③ 다소 불만족</p> <p>④ 다소 만족</p> <p>⑤ 만족</p> <p>⑥ 매우 만족</p> <p>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것 (접근성)</p> <p>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보장성)</p> <p>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의료의 질)</p>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구분
2-1.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2-1.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2-1.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2. 보건의료	
<p>8. 2015년에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 완 ②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③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확충 ④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⑤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사업 확대(예, 술, 담배 등 생활습관 관리) ⑥ 재난응급 의료체계 강화 ⑦ 감염병 등 질병예방사업 강화</p>	<p>8. 2015년에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 완 ②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③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확충 ④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⑤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사업 확대(예, 술, 담배 등 생활습관 관리) ⑥ 재난응급 의료체계 강화 ⑦ 감염병 등 질병예방사업 강화</p>	<p>C8. _남께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이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①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 완화 ②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③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접근성 강화 ④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⑤ 국민건강 증진 및 만성 질환예방 사업 확대 ⑥ 재난·응급 의료체계 강화 ⑦ 감염병 등 질병예방사업 강화 ⑧ 정신건강 증진사업 확대</p>	<p>D1-1.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보건의료정책 중 보다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①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②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③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등) ④ 정신건강 관리 및 증진서비스 확대(자살예방,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등) ⑤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의료 전달체계 개선, 의료 인력 공급 확충, 공공의료체계 확충 등) ⑥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따른 대응(어린이집, 경로당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⑦ 보건의료 위해 대응체계 마련(생활용품 및 식·의약품 불안 등) ⑧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웰다잉(well-dying), 연명의료 결정제도 등)</p>	8개년 질문, 선택지 수정문항
<p>9. 의료와 관련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점 척도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p>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다소 불만족 ④ 다소 만족 ⑤ 만족 ⑥ 매우 만족</p> <p>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것 (접근성)</p> <p>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보장성)</p> <p>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의료의 질)</p>	<p>9. 의료와 관련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점 척도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p>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다소 불만족 ④ 다소 만족 ⑤ 만족 ⑥ 매우 만족</p> <p>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것 (접근성)</p> <p>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보장성)</p> <p>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의료의 질)</p>		<p>D5. 귀하는 의료와 관련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점 척도)</p> <p>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다소 불만족 ④ 다소 만족 ⑤ 만족 ⑥ 매우 만족</p> <p>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 (접근성)</p> <p>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p> <p>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의 질)</p>	6개년 계속문항

○ 보건복지정책방향: 사회복지 및 인구정책분야

[illegible]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구분
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복지분야	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복지분야	2. 복지 및 인구 정책	3. 사회복지정책, 4. 인구정책	
<p>12. 2016년 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정책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대답해 주십시오.</p> <p>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② 일자리 창출 등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③ 복지 소외계층 발굴 지원 ④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⑤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p>	<p>12. 2016년 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정책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대답해 주십시오.</p> <p>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② 일자리 창출 등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③ 복지 소외계층 발굴 지원 ④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⑤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p>		<p>B5-1.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아래의 복지정책 중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① 일자리 지원 확대(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②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등) ③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④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⑤ 보육·양육 지원 확대 ⑥ 노인 대상 돌봄 확대 ⑦ 장애인 대상 돌봄 확대 ⑧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지원 확대 ⑨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⑩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p>	3개년 선택지 수정문항
		<p>C4-1. _님께서는 노후를 준비하고(되어) 있다면, 주된 방법과 부수적인 방법은 각각 무엇입니까?</p> <p>① 국민연금 ② 기타 공적연금(공무원, 군인, 교원 등) ③ 사적연금(은행, 보험회사 등을 통한 개인연금) ④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⑤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⑥ 부동산 운용 ⑦ 주식, 채권 등</p>	<p>C7. 귀하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원 연금 등) ② 사적연금(은행, 보험회사 등을 통한 개인연금) ③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④ 금융자산(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주식, 채권 등) ⑤ 부동산 운용(주택연금, 역모기지제도 등) ⑥ 자녀들의 부모 부양(사적이전)</p>	2개년 질문, 선택지 수정문항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 보건복지 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	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복지 및 저출산	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복지분야	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복지분야
<p>20. 귀하의 노후를 위하여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p> <p>① 은퇴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교육, 훈련 등)</p> <p>② 기초노령연금 등 소득지원</p> <p>③ 전문 자원봉사 지원</p> <p>④ 노인복지주택 등 시설 확충</p> <p>⑤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지원</p> <p>⑥ 기타()</p>	<p>20. 본인의 노후를 위하여 정부에서 어떠한 지원정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p> <p>① 은퇴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교육, 훈련 등)</p> <p>② 기초노령연금 등 소득지원</p> <p>③ 자원봉사 등 여가지원</p> <p>④ 노인 주거 시설 확충</p> <p>⑤ 장기요양 등 의료서비스 지원</p>	<p>20. 본인의 노후를 위하여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골라주십시오.</p> <p>① 은퇴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교육, 훈련 등)</p> <p>② 기초노령연금 등 소득지원</p> <p>③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p> <p>④ 노인 주거 시설 확충</p> <p>⑤ 장기요양 등 의료서비스 지원</p> <p>⑥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p> <p>⑦ 기타()</p>	<p>11. 본인이나 가족의 노후를 위하여 정부가 어떠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교육, 훈련 등)</p> <p>②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p> <p>③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p> <p>④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p> <p>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p> <p>⑥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인하)</p> <p>⑦ 기타 ()</p>
			<p>12.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임신출산 의료비용 지원 강화 (예, 출산비용 지원, 출산 축하금 확대, 임신 중 건강검진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p> <p>②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예,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확충 및 민간어린이집 품질관리,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등)</p> <p>③ 아이돌보미 등 가정양육 지원 강화</p> <p>④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실천 확산</p> <p>⑤ 공교육 내실화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p> <p>⑥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결혼비용 감소</p> <p>⑦ 기타()</p>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구분
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복지분야	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복지분야	2. 복지 및 인구 정책	3. 사회복지정책, 4. 인구정책	
13. 본인이나 가족의 노후를 위하여 정부가 어떠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교육, 훈련 등) ②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③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 ④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⑥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인하)	13. 본인이나 가족의 노후를 위하여 정부가 어떠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교육, 훈련 등) ②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③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 ④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⑥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인하) ⑦ 노후대비를 위한 정보제공	C5. _님께서는 본인이나 가족의 노후를 위하여 정부가 어떠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교육, 훈련 등) ②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③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 ④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⑥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인하) ⑦ 노후대비를 위한 정보제공	C6. 귀하는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노인 소득지원 강화(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제도 확대) ② 노인 일자리 확대 ③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 ④ 정년 연장 ⑤ 노인 돌봄 지원 확대(노인 건강방문 서비스 확대, 노인돌봄서비스, 치매 국가책임제 등) ⑥ 노인건강보험 확대 ⑦ 노후대비를 위한 정보제공 ⑧ 기타()	8개년 질문, 선택지 수정문항
14.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임신·출산 의료비용 지원 강화(예, 출산비용 지원, 출산 축하금 확대, 임신 중 건강검진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②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예,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확충 및 민간어린이집 품질관리,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등) ③ 아이돌보미 등 가정양육 지원 강화 ④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실천 확산 ⑤ 공교육 내실화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⑥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결혼비용 감소	14.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등 결혼지원정책 ②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양립 정책 강화 ③ 사교육 부담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④ 임신·출산 의료비용 지원 강화(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⑤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예, 맞춤형 보육,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충 등) ⑥ 아이돌보미, 초등돌봄교실 등 보육서비스 이외의 돌봄 확대		C2. 귀하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고용문제 해결 ② 주거문제 해결 ③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④ 영유아 의료비 지원 ⑤ 아동 돌봄지원(어린이집 돌봄, 아동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 확대 등) ⑥ 교육제도 개선(사교육) ⑦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확대 ⑧ 기타()	4개년 질문, 선택지 수정문항

[illegible]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구분
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복지분야	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복지분야	2. 복지 및 인구 정책	3. 사회복지정책, 4. 인구정책	
		<p>C10. 보육 및 아동돌봄 정책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② 무상보육 확대 ③ 방과후 학교 등 가구의 아동 돌봄 부담 완화 ④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등 취약가구 양육지원 강화 ⑤ 장애아동 돌봄 강화 ⑥ 보육교사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등 서비스 질 개선</p>	<p>C3. 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가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육아지원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① 아동수당 확대(아동수당 금액 인상 및 수혜 대상 확대) ② 국공립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 ③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 ④ 시간연장, 시간제, 24시간 등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 ⑤ 가정양육 관련 지원(아동돌봄서비스 등) 확대 ⑥ 육아휴직제 정착 등 고용관련 제도 개선 ⑦ 육아정보·상담관련 정보 제공 ⑧ 보육·양육 지원 관련 현금지원 확대 ⑨ 기타()</p>	2개년 질문, 선택지 수정문 항
		<p>C14.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① 재가 돌봄서비스 확충 ② 당사자에 적합한 주거 환경 ③ 동네의원을 통한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④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안내 강화 ⑤ 안부 확인 등 상시적 대응 체계 구축 ⑥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 등 민간이 참여하는 돌봄체계 구축 ⑦ 기타()</p>	<p>B12. 귀하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커뮤니티 케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① 재가 돌봄서비스 확충 ② 당사자에 적합한 주거 환경 개선 ③ 동네의원을 통한 재택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④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안내 강화 ⑤ 안부 확인 등 상시적 대응 체계 구축 ⑥ 기타()</p>	2개년 보기 수정문항

○ 기타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	3. 재원 및 기타	3. 재원 및 기타	3. 재원 및 기타
	24. 우리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하(의 가구)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① 저소득층 ② 중하층 ③ 중간층 ④ 중상층 ⑤ 상위층	26. 우리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하(의 가구)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① 저소득층 ② 중하층 ③ 중간층 ④ 중상층 ⑤ 상위층	15. 우리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하(의 가구)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① 저소득층 ② 중하층 ③ 중간층 ④ 중상층 ⑤ 상위층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구분
3. 재원 및 기타	3. 재원 및 기타	3. 재원 및 기타	5. 기타	
<p>17. 우리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하(의 가구)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p> <p>① 저소득층 ② 중하층 ③ 중간층 ④ 중상층 ⑤ 상위층</p>	<p>17. 우리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하(의 가구)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p> <p>① 저소득층 ② 중하층 ③ 중간층 ④ 중상층 ⑤ 상위층</p>	<p>A5. 우리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_님 닥은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p> <p>① 하층 ② 중하층 ③ 중간층 ④ 중상층 ⑤ 상층</p>	<p>A5.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댁은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p> <p>① 하층 ② 중하층 ③ 중간층 ④ 중상층 ⑤ 상층</p>	<p>7개년 계속문항 (2018년 척도명 수정)</p>

○ 일반사항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2. 성별: ① 남 ② 여	1. 성별: ① 남 ② 여	1. 성별: ① 남 ② 여	1. 성별: ① 남 ② 여
23. 연령: 만_____세	2. 연령: 만_____세	2. 연령: ① 29세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65세 이상	2. 연령: ① 29세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65세 이상
24. 결혼여부: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이혼, 사별)	3. 결혼여부: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이혼, 사별)	3. 결혼여부: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이혼, 사별)	
26. 가구원수: _____명 (※본인을 포함한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	5. 가구원수: _____명 (※본인을 포함한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	5. 가구원수: _____명 (※본인을 포함한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	3. 가구원수: _____명 (※본인을 포함한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
27. 거주지역: ① 서울시 ② 6대 광역시 ③ 중·소도시 ④ 군	6. 거주지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대전 6) 광주 7) 울산 8) 경기 9) 충북 10) 충남 11) 전북 12) 전남 13) 경북 14) 경남 15) 강원 16) 제주 ① 시·구 ② 군	6. 거주지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대전 6) 광주 7) 울산 8) 경기 9) 충북 10) 충남 11) 전북 12) 전남 13) 경북 14) 경남 15) 강원 16) 제주 ① 시·구 ② 군	4. 거주지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대전 6) 광주 7) 울산 8) 경기 9) 충북 10) 충남 11) 전북 12) 전남 13) 경북 14) 경남 15) 강원 16) 제주 ① 동 ② 읍 ③ 면
28. 최종학력: ① 중학교 이하 ② 고등학교 ③ 전문대 ④ 대학이상 ⑨ 무응답	7. 최종학력: ① 중학교 이하 ② 고등학교 ③ 대학 이상 ⑨ 무응답	7. 최종학력: ① 중졸이하 ② 고졸이하 ③ 대졸이상	5. 최종학력: ① 중졸이하 ② 고졸이하 ③ 대졸이상
29. 월평균 가구소득: ① 100만원 이하 ② 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400만원 ⑤ 400~500만원 ⑥ 500만원 이상 ⑨ 무응답 (※가구원 전체 소득을 합한 가구소득)	8. 월평균 가구소득(세후): ① 100만원 이하 ② 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400만원 ⑤ 400~500만원 ⑥ 500만원 이상 ⑨ 무응답 (※가구원 전체 소득을 합한 가구소득)	8. 월평균 가구소득(세후): ① 100만원 이하 ② 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400만원 ⑤ 400~500만원 ⑥ 500만원 이상 ⑨ 무응답 (※가구원 전체 소득을 합한 가구소득)	6. 월평균 가구소득(세후): (※가구원 전체 소득을 합한 가구소득) ① 100만원 이하 ② 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400만원 ⑤ 400~500만원 ⑥ 500만원 이상 ⑦ 700~999만원 ⑧ 1,000만원 이상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구분
1. 성별: ① 남 ② 여	1. 성별: ① 남 ② 여	성별: ① 남 ② 여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_____ 세	2. 연령: _____ 세	연령: 만 _____ 세	연령: 만 _____ 세	
		A1-5. 혼인상태: ① 유배우 ② 별거 ③ 사별 ④ 이혼 ⑤ 미혼(미혼 부모 포함) ⑥ 사실혼 ⑦ 기타	A1-4. 혼인상태: ① 유배우 ② 별거 ③ 사별 ④ 이혼 ⑤ 미혼(미혼 부모 포함) ⑥ 사실혼 ⑦ 기타	
3. 가구원수: _____ 명 (※본인을 포함한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	3. 가구원수: _____ 명 (※본인을 포함한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	A2. _님 닥의 가구원수는 몇 명이십니까? 가구원수: _____ 명 (※작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도 포함. 즉, 주 거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소득 을 공유하는 가족은 포함)	A2. 귀댁의 가구원수는 몇 명이십니까? _____ 명 (※작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도 포함. 즉, 주 거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소득 을 공유하는 가족은 포함)	
4. 거주지역: 1) 광역시 2) 시도 ① 동 ② 읍 ③ 면	4. 거주지역: 1) 광역시 2) 시도 ① 동 ② 읍 ③ 면	거주지역: 시/도 읍/면/동	거주지역: 시/도 읍/면/동	
5. 최종학력: ① 중졸이하 ② 고졸이하 ③ 대졸이상	5. 최종학력: ① 중졸이하 ② 고졸이하 ③ 대졸이상	A1-4. 교육수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 ③ 중학교 졸 ④ 고등학교 졸 ⑤ 대학 졸(전문대학 포함)	A1-3. 교육수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 ③ 중학교 졸 ④ 고등학교 졸 ⑤ 대학 졸(전문대학 포함) ⑥ 대학원 이상	
6. 월평균 가구소득(세후): (※가구원 전체 소득을 합한 가 구소득) ① 100만원 이하 ② 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400만원 ⑤ 400~500만원 ⑥ 500만원 이상 ⑦ 700~999만원 ⑧ 1,000만원 이상	6. 월평균 가구소득(세후): (※가구원 전체 소득을 합한 가 구소득) ① 100만원 이하 ② 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400만원 ⑤ 400~500만원 ⑥ 500만원 이상 ⑦ 700~999만원 ⑧ 1,000만원 이상	E3. 작년 한해(2017년) 기 준으로 귀댁의 가구원이 벌 어들이던 연간 가구총소득은 얼마입니까?(모든 가구원의 소득 합산)	A4. 지난 한해(2018년)를 기준으로 귀댁의 가계 상황 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 가구 총 생활비: 월평균 _____만원 ▪ 가구 총 소득: _____연간 _____만원 ▪ 가구 총 재산: _____연간 _____만원	

□ 연도별 조사표 세부구성

○ 일반 인식 및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1.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	1.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일반 인식 및 평가	1. 일반 인식 및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	1. 일반 인식 및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
1.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해 전반적인 복지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1. 귀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점 척도) ①매우 낮다 ②낮다 ③다소 낮다 ④다소 높다 ⑤높다 ⑥매우 높다	1. 귀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점 척도) ①매우 낮다 ②낮다 ③다소 낮다 ④다소 높다 ⑤높다 ⑥매우 높다	1. 귀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점 척도) ①매우 낮다 ②낮다 ③다소 낮다 ④다소 높다 ⑤높다 ⑥매우 높다
		3. 귀하는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느끼는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일자리(조기퇴직, 자영업 폐업 등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 ② 자녀교육(학벌위주 사회의 입시경쟁 속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 ③ 건강·의료(질병, 사고 시 치료비 및 간병 부담으로 인한 빈곤층 추락우려) ④ 노후(은퇴 후 연금수급 등 소득, 건강에 대한 불안) ⑤ 안전(먹거리안전, 주거, 범죄 등에 대한 불안) ⑥ 기타(_____)	3. 귀하는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느끼는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일자리 ② 자녀교육 ③ 건강 ④ 주택마련 및 월세 등의 주거비 ⑤ 노후생활 ⑥ 부채상환 ⑦ 기타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구분
<p>1. 일반 인식 및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p> <p>1. 귀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점 척도)</p> <p>①매우 낮다 ②낮다 ③다소 낮다 ④다소 높다 ⑤높다 ⑥매우 높다</p>	<p>1. 일반 인식 및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p> <p>1. 귀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점 척도)</p> <p>①매우 낮다 ②낮다 ③다소 낮다 ④다소 높다 ⑤높다 ⑥매우 높다</p>	<p>1. 사회 및 사회보장 인식</p> <p>A2. 귀하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전망)하십니까? (5년전, 현재, 5년후, 20년후), (6점 척도)</p> <p>①매우 낮다 ②낮다 ③다소 낮다 ④다소 높다 ⑤높다 ⑥매우 높다</p>	<p>1. 일반 인식 및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p> <p>A1.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복지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p> <p>①매우 낮다 ②낮다 ③다소 낮다 ④다소 높다 ⑤높다 ⑥매우 높다</p>	<p>7개년 척도 수정문항 (2018년 사회보장 수준 전망)</p>
<p>3. 귀하는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느끼는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일자리 ② 자녀교육 ③ 건강 ④ 주택마련 및 월세 등의 주거비 ⑤ 노후생활 ⑥ 부채상환 ⑦ 부모부양</p>	<p>3. 귀하는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느끼는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일자리 ② 자녀교육 ③ 건강 ④ 주택마련 및 월세 등의 주거비 ⑤ 노후생활 ⑥ 부채상환 ⑦ 부모부양</p>	<p>A8. 귀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3순위, 5년 전, 현재, 5년 후, 20년 후)</p> <p>① 일자리 ② 출산과 양육 ③ 자녀교육 ④ 신체와 정신건강 ⑤ 주거 ⑥ 노후생활 ⑦ 부채 상환 ⑧ 부모부양 ⑨ 환경 ⑩ 안전</p>	<p>A5. 전문가적 입장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 2 순위)</p> <p>① 일자리 ② 출산과 양육 ③ 자녀교육 ④ 신체와 정신건강 ⑤ 주거 ⑥ 노후생활 ⑦ 부채 상환 ⑧ 부모부양 ⑨ 환경 ⑩ 안전 ⑪ 기타</p>	<p>6개년 선택지 수정문항</p>

○ 보건복지정책방향: 보건의료정책분야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 보건복지 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 - 보건의료 분야	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2-1.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2-1.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div>6. 귀하는 사회정책과 관련된 다음의 각 정책영역에서 지난 5년간(2008-2012)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경험이나 평소 인식 또는 의견을 토대로 하여 아래의 6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6점 척도)</div> <table><tr><td></td><td>항목</td></tr><tr><td>1)</td><td>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td></tr><tr><td>2)</td><td>건강보험제도 운영</td></tr><tr><td>3)</td><td>공공의료 체계</td></tr><tr><td>4)</td><td>응급의료 체계</td></tr><tr><td>5)</td><td>건강증진 서비스</td></tr><tr><td>6)</td><td>식품안전 보장</td></tr><tr><td>7)</td><td>서민주거지원 (공공임대, 주거바우처, 서민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제도)</td></tr><tr><td>8)</td><td>취업 및 일자리 지원</td></tr><tr><td>9)</td><td>보육 지원</td></tr><tr><td>10)</td><td>노인의 삶의 질 향상</td></tr><tr><td>11)</td><td>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td></tr></table>		항목	1)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	2)	건강보험제도 운영	3)	공공의료 체계	4)	응급의료 체계	5)	건강증진 서비스	6)	식품안전 보장	7)	서민주거지원 (공공임대, 주거바우처, 서민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제도)	8)	취업 및 일자리 지원	9)	보육 지원	10)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1)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div>6. 귀하는 사회정책과 관련된 다음의 각 정책영역에서 지난 5년간(2010-2014)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경험이나 평소 인식 또는 의견을 토대로 하여 아래의 6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다소 미흡 ④ 다소 우수 ⑤ 우수 ⑥ 매우 우수</div> <table><tr><td></td><td>항목</td></tr><tr><td>1)</td><td>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td></tr><tr><td>2)</td><td>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td></tr><tr><td>3)</td><td>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td></tr><tr><td>4)</td><td>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td></tr><tr><td>5)</td><td>응급의료 체계 확충</td></tr><tr><td>6)</td><td>건강증진 서비스 확대</td></tr><tr><td>7)</td><td>식품안전 보장</td></tr><tr><td>8)</td><td>서민주거지원 (공공임대, 주거바우처, 서민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제도)</td></tr><tr><td>9)</td><td>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td></tr><tr><td>10)</td><td>보육 지원 확대</td></tr><tr><td>11)</td><td>노인의 삶의 질 향상</td></tr><tr><td>12)</td><td>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td></tr></table>		항목	1)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	2)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3)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4)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	5)	응급의료 체계 확충	6)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7)	식품안전 보장	8)	서민주거지원 (공공임대, 주거바우처, 서민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제도)	9)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10)	보육 지원 확대	11)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2)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항목																																																				
1)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																																																				
2)	건강보험제도 운영																																																				
3)	공공의료 체계																																																				
4)	응급의료 체계																																																				
5)	건강증진 서비스																																																				
6)	식품안전 보장																																																				
7)	서민주거지원 (공공임대, 주거바우처, 서민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제도)																																																				
8)	취업 및 일자리 지원																																																				
9)	보육 지원																																																				
10)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1)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항목																																																				
1)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																																																				
2)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3)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4)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																																																				
5)	응급의료 체계 확충																																																				
6)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7)	식품안전 보장																																																				
8)	서민주거지원 (공공임대, 주거바우처, 서민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제도)																																																				
9)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10)	보육 지원 확대																																																				
11)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2)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구분
2-1.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2-1.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2. 보건정책	2. 보건의료정책	6개년 선택지 및 정책영역 수정문항 (2019년 사회복지 정책, 보건의료 정책분리)
6. 귀하는 사회정책과 관련된 다음의 각 정책영역에서 지난 5년간(2010-2014)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각 항 목에 대한 귀하의 경험이나 평 소 인식 또는 의견을 토대로 하여 아래의 6점 척도로 평가 해 주십시오.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다소 미흡 ④ 다소 우수 ⑤ 우수 ⑥ 매우 우수	6. 귀하는 사회정책과 관련된 다음의 각 정책영역에서 지난 5년간(2010-2014)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각 항 목에 대한 귀하의 경험이나 평 소 인식 또는 의견을 토대로 하여 아래의 6점 척도로 평가 해 주십시오.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다소 미흡 ④ 다소 우수 ⑤ 우수 ⑥ 매우 우수	A10. 귀하는 다음의 각 정책 영역의 지난 5년간 (2013-2017)의 성과를 어떻 게 평가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경험이나 평소 인 식 또는 의견을 토대로 하여 아래의 6점 척도로 평가해 주 십시오.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다소 미흡 ④ 다소 우수 ⑤ 우수 ⑥ 매우 우수	C2. 귀하는 전문가로서 각 보 건의료정책 영역의 지난 3년 간(2017-2019)의 성과를 어 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다소 미흡 ④ 다소 우수 ⑤ 우수 ⑥ 매우 우수	
			항목	
1)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	1)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	1)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1)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2) 응급의료 체계 확충	2) 응급의료 체계 확충	2)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2)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3) 감염병관리체계 강화	3) 감염병관리체계 강화	3)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 스 확대(만성질환관리, 감 염병 및 자살예방사업 등)	3)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등)	
4)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4)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4)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 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4)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 확대(자살예방, 정신 건강문제 조기발견 등)	
5)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5)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5)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5) 의료서비스 질 개선(의료 전달체계 개선, 의료 인력 공급 확충, 공공의료체계 확충 등)	
6)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6)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6)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6)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따 른 대응(어린이집, 경로당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7)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7)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7)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7) 보건의료 위해 대응체계 마련(생활용품 및 식·의약품 불안 등)	
8)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8)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8)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8)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웰다잉(well-dying),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9) 노인의 삶의 질 향상	9) 노인의 삶의 질 향상	9) 보육·양육 지원 확대		
10)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10)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10) 일·생활 양립지원출산 및 육아휴직, 시차출퇴근제 등)		
11) 서민주거지원 확대	11) 서민주거지원 확대	11) 교육의 공공성 강화(국공 립유치원 확충,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12)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12)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12) 양성평등 지원		
13) 보육 지원 확대	13) 보육 지원 확대	13) 서민주거지원 확대		
		14)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돌봄 확대		
		15)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6)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응		
		17) 문화 및 여가 향유기회 확대		
		18)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p>2. 보건복지 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 - 보건의료 분야</p> <p>4. 정부가 앞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분야 중 어느 분야에 대해 더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순위까지 우선순위)</p> <p>① 저소득층 지원</p> <p>② 의료 지원</p> <p>③ 주거 지원</p> <p>④ 일자리 지원</p> <p>⑤ 보육 지원</p> <p>⑥ 문화 지원</p> <p>⑦ 교육 지원</p> <p>⑧ 서민금융 지원</p>	<p>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p>	<p>2-1.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p> <p>7.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귀하의 동의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경험이나 평소 인식 또는 의견을 토대로 하여 아래의 6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6점척도)</p> <table> <tr> <th></th> <th>항목</th> </tr> <tr> <td>1)</td> <td>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td> </tr> <tr> <td>2)</td> <td>건강보험제도 운영</td> </tr> <tr> <td>3)</td> <td>공공의료 체계</td> </tr> <tr> <td>4)</td> <td>응급의료 체계</td> </tr> <tr> <td>5)</td> <td>건강증진 서비스</td> </tr> <tr> <td>6)</td> <td>식품안전 보장</td> </tr> <tr> <td>7)</td> <td>서민주거지원 (공공임대, 주거바우처, 서민 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제도)</td> </tr> <tr> <td>8)</td> <td>취업 및 일자리 지원</td> </tr> <tr> <td>9)</td> <td>보육 지원</td> </tr> <tr> <td>10)</td> <td>노인의 삶의 질 향상</td> </tr> <tr> <td>11)</td> <td>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td> </tr> </table>		항목	1)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	2)	건강보험제도 운영	3)	공공의료 체계	4)	응급의료 체계	5)	건강증진 서비스	6)	식품안전 보장	7)	서민주거지원 (공공임대, 주거바우처, 서민 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제도)	8)	취업 및 일자리 지원	9)	보육 지원	10)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1)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p>2-1.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p> <p>7.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귀하의 동의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경험이나 평소 인식 또는 의견을 토대로 하여 아래의 6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p> <p>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p> <p>② 동의하지 않음</p> <p>③ 동의하지 않는 편임</p> <p>④ 동의하는 편임</p> <p>⑤ 동의함</p> <p>⑥ 매우 동의함</p> <table> <tr> <th></th> <th>항목</th> </tr> <tr> <td>1)</td> <td>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td> </tr> <tr> <td>2)</td> <td>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td> </tr> <tr> <td>3)</td> <td>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td> </tr> <tr> <td>4)</td> <td>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td> </tr> <tr> <td>5)</td> <td>응급의료 체계 확충</td> </tr> <tr> <td>6)</td> <td>건강증진 서비스 확대</td> </tr> <tr> <td>7)</td> <td>식품안전 보장</td> </tr> <tr> <td>8)</td> <td>서민주거지원 (공공임대, 주거바우처, 서민 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제도)</td> </tr> <tr> <td>9)</td> <td>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td> </tr> <tr> <td>10)</td> <td>보육 지원 확대</td> </tr> <tr> <td>11)</td> <td>노인의 삶의 질 향상</td> </tr> <tr> <td>12)</td> <td>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td> </tr> </table>		항목	1)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	2)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3)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4)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	5)	응급의료 체계 확충	6)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7)	식품안전 보장	8)	서민주거지원 (공공임대, 주거바우처, 서민 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제도)	9)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10)	보육 지원 확대	11)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2)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항목																																																				
1)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																																																				
2)	건강보험제도 운영																																																				
3)	공공의료 체계																																																				
4)	응급의료 체계																																																				
5)	건강증진 서비스																																																				
6)	식품안전 보장																																																				
7)	서민주거지원 (공공임대, 주거바우처, 서민 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제도)																																																				
8)	취업 및 일자리 지원																																																				
9)	보육 지원																																																				
10)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1)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항목																																																				
1)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																																																				
2)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3)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4)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																																																				
5)	응급의료 체계 확충																																																				
6)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7)	식품안전 보장																																																				
8)	서민주거지원 (공공임대, 주거바우처, 서민 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제도)																																																				
9)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10)	보육 지원 확대																																																				
11)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2)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구분																																																																																																																
2-1.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2-1.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2. 보건정책	2. 보건의료정책	7개년 선택지 및 정책영역 수정사항 (2019년 사회복지 정책, 보건의료 정책 분리)																																																																																																																
7.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귀하의 동의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경험이나 평소 인식 또는 의견을 토대로 하여 아래의 6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하지 않는 편임 ④ 동의하는 편임 ⑤ 동의함 ⑥ 매우 동의함	7.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귀하의 동의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경험이나 평소 인식 또는 의견을 토대로 하여 아래의 6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하지 않는 편임 ④ 동의하는 편임 ⑤ 동의함 ⑥ 매우 동의함	A11.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다음의 정책 분야에 대한 귀하의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하지 않는 편임 ④ 동의하는 편임 ⑤ 동의함 ⑥ 매우 동의함	C3.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다음의 보건의료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해주시시오.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하지 않는 편임 ④ 동의하는 편임 ⑤ 동의함 ⑥ 매우 동의함																																																																																																																	
<table><tr><td></td><td>항목</td></tr><tr><td>1)</td><td>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td></tr><tr><td>2)</td><td>응급의료 체계 확충</td></tr><tr><td>3)</td><td>감염병관리체계 강화</td></tr><tr><td>4)</td><td>건강증진 서비스 확대</td></tr><tr><td>5)</td><td>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td></tr><tr><td>6)</td><td>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td></tr><tr><td>7)</td><td>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td></tr><tr><td>8)</td><td>국민연금 보장성 확대</td></tr><tr><td>9)</td><td>노인의 삶의 질 향상</td></tr><tr><td>10)</td><td>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td></tr><tr><td>11)</td><td>서민주거지원 확대</td></tr><tr><td>12)</td><td>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td></tr><tr><td>13)</td><td>보육 지원 확대</td></tr></table>		항목	1)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	2)	응급의료 체계 확충	3)	감염병관리체계 강화	4)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5)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6)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7)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8)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9)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0)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11)	서민주거지원 확대	12)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13)	보육 지원 확대	<table><tr><td></td><td>항목</td></tr><tr><td>1)</td><td>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td></tr><tr><td>2)</td><td>응급의료 체계 확충</td></tr><tr><td>3)</td><td>감염병관리체계 강화</td></tr><tr><td>4)</td><td>건강증진 서비스 확대</td></tr><tr><td>5)</td><td>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td></tr><tr><td>6)</td><td>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td></tr><tr><td>7)</td><td>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td></tr><tr><td>8)</td><td>국민연금 보장성 확대</td></tr><tr><td>9)</td><td>노인의 삶의 질 향상</td></tr><tr><td>10)</td><td>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td></tr><tr><td>11)</td><td>서민주거지원 확대</td></tr><tr><td>12)</td><td>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td></tr><tr><td>13)</td><td>보육 지원 확대</td></tr></table>		항목	1)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	2)	응급의료 체계 확충	3)	감염병관리체계 강화	4)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5)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6)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7)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8)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9)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0)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11)	서민주거지원 확대	12)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13)	보육 지원 확대	<table><tr><td></td><td>항목</td></tr><tr><td>1)</td><td>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td></tr><tr><td>2)</td><td>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td></tr><tr><td>3)</td><td>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및 자살예방사업 등)</td></tr><tr><td>4)</td><td>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td></tr><tr><td>5)</td><td>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td></tr><tr><td>6)</td><td>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td></tr><tr><td>7)</td><td>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기초연금 등)</td></tr><tr><td>8)</td><td>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td></tr><tr><td>9)</td><td>보육·양육 지원 확대</td></tr><tr><td>10)</td><td>일·생활 양립지원(출산 및 육아휴직, 시차출퇴근제 등)</td></tr><tr><td>11)</td><td>교육의 공공성 강화(국공립유치원 확충,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td></tr><tr><td>12)</td><td>양성평등 지원</td></tr><tr><td>13)</td><td>서민주거지원 확대</td></tr><tr><td>14)</td><td>노인, 장애인 등 대상 돌봄 확대</td></tr><tr><td>15)</td><td>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td></tr><tr><td>16)</td><td>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응</td></tr><tr><td>17)</td><td>문화 및 여가 향유기회 확대</td></tr><tr><td>18)</td><td>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td></tr></table>		항목	1)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2)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3)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및 자살예방사업 등)	4)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5)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6)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7)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8)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9)	보육·양육 지원 확대	10)	일·생활 양립지원(출산 및 육아휴직, 시차출퇴근제 등)	11)	교육의 공공성 강화(국공립유치원 확충,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12)	양성평등 지원	13)	서민주거지원 확대	14)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돌봄 확대	15)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6)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응	17)	문화 및 여가 향유기회 확대	18)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table><tr><td></td><td>항목</td></tr><tr><td>1)</td><td>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td></tr><tr><td>2)</td><td>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td></tr><tr><td>3)</td><td>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등)</td></tr><tr><td>4)</td><td>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 확대(자살예방,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등)</td></tr><tr><td>5)</td><td>의료서비스 질 개선(의료 전달체계 개선, 의료인력 공급 확충, 공공의료체계 확충 등)</td></tr><tr><td>6)</td><td>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따른 대응(어린이집, 경로당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td></tr><tr><td>7)</td><td>보건의료 위해 대응체계 마련(생활용품 및 식·의약품 불안 등)</td></tr><tr><td>8)</td><td>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웰다잉(well-dying), 연명의료결정제도 등)</td></tr></table>		항목	1)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2)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3)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등)	4)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 확대(자살예방,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등)	5)	의료서비스 질 개선(의료 전달체계 개선, 의료인력 공급 확충, 공공의료체계 확충 등)	6)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따른 대응(어린이집, 경로당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7)	보건의료 위해 대응체계 마련(생활용품 및 식·의약품 불안 등)	8)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웰다잉(well-dying),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항목																																																																																																																			
1)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																																																																																																																			
2)	응급의료 체계 확충																																																																																																																			
3)	감염병관리체계 강화																																																																																																																			
4)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5)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6)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7)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8)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9)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0)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11)	서민주거지원 확대																																																																																																																			
12)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13)	보육 지원 확대																																																																																																																			
	항목																																																																																																																			
1)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																																																																																																																			
2)	응급의료 체계 확충																																																																																																																			
3)	감염병관리체계 강화																																																																																																																			
4)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5)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6)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7)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8)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9)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0)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11)	서민주거지원 확대																																																																																																																			
12)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13)	보육 지원 확대																																																																																																																			
	항목																																																																																																																			
1)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2)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3)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및 자살예방사업 등)																																																																																																																			
4)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5)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6)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7)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8)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9)	보육·양육 지원 확대																																																																																																																			
10)	일·생활 양립지원(출산 및 육아휴직, 시차출퇴근제 등)																																																																																																																			
11)	교육의 공공성 강화(국공립유치원 확충,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12)	양성평등 지원																																																																																																																			
13)	서민주거지원 확대																																																																																																																			
14)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돌봄 확대																																																																																																																			
15)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6)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응																																																																																																																			
17)	문화 및 여가 향유기회 확대																																																																																																																			
18)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항목																																																																																																																			
1)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2)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3)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등)																																																																																																																			
4)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 확대(자살예방,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등)																																																																																																																			
5)	의료서비스 질 개선(의료 전달체계 개선, 의료인력 공급 확충, 공공의료체계 확충 등)																																																																																																																			
6)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따른 대응(어린이집, 경로당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7)	보건의료 위해 대응체계 마련(생활용품 및 식·의약품 불안 등)																																																																																																																			
8)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웰다잉(well-dying),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 보건복지 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 - 보건의료 분야	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2-1.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2-1.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p>13. 다음에 볼러드릴 각각의 항목들이 귀하에게 있어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 전반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를 6점 척도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p> <p>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다소 불만족 ④ 다소 만족 ⑤ 만족 ⑥ 매우 만족</p> <p>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것 (접근성)</p> <p>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보장성)</p> <p>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의료의 질)</p>	<p>9. 귀하에게 있어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의 항목에 따라 6점 척도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p> <p>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다소 불만족 ④ 다소 만족 ⑤ 만족 ⑥ 매우 만족</p> <p>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것 (접근성)</p> <p>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보장성)</p> <p>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의료의 질)</p>	<p>12. 귀하에게 있어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의 항목에 따라 6점 척도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p> <p>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다소 불만족 ④ 다소 만족 ⑤ 만족 ⑥ 매우 만족</p> <p>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것 (접근성)</p> <p>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보장성)</p> <p>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의료의 질)</p>
	<p>15.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암 환자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②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③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노인틀니 지원 등) ④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보장 확대 ⑤ 신기술, 고가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p>	<p>11.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암 환자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②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③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노인틀니 지원 등) ④ 신기술, 고가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⑤ 본인부담액 연간 상한액 지정 (예를 들어, 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 150만원) ⑥ 기타()</p>	<p>14.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암 환자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②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③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노인틀니 지원 등) ④ 신기술, 고가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⑤ 본인부담액 연간 상한액 지정 (예를 들어, 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 150만원) ⑥ 기타()</p>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구분
2-1.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2-1.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2. 보건정책	2. 보건의료정책	
<p>12. 귀하에게 있어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의 항목에 따라 6점 척도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p> <p>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다소 불만족 ④ 다소 만족 ⑤ 만족 ⑥ 매우 만족</p> <p>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것 (접근성)</p> <p>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보장성)</p> <p>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의료의 질)</p>	<p>12. 귀하에게 있어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의 항목에 따라 6점 척도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p> <p>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다소 불만족 ④ 다소 만족 ⑤ 만족 ⑥ 매우 만족</p> <p>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것 (접근성)</p> <p>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보장성)</p> <p>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의료의 질)</p>	<p>2. 보건정책</p>	<p>C7.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의료와 관련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점 척도)</p> <p>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다소 불만족 ④ 다소 만족 ⑤ 만족 ⑥ 매우 만족</p> <p>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 (접근성)</p> <p>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p> <p>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의 질)</p>	6개년 계속문항
<p>14.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② 노인성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노인틀니 지원 등) ③ 신기술, 고가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④ 저소득층 및 취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⑤ 질환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등(중증 질환 부담완화, 경증 질환 부담강화)</p>	<p>14.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② 노인성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노인틀니 지원 등) ③ 신기술, 고가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④ 저소득층 및 취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⑤ 질환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등(중증 질환 부담완화, 경증 질환 부담강화)</p>	<p>B2. 귀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①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② 노인성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③ 신기술, 고가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④ 저소득층 및 취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⑤ 질환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등(중증 질환 부담완화, 경증 질환 부담강화) ⑥ 기타()</p>	<p>C13. 귀하는 전문가로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①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② 노인성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③ 신기술, 고가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④ 저소득층 및 취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⑤ 질환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등(중증 질환 부담완화, 경증 질환 부담강화) ⑥ 기타()</p>	7개년 선택지 수정문항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 보건복지 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 - 보건의료 분야	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2-1.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2-1.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p>16.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대답해 주십시오.</p> <p>① 국고 지원 확대 ② 건강보험료 인상 ③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④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⑤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환자의 비용의식 제고 ⑥ 새로운 재원 마련(의료 보장세, 건강증진부담금 신설 등)</p>	<p>12.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대답해 주십시오.</p> <p>① 국고 지원 확대 ② 건강보험료 인상 ③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④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⑤ 새로운 재원 마련(의료 보장세 등) ⑥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비용의식 제고 ⑦ 기타()</p>	<p>15.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대답해 주십시오.</p> <p>① 국고 지원 확대 ② 건강보험료 인상 ③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④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⑤ 새로운 재원 마련(의료 보장세 등) ⑥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비용의식 제고 ⑦ 기타()</p>
	<p>17.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대답해 주십시오.</p> <p>① 의료 인력 공급 확충 ② 건강보험 수가 인상 ③ 공공의료체계 확충 ④ 의료기관별 서비스 평가 및 결과 공개 ⑤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p>	<p>13.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대답해 주십시오.</p> <p>① 의료 인력 공급 확충 ② 건강보험 수가 인상 ③ 공공의료체계 확충 ④ 의료기관별 서비스 평가 및 결과 공개 ⑤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 ⑥ 전달체계의 개편 ⑦ 기타()</p>	<p>16.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대답해 주십시오.</p> <p>① 의료 인력 공급 확충 ② 건강보험 수가 인상 ③ 공공의료체계 확충 ④ 의료기관별 서비스 평가 및 결과 공개 ⑤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 ⑥ 전달체계의 개편 ⑦ 기타()</p>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구분
2-1.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2-1.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2. 보건정책	2. 보건의료정책	
<p>15.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로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국고 지원 확대 ② 건강보험료 인상 ③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④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⑤ 새로운 재원 마련(의료보장세 등) ⑥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비용의식 제고</p>	<p>15.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로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국고 지원 확대 ② 건강보험료 인상 ③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④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⑤ 새로운 재원 마련(의료보장세 등) ⑥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비용의식 제고</p>	<p>B3. 귀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고 지원 확대 ② 건강보험료 인상 ③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④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⑤ 새로운 재원 마련(의료보장세 등) ⑥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비용의식 제고 ⑦ 기타()</p>	<p>C14. 귀하는 전문가로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고 지원 확대 ② 건강보험료 인상 ③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④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⑤ 새로운 재원 마련(의료보장세 등) ⑥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비용의식 제고 ⑦ 기타()</p>	7개년 선택지 수정문항
<p>16.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로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의료 인력 공급 확충 ② 건강보험 수가 인상 ③ 공공의료체계 확충 ④ 의료기관별 서비스 평가 및 결과 공개 ⑤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 ⑥ 전달체계의 개편 (예: 의원급 진료후 병원급 진료가능)</p>	<p>16.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로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의료 인력 공급 확충 ② 건강보험 수가 인상 ③ 공공의료체계 확충 ④ 의료기관별 서비스 평가 및 결과 공개 ⑤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 ⑥ 전달체계의 개편 (예: 의원급 진료후 병원급 진료가능)</p>	<p>B4. 귀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의료 인력 공급 확충 ② 건강보험 수가 인상 ③ 공공의료체계 확충 ④ 의료기관별 서비스 평가 및 결과 공개 ⑤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 ⑥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예: 의원급 진료후 병원급 진료가능) ⑦ 기타 ()</p>	<p>C4. 귀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의료 인력 공급 확충 ② 건강보험 수가 인상 ③ 공공의료체계 확충 ④ 의료기관별 서비스 평가 및 결과 공개 ⑤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 ⑥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예: 의원급 진료후 병원급 진료가능) ⑦ 기타 ()</p>	7개년 선택지 수정문항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 보건복지 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 - 보건의료 분야	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2-1.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2-1.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p>18.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① 농어촌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취약지역 의료접근성 강화</p> <p>②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정망기금 설치 등 의료비 지원 확대</p> <p>③ 지방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적십자 병원 등)의 서비스 수준 개선</p> <p>④ 농어촌 등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p> <p>⑤ 국·공립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 특성화 및 전문화 지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p>	<p>14.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농어촌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취약지역 의료접근성 강화</p> <p>②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정망기금 설치 등 의료비 지원 확대</p> <p>③ 지방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적십자 병원 등)의 서비스 수준 개선</p> <p>④ 농어촌 등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p> <p>⑤ 국·공립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 특성화 및 전문화 지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p> <p>⑥ 기타()</p>	<p>17.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농어촌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취약지역 의료접근성 강화</p> <p>②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정망기금 설치 등 의료비 지원 확대</p> <p>③ 지방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적십자 병원 등)의 서비스 수준 개선</p> <p>④ 농어촌 등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p> <p>⑤ 국·공립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 특성화 및 전문화 지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p> <p>⑥ 기타()</p>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구분
2-1.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2-1.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2. 보건의료정책	2. 보건의료정책	
<p>17. 귀하께서는 다음의 감염병 예방 관련 과제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초기격리조치, 조기 역학조사 등 확대</p> <p>② 체계적인 감염병 연구 및 전문가 양성</p> <p>③ 국제기구와 공조 강화(WHO, 미국 CDC 등과의 협력강화)</p> <p>④ 질병관리본부 위상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p> <p>⑤ 무분별한 문병 등 병원문병 문화 개선 및 간병 서비스 확충</p> <p>⑥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방지 체계 구축</p>	<p>17. 귀하께서는 다음의 감염병 예방 관련 과제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초기격리조치, 조기 역학조사 등 확대</p> <p>② 체계적인 감염병 연구 및 전문가 양성</p> <p>③ 국제기구와 공조 강화(WHO, 미국 CDC 등과의 협력강화)</p> <p>④ 질병관리본부 위상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p> <p>⑤ 무분별한 문병 등 병원문병 문화 개선 및 간병 서비스 확충</p> <p>⑥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방지 체계 구축</p> <p>⑦ 공향 등 검역 강화</p>		<p>C20. 귀하는 전문가로서 다음의 감염병 예방 관련 과제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① 초기격리조치, 조기 역학조사 등 확대</p> <p>② 체계적인 감염병 연구 및 전문가 양성</p> <p>③ 국제기구와 공조 강화(WHO, 미국 CDC 등과의 협력강화)</p> <p>④ 질병관리본부 위상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p> <p>⑤ 무분별한 문병 등 병원문병 문화 개선 및 간병 서비스 확충</p> <p>⑥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방지 체계 구축</p> <p>⑦ 공향 등 검역 강화</p> <p>⑧ 기타()</p>	3개년 선택지 수정문항
<p>18.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농어촌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취약지역 의료접근성 강화</p> <p>②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정망기금 설치 등 의료비 지원 확대</p> <p>③ 지방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적십자 병원 등)의 서비스 수준 개선</p> <p>④ 농어촌 등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p> <p>⑤ 국·공립대학병원의 연구기능강화, 특성화 및 전문화 지원 등 공공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p>	<p>18.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농어촌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취약지역 의료접근성 강화</p> <p>②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정망기금 설치 등 의료비 지원 확대</p> <p>③ 지방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적십자 병원 등)의 서비스 수준 개선</p> <p>④ 농어촌 등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p> <p>⑤ 국공립대학병원의 연구기능강화, 특성화 및 전문화 지원 등 공공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p> <p>⑥ 감염병·응급 재난 등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확대</p> <p>⑦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기능 확대 (예 : 신생아집중치료실, 분만취약자산부인과지원 등)</p>	<p>B5. 귀하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①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대</p> <p>②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예: 우수인력확보, 국립대학병원의 교육연구기능강화 등)</p> <p>③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활동 수행 지원(예 : 신생아집중치료실, 음압병실, 분만취약자산부인과지원 등)</p> <p>④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정망기금 설치 등 의료비 지원 확대</p> <p>⑤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과기부 등으로 분절되어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거버넌스 일원화</p> <p>⑥ 기타 ()</p>	<p>C6.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①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대</p> <p>②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예: 우수인력확보, 국립대학병원의 교육연구기능강화 등)</p> <p>③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활동 수행 지원(예 : 신생아집중치료실, 음압병실, 분만취약자산부인과지원 등)</p> <p>④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정망기금 설치 등 의료비 지원 확대</p> <p>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거버넌스 일원화(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과기부 등으로 분절되어 있음)</p> <p>⑥ 기타 ()</p>	7개년 선택지 수정문항

○ 보건복지정책방향: 사회복지 및 인구정책분야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 보건복지 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 - 복지분야	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복지 및 저출산	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복지분야	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복지분야																																																		
		<div>6. 귀하는 사회정책과 관련된 다음의 각 정책영역에서 지난 5년간(2008-2012)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경험이나 평소 인식 또는 의견을 토대로 하여 아래의 6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6점 척도)</div> <table><tr><td></td><td>항목</td></tr><tr><td>1)</td><td>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td></tr><tr><td>2)</td><td>건강보험제도 운영</td></tr><tr><td>3)</td><td>공공의료 체계</td></tr><tr><td>4)</td><td>응급의료 체계</td></tr><tr><td>5)</td><td>건강증진 서비스</td></tr><tr><td>6)</td><td>식품안전 보장</td></tr><tr><td>7)</td><td>서민주거지원 (공공임대, 주거바우처, 서민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제도)</td></tr><tr><td>8)</td><td>취업 및 일자리 지원</td></tr><tr><td>9)</td><td>보육 지원</td></tr><tr><td>10)</td><td>노인의 삶의 질 향상</td></tr><tr><td>11)</td><td>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td></tr></table>		항목	1)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	2)	건강보험제도 운영	3)	공공의료 체계	4)	응급의료 체계	5)	건강증진 서비스	6)	식품안전 보장	7)	서민주거지원 (공공임대, 주거바우처, 서민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제도)	8)	취업 및 일자리 지원	9)	보육 지원	10)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1)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div>6. 귀하는 사회정책과 관련된 다음의 각 정책영역에서 지난 5년간(2010-2014)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경험이나 평소 인식 또는 의견을 토대로 하여 아래의 6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div> <div>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다소 미흡 ④ 다소 우수 ⑤ 우수 ⑥ 매우 우수</div> <table><tr><td></td><td>항목</td></tr><tr><td>1)</td><td>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td></tr><tr><td>2)</td><td>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td></tr><tr><td>3)</td><td>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td></tr><tr><td>4)</td><td>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td></tr><tr><td>5)</td><td>응급의료 체계 확충</td></tr><tr><td>6)</td><td>건강증진 서비스 확대</td></tr><tr><td>7)</td><td>식품안전 보장</td></tr><tr><td>8)</td><td>서민주거지원 (공공임대, 주거바우처, 서민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제도)</td></tr><tr><td>9)</td><td>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td></tr><tr><td>10)</td><td>보육 지원 확대</td></tr><tr><td>11)</td><td>노인의 삶의 질 향상</td></tr><tr><td>12)</td><td>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td></tr></table>		항목	1)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	2)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3)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4)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	5)	응급의료 체계 확충	6)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7)	식품안전 보장	8)	서민주거지원 (공공임대, 주거바우처, 서민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제도)	9)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10)	보육 지원 확대	11)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2)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항목																																																				
1)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																																																				
2)	건강보험제도 운영																																																				
3)	공공의료 체계																																																				
4)	응급의료 체계																																																				
5)	건강증진 서비스																																																				
6)	식품안전 보장																																																				
7)	서민주거지원 (공공임대, 주거바우처, 서민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제도)																																																				
8)	취업 및 일자리 지원																																																				
9)	보육 지원																																																				
10)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1)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항목																																																				
1)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																																																				
2)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3)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4)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																																																				
5)	응급의료 체계 확충																																																				
6)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7)	식품안전 보장																																																				
8)	서민주거지원 (공공임대, 주거바우처, 서민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제도)																																																				
9)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10)	보육 지원 확대																																																				
11)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2)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구분																																																																																																																			
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복지분야	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복지분야	2. 복지 및 인구 정책	3. 사회복지정책, 4. 인구정책	6개년 선택지 및 정책영역 수렴사항 (2019년 사회복지 정책, 보건의료 정책 분리)																																																																																																																			
6. 귀하는 사회정책과 관련된 다음의 각 정책영역에서 지난 5년간(2010-2014)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경험이나 평소 인식 또는 의견을 토대로 하여 아래의 6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다소 미흡 ④ 다소 우수 ⑤ 우수 ⑥ 매우 우수	6. 귀하는 사회정책과 관련된 다음의 각 정책영역에서 지난 5년간(2010-2014)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경험이나 평소 인식 또는 의견을 토대로 하여 아래의 6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다소 미흡 ④ 다소 우수 ⑤ 우수 ⑥ 매우 우수	A10. 귀하는 다음의 각 정책영역의 지난 5년간(2013-2017)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경험이나 평소 인식 또는 의견을 토대로 하여 아래의 6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다소 미흡 ④ 다소 우수 ⑤ 우수 ⑥ 매우 우수	A3. 귀하는 전문가로서 각 복지정책 영역의 지난 3년간(2017-2019)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다소 미흡 ④ 다소 우수 ⑤ 우수 ⑥ 매우 우수																																																																																																																				
<table><tr><td></td><td>항목</td></tr><tr><td>1)</td><td>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td></tr><tr><td>2)</td><td>응급의료 체계 확충</td></tr><tr><td>3)</td><td>감염병관리체계 강화</td></tr><tr><td>4)</td><td>건강증진 서비스 확대</td></tr><tr><td>5)</td><td>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td></tr><tr><td>6)</td><td>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td></tr><tr><td>7)</td><td>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td></tr><tr><td>8)</td><td>국민연금 보장성 확대</td></tr><tr><td>9)</td><td>노인의 삶의 질 향상</td></tr><tr><td>10)</td><td>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td></tr><tr><td>11)</td><td>서민주거지원 확대</td></tr><tr><td>12)</td><td>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td></tr><tr><td>13)</td><td>보육 지원 확대</td></tr></table>		항목	1)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	2)	응급의료 체계 확충	3)	감염병관리체계 강화	4)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5)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6)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7)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8)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9)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0)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11)	서민주거지원 확대	12)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13)	보육 지원 확대	<table><tr><td></td><td>항목</td></tr><tr><td>1)</td><td>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td></tr><tr><td>2)</td><td>응급의료 체계 확충</td></tr><tr><td>3)</td><td>감염병관리체계 강화</td></tr><tr><td>4)</td><td>건강증진 서비스 확대</td></tr><tr><td>5)</td><td>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td></tr><tr><td>6)</td><td>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td></tr><tr><td>7)</td><td>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td></tr><tr><td>8)</td><td>국민연금 보장성 확대</td></tr><tr><td>9)</td><td>노인의 삶의 질 향상</td></tr><tr><td>10)</td><td>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td></tr><tr><td>11)</td><td>서민주거지원 확대</td></tr><tr><td>12)</td><td>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td></tr><tr><td>13)</td><td>보육 지원 확대</td></tr></table>		항목	1)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	2)	응급의료 체계 확충	3)	감염병관리체계 강화	4)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5)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6)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7)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8)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9)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0)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11)	서민주거지원 확대	12)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13)	보육 지원 확대	<table><tr><td></td><td>항목</td></tr><tr><td>1)</td><td>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td></tr><tr><td>2)</td><td>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td></tr><tr><td>3)</td><td>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및 자살예방사업 등)</td></tr><tr><td>4)</td><td>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등)</td></tr><tr><td>5)</td><td>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td></tr><tr><td>6)</td><td>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td></tr><tr><td>7)</td><td>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기초연금 등)</td></tr><tr><td>8)</td><td>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td></tr><tr><td>9)</td><td>보육·양육 지원 확대</td></tr><tr><td>10)</td><td>일·생활 양립지원(출산 및 육아휴직, 시차출퇴근제 등)</td></tr><tr><td>11)</td><td>교육의 공공성 강화(국공립 유치원 확충,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td></tr><tr><td>12)</td><td>양성평등 지원</td></tr><tr><td>13)</td><td>서민주거지원 확대</td></tr><tr><td>14)</td><td>노인 장애인 등 대상 돌봄 확대</td></tr><tr><td>15)</td><td>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td></tr><tr><td>16)</td><td>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응</td></tr><tr><td>17)</td><td>문화 및 여가 향유기회 확대</td></tr><tr><td>18)</td><td>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td></tr></table>		항목	1)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2)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3)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및 자살예방사업 등)	4)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등)	5)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6)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7)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8)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9)	보육·양육 지원 확대	10)	일·생활 양립지원(출산 및 육아휴직, 시차출퇴근제 등)	11)	교육의 공공성 강화(국공립 유치원 확충,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12)	양성평등 지원	13)	서민주거지원 확대	14)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돌봄 확대	15)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6)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응	17)	문화 및 여가 향유기회 확대	18)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table><tr><td></td><td>항목</td></tr><tr><td>1)</td><td>일자리 지원 확대(사회서비스 일자리 등)</td></tr><tr><td>2)</td><td>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등)</td></tr><tr><td>3)</td><td>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기초연금 등)</td></tr><tr><td>4)</td><td>건강한 임신·출산 지원</td></tr><tr><td>5)</td><td>보육·양육 지원 확대</td></tr><tr><td>6)</td><td>노인 대상 돌봄 확대</td></tr><tr><td>7)</td><td>장애인 대상 돌봄 확대</td></tr><tr><td>8)</td><td>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지원 확대</td></tr><tr><td>9)</td><td>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td></tr><tr><td>10)</td><td>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td></tr></table>		항목	1)	일자리 지원 확대(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2)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등)	3)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4)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5)	보육·양육 지원 확대	6)	노인 대상 돌봄 확대	7)	장애인 대상 돌봄 확대	8)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지원 확대	9)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0)
	항목																																																																																																																						
1)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																																																																																																																						
2)	응급의료 체계 확충																																																																																																																						
3)	감염병관리체계 강화																																																																																																																						
4)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5)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6)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7)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8)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9)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0)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11)	서민주거지원 확대																																																																																																																						
12)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13)	보육 지원 확대																																																																																																																						
	항목																																																																																																																						
1)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																																																																																																																						
2)	응급의료 체계 확충																																																																																																																						
3)	감염병관리체계 강화																																																																																																																						
4)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5)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6)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7)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8)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9)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0)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11)	서민주거지원 확대																																																																																																																						
12)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13)	보육 지원 확대																																																																																																																						
	항목																																																																																																																						
1)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2)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3)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및 자살예방사업 등)																																																																																																																						
4)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등)																																																																																																																						
5)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6)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7)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8)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9)	보육·양육 지원 확대																																																																																																																						
10)	일·생활 양립지원(출산 및 육아휴직, 시차출퇴근제 등)																																																																																																																						
11)	교육의 공공성 강화(국공립 유치원 확충,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12)	양성평등 지원																																																																																																																						
13)	서민주거지원 확대																																																																																																																						
14)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돌봄 확대																																																																																																																						
15)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6)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응																																																																																																																						
17)	문화 및 여가 향유기회 확대																																																																																																																						
18)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항목																																																																																																																						
1)	일자리 지원 확대(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2)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등)																																																																																																																						
3)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4)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5)	보육·양육 지원 확대																																																																																																																						
6)	노인 대상 돌봄 확대																																																																																																																						
7)	장애인 대상 돌봄 확대																																																																																																																						
8)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지원 확대																																																																																																																						
9)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0)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 보건복지 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 - 복지분야	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복지 및 저출산	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복지분야	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복지분야																																																		
4. 정부가 앞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분야 중 어느 분야에 대해 더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순위까지 우선순위) ① 저소득층 지원 ② 의료 지원 ③ 주거 지원 ④ 일자리 지원 ⑤ 보육 지원 ⑥ 문화 지원 ⑦ 교육 지원 ⑧ 서민금융 지원		7.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귀하의 동의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경험이나 평소 인식 또는 의견을 토대로 하여 아래의 6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6점척도) <table><tr><td></td><td>항목</td></tr><tr><td>1)</td><td>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td></tr><tr><td>2)</td><td>건강보험제도 운영</td></tr><tr><td>3)</td><td>공공의료 체계</td></tr><tr><td>4)</td><td>응급의료 체계</td></tr><tr><td>5)</td><td>건강증진 서비스</td></tr><tr><td>6)</td><td>식품안전 보장</td></tr><tr><td>7)</td><td>서민주거지원 (공공임대, 주거바우처, 서민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제도)</td></tr><tr><td>8)</td><td>취업 및 일자리 지원</td></tr><tr><td>9)</td><td>보육 지원</td></tr><tr><td>10)</td><td>노인의 삶의 질 향상</td></tr><tr><td>11)</td><td>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td></tr></table>		항목	1)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	2)	건강보험제도 운영	3)	공공의료 체계	4)	응급의료 체계	5)	건강증진 서비스	6)	식품안전 보장	7)	서민주거지원 (공공임대, 주거바우처, 서민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제도)	8)	취업 및 일자리 지원	9)	보육 지원	10)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1)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7.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귀하의 동의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경험이나 평소 인식 또는 의견을 토대로 하여 아래의 6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하지 않는 편임 ④ 동의하는 편임 ⑤ 동의함 ⑥ 매우 동의함 <table><tr><td></td><td>항목</td></tr><tr><td>1)</td><td>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td></tr><tr><td>2)</td><td>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td></tr><tr><td>3)</td><td>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td></tr><tr><td>4)</td><td>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td></tr><tr><td>5)</td><td>응급의료 체계 확충</td></tr><tr><td>6)</td><td>건강증진 서비스 확대</td></tr><tr><td>7)</td><td>식품안전 보장</td></tr><tr><td>8)</td><td>서민주거지원 (공공임대, 주거바우처, 서민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제도)</td></tr><tr><td>9)</td><td>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td></tr><tr><td>10)</td><td>보육 지원 확대</td></tr><tr><td>11)</td><td>노인의 삶의 질 향상</td></tr><tr><td>12)</td><td>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td></tr></table>		항목	1)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	2)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3)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4)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	5)	응급의료 체계 확충	6)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7)	식품안전 보장	8)	서민주거지원 (공공임대, 주거바우처, 서민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제도)	9)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10)	보육 지원 확대	11)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2)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항목																																																				
1)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																																																				
2)	건강보험제도 운영																																																				
3)	공공의료 체계																																																				
4)	응급의료 체계																																																				
5)	건강증진 서비스																																																				
6)	식품안전 보장																																																				
7)	서민주거지원 (공공임대, 주거바우처, 서민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제도)																																																				
8)	취업 및 일자리 지원																																																				
9)	보육 지원																																																				
10)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1)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항목																																																				
1)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																																																				
2)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3)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4)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																																																				
5)	응급의료 체계 확충																																																				
6)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7)	식품안전 보장																																																				
8)	서민주거지원 (공공임대, 주거바우처, 서민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제도)																																																				
9)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10)	보육 지원 확대																																																				
11)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2)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구분																																																									
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복지분야	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복지분야	2. 복지 및 인구 정책	3. 사회복지정책, 4. 인구정책	7개년 선택지 및 정책영역 수정문항 (2019년 사회복지 정책, 보건의료 정책 분리)																																																									
7.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귀하의 동의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경험이나 평소 인식 또는 의견을 토대로 하여 아래의 6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하지 않는 편임 ④ 동의하는 편임 ⑤ 동의함 ⑥ 매우 동의함	7.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귀하의 동의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경험이나 평소 인식 또는 의견을 토대로 하여 아래의 6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하지 않는 편임 ④ 동의하는 편임 ⑤ 동의함 ⑥ 매우 동의함	A11.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다음의 정책 분야에 대한 귀하의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하지 않는 편임 ④ 동의하는 편임 ⑤ 동의함 ⑥ 매우 동의함	A4.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복지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해주시시오.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하지 않는 편임 ④ 동의하는 편임 ⑤ 동의함 ⑥ 매우 동의함																																																										
<table><tr><th>항목</th></tr><tr><td>1)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td></tr><tr><td>2) 응급의료 체계 확충</td></tr><tr><td>3) 감염병관리체계 강화</td></tr><tr><td>4)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td></tr><tr><td>5)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td></tr><tr><td>6)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td></tr><tr><td>7)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td></tr><tr><td>8)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td></tr><tr><td>9) 노인의 삶의 질 향상</td></tr><tr><td>10)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td></tr><tr><td>11) 서민주거지원 확대</td></tr><tr><td>12)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td></tr><tr><td>13) 보육 지원 확대</td></tr></table>	항목	1)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	2) 응급의료 체계 확충		3) 감염병관리체계 강화	4)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5)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6)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7)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8)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9)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0)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11) 서민주거지원 확대	12)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13) 보육 지원 확대	<table><tr><th>항목</th></tr><tr><td>1)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td></tr><tr><td>2) 응급의료 체계 확충</td></tr><tr><td>3) 감염병관리체계 강화</td></tr><tr><td>4)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td></tr><tr><td>5)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td></tr><tr><td>6)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td></tr><tr><td>7)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td></tr><tr><td>8)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td></tr><tr><td>9) 노인의 삶의 질 향상</td></tr><tr><td>10)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td></tr><tr><td>11) 서민주거지원 확대</td></tr><tr><td>12)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td></tr><tr><td>13) 보육 지원 확대</td></tr></table>	항목	1)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	2) 응급의료 체계 확충	3) 감염병관리체계 강화	4)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5)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6)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7)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8)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9)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0)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11) 서민주거지원 확대	12)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13) 보육 지원 확대	<table><tr><th>항목</th></tr><tr><td>1)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td></tr><tr><td>2)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td></tr><tr><td>3)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및 자살예방사업 등)</td></tr><tr><td>4)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td></tr><tr><td>5)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td></tr><tr><td>6)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td></tr><tr><td>7)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td></tr><tr><td>8)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td></tr><tr><td>9) 보육·양육 지원 확대</td></tr><tr><td>10) 일·생활 양립지원(출산 및 육아휴직, 사차출퇴근제 등)</td></tr><tr><td>11)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유치원 확충,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td></tr><tr><td>12) 양성평등 지원</td></tr><tr><td>13) 서민주거지원 확대</td></tr><tr><td>14)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돌봄 확대</td></tr><tr><td>15)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td></tr><tr><td>16)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응</td></tr><tr><td>17) 문화 및 여가 향유기회 확대</td></tr><tr><td>18)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td></tr></table>	항목	1)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2)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3)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및 자살예방사업 등)	4)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5)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6)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7)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8)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9) 보육·양육 지원 확대	10) 일·생활 양립지원(출산 및 육아휴직, 사차출퇴근제 등)	11)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유치원 확충,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12) 양성평등 지원	13) 서민주거지원 확대	14)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돌봄 확대	15)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6)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응	17) 문화 및 여가 향유기회 확대	18)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table><tr><th>항목</th></tr><tr><td>1) 일자리 지원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td></tr><tr><td>2)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등)</td></tr><tr><td>3)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td></tr><tr><td>4)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td></tr><tr><td>5) 보육·양육 지원 확대</td></tr><tr><td>6) 노인 대상 돌봄 확대</td></tr><tr><td>7) 장애인 대상 돌봄 확대</td></tr><tr><td>8)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지원 확대</td></tr><tr><td>9)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td></tr><tr><td>10)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td></tr></table>	항목	1) 일자리 지원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2)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등)	3)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4)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5) 보육·양육 지원 확대	6) 노인 대상 돌봄 확대	7) 장애인 대상 돌봄 확대	8)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지원 확대	9)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항목																																																													
1)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																																																													
2) 응급의료 체계 확충																																																													
3) 감염병관리체계 강화																																																													
4)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5)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6)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7)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8)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9)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0)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11) 서민주거지원 확대																																																													
12)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13) 보육 지원 확대																																																													
항목																																																													
1)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																																																													
2) 응급의료 체계 확충																																																													
3) 감염병관리체계 강화																																																													
4)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5)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6)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7)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8)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9)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0)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11) 서민주거지원 확대																																																													
12)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13) 보육 지원 확대																																																													
항목																																																													
1)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2)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3)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및 자살예방사업 등)																																																													
4)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5)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6)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7)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8)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9) 보육·양육 지원 확대																																																													
10) 일·생활 양립지원(출산 및 육아휴직, 사차출퇴근제 등)																																																													
11)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유치원 확충,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12) 양성평등 지원																																																													
13) 서민주거지원 확대																																																													
14)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돌봄 확대																																																													
15)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6)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응																																																													
17) 문화 및 여가 향유기회 확대																																																													
18)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항목																																																													
1) 일자리 지원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2)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등)																																																													
3)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4)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5) 보육·양육 지원 확대																																																													
6) 노인 대상 돌봄 확대																																																													
7) 장애인 대상 돌봄 확대																																																													
8)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지원 확대																																																													
9)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0)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 보건복지 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 - 복지분야	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복지 및 저출산	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복지분야	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복지분야
<p>6.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정부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2개까지 복수응답허용)</p> <p>①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 지원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p> <p>② 일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p> <p>③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p> <p>④ 소액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p> <p>⑤ 직업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지원</p> <p>⑥ 기타()</p>	<p>7. 귀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정부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p> <p>①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p> <p>② 일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p> <p>③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p> <p>④ 소액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p> <p>⑤ 직업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지원</p>	<p>17. 귀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정부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대답해 주십시오.</p> <p>①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p> <p>② 일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p> <p>③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p> <p>④ 소액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p> <p>⑤ 직업 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지원</p> <p>⑥ 기타()</p>	<p>20. 귀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정부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대답해 주십시오.</p> <p>①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p> <p>② 일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p> <p>③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p> <p>④ 소액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p> <p>⑤ 직업 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지원</p> <p>⑥ 기타()</p>
			<p>21.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대답해 주십시오.</p> <p>① 임신출산 의료비용 지원 강화 (예, 출산비용 지원, 출산축하금 확대, 임신 중 건강검진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p> <p>②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예,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확충 및 서비스 운영시간 조정 등)</p> <p>③ 아이돌봄비 등 가정양육 지원 강화</p> <p>④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실천 확산</p> <p>⑤ 공교육 내실화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p> <p>⑥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결혼비용 감소</p> <p>⑦ 기타()</p>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구분
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복지분야	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복지분야	2. 복지 및 인구 정책	3. 사회복지정책, 4. 인구정책	
21. 귀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정부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② 일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 ③ 취업제충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 ④ 소액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⑤ 직업 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지원	21. 귀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정부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② 일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 ③ 취업제충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 ④ 소액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⑤ 직업 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지원	C1. 귀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정부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저축을 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② (일하는 경우) 정부지원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 ③ 취업제충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 ④ 소액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⑤ 직업 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지원 ⑥ 주거 및 보육 등의 복지지원 연계 ⑦ 기타 ()	A14. 귀하는 전문가로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정부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저축을 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② (일하는 경우) 정부지원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 ③ 취업제충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 ④ 소액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⑤ 직업 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지원 ⑥ 주거 및 보육 등의 복지지원 연계 ⑦ 기타 ()	8개년 선택지 수정문항
22.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임신출산 의료비용 지원 강화(예, 출산비용 지원, 출산축하금 확대, 임신 중 건강검진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②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예,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확충 및 서비스 운영 시간 조정 등) ③ 아이돌봄비 등 가정양육 지원 강화 ④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실천 확산 ⑤ 공공육아 내실화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⑥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결혼비용 감소	22.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등 결혼지원정책 ②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양립 정책 강화 ③ 사교육 부담 경감 및 공공육아 정상화 ④ 임신·출산 의료비용 지원 강화(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⑤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예, 맞춤형 보육,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충 등) ⑥ 아이돌봄비, 초·중·고교실 등 보육서비스 이외의 돌봄 확대	C2.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등 결혼지원정책 ② 임신·출산 의료비용 지원 강화(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③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양립 정책 강화 ④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예, 맞춤형 보육,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충 등) ⑤ 아이돌봄비, 초·중·고교실 등 보육서비스 이외의 돌봄 확대 ⑥ 사교육 부담 경감 및 공공육아의 양적·질적 강화 ⑦ 기타 ()	B2. 귀하는 전문가로서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고용문제 해결 ② 주거문제 해결 ③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④ 영유아 의료비 지원 ⑤ 아동 돌봄지원(어린이집 돌봄, 아동돌봄서비스, 초·중·고교실, 다함께돌봄 확대 등) ⑥ 교육제도 개선(사교육) ⑦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확대 ⑧ 기타 ()	5개년 선택지 수정문항

○ 일반사항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3.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남 ②여	1. 성별 ①남 ②여	1. 성별 ①남 ②여	1. 성별 ①남 ②여
24.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2. 연령(만)	2. 연령(만)	2. 연령(만)
27. 귀하의 전공분야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보건학 ② 사회복지학 ③ 의학/간호학 ④ 경제학 ⑤ 행정학 ⑥ 경영학 ⑦ 사회학 ⑧ 기타()	3. 전공 ① 경제학 ② 사회복지학 ③ 보건학 ④ 행정학	3. 전공 ① 경제학 ② 경영학 ③ 사회복지학(아동, 노인, 청소년 포함) ④ 사회학 ⑤ 행정학 ⑥ 보건학 ⑦ 기타()	3. 전공 ① 경제학(경영학) ② 사회복지학(아동, 노인, 청소년 포함) ③ 사회학 ④ 행정학 ⑤ 보건 의학 ⑥ 기타()
25. 귀하의 소속은 어떻게 되십니까? (검지 시 복수응답) ① 대학 ② 정부기관 ③ 정부산하 연구기관 ④ 민간연구기관 ⑤ 의료기관/단체 ⑥ 민간단체/협회 ⑦ 기타()		4. 소속 ①대학 ②정부 및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③민간기관(연구기관, 영리 및 비영리 포함) ④기타()	4. 소속 ①대학 ②정부 및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③민간기관(연구기관, 영리 및 비영리 포함) ④기타()
		5. 정치적 성향 ① 보수 ② 다소 보수 ③ 중도 ④ 다소 진보 ⑤ 진보	5. 정치적 성향 ① 보수 ② 다소 보수 ③ 중도 ④ 다소 진보 ⑤ 진보
26.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박사 ②석사 ③학사 ④기타()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구분
1. 성별 ①남 ②여	1. 성별 ①남 ②여	성별 ①남 ②여	성별 ①남 ②여	
2. 연령(만)	2. 연령(만)	연령(만)	연령(만)	
3. 전공 ① 경상계열 ② 사회계열 ③ 보건의학	3. 전공 ① 경상계열 ② 사회계열 ③ 보건의학	전공 ① 경상계열 ② 사회계열 ③ 보건계열 ④ 기타()	전공 ① 경상·법정 ② 인문·사회 ③ 보건·의료 ④ 기타()	
4. 소속 ①대학 ②정부 및 지자체 출연연구 기관 ③민간기관(연구기관, 영리 및 비영리 포함) ④기타()	4. 소속 ①대학 ②정부 및 지자체 출연연구 기관 ③민간기관(연구기관, 영리 및 비영리 포함) ④기타()	소속 ①대학 ②연구기관 ③기타()	소속 ①대학 ②연구기관 ③언론사 ④기타()	
5. 정치적 성향 ① 보수 ② 다소 보수 ③ 중도 ④ 다소 진보 ⑤ 진보	5. 정치적 성향 ① 보수 ② 다소 보수 ③ 중도 ④ 다소 진보 ⑤ 진보	정치적 성향 ① 보수 ② 다소 보수 ③ 중도 ④ 다소 진보 ⑤ 진보	정치적 성향 ① 보수 ② 다소 보수 ③ 중도 ④ 다소 진보 ⑤ 진보	

부록 2.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조사표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향후 보건복지정책 정책 수립을 위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보건복지정책 만족도 및 욕구 조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건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사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 문의 및 연락처 >

조사기관 KMA 한국농림협회

주관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4-287-8317, 8215)

응답자 이름		응답자 연락처	_____ - _____ - _____
응답자 성별	① 남 ② 여	응답자 나이	만 _____세 (생년월일 : _____) *만19세 이상(2000년 10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조사
주소	_____시/도 _____읍/면/동 (세부주소)		
1인 가구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유치조사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1차 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3)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2차 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3)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3차 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3)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최종면접일시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면접시간	_____분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수퍼바이저 검증		검증결과	

A. 가구일반사항

문 A1) 귀하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응답자	범주
문 A1-1) 성별		① 남 ② 여
문 A1-2) 태어난 연도		주민등록상 생년(生年)
문 A1-3) 교육수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 ③ 중학교 졸 ④ 고등학교 졸 ⑤ 대학 졸(전문대학 포함) ⑥ 대학원 이상 ※ 재학 및 중퇴는 한 단계 아래 학력 기재 예) 중학교 재학이나 중퇴는 ②초등학교 졸로 기재
문 A1-4) 혼인상태		① 유배우 ② 별거 ③ 사별 ④ 이혼 ⑤ 미혼(미혼 부·모 포함) ⑥ 사실혼 ⑦ 기타()
문 A1-5) 경제활동 참여상태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재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포함)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실업자 ⑧ 비경제활동인구(주부, 학생, 군복무 등) ※ 실업자는 2018. 10. 31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중인 경우임
문 A1-6) 직업안정성		※ 상용직 임금근로자만 응답 (문A1-6의 ① 응답자) ⑨ 비해당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 문A1-6의 ②~⑧ 응답자는 비해당 체크

문 A2) 귀댁의 가구원수는 몇 명이십니까?

※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정,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도 포함
즉, 주거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소득을 공유하는 가족은 포함

가구원수	
	명

문 A3) 귀댁에 다음의 가구원이 있습니까?

구분	있음	없음
문A3-1) 노인 ※ 만 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기준 1954년 10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①	②
문A3-2) 장애인 ※ 등록장애인(1~6등급) 기준이며, 국가보훈처 등록장애인(7~15등급)은 제외함	①	②
문A3-3) 아동 ※ 만18세 미만으로 주민등록기준 2001년 10월 31일 이후 출생한 자	①	②

문 A4) 지난 한해(2018년)를 기준으로 귀댁의 가계 상황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구분	해당항목						
가구 총 생활비	=식료품비+주거비+광열수도비+가구집가사용품비+피복·신발비+보건의료비+교육비+교양오락비+교통통신비+기타소비지출+비소비지출	월평균					만원
가구 총 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연간					만원
가구 총 재산	=거주 주택가격+금융재산+부동산+기타 재산	연간					만원

〈조사원 참고사항〉

※ 총생활비=식료품비+주거비+광열수도비+가구집가사용품비+피복·신발비+보건의료비+교육비+교양오락비+교통통신비+기타소비지출+비소비지출

※ 가정생활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합니다.

※ 저금, 저축성보험료, 게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도 제외합니다.

- 단, 매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자, 할부금, 부채상환금은 포함합니다.

※ 할부 구매의 경우 월 할부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예)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무이자 할부시 →월 50만원 지출

※ 친인척 및 이웃 등으로부터 보조받은 각종 현물(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등)은 현금으로 환산하여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 단,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받은 현금, 서비스 및 바우처 형태의 지원(정부보육료, 무상급식 등)은 제외합니다.

※ 가구총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급, 보너스 등

- 세금공제 전 소득

※ 사업소득: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

- 전체 매출액 또는 판매수입에서 사업에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을 기록

※ 금융소득: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 부동산소득: 집세, 토지임대료 수입, 부동산 매매차익 등

-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포함되지 않음

※ 사적 이전소득: 따로 시는 부모 또는 자녀, 그 외 친척, 친지로부터 받은 소득, 복지기권, 종교단체 등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현금 보조

※ 공적 이전소득: 국기로부터 받은 각종 현금 급여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장애수당, 장애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 양육수당,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출산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 재산

- 가구원이 아닌 부모님 또는 자녀의 명의로 된 경우 포함하지 않음

- 자기는 주택가격, 전세는 전세금,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을 기입

- 금융재산은 정기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청약예금, 주식, 빌려준 돈 등

- 사업목적의 (소유 또는 점유) 부동산의 경우, 부채를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 소유부동산(가주주택 외 주택, 상가, 토지, 콘도, 별장, 오피스텔 등)

- 점유부동산(전세보증금, 권리금 등)

-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및 기타(회원권, 골동품 등)

문 A5)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댁은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①	②	③	④	⑤

B. 복지정책

문 B1) 귀하는 요즘 살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듣는 즉시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 B2) 귀하는 우리나라의 소득 및 재산의 분배, 그리고 기회가 얼마나 평등(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다소 불평등하다	다소 평등하다	평등하다	매우 평등하다
소득 및 재산	①	②	③	④	⑤	⑥
기회	①	②	③	④	⑤	⑥

문 B3) 귀하는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높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 B4) 귀하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문 B5)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음의 복지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번호	항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일자리 지원 확대(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2)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등)	①	②	③	④	⑤	⑥
3)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①	②	③	④	⑤	⑥
4)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5)	보육양육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6)	노인 대상 돌봄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7)	장애인 대상 돌봄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8)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9)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10)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 문 B5-1)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아래의 복지정책 중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일자리 지원 확대(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 ②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등) |
| ③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 ④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
| ⑤ 보육양육 지원 확대 | ⑥ 노인 대상 돌봄 확대 |
| ⑦ 장애인 대상 돌봄 확대 | ⑧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지원 확대 |
| ⑨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⑩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

문 B6) 귀하가 느끼는 현재의 걱정거리(불안요인)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일자리 ② 출산과 양육 ③ 자녀교육
④ 신체와 정신건강 ⑤ 주거 ⑥ 노후생활
⑦ 부채 상황 ⑧ 부모 부양 ⑨ 환경 ⑩ 안전

문 B7) 귀하는 정부가 보건복지정책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영유아아동 ② 청소년
③ 청년 ④ 중장년
⑤ 노인 ⑥ 기타 ()

ㄴ 문 B7-1) 귀하는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정책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저소득층 ② 장애인
③ 한부모가정·조손가정 ④ 노인
⑤ 이주민(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⑥ 기타 ()

문 B8)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및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현형 유지가 바람직하다	조금 더 완화해야한다	전면 폐지해야한다
생계급여 (한금 지원)	①	②	③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지원)	①	②	③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해 대상가구가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 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1촌 직계혈족 사망한 경우는 제외)가 있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 B9) 귀하는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청절차가 얼마나 편리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신청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신청하러 가기가 어렵다(접근성)	①	②	③	④	⑤	⑥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신청 용이성)	①	②	③	④	⑤	⑥

문 B10) 귀하는 향후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
- ②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 ③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④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 ⑤ 공공적 성격을 갖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대(기관운영의 투명성 확대, 제공인력 고용 안정 강화)

※ **사회서비스**란,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 노인 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등)

문 B11) 귀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지역주민
- ②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 ③ 학교 및 민간 복지기관 종사자
- ④ 방문형사업기관(도시락배달 등) 종사자
- ⑤ 기타 ()

문 B12) 귀하는 향후 정부의 장애인 지원정책 방향으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 ② 의료, 재활, 건강관리 지원 강화
- ③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인프라 확대
- ④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
- ⑤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및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 ⑥ 장애인 학대 예방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 강화
- ⑧ 기타 ()

문 B13) 귀하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사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 등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커뮤니티 케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재가 돌봄서비스 확충
- ② 당사자에 적합한 주거 환경 개선
- ③ 동네의원을 통한 재택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④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안내 강화
- ⑤ 안부 확인 등 상시적 대응 체계 구축
- ⑥ 기타 ()

문 B14) 귀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중장기적 재정의 안정성(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불안정하다 ← → 매우 안정적이다					
국민연금	①	②	③	④	⑤	⑥
건강보험	①	②	③	④	⑤	⑥

↳ 문 B14-1) 귀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반대한다 ←————→ 매우 찬성한다					
국민연금	①	②	③	④	⑤	⑥
건강보험	①	②	③	④	⑤	⑥

문 B15) 귀하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십니까?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다소 반대한다	다소 찬성한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 B16) 귀하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십니까?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다소 반대한다	다소 찬성한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ㄴ 문 B16-1) 귀하가 보건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을 더 부담하시는 것에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9

- ① 고소득자가 지금보다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 ② 정부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므로
- ③ 정부가 제도를 공평하게 운영할 능력이 없으므로
- ④ 보건의료정책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므로
- ⑤ 내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더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C. 인구정책

문 C1) 귀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①	②	③	④	⑤	⑥

문 C2) 귀하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용문제 해결
- ② 주거문제 해결
- ③ 건강한 임신·출생을 위한 지원
- ④ 영유아 의료비 지원
- ⑤ 아동 돌봄지원(어린이집 돌봄, 아동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 확대 등)
- ⑥ 교육제도 개선(사교육)
- ⑦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확대
- ⑧ 기타 _____

문 C3) 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가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육아지원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동수당 확대(아동수당 금액 인상 및 수혜 대상 확대)
- ② 국공립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
- ③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
- ④ 시간연장, 시간제, 24시간 등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
- ⑤ 가정양육 관련 지원(아이돌봄서비스 등) 확대
- ⑥ 육아휴직제 정착 등 고용관련 제도 개선
- ⑦ 육아정보·상담관련 정보 제공
- ⑧ 보육·양육 지원 관련 현금지원 확대
- ⑨ 기타(_____)

문 C4) 귀하는 우리나라 아동의 놀이 인식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시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국내 아동의 놀이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아동의 놀권리를 위한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아동의 놀권리·놀이권이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 C5) 귀하는 다기를 노후생활에 있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노후생활비 부족
- ② 노후 건강
- ③ 사회활동 단절
- ④ 인간관계 단절
- ⑤ 배우자나 가족과의 관계
- ⑥ 기타

문 C6) 귀하는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노인 소득지원 강화(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제도 확대)
- ② 노인 일자리 확대
- ③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
- ④ 정년 연장
- ⑤ 노인 돌봄 지원 확대(노인 방문건강 서비스 확대, 노인돌봄서비스, 치매 국가책임제 등)
- ⑥ 노인건강보험 확대
- ⑦ 노후대비를 위한 정보제공
- ⑧ 기타 _____

문 C7) 귀하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된 방법	부수적인 방법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원 연금 등)
- ② 사적연금(은행, 보험회사 등을 통한 개인연금)
- ③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 ④ 금융 자산(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주식, 채권 등)
- ⑤ 부동산 운용(주택연금, 역모기지제도 등)
- ⑥ 자녀들의 부모 부양(사적이전)

문 C8)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모른다.
-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 ③ 잘 알고 있다.

374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

문 C9) 귀하께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느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안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장기요양보험제도란,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써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 C10) 귀하는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때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제적 지원
- ② 재가요양돌봄서비스 확대
- ③ 간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 ④ 양질의 요양시설 확대
- ⑤ 필요 없음

문 C11) 귀하는 노인이 되어 혼자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질 경우, 어떻게 생활하실 계획이십니까?

- ① 자녀로부터의 돌봄
- ② 친지·이웃·친구로부터의 돌봄
- ③ 요양간병 등 재가서비스 이용
- ④ 시설 입소(양로시설,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 ⑤ 기타 _____

D. 보건의료

문 D1)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음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번호	항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①	②	③	④	⑤	⑥
2)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①	②	③	④	⑤	⑥
3)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등)	①	②	③	④	⑤	⑥
4)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 확대(자살예방,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5)	의료서비스 질 개선(의료진달체 개선, 의료 인력 공급 확충, 공공의료 체계 확충 등)	①	②	③	④	⑤	⑥
6)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따른 대응(어린이집, 경로당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7)	보건의료 위해 대응체계 마련(생활용품 및 식의약품 불안 등)	①	②	③	④	⑤	⑥
8)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웰다잉(well-dying),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①	②	③	④	⑤	⑥

문 D10) 귀하는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동
- ② 청소년
- ③ 청년(20~30대)
- ④ 중장년(40~50대)
- ⑤ 노인(65세 이상)
- ⑥ 기타()

문 D11) 귀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상담 전화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정신건강복지센터	①	②
정신건강 상담 전화 서비스	①	②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부록 3.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조사표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향후 보건복지정책 정책 수립을 위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보건복지정책 만족도 및 욕구 조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건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사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 문의 및 연락처 >

조사기관 KMA 한국농림협회

주관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4-287-8317, 8215)

성명		연령	만 _____세
성별	① 남 ② 여	정치적 성향	① 보수 ② 다소 보수 ③ 중도 ④ 다소 진보 ⑤ 진보
소속	① 대학 ② 연구기관 ③ 언론사 ④ 기타 (_____)	전공	① 정상·법정 ② 인문·사회 ③ 보건·의료 ④ 기타 (_____)
연락처	_____ - _____ - _____ [상품권 발송용]		

A. 복지정책

문 A1)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복지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낮다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높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 A2) 귀하는 전문가로서 지난 3년간(2017~2019)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정책성공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①	②	③	④	⑤	⑥

문 A3) 귀하는 전문가로서 다음의 각 복지정책 영역의 지난 3년간(2017~2019)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번호	항목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1)	일자리 지원 확대(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2)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등)	①	②	③	④	⑤	⑥
3)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①	②	③	④	⑤	⑥
4)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5)	보육양육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6)	노인 대상 돌봄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7)	장애인 대상 돌봄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8)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9)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10)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문 A4) 전문가로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복지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

번호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일자리 지원 확대(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2)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등)	①	②	③	④	⑤	⑥
3)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①	②	③	④	⑤	⑥
4)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5)	보육양육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6)	노인 대상 돌봄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7)	장애인 대상 돌봄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8)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9)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10)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문 A5) 전문가적 입장에서, 국민들의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
| ① 일자리 | ② 출산과 양육 |
| ③ 자녀교육 | ④ 신체와 정신건강 |
| ⑤ 주거 | ⑥ 노후생활 |
| ⑦ 부채 상황 | ⑧ 부모부양 |
| ⑨ 환경 | ⑩ 안전 |
| ⑪ 기타 () | |

문 A6)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보건복지정책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
| ① 영유아아동 | ② 청소년 |
| ③ 청년 | ④ 중장년 |
| ⑤ 노인 | ⑥ 기타 () |

↳ A6-1)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정책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
| ① 저소득층 | ② 장애인 |
| ③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④ 노인 |
| ⑤ 이주민(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⑥ 기타 () |

A7) 귀하는 전문가로서 향후 소득 지원 정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② (자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일지리를 통한 탈빈곤 지원 강화
 ③ (아동수당 등) 가족 소득보장 강화
 ④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노인 소득보장 강화
 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청년 자산형성지원
 ⑥ 기타 ()

A8) 귀하는 전문가로서 향후 서비스 지원 정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치매안심센터운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
- ②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 ③ (드림스타트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등) 아동발달지원서비스
- ④ (난민 시술비 지원, 종일보육 등) 출산 및 보육서비스
- ⑤ 기타 ()

문 A9)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현행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
- ② 현행 복지제도 간 연계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 ③ 유사 중복지 사업조정, 부정정수급 점검 등을 통한 복지재정 누수 방지 향상
- ④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정책의 체계감도
- ⑤ 복지 확대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 ⑥ 민관협력체계 강화
- ⑦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제도 예시 :
- ⑧ 기타 ()

문 A10) 귀하는 전문가로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개선을 위해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급여수준 인상 (가구균등화 개선 등을 통한 1,2인 가구 급여 상향 등)
② 대상자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를 통한 대상자 확대)

문 A11) 귀하는 전문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현형 유지가 바람직하다	조금 더 완화해야한다	전면 폐지해야한다
생계급여 (현금 지원)	①	②	③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지원)	①	②	③

문 A12) 귀하는 전문가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층에 대한 일자리 및 훈련 제공이 참여자의 근로동기 부여 및 최저생활보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매우 도움이 된다
근로통기 부여	①	②	③	④	⑤	⑥
최저생활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문 A13) 귀하는 전문가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층의 자활급여 인상에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⑤	⑥

문 A14) 귀하는 전문가로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정부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저축을 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② (일하는 경우) 정부지원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
- ③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
- ④ 소액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 ⑤ 직업 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지원
- ⑥ 주거 및 보육 등의 복지지원 연계
- ⑦ 기타 ()

문 A15)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 ② (누구나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확충

ㄴ 문 A15-1) 귀하는 전문가로서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
- ②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 ③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④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 ⑤ 공공적 성격을 갖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대(기관운영의 투명성 확대, 제공인력 고용 안정 강화)

※ **사회서비스란**,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 노인 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등)

문 A16) 귀하는 전문가로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역주민
- ②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 ③ 학교 및 민간 복지기관 종사자
- ④ 방문형사업기관(도시락배달 등) 종사자
- ⑤ 기타 ()

문 A17) 귀하는 전문가로서 향후 정부의 장애인 지원정책 방향으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 ② 의료, 재활, 건강관리 지원 강화
- ③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인프라의 확대
- ④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일자리 확대 포함)
- ⑤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및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 ⑥ 장애인 학대 예방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 강화
- ⑧ 기타 ()

문 A18) 귀하는 전문가로서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커뮤니티 케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재가 돌봄서비스 확충
- ② 당사자에 적합한 주거 환경 개선
- ③ 동네의원을 통한 재택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④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안내 강화
- ⑤ 안부 확인 등 상시적 대응 체계 구축
- ⑥ 기타 ()

문 A19) 귀하는 전문가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중장기적 재정의 안정성(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불안정하다						매우 안정적이다
국민연금	①	②	③	④	⑤	⑥	
건강보험	①	②	③	④	⑤	⑥	

문 A19-1) 귀하는 전문가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반대한다						매우 찬성한다
국민연금	①	②	③	④	⑤	⑥	
건강보험	①	②	③	④	⑤	⑥	

문 A20)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십니까?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다소 반대한다	다소 찬성한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 A21)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십니까?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다소 반대한다	다소 찬성한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B. 인구정책

문 B1) 귀하는 전문가로서 지난 3년간(2017~2019)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①	②	③	④	⑤	⑥

문 B2) 귀하는 전문가로서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용문제 해결
- ② 주거문제 해결
- ③ 건강한 임신·출생을 위한 지원
- ④ 영유아 의료비 지원
- ⑤ 아동 돌봄지원(어린이집 돌봄, 아동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 확대 등)
- ⑥ 교육제도 개선(사교육)
- ⑦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확대
- ⑧ 기타(_____)

문 B3) 귀하는 전문가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가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육아지원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동수당 확대(아동수당 금액 인상 및 수혜 대상 확대)
- ② 국공립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
- ③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
- ④ 시간연장, 시간제, 24시간 등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
- ⑤ 가정양육 관련 지원(아이돌봄서비스 등) 확대
- ⑥ 육아휴직제 정착 등 고용관련 제도 개선
- ⑦ 육아정보·상담관련 정보 제공
- ⑧ 보육·양육 지원 관련 현금지원 확대
- ⑨ 기타(_____)

문 B4)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아동의 놀이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동의 외부 놀이공간 부족
- ② 어른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 ③ 사교육(예체능 교육 포함)의 지나친 시간 할애
- ④ 정부의 정책 부족 (홍보 및 사업의 부족)
- ⑤ 기타(_____)

※ 아동의 놀 권리·놀이권이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 B5) 귀하는 전문가로서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노인 소득지원 강화(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제도 확대)
- ② 노인 일자리 확대
- ③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
- ④ 정년연장
- ⑤ 노인 돌봄 지원 확대(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돌봄서비스, 노인 방문건강 서비스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등)
- ⑥ 노인건강보험 확대
- ⑦ 노후대비를 위한 정보제공
- ⑧ 기타()

문 B6) 귀하는 전문가로서 기초연금의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의 정책에 찬성(기초연금 확대)
- ② 현상 유지
- ③ 정부의 정책에 반대(기초연금 축소)
- ④ 기타()

※ 기초연금이란, 노인복지 향상과 노후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로써, 정부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노인 소득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고 점차적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 B7)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예방, 상담, 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농어촌 송영·방문서비스 제공,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 ② 치매 전문 병동 확대
- ③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대
- ④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기반 구축
(커뮤니티 케어 : 주거, 방문건강, 의료, 돌봄, 요양 등 노인을 위한 통합 서비스 연계 제공)
- ⑤ 기타()

문 B8) 귀하는 전문가로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등급판정제도의 개선
- 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형평성
- ③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 ④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규제와 감독체계 개선
- ⑤ 기타()

※ 장기요양보험제도란,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써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 B9) 귀하는 전문가로서 가족이 노인을 보양할 때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제적 지원
- ② 재가요양돌봄서비스 확대
- ③ 간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 ④ 양질의 요양시설 확대
- ⑤ 필요 없음
- ⑥ 기타()

C. 보건의료

문 C1)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낮다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높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 C2) 귀하는 전문가로서 각 보건의료정책의 영역의 지난 3년간(2017-2019)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번호	항목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1)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①	②	③	④	⑤	⑥
2)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①	②	③	④	⑤	⑥
3)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등)	①	②	③	④	⑤	⑥
4)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 확대(자살예방,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5)	의료서비스 질 개선(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 인력 공급 확충, 공공의료 체계 확충 등)	①	②	③	④	⑤	⑥
6)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따른 대응(어린이집, 경로당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7)	보건의료 위해 대응체계 마련(생활용품 및 식의약품 불안 등)	①	②	③	④	⑤	⑥
8)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웰다잉(well-dying),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①	②	③	④	⑤	⑥

C3)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다음의 보건의료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

번호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①	②	③	④	⑤	⑥
2)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①	②	③	④	⑤	⑥
3)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등)	①	②	③	④	⑤	⑥
4)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 확대(자살예방,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5)	의료서비스 질 개선(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 인력 공급 확충, 공공의료 체계 확충 등)	①	②	③	④	⑤	⑥
6)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따른 대응(어린이집, 경로당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7)	보건의료 위해 대응체계 마련(생활용품 및 식의약품 불안 등)	①	②	③	④	⑤	⑥
8)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웰다잉(well-dying),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①	②	③	④	⑤	⑥

문 C4) 귀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 ① 의료 인력 공급 확충
- ② 건강보험 수가 인상
- ③ 공공의료체계 확충
- ④ 의료기관별 서비스 평가 및 결과 공개
- ⑤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
- ⑥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예: 의원급 진료 후 병원급 진료가능)
- ⑦ 기타()

문 C5) 귀하는 전문가로서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 C6)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

- ①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대
- ②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예: 우수인력확보,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기능 강화 등)
- ③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활동 수행 지원에: 신생아집중치료실, 응급병실, 분탄취약기산부인과지원 등)
- ④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등 의료비 지원 확대
- 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거버넌스 일원화(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과기부 등으로 분절되어 있음)
- ⑥ 기타()

문 C7)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의료와 관련한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항목	매우 부정적	부정적	다소 부정적	다소 긍정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
(1)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접근성)	①	②	③	④	⑤	⑥
(2)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보장성)	①	②	③	④	⑤	⑥
(3)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의료의 질)	①	②	③	④	⑤	⑥

문 C8) 귀하는 전문가로서 동네의원 신뢰 및 이용 편리성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의료수준 향상(의사, 간호사 신뢰성 강화)
- ② 의료장비, 시설·환경 개선 및 강화
- ③ 야간, 공휴일 등 진료시간 확대
- ④ 충분한 진료, 상담 및 관리 강화(개인적인 케어)
- ⑤ 상급병원, 타 의료기관과의 연계성 강화
- ⑥ 동네의원 운영 확대
- ⑦ 동네의원 인증평가제
- ⑧ 기타(_____)

문 C9) 귀하는 전문가로서 의료기관이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환자 존중의 인식 개선
- ② 의료 정보 공유 및 제공 확대
- ③ 치료방법 결정에 환자 참여 증대
- ④ 환자의 병원 정책 및 프로그램 참여 확대
- ⑤ 기타(_____)

문 C10) 귀하는 전문가로서 저소득층 의료보장성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상자 확대(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 ② 고가 약, 고가 검사 등의 급여 범위 확대
- ③ 의료비 지원 확대(재난의료비, 긴급의료비 등)
- ④ 기타(_____)

문 C11) 귀하는 전문가로서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재가의료급여 등 지역사회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② 본인부담금 인상 등 비용인식 제고
- ③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은 대상자 사례관리 강화 및 사례관리인력 확충
- ④ 의료기관 부담청구 등 사후 관리시스템 구축
- ⑤ 기타(_____)

문 C12) 귀하는 전문가로서 향후 의료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의료보장성 확대
- ② 재정지출 효율화

문 C13) 귀하는 전문가로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 ② 노인성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 ③ 신기술, 고가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 ④ 저소득층 및 취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 ⑤ 질환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등(중증질환 부담완화, 경증질환 부담강화)
- ⑥ 기타(_____)

문 C14) 귀하는 전문가로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국고 지원 확대
- ② 건강보험료 인상
- ③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 ④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 ⑤ 새로운 자원 마련(의료보장제 등)
- ⑥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비용의식 제고
- ⑦ 기타(_____)

문 C15) 귀하는 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금연, 절주, 운동 및 영양 등과 관련한 건강생활실천
- ② 만성퇴행성 질환과 발병위험요인 관리
- ③ 예방접종, 방역 대책 등 감염질환 관리
- ④ 식중독 등 식품안전, 손상예방, 건강영향평가 등 환경보건 관리
- ⑤ 생애주기별 인구집단(모성, 영유아, 노인인구) 건강관리
- ⑥ 기타(_____)

문 C16) 귀하는 전문가로서 국민건강을 위한 라돈침대, 액상 전자담배 등에 대한 정부 개입(제조 및 판매, 수입규제 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다						안전을 위해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 C17)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증대로 인해 죽음의 질 확보를 위한 좋은 죽음(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귀하는 전문가로서 좋은 죽음(웰다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호스피스(전문완화의료) · 연명의료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
- ② 호스피스(전문완화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질 향상
- ③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 ④ 환자 및 가족 생애말기 준비 지원(유신기부, 장기기증, 장례, 자서전 등)
- ⑤ 호스피스센터의 권역별 확대 등 서비스 제공체계 및 기반강화
- ⑥ 기타 ()

-
- ※ **호스피스(전문완화의료)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경감시킴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서비스입니다.
 -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데 있어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문 C18) 귀하는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동
- ② 청소년
- ③ 청년(20~30대)
- ④ 중장년(40~50대)
- ⑤ 노인(65세 이상)
- ⑥ 기타()

문 C19)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신질환자(우울증, 조현병 등)에 의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대 및 운영지원
- ②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및 운영
- 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등)
- ④ 자살예방 및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확대
- 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⑥ 발병 초기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중재지원
- ⑦ 퇴원 후 지속 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 ⑧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및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 ⑨ 기타()

문 C20) 귀하는 전문가로서 다음의 감염병 예방 관련 과제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초기격리조치, 조기 역학조사 등 확대
- ② 체계적인 감염병 연구 및 전문가 양성
- ③ 국제기구와 공조 강화(WHO, 미국 CDC 등과의 협력 강화)
- ④ 질병관리본부 위상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 ⑤ 무분별한 문병 등 병원문병문화 개선 및 간병 서비스 확충
- ⑥ 대형병원으로의 한지썰림 방지 체계 구축
- ⑦ 공항 등 검역 강화
- ⑧ 기타()

문 C21) 귀하는 전문가로서 의료서비스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보건의료 기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인공지능(AI)(IBM 왓슨, 질병 진단 인공지능 보조의사 시스템 등)
- ② 정보통신기술(ICT)(ICT 기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ICT기반 만성질환 관리 등)
- ③ 사물인터넷(IoT)(이식형 당뇨 조절 시스템(CGM System), 심킬 수 있는 센서 등 IoT 헬스케어)
- ④ 나노바이오기술(Nanobiotechnology)(생체 친화형 심혈관계 나노바이오 소재 사용 등 나노바이오센서, 나노약물전달체)
- ⑤ 기타()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부록 4.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기초분석 결과표

〈부표 4-1〉 국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
전체		(1,000)	100.0
성별	남	(506)	50.6
	여	(494)	49.4
연령	만 19-29세	(170)	17.0
	만 30-39세	(174)	17.4
	만 40-49세	(216)	21.6
	만 50-59세	(227)	22.7
	만 60세 이상	(213)	21.3
가구원수	1명	(77)	7.7
	2명	(176)	17.6
	3명	(277)	27.7
	4명 이상	(470)	47.0
거주지역	광역시	(439)	43.9
	시부	(482)	48.2
	군부	(79)	7.9
소득계층	하층	(67)	6.7
	중하층	(397)	39.7
	중간층	(469)	46.9
	중상(상)층	(67)	6.7
최종 학력	중졸 이하	(58)	5.8
	고졸	(446)	44.6
	대졸 이상	(496)	49.6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719)	71.9
	별거/사별/이혼	(59)	5.9
	미혼(미혼 부·모 포함)	(222)	22.2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355)	35.5
	임시일용직	(33)	3.3
	고용주 및 자영업자	(153)	15.3
	무급가족종사자	(9)	0.9
	실업자	(59)	5.9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391)	39.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343)	88.4
	비정규직	(45)	11.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7)	6.7
	100만원 대	(275)	27.5
	200만원 대	(425)	42.5
	300만원 대	(175)	17.5
	400만원 대	(24)	2.4
	500만원 이상	(34)	3.4

〈부표 4-1〉 성별

(단위: %)

구분		남	여	X ²
전체		50.6	49.4	-
성별	남	100.0	0.0	1000.000 ***
	여	0.0	100.0	
연령	만 19-29세	51.8	48.2	0.574
	만 30-39세	51.1	48.9	
	만 40-49세	50.9	49.1	
	만 50-59세	51.1	48.9	
	만 60세 이상	48.4	51.6	
가구원수	1명	58.4	41.6	2.183
	2명	51.1	48.9	
	3명	49.5	50.5	
	4명 이상	49.8	50.2	
거주지역	광역시	49.7	50.3	0.663
	시부	51.9	48.1	
	군부	48.1	51.9	
소득계층	하층	52.2	47.8	0.112
	중하층	50.1	49.9	
	중간층	50.7	49.3	
	중상(상)층	50.7	49.3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6.2	63.8	8.267 *
	고졸	48.4	51.6	
	대졸 이상	54.2	45.8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48.0	52.0	7.684 *
	별거/사별/이혼	52.5	47.5	
	미혼(미혼 부·모 포함)	58.6	41.4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67.0	33.0	241.720 ***
	임시일용직	51.5	48.5	
	고용주 및 자영업자	78.4	21.6	
	무급가족종사자	11.1	88.9	
	실업자	78.0	22.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1.5	78.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66.8	33.2	1.426
	비정규직	57.8	4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7.8	52.2	4.611
	100만원 대	48.4	51.6	
	200만원 대	53.2	46.8	
	300만원 대	49.1	50.9	
	400만원 대	37.5	62.5	
	500만원 이상	58.8	41.2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2〉 교육수준

(단위: %)

구분		초등 학교 졸	중학교 졸	고등 학교 졸	대학 졸 (전문대학 포함)	대학원 이상	X ²
전체		2.2	3.6	44.6	48.6	1.0	-
성별	남	1.2	3.0	42.7	51.4	1.8	14.622 **
	여	3.2	4.3	46.6	45.7	0.2	
연령	만 19-29세	0.6	0.0	46.5	52.4	0.6	420.565 ***
	만 30-39세	0.0	0.0	11.5	88.5	0.0	
	만 40-49세	0.0	0.0	31.0	66.7	2.3	
	만 50-59세	0.4	1.3	59.9	37.0	1.3	
	만 60세 이상	9.4	15.5	67.6	7.0	0.5	
가구원수	1명	6.5	6.5	35.1	50.6	1.3	156.195 ***
	2명	7.4	11.9	63.6	16.5	0.6	
	3명	0.4	2.9	42.2	54.5	0.0	
	4명 이상	0.6	0.4	40.4	56.8	1.7	
거주지역	광역시	1.4	3.2	43.1	50.6	1.8	36.760 ***
	시부	2.1	3.3	43.4	50.8	0.4	
	군부	7.6	7.6	60.8	24.1	0.0	
소득계층	하층	9.0	9.0	56.7	25.4	0.0	63.895 ***
	중하층	1.8	4.0	51.6	42.6	0.0	
	중간층	1.9	3.0	38.6	54.8	1.7	
	중상(상)층	0.0	0.0	32.8	64.2	3.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7.9	62.1	0.0	0.0	0.0	2000.000 ***
	고졸	0.0	0.0	100.0	0.0	0.0	
	대졸 이상	0.0	0.0	0.0	98.0	2.0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2.1	3.8	45.3	47.7	1.1	66.368 ***
	별거/사별/이혼	8.5	15.3	59.3	16.9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0.9	0.0	38.3	59.9	0.9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0	0.3	19.2	78.6	2.0	230.667 ***
	임시일용직	0.0	3.0	69.7	27.3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3.9	5.9	50.3	38.6	1.3	
	무급가족종사자	11.1	11.1	66.7	11.1	0.0	
	실업자	1.7	6.8	59.3	32.2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3.6	5.1	60.6	30.4	0.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0	0.3	18.7	79.0	2.0	41.895
	비정규직	0.0	2.2	60.0	37.8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5	9.0	56.7	29.9	0.0	156.784 ***
	100만원 대	4.0	6.5	55.3	33.5	0.7	
	200만원 대	1.6	2.4	43.5	52.5	0.0	
	300만원 대	0.6	0.6	35.4	61.7	1.7	
	400만원 대	0.0	4.2	12.5	83.3	0.0	
	500만원 이상	0.0	0.0	17.6	67.6	14.7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3〉 혼인상태

(단위: %)

구분		유배우	별거	사별	이혼	미혼 (미혼 부모 포함)	사실혼	X ²
전체		71.4	0.7	2.9	2.3	22.2	0.5	-
성별	남	68.0	1.2	2.0	3.0	25.7	0.2	17.605 **
	여	74.9	0.2	3.8	1.6	18.6	0.8	
연령	만 19-29세	3.5	0.0	0.0	1.2	94.7	0.6	747.648 ***
	만 30-39세	69.5	0.0	0.0	2.3	26.4	1.7	
	만 40-49세	94.0	0.5	0.9	0.9	3.7	0.0	
	만 50-59세	91.6	1.3	1.3	3.5	2.2	0.0	
	만 60세 이상	82.6	1.4	11.3	3.3	0.9	0.5	
가구원수	1명	2.6	3.9	24.7	14.3	53.2	1.3	326.544 ***
	2명	86.9	1.7	3.4	0.6	6.8	0.6	
	3명	75.8	0.0	0.4	1.4	21.3	1.1	
	4명 이상	74.3	0.2	0.6	1.5	23.4	0.0	
거주지역	광역시	71.5	0.5	1.8	3.2	22.8	0.2	17.544 +
	시부	71.2	1.0	3.1	1.2	22.6	0.8	
	군부	72.2	0.0	7.6	3.8	16.5	0.0	
소득계층	하층	50.7	0.0	10.4	13.4	25.4	0.0	75.022 ***
	중하층	71.3	1.3	4.3	1.8	20.9	0.5	
	중간층	75.1	0.2	1.1	1.3	22.0	0.4	
	중상(상)층	67.2	1.5	0.0	1.5	28.4	1.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72.4	0.0	20.7	3.4	3.4	0.0	100.969 ***
	고졸	72.4	1.3	3.6	2.9	19.1	0.7	
	대졸 이상	70.4	0.2	0.2	1.6	27.2	0.4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99.3	0.0	0.0	0.0	0.0	0.7	2000.000 ***
	별거/사별/이혼	0.0	11.9	49.2	39.0	0.0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0.0	0.0	0.0	0.0	100.0	0.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67.0	0.3	0.8	2.3	28.7	0.8	95.371 ***
	임시일용직	45.5	0.0	6.1	12.1	36.4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89.5	2.0	2.6	2.0	3.9	0.0	
	무급가족종사자	88.9	0.0	0.0	11.1	0.0	0.0	
	실업자	62.7	3.4	1.7	5.1	27.1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71.4	0.3	4.9	1.0	22.0	0.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68.5	0.3	0.9	2.0	27.4	0.9	23.932 ***
	비정규직	40.0	0.0	4.4	11.1	44.4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0.1	0.0	9.0	1.5	19.4	0.0	50.097 **
	100만원 대	77.1	0.0	5.1	3.3	14.5	0.0	
	200만원 대	69.9	0.7	1.6	2.6	24.2	0.9	
	300만원 대	68.0	1.7	0.6	0.6	28.6	0.6	
	400만원 대	62.5	0.0	4.2	4.2	29.2	0.0	
	500만원 이상	70.6	2.9	0.0	0.0	26.5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4〉 경제활동 상태 (계속)

(단위: %)

구분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임금 근로자(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포함)	고용주
전체		35.5	2.8	0.5	0.9
성별	남	47.0	2.4	1.0	1.8
	여	23.7	3.2	0.0	0.0
연령	만 19-29세	39.4	4.1	0.0	0.0
	만 30-39세	62.1	1.1	0.0	0.0
	만 40-49세	47.2	3.2	0.5	0.5
	만 50-59세	30.4	3.1	0.0	1.8
	만 60세 이상	4.2	2.3	1.9	1.9
가구원수	1명	50.6	6.5	2.6	1.3
	2명	14.2	3.4	1.1	1.1
	3명	38.3	2.5	0.0	1.1
	4명 이상	39.4	2.1	0.2	0.6
거주지역	광역시	38.3	2.3	0.2	0.5
	시부	36.7	2.9	0.2	1.0
	군부	12.7	5.1	3.8	2.5
소득계층	하층	17.9	9.0	1.5	1.5
	중하층	31.0	2.8	1.0	1.0
	중간층	40.5	2.1	0.0	0.6
	중상(상)층	44.8	1.5	0.0	1.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7	0.0	1.7	1.7
	고졸	15.2	4.3	0.9	1.3
	대졸 이상	57.7	1.8	0.0	0.4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33.5	1.7	0.4	1.1
	별거/사별/이혼	20.3	6.8	3.4	1.7
	미혼(미혼 부·모 포함)	45.9	5.4	0.0	0.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00.0	0.0	0.0	0.0
	임시일용직	0.0	84.8	15.2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0.0	0.0	0.0	5.9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0	0.0
	실업자	0.0	0.0	0.0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0.0	0.0	0.0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00.0	0.0	0.0	0.0
	비정규직	26.7	62.2	11.1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9.9	3.0	1.5	3.0
	100만원 대	19.3	2.5	1.5	0.4
	200만원 대	37.9	3.3	0.0	1.4
	300만원 대	48.6	2.3	0.0	0.0
	400만원 대	62.5	4.2	0.0	0.0
	500만원 이상	61.8	0.0	0.0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5〉 경제활동 상태

(단위: %)

구분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X ²
전체		14.4	0.9	5.9	39.1	-
성별	남	21.9	0.2	9.1	16.6	249.042 ***
	여	6.7	1.6	2.6	62.1	
연령	만 19-29세	0.0	0.6	7.1	48.8	229.520 ***
	만 30-39세	8.0	0.0	2.9	25.9	
	만 40-49세	14.4	0.9	0.9	32.4	
	만 50-59세	22.0	1.3	6.6	34.8	
	만 60세 이상	23.0	1.4	11.7	53.5	
가구원수	1명	10.4	0.0	3.9	24.7	75.495 ***
	2명	22.7	1.7	9.1	46.6	
	3명	10.8	0.0	6.9	40.4	
	4명 이상	14.0	1.3	4.5	37.9	
거주지역	광역시	12.8	0.9	6.4	38.7	52.413 ***
	시부	13.7	0.6	6.0	38.8	
	군부	27.8	2.5	2.5	43.0	
소득계층	하층	10.4	0.0	13.4	46.3	55.901 ***
	중하층	12.6	1.0	7.6	43.1	
	중간층	17.3	1.1	4.1	34.3	
	중상(상)층	9.0	0.0	1.5	41.8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4.1	3.4	8.6	58.6	232.003 ***
	고졸	15.9	1.3	7.8	53.1	
	대졸 이상	11.9	0.2	3.8	24.2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7.9	1.1	5.1	39.1	70.643 ***
	별거/사별/이혼	15.3	1.7	10.2	40.7	
	미혼(미혼 부·모 포함)	2.7	0.0	7.2	38.7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0	0.0	0.0	0.0	5000.000 ***
	임시일용직	0.0	0.0	0.0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94.1	0.0	0.0	0.0	
	무급가족종사자	0.0	100.0	0.0	0.0	
	실업자	0.0	0.0	100.0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0.0	0.0	0.0	1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0	0.0	0.0	0.0	274.915 ***
	비정규직	0.0	0.0	0.0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5	0.0	7.5	50.7	104.524 ***
	100만원 대	15.3	0.4	8.4	52.4	
	200만원 대	17.2	1.2	5.6	33.4	
	300만원 대	12.6	1.7	2.3	32.6	
	400만원 대	8.3	0.0	4.2	20.8	
	500만원 이상	5.9	0.0	5.9	26.5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6〉 직업안정성

(단위: %)

구분		비해당	정규직	비정규직	X ²
전체		64.5	34.3	1.2	-
성별	남	53.0	45.3	1.8	59.842 ***
	여	76.3	23.1	0.6	
연령	만 19-29세	60.6	35.3	4.1	176.000 ***
	만 30-39세	37.9	60.3	1.7	
	만 40-49세	52.8	46.8	0.5	
	만 50-59세	69.6	30.0	0.4	
	만 60세 이상	95.8	4.2	0.0	
가구원수	1명	49.4	46.8	3.9	51.922 ***
	2명	85.8	13.6	0.6	
	3명	61.7	37.9	0.4	
	4명 이상	60.6	37.9	1.5	
거주지역	광역시	61.7	36.7	1.6	20.426 ***
	시부	63.3	35.7	1.0	
	군부	87.3	12.7	0.0	
소득계층	하층	82.1	14.9	3.0	27.086 ***
	중하층	69.0	29.7	1.3	
	중간층	59.5	39.9	0.6	
	중상(상)층	55.2	41.8	3.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98.3	1.7	0.0	216.227 ***
	고졸	84.8	14.3	0.9	
	대졸 이상	42.3	56.0	1.6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66.5	33.1	0.4	29.479 ***
	별거/사별/이혼	79.7	18.6	1.7	
	미혼(미혼 부·모 포함)	54.1	42.3	3.6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0	96.6	3.4	1000.000 ***
	임시일용직	100.0	0.0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100.0	0.0	0.0	
	무급가족종사자	100.0	0.0	0.0	
	실업자	100.0	0.0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100.0	0.0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0	100.0	0.0	388.000 ***
	비정규직	73.3	0.0	26.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0.1	26.9	3.0	73.542 ***
	100만원 대	80.7	18.9	0.4	
	200만원 대	62.1	36.0	1.9	
	300만원 대	51.4	48.6	0.0	
	400만원 대	37.5	62.5	0.0	
	500만원 이상	38.2	58.8	2.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7〉 귀댁에 다음의 가구원이 있습니까? (노인)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X ²
전체		17.2	82.8	-
성별	남	16.0	84.0	1.022
	여	18.4	81.6	
연령	만 19-29세	4.7	95.3	282.994 ***
	만 30-39세	4.6	95.4	
	만 40-49세	5.1	94.9	
	만 50-59세	11.9	88.1	
	만 60세 이상	55.4	44.6	
가구원수	1명	16.9	83.1	164.564 ***
	2명	50.0	50.0	
	3명	10.8	89.2	
	4명 이상	8.7	91.3	
거주지역	광역시	15.5	84.5	5.785 +
	시부	17.2	82.8	
	군부	26.6	73.4	
소득계층	하층	25.4	74.6	20.624 ***
	중하층	22.2	77.8	
	중간층	13.4	86.6	
	중상(상)층	6.0	94.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67.2	32.8	149.262 ***
	고졸	22.4	77.6	
	대졸 이상	6.7	93.3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8.4	81.6	30.281 ***
	별거/사별/이혼	37.3	62.7	
	미혼(미혼 부·모 포함)	8.1	91.9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4.5	95.5	68.395 ***
	임시일용직	27.3	72.7	
	고용주 및 자영업자	20.3	79.7	
	무급가족종사자	44.4	55.6	
	실업자	30.5	69.5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4.0	76.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4.4	95.6	21.024 ***
	비정규직	22.2	77.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1.3	68.7	65.372 ***
	100만원 대	29.5	70.5	
	200만원 대	13.4	86.6	
	300만원 대	6.3	93.7	
	400만원 대	0.0	100.0	
	500만원 이상	5.9	94.1	

주: 1) +p<0.1, *p<0.05, **p<0.01, ***p<0.001

2) 노인 : 만 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기준 1954년 10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부표 4-8〉 귀댁에 다음의 가구원이 있습니까? (장애인)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X ²
전체		1.2	98.8	-
성별	남	2.0	98.0	5.206 *
	여	0.4	99.6	
연령	만 19-29세	0.0	100.0	12.882 *
	만 30-39세	0.6	99.4	
	만 40-49세	0.0	100.0	
	만 50-59세	3.1	96.9	
	만 60세 이상	1.9	98.1	
가구원수	1명	2.6	97.4	3.036
	2명	1.7	98.3	
	3명	1.4	98.6	
	4명 이상	0.6	99.4	
거주지역	광역시	0.9	99.1	1.499
	시부	1.2	98.8	
	군부	2.5	97.5	
소득계층	하층	3.0	97.0	3.416
	중하층	1.5	98.5	
	중간층	0.9	99.1	
	중상(상)층	0.0	10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0	100.0	0.784
	고졸	1.3	98.7	
	대졸 이상	1.2	98.8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3	98.7	0.306
	별거/사별/이혼	1.7	98.3	
	미혼(미혼 부·모 포함)	0.9	99.1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1	98.9	4.077
	임시일용직	3.0	97.0	
	고용주 및 자영업자	1.3	98.7	
	무급가족종사자	0.0	100.0	
	실업자	3.4	96.6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0.8	99.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2	98.8	0.349
	비정규직	2.2	97.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100.0	10.407 *
	100만원 대	1.8	98.2	
	200만원 대	1.2	98.8	
	300만원 대	0.0	100.0	
	400만원 대	0.0	100.0	
	500만원 이상	5.9	94.1	

주: 1) +p<0.1, *p<0.05, **p<0.01, ***p<0.001

2) 장애인 : 등록장애인(1-6등급) 기준이며, 국가보훈처 등록장애인(7-15등급)은 제외함

〈부표 4-9〉 귀댁에 다음의 가구원이 있습니까? (아동)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X ²
전체		32.0	68.0	-
성별	남	30.2	69.8	1.463
	여	33.8	66.2	
연령	만 19-29세	7.1	92.9	494.983 ***
	만 30-39세	62.1	37.9	
	만 40-49세	80.6	19.4	
	만 50-59세	9.3	90.7	
	만 60세 이상	2.3	97.7	
가구원수	1명	0.0	100.0	154.232 ***
	2명	1.1	98.9	
	3명	39.0	61.0	
	4명 이상	44.7	55.3	
거주지역	광역시	31.7	68.3	3.838
	시부	33.8	66.2	
	군부	22.8	77.2	
소득계층	하층	13.4	86.6	15.518 **
	중하층	29.7	70.3	
	중간층	36.0	64.0	
	중상(상)층	35.8	64.2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4	96.6	134.795 ***
	고졸	16.8	83.2	
	대졸 이상	49.0	51.0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42.8	57.2	138.319 ***
	별거/사별/이혼	6.8	93.2	
	미혼(미혼 부·모 포함)	3.6	96.4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45.6	54.4	60.281 ***
	임시일용직	9.1	90.9	
	고용주 및 자영업자	24.2	75.8	
	무급가족종사자	33.3	66.7	
	실업자	8.5	91.5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8.1	71.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46.9	53.1	23.564 ***
	비정규직	8.9	91.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9.9	70.1	4.558
	100만원 대	28.4	71.6	
	200만원 대	34.6	65.4	
	300만원 대	30.3	69.7	
	400만원 대	41.7	58.3	
	500만원 이상	35.3	64.7	

주: 1) +p<0.1, *p<0.05, **p<0.01, ***p<0.001

2) 아동: 만18세 미만으로 주민등록기준 2001년 10월 31일 이후 출생한 자

〈부표 4-10〉 주관적 소득계층

(단위: %)

구분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X ²
전체		6.7	39.7	46.9	6.6	0.1	-
성별	남	6.9	39.3	47.0	6.5	0.2	1.097
	여	6.5	40.1	46.8	6.7	0.0	
연령	만 19-29세	3.5	38.2	47.6	10.6	0.0	57.885 ***
	만 30-39세	6.3	43.1	47.1	3.4	0.0	
	만 40-49세	3.7	33.3	55.1	7.9	0.0	
	만 50-59세	5.7	35.7	49.8	8.8	0.0	
	만 60세 이상	13.6	48.8	34.7	2.3	0.5	
가구원수	1명	26.0	51.9	19.5	2.6	0.0	160.313 ***
	2명	11.4	56.3	31.8	0.0	0.6	
	3명	6.9	41.5	48.0	3.6	0.0	
	4명 이상	1.7	30.4	56.4	11.5	0.0	
거주지역	광역시	3.0	36.7	50.6	9.8	0.0	41.985 ***
	시부	8.7	44.0	43.4	3.7	0.2	
	군부	15.2	30.4	48.1	6.3	0.0	
소득계층	하층	100.0	0.0	0.0	0.0	0.0	3000.000 ***
	중하층	0.0	100.0	0.0	0.0	0.0	
	중간층	0.0	0.0	100.0	0.0	0.0	
	중상(상)층	0.0	0.0	0.0	98.5	1.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0.7	39.7	39.7	0.0	0.0	54.989 ***
	고졸	8.5	46.0	40.6	4.9	0.0	
	대졸 이상	3.4	34.1	53.4	8.9	0.2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4.7	39.6	49.2	6.3	0.1	55.267 ***
	별거/사별/이혼	27.1	49.2	20.3	3.4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7.7	37.4	46.4	8.6	0.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3.4	34.6	53.5	8.5	0.0	56.987 ***
	임시일용직	21.2	45.5	30.3	3.0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5.2	35.3	54.9	3.9	0.7	
	무급가족종사자	0.0	44.4	55.6	0.0	0.0	
	실업자	15.3	50.8	32.2	1.7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7.9	43.7	41.2	7.2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2.9	34.4	54.5	8.2	0.0	30.021 ***
	비정규직	20.0	44.4	28.9	6.7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9.4	56.7	23.9	0.0	0.0	175.848 ***
	100만원 대	14.2	49.5	33.5	2.9	0.0	
	200만원 대	3.3	39.5	50.8	6.1	0.2	
	300만원 대	0.6	27.4	62.9	9.1	0.0	
	400만원 대	0.0	16.7	62.5	20.8	0.0	
	500만원 이상	0.0	8.8	58.8	32.4	0.0	

주: 1) +p<0.1, *p<0.05, **p<0.01, ***p<0.001

2) 아동: 만18세 미만으로 주민등록기준 2001년 10월 31일 이후 출생한 자

〈부표 4-11〉 귀하는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계속)

(단위: %)

구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전체		0.2	0.5	0.8	1.4	2.5	10.2
성별	남	0.2	0.8	1.0	1.4	2.6	9.1
	여	0.2	0.2	0.6	1.4	2.4	11.3
연령	만 19-29세	0.0	0.0	0.6	0.6	2.4	8.2
	만 30-39세	0.0	1.7	0.0	1.7	2.3	8.6
	만 40-49세	0.0	0.0	0.0	1.9	2.3	7.4
	만 50-59세	0.9	0.4	1.3	1.3	3.1	11.5
	만 60세 이상	0.0	0.5	1.9	1.4	2.3	14.6
가구원수	1명	0.0	1.3	2.6	2.6	2.6	11.7
	2명	1.1	1.1	1.7	1.1	4.5	10.2
	3명	0.0	0.0	0.7	1.8	1.1	13.0
	4명 이상	0.0	0.4	0.2	1.1	2.6	8.3
거주지역	광역시	0.0	0.0	0.0	0.2	2.3	8.0
	시부	0.4	0.4	0.8	2.3	2.3	10.4
	군부	0.0	3.8	5.1	2.5	5.1	21.5
소득계층	하층	1.5	3.0	9.0	3.0	7.5	14.9
	중하층	0.0	0.5	0.5	2.5	3.8	12.3
	중간층	0.2	0.2	0.0	0.2	1.1	9.0
	중상(상)층	0.0	0.0	0.0	1.5	0.0	1.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7	1.7	8.6	1.7	3.4	15.5
	고졸	0.2	0.4	0.2	1.3	2.5	11.0
	대졸 이상	0.0	0.4	0.4	1.4	2.4	8.9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0.3	0.3	0.7	1.3	2.1	10.6
	별거/사별/이혼	0.0	1.7	1.7	3.4	6.8	11.9
	미혼(미혼 부·모 포함)	0.0	0.9	0.9	1.4	2.7	8.6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0	0.3	0.0	0.3	2.5	7.0
	임시일용직	0.0	0.0	3.0	6.1	6.1	12.1
	고용주 및 자영업자	0.7	0.7	2.0	0.7	1.3	15.0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0	0.0	0.0	0.0
	실업자	0.0	1.7	0.0	5.1	3.4	16.9
	비경제활동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0.3	0.5	1.0	1.8	2.6	10.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0	0.3	0.0	0.3	2.3	7.0
	비정규직	0.0	0.0	2.2	4.4	6.7	11.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5	1.5	4.5	0.0	3.0	9.0
	100만원 대	0.0	0.4	0.7	2.9	3.6	12.7
	200만원 대	0.2	0.5	0.5	1.2	2.4	9.9
	300만원 대	0.0	0.6	0.6	0.0	1.7	8.6
	400만원 대	0.0	0.0	0.0	4.2	0.0	8.3
	500만원 이상	0.0	0.0	0.0	0.0	0.0	5.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2〉 귀하는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단위: %)

구분		6점	7점	8점	9점	10점	X ²
전체		21.8	33.8	19.8	7.2	1.8	-
성별	남	20.8	35.2	19.6	6.9	2.6	8.041
	여	22.9	32.4	20.0	7.5	1.0	
연령	만 19-29세	27.1	30.0	20.6	9.4	1.2	83.022 ***
	만 30-39세	19.5	29.3	20.7	14.9	1.1	
	만 40-49세	19.0	43.5	16.7	6.5	2.8	
	만 50-59세	18.1	32.2	24.7	3.1	3.5	
	만 60세 이상	26.3	32.4	16.4	4.2	0.0	
가구원수	1명	28.6	23.4	19.5	7.8	0.0	59.284 **
	2명	24.4	35.2	18.2	2.3	0.0	
	3명	19.1	32.5	22.7	8.3	0.7	
	4명 이상	21.3	35.7	18.7	8.3	3.4	
거주지역	광역시	20.5	34.6	22.8	10.0	1.6	94.091
	시부	21.6	34.2	19.5	5.8	2.3	
	군부	30.4	26.6	5.1	0.0	0.0	
소득계층	하층	13.4	22.4	20.9	3.0	1.5	185.196 ***
	중하층	28.7	29.7	16.9	4.5	0.5	
	중간층	19.0	40.1	19.8	8.3	2.1	
	중상(상)층	9.0	25.4	35.8	19.4	7.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2.8	31.0	1.7	1.7	0.0	97.645 ***
	고졸	23.5	34.8	20.6	4.9	0.4	
	대졸 이상	19.0	33.3	21.2	9.9	3.2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20.6	35.3	19.5	7.1	2.4	22.846
	별거/사별/이혼	25.4	30.5	13.6	5.1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24.8	29.7	22.5	8.1	0.5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20.3	32.7	21.7	10.4	4.8	90.540 ***
	임시일용직	15.2	45.5	12.1	0.0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24.2	34.6	17.0	3.9	0.0	
	무급가족종사자	33.3	44.4	22.2	0.0	0.0	
	실업자	27.1	22.0	15.3	8.5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1.7	35.0	20.5	6.1	0.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20.7	32.4	21.6	10.5	5.0	28.748 ***
	비정규직	13.3	44.4	15.6	2.2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1.3	38.8	9.0	1.5	0.0	153.116 ***
	100만원 대	28.4	30.5	17.1	3.3	0.4	
	200만원 대	20.2	34.6	21.2	8.7	0.7	
	300만원 대	15.4	40.0	20.0	8.6	4.6	
	400만원 대	20.8	25.0	12.5	25.0	4.2	
	500만원 이상	2.9	14.7	50.0	11.8	14.7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3〉 귀하는 우리나라의 소득 및 재산의 분배, 그리고 기회가 얼마나 평등(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매우 불평등 하다	불평등 하다	다소 불평등 하다	다소 평등 하다	평등 하다	매우 평등 하다	χ^2
전체		1.5	17.5	37.8	31.7	8.6	2.9	-
성별	남	1.2	18.6	37.4	32.6	6.9	3.4	5.794
	여	1.8	16.4	38.3	30.8	10.3	2.4	
연령	만 19-29세	1.2	21.2	37.6	25.9	8.8	5.3	34.825 *
	만 30-39세	1.7	20.1	39.1	25.3	8.6	5.2	
	만 40-49세	1.4	15.7	35.2	34.7	9.7	3.2	
	만 50-59세	2.6	17.6	34.8	33.0	11.0	0.9	
	만 60세 이상	0.5	14.1	42.7	37.1	4.7	0.9	
가구원수	1명	1.3	14.3	36.4	37.7	6.5	3.9	18.823
	2명	2.8	20.5	36.9	34.7	4.0	1.1	
	3명	0.7	20.6	36.8	29.6	9.0	3.2	
	4명 이상	1.5	15.1	38.9	30.9	10.4	3.2	
거주지역	광역시	0.0	14.4	38.0	36.7	8.2	2.7	59.172 ***
	시부	2.7	21.8	38.0	23.7	10.4	3.5	
	군부	2.5	8.9	35.4	53.2	0.0	0.0	
소득계층	하층	4.5	28.4	23.9	35.8	7.5	0.0	85.018 ***
	중하층	2.3	21.4	42.6	23.4	6.5	3.8	
	중간층	0.6	14.3	39.2	33.7	9.2	3.0	
	중상(상)층	0.0	6.0	13.4	62.7	17.9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7	15.5	37.9	44.8	0.0	0.0	17.717 +
	고졸	1.3	18.2	38.6	31.4	9.0	1.6	
	대졸 이상	1.6	17.1	37.1	30.4	9.3	4.4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5	16.3	37.8	32.5	9.2	2.6	14.079
	별거/사별/이혼	1.7	11.9	32.2	40.7	11.9	1.7	
	미혼(미혼 부·모 포함)	1.4	23.0	39.2	26.6	5.9	4.1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8	14.4	38.6	29.3	11.0	5.9	44.203 *
	임시일용직	0.0	24.2	36.4	36.4	3.0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3.3	19.0	37.3	37.3	3.3	0.0	
	무급가족종사자	0.0	11.1	22.2	55.6	11.1	0.0	
	실업자	1.7	20.3	37.3	33.9	3.4	3.4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1.5	18.9	37.9	30.4	9.7	1.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9	14.0	38.5	29.4	11.1	6.1	7.910
	비정규직	0.0	24.4	37.8	33.3	4.4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0	49.3	31.3	14.9	1.5	0.0	130.668 ***
	100만원 대	2.2	17.8	36.7	36.4	6.5	0.4	
	200만원 대	1.4	14.4	41.2	29.6	11.5	1.9	
	300만원 대	0.6	16.0	35.4	33.1	5.7	9.1	
	400만원 대	0.0	8.3	41.7	29.2	4.2	16.7	
	500만원 이상	0.0	5.9	26.5	47.1	20.6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4〉 귀하는 우리나라의 소득 및 재산의 분배, 그리고 기회가 얼마나 평등(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다소 불평등하다	다소 평등하다	평등하다	매우 평등하다	X ²
전체		1.7	15.9	32.0	37.3	10.5	2.6	-
성별	남	1.4	17.8	30.0	38.3	10.3	2.2	5.188
	여	2.0	14.0	34.0	36.2	10.7	3.0	
연령	만 19~29세	2.9	18.2	28.2	35.3	14.7	0.6	25.830
	만 30~39세	1.7	19.5	34.5	32.2	10.9	1.1	
	만 40~49세	1.4	14.4	33.3	37.0	11.6	2.3	
	만 50~59세	2.2	13.2	30.0	41.0	9.7	4.0	
	만 60세 이상	0.5	15.5	33.8	39.4	6.6	4.2	
가구원수	1명	0.0	14.3	29.9	50.6	5.2	0.0	28.307 *
	2명	3.4	17.6	32.4	36.9	6.8	2.8	
	3명	1.4	15.9	36.5	36.5	7.6	2.2	
	4명 이상	1.5	15.5	29.6	35.7	14.5	3.2	
거주지역	광역시	1.1	11.8	33.3	36.9	13.2	3.6	36.020 ***
	시부	2.3	19.9	31.7	34.4	9.5	2.1	
	군부	1.3	13.9	26.6	57.0	1.3	0.0	
소득계층	하층	6.0	23.9	19.4	40.3	1.5	9.0	100.584 ***
	중하층	2.3	20.9	37.3	29.7	8.3	1.5	
	중간층	0.9	12.4	31.8	42.0	10.9	2.1	
	중상(상)층	0.0	3.0	14.9	46.3	29.9	6.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7	22.4	41.4	29.3	5.2	0.0	11.703
	고졸	1.6	16.8	29.6	38.8	9.9	3.4	
	대졸 이상	1.8	14.3	33.1	36.9	11.7	2.2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5	14.6	33.0	36.7	10.6	3.6	18.014 +
	별거/사별/이혼	0.0	15.3	28.8	45.8	10.2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2.7	20.3	29.7	36.9	10.4	0.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8	10.7	34.4	40.3	12.4	1.4	57.865 ***
	임시일용직	3.0	21.2	30.3	39.4	3.0	3.0	
	고용주 및 자영업자	3.3	22.2	27.5	38.6	8.5	0.0	
	무급가족종사자	0.0	11.1	22.2	66.7	0.0	0.0	
	실업자	3.4	18.6	27.1	35.6	3.4	11.9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1.5	17.4	32.7	33.5	11.5	3.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9	10.2	34.4	40.2	12.8	1.5	9.791 +
	비정규직	2.2	22.2	31.1	40.0	2.2	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5	37.3	37.3	13.4	4.5	0.0	77.382 ***
	100만원 대	2.2	14.9	35.3	36.0	8.4	3.3	
	200만원 대	1.2	14.4	30.4	40.7	11.8	1.6	
	300만원 대	0.6	15.4	32.6	37.1	10.3	4.0	
	400만원 대	0.0	16.7	12.5	50.0	20.8	0.0	
	500만원 이상	0.0	2.9	26.5	44.1	17.6	8.8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5〉 귀하는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매우 낮다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높다	매우 높다	χ^2
전체		0.3	1.5	17.2	49.7	26.1	5.2	-
성별	남	0.0	2.0	16.6	49.2	27.5	4.7	6.034
	여	0.6	1.0	17.8	50.2	24.7	5.7	
연령	만 19-29세	0.6	1.2	20.6	52.9	21.2	3.5	21.725
	만 30-39세	0.6	0.6	17.2	47.1	28.7	5.7	
	만 40-49세	0.5	0.9	17.6	53.2	21.3	6.5	
	만 50-59세	0.0	3.1	12.8	49.8	28.6	5.7	
	만 60세 이상	0.0	1.4	18.8	45.5	30.0	4.2	
가구원수	1명	0.0	5.2	13.0	51.9	26.0	3.9	22.100
	2명	0.0	1.7	15.9	50.6	30.1	1.7	
	3명	0.7	1.1	19.1	49.8	24.9	4.3	
	4명 이상	0.2	1.1	17.2	48.9	25.3	7.2	
거주지역	광역시	0.0	0.5	17.1	46.0	30.1	6.4	33.267 ***
	시부	0.6	2.3	16.2	50.6	25.3	5.0	
	군부	0.0	2.5	24.1	64.6	8.9	0.0	
소득계층	하층	0.0	6.0	19.4	47.8	22.4	4.5	37.539 **
	중하층	0.5	1.5	19.4	49.9	24.2	4.5	
	중간층	0.2	0.9	15.8	51.8	27.1	4.3	
	중상(상)층	0.0	1.5	11.9	35.8	34.3	16.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0	5.2	19.0	56.9	15.5	3.4	15.726
	고졸	0.7	1.3	18.4	48.7	26.7	4.3	
	대졸 이상	0.0	1.2	15.9	49.8	26.8	6.3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0.4	1.0	16.8	48.0	27.7	6.1	36.275 ***
	별거/사별/이혼	0.0	8.5	8.5	54.2	22.0	6.8	
	미혼(미혼 부·모 포함)	0.0	1.4	20.7	54.1	22.1	1.8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6	0.6	15.8	49.0	26.8	7.3	27.579
	임시일용직	0.0	3.0	24.2	51.5	21.2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0.0	3.9	13.1	49.0	31.4	2.6	
	무급가족종사자	0.0	0.0	22.2	44.4	22.2	11.1	
	실업자	0.0	1.7	22.0	55.9	18.6	1.7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0.3	1.3	18.7	49.6	25.1	5.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6	0.6	15.7	49.0	26.5	7.6	6.171
	비정규직	0.0	2.2	22.2	51.1	24.4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3.0	11.9	38.8	46.3	0.0	84.002 ***
	100만원 대	0.4	2.9	20.0	49.1	24.4	3.3	
	200만원 대	0.5	0.9	18.8	50.8	24.7	4.2	
	300만원 대	0.0	0.6	11.4	56.6	24.0	7.4	
	400만원 대	0.0	0.0	20.8	54.2	16.7	8.3	
	500만원 이상	0.0	0.0	11.8	23.5	35.3	29.4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6〉 귀하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χ^2
전체		0.1	2.1	18.8	50.8	24.5	3.7	-
성별	남	0.0	1.6	18.0	52.0	25.3	3.2	4.046
	여	0.2	2.6	19.6	49.6	23.7	4.3	
연령	만 19~29세	0.0	1.2	24.1	51.2	19.4	4.1	18.796
	만 30~39세	0.0	0.6	16.7	52.3	24.7	5.7	
	만 40~49세	0.5	2.8	19.0	50.0	25.0	2.8	
	만 50~59세	0.0	3.1	18.1	47.1	28.6	3.1	
	만 60세 이상	0.0	2.3	16.9	54.0	23.5	3.3	
가구원수	1명	0.0	3.9	15.6	55.8	19.5	5.2	11.235
	2명	0.0	1.7	18.8	54.5	22.7	2.3	
	3명	0.0	2.5	18.1	53.1	22.0	4.3	
	4명 이상	0.2	1.7	19.8	47.2	27.4	3.6	
거주지역	광역시	0.0	0.9	17.5	46.7	30.5	4.3	33.379 ***
	시부	0.2	2.9	19.3	52.1	21.8	3.7	
	군부	0.0	3.8	22.8	65.8	7.6	0.0	
소득계층	하층	0.0	6.0	29.9	44.8	10.4	9.0	40.783 ***
	중하층	0.3	2.0	18.9	52.1	23.9	2.8	
	중간층	0.0	1.7	17.9	52.7	23.9	3.8	
	중상(상)층	0.0	1.5	13.4	35.8	46.3	3.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0	5.2	20.7	62.1	12.1	0.0	12.935
	고졸	0.2	2.2	19.3	50.2	24.4	3.6	
	대졸 이상	0.0	1.6	18.1	50.0	26.0	4.2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0.1	1.9	18.2	49.8	26.3	3.6	16.311 +
	별거/사별/이혼	0.0	6.8	11.9	54.2	25.4	1.7	
	미혼(미혼 부·모 포함)	0.0	1.4	22.5	53.2	18.5	4.5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0	1.4	17.7	53.2	22.8	4.8	33.026
	임시일용직	0.0	3.0	21.2	51.5	24.2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0.0	3.9	15.7	49.0	31.4	0.0	
	무급가족종사자	0.0	0.0	22.2	55.6	22.2	0.0	
	실업자	0.0	3.4	22.0	47.5	15.3	11.9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0.3	1.8	20.2	49.6	24.8	3.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0	1.5	17.8	53.6	22.2	5.0	3.444
	비정규직	0.0	2.2	20.0	48.9	28.9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1.5	13.4	47.8	37.3	0.0	53.634 ***
	100만원 대	0.4	2.2	20.0	52.4	22.5	2.5	
	200만원 대	0.0	2.6	19.3	51.3	23.5	3.3	
	300만원 대	0.0	1.7	16.6	52.6	22.9	6.3	
	400만원 대	0.0	0.0	33.3	37.5	8.3	20.8	
	500만원 이상	0.0	0.0	14.7	38.2	47.1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7〉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음의 복지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일자리 지원 확대(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χ^2
전체		1.4	11.6	28.5	35.0	19.2	4.3	-
성별	남	1.8	13.0	25.9	35.4	19.4	4.5	5.538
	여	1.0	10.1	31.2	34.6	19.0	4.0	
연령	만 19-29세	2.9	11.2	37.1	27.1	18.8	2.9	32.655 *
	만 30-39세	1.1	6.9	28.2	38.5	19.5	5.7	
	만 40-49세	0.9	12.5	25.0	38.4	17.1	6.0	
	만 50-59세	0.4	12.8	24.7	34.8	25.1	2.2	
	만 60세 이상	1.9	13.6	29.6	35.2	15.0	4.7	
가구원수	1명	1.3	7.8	31.2	35.1	22.1	2.6	31.343 **
	2명	4.0	14.8	25.0	38.1	13.1	5.1	
	3명	0.0	10.1	31.0	39.4	15.5	4.0	
	4명 이상	1.3	11.9	27.9	31.3	23.2	4.5	
거주지역	광역시	1.1	8.7	25.3	36.0	22.6	6.4	33.375 ***
	시부	1.0	13.3	32.0	34.2	16.4	3.1	
	군부	5.1	17.7	25.3	34.2	17.7	0.0	
소득계층	하층	4.5	14.9	29.9	29.9	17.9	3.0	34.009 **
	중하층	0.8	13.9	29.2	37.8	15.4	3.0	
	중간층	1.7	10.2	28.6	33.9	20.0	5.5	
	중상(상)층	0.0	4.5	22.4	31.3	37.3	4.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0	12.1	32.8	39.7	13.8	1.7	10.917
	고졸	2.0	12.8	29.1	35.4	17.0	3.6	
	대졸 이상	1.0	10.5	27.4	34.1	21.8	5.2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0.8	11.5	26.4	36.7	19.2	5.3	21.230 *
	별거/사별/이혼	3.4	6.8	30.5	32.2	25.4	1.7	
	미혼(미혼 부·모 포함)	2.7	13.1	34.7	30.2	17.6	1.8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6	7.6	25.4	39.7	21.7	5.1	40.713 *
	임시일용직	3.0	21.2	21.2	39.4	12.1	3.0	
	고용주 및 자영업자	2.0	17.6	25.5	32.0	19.0	3.9	
	무급가족종사자	0.0	22.2	22.2	44.4	11.1	0.0	
	실업자	1.7	23.7	32.2	28.8	10.2	3.4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1.8	10.0	32.7	32.2	19.2	4.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6	7.9	24.5	39.7	22.2	5.2	7.441
	비정규직	2.2	15.6	28.9	40.0	11.1	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10.4	40.3	31.3	16.4	1.5	48.751 **
	100만원 대	1.8	10.9	26.5	43.6	14.9	2.2	
	200만원 대	1.4	12.5	28.5	32.5	20.9	4.2	
	300만원 대	1.7	12.6	28.0	30.3	20.6	6.9	
	400만원 대	0.0	12.5	29.2	25.0	12.5	20.8	
	500만원 이상	0.0	2.9	23.5	35.3	35.3	2.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8〉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음의 복지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2)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등)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X ²
전체		0.3	4.7	15.8	42.8	27.7	8.7	-
성별	남	0.4	3.6	16.6	43.7	27.9	7.9	4.509
	여	0.2	5.9	15.0	41.9	27.5	9.5	
연령	만 19-29세	0.6	3.5	21.2	40.0	25.9	8.8	14.390
	만 30-39세	0.6	5.2	11.5	43.7	28.2	10.9	
	만 40-49세	0.5	4.6	17.1	42.1	26.9	8.8	
	만 50-59세	0.0	5.3	12.3	44.9	28.2	9.3	
	만 60세 이상	0.0	4.7	17.4	42.7	29.1	6.1	
가구원수	1명	0.0	1.3	20.8	48.1	18.2	11.7	18.249
	2명	0.6	5.7	18.8	38.6	31.8	4.5	
	3명	0.0	5.4	13.0	43.3	29.6	8.7	
	4명 이상	0.4	4.5	15.5	43.2	26.6	9.8	
거주지역	광역시	0.2	3.6	15.3	39.2	30.3	11.4	19.200 *
	시부	0.4	5.2	17.6	44.8	25.3	6.6	
	군부	0.0	7.6	7.6	50.6	27.8	6.3	
소득계층	하층	0.0	3.0	22.4	52.2	19.4	3.0	45.036 ***
	중하층	0.3	5.3	15.4	46.6	26.4	6.0	
	중간층	0.2	4.9	15.4	40.5	29.6	9.4	
	중상(상)층	1.5	1.5	14.9	26.9	29.9	25.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0	10.3	25.9	39.7	19.0	5.2	23.638 **
	고졸	0.4	5.2	14.6	45.7	28.3	5.8	
	대졸 이상	0.2	3.6	15.7	40.5	28.2	11.7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0.3	5.1	13.6	42.8	28.5	9.6	13.931
	별거/사별/이혼	0.0	5.1	18.6	47.5	25.4	3.4	
	미혼(미혼 부·모 포함)	0.5	3.2	22.1	41.4	25.7	7.2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0	2.5	17.2	38.6	28.7	13.0	47.416 **
	임시일용직	3.0	6.1	6.1	54.5	30.3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0.7	7.8	15.7	43.8	26.1	5.9	
	무급가족종사자	0.0	11.1	11.1	66.7	11.1	0.0	
	실업자	0.0	1.7	25.4	47.5	22.0	3.4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0.3	5.6	14.1	44.0	28.4	7.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0	2.6	17.5	37.3	29.2	13.4	22.202 ***
	비정규직	2.2	4.4	6.7	60.0	26.7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3.0	7.5	61.2	26.9	1.5	60.843 ***
	100만원 대	0.4	5.8	18.2	41.5	30.2	4.0	
	200만원 대	0.0	4.7	17.9	42.6	26.1	8.7	
	300만원 대	1.1	4.0	11.4	42.9	27.4	13.1	
	400만원 대	0.0	4.2	16.7	33.3	25.0	20.8	
	500만원 이상	0.0	2.9	8.8	26.5	32.4	29.4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9〉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음의 복지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3)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X ²
전체		0.9	5.6	15.2	42.1	29.9	6.3	-
성별	남	1.0	5.5	16.8	41.9	29.6	5.1	4.045
	여	0.8	5.7	13.6	42.3	30.2	7.5	
연령	만 19~29세	0.6	2.9	17.6	39.4	32.9	6.5	17.125
	만 30~39세	1.1	5.7	15.5	41.4	29.3	6.9	
	만 40~49세	0.5	6.5	17.1	41.2	30.1	4.6	
	만 50~59세	1.3	7.9	9.3	46.3	28.2	7.0	
	만 60세 이상	0.9	4.2	17.4	41.3	29.6	6.6	
가구원수	1명	0.0	9.1	15.6	42.9	28.6	3.9	20.305
	2명	2.8	5.7	12.5	44.3	29.0	5.7	
	3명	0.4	4.3	16.6	44.0	30.7	4.0	
	4명 이상	0.6	5.7	15.3	40.0	30.0	8.3	
거주지역	광역시	0.7	3.9	15.9	39.0	32.3	8.2	22.886 *
	시부	1.0	6.2	16.0	44.2	27.2	5.4	
	군부	1.3	11.4	6.3	46.8	32.9	1.3	
소득계층	하층	1.5	10.4	16.4	50.7	14.9	6.0	30.425 *
	중하층	0.5	7.1	15.4	40.1	30.2	6.8	
	중간층	1.3	4.1	16.0	43.7	30.1	4.9	
	중상(상)층	0.0	3.0	7.5	34.3	41.8	13.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7	13.8	15.5	36.2	29.3	3.4	16.971 +
	고졸	1.1	4.3	16.8	44.8	26.5	6.5	
	대졸 이상	0.6	5.8	13.7	40.3	33.1	6.5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0	5.8	13.9	42.6	30.5	6.3	16.770 +
	별거/사별/이혼	0.0	13.6	11.9	40.7	25.4	8.5	
	미혼(미혼 부·모 포함)	0.9	2.7	20.3	41.0	29.3	5.9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3	6.8	15.2	42.3	29.3	6.2	25.140
	임시일용직	3.0	3.0	12.1	45.5	33.3	3.0	
	고용주 및 자영업자	2.6	7.8	14.4	37.9	34.0	3.3	
	무급가족종사자	0.0	0.0	22.2	44.4	22.2	11.1	
	실업자	0.0	6.8	20.3	47.5	18.6	6.8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0.8	3.8	14.8	42.5	30.4	7.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3	7.0	14.9	42.3	29.2	6.4	5.754
	비정규직	2.2	2.2	15.6	44.4	33.3	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0	3.0	13.4	46.3	31.3	3.0	29.320
	100만원 대	1.1	4.7	18.9	42.9	27.3	5.1	
	200만원 대	0.5	7.1	14.8	41.2	31.5	4.9	
	300만원 대	1.1	5.7	12.6	40.6	29.1	10.9	
	400만원 대	0.0	0.0	8.3	54.2	29.2	8.3	
	500만원 이상	0.0	2.9	11.8	38.2	32.4	14.7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20〉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음의 복지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4)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X ²
전체		0.9	4.7	21.8	42.8	21.9	7.9	-
성별	남	0.6	4.9	22.3	45.7	18.0	8.5	10.915 +
	여	1.2	4.5	21.3	39.9	25.9	7.3	
연령	만 19-29세	1.2	5.3	19.4	44.1	20.6	9.4	22.675
	만 30-39세	1.7	6.9	23.6	40.8	19.0	8.0	
	만 40-49세	0.9	3.2	19.4	49.1	20.4	6.9	
	만 50-59세	0.9	6.6	22.9	37.0	26.4	6.2	
	만 60세 이상	0.0	1.9	23.5	43.2	22.1	9.4	
가구원수	1명	0.0	3.9	24.7	44.2	22.1	5.2	21.229
	2명	1.1	3.4	26.7	39.2	23.3	6.3	
	3명	0.4	6.1	24.9	42.6	20.9	5.1	
	4명 이상	1.3	4.5	17.7	44.0	21.9	10.6	
거주지역	광역시	0.9	4.6	20.3	38.5	24.1	11.6	30.248 ***
	시부	0.6	5.2	24.3	45.9	18.7	5.4	
	군부	2.5	2.5	15.2	48.1	29.1	2.5	
소득계층	하층	0.0	6.0	25.4	37.3	20.9	10.4	17.425
	중하층	1.0	5.5	23.9	44.6	18.1	6.8	
	중간층	1.1	4.5	20.5	42.0	24.1	7.9	
	중상(상)층	0.0	0.0	14.9	43.3	29.9	11.9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0	5.2	20.7	43.1	27.6	3.4	6.062
	고졸	0.7	3.8	23.1	41.9	22.2	8.3	
	대졸 이상	1.2	5.4	20.8	43.5	21.0	8.1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0	4.7	20.7	42.4	22.5	8.6	4.648
	별거/사별/이혼	0.0	3.4	25.4	44.1	22.0	5.1	
	미혼(미혼 부·모 포함)	0.9	5.0	24.3	43.7	19.8	6.3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4	4.5	21.4	45.6	19.7	7.3	16.369
	임시일용직	0.0	9.1	24.2	39.4	24.2	3.0	
	고용주 및 자영업자	2.0	5.2	20.9	43.1	21.6	7.2	
	무급가족종사자	0.0	0.0	22.2	44.4	22.2	11.1	
	실업자	0.0	5.1	30.5	30.5	23.7	10.2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0.3	4.3	21.0	42.2	23.5	8.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5	4.4	21.3	45.8	19.5	7.6	4.908
	비정규직	0.0	8.9	24.4	40.0	24.4	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1.5	16.4	64.2	16.4	1.5	36.390 +
	100만원 대	0.4	4.0	21.5	44.4	21.1	8.7	
	200만원 대	0.9	5.2	21.9	40.9	24.2	6.8	
	300만원 대	2.3	6.3	22.3	38.9	20.6	9.7	
	400만원 대	0.0	4.2	37.5	37.5	16.7	4.2	
	500만원 이상	0.0	2.9	20.6	35.3	20.6	20.6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21〉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음의 복지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5) 보육/양육 지원 확대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X ²
전체		0.7	4.8	20.4	42.7	26.7	4.7	-
성별	남	0.6	4.2	21.3	42.1	26.5	5.3	2.504
	여	0.8	5.5	19.4	43.3	26.9	4.0	
연령	만 19-29세	0.6	4.7	18.2	45.9	24.1	6.5	20.637
	만 30-39세	1.7	6.9	17.8	45.4	24.7	3.4	
	만 40-49세	0.9	4.2	25.5	41.2	23.6	4.6	
	만 50-59세	0.0	5.7	18.5	40.1	32.2	3.5	
	만 60세 이상	0.5	2.8	21.1	42.3	27.7	5.6	
가구원수	1명	0.0	5.2	22.1	51.9	16.9	3.9	13.836
	2명	1.7	4.0	21.6	43.2	27.8	1.7	
	3명	0.4	4.7	20.9	41.5	26.7	5.8	
	4명 이상	0.6	5.1	19.4	41.7	27.9	5.3	
거주지역	광역시	0.7	4.3	17.1	39.6	31.2	7.1	28.951 **
	시부	0.6	5.4	24.5	43.4	23.0	3.1	
	군부	1.3	3.8	13.9	55.7	24.1	1.3	
소득계층	하층	0.0	4.5	25.4	44.8	19.4	6.0	29.210 *
	중하층	1.0	6.0	23.9	39.8	25.4	3.8	
	중간층	0.6	4.5	17.5	45.4	27.9	4.1	
	중상(상)층	0.0	0.0	14.9	38.8	32.8	13.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0	5.2	27.6	48.3	19.0	0.0	9.000
	고졸	0.7	4.0	19.5	44.4	26.2	5.2	
	대졸 이상	0.8	5.4	20.4	40.5	28.0	4.8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0.8	4.9	21.1	40.9	27.4	4.9	5.766
	별거/사별/이혼	0.0	3.4	22.0	42.4	28.8	3.4	
	미혼(미혼 부·모 포함)	0.5	5.0	17.6	48.6	23.9	4.5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8	5.1	22.8	38.6	28.2	4.5	25.476
	임시일용직	3.0	6.1	9.1	60.6	15.2	6.1	
	고용주 및 자영업자	1.3	6.5	20.3	39.9	27.5	4.6	
	무급가족종사자	0.0	0.0	11.1	77.8	11.1	0.0	
	실업자	0.0	3.4	28.8	42.4	20.3	5.1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0.3	4.1	18.2	45.3	27.4	4.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9	4.7	22.4	39.1	28.6	4.4	7.319
	비정규직	2.2	8.9	15.6	51.1	15.6	6.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6.0	46.3	35.8	10.4	1.5	51.650 **
	100만원 대	0.7	3.3	19.3	45.5	25.1	6.2	
	200만원 대	0.5	5.4	20.2	41.6	28.2	4.0	
	300만원 대	1.7	5.1	16.6	44.0	28.6	4.0	
	400만원 대	0.0	4.2	12.5	45.8	33.3	4.2	
	500만원 이상	0.0	5.9	5.9	38.2	38.2	11.8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22〉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음의 복지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6) 노인 대상 돌봄 확대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χ^2
전체		0.6	2.9	17.0	43.1	30.9	5.5	-
성별	남	0.4	3.0	16.8	41.3	32.4	6.1	3.009
	여	0.8	2.8	17.2	44.9	29.4	4.9	
연령	만 19-29세	0.0	1.8	20.6	37.1	34.7	5.9	12.042
	만 30-39세	0.6	2.3	16.1	44.8	30.5	5.7	
	만 40-49세	0.5	3.2	17.1	44.9	28.7	5.6	
	만 50-59세	0.9	2.6	14.1	42.7	34.4	5.3	
	만 60세 이상	0.9	4.2	17.8	45.1	26.8	5.2	
가구원수	1명	0.0	5.2	15.6	40.3	35.1	3.9	29.316 *
	2명	2.3	1.1	21.6	47.2	23.9	4.0	
	3명	0.0	1.8	13.4	45.5	34.3	5.1	
	4명 이상	0.4	3.8	17.7	40.6	30.9	6.6	
거주지역	광역시	0.5	1.6	17.1	39.0	33.7	8.2	25.986 **
	시부	0.6	4.1	17.8	44.6	29.3	3.5	
	군부	1.3	2.5	11.4	57.0	25.3	2.5	
소득계층	하층	0.0	3.0	20.9	49.3	22.4	4.5	20.287
	중하층	0.8	3.0	18.6	41.3	31.5	4.8	
	중간층	0.6	3.0	14.9	46.3	29.6	5.5	
	중상(상)층	0.0	1.5	17.9	25.4	44.8	10.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4	6.9	19.0	37.9	29.3	3.4	13.939
	고졸	0.4	2.2	17.9	43.3	30.7	5.4	
	대졸 이상	0.4	3.0	15.9	43.5	31.3	5.8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0.7	2.9	16.8	44.1	30.3	5.1	9.416
	별거/사별/이혼	1.7	5.1	8.5	45.8	32.2	6.8	
	미혼(미혼 부·모 포함)	0.0	2.3	19.8	39.2	32.4	6.3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3	2.5	18.6	43.1	29.9	5.6	24.675
	임시일용직	3.0	3.0	3.0	48.5	39.4	3.0	
	고용주 및 자영업자	1.3	5.2	13.1	43.8	28.8	7.8	
	무급가족종사자	0.0	0.0	11.1	77.8	11.1	0.0	
	실업자	0.0	3.4	18.6	45.8	27.1	5.1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0.5	2.3	18.2	41.2	33.0	4.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3	2.3	18.7	42.3	30.9	5.5	8.136
	비정규직	2.2	4.4	6.7	53.3	28.9	4.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0.0	13.4	56.7	25.4	4.5	31.327
	100만원 대	0.4	4.0	19.6	35.3	33.5	7.3	
	200만원 대	0.9	3.3	17.6	44.5	28.9	4.7	
	300만원 대	0.6	1.7	14.9	48.6	30.3	4.0	
	400만원 대	0.0	0.0	8.3	54.2	29.2	8.3	
	500만원 이상	0.0	2.9	11.8	26.5	50.0	8.8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23〉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음의 복지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7) 장애인 대상 돌봄 확대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X [*]
전체		0.5	2.9	17.3	46.4	26.7	6.2	-
성별	남	0.4	2.6	17.6	46.0	27.1	6.3	0.768
	여	0.6	3.2	17.0	46.8	26.3	6.1	
연령	만 19-29세	0.0	4.7	16.5	51.8	22.4	4.7	15.773
	만 30-39세	0.6	1.7	21.8	42.5	27.0	6.3	
	만 40-49세	0.9	2.3	17.1	49.1	24.1	6.5	
	만 50-59세	0.4	4.0	15.4	42.7	30.4	7.0	
	만 60세 이상	0.5	1.9	16.4	46.5	28.6	6.1	
가구원수	1명	0.0	3.9	15.6	55.8	23.4	1.3	12.515
	2명	1.1	2.3	14.2	48.9	28.4	5.1	
	3명	0.0	3.2	18.1	46.2	26.0	6.5	
	4명 이상	0.6	2.8	18.3	44.0	27.0	7.2	
거주지역	광역시	0.2	2.7	16.4	44.6	28.0	8.0	13.967
	시부	0.6	3.1	19.1	47.5	24.3	5.4	
	군부	1.3	2.5	11.4	49.4	34.2	1.3	
소득계층	하층	0.0	6.0	16.4	55.2	11.9	10.4	27.409 *
	중하층	1.0	3.5	18.1	44.8	28.2	4.3	
	중간층	0.2	2.3	17.5	46.1	27.7	6.2	
	중상(상)층	0.0	0.0	11.9	49.3	25.4	13.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0	5.2	25.9	37.9	25.9	5.2	8.437
	고졸	0.7	2.0	15.9	49.1	26.0	6.3	
	대졸 이상	0.4	3.4	17.5	45.0	27.4	6.3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0.7	2.5	17.7	44.1	28.2	6.8	12.456
	별거/사별/이혼	0.0	5.1	13.6	47.5	27.1	6.8	
	미혼(미혼 부·모 포함)	0.0	3.6	17.1	53.6	21.6	4.1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6	2.3	18.0	45.1	27.3	6.8	20.320
	임시일용직	3.0	3.0	6.1	57.6	27.3	3.0	
	고용주 및 자영업자	0.7	5.2	17.0	45.1	28.1	3.9	
	무급가족종사자	0.0	0.0	11.1	33.3	55.6	0.0	
	실업자	0.0	1.7	16.9	52.5	22.0	6.8	
	비경제활동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0.3	2.8	17.9	46.5	25.6	6.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6	2.0	18.1	45.2	27.1	7.0	6.372
	비정규직	2.2	4.4	8.9	53.3	28.9	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0.0	25.4	50.7	22.4	1.5	23.614
	100만원 대	0.4	2.5	16.7	46.9	26.5	6.9	
	200만원 대	0.5	4.0	18.1	47.3	24.7	5.4	
	300만원 대	1.1	2.9	15.4	41.1	30.3	9.1	
	400만원 대	0.0	0.0	12.5	45.8	37.5	4.2	
	500만원 이상	0.0	0.0	8.8	50.0	35.3	5.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24〉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음의 복지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8)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지원 확대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X ²
전체		0.9	4.2	20.4	42.8	25.8	5.9	-
성별	남	0.8	4.5	19.2	42.3	27.1	6.1	1.983
	여	1.0	3.8	21.7	43.3	24.5	5.7	
연령	만 19~29세	0.6	4.7	20.6	42.4	27.1	4.7	14.420
	만 30~39세	1.1	2.3	21.8	43.1	26.4	5.2	
	만 40~49세	1.9	3.2	20.8	38.4	28.2	7.4	
	만 50~59세	0.4	4.8	16.7	47.6	25.1	5.3	
	만 60세 이상	0.5	5.6	22.5	42.3	22.5	6.6	
가구원수	1명	0.0	3.9	15.6	50.6	28.6	1.3	11.811
	2명	1.7	5.1	22.2	41.5	23.3	6.3	
	3명	0.4	3.6	22.0	44.4	23.5	6.1	
	4명 이상	1.1	4.3	19.6	41.1	27.7	6.4	
거주지역	광역시	0.7	2.3	20.0	39.2	29.8	8.0	25.134 **
	시부	1.2	5.8	21.4	44.0	23.2	4.4	
	군부	0.0	5.1	16.5	55.7	19.0	3.8	
소득계층	하층	0.0	10.4	25.4	38.8	17.9	7.5	27.303 *
	중하층	1.8	5.0	20.4	42.3	25.9	4.5	
	중간층	0.4	2.8	19.8	44.8	26.4	5.8	
	중상(상)층	0.0	3.0	19.4	35.8	28.4	13.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0	13.8	22.4	44.8	15.5	3.4	19.565 *
	고졸	0.7	3.6	20.9	44.2	24.9	5.8	
	대졸 이상	1.2	3.6	19.8	41.3	27.8	6.3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3	4.3	20.3	41.4	25.9	6.8	10.239
	별거/사별/이혼	0.0	3.4	16.9	52.5	22.0	5.1	
	미혼(미혼 부·모 포함)	0.0	4.1	21.6	44.6	26.6	3.2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6	3.4	20.3	41.1	28.2	6.5	21.253
	임시일용직	3.0	0.0	18.2	39.4	33.3	6.1	
	고용주 및 자영업자	2.0	7.2	21.6	37.3	26.8	5.2	
	무급가족종사자	0.0	0.0	22.2	66.7	0.0	11.1	
	실업자	0.0	3.4	25.4	45.8	22.0	3.4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0.8	4.3	19.4	45.8	23.8	5.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6	3.5	19.8	41.1	28.3	6.7	3.509
	비정규직	2.2	0.0	22.2	40.0	31.1	4.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7.5	26.9	40.3	22.4	3.0	34.137
	100만원 대	1.1	3.3	22.5	42.5	26.9	3.6	
	200만원 대	0.5	5.6	19.8	43.1	24.5	6.6	
	300만원 대	2.3	2.3	17.7	44.0	26.3	7.4	
	400만원 대	0.0	0.0	33.3	33.3	25.0	8.3	
	500만원 이상	0.0	0.0	2.9	47.1	38.2	11.8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25〉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음의 복지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9)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X ²
전체		1.1	9.7	25.7	39.6	20.5	3.4	-
성별	남	1.0	8.5	27.3	39.7	20.2	3.4	2.695
	여	1.2	10.9	24.1	39.5	20.9	3.4	
연령	만 19~29세	1.2	11.2	28.2	34.1	20.0	5.3	18.434
	만 30~39세	1.7	9.8	22.4	45.4	16.7	4.0	
	만 40~49세	0.9	10.6	26.9	38.9	19.0	3.7	
	만 50~59세	1.8	9.3	22.9	39.2	25.1	1.8	
	만 60세 이상	0.0	8.0	28.2	40.4	20.7	2.8	
가구원수	1명	2.6	7.8	26.0	39.0	18.2	6.5	13.086
	2명	1.1	8.5	30.7	39.8	16.5	3.4	
	3명	0.4	9.7	27.4	40.1	19.5	2.9	
	4명 이상	1.3	10.4	22.8	39.4	23.0	3.2	
거주지역	광역시	0.7	7.7	18.7	41.9	25.7	5.2	49.798 ***
	시부	1.2	9.8	32.2	38.2	16.4	2.3	
	군부	2.5	20.3	25.3	35.4	16.5	0.0	
소득계층	하층	1.5	19.4	31.3	23.9	20.9	3.0	37.284 **
	중하층	1.5	9.1	27.0	43.6	15.6	3.3	
	중간층	0.9	9.4	24.5	40.1	22.2	3.0	
	중상(상)층	0.0	6.0	20.9	28.4	37.3	7.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0	17.2	20.7	43.1	17.2	1.7	8.519
	고졸	1.1	8.5	27.8	37.9	21.5	3.1	
	대졸 이상	1.2	9.9	24.4	40.7	20.0	3.8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3	9.3	24.6	40.1	21.6	3.2	8.854
	별거/사별/이혼	1.7	10.2	20.3	44.1	22.0	1.7	
	미혼(미혼 부·모 포함)	0.5	10.8	30.6	36.9	16.7	4.5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4	10.1	26.2	38.0	20.0	4.2	18.708
	임시일용직	0.0	21.2	24.2	42.4	12.1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2.0	9.8	24.2	44.4	17.6	2.0	
	무급가족종사자	0.0	11.1	33.3	44.4	11.1	0.0	
	실업자	1.7	5.1	25.4	45.8	18.6	3.4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0.5	9.0	25.8	37.9	23.3	3.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5	9.9	26.5	37.6	20.1	4.4	7.991
	비정규직	0.0	20.0	22.2	44.4	13.3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19.4	34.3	32.8	13.4	0.0	31.834
	100만원 대	0.4	6.9	27.3	40.4	20.7	4.4	
	200만원 대	1.2	9.4	26.4	40.2	19.8	3.1	
	300만원 대	2.3	11.4	21.7	39.4	21.1	4.0	
	400만원 대	4.2	8.3	16.7	41.7	25.0	4.2	
	500만원 이상	0.0	8.8	14.7	38.2	35.3	2.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26〉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음의 복지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0)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X ²
전체		0.5	4.0	19.3	48.7	23.2	4.3	-
성별	남	0.6	3.8	18.8	49.4	22.7	4.7	1.148
	여	0.4	4.3	19.8	48.0	23.7	3.8	
연령	만 19~29세	0.0	5.3	21.8	48.8	20.6	3.5	14.924
	만 30~39세	1.1	1.1	17.8	49.4	24.1	6.3	
	만 40~49세	0.9	4.6	19.9	48.1	22.7	3.7	
	만 50~59세	0.4	3.5	16.7	49.3	26.0	4.0	
	만 60세 이상	0.0	5.2	20.7	47.9	22.1	4.2	
가구원수	1명	0.0	6.5	18.2	50.6	19.5	5.2	10.935
	2명	0.6	4.5	22.7	49.4	19.9	2.8	
	3명	0.4	2.9	19.1	52.3	20.9	4.3	
	4명 이상	0.6	4.0	18.3	46.0	26.4	4.7	
거주지역	광역시	0.2	3.0	14.8	47.4	28.9	5.7	37.399 ***
	시부	0.8	4.6	21.0	51.0	18.9	3.7	
	군부	0.0	6.3	34.2	41.8	17.7	0.0	
소득계층	하층	0.0	7.5	40.3	34.3	13.4	4.5	42.887 ***
	중하층	0.5	5.0	18.1	52.9	20.4	3.0	
	중간층	0.6	3.0	18.6	47.8	25.4	4.7	
	중상(상)층	0.0	1.5	10.4	44.8	34.3	9.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0	6.9	31.0	41.4	20.7	0.0	16.129 +
	고졸	0.4	4.5	18.6	51.8	21.3	3.4	
	대졸 이상	0.6	3.2	18.5	46.8	25.2	5.6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0.7	3.8	18.4	47.8	24.8	4.6	12.151
	별거/사별/이혼	0.0	8.5	15.3	49.2	22.0	5.1	
	미혼(미혼 부·모 포함)	0.0	3.6	23.4	51.4	18.5	3.2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6	3.1	18.6	47.3	23.1	7.3	38.388 *
	임시일용직	0.0	12.1	21.2	57.6	6.1	3.0	
	고용주 및 자영업자	2.0	3.9	20.3	49.0	22.9	2.0	
	무급가족종사자	0.0	0.0	33.3	44.4	22.2	0.0	
	실업자	0.0	3.4	18.6	59.3	15.3	3.4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0.0	4.3	19.2	47.6	26.1	2.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6	2.9	18.7	46.6	23.6	7.6	15.603 **
	비정규직	0.0	11.1	20.0	60.0	6.7	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4.5	25.4	56.7	13.4	0.0	50.531 **
	100만원 대	0.0	4.0	20.4	49.8	23.6	2.2	
	200만원 대	0.2	4.7	17.6	50.8	22.8	3.8	
	300만원 대	2.3	2.3	19.4	41.7	25.7	8.6	
	400만원 대	0.0	4.2	33.3	29.2	20.8	12.5	
	500만원 이상	0.0	2.9	8.8	47.1	32.4	8.8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27〉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아래의 복지정책 중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단위: %)

구분		일자리 지원 확대(사회 서비스 일자리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등)
전체		26.9	14.0	12.1
성별	남	28.5	13.6	12.5
	여	25.3	14.4	11.7
연령	만 19~29세	40.0	5.3	10.0
	만 30~39세	24.1	15.5	9.8
	만 40~49세	27.3	17.1	13.0
	만 50~59세	24.7	16.7	16.7
	만 60세 이상	20.7	13.6	9.9
가구원수	1명	22.1	15.6	14.3
	2명	27.3	14.2	10.8
	3명	28.2	11.9	11.2
	4명 이상	26.8	14.9	12.8
거주지역	광역시	21.6	14.6	13.0
	시부	30.9	12.9	10.8
	군부	31.6	17.7	15.2
소득계층	하층	31.3	9.0	11.9
	중하층	27.5	12.3	13.6
	중간층	26.4	15.6	10.0
	중상(상)층	22.4	17.9	17.9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4.1	20.7	13.8
	고졸	28.3	12.3	11.7
	대졸 이상	26.0	14.7	12.3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23.6	15.2	12.5
	별거/사별/이혼	16.9	23.7	6.8
	미혼(미혼 부·모 포함)	40.1	7.7	12.2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22.8	16.3	13.0
	임시일용직	30.3	15.2	18.2
	고용주 및 자영업자	29.4	14.4	13.7
	무급가족종사자	33.3	11.1	22.2
	실업자	37.3	13.6	6.8
	비경제활동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7.6	11.8	10.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22.2	16.3	13.1
	비정규직	33.3	15.6	15.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9.9	9.0	6.0
	100만원 대	28.0	10.5	12.7
	200만원 대	27.8	13.9	13.4
	300만원 대	25.1	21.7	12.0
	400만원 대	33.3	4.2	8.3
	500만원 이상	5.9	20.6	5.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28〉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아래의 복지정책 중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단위: %)

구분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보육·양육 지원 확대	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지원 확대
전체		11.2	10.4	7.7
성별	남	11.7	9.9	7.3
	여	10.7	10.9	8.1
연령	만 19~29세	10.0	8.8	4.7
	만 30~39세	14.4	21.8	2.3
	만 40~49세	12.0	5.6	9.3
	만 50~59세	11.0	7.9	7.0
	만 60세 이상	8.9	9.9	13.6
가구원수	1명	5.2	11.7	13.0
	2명	4.0	10.2	11.4
	3명	14.4	12.6	3.6
	4명 이상	13.0	8.9	7.9
거주지역	광역시	14.1	11.8	7.1
	시부	9.8	10.2	7.9
	군부	3.8	3.8	10.1
소득계층	하층	6.0	17.9	6.0
	중하층	8.3	10.3	8.1
	중간층	14.3	9.6	7.9
	중상(상)층	11.9	9.0	6.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6.9	8.6	8.6
	고졸	10.5	8.1	9.2
	대졸 이상	12.3	12.7	6.3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1.4	11.7	8.1
	별거/사별/이혼	8.5	5.1	15.3
	미혼(미혼 부·모 포함)	11.3	7.7	4.5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4.4	11.5	6.8
	임시일용직	9.1	3.0	3.0
	고용주 및 자영업자	6.5	8.5	11.1
	무급가족종사자	11.1	0.0	0.0
	실업자	8.5	13.6	3.4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10.7	10.5	8.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4.9	11.1	7.0
	비정규직	6.7	8.9	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0	17.9	10.4
	100만원 대	9.5	12.4	8.7
	200만원 대	11.8	9.2	6.6
	300만원 대	14.9	5.1	5.1
	400만원 대	12.5	8.3	8.3
	500만원 이상	14.7	23.5	20.6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29〉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아래의 복지정책 중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노인 대상 돌봄 확대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장애인 대상 돌봄 확대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χ^2
전체		7.4	5.1	2.7	2.5	-
성별	남	6.7	5.9	2.2	1.8	6.987
	여	8.1	4.3	3.2	3.2	
연령	만 19-29세	5.3	8.8	1.8	5.3	124.138 ***
	만 30-39세	4.0	3.4	2.3	2.3	
	만 40-49세	5.1	6.9	2.3	1.4	
	만 50-59세	7.9	4.4	1.8	1.8	
	만 60세 이상	13.6	2.3	5.2	2.3	
가구원수	1명	5.2	6.5	2.6	3.9	50.523 **
	2명	13.6	3.4	2.3	2.8	
	3명	5.1	6.9	4.0	2.2	
	4명 이상	6.8	4.5	2.1	2.3	
거주지역	광역시	8.7	3.9	2.5	2.7	31.205 *
	시부	6.0	6.0	2.9	2.7	
	군부	8.9	6.3	2.5	0.0	
소득계층	하층	7.5	7.5	1.5	1.5	39.321 +
	중하층	9.1	3.5	4.0	3.3	
	중간층	5.5	6.6	1.9	2.1	
	중상(상)층	10.4	1.5	1.5	1.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2.1	1.7	1.7	1.7	30.363 *
	고졸	9.6	3.8	3.6	2.9	
	대졸 이상	4.8	6.7	2.0	2.2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7.8	4.3	3.2	2.2	58.404 ***
	별거/사별/이혼	13.6	5.1	3.4	1.7	
	미혼(미혼 부·모 포함)	4.5	7.7	0.9	3.6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4.2	6.8	2.3	2.0	51.260
	임시일용직	6.1	9.1	3.0	3.0	
	고용주 및 자영업자	7.2	4.6	3.3	1.3	
	무급가족종사자	11.1	0.0	0.0	11.1	
	실업자	10.2	3.4	0.0	3.4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10.0	3.8	3.3	3.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4.4	7.0	2.3	1.7	7.226
	비정규직	4.4	6.7	2.2	4.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5	13.4	3.0	0.0	84.831 ***
	100만원 대	9.5	2.5	3.3	2.9	
	200만원 대	6.4	5.6	3.1	2.4	
	300만원 대	6.9	4.0	1.1	4.0	
	400만원 대	8.3	12.5	4.2	0.0	
	500만원 이상	5.9	2.9	0.0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30〉 귀하가 느끼는 현재의 걱정거리(불안요인)는 무엇입니까? (1순위) (계속)

(단위: %)

구분		일자리	신체와 정신건강	노후생활	자녀교육	출산과 양육
전체		27.4	20.6	18.3	14.4	6.4
성별	남	30.6	20.6	15.6	14.4	5.7
	여	24.1	20.6	21.1	14.4	7.1
연령	만 19-29세	68.2	10.0	2.9	2.9	2.9
	만 30-39세	19.0	12.6	6.9	25.9	20.1
	만 40-49세	16.2	14.4	14.8	32.9	4.6
	만 50-59세	23.8	30.0	22.0	9.3	2.6
	만 60세 이상	16.9	31.9	39.4	0.9	3.8
가구원수	1명	26.0	31.2	20.8	0.0	9.1
	2명	19.3	26.7	33.5	1.7	6.3
	3명	29.2	18.1	13.4	18.4	7.6
	4명 이상	29.6	18.1	15.1	19.1	5.3
거주지역	광역시	26.7	21.0	17.3	15.0	7.3
	시부	29.3	18.9	18.5	14.1	5.6
	군부	20.3	29.1	22.8	12.7	6.3
소득계층	하층	25.4	29.9	22.4	4.5	4.5
	중하층	29.5	16.9	20.7	11.8	5.3
	중간층	26.0	21.7	16.2	18.1	7.2
	중상(상)층	26.9	25.4	14.9	13.4	9.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4.1	31.0	34.5	0.0	3.4
	고졸	30.7	23.3	23.8	8.1	4.0
	대졸 이상	24.8	16.9	11.5	21.8	8.9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7.8	22.3	20.9	19.5	7.2
	별거/사별/이혼	13.6	32.2	40.7	3.4	1.7
	미혼(미혼 부·모 포함)	62.2	12.2	4.1	0.9	5.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23.1	15.8	13.2	20.8	9.0
	임시일용직	42.4	21.2	15.2	6.1	6.1
	고용주 및 자영업자	20.3	26.1	23.5	15.0	3.3
	무급가족종사자	11.1	55.6	22.2	11.1	0.0
	실업자	49.2	27.1	10.2	5.1	3.4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9.9	21.0	22.3	10.5	5.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22.2	16.0	13.7	21.0	9.3
	비정규직	44.4	17.8	11.1	8.9	4.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5.4	17.9	20.9	16.4	3.0
	100만원 대	28.0	22.9	24.7	10.9	5.8
	200만원 대	28.5	17.6	14.1	18.6	7.3
	300만원 대	26.9	21.1	20.6	9.7	4.6
	400만원 대	20.8	16.7	8.3	20.8	16.7
	500만원 이상	20.6	44.1	8.8	5.9	8.8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31〉 귀하가 느끼는 현재의 걱정거리(불안요인)는 무엇입니까? (1순위)

(단위: %)

구분		주거	부채 상환	부모 부양	안전	환경	χ^2
전체		6.0	2.6	2.3	1.1	0.9	-
성별	남	7.1	2.8	2.2	0.6	0.4	16.261 +
	여	4.9	2.4	2.4	1.6	1.4	
연령	만 19~29세	6.5	1.2	0.6	2.9	1.8	475.992 ***
	만 30~39세	9.8	1.7	1.1	1.1	1.7	
	만 40~49세	5.1	6.0	4.2	0.9	0.9	
	만 50~59세	4.8	3.1	3.1	0.9	0.4	
	만 60세 이상	4.7	0.5	1.9	0.0	0.0	
가구원수	1명	7.8	1.3	1.3	2.6	0.0	108.499 ***
	2명	7.4	2.8	2.3	0.0	0.0	
	3명	5.1	2.2	2.2	2.9	1.1	
	4명 이상	5.7	3.0	2.6	0.2	1.3	
거주지역	광역시	5.9	2.1	1.8	1.6	1.4	17.380
	시부	6.2	2.9	3.1	0.8	0.6	
	군부	5.1	3.8	0.0	0.0	0.0	
소득계층	하층	7.5	1.5	1.5	1.5	1.5	39.021 +
	중하층	8.3	3.3	2.8	1.0	0.5	
	중간층	4.3	2.3	1.9	1.3	0.9	
	중상(상)층	3.0	1.5	3.0	0.0	3.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4	1.7	1.7	0.0	0.0	100.319 ***
	고졸	4.9	2.2	2.0	0.7	0.2	
	대졸 이상	7.3	3.0	2.6	1.6	1.6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5.0	3.3	2.9	0.6	0.6	264.479 ***
	별거/사별/이혼	5.1	1.7	1.7	0.0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9.5	0.5	0.5	3.2	2.3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9.0	3.1	2.5	2.0	1.4	101.433 ***
	임시일용직	6.1	0.0	0.0	3.0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3.3	4.6	3.9	0.0	0.0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0	0.0	0.0	
	실업자	3.4	1.7	0.0	0.0	0.0	
	비경제활동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4.9	1.8	2.0	0.8	1.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9.0	2.9	2.3	2.0	1.5	13.305
	비정규직	6.7	2.2	2.2	2.2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0	7.5	6.0	0.0	0.0	105.777 ***
	100만원 대	4.7	1.5	1.1	0.0	0.4	
	200만원 대	6.6	3.5	1.4	1.9	0.5	
	300만원 대	7.4	1.1	5.1	1.1	2.3	
	400만원 대	4.2	0.0	0.0	4.2	8.3	
	500만원 이상	8.8	0.0	2.9	0.0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32〉 귀하가 느끼는 현재의 걱정거리(불안요인)는 무엇입니까? (2순위) (계속)

(단위: %)

구분		신체와 정신건강	노후생활	일자리	자녀교육	주거
전체		20.0	19.9	11.6	10.2	9.9
성별	남	21.4	18.5	12.5	9.1	9.9
	여	18.5	21.3	10.8	11.4	9.9
연령	만 19-29세	21.3	8.3	12.4	4.7	11.8
	만 30-39세	13.8	8.6	13.2	18.4	11.5
	만 40-49세	11.2	15.9	10.3	19.6	12.6
	만 50-59세	22.9	31.7	11.0	7.0	6.2
	만 60세 이상	29.6	29.6	11.7	1.9	8.5
가구원수	1명	16.9	24.7	19.5	3.9	9.1
	2명	31.8	30.7	6.8	3.4	6.3
	3명	15.2	19.2	16.3	9.1	10.1
	4명 이상	18.8	15.4	9.4	14.5	11.3
거주지역	광역시	19.0	17.2	11.9	11.4	13.0
	시부	19.5	21.2	11.0	10.0	7.5
	군부	27.8	26.6	13.9	5.1	7.6
소득계층	하층	19.4	25.4	19.4	6.0	7.5
	중하층	23.2	19.2	12.6	8.3	9.6
	중간층	17.9	20.5	10.3	12.6	9.2
	중상(상)층	15.2	13.6	7.6	9.1	19.7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9.3	34.5	13.8	1.7	5.2
	고졸	24.0	22.5	11.0	6.3	10.8
	대졸 이상	15.2	15.8	11.9	14.8	9.7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9.9	22.5	10.0	12.6	9.6
	별거/사별/이혼	20.3	28.8	22.0	1.7	6.8
	미혼(미혼 부·모 포함)	19.9	9.0	14.0	5.0	11.8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5.3	14.1	13.8	13.3	9.9
	임시일용직	33.3	30.3	6.1	3.0	9.1
	고용주 및 자영업자	22.9	27.5	8.5	7.8	7.8
	무급가족종사자	11.1	55.6	22.2	0.0	0.0
	실업자	32.2	18.6	11.9	1.7	11.9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0.3	20.6	11.1	10.5	10.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5.5	13.5	14.3	13.7	9.4
	비정규직	26.7	31.1	4.4	2.2	13.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5.4	26.9	3.0	10.4	6.0
	100만원 대	21.8	22.2	14.5	7.6	10.2
	200만원 대	20.1	17.0	11.6	12.1	9.2
	300만원 대	16.1	23.0	8.0	11.5	10.3
	400만원 대	8.3	12.5	20.8	8.3	16.7
	500만원 이상	20.6	11.8	17.6	2.9	17.6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33〉 귀하가 느끼는 현재의 걱정거리(불안요인)는 무엇입니까? (2순위)

(단위: %)

구분		안전	환경	부채 상황	출산과 양육	부모 부양	χ^2
전체		8.0	7.1	5.8	4.3	3.1	-
성별	남	7.5	6.9	6.3	5.4	2.4	9.141
	여	8.5	7.3	5.3	3.2	3.9	
연령	만 19~29세	17.2	11.8	3.6	4.1	4.7	201.125 ***
	만 30~39세	7.5	8.0	8.0	8.6	2.3	
	만 40~49세	7.9	4.2	10.7	5.1	2.3	
	만 50~59세	4.4	5.7	3.5	2.2	5.3	
	만 60세 이상	5.2	7.0	3.3	2.3	0.9	
가구원수	1명	7.8	5.2	3.9	3.9	5.2	95.686 ***
	2명	2.3	8.0	6.3	3.4	1.1	
	3명	9.1	10.1	5.4	4.0	1.4	
	4명 이상	9.6	5.3	6.2	4.9	4.5	
거주지역	광역시	7.3	8.7	3.4	5.3	2.7	40.445 **
	시부	9.6	6.4	7.1	4.0	3.7	
	군부	2.5	2.5	11.4	1.3	1.3	
소득계층	하층	7.5	6.0	6.0	1.5	1.5	36.086
	중하층	7.8	5.3	6.8	4.3	2.8	
	중간층	7.9	8.5	5.3	4.1	3.6	
	중상(상)층	10.6	9.1	3.0	9.1	3.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6.9	1.7	1.7	3.4	1.7	61.637 ***
	고졸	7.2	7.2	5.8	2.2	2.9	
	대졸 이상	8.9	7.7	6.3	6.3	3.4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5.7	6.0	6.0	5.0	2.6	79.400 ***
	별거/사별/이혼	5.1	5.1	6.8	1.7	1.7	
	미혼(미혼 부·모 포함)	16.3	11.3	5.0	2.7	5.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8.2	7.9	6.5	7.6	3.4	77.539 **
	임시일용직	6.1	6.1	6.1	0.0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5.2	6.5	6.5	4.6	2.6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0	0.0	11.1	
	실업자	6.8	10.2	6.8	0.0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9.5	6.4	4.9	2.3	3.6	22.222 **
	정규직	8.2	7.9	6.4	7.6	3.5	
월평균 가구소득	비정규직	6.7	6.7	6.7	2.2	0.0	78.800 **
	100만원 미만	7.5	4.5	4.5	6.0	6.0	
	100만원 대	8.4	6.5	5.1	2.5	1.1	
	200만원 대	8.5	5.4	7.1	5.7	3.3	
	300만원 대	6.3	11.5	6.3	4.6	2.3	
	400만원 대	8.3	20.8	0.0	0.0	4.2	
	500만원 이상	8.8	5.9	0.0	0.0	14.7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34〉 귀하는 정부가 보건복지정책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계속)

(단위: %)

구분		영유아·아동	노인	청소년
전체		24.5	23.2	22.3
성별	남	27.5	20.9	20.9
	여	21.5	25.5	23.7
연령	만 19~29세	21.2	17.6	22.9
	만 30~39세	40.8	9.8	23.0
	만 40~49세	25.9	16.7	33.3
	만 50~59세	20.7	27.3	21.1
	만 60세 이상	16.4	40.8	11.3
가구원수	1명	16.9	23.4	16.9
	2명	20.5	35.8	14.2
	3명	28.5	21.7	18.8
	4명 이상	24.9	19.4	28.3
거주지역	광역시	25.5	18.2	23.2
	시부	24.7	28.2	20.5
	군부	17.7	20.3	27.8
소득계층	하층	26.9	29.9	11.9
	중하층	21.4	25.2	22.2
	중간층	26.7	21.5	23.7
	중상(상)층	25.4	16.4	23.9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9.0	51.7	10.3
	고졸	18.4	26.5	22.9
	대졸 이상	30.6	16.9	23.2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26.1	23.5	23.2
	별거/사별/이혼	13.6	42.4	6.8
	미혼(미혼 부·모 포함)	22.1	17.1	23.4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30.7	17.7	22.5
	임시일용직	12.1	27.3	18.2
	고용주 및 자영업자	24.8	25.5	23.5
	무급가족종사자	11.1	11.1	22.2
	실업자	13.6	35.6	10.2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1.7	25.3	23.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31.2	18.1	22.2
	비정규직	13.3	22.2	2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3.4	50.7	16.4
	100만원 대	25.1	27.6	21.5
	200만원 대	26.1	18.4	24.0
	300만원 대	26.3	21.1	22.3
	400만원 대	16.7	25.0	20.8
	500만원 이상	17.6	2.9	20.6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35〉 귀하는 정부가 보건복지정책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단위: %)

구분		청년	중장년	기타	X ²
전체		16.2	13.6	0.2	-
성별	남	15.4	15.2	0.0	11.174 *
	여	17.0	11.9	0.4	
연령	만 19-29세	31.2	7.1	0.0	145.858 ***
	만 30-39세	13.2	13.2	0.0	
	만 40-49세	8.8	14.8	0.5	
	만 50-59세	12.8	18.1	0.0	
	만 60세 이상	17.8	13.1	0.5	
가구원수	1명	19.5	23.4	0.0	47.010 ***
	2명	16.5	12.5	0.6	
	3명	15.2	15.5	0.4	
	4명 이상	16.2	11.3	0.0	
거주지역	광역시	16.6	16.2	0.2	27.486 **
	시부	14.5	12.0	0.0	
	군부	24.1	8.9	1.3	
소득계층	하층	17.9	13.4	0.0	16.813
	중하층	16.9	14.4	0.0	
	중간층	14.3	13.4	0.4	
	중상(상)층	23.9	10.4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6.9	10.3	1.7	62.784 ***
	고졸	18.4	13.7	0.2	
	대졸 이상	15.3	13.9	0.0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2.7	14.3	0.1	60.578 ***
	별거/사별/이혼	15.3	20.3	1.7	
	미혼(미혼 부·모 포함)	27.9	9.5	0.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3.0	16.1	0.0	49.777 **
	임시일용직	21.2	21.2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12.4	13.1	0.7	
	무급가족종사자	44.4	11.1	0.0	
	실업자	20.3	20.3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18.9	10.0	0.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2.5	16.0	0.0	7.838 +
	비정규직	22.2	20.0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1.9	7.5	0.0	62.556 ***
	100만원 대	12.7	12.7	0.4	
	200만원 대	16.9	14.4	0.2	
	300만원 대	16.6	13.7	0.0	
	400만원 대	16.7	20.8	0.0	
	500만원 이상	41.2	17.6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36〉 귀하는 정부가 보건복지정책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 (계속)

(단위: %)

구분		청소년	노인	영유아·아동
전체		23.8	22.7	19.9
성별	남	22.0	24.0	19.4
	여	25.7	21.5	20.4
연령	만 19~29세	28.2	14.7	25.3
	만 30~39세	33.9	19.0	15.5
	만 40~49세	22.7	21.8	18.5
	만 50~59세	17.7	27.4	18.1
	만 60세 이상	19.7	28.2	22.5
가구원수	1명	26.0	23.4	14.3
	2명	20.5	27.8	21.6
	3명	26.7	22.7	19.9
	4명 이상	23.0	20.7	20.3
거주지역	광역시	21.2	23.7	18.2
	시부	25.4	21.2	23.1
	군부	29.1	26.6	10.1
소득계층	하층	26.9	26.9	11.9
	중하층	21.7	24.2	20.4
	중간층	26.1	20.3	22.2
	중상(상)층	17.9	26.9	9.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5.5	29.3	20.7
	고졸	20.6	25.3	22.0
	대졸 이상	27.7	19.6	18.0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22.6	24.5	19.5
	별거/사별/이혼	22.0	28.8	16.9
	미혼(미혼 부·모 포함)	28.4	15.3	22.1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26.8	18.6	20.6
	임시일용직	21.2	24.2	15.2
	고용주 및 자영업자	21.7	25.0	19.1
	무급가족종사자	33.3	33.3	11.1
	실업자	16.9	33.9	18.6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3.0	23.5	20.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27.4	18.1	20.7
	비정규직	17.8	26.7	15.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2.4	17.9	35.8
	100만원 대	20.4	28.4	18.2
	200만원 대	26.6	20.2	19.8
	300만원 대	21.3	20.7	18.4
	400만원 대	45.8	16.7	8.3
	500만원 이상	17.6	32.4	20.6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37〉 귀하는 정부가 보건복지정책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

(단위: %)

구분		중장년	청년	기타	X ²
전체		16.6	16.1	0.8	-
성별	남	15.8	17.8	1.0	4.951
	여	17.4	14.4	0.6	
연령	만 19-29세	12.9	18.8	0.0	46.923 ***
	만 30-39세	15.5	16.1	0.0	
	만 40-49세	17.6	19.0	0.5	
	만 50-59세	18.1	16.4	2.2	
	만 60세 이상	17.8	10.8	0.9	
가구원수	1명	16.9	19.5	0.0	21.895
	2명	16.5	12.5	1.1	
	3명	19.1	10.5	1.1	
	4명 이상	15.1	20.3	0.6	
거주지역	광역시	18.0	17.8	1.1	14.917
	시부	15.4	14.3	0.6	
	군부	16.5	17.7	0.0	
소득계층	하층	17.9	13.4	3.0	37.469 **
	중하층	18.4	14.6	0.8	
	중간층	14.7	16.7	0.0	
	중상(상)층	17.9	23.9	4.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5.9	8.6	0.0	20.977 *
	고졸	14.1	17.0	0.9	
	대졸 이상	17.8	16.2	0.8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6.9	15.5	1.1	17.038 +
	별거/사별/이혼	20.3	11.9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14.9	19.4	0.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7.5	15.8	0.8	33.694
	임시일용직	6.1	33.3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13.2	21.1	0.0	
	무급가족종사자	22.2	0.0	0.0	
	실업자	13.6	13.6	3.4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18.4	13.8	0.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7.8	15.5	0.6	13.478 *
	비정규직	6.7	31.1	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4.9	9.0	0.0	51.958 **
	100만원 대	18.2	13.5	1.5	
	200만원 대	16.0	16.9	0.5	
	300만원 대	19.0	20.7	0.0	
	400만원 대	8.3	20.8	0.0	
	500만원 이상	8.8	14.7	5.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38〉 귀하는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정책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계속)

(단위: %)

구분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장애인
전체		38.1	20.1	20.1
성별	남	37.7	19.4	20.9
	여	38.5	20.9	19.2
연령	만 19-29세	35.9	20.6	22.9
	만 30-39세	38.5	23.6	20.7
	만 40-49세	48.1	21.8	17.6
	만 50-59세	35.2	21.1	22.5
	만 60세 이상	32.4	14.1	17.4
가구원수	1명	36.4	19.5	20.8
	2명	36.9	16.5	15.3
	3명	32.9	20.9	22.7
	4명 이상	41.9	21.1	20.2
거주지역	광역시	39.0	16.4	25.5
	시부	33.8	25.3	16.4
	군부	59.5	8.9	12.7
소득계층	하층	37.3	20.9	7.5
	중하층	38.5	21.7	19.1
	중간층	36.7	19.4	22.6
	중상(상)층	46.3	14.9	20.9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6.2	13.8	13.8
	고졸	37.4	19.7	20.6
	대졸 이상	38.9	21.2	20.4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38.1	21.1	19.2
	별거/사별/이혼	32.2	10.2	23.7
	미혼(미혼 부·모 포함)	39.6	19.4	22.1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35.8	23.1	22.0
	임시일용직	42.4	27.3	6.1
	고용주 및 자영업자	45.1	12.4	19.6
	무급가족종사자	33.3	11.1	55.6
	실업자	25.4	20.3	16.9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39.1	19.9	19.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35.9	22.4	22.4
	비정규직	40.0	31.1	6.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2.8	19.4	9.0
	100만원 대	41.5	15.3	17.5
	200만원 대	40.9	20.9	20.2
	300만원 대	29.1	25.7	30.9
	400만원 대	37.5	12.5	16.7
	500만원 이상	32.4	26.5	8.8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39〉 귀하는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정책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단위: %)

구분		노인	이주민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 주민 등)	기타	X ²
전체		19.9	1.7	0.1	-
성별	남	20.2	1.6	0.2	1.770
	여	19.6	1.8	0.0	
연령	만 19-29세	17.1	3.5	0.0	68.648 ***
	만 30-39세	13.8	3.4	0.0	
	만 40-49세	11.6	0.5	0.5	
	만 50-59세	19.8	1.3	0.0	
	만 60세 이상	35.7	0.5	0.0	
가구원수	1명	23.4	0.0	0.0	36.476 **
	2명	31.3	0.0	0.0	
	3명	19.9	3.2	0.4	
	4명 이상	15.1	1.7	0.0	
거주지역	광역시	17.3	1.6	0.2	44.315 ***
	시부	22.4	2.1	0.0	
	군부	19.0	0.0	0.0	
소득계층	하층	34.3	0.0	0.0	20.118
	중하층	18.9	1.8	0.0	
	중간층	19.2	1.9	0.2	
	중상(상)층	16.4	1.5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6.2	0.0	0.0	14.720
	고졸	20.6	1.6	0.0	
	대졸 이상	17.3	2.0	0.2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9.6	1.8	0.1	13.288
	별거/사별/이혼	33.9	0.0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17.1	1.8	0.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6.1	2.8	0.3	43.760 *
	임시일용직	24.2	0.0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22.2	0.7	0.0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0	
	실업자	37.3	0.0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19.9	1.5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6.3	2.6	0.3	6.743
	비정규직	20.0	2.2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9.9	9.0	0.0	77.583 ***
	100만원 대	25.1	0.4	0.4	
	200만원 대	16.0	1.9	0.0	
	300만원 대	13.7	0.6	0.0	
	400만원 대	29.2	4.2	0.0	
	500만원 이상	32.4	0.0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40〉 귀하는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정책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 (계속)

(단위: %)

구분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전체		26.1	25.1	23.0
성별	남	26.1	24.0	24.8
	여	26.1	26.3	21.3
연령	만 19~29세	20.6	25.3	24.7
	만 30~39세	26.4	24.7	26.4
	만 40~49세	26.0	29.8	26.0
	만 50~59세	27.8	24.7	21.1
	만 60세 이상	28.6	21.1	17.8
가구원수	1명	24.7	24.7	22.1
	2명	31.8	18.2	19.3
	3명	22.0	25.6	24.5
	4명 이상	26.7	27.5	23.7
거주지역	광역시	23.3	26.0	25.8
	시부	27.4	23.4	20.7
	군부	34.2	30.4	21.5
소득계층	하층	26.9	16.4	19.4
	중하층	27.5	22.2	23.2
	중간층	25.6	27.3	24.3
	중상(상)층	21.2	36.4	16.7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6.2	20.7	20.7
	고졸	27.1	23.5	22.9
	대졸 이상	24.0	27.1	23.4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27.7	25.3	22.0
	별거/사별/이혼	30.5	20.3	16.9
	미혼(미혼 부·모 포함)	19.8	25.7	27.9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25.7	27.4	23.7
	임시일용직	15.2	33.3	18.2
	고용주 및 자영업자	26.1	22.2	24.8
	무급가족종사자	33.3	22.2	22.2
	실업자	27.1	25.4	13.6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7.1	23.5	23.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25.4	28.4	24.0
	비정규직	20.0	24.4	17.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6.9	22.4	31.3
	100만원 대	29.1	22.9	21.1
	200만원 대	28.7	25.2	21.9
	300만원 대	18.4	23.6	27.6
	400만원 대	16.7	45.8	16.7
	500만원 이상	14.7	41.2	17.6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41〉 귀하는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정책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

(단위: %)

구분		저소득층	이주민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 주민 등)	기타	X ²
전체		21.8	3.8	0.1	-
성별	남	20.8	4.4	0.0	4.217
	여	22.9	3.2	0.2	
연령	만 19~29세	24.1	4.7	0.6	27.136
	만 30~39세	18.4	4.0	0.0	
	만 40~49세	16.7	1.4	0.0	
	만 50~59세	22.5	4.0	0.0	
	만 60세 이상	27.2	5.2	0.0	
가구원수	1명	28.6	0.0	0.0	22.369 +
	2명	26.7	4.0	0.0	
	3명	22.7	4.7	0.4	
	4명 이상	18.3	3.8	0.0	
거주지역	광역시	20.1	4.6	0.2	17.286 +
	시부	25.1	3.3	0.0	
	군부	11.4	2.5	0.0	
소득계층	하층	32.8	4.5	0.0	21.801
	중하층	23.9	3.0	0.3	
	중간층	19.0	3.8	0.0	
	중상(상)층	18.2	7.6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0.7	1.7	0.0	7.466
	고졸	22.9	3.6	0.0	
	대졸 이상	21.0	4.2	0.2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21.0	3.8	0.1	10.447
	별거/사별/이혼	27.1	5.1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23.0	3.6	0.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9.5	3.7	0.0	16.411
	임시일용직	27.3	6.1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22.2	4.6	0.0	
	무급가족종사자	11.1	11.1	0.0	
	실업자	32.2	1.7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2.0	3.6	0.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9.3	2.9	0.0	9.298 +
	비정규직	26.7	11.1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4	9.0	0.0	40.970 *
	100만원 대	22.2	4.4	0.4	
	200만원 대	21.6	2.6	0.0	
	300만원 대	27.0	3.4	0.0	
	400만원 대	20.8	0.0	0.0	
	500만원 이상	17.6	8.8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42〉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및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생계급여

(단위: %)

구분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	조금 더 완화해야한다	전면 폐지해야한다	χ^2
전체		58.1	39.3	2.6	-
성별	남	57.7	39.5	2.8	0.150
	여	58.5	39.1	2.4	
연령	만 19-29세	64.1	31.8	4.1	10.108
	만 30-39세	52.9	45.4	1.7	
	만 40-49세	57.4	40.3	2.3	
	만 50-59세	60.8	37.4	1.8	
	만 60세 이상	55.4	41.3	3.3	
가구원수	1명	51.9	45.5	2.6	9.156
	2명	63.1	35.8	1.1	
	3명	56.3	42.2	1.4	
	4명 이상	58.3	37.9	3.8	
거주지역	광역시	56.0	41.0	3.0	4.901
	시부	58.5	38.8	2.7	
	군부	67.1	32.9	0.0	
소득계층	하층	58.2	38.8	3.0	21.076 **
	중하층	57.7	41.3	1.0	
	중간층	58.6	38.6	2.8	
	중상(상)층	56.7	32.8	10.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58.6	37.9	3.4	0.716
	고졸	57.0	40.6	2.5	
	대졸 이상	59.1	38.3	2.6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57.0	40.9	2.1	5.726
	별거/사별/이혼	55.9	39.0	5.1	
	미혼(미혼 부·모 포함)	62.2	34.2	3.6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54.1	43.4	2.5	14.514
	임시일용직	78.8	18.2	3.0	
	고용주 및 자영업자	60.1	35.3	4.6	
	무급가족종사자	77.8	22.2	0.0	
	실업자	54.2	44.1	1.7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59.3	38.6	2.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54.8	42.9	2.3	3.566
	비정규직	66.7	28.9	4.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2.7	37.3	0.0	20.818 *
	100만원 대	49.8	47.3	2.9	
	200만원 대	57.4	39.8	2.8	
	300만원 대	66.9	30.3	2.9	
	400만원 대	66.7	29.2	4.2	
	500만원 이상	73.5	26.5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43〉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및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료급여

(단위: %)

구분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	조금 더 완화해야한다	전면 폐지해야한다	χ^2
전체		60.8	37.1	2.1	-
성별	남	61.3	36.2	2.6	1.351
	여	60.3	38.1	1.6	
연령	만 19-29세	60.0	37.6	2.4	3.075
	만 30-39세	56.9	40.8	2.3	
	만 40-49세	63.4	35.2	1.4	
	만 50-59세	62.6	35.7	1.8	
	만 60세 이상	60.1	37.1	2.8	
가구원수	1명	58.4	37.7	3.9	9.130
	2명	63.1	35.8	1.1	
	3명	57.8	41.5	0.7	
	4명 이상	62.1	34.9	3.0	
거주지역	광역시	63.8	33.7	2.5	9.626 *
	시부	56.6	41.3	2.1	
	군부	69.6	30.4	0.0	
소득계층	하층	64.2	32.8	3.0	11.402 +
	중하층	60.2	38.0	1.8	
	중간층	61.0	37.5	1.5	
	중상(상)층	59.7	32.8	7.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63.8	32.8	3.4	0.939
	고졸	60.5	37.4	2.0	
	대졸 이상	60.7	37.3	2.0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61.5	36.9	1.7	3.908
	별거/사별/이혼	55.9	39.0	5.1	
	미혼(미혼 부·모 포함)	59.9	37.4	2.7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59.4	38.6	2.0	7.930
	임시일용직	66.7	30.3	3.0	
	고용주 및 자영업자	64.1	33.3	2.6	
	무급가족종사자	88.9	11.1	0.0	
	실업자	50.8	45.8	3.4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61.1	37.1	1.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59.5	38.8	1.7	2.182
	비정규직	64.4	31.1	4.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7.2	32.8	0.0	9.970
	100만원 대	58.5	38.5	2.9	
	200만원 대	60.5	37.6	1.9	
	300만원 대	65.1	32.0	2.9	
	400만원 대	45.8	54.2	0.0	
	500만원 이상	58.8	41.2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44〉 귀하는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청절차가 얼마나 편리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청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신청하러 가기가 어렵다

(단위: %)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X ²
전체		2.0	12.3	31.3	37.2	16.0	1.2	-
성별	남	2.2	11.9	31.0	37.5	15.6	1.8	3.330
	여	1.8	12.8	31.6	36.8	16.4	0.6	
연령	만 19~29세	4.7	11.8	37.1	31.2	14.1	1.2	28.222
	만 30~39세	2.3	12.6	32.2	37.4	13.2	2.3	
	만 40~49세	0.9	13.0	31.9	38.4	14.8	0.9	
	만 50~59세	2.2	9.3	26.9	43.6	16.7	1.3	
	만 60세 이상	0.5	15.0	30.0	33.8	20.2	0.5	
가구원수	1명	2.6	10.4	29.9	42.9	11.7	2.6	24.602 +
	2명	1.1	11.9	21.6	43.2	22.2	0.0	
	3명	1.4	13.4	33.9	33.2	15.9	2.2	
	4명 이상	2.6	12.1	33.6	36.4	14.5	0.9	
거주지역	광역시	3.0	13.9	33.0	33.5	15.9	0.7	19.821 *
	시부	1.0	11.6	28.4	39.8	17.2	1.9	
	군부	2.5	7.6	39.2	41.8	8.9	0.0	
소득계층	하층	0.0	13.4	29.9	43.3	11.9	1.5	22.615 +
	중하층	2.0	10.8	29.2	39.0	17.4	1.5	
	중간층	1.7	12.4	35.2	35.0	14.7	1.1	
	중상(상)층	6.0	19.4	17.9	35.8	20.9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0	8.6	37.9	27.6	25.9	0.0	16.918 +
	고졸	1.6	11.7	30.9	38.3	17.0	0.4	
	대졸 이상	2.6	13.3	30.8	37.3	13.9	2.0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3	12.8	29.8	38.4	16.4	1.4	18.321 *
	별거/사별/이혼	1.7	18.6	28.8	35.6	15.3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4.5	9.0	36.9	33.8	14.9	0.9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7	12.1	31.3	37.7	14.6	2.5	30.605
	임시일용직	6.1	12.1	27.3	48.5	6.1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2.6	11.1	35.3	36.6	13.7	0.7	
	무급가족종사자	0.0	33.3	0.0	55.6	11.1	0.0	
	실업자	1.7	5.1	37.3	39.0	16.9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1.8	13.6	29.9	35.3	18.9	0.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7	12.0	30.0	38.8	15.2	2.3	5.531
	비정규직	4.4	13.3	37.8	37.8	4.4	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10.4	23.9	47.8	17.9	0.0	31.824
	100만원 대	2.9	11.3	32.7	36.0	16.7	0.4	
	200만원 대	1.9	11.8	32.7	37.4	14.8	1.4	
	300만원 대	1.7	14.3	26.9	40.6	14.3	2.3	
	400만원 대	0.0	8.3	29.2	33.3	25.0	4.2	
	500만원 이상	2.9	23.5	41.2	8.8	23.5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45〉 귀하는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청절차가 얼마나 편리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

(단위: %)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X ²
전체		1.9	8.5	24.6	42.4	20.8	1.8	-
성별	남	2.2	9.1	23.7	43.7	19.0	2.4	5.048
	여	1.6	7.9	25.5	41.1	22.7	1.2	
연령	만 19-29세	1.8	15.3	22.9	41.2	15.3	3.5	40.011 **
	만 30-39세	2.3	8.6	27.6	42.0	16.1	3.4	
	만 40-49세	1.9	6.9	21.8	48.1	19.0	2.3	
	만 50-59세	2.2	4.8	24.7	41.0	26.9	0.4	
	만 60세 이상	1.4	8.5	26.3	39.4	24.4	0.0	
가구원수	1명	0.0	3.9	28.6	35.1	26.0	6.5	34.832 **
	2명	0.6	9.1	21.6	42.0	26.7	0.0	
	3명	0.7	7.9	27.1	44.8	18.1	1.4	
	4명 이상	3.4	9.4	23.6	42.3	19.4	1.9	
거주지역	광역시	2.3	9.6	30.1	39.6	16.9	1.6	42.215 ***
	시부	1.7	7.7	18.0	43.6	26.8	2.3	
	군부	1.3	7.6	34.2	50.6	6.3	0.0	
소득계층	하층	0.0	10.4	22.4	47.8	17.9	1.5	19.470
	중하층	2.3	8.6	23.4	41.6	21.9	2.3	
	중간층	1.1	8.1	26.7	42.4	20.0	1.7	
	중상(상)층	7.5	9.0	19.4	41.8	22.4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7	3.4	24.1	39.7	31.0	0.0	11.230
	고졸	2.0	9.0	24.4	43.3	20.4	0.9	
	대졸 이상	1.8	8.7	24.8	41.9	20.0	2.8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2.1	7.2	24.2	42.8	21.8	1.8	14.564
	별거/사별/이혼	3.4	8.5	32.2	32.2	23.7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0.9	12.6	23.9	43.7	16.7	2.3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7	7.0	23.1	44.8	19.2	4.2	37.729 *
	임시일용직	3.0	9.1	30.3	45.5	12.1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1.3	7.2	24.8	45.8	20.9	0.0	
	무급가족종사자	11.1	11.1	33.3	33.3	11.1	0.0	
	실업자	1.7	8.5	23.7	52.5	13.6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0	10.2	25.3	37.3	24.3	0.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7	6.1	22.7	45.8	19.5	4.1	8.574
	비정규직	2.2	15.6	31.1	37.8	11.1	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10.4	28.4	44.8	16.4	0.0	42.242 *
	100만원 대	2.9	9.5	26.2	42.5	18.2	0.7	
	200만원 대	1.2	7.5	24.9	42.6	22.1	1.6	
	300만원 대	2.3	9.1	17.7	44.6	23.4	2.9	
	400만원 대	0.0	4.2	25.0	45.8	12.5	12.5	
	500만원 이상	5.9	8.8	35.3	20.6	26.5	2.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46〉 귀하는 향후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단위: %)

구분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
전체		27.5	24.5	21.2
성별	남	29.6	23.9	22.3
	여	25.3	25.1	20.0
연령	만 19-29세	30.0	17.6	19.4
	만 30-39세	35.6	23.0	15.5
	만 40-49세	25.9	25.5	24.1
	만 50-59세	26.0	26.0	22.9
	만 60세 이상	22.1	28.6	22.5
가구원수	1명	40.3	19.5	18.2
	2명	21.6	29.5	21.0
	3명	23.8	27.1	23.8
	4명 이상	29.8	21.9	20.2
거주지역	광역시	28.9	22.1	23.0
	시부	28.6	26.1	21.4
	군부	12.7	27.8	10.1
소득계층	하층	29.9	29.9	16.4
	중하층	28.5	24.7	22.7
	중간층	25.8	23.5	22.0
	중상(상)층	31.3	25.4	11.9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0.7	32.8	17.2
	고졸	25.3	26.7	20.6
	대졸 이상	30.2	21.6	22.2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25.6	25.9	22.9
	별거/사별/이혼	23.7	27.1	16.9
	미혼(미혼 부·모 포함)	34.7	19.4	16.7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34.1	21.1	25.6
	임시일용직	24.2	27.3	12.1
	고용주 및 자영업자	23.5	24.8	16.3
	무급가족종사자	11.1	11.1	22.2
	실업자	37.3	25.4	27.1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2.3	27.4	18.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32.9	21.6	26.2
	비정규직	35.6	22.2	11.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3.9	29.9	23.9
	100만원 대	24.0	29.8	20.0
	200만원 대	28.5	25.2	20.7
	300만원 대	25.7	17.1	25.1
	400만원 대	25.0	20.8	20.8
	500만원 이상	61.8	2.9	11.8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47〉 귀하는 향후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공공적 성격을 갖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X ²
전체		14.9	11.9	-
성별	남	13.0	11.1	5.442
	여	16.8	12.8	
연령	만 19~29세	15.9	17.1	32.774 **
	만 30~39세	15.5	10.3	
	만 40~49세	18.5	6.0	
	만 50~59세	13.2	11.9	
	만 60세 이상	11.7	15.0	
가구원수	1명	5.2	16.9	23.437 *
	2명	14.8	13.1	
	3명	14.4	10.8	
	4명 이상	16.8	11.3	
거주지역	광역시	15.7	10.3	50.282 ***
	시부	14.1	9.8	
	군부	15.2	34.2	
소득계층	하층	6.0	17.9	15.450
	중하층	13.4	10.8	
	중간층	16.6	12.2	
	중상(상)층	20.9	10.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3.8	15.5	18.999 *
	고졸	12.6	14.8	
	대졸 이상	17.1	8.9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4.7	10.8	15.264 +
	별거/사별/이혼	18.6	13.6	
	미혼(미혼 부·모 포함)	14.4	14.9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3.0	6.2	67.195 ***
	임시일용직	21.2	15.2	
	고용주 및 자영업자	19.0	16.3	
	무급가족종사자	0.0	55.6	
	실업자	5.1	5.1	
	비경제활동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16.4	15.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3.1	6.1	7.412
	비정규직	17.8	13.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9	4.5	44.497 **
	100만원 대	11.6	14.5	
	200만원 대	14.8	10.8	
	300만원 대	18.9	13.1	
	400만원 대	20.8	12.5	
	500만원 이상	11.8	11.8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48〉 귀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계속)

(단위: %)

구분		지역주민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방문형사업기관(도시락 배달 등) 종사자
전체		46.6	32.9	10.8
성별	남	47.8	34.2	9.1
	여	45.3	31.6	12.6
연령	만 19-29세	38.8	41.8	11.8
	만 30-39세	47.1	27.6	12.1
	만 40-49세	46.8	32.4	7.4
	만 50-59세	50.2	31.7	10.6
	만 60세 이상	48.4	31.9	12.7
가구원수	1명	44.2	41.6	6.5
	2명	47.7	35.8	11.4
	3명	52.3	25.3	14.4
	4명 이상	43.2	34.9	9.1
거주지역	광역시	45.8	32.1	10.3
	시부	49.0	30.5	11.6
	군부	36.7	51.9	8.9
소득계층	하층	50.7	26.9	17.9
	중하층	45.8	32.2	14.4
	중간층	48.0	33.7	7.5
	중상(상)층	37.3	37.3	6.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48.3	36.2	10.3
	고졸	45.7	34.8	11.9
	대졸 이상	47.2	30.8	9.9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48.1	30.3	11.1
	별거/사별/이혼	37.3	45.8	8.5
	미혼(미혼 부·모 포함)	44.1	37.8	10.4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47.9	30.1	10.1
	임시일용직	39.4	42.4	12.1
	고용주 및 자영업자	51.0	36.6	7.8
	무급가족종사자	44.4	33.3	22.2
	실업자	49.2	35.6	6.8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44.0	32.7	12.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47.5	30.9	9.9
	비정규직	44.4	33.3	13.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4.8	29.9	23.9
	100만원 대	48.7	33.8	9.5
	200만원 대	49.2	34.1	8.0
	300만원 대	40.0	34.9	14.9
	400만원 대	37.5	16.7	12.5
	500만원 이상	41.2	17.6	8.8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49〉 귀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단위: %)

구분		학교 및 민간 복지기관 종사자	기타	χ^2
전체		9.2	0.5	-
성별	남	8.7	0.2	5.775
	여	9.7	0.8	
연령	만 19-29세	7.6	0.0	27.904 *
	만 30-39세	12.6	0.6	
	만 40-49세	13.4	0.0	
	만 50-59세	6.2	1.3	
	만 60세 이상	6.6	0.5	
가구원수	1명	6.5	1.3	28.037 **
	2명	5.1	0.0	
	3명	7.6	0.4	
	4명 이상	12.1	0.6	
거주지역	광역시	11.2	0.7	19.256 *
	시부	8.5	0.4	
	군부	2.5	0.0	
소득계층	하층	4.5	0.0	46.620 ***
	중하층	7.6	0.0	
	중간층	10.4	0.4	
	중상(상)층	14.9	4.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5.2	0.0	9.171
	고졸	7.4	0.2	
	대졸 이상	11.3	0.8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9.9	0.6	9.915
	별거/사별/이혼	8.5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7.2	0.5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1.3	0.6	17.518
	임시일용직	6.1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4.6	0.0	
	무급가족종사자	0.0	0.0	
	실업자	8.5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9.7	0.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1.1	0.6	1.045
	비정규직	8.9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5	0.0	80.205 ***
	100만원 대	7.6	0.4	
	200만원 대	8.5	0.2	
	300만원 대	10.3	0.0	
	400만원 대	29.2	4.2	
	500만원 이상	26.5	5.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50〉 귀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

(단위: %)

구분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방문형사업 기관 (도시락 배달 등) 종사자	학교 및 민간 복지기관 종사자	지역주민	X ²
전체		31.6	24.8	24.1	19.6	-
성별	남	33.7	25.2	22.6	18.5	3.077
	여	29.4	24.3	25.6	20.7	
연령	만 19-29세	29.0	23.7	22.5	24.9	11.320
	만 30-39세	35.3	23.7	24.3	16.8	
	만 40-49세	28.2	25.5	23.6	22.7	
	만 50-59세	29.1	26.9	25.6	18.5	
	만 60세 이상	36.8	23.6	24.1	15.6	
가구원수	1명	27.3	28.6	23.4	20.8	13.919
	2명	26.9	26.9	29.7	16.6	
	3명	36.8	19.9	25.3	18.1	
	4명 이상	31.0	26.3	21.4	21.4	
거주지역	광역시	32.4	23.7	21.5	22.4	21.507 **
	시부	32.7	22.7	26.7	17.9	
	군부	20.3	43.0	22.8	13.9	
소득계층	하층	29.9	22.4	23.9	23.9	5.728
	중하층	29.7	26.7	24.7	18.9	
	중간층	33.9	24.0	23.6	18.5	
	중상(상)층	28.4	20.9	23.9	26.9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9.3	29.3	19.0	22.4	10.218
	고졸	28.9	27.1	26.9	17.2	
	대졸 이상	34.3	22.2	22.2	21.4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32.6	23.7	25.0	18.7	10.860 +
	별거/사별/이혼	23.7	40.7	16.9	18.6	
	미혼(미혼 부·모 포함)	30.3	24.0	23.1	22.6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31.9	22.3	23.4	22.3	24.203 +
	임시일용직	24.2	21.2	42.4	12.1	
	고용주 및 자영업자	32.2	30.9	25.7	11.2	
	무급가족종사자	44.4	33.3	0.0	22.2	
	실업자	31.0	27.6	13.8	27.6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31.5	24.3	24.6	19.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32.2	22.2	23.1	22.5	6.853 +
	비정규직	24.4	22.2	40.0	13.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1.3	25.4	35.8	7.5	28.602 *
	100만원 대	32.4	24.0	27.3	16.4	
	200만원 대	31.5	25.8	23.7	19.0	
	300만원 대	29.7	24.6	18.3	27.4	
	400만원 대	37.5	16.7	25.0	20.8	
	500만원 이상	32.4	23.5	8.8	35.3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51〉 귀하는 향후 정부의 장애인 지원정책 방향으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계속)

(단위: %)

구분		의료, 재활, 건강관리 지원 강화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
전체		28.4	23.6	19.6
성별	남	26.1	23.3	19.4
	여	30.8	23.9	19.8
연령	만 19~29세	27.1	24.7	19.4
	만 30~39세	29.9	18.4	18.4
	만 40~49세	33.3	22.2	15.3
	만 50~59세	25.6	25.6	22.9
	만 60세 이상	26.3	26.3	21.6
가구원수	1명	33.8	19.5	19.5
	2명	29.5	28.4	17.0
	3명	27.4	20.9	21.3
	4명 이상	27.7	24.0	19.6
거주지역	광역시	27.3	22.6	21.0
	시부	32.0	19.7	18.9
	군부	12.7	53.2	16.5
소득계층	하층	31.3	16.4	23.9
	중하층	30.7	21.9	19.9
	중간층	28.1	24.9	18.3
	중상(상)층	13.4	31.3	22.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9.3	29.3	10.3
	고졸	27.1	23.8	23.8
	대졸 이상	29.4	22.8	16.9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28.4	24.2	19.5
	별거/사별/이혼	16.9	25.4	23.7
	미혼(미혼 부·모 포함)	31.5	21.2	18.9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27.6	19.4	18.3
	임시일용직	24.2	30.3	18.2
	고용주 및 자영업자	23.5	28.1	21.6
	무급가족종사자	33.3	33.3	22.2
	실업자	37.3	28.8	18.6
	비경제활동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9.9	24.0	20.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27.4	19.5	18.1
	비정규직	26.7	26.7	2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5.8	17.9	20.9
	100만원 대	30.5	26.2	19.6
	200만원 대	26.8	25.9	17.6
	300만원 대	28.0	18.3	23.4
	400만원 대	25.0	20.8	4.2
	500만원 이상	20.6	14.7	32.4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52〉 귀하는 향후 정부의 장애인 지원정책 방향으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단위: %)

구분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인프라의 확대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및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장애인 학대 예방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 강화	X ²
전체		16.2	8.4	3.8	-
성별	남	19.8	8.1	3.4	10.648 +
	여	12.6	8.7	4.3	
연령	만 19-29세	17.6	8.2	2.9	19.579
	만 30-39세	19.0	10.9	3.4	
	만 40-49세	16.2	6.9	6.0	
	만 50-59세	15.9	6.6	3.5	
	만 60세 이상	13.1	9.9	2.8	
가구원수	1명	14.3	10.4	2.6	18.122
	2명	14.8	8.5	1.7	
	3명	15.9	11.6	2.9	
	4명 이상	17.2	6.2	5.3	
거주지역	광역시	16.6	9.8	2.7	50.435 ***
	시부	16.8	7.7	5.0	
	군부	10.1	5.1	2.5	
소득계층	하층	13.4	13.4	1.5	21.592
	중하층	17.1	7.1	3.3	
	중간층	16.4	7.9	4.3	
	중상(상)층	11.9	14.9	6.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2.4	6.9	1.7	16.226 +
	고졸	13.9	8.5	2.9	
	대졸 이상	17.5	8.5	4.8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6.1	7.8	4.0	8.225
	별거/사별/이혼	15.3	13.6	5.1	
	미혼(미혼 부·모 포함)	16.7	9.0	2.7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20.8	9.6	4.2	25.426
	임시일용직	9.1	12.1	6.1	
	고용주 및 자영업자	15.7	7.8	3.3	
	무급가족종사자	11.1	0.0	0.0	
	실업자	5.1	5.1	5.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14.6	7.9	3.3	3.130
	정규직	21.0	9.6	4.4	
월평균 가구소득	비정규직	11.1	11.1	4.4	73.257 ***
	100만원 미만	16.4	6.0	3.0	
	100만원 대	13.8	7.6	2.2	
	200만원 대	17.9	8.7	3.1	
	300만원 대	18.9	5.1	6.3	
	400만원 대	4.2	41.7	4.2	
	500만원 이상	8.8	8.8	14.7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53〉 귀하는 향후 정부의 장애인 지원정책 방향으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 (계속)

(단위: %)

구분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인프라의 확대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전체		21.5	20.9	18.9
성별	남	22.0	21.0	18.6
	여	21.1	20.9	19.3
연령	만 19~29세	19.4	25.3	12.4
	만 30~39세	20.1	25.9	17.8
	만 40~49세	26.0	22.8	21.4
	만 50~59세	18.1	15.5	19.0
	만 60세 이상	23.5	17.4	22.5
가구원수	1명	16.9	23.4	16.9
	2명	26.1	17.6	21.0
	3명	21.4	20.3	18.5
	4명 이상	20.7	22.2	18.8
거주지역	광역시	22.8	19.9	20.5
	시부	20.6	23.1	18.9
	군부	20.3	13.9	10.1
소득계층	하층	19.4	17.9	23.9
	중하층	23.4	19.9	22.2
	중간층	19.5	22.3	16.9
	중상(상)층	26.9	20.9	9.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4.1	20.7	20.7
	고졸	19.8	17.8	18.4
	대졸 이상	22.8	23.8	19.2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22.7	19.8	20.6
	별거/사별/이혼	11.9	11.9	22.0
	미혼(미혼 부·모 포함)	20.3	27.0	12.6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23.4	21.5	20.6
	임시일용직	27.3	9.1	12.1
	고용주 및 자영업자	19.0	16.3	19.6
	무급가족종사자	0.0	11.1	22.2
	실업자	22.0	27.1	23.7
	비경제활동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0.8	22.6	16.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23.7	21.9	20.5
	비정규직	24.4	8.9	15.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9.9	32.8	17.9
	100만원 대	21.9	20.8	20.8
	200만원 대	19.5	20.5	17.4
	300만원 대	23.0	19.5	19.0
	400만원 대	12.5	16.7	33.3
	500만원 이상	26.5	14.7	14.7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54〉 귀하는 향후 정부의 장애인 지원정책 방향으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

(단위: %)

구분		의료, 재활, 건강관리 지원 강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및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장애인 학대 예방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 강화	기타	X ²
전체		18.8	13.6	6.0	0.1	-
성별	남	18.4	14.1	5.9	0.0	1.418
	여	19.3	13.2	6.1	0.2	
연령	만 19-29세	18.8	14.1	10.0	0.0	38.382 *
	만 30-39세	19.0	11.5	5.7	0.0	
	만 40-49세	13.5	12.6	3.7	0.0	
	만 50-59세	24.3	15.5	7.1	0.4	
	만 60세 이상	18.3	14.1	4.2	0.0	
가구원수	1명	16.9	20.8	5.2	0.0	13.065
	2명	17.0	13.6	4.5	0.0	
	3명	21.0	12.7	5.8	0.4	
	4명 이상	18.6	13.0	6.8	0.0	
거주지역	광역시	17.6	12.6	6.4	0.2	25.250
	시부	19.3	13.9	4.2	0.0	
	군부	22.8	17.7	15.2	0.0	
소득계층	하층	20.9	11.9	6.0	0.0	15.607
	중하층	16.6	12.6	5.3	0.0	
	중간층	19.9	14.6	6.6	0.2	
	중상(상)층	22.4	14.9	6.0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2.1	17.2	5.2	0.0	15.961
	고졸	21.6	16.2	6.3	0.0	
	대졸 이상	17.2	10.9	5.9	0.2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9.1	12.1	5.4	0.1	29.692 **
	별거/사별/이혼	25.4	25.4	3.4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16.2	15.3	8.6	0.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7.8	11.0	5.6	0.0	32.597
	임시일용직	33.3	12.1	6.1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18.3	20.3	6.5	0.0	
	무급가족종사자	22.2	22.2	22.2	0.0	
	실업자	10.2	13.6	3.4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0.0	13.3	6.2	0.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7.0	11.4	5.6	0.0	11.310 *
	비정규직	35.6	8.9	6.7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5	11.9	3.0	0.0	34.792
	100만원 대	17.9	13.9	4.7	0.0	
	200만원 대	21.2	15.3	5.9	0.2	
	300만원 대	18.4	11.5	8.6	0.0	
	400만원 대	29.2	0.0	8.3	0.0	
	500만원 이상	20.6	14.7	8.8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55〉 귀하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커뮤니티 케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계속)

(단위: %)

구분		재가 돌봄서비스 확충	당사자에 적합한 주거 환경 개선	동네의원을 통한 재택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전체		39.4	28.3	12.9
성별	남	38.9	27.3	14.8
	여	39.9	29.4	10.9
연령	만 19-29세	39.4	25.9	8.8
	만 30-39세	35.1	29.9	13.2
	만 40-49세	39.8	28.7	16.7
	만 50-59세	42.3	26.4	13.7
	만 60세 이상	39.4	30.5	11.3
가구원수	1명	36.4	32.5	11.7
	2명	42.6	26.1	14.8
	3명	35.7	28.9	12.6
	4명 이상	40.9	28.1	12.6
거주지역	광역시	38.5	28.9	11.2
	시부	37.8	28.8	14.5
	군부	54.4	21.5	12.7
소득계층	하층	50.7	25.4	7.5
	중하층	40.6	25.4	13.1
	중간층	36.9	31.3	13.4
	중상(상)층	38.8	26.9	13.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41.4	32.8	10.3
	고졸	39.7	28.9	11.4
	대졸 이상	38.9	27.2	14.5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39.5	28.0	14.2
	별거/사별/이혼	37.3	39.0	5.1
	미혼(미혼 부·모 포함)	39.6	26.6	10.8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36.6	29.9	15.8
	임시일용직	45.5	27.3	6.1
	고용주 및 자영업자	49.0	20.3	10.5
	무급가족종사자	44.4	33.3	0.0
	실업자	30.5	25.4	15.3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38.9	30.4	11.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35.9	29.7	16.3
	비정규직	48.9	28.9	4.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2.4	31.3	25.4
	100만원 대	45.8	27.6	11.3
	200만원 대	39.3	30.8	10.4
	300만원 대	37.7	24.0	14.9
	400만원 대	29.2	41.7	8.3
	500만원 이상	38.2	8.8	26.5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56〉 귀하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커뮤니티 케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단위: %)

구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안내 강화	안부 확인 등 상시적 대응 체계 구축	χ^2
전체		11.6	7.8	-
성별	남	10.5	8.5	5.131
	여	12.8	7.1	
연령	만 19-29세	17.1	8.8	23.475
	만 30-39세	14.9	6.9	
	만 40-49세	9.7	5.1	
	만 50-59세	10.6	7.0	
	만 60세 이상	7.5	11.3	
가구원수	1명	14.3	5.2	7.229
	2명	9.1	7.4	
	3명	13.4	9.4	
	4명 이상	11.1	7.4	
거주지역	광역시	11.8	9.6	13.828 +
	시부	11.8	7.1	
	군부	8.9	2.5	
소득계층	하층	10.4	6.0	16.358
	중하층	11.8	9.1	
	중간층	10.4	7.9	
	중상(상)층	19.4	1.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0.3	5.2	3.561
	고졸	11.7	8.3	
	대졸 이상	11.7	7.7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0.0	8.3	14.155 +
	별거/사별/이혼	13.6	5.1	
	미혼(미혼 부·모 포함)	16.2	6.8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2.4	5.4	24.780
	임시일용직	12.1	9.1	
	고용주 및 자영업자	11.1	9.2	
	무급가족종사자	11.1	11.1	
	실업자	13.6	15.3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10.7	8.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2.5	5.5	5.728
	비정규직	11.1	6.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4.9	6.0	54.469 ***
	100만원 대	8.7	6.5	
	200만원 대	12.7	6.8	
	300만원 대	9.1	14.3	
	400만원 대	20.8	0.0	
	500만원 이상	20.6	5.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57〉 귀하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커뮤니티 케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 (계속)

(단위: %)

구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안내 강화	동네의원을 통한 재택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당사자에 적합한 주거 환경 개선
전체		25.4	21.4	20.5
성별	남	27.1	22.7	19.0
	여	23.7	20.1	22.1
연령	만 19-29세	23.5	21.8	20.0
	만 30-39세	24.1	20.7	23.6
	만 40-49세	29.2	19.0	18.5
	만 50-59세	21.1	23.3	23.3
	만 60세 이상	28.8	22.2	17.5
가구원수	1명	27.3	24.7	14.3
	2명	25.0	21.0	18.2
	3명	25.4	22.5	21.0
	4명 이상	25.3	20.4	22.1
거주지역	광역시	21.7	23.7	24.0
	시부	27.2	20.3	17.4
	군부	35.4	15.2	20.3
소득계층	하층	32.8	11.9	14.9
	중하층	25.7	21.9	22.9
	중간층	25.6	23.5	18.3
	중상(상)층	15.2	13.6	27.3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6.2	20.7	17.2
	고졸	26.1	21.1	19.6
	대졸 이상	23.6	21.8	21.8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25.6	20.5	21.0
	별거/사별/이혼	27.1	32.2	11.9
	미혼(미혼 부·모 포함)	24.3	21.6	21.2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24.5	20.3	22.8
	임시일용직	21.2	24.2	18.2
	고용주 및 자영업자	30.7	24.2	19.0
	무급가족종사자	55.6	22.2	11.1
	실업자	15.3	25.4	15.3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5.4	20.5	20.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24.8	19.8	22.4
	비정규직	20.0	26.7	2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2.4	26.9	16.4
	100만원 대	24.0	22.9	23.3
	200만원 대	25.5	22.2	21.5
	300만원 대	30.3	14.9	14.9
	400만원 대	25.0	29.2	8.3
	500만원 이상	17.6	17.6	32.4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58〉 귀하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커뮤니티 케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

(단위: %)

구분		재가 돌봄서비스 확충	안부 확인 등 상시적 대응 체계 구축	기타	X ²
전체		18.6	13.5	0.5	-
성별	남	18.6	12.5	0.2	5.849
	여	18.7	14.6	0.8	
연령	만 19-29세	19.4	14.7	0.6	18.725
	만 30-39세	21.8	9.8	0.0	
	만 40-49세	19.9	13.4	0.0	
	만 50-59세	17.2	14.5	0.4	
	만 60세 이상	15.6	14.6	1.4	
가구원수	1명	24.7	9.1	0.0	14.464
	2명	17.0	17.0	1.7	
	3명	18.1	12.7	0.4	
	4명 이상	18.5	13.4	0.2	
거주지역	광역시	18.0	11.9	0.7	21.310 *
	시부	20.5	14.1	0.4	
	군부	10.1	19.0	0.0	
소득계층	하층	16.4	23.9	0.0	37.760 ***
	중하층	15.1	13.6	0.8	
	중간층	22.0	10.2	0.4	
	중상(상)층	18.2	25.8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9.0	6.9	0.0	11.863
	고졸	16.9	15.5	0.9	
	대졸 이상	20.2	12.5	0.2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8.7	13.5	0.7	12.178 *
	별거/사별/이혼	10.2	18.6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20.7	12.2	0.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22.8	9.6	0.0	39.178
	임시일용직	12.1	24.2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10.5	15.0	0.7	
	무급가족종사자	0.0	11.1	0.0	
	실업자	28.8	15.3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17.4	15.4	1.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23.3	9.6	0.0	7.947 +
	비정규직	11.1	20.0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3.4	17.9	3.0	41.991 *
	100만원 대	14.9	14.2	0.7	
	200만원 대	17.7	13.0	0.2	
	300만원 대	28.6	11.4	0.0	
	400만원 대	20.8	16.7	0.0	
	500만원 이상	17.6	14.7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59〉 귀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중장기적 재정의 안정성(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매우 불안정 하다	불안정 하다	다소 불안정 하다	다소 안정적 이다	안정적 이다	매우 안정적 이다	χ^2
전체		5.6	23.8	31.7	25.0	12.2	1.7	-
성별	남	5.7	21.5	33.8	25.3	11.5	2.2	5.490
	여	5.5	26.1	29.6	24.7	13.0	1.2	
연령	만 19-29세	4.7	21.2	38.8	23.5	8.2	3.5	24.386
	만 30-39세	4.6	25.3	35.1	21.8	12.1	1.1	
	만 40-49세	9.3	20.4	30.1	25.9	12.5	1.9	
	만 50-59세	5.3	26.4	26.4	26.0	14.5	1.3	
	만 60세 이상	3.8	25.4	30.5	26.8	12.7	0.9	
가구원수	1명	6.5	15.6	32.5	32.5	9.1	3.9	18.022
	2명	4.5	28.4	31.3	24.4	11.4	0.0	
	3명	3.2	24.5	33.6	24.5	12.3	1.8	
	4명 이상	7.2	23.0	30.6	24.3	13.0	1.9	
거주지역	광역시	3.6	21.9	33.7	27.8	11.4	1.6	43.347 ***
	시부	7.1	27.6	32.0	19.1	12.2	2.1	
	군부	7.6	11.4	19.0	45.6	16.5	0.0	
소득계층	하층	10.4	29.9	17.9	25.4	16.4	0.0	35.548 **
	중하층	5.3	25.9	36.5	19.6	9.8	2.8	
	중간층	5.3	22.2	30.3	27.3	13.6	1.3	
	중상(상)층	4.5	16.4	26.9	40.3	11.9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4	29.3	34.5	31.0	1.7	0.0	17.460 +
	고졸	5.8	24.2	29.8	26.5	13.0	0.7	
	대졸 이상	5.6	22.8	33.1	23.0	12.7	2.8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6.3	24.9	28.7	24.3	14.3	1.5	29.577 **
	별거/사별/이혼	1.7	20.3	32.2	39.0	6.8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4.5	21.2	41.4	23.4	6.8	2.7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6.5	21.4	33.8	22.8	12.7	2.8	38.764 *
	임시일용직	0.0	24.2	21.2	45.5	9.1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5.2	28.1	33.3	20.9	12.4	0.0	
	무급가족종사자	0.0	22.2	11.1	55.6	11.1	0.0	
	실업자	1.7	11.9	44.1	23.7	18.6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6.1	26.1	28.6	26.3	11.0	1.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6.4	21.0	33.8	22.7	13.1	2.9	10.280 +
	비정규직	2.2	26.7	24.4	40.0	6.7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5	49.3	23.9	17.9	4.5	0.0	89.319 ***
	100만원 대	5.5	20.4	34.2	25.8	13.8	0.4	
	200만원 대	5.2	25.2	32.9	26.6	9.4	0.7	
	300만원 대	8.0	20.0	29.7	21.1	14.9	6.3	
	400만원 대	4.2	12.5	20.8	45.8	16.7	0.0	
	500만원 이상	2.9	11.8	29.4	17.6	32.4	5.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60〉 귀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중장기적 재정의 안정성(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매우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다소 불안정하다	다소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매우 안정적이다	X ²
전체		1.7	11.6	31.6	36.0	13.5	5.6	-
성별	남	1.4	9.1	33.0	36.4	14.6	5.5	7.807
	여	2.0	14.2	30.2	35.6	12.3	5.7	
연령	만 19~29세	2.4	12.4	27.1	41.8	13.5	2.9	31.201 +
	만 30~39세	0.6	9.8	34.5	29.3	17.2	8.6	
	만 40~49세	3.2	11.1	33.8	31.9	16.2	3.7	
	만 50~59세	1.3	13.7	26.4	41.0	11.0	6.6	
	만 60세 이상	0.9	10.8	36.2	35.7	10.3	6.1	
가구원수	1명	1.3	6.5	28.6	39.0	16.9	7.8	21.776
	2명	0.6	12.5	38.1	30.1	15.3	3.4	
	3명	0.7	9.7	32.9	36.1	13.0	7.6	
	4명 이상	2.8	13.2	28.9	37.7	12.6	4.9	
거주지역	광역시	1.8	10.5	29.8	38.0	13.9	5.9	27.293 **
	시부	1.9	13.9	34.0	32.6	11.4	6.2	
	군부	0.0	3.8	26.6	45.6	24.1	0.0	
소득계층	하층	1.5	17.9	22.4	29.9	14.9	13.4	22.472 +
	중하층	1.5	12.3	36.0	34.5	11.8	3.8	
	중간층	1.9	10.0	30.1	38.0	14.1	6.0	
	중상(상)층	1.5	11.9	25.4	37.3	17.9	6.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7	8.6	48.3	25.9	13.8	1.7	16.458 +
	고졸	1.6	12.3	30.5	39.0	10.5	6.1	
	대졸 이상	1.8	11.3	30.6	34.5	16.1	5.6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8	12.0	31.8	34.1	13.6	6.7	9.612
	별거/사별/이혼	0.0	11.9	32.2	39.0	13.6	3.4	
	미혼(미혼 부·모 포함)	1.8	10.4	30.6	41.4	13.1	2.7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8	8.7	31.5	36.1	13.8	9.0	39.615 *
	임시일용직	0.0	9.1	27.3	51.5	12.1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2.6	13.1	36.6	30.7	15.7	1.3	
	무급가족종사자	0.0	11.1	22.2	55.6	11.1	0.0	
	실업자	0.0	10.2	25.4	45.8	8.5	10.2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6	14.1	31.2	34.8	13.3	4.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9	7.9	32.1	36.2	13.7	9.3	9.195
	비정규직	0.0	15.6	24.4	46.7	13.3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5	23.9	46.3	19.4	9.0	0.0	86.471 ***
	100만원 대	1.5	12.0	32.0	39.3	11.3	4.0	
	200만원 대	1.2	10.8	35.1	32.9	14.6	5.4	
	300만원 대	3.4	9.1	22.3	46.3	11.4	7.4	
	400만원 대	4.2	8.3	25.0	20.8	37.5	4.2	
	500만원 이상	0.0	8.8	8.8	38.2	20.6	23.5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61〉 귀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매우 반대 한다	반대 한다	다소 반대 한다	다소 찬성 한다	찬성 한다	매우 찬성 한다	χ^2
전체		18.6	38.3	25.3	13.4	3.4	1.0	-
성별	남	16.2	36.8	28.3	14.2	4.2	0.4	13.309 *
	여	21.1	39.9	22.3	12.6	2.6	1.6	
연령	만 19-29세	15.9	37.6	31.2	11.8	2.9	0.6	26.358
	만 30-39세	18.4	45.4	21.8	10.3	2.9	1.1	
	만 40-49세	21.3	30.1	27.3	18.1	2.3	0.9	
	만 50-59세	18.9	40.1	22.0	15.4	2.6	0.9	
	만 60세 이상	17.8	39.4	24.9	10.3	6.1	1.4	
가구원수	1명	16.9	42.9	23.4	15.6	0.0	1.3	11.088
	2명	15.9	39.8	27.3	12.5	2.8	1.7	
	3명	17.0	39.4	24.2	13.4	5.1	1.1	
	4명 이상	20.9	36.4	25.5	13.4	3.2	0.6	
거주지역	광역시	19.6	34.6	26.2	14.8	3.4	1.4	34.915 ***
	시부	18.7	43.4	20.7	12.4	3.9	0.8	
	군부	12.7	27.8	48.1	11.4	0.0	0.0	
소득계층	하층	19.4	43.3	22.4	7.5	7.5	0.0	26.409 *
	중하층	18.1	43.3	21.9	11.8	3.0	1.8	
	중간층	19.2	33.7	29.2	14.3	3.0	0.6	
	중상(상)층	16.4	35.8	20.9	22.4	4.5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9.0	50.0	17.2	10.3	3.4	0.0	12.700
	고졸	17.9	38.6	26.0	14.3	1.8	1.3	
	대졸 이상	19.2	36.7	25.6	12.9	4.8	0.8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8.9	37.1	24.8	14.0	4.0	1.1	9.651
	별거/사별/이혼	25.4	37.3	23.7	13.6	0.0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15.8	42.3	27.5	11.3	2.3	0.9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6.1	36.6	28.2	15.5	3.4	0.3	62.363 ***
	임시일용직	12.1	39.4	39.4	9.1	0.0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21.6	35.9	29.4	9.8	2.6	0.7	
	무급가족종사자	22.2	33.3	44.4	0.0	0.0	0.0	
	실업자	5.1	57.6	15.3	8.5	13.6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2.3	37.9	21.0	14.3	2.6	2.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5.7	37.0	28.0	15.5	3.5	0.3	3.540
	비정규직	15.6	35.6	37.8	11.1	0.0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9.0	56.7	26.9	7.5	0.0	0.0	56.783 ***
	100만원 대	13.8	39.3	24.7	17.1	4.4	0.7	
	200만원 대	23.8	35.3	26.6	11.1	2.1	1.2	
	300만원 대	17.7	41.1	24.0	10.9	4.6	1.7	
	400만원 대	20.8	29.2	25.0	16.7	8.3	0.0	
	500만원 이상	14.7	23.5	17.6	35.3	8.8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62〉 귀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매우 반대 한다	반대 한다	다소 반대 한다	다소 찬성 한다	찬성 한다	매우 찬성 한다	χ^2
전체		18.9	34.4	27.7	13.2	4.7	1.1	-
성별	남	17.4	32.6	28.9	15.0	4.9	1.2	5.446
	여	20.4	36.2	26.5	11.3	4.5	1.0	
연령	만 19~29세	15.3	40.0	27.1	12.9	4.7	0.0	32.257 *
	만 30~39세	19.0	36.2	26.4	14.4	4.0	0.0	
	만 40~49세	24.1	26.4	29.6	13.9	4.2	1.9	
	만 50~59세	18.5	34.4	26.0	15.0	6.2	0.0	
	만 60세 이상	16.9	36.6	29.1	9.9	4.2	3.3	
가구원수	1명	27.3	32.5	24.7	11.7	3.9	0.0	19.622
	2명	16.5	37.5	27.8	13.1	5.1	0.0	
	3명	12.6	35.7	29.2	15.9	5.1	1.4	
	4명 이상	22.1	32.8	27.2	11.9	4.5	1.5	
거주지역	광역시	19.1	30.3	29.2	15.3	5.0	1.1	38.498 ***
	시부	20.7	38.8	22.8	11.2	5.2	1.2	
	군부	6.3	30.4	49.4	13.9	0.0	0.0	
소득계층	하층	17.9	37.3	28.4	9.0	1.5	6.0	29.454 *
	중하층	16.9	38.0	26.4	11.6	6.0	1.0	
	중간층	21.1	31.3	28.6	14.3	4.1	0.6	
	중상(상)층	16.4	31.3	28.4	19.4	4.5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9.0	46.6	17.2	17.2	0.0	0.0	21.596 *
	고졸	16.6	37.7	29.8	10.3	4.7	0.9	
	대졸 이상	21.0	30.0	27.0	15.3	5.2	1.4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9.1	32.5	27.7	14.0	5.1	1.5	11.843
	별거/사별/이혼	23.7	35.6	30.5	8.5	1.7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17.1	40.1	27.0	11.7	4.1	0.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9.4	27.6	31.0	15.2	5.6	1.1	77.823 ***
	임시일용직	15.2	36.4	36.4	12.1	0.0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23.5	28.1	31.4	11.8	5.2	0.0	
	무급가족종사자	11.1	44.4	44.4	0.0	0.0	0.0	
	실업자	3.4	59.3	13.6	11.9	3.4	8.5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19.4	38.9	24.3	12.5	4.3	0.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9.2	27.7	31.2	14.9	5.8	1.2	3.710
	비정규직	17.8	33.3	33.3	15.6	0.0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9.0	46.3	38.8	3.0	1.5	1.5	64.142 ***
	100만원 대	14.5	33.8	29.5	15.6	4.4	2.2	
	200만원 대	23.3	34.4	24.9	12.9	4.5	0.0	
	300만원 대	20.0	33.7	27.4	12.6	5.7	0.6	
	400만원 대	4.2	37.5	37.5	12.5	8.3	0.0	
	500만원 이상	23.5	17.6	20.6	20.6	8.8	8.8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63〉 귀하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십니까?

(단위: %)

구분		매우 반대 한다	반대 한다	다소 반대 한다	다소 찬성 한다	찬성 한다	매우 찬성 한다	χ^2
전체		3.0	14.1	30.4	39.3	12.7	0.5	-
성별	남	3.2	14.0	28.9	41.1	12.5	0.4	2.024
	여	2.8	14.2	32.0	37.4	13.0	0.6	
연령	만 19~29세	1.8	18.8	24.7	40.6	13.5	0.6	26.479
	만 30~39세	5.2	12.6	25.9	46.0	9.8	0.6	
	만 40~49세	4.6	12.5	32.4	38.4	11.6	0.5	
	만 50~59세	1.8	16.7	31.3	35.7	13.7	0.9	
	만 60세 이상	1.9	10.3	35.7	37.6	14.6	0.0	
가구원수	1명	3.9	11.7	35.1	35.1	14.3	0.0	18.980
	2명	1.1	14.2	27.8	39.8	17.0	0.0	
	3명	1.1	12.6	32.9	41.2	11.6	0.7	
	4명 이상	4.7	15.3	29.1	38.7	11.5	0.6	
거주지역	광역시	3.6	13.7	29.2	41.5	11.6	0.5	6.792
	시부	2.9	14.9	31.1	36.9	13.5	0.6	
	군부	0.0	11.4	32.9	41.8	13.9	0.0	
소득계층	하층	3.0	10.4	26.9	31.3	26.9	1.5	32.409 **
	중하층	3.5	14.1	33.0	36.3	12.1	1.0	
	중간층	2.6	13.0	29.6	43.7	11.1	0.0	
	중상(상)층	3.0	25.4	23.9	34.3	13.4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7	10.3	34.5	36.2	15.5	1.7	8.008
	고졸	2.9	13.0	33.0	39.0	11.9	0.2	
	대졸 이상	3.2	15.5	27.6	39.9	13.1	0.6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2.8	13.5	31.3	39.4	12.7	0.4	9.687
	별거/사별/이혼	6.8	10.2	37.3	33.9	11.9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2.7	17.1	25.7	40.5	13.1	0.9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5.1	13.8	29.9	40.6	10.4	0.3	34.749 +
	임시일용직	3.0	18.2	12.1	51.5	15.2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2.0	9.2	29.4	43.1	15.7	0.7	
	무급가족종사자	0.0	33.3	44.4	11.1	11.1	0.0	
	실업자	0.0	25.4	32.2	33.9	8.5	0.0	
	비경제활동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0	13.8	32.2	37.1	14.1	0.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4.7	13.4	30.3	40.8	10.5	0.3	6.348
	비정규직	6.7	20.0	13.3	46.7	13.3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20.9	52.2	16.4	10.4	0.0	53.811 ***
	100만원 대	2.5	9.1	29.1	42.9	15.3	1.1	
	200만원 대	3.8	12.7	29.6	42.4	11.1	0.5	
	300만원 대	2.9	18.3	29.1	37.7	12.0	0.0	
	400만원 대	0.0	29.2	20.8	33.3	16.7	0.0	
	500만원 이상	5.9	26.5	20.6	29.4	17.6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64〉 귀하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십니까?

(단위: %)

구분		매우 반대 한다	반대 한다	다소 반대 한다	다소 찬성 한다	찬성 한다	매우 찬성 한다	X ²
전체		9.4	26.3	44.1	15.7	4.4	0.1	-
성별	남	9.5	22.7	44.3	18.2	5.1	0.2	11.250 *
	여	9.3	30.0	43.9	13.2	3.6	0.0	
연령	만 19~29세	10.6	25.9	44.7	15.3	3.5	0.0	10.304
	만 30~39세	9.8	29.3	41.4	16.1	3.4	0.0	
	만 40~49세	9.3	21.8	45.4	18.1	5.1	0.5	
	만 50~59세	7.9	29.1	44.5	13.7	4.8	0.0	
	만 60세 이상	9.9	25.8	44.1	15.5	4.7	0.0	
가구원수	1명	20.8	19.5	46.8	9.1	3.9	0.0	34.125 **
	2명	10.2	22.7	46.6	17.6	2.8	0.0	
	3명	3.2	30.7	45.8	16.2	4.0	0.0	
	4명 이상	10.9	26.2	41.7	15.7	5.3	0.2	
거주지역	광역시	9.3	26.2	43.3	15.7	5.5	0.0	14.149
	시부	10.2	26.6	42.3	16.6	4.1	0.2	
	군부	5.1	25.3	59.5	10.1	0.0	0.0	
소득계층	하층	6.0	26.9	52.2	13.4	1.5	0.0	20.935
	중하층	9.1	28.2	44.8	12.6	5.3	0.0	
	중간층	10.4	23.0	43.9	18.8	3.6	0.2	
	중상(상)층	7.5	37.3	32.8	14.9	7.5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0.3	22.4	46.6	20.7	0.0	0.0	14.488
	고졸	8.5	28.0	46.4	14.1	2.9	0.0	
	대졸 이상	10.1	25.2	41.7	16.5	6.3	0.2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8.5	27.0	43.4	16.1	4.9	0.1	12.461
	별거/사별/이혼	15.3	11.9	52.5	18.6	1.7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10.8	27.9	44.1	13.5	3.6	0.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1.8	22.0	45.1	15.5	5.6	0.0	21.601
	임시일용직	9.1	24.2	45.5	18.2	3.0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9.8	28.1	39.2	18.3	3.9	0.7	
	무급가족종사자	11.1	33.3	55.6	0.0	0.0	0.0	
	실업자	8.5	27.1	42.4	15.3	6.8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7.2	29.4	45.0	15.1	3.3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1.7	21.6	45.8	15.2	5.8	0.0	2.320
	비정규직	11.1	26.7	40.0	20.0	2.2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0	31.3	55.2	9.0	1.5	0.0	38.574 *
	100만원 대	7.6	24.7	48.4	16.4	2.5	0.4	
	200만원 대	11.5	26.6	42.4	15.5	4.0	0.0	
	300만원 대	9.1	24.0	40.6	19.4	6.9	0.0	
	400만원 대	4.2	41.7	37.5	8.3	8.3	0.0	
	500만원 이상	14.7	26.5	32.4	11.8	14.7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65〉 귀하가 보건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을 더 부담하시는 것에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단위: %)

구분		고소득자가 지금보다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정부가 제도를 공평하게 운영할 능력이 없으므로	내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더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전체		32.5	19.8	16.4
성별	남	33.3	18.6	14.5
	여	31.6	20.9	18.2
연령	만 19-29세	31.2	23.9	16.7
	만 30-39세	36.4	14.3	14.3
	만 40-49세	32.1	19.4	15.2
	만 50-59세	32.4	20.5	14.1
	만 60세 이상	30.6	20.6	21.8
가구원수	1명	28.4	14.9	25.4
	2명	27.9	19.3	21.4
	3명	38.5	20.8	14.0
	4명 이상	31.4	20.3	14.3
거주지역	광역시	29.5	19.9	18.2
	시부	33.3	22.6	12.6
	군부	42.3	4.2	28.2
소득계층	하층	40.4	14.0	26.3
	중하층	28.2	18.1	20.6
	중간층	33.3	22.6	11.6
	중상(상)층	44.2	17.3	13.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8.3	19.6	19.6
	고졸	30.8	18.1	17.6
	대졸 이상	34.6	21.5	14.9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32.6	20.1	15.9
	별거/사별/이혼	21.3	12.8	31.9
	미혼(미혼 부·모 포함)	34.8	20.7	14.1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36.1	19.6	13.6
	임시일용직	30.8	11.5	26.9
	고용주 및 자영업자	28.0	20.3	11.9
	무급가족종사자	55.6	0.0	22.2
	실업자	30.4	34.8	15.2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30.7	18.8	19.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36.9	18.8	13.7
	비정규직	25.7	20.0	22.9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8.3	23.3	18.3
	100만원 대	34.2	13.5	22.5
	200만원 대	33.6	21.6	14.3
	300만원 대	36.4	24.0	11.6
	400만원 대	50.0	30.0	10.0
	500만원 이상	24.0	12.0	16.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66〉 귀하가 보건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을 더 부담하시는 것에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구분		보건복지정책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므로	정부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므로	χ^2
전체		16.2	15.2	-
성별	남	16.5	17.1	4.290
	여	15.8	13.4	
연령	만 19~29세	13.0	15.2	23.903 +
	만 30~39세	24.3	10.7	
	만 40~49세	12.7	20.6	
	만 50~59세	18.9	14.1	
	만 60세 이상	12.4	14.7	
가구원수	1명	14.9	16.4	16.135
	2명	15.0	16.4	
	3명	15.8	10.9	
	4명 이상	17.0	17.0	
거주지역	광역시	18.2	14.2	28.712 ***
	시부	14.2	17.3	
	군부	16.9	8.5	
소득계층	하층	8.8	10.5	35.677 ***
	중하층	13.8	19.3	
	중간층	20.4	12.1	
	중상(상)층	9.6	15.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9.6	13.0	5.699
	고졸	16.2	17.3	
	대졸 이상	15.7	13.4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6.8	14.6	14.221 +
	별거/사별/이혼	10.6	23.4	
	미혼(미혼 부·모 포함)	15.8	14.7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6.8	13.9	26.455
	임시일용직	7.7	23.1	
	고용주 및 자영업자	20.3	19.5	
	무급가족종사자	11.1	11.1	
	실업자	10.9	8.7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15.7	15.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6.6	14.0	4.169
	비정규직	11.4	2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0.0	20.0	50.835 ***
	100만원 대	14.9	14.9	
	200만원 대	13.7	16.7	
	300만원 대	18.6	9.3	
	400만원 대	10.0	0.0	
	500만원 이상	20.0	28.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67〉 귀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X ²
전체		2.2	9.7	31.0	37.2	14.7	5.2	-
성별	남	2.4	9.9	29.6	39.5	12.5	6.1	7.485
	여	2.0	9.5	32.4	34.8	17.0	4.3	
연령	만 19-29세	2.9	7.6	33.5	38.2	10.0	7.6	30.551 +
	만 30-39세	0.6	12.1	29.3	35.1	16.7	6.3	
	만 40-49세	3.7	9.3	28.2	39.8	12.0	6.9	
	만 50-59세	0.9	7.9	30.4	41.9	15.9	3.1	
	만 60세 이상	2.8	11.7	33.8	30.5	18.3	2.8	
가구원수	1명	3.9	13.0	26.0	40.3	9.1	7.8	35.125 **
	2명	4.0	9.7	38.6	31.3	15.9	0.6	
	3명	0.7	11.9	31.4	36.8	15.9	3.2	
	4명 이상	2.1	7.9	28.7	39.1	14.5	7.7	
거주지역	광역시	0.9	6.6	28.5	40.5	17.8	5.7	43.398 ***
	시부	3.7	11.6	34.6	31.5	13.1	5.4	
	군부	0.0	15.2	22.8	53.2	7.6	1.3	
소득계층	하층	1.5	16.4	41.8	28.4	11.9	0.0	40.193 ***
	중하층	3.5	8.3	30.5	37.0	15.4	5.3	
	중간층	1.1	10.4	31.6	38.0	12.4	6.6	
	중상(상)층	3.0	6.0	19.4	41.8	29.9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7	17.2	41.4	34.5	5.2	0.0	29.607 ***
	고졸	2.0	7.8	29.8	40.8	16.6	2.9	
	대졸 이상	2.4	10.5	30.8	34.3	14.1	7.9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2.5	9.5	29.5	36.4	16.7	5.4	12.150
	별거/사별/이혼	1.7	11.9	32.2	44.1	6.8	3.4	
	미혼(미혼 부·모 포함)	1.4	9.9	35.6	37.8	10.4	5.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7	9.9	30.7	36.3	11.5	9.9	42.432 *
	임시일용직	3.0	6.1	39.4	39.4	9.1	3.0	
	고용주 및 자영업자	3.3	11.8	26.1	44.4	13.1	1.3	
	무급가족종사자	0.0	11.1	22.2	44.4	11.1	11.1	
	실업자	0.0	6.8	35.6	35.6	18.6	3.4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6	9.5	32.0	35.0	18.2	2.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7	9.9	30.9	35.9	11.7	9.9	2.754
	비정규직	2.2	6.7	35.6	42.2	8.9	4.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5	7.5	25.4	37.3	26.9	1.5	98.043 ***
	100만원 대	2.9	10.5	31.3	42.5	10.5	2.2	
	200만원 대	1.9	10.8	31.1	38.6	15.1	2.6	
	300만원 대	2.3	7.4	34.9	30.9	13.1	11.4	
	400만원 대	4.2	4.2	37.5	16.7	16.7	20.8	
	500만원 이상	0.0	8.8	14.7	23.5	26.5	26.5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68〉 귀하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단위: %)

구분		고용문제 해결	주거문제 해결	아동 돌봄지원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전체		22.5	20.4	15.9	14.3
성별	남	22.5	21.9	15.0	13.2
	여	22.5	18.8	16.8	15.4
연령	만 19~29세	21.8	21.8	14.7	8.2
	만 30~39세	19.5	19.5	16.7	13.2
	만 40~49세	22.7	18.5	17.1	19.9
	만 50~59세	22.0	21.1	15.4	15.0
	만 60세 이상	25.8	21.1	15.5	13.6
가구원수	1명	14.3	26.0	15.6	13.0
	2명	21.6	20.5	19.3	9.7
	3명	23.1	20.6	15.2	14.1
	4명 이상	23.8	19.4	15.1	16.4
거주지역	광역시	25.1	21.9	12.3	13.9
	시부	19.9	21.6	17.6	13.5
	군부	24.1	5.1	25.3	21.5
소득계층	하층	22.4	26.9	14.9	3.0
	중하층	16.6	21.2	17.4	12.6
	중간층	27.3	19.6	14.3	16.8
	중상(상)층	23.9	14.9	19.4	17.9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9.3	12.1	15.5	20.7
	고졸	23.8	20.9	18.4	11.7
	대졸 이상	20.6	21.0	13.7	15.9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22.0	19.6	16.1	15.9
	별거/사별/이혼	25.4	28.8	10.2	16.9
	미혼(미혼 부·모 포함)	23.4	20.7	16.7	8.6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20.6	22.5	14.9	13.2
	임시일용직	21.2	12.1	21.2	15.2
	고용주 및 자영업자	21.6	19.6	20.3	18.3
	무급가족종사자	11.1	33.3	11.1	0.0
	실업자	35.6	18.6	5.1	11.9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3.0	19.4	16.4	14.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21.0	22.2	15.2	13.4
	비정규직	17.8	17.8	17.8	13.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4	25.4	17.9	9.0
	100만원 대	25.1	17.8	14.9	17.5
	200만원 대	24.0	18.1	17.4	14.4
	300만원 대	21.7	23.4	17.7	9.7
	400만원 대	16.7	25.0	0.0	25.0
	500만원 이상	14.7	41.2	2.9	14.7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69〉 귀하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교육제도 개선 (사교육)	영유아 의료비 지원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확대	기타	χ^2
전체		11.4	8.4	7.0	0.1	-
성별	남	12.6	7.7	6.9	0.0	5.508
	여	10.1	9.1	7.1	0.2	
연령	만 19-29세	13.5	11.8	7.6	0.6	27.120
	만 30-39세	14.4	9.2	7.5	0.0	
	만 40-49세	10.2	6.0	5.6	0.0	
	만 50-59세	11.9	7.0	7.5	0.0	
	만 60세 이상	8.0	8.9	7.0	0.0	
가구원수	1명	9.1	11.7	9.1	1.3	31.187 +
	2명	10.8	6.8	11.4	0.0	
	3명	11.9	9.0	6.1	0.0	
	4명 이상	11.7	8.1	5.5	0.0	
거주지역	광역시	10.5	10.7	5.5	0.2	41.944 ***
	시부	12.9	7.3	7.3	0.0	
	군부	7.6	2.5	13.9	0.0	
소득계층	하층	9.0	9.0	14.9	0.0	44.598 **
	중하층	15.1	10.1	7.1	0.0	
	중간층	9.0	6.6	6.2	0.2	
	중상(상)층	9.0	10.4	4.5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7	13.8	6.9	0.0	22.545 +
	고졸	11.9	6.7	6.7	0.0	
	대졸 이상	12.1	9.3	7.3	0.2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1.7	7.8	7.0	0.0	18.577
	별거/사별/이혼	6.8	5.1	6.8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11.7	11.3	7.2	0.5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2.7	8.5	7.3	0.3	43.051
	임시일용직	6.1	12.1	12.1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11.8	2.0	6.5	0.0	
	무급가족종사자	0.0	22.2	22.2	0.0	
	실업자	16.9	8.5	3.4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10.0	10.2	6.6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2.5	8.7	6.7	0.3	5.327
	비정규직	8.9	8.9	15.6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6.9	4.5	6.0	0.0	87.926 ***
	100만원 대	8.7	10.9	5.1	0.0	
	200만원 대	11.5	6.6	8.0	0.0	
	300만원 대	10.3	9.7	7.4	0.0	
	400만원 대	12.5	12.5	8.3	0.0	
	500만원 이상	5.9	8.8	8.8	2.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70〉 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가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육아지원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단위: %)

구분		시간연장, 시간제, 24시간 등 다양한 보육유형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	아동수당 확대 (아동수당 금액인상 및 수혜 대상확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	가정양육 관련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확대
전체		23.1	19.9	14.0	13.3	12.6
성별	남	23.7	20.0	13.8	13.2	13.0
	여	22.5	19.8	14.2	13.4	12.1
연령	만 19-29세	23.5	17.1	10.6	11.8	15.9
	만 30-39세	23.0	24.1	14.9	9.8	9.2
	만 40-49세	24.5	15.3	16.2	19.4	8.8
	만 50-59세	19.4	20.7	15.4	14.1	10.6
	만 60세 이상	25.4	22.5	12.2	10.3	18.8
가구원수	1명	11.7	24.7	18.2	11.7	20.8
	2명	30.1	18.2	8.0	13.1	16.5
	3명	21.7	20.9	16.6	10.5	11.9
	4명 이상	23.2	19.1	14.0	15.3	10.2
거주지역	광역시	24.8	18.9	16.6	14.8	10.7
	시부	20.5	20.7	13.1	12.4	11.8
	군부	29.1	20.3	5.1	10.1	27.8
소득계층	하층	14.9	25.4	11.9	7.5	19.4
	중하층	23.7	19.4	12.6	12.1	12.3
	중간층	24.7	19.2	14.3	14.1	12.4
	중상(상)층	16.4	22.4	22.4	20.9	9.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1.0	27.6	5.2	8.6	19.0
	고졸	22.9	16.8	15.7	13.0	15.7
	대졸 이상	22.4	21.8	13.5	14.1	9.1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23.1	20.2	14.9	13.9	11.7
	별거/사별/이혼	15.3	23.7	13.6	11.9	18.6
	미혼(미혼 부·모 포함)	25.2	18.0	11.3	11.7	14.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8.6	20.0	15.5	14.9	10.1
	임시일용직	21.2	24.2	9.1	15.2	18.2
	고용주 및 자영업자	34.0	14.4	9.8	15.0	14.4
	무급가족종사자	22.2	0.0	33.3	0.0	44.4
	실업자	23.7	32.2	10.2	6.8	13.6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3.0	20.2	14.8	12.3	12.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8.1	19.5	16.0	15.5	10.2
	비정규직	24.4	26.7	6.7	11.1	15.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0.9	13.4	6.0	9.0	25.4
	100만원 대	24.4	20.7	13.1	13.5	14.2
	200만원 대	24.7	21.2	13.4	13.9	9.6
	300만원 대	17.7	21.1	17.1	12.6	12.6
	400만원 대	37.5	8.3	16.7	4.2	8.3
	500만원 이상	14.7	11.8	26.5	23.5	14.7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71〉 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가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육아지원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육아휴직제 정착 등 고용관련 제도 개선	보육·양육 지원 관련 현금지원 확대	육아정보·상 담관련 정보 제공	기타	χ^2
전체		12.1	2.7	2.2	0.1	-
성별	남	11.1	2.8	2.4	0.0	2.434
	여	13.2	2.6	2.0	0.2	
연령	만 19~29세	15.3	2.9	2.9	0.0	47.102 *
	만 30~39세	14.4	2.9	1.7	0.0	
	만 40~49세	10.6	1.9	2.8	0.5	
	만 50~59세	14.1	3.5	2.2	0.0	
	만 60세 이상	7.0	2.3	1.4	0.0	
가구원수	1명	10.4	0.0	2.6	0.0	40.556 *
	2명	10.8	2.8	0.6	0.0	
	3명	11.6	4.7	2.2	0.0	
	4명 이상	13.2	1.9	2.8	0.2	
거주지역	광역시	10.5	2.1	1.6	0.0	41.611 ***
	시부	14.5	3.7	2.9	0.2	
	군부	6.3	0.0	1.3	0.0	
소득계층	하층	13.4	4.5	3.0	0.0	30.285
	중하층	12.6	4.0	3.0	0.3	
	중간층	12.2	1.7	1.5	0.0	
	중상(상)층	7.5	0.0	1.5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6.9	0.0	1.7	0.0	27.702 *
	고졸	11.0	2.7	2.2	0.0	
	대졸 이상	13.7	3.0	2.2	0.2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1.5	2.6	1.9	0.1	10.146
	별거/사별/이혼	11.9	1.7	3.4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14.0	3.2	2.7	0.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4.1	3.9	2.5	0.3	54.905 +
	임시일용직	9.1	3.0	0.0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7.8	1.3	3.3	0.0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0	0.0	
	실업자	8.5	3.4	1.7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13.0	2.0	1.8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4.6	3.8	2.0	0.3	8.730
	비정규직	6.7	4.4	4.4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1.9	3.0	9.0	1.5	81.986 ***
	100만원 대	8.7	4.4	1.1	0.0	
	200만원 대	12.5	2.1	2.6	0.0	
	300만원 대	16.0	2.3	0.6	0.0	
	400만원 대	20.8	0.0	4.2	0.0	
	500만원 이상	8.8	0.0	0.0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72〉 귀하는 우리나라 아동의 놀이 인식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 국내 아동의 놀이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 한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χ^2
전체		1.9	25.4	44.0	27.0	1.7	-
성별	남	2.4	23.3	47.0	26.1	1.2	6.998
	여	1.4	27.5	40.9	27.9	2.2	
연령	만 19~29세	1.2	26.5	45.3	25.9	1.2	14.737
	만 30~39세	1.7	31.0	43.7	22.4	1.1	
	만 40~49세	2.3	27.3	41.7	25.5	3.2	
	만 50~59세	2.2	19.4	45.8	30.8	1.8	
	만 60세 이상	1.9	24.4	43.7	29.1	0.9	
가구원수	1명	2.6	31.2	50.6	15.6	0.0	16.617
	2명	3.4	24.4	43.8	26.7	1.7	
	3명	1.8	29.2	43.0	24.2	1.8	
	4명 이상	1.3	22.6	43.6	30.6	1.9	
거주지역	광역시	0.5	22.8	45.1	29.8	1.8	24.694 **
	시부	2.7	29.7	41.3	24.7	1.7	
	군부	5.1	13.9	54.4	25.3	1.3	
소득계층	하층	9.0	28.4	41.8	20.9	0.0	48.609 ***
	중하층	1.5	28.5	41.8	28.0	0.3	
	중간층	1.3	23.2	47.3	25.8	2.3	
	중상(상)층	1.5	19.4	35.8	35.8	7.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6.9	29.3	39.7	22.4	1.7	22.092 **
	고졸	1.6	22.2	46.6	29.1	0.4	
	대졸 이상	1.6	27.8	42.1	25.6	2.8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9	25.5	42.3	28.2	2.1	6.670
	별거/사별/이혼	1.7	22.0	47.5	28.8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1.8	26.1	48.6	22.5	0.9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2.3	27.9	43.7	23.9	2.3	24.353
	임시일용직	9.1	21.2	45.5	24.2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0.7	18.3	49.7	30.1	1.3	
	무급가족종사자	0.0	33.3	55.6	11.1	0.0	
	실업자	1.7	20.3	47.5	30.5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1.5	26.9	41.2	28.6	1.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2.3	27.7	43.4	24.2	2.3	3.999
	비정규직	6.7	24.4	46.7	22.2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0	47.8	38.8	7.5	0.0	92.723 ***
	100만원 대	2.2	21.5	42.5	33.1	0.7	
	200만원 대	0.9	24.0	46.6	27.8	0.7	
	300만원 대	1.7	22.9	46.9	24.6	4.0	
	400만원 대	8.3	54.2	29.2	4.2	4.2	
	500만원 이상	0.0	23.5	29.4	35.3	11.8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73〉 귀하는 우리나라 아동의 놀이 인식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 아동의 놀권리를 위한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 한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χ^2
전체		1.6	6.4	31.4	50.0	10.6	-
성별	남	1.6	6.9	32.2	48.6	10.7	1.043
	여	1.6	5.9	30.6	51.4	10.5	
연령	만 19-29세	2.9	6.5	29.4	52.9	8.2	17.522
	만 30-39세	2.9	7.5	27.0	54.0	8.6	
	만 40-49세	2.3	5.6	30.1	50.5	11.6	
	만 50-59세	0.0	5.7	35.2	46.7	12.3	
	만 60세 이상	0.5	7.0	33.8	47.4	11.3	
가구원수	1명	3.9	6.5	35.1	46.8	7.8	11.012
	2명	1.1	6.3	30.7	54.5	7.4	
	3명	0.4	6.9	30.7	49.8	12.3	
	4명 이상	2.1	6.2	31.5	48.9	11.3	
거주지역	광역시	1.8	8.0	37.6	41.5	11.2	34.142 ***
	시부	1.7	4.8	24.5	58.7	10.4	
	군부	0.0	7.6	39.2	44.3	8.9	
소득계층	하층	0.0	10.4	26.9	44.8	17.9	28.719 **
	중하층	2.3	5.5	30.2	49.4	12.6	
	중간층	0.6	6.6	33.5	52.0	7.2	
	중상(상)층	6.0	6.0	28.4	44.8	14.9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0	8.6	37.9	44.8	8.6	7.199
	고졸	1.3	5.8	33.4	50.2	9.2	
	대졸 이상	2.0	6.7	28.8	50.4	12.1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5	6.0	30.5	49.9	12.1	9.547
	별거/사별/이혼	1.7	5.1	40.7	49.2	3.4	
	미혼(미혼 부·모 포함)	1.8	8.1	32.0	50.5	7.7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2.0	7.6	30.4	47.3	12.7	22.000
	임시일용직	3.0	3.0	30.3	60.6	3.0	
	고용주 및 자영업자	0.7	4.6	34.6	53.6	6.5	
	무급가족종사자	11.1	0.0	11.1	66.7	11.1	
	실업자	0.0	8.5	35.6	42.4	13.6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1.5	6.1	30.9	50.9	10.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2.0	7.9	30.3	46.9	12.8	5.533
	비정규직	2.2	2.2	31.1	60.0	4.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3.0	26.9	64.2	6.0	33.721 *
	100만원 대	1.5	4.7	32.7	50.2	10.9	
	200만원 대	0.7	7.5	31.5	51.5	8.7	
	300만원 대	3.4	6.9	30.9	44.0	14.9	
	400만원 대	8.3	8.3	41.7	29.2	12.5	
	500만원 이상	2.9	8.8	23.5	47.1	17.6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74〉 귀하는 다가올 노후생활에 있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노후 건강	노후 생활비 부족	사회 활동 단절	인간 관계 단절	배우자나 가족과의 관계	χ^2
전체		38.9	33.6	16.0	7.6	3.9	-
성별	남	39.1	32.2	16.6	8.1	4.0	1.179
	여	38.7	35.0	15.4	7.1	3.8	
연령	만 19-29세	31.2	41.2	15.9	10.0	1.8	21.893
	만 30-39세	40.2	31.6	16.1	6.9	5.2	
	만 40-49세	35.2	32.9	18.1	10.2	3.7	
	만 50-59세	43.6	30.8	15.4	4.4	5.7	
	만 60세 이상	42.7	32.9	14.6	7.0	2.8	
가구원수	1명	58.4	22.1	11.7	6.5	1.3	21.791 *
	2명	38.1	36.9	14.8	5.7	4.5	
	3명	33.6	32.5	19.9	9.4	4.7	
	4명 이상	39.1	34.9	14.9	7.4	3.6	
거주지역	광역시	38.5	30.5	16.6	9.1	5.2	19.215 *
	시부	39.0	34.0	16.4	7.3	3.3	
	군부	40.5	48.1	10.1	1.3	0.0	
소득계층	하층	52.2	31.3	9.0	7.5	0.0	19.332 +
	중하층	39.0	34.8	14.1	8.1	4.0	
	중간층	36.7	34.8	18.1	6.6	3.8	
	중상(상)층	40.3	20.9	19.4	11.9	7.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4.5	51.7	10.3	3.4	0.0	13.680 +
	고졸	37.2	33.0	17.7	8.3	3.8	
	대졸 이상	40.9	32.1	15.1	7.5	4.4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38.0	33.1	17.0	7.0	5.0	16.804 *
	별거/사별/이혼	52.5	25.4	10.2	10.2	1.7	
	미혼(미혼 부·모 포함)	38.3	37.4	14.4	9.0	0.9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41.7	31.0	16.1	6.5	4.8	17.032
	임시일용직	39.4	45.5	12.1	3.0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41.2	34.6	11.8	8.5	3.9	
	무급가족종사자	44.4	33.3	22.2	0.0	0.0	
	실업자	42.4	37.3	15.3	3.4	1.7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34.8	34.0	17.9	9.5	3.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41.4	30.9	16.6	6.1	5.0	5.349
	비정규직	42.2	42.2	8.9	6.7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5.4	28.4	17.9	20.9	7.5	70.553 ***
	100만원 대	40.7	34.5	16.4	6.5	1.8	
	200만원 대	34.4	34.6	19.3	8.5	3.3	
	300만원 대	48.6	34.3	8.6	3.4	5.1	
	400만원 대	29.2	41.7	12.5	0.0	16.7	
	500만원 이상	64.7	14.7	8.8	5.9	5.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75〉 귀하는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단위: %)

구분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 소득지원 강화	노인 돌봄 지원 확대	정년연장
전체		32.0	27.0	14.4	10.8
성별	남	32.0	28.1	14.4	8.5
	여	32.0	25.9	14.4	13.2
연령	만 19-29세	32.4	27.1	11.8	12.4
	만 30-39세	29.3	28.7	11.5	13.8
	만 40-49세	35.2	21.8	16.2	11.1
	만 50-59세	32.2	31.3	12.8	7.9
	만 60세 이상	30.5	26.3	18.8	9.9
가구원수	1명	20.8	41.6	19.5	7.8
	2명	31.8	22.2	17.0	9.1
	3명	36.8	26.7	10.8	8.3
	4명 이상	31.1	26.6	14.7	13.4
거주지역	광역시	30.3	28.5	11.4	12.5
	시부	34.0	27.8	14.1	10.0
	군부	29.1	13.9	32.9	6.3
소득계층	하층	31.3	35.8	19.4	3.0
	중하층	32.7	25.9	13.1	12.3
	중간층	31.6	26.0	15.1	11.7
	중상(상)층	31.3	31.3	11.9	3.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4.5	19.0	19.0	10.3
	고졸	31.8	26.9	14.3	11.4
	대졸 이상	31.9	28.0	13.9	10.3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32.5	26.1	14.5	10.4
	별거/사별/이혼	28.8	32.2	22.0	8.5
	미혼(미혼 부·모 포함)	31.1	28.4	12.2	12.6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31.8	30.1	11.8	10.4
	임시일용직	24.2	18.2	27.3	6.1
	고용주 및 자영업자	29.4	19.6	22.2	10.5
	무급가족종사자	66.7	11.1	22.2	0.0
	실업자	33.9	33.9	3.4	11.9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32.7	27.1	14.1	11.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31.8	30.0	12.0	10.2
	비정규직	26.7	22.2	22.2	8.9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7.3	25.4	7.5	10.4
	100만원 대	37.8	26.5	13.8	8.0
	200만원 대	27.5	27.5	15.8	11.3
	300만원 대	34.3	26.3	14.9	14.9
	400만원 대	25.0	12.5	12.5	12.5
	500만원 이상	23.5	41.2	14.7	5.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76〉 귀하는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	노인건강 보험 확대	노후대비를 위한 정보제공	χ^2
전체		9.3	4.0	2.5	-
성별	남	9.9	3.4	3.8	13.330 *
	여	8.7	4.7	1.2	
연령	만 19~29세	8.8	4.7	2.9	17.927
	만 30~39세	8.6	4.6	3.4	
	만 40~49세	9.3	3.7	2.8	
	만 50~59세	10.6	3.1	2.2	
	만 60세 이상	8.9	4.2	1.4	
가구원수	1명	9.1	1.3	0.0	30.629 *
	2명	10.2	5.7	4.0	
	3명	10.1	4.3	2.9	
	4명 이상	8.5	3.6	2.1	
거주지역	광역시	10.9	3.9	2.5	47.200 ***
	시부	8.5	2.9	2.7	
	군부	5.1	11.4	1.3	
소득계층	하층	6.0	1.5	3.0	21.485
	중하층	9.8	4.3	1.8	
	중간층	8.7	3.6	3.2	
	중상(상)층	13.4	7.5	1.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2.1	5.2	0.0	6.789
	고졸	9.2	4.3	2.0	
	대졸 이상	9.1	3.6	3.2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9.9	4.2	2.4	10.618
	별거/사별/이혼	1.7	5.1	1.7	
	미혼(미혼 부·모 포함)	9.5	3.2	3.2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9.6	2.8	3.4	47.535 *
	임시일용직	12.1	9.1	3.0	
	고용주 및 자영업자	7.8	6.5	3.9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0	
	실업자	15.3	1.7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8.7	4.1	1.5	6.380
	정규직	9.6	2.9	3.5	
월평균 가구소득	비정규직	11.1	6.7	2.2	58.362 **
	100만원 미만	13.4	3.0	3.0	
	100만원 대	10.5	1.8	1.5	
	200만원 대	9.2	6.4	2.4	
	300만원 대	5.1	2.3	2.3	
	400만원 대	16.7	4.2	16.7	
	500만원 이상	8.8	2.9	2.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77〉 귀하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된 방법) (계속)

(단위: %)

구분		공적연금	금융 자산	사적연금
전체		53.0	15.0	14.0
성별	남	50.6	14.6	16.0
	여	55.5	15.4	11.9
연령	만 19-29세	56.5	12.4	16.5
	만 30-39세	54.0	15.5	12.1
	만 40-49세	51.4	16.2	14.8
	만 50-59세	52.9	14.1	12.8
	만 60세 이상	51.2	16.4	14.1
가구원수	1명	54.5	11.7	13.0
	2명	56.8	15.3	11.9
	3명	56.3	14.4	13.0
	4명 이상	49.4	15.7	15.5
거주지역	광역시	48.5	14.1	15.5
	시부	56.4	15.6	12.0
	군부	57.0	16.5	17.7
소득계층	하층	50.7	9.0	22.4
	중하층	57.2	13.6	12.1
	중간층	51.6	16.0	14.3
	중상(상)층	40.3	22.4	14.9
최종 학력	중졸 이하	48.3	15.5	22.4
	고졸	51.8	16.6	14.3
	대졸 이상	54.6	13.5	12.7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52.0	15.3	13.8
	별거/사별/이혼	59.3	18.6	8.5
	미혼(미혼 부·모 포함)	54.5	13.1	16.2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48.5	16.1	13.2
	임시일용직	72.7	6.1	6.1
	고용주 및 자영업자	52.9	17.6	17.6
	무급가족종사자	55.6	22.2	11.1
	실업자	44.1	11.9	22.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56.8	14.1	12.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49.0	16.6	12.2
	비정규직	62.2	4.4	15.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2.7	7.5	13.4
	100만원 대	57.8	14.2	12.4
	200만원 대	51.8	17.2	16.9
	300만원 대	45.1	14.3	11.4
	400만원 대	62.5	16.7	8.3
	500만원 이상	44.1	11.8	8.8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78〉 귀하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된 방법)

(단위: %)

구분		퇴직급여	부동산 운용	자녀들의 부모 부양	X ²
전체		8.4	8.0	1.6	-
성별	남	9.5	7.5	1.8	6.116
	여	7.3	8.5	1.4	
연령	만 19-29세	8.8	5.3	0.6	9.796
	만 30-39세	9.8	6.9	1.7	
	만 40-49세	6.9	8.8	1.9	
	만 50-59세	7.9	10.1	2.2	
	만 60세 이상	8.9	8.0	1.4	
가구원수	1명	9.1	10.4	1.3	11.694
	2명	10.2	4.5	1.1	
	3명	6.5	8.7	1.1	
	4명 이상	8.7	8.5	2.1	
거주지역	광역시	9.6	10.7	1.6	17.309 +
	시부	7.7	6.6	1.7	
	군부	6.3	1.3	1.3	
소득계층	하층	9.0	7.5	1.5	27.585 *
	중하층	9.8	6.8	0.5	
	중간층	7.2	8.1	2.8	
	중상(상)층	7.5	14.9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8.6	3.4	1.7	9.951
	고졸	8.1	8.3	0.9	
	대졸 이상	8.7	8.3	2.2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8.1	8.9	1.9	9.777
	별거/사별/이혼	6.8	5.1	1.7	
	미혼(미혼 부·모 포함)	9.9	5.9	0.5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1.0	7.9	3.4	41.553 *
	임시일용직	12.1	3.0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2.6	9.2	0.0	
	무급가족종사자	0.0	11.1	0.0	
	실업자	13.6	8.5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7.4	7.9	1.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0.5	8.2	3.5	9.975 +
	비정규직	15.6	2.2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5	7.5	1.5	70.000 ***
	100만원 대	10.5	4.7	0.4	
	200만원 대	6.4	6.8	0.9	
	300만원 대	10.3	15.4	3.4	
	400만원 대	0.0	12.5	0.0	
	500만원 이상	14.7	8.8	11.8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79〉 귀하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수적인 방법) (계속)

(단위: %)

구분		공적연금	금융 자산	사적연금
전체		27.3	20.0	19.7
성별	남	28.1	20.2	18.6
	여	26.5	19.8	20.9
연령	만 19~29세	25.9	20.0	20.0
	만 30~39세	30.5	22.4	19.0
	만 40~49세	24.5	21.3	20.4
	만 50~59세	29.1	23.8	18.1
	만 60세 이상	26.8	12.7	21.1
가구원수	1명	28.6	13.0	24.7
	2명	27.3	18.2	17.0
	3명	28.9	23.8	20.9
	4명 이상	26.2	19.6	19.1
거주지역	광역시	26.4	18.0	22.3
	시부	26.6	20.3	19.5
	군부	36.7	29.1	6.3
소득계층	하층	35.8	11.9	19.4
	중하층	21.9	22.9	19.1
	중간층	29.2	19.2	19.8
	중상(상)층	37.3	16.4	22.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41.4	5.2	13.8
	고졸	25.1	21.3	19.7
	대졸 이상	27.6	20.6	20.4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26.6	21.1	18.6
	별거/사별/이혼	27.1	15.3	18.6
	미혼(미혼 부·모 포함)	29.7	17.6	23.4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26.5	22.0	22.5
	임시일용직	33.3	21.2	12.1
	고용주 및 자영업자	27.5	25.5	13.7
	무급가족종사자	44.4	11.1	11.1
	실업자	25.4	8.5	28.8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7.4	17.9	18.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26.5	22.7	22.2
	비정규직	31.1	15.6	17.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0.9	16.4	13.4
	100만원 대	29.8	20.0	17.1
	200만원 대	27.1	21.6	18.6
	300만원 대	25.7	18.3	26.9
	400만원 대	25.0	33.3	16.7
	500만원 이상	32.4	5.9	32.4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80〉 귀하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수적인 방법)

(단위: %)

구분		퇴직급여	부동산 운용	자녀들의 부모 부양	X ²
전체		15.6	13.6	3.8	-
성별	남	18.0	12.8	2.4	10.548 +
	여	13.2	14.4	5.3	
연령	만 19-29세	18.8	10.6	4.7	33.629 *
	만 30-39세	14.9	11.5	1.7	
	만 40-49세	19.4	11.6	2.8	
	만 50-59세	13.2	11.9	4.0	
	만 60세 이상	12.2	21.6	5.6	
가구원수	1명	13.0	14.3	6.5	38.380 ***
	2명	9.7	23.9	4.0	
	3명	17.0	6.5	2.9	
	4명 이상	17.4	13.8	3.8	
거주지역	광역시	17.1	11.8	4.3	24.927 **
	시부	14.5	16.2	2.9	
	군부	13.9	7.6	6.3	
소득계층	하층	11.9	17.9	3.0	28.040 *
	중하층	15.4	16.6	4.0	
	중간층	16.6	11.9	3.2	
	중상(상)층	13.4	3.0	7.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2.1	22.4	5.2	32.038 ***
	고졸	12.8	15.9	5.2	
	대졸 이상	18.5	10.5	2.4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6.0	14.3	3.3	21.126 *
	별거/사별/이혼	6.8	22.0	10.2	
	미혼(미혼 부·모 포함)	16.7	9.0	3.6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9.2	7.3	2.5	50.424 **
	임시일용직	18.2	9.1	6.1	
	고용주 및 자영업자	11.1	19.6	2.6	
	무급가족종사자	0.0	33.3	0.0	
	실업자	16.9	16.9	3.4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14.1	16.4	5.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9.5	6.4	2.6	6.841
	비정규직	15.6	15.6	4.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2.4	19.4	7.5	42.760 *
	100만원 대	12.0	14.9	6.2	
	200만원 대	17.4	13.4	1.9	
	300만원 대	13.7	12.6	2.9	
	400만원 대	12.5	4.2	8.3	
	500만원 이상	20.6	5.9	2.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81〉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단위: %)

구분		모른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잘 알고 있다	X ²
전체		49.1	42.1	8.8	-
성별	남	50.0	41.5	8.5	0.362
	여	48.2	42.7	9.1	
연령	만 19-29세	60.6	34.1	5.3	21.418 **
	만 30-39세	46.0	48.3	5.7	
	만 40-49세	47.2	45.4	7.4	
	만 50-59세	44.9	41.9	13.2	
	만 60세 이상	48.8	40.4	10.8	
가구원수	1명	46.8	42.9	10.4	15.820 *
	2명	50.6	35.8	13.6	
	3명	44.0	49.8	6.1	
	4명 이상	51.9	39.8	8.3	
거주지역	광역시	51.3	42.4	6.4	16.602
	시부	47.9	42.9	9.1	
	군부	44.3	35.4	20.3	
소득계층	하층	62.7	32.8	4.5	11.374 +
	중하층	46.1	44.3	9.6	
	중간층	48.4	43.3	8.3	
	중상(상)층	58.2	29.9	11.9	
최종 학력	중졸 이하	48.3	39.7	12.1	1.996
	고졸	47.3	43.7	9.0	
	대졸 이상	50.8	40.9	8.3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46.2	44.1	9.7	14.090 **
	별거/사별/이혼	44.1	47.5	8.5	
	미혼(미혼 부·모 포함)	59.9	34.2	5.9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48.5	44.8	6.8	17.801 +
	임시일용직	39.4	42.4	18.2	
	고용주 및 자영업자	41.8	45.8	12.4	
	무급가족종사자	22.2	66.7	11.1	
	실업자	52.5	42.4	5.1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53.5	37.6	9.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48.4	44.9	6.7	4.412
	비정규직	42.2	42.2	15.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5.4	37.3	37.3	86.763 ***
	100만원 대	49.5	44.0	6.5	
	200만원 대	50.4	43.3	6.4	
	300만원 대	51.4	43.4	5.1	
	400만원 대	66.7	20.8	12.5	
	500만원 이상	52.9	29.4	17.6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82〉 귀하께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전혀 도움이 안된다	도움이 안된다	다소 도움이 안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χ^2
전체		0.2	0.6	8.0	42.6	39.9	8.7	-
성별	남	0.0	0.2	7.7	41.9	41.3	8.9	5.591
	여	0.4	1.0	8.3	43.3	38.5	8.5	
연령	만 19-29세	0.0	1.2	7.6	47.6	36.5	7.1	21.005
	만 30-39세	0.0	0.0	4.0	43.7	42.5	9.8	
	만 40-49세	0.9	0.5	9.7	40.3	40.7	7.9	
	만 50-59세	0.0	1.3	8.4	41.9	39.6	8.8	
	만 60세 이상	0.0	0.0	9.4	40.8	39.9	9.9	
가구원수	1명	0.0	0.0	5.2	42.9	39.0	13.0	9.349
	2명	0.0	0.0	10.2	40.9	39.2	9.7	
	3명	0.0	0.7	6.9	44.4	39.7	8.3	
	4명 이상	0.4	0.9	8.3	42.1	40.4	7.9	
거주지역	광역시	0.0	0.5	9.6	41.5	39.2	9.3	8.867
	시부	0.4	0.6	6.4	42.5	41.3	8.7	
	군부	0.0	1.3	8.9	49.4	35.4	5.1	
소득계층	하층	0.0	0.0	10.4	35.8	43.3	10.4	18.219
	중하층	0.0	0.5	8.3	41.3	39.8	10.1	
	중간층	0.2	0.9	7.7	44.1	38.6	8.5	
	중상(상)층	1.5	0.0	6.0	46.3	46.3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0	0.0	13.8	48.3	32.8	5.2	13.042
	고졸	0.0	0.7	7.8	45.3	39.2	7.0	
	대졸 이상	0.4	0.6	7.5	39.5	41.3	10.7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0.3	0.6	7.9	40.6	41.2	9.5	11.292
	별거/사별/이혼	0.0	0.0	10.2	37.3	47.5	5.1	
	미혼(미혼 부·모 포함)	0.0	0.9	7.7	50.5	33.8	7.2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0	0.3	5.9	43.4	39.7	10.7	28.201
	임시일용직	0.0	0.0	6.1	30.3	60.6	3.0	
	고용주 및 자영업자	0.0	0.7	9.2	41.2	39.9	9.2	
	무급가족종사자	0.0	0.0	11.1	22.2	44.4	22.2	
	실업자	0.0	0.0	6.8	47.5	30.5	15.3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0.5	1.0	9.7	43.2	39.6	5.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0	0.3	6.1	42.3	40.2	11.1	4.559
	비정규직	0.0	0.0	4.4	42.2	51.1	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0.0	4.5	44.8	49.3	1.5	41.912 *
	100만원 대	0.0	0.4	10.9	47.6	33.5	7.6	
	200만원 대	0.5	0.7	7.5	42.8	40.5	8.0	
	300만원 대	0.0	0.6	7.4	38.9	40.6	12.6	
	400만원 대	0.0	4.2	8.3	25.0	54.2	8.3	
	500만원 이상	0.0	0.0	0.0	26.5	52.9	20.6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83〉 귀하는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때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경제적 지원	재가요양·돌봄 서비스 확대	간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양질의 요양시설 확대	필요 없음	χ^2
전체		38.6	26.3	18.2	16.7	0.2	-
성별	남	37.9	28.5	16.0	17.4	0.2	4.926
	여	39.3	24.1	20.4	16.0	0.2	
연령	만 19-29세	42.4	20.0	18.8	18.8	0.0	16.024
	만 30-39세	36.8	30.5	16.1	16.1	0.6	
	만 40-49세	43.5	25.0	15.3	16.2	0.0	
	만 50-59세	35.7	30.0	20.3	14.1	0.0	
	만 60세 이상	35.2	25.4	20.2	18.8	0.5	
가구원수	1명	48.1	31.2	14.3	6.5	0.0	18.625 +
	2명	30.1	28.4	23.3	17.6	0.6	
	3명	37.9	24.9	18.4	18.4	0.4	
	4명 이상	40.6	25.5	16.8	17.0	0.0	
거주지역	광역시	37.1	26.9	19.4	16.4	0.2	34.167 ***
	시부	44.0	25.1	15.4	15.6	0.0	
	군부	13.9	30.4	29.1	25.3	1.3	
소득계층	하층	43.3	16.4	17.9	22.4	0.0	9.521
	중하층	37.5	28.7	17.6	16.1	0.0	
	중간층	38.4	26.0	18.1	17.1	0.4	
	중상(상)층	41.8	23.9	22.4	11.9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7.9	27.6	24.1	10.3	0.0	14.833 +
	고졸	34.8	24.7	21.5	18.8	0.2	
	대졸 이상	42.1	27.6	14.5	15.5	0.2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36.9	27.0	18.2	17.7	0.3	5.128
	별거/사별/이혼	42.4	27.1	18.6	11.9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43.2	23.9	18.0	14.9	0.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43.7	27.0	14.1	15.2	0.0	28.640 +
	임시일용직	27.3	27.3	18.2	27.3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30.7	34.0	15.7	19.0	0.7	
	무급가족종사자	44.4	33.3	11.1	11.1	0.0	
	실업자	30.5	30.5	22.0	16.9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39.1	21.7	22.5	16.4	0.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42.6	27.4	14.6	15.5	0.0	1.356
	비정규직	40.0	24.4	13.3	22.2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7.3	16.4	26.9	19.4	0.0	17.554
	100만원 대	39.6	26.2	18.9	15.3	0.0	
	200만원 대	38.1	25.2	18.6	17.6	0.5	
	300만원 대	39.4	30.3	15.4	14.9	0.0	
	400만원 대	37.5	25.0	16.7	20.8	0.0	
	500만원 이상	35.3	41.2	5.9	17.6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84〉 귀하는 노인이 되어 혼자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질 경우, 어떻게 생활하실 계획이십니까?

(단위: %)

구분		요양·간병 등 재가서비스 이용	시설 입소	자녀로 부터의 돌봄	친지·이웃· 친구로부터 의 돌봄	기타	X ²
전체		39.4	33.6	13.5	13.1	0.4	-
성별	남	37.4	37.5	11.1	13.6	0.4	10.562 *
	여	41.5	29.6	16.0	12.6	0.4	
연령	만 19~29세	40.0	31.2	14.7	13.5	0.6	17.282
	만 30~39세	41.4	32.8	12.6	11.5	1.7	
	만 40~49세	39.8	30.1	14.8	15.3	0.0	
	만 50~59세	36.6	36.6	15.0	11.9	0.0	
	만 60세 이상	39.9	36.6	10.3	13.1	0.0	
가구원수	1명	36.4	40.3	6.5	13.0	3.9	41.253 ***
	2명	35.2	42.6	9.7	12.5	0.0	
	3명	42.6	29.2	14.4	13.7	0.0	
	4명 이상	39.6	31.7	15.5	13.0	0.2	
거주지역	광역시	39.9	26.4	17.5	15.9	0.2	32.647 ***
	시부	37.3	39.4	11.0	11.6	0.6	
	군부	49.4	38.0	6.3	6.3	0.0	
소득계층	하층	26.9	44.8	7.5	19.4	1.5	16.536
	중하층	39.3	34.8	13.9	12.1	0.0	
	중간층	41.4	31.3	13.9	13.0	0.4	
	중상(상)층	38.8	31.3	14.9	13.4	1.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44.8	36.2	8.6	10.3	0.0	4.192
	고졸	38.3	34.5	13.0	13.9	0.2	
	대졸 이상	39.7	32.5	14.5	12.7	0.6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39.9	32.7	13.8	13.6	0.0	17.324 *
	별거/사별/이혼	40.7	40.7	8.5	10.2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37.4	34.7	14.0	12.2	1.8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36.6	34.9	13.0	14.6	0.8	17.085
	임시일용직	48.5	39.4	6.1	6.1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37.9	40.5	12.4	9.2	0.0	
	무급가족종사자	55.6	22.2	11.1	11.1	0.0	
	실업자	40.7	33.9	11.9	13.6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41.2	29.4	15.3	13.8	0.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36.7	34.7	12.8	14.9	0.9	3.761
	비정규직	44.4	40.0	8.9	6.7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7.3	49.3	6.0	7.5	0.0	24.926
	100만원 대	40.0	30.2	13.8	15.6	0.4	
	200만원 대	39.8	32.9	13.2	13.4	0.7	
	300만원 대	40.6	31.4	14.9	13.1	0.0	
	400만원 대	37.5	29.2	25.0	8.3	0.0	
	500만원 이상	29.4	52.9	14.7	2.9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85〉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음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X ²
전체		0.4	1.1	11.7	48.0	34.6	4.2	-
성별	남	0.8	1.0	11.5	49.2	33.2	4.3	5.015
	여	0.0	1.2	11.9	46.8	36.0	4.0	
연령	만 19-29세	0.0	0.6	12.4	46.5	37.1	3.5	23.059
	만 30-39세	0.6	0.0	12.6	44.8	35.1	6.9	
	만 40-49세	0.5	1.9	10.6	46.3	35.6	5.1	
	만 50-59세	0.9	2.2	11.9	46.3	37.0	1.8	
	만 60세 이상	0.0	0.5	11.3	55.4	28.6	4.2	
가구원수	1명	0.0	2.6	13.0	51.9	31.2	1.3	14.664
	2명	0.6	1.7	10.8	53.4	30.7	2.8	
	3명	0.4	1.1	11.2	50.9	32.9	3.6	
	4명 이상	0.4	0.6	12.1	43.6	37.7	5.5	
거주지역	광역시	0.0	0.9	9.1	47.2	36.9	5.9	26.111 **
	시부	0.6	1.0	12.2	49.0	33.8	3.3	
	군부	1.3	2.5	22.8	46.8	26.6	0.0	
소득계층	하층	1.5	6.0	23.9	38.8	22.4	7.5	45.603 ***
	중하층	0.3	0.3	12.1	49.9	33.5	4.0	
	중간층	0.4	1.3	10.9	48.6	35.0	3.8	
	중상(상)층	0.0	0.0	3.0	41.8	50.7	4.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0	1.7	17.2	56.9	24.1	0.0	17.404 +
	고졸	0.2	0.7	14.3	47.3	33.0	4.5	
	대졸 이상	0.6	1.4	8.7	47.6	37.3	4.4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0.6	0.7	11.0	47.7	35.3	4.7	14.031
	별거/사별/이혼	0.0	1.7	11.9	59.3	22.0	5.1	
	미혼(미혼 부·모 포함)	0.0	2.3	14.0	45.9	35.6	2.3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3	0.3	10.4	47.3	37.5	4.2	54.300 ***
	임시일용직	0.0	9.1	6.1	48.5	36.4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2.0	0.7	13.7	48.4	32.0	3.3	
	무급가족종사자	0.0	0.0	33.3	22.2	33.3	11.1	
	실업자	0.0	1.7	11.9	61.0	16.9	8.5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0.0	1.3	12.0	47.1	35.5	4.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3	0.3	9.6	47.5	37.9	4.4	18.556 **
	비정규직	0.0	6.7	13.3	46.7	33.3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1.5	9.0	50.7	37.3	1.5	32.119
	100만원 대	0.7	1.1	13.8	46.2	33.8	4.4	
	200만원 대	0.2	1.2	13.2	48.7	33.6	3.1	
	300만원 대	0.6	0.6	8.0	49.7	36.0	5.1	
	400만원 대	0.0	4.2	12.5	54.2	16.7	12.5	
	500만원 이상	0.0	0.0	0.0	35.3	52.9	11.8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86〉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음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2)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X ²
전체		1.1	6.0	22.0	38.9	24.3	7.7	-
성별	남	1.4	5.9	24.7	37.4	23.5	7.1	5.504
	여	0.8	6.1	19.2	40.5	25.1	8.3	
연령	만 19-29세	1.8	7.1	23.5	35.9	24.1	7.6	13.581
	만 30-39세	1.1	5.7	23.0	35.6	25.9	8.6	
	만 40-49세	1.9	5.6	24.1	34.3	26.4	7.9	
	만 50-59세	0.0	5.7	18.9	43.2	25.1	7.0	
	만 60세 이상	0.9	6.1	21.1	44.1	20.2	7.5	
가구원수	1명	0.0	3.9	20.8	40.3	27.3	7.8	24.659 +
	2명	1.7	6.8	25.6	40.3	19.9	5.7	
	3명	0.0	5.1	21.3	42.2	27.4	4.0	
	4명 이상	1.7	6.6	21.3	36.2	23.6	10.6	
거주지역	광역시	0.7	4.6	17.3	40.1	28.0	9.3	20.450 *
	시부	1.5	7.1	25.9	37.6	21.2	6.8	
	군부	1.3	7.6	24.1	40.5	22.8	3.8	
소득계층	하층	1.5	14.9	28.4	34.3	20.9	0.0	49.714 ***
	중하층	0.5	5.8	25.7	40.1	21.7	6.3	
	중간층	0.9	4.7	19.4	39.7	26.2	9.2	
	중상(상)층	6.0	7.5	11.9	31.3	29.9	13.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0	10.3	17.2	48.3	20.7	3.4	17.788 +
	고졸	1.1	4.7	24.4	41.3	22.6	5.8	
	대졸 이상	1.2	6.7	20.4	35.7	26.2	9.9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0.8	5.7	20.6	40.5	24.1	8.3	10.950
	별거/사별/이혼	3.4	5.1	25.4	30.5	30.5	5.1	
	미혼(미혼 부·모 포함)	1.4	7.2	25.7	36.0	23.4	6.3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1	5.4	23.4	33.5	27.0	9.6	39.092 *
	임시일용직	0.0	18.2	18.2	27.3	33.3	3.0	
	고용주 및 자영업자	2.0	4.6	22.9	41.2	23.5	5.9	
	무급가족종사자	0.0	0.0	11.1	22.2	66.7	0.0	
	실업자	1.7	11.9	20.3	42.4	16.9	6.8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0.8	5.4	21.2	43.7	21.5	7.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9	5.2	22.7	34.4	26.8	9.9	12.320 *
	비정규직	2.2	15.6	24.4	22.2	33.3	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11.9	46.3	28.4	11.9	1.5	81.661 ***
	100만원 대	1.1	4.7	18.9	46.5	24.4	4.4	
	200만원 대	1.4	5.6	22.1	38.6	25.2	7.1	
	300만원 대	1.1	6.3	18.3	37.1	26.3	10.9	
	400만원 대	0.0	8.3	20.8	25.0	29.2	16.7	
	500만원 이상	0.0	5.9	17.6	20.6	23.5	32.4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87〉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음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3)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X ²
전체		0.4	1.1	15.4	44.1	32.3	6.7	-
성별	남	0.4	1.2	15.8	43.9	31.2	7.5	1.562
	여	0.4	1.0	15.0	44.3	33.4	5.9	
연령	만 19-29세	0.6	0.6	16.5	49.4	29.4	3.5	13.577
	만 30-39세	0.0	1.7	16.7	40.2	35.1	6.3	
	만 40-49세	0.5	0.5	13.9	45.4	33.3	6.5	
	만 50-59세	0.9	1.8	15.0	43.6	30.8	7.9	
	만 60세 이상	0.0	0.9	15.5	42.3	32.9	8.5	
가구원수	1명	0.0	0.0	16.9	49.4	31.2	2.6	32.538 **
	2명	0.0	2.8	18.8	44.3	30.1	4.0	
	3명	0.4	0.7	16.2	39.0	31.4	12.3	
	4명 이상	0.6	0.9	13.4	46.2	33.8	5.1	
거주지역	광역시	0.2	1.4	15.3	39.2	35.8	8.2	15.155
	시부	0.4	0.6	16.0	47.5	29.9	5.6	
	군부	1.3	2.5	12.7	50.6	27.8	5.1	
소득계층	하층	1.5	0.0	23.9	46.3	14.9	13.4	27.089 *
	중하층	0.3	1.3	14.9	46.9	30.2	6.5	
	중간층	0.4	1.3	15.1	42.6	35.2	5.3	
	중상(상)층	0.0	0.0	11.9	35.8	41.8	10.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0	1.7	19.0	50.0	25.9	3.4	12.287
	고졸	0.2	0.9	17.0	45.7	28.5	7.6	
	대졸 이상	0.6	1.2	13.5	41.9	36.5	6.3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0.3	1.3	13.8	43.7	33.5	7.5	14.787
	별거/사별/이혼	0.0	0.0	20.3	44.1	25.4	10.2	
	미혼(미혼 부·모 포함)	0.9	0.9	19.4	45.5	30.2	3.2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3	0.6	16.3	47.3	29.0	6.5	27.790
	임시일용직	0.0	0.0	24.2	48.5	27.3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1.3	2.0	13.7	40.5	36.6	5.9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0	55.6	33.3	11.1	
	실업자	1.7	3.4	16.9	32.2	33.9	11.9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0.0	1.0	14.6	43.7	33.8	6.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3	0.6	16.6	46.4	29.7	6.4	3.329
	비정규직	0.0	0.0	20.0	55.6	22.2	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0.0	9.0	68.7	22.4	0.0	39.912 *
	100만원 대	0.7	0.7	16.7	45.8	29.1	6.9	
	200만원 대	0.5	1.6	15.8	42.6	33.2	6.4	
	300만원 대	0.0	1.1	16.0	39.4	34.3	9.1	
	400만원 대	0.0	0.0	25.0	25.0	37.5	12.5	
	500만원 이상	0.0	0.0	2.9	38.2	52.9	5.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88〉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음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4)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 확대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X ²
전체		1.6	5.7	21.2	38.4	25.3	7.8	-
성별	남	1.8	5.1	21.7	37.5	26.7	7.1	2.492
	여	1.4	6.3	20.6	39.3	23.9	8.5	
연령	만 19-29세	3.5	4.1	22.9	35.9	27.1	6.5	15.360
	만 30-39세	0.6	6.9	20.7	37.4	24.7	9.8	
	만 40-49세	1.4	4.2	20.8	38.0	28.7	6.9	
	만 50-59세	0.9	6.2	22.0	39.2	25.1	6.6	
	만 60세 이상	1.9	7.0	19.7	40.8	21.1	9.4	
가구원수	1명	2.6	11.7	11.7	39.0	26.0	9.1	31.827 **
	2명	2.3	9.7	25.0	33.0	24.4	5.7	
	3명	0.0	4.3	25.6	39.4	22.7	7.9	
	4명 이상	2.1	4.0	18.7	39.8	27.0	8.3	
거주지역	광역시	0.5	4.6	19.4	36.7	27.6	11.4	126.967 ***
	시부	0.4	5.6	23.7	40.7	24.3	5.4	
	군부	15.2	12.7	16.5	34.2	19.0	2.5	
소득계층	하층	1.5	16.4	23.9	28.4	20.9	9.0	44.494 ***
	중하층	1.0	4.3	23.4	41.3	24.4	5.5	
	중간층	2.1	6.2	20.7	37.7	25.2	8.1	
	중상(상)층	1.5	0.0	9.0	35.8	35.8	17.9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0	6.9	27.6	37.9	15.5	12.1	19.127 *
	고졸	2.7	6.5	18.6	41.7	24.0	6.5	
	대졸 이상	0.8	4.8	22.8	35.5	27.6	8.5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1	5.1	21.6	38.8	26.0	7.4	11.211
	별거/사별/이혼	3.4	8.5	13.6	47.5	18.6	8.5	
	미혼(미혼 부·모 포함)	2.7	6.8	22.1	34.7	24.8	9.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3	3.4	21.4	39.4	29.0	6.5	65.766 ***
	임시일용직	6.1	18.2	21.2	33.3	15.2	6.1	
	고용주 및 자영업자	2.6	7.2	21.6	39.2	22.2	7.2	
	무급가족종사자	22.2	0.0	0.0	55.6	11.1	11.1	
	실업자	0.0	1.7	30.5	40.7	15.3	11.9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1.8	6.9	19.9	36.8	25.8	8.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3	3.5	21.9	39.9	27.7	6.7	18.611 **
	비정규직	4.4	13.3	17.8	31.1	28.9	4.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6.0	19.4	29.9	43.3	1.5	40.615 *
	100만원 대	1.8	5.1	19.3	44.7	21.5	7.6	
	200만원 대	1.9	5.6	23.8	36.2	26.1	6.4	
	300만원 대	1.7	5.1	21.1	37.7	22.3	12.0	
	400만원 대	0.0	12.5	16.7	37.5	29.2	4.2	
	500만원 이상	0.0	8.8	11.8	35.3	23.5	20.6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89〉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음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5) 의료서비스 질 개선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X ²
전체		0.2	2.8	17.1	46.7	28.3	4.9	-
성별	남	0.2	2.6	16.4	45.7	30.4	4.7	2.428
	여	0.2	3.0	17.8	47.8	26.1	5.1	
연령	만 19-29세	0.0	1.2	19.4	47.6	25.9	5.9	28.109
	만 30-39세	0.6	3.4	16.1	44.8	29.3	5.7	
	만 40-49세	0.0	2.3	15.7	50.9	25.9	5.1	
	만 50-59세	0.0	5.7	13.2	44.9	30.0	6.2	
	만 60세 이상	0.5	0.9	21.6	45.1	30.0	1.9	
가구원수	1명	0.0	0.0	24.7	48.1	23.4	3.9	26.157 *
	2명	1.1	1.7	20.5	46.0	28.4	2.3	
	3명	0.0	3.2	16.2	44.0	32.1	4.3	
	4명 이상	0.0	3.4	15.1	48.3	26.8	6.4	
거주지역	광역시	0.2	1.4	17.1	43.7	31.4	6.2	25.179 **
	시부	0.2	3.3	15.6	49.4	27.4	4.1	
	군부	0.0	7.6	26.6	46.8	16.5	2.5	
소득계층	하층	0.0	7.5	29.9	37.3	22.4	3.0	46.894 ***
	중하층	0.0	2.0	17.4	46.6	30.2	3.8	
	중간층	0.4	3.2	15.8	50.7	24.7	5.1	
	중상(상)층	0.0	0.0	11.9	28.4	47.8	11.9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7	1.7	25.9	51.7	19.0	0.0	23.071 *
	고졸	0.0	2.9	18.6	45.1	29.8	3.6	
	대졸 이상	0.2	2.8	14.7	47.6	28.0	6.7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0.1	3.3	14.7	47.0	29.5	5.3	24.646 **
	별거/사별/이혼	1.7	0.0	28.8	35.6	30.5	3.4	
	미혼(미혼 부·모 포함)	0.0	1.8	21.6	48.6	23.9	4.1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0	2.8	14.9	46.8	30.1	5.4	26.236
	임시일용직	0.0	6.1	30.3	42.4	21.2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0.7	3.3	16.3	46.4	30.7	2.6	
	무급가족종사자	0.0	11.1	33.3	11.1	44.4	0.0	
	실업자	0.0	3.4	16.9	45.8	32.2	1.7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0.3	2.0	17.9	48.1	25.3	6.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0	2.9	14.6	47.2	30.0	5.2	6.933
	비정규직	0.0	4.4	28.9	40.0	24.4	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0.0	22.4	41.8	35.8	0.0	29.017
	100만원 대	0.0	2.9	20.0	40.4	32.4	4.4	
	200만원 대	0.2	3.3	16.2	51.1	24.2	4.9	
	300만원 대	0.6	2.9	15.4	48.6	26.3	6.3	
	400만원 대	0.0	4.2	8.3	37.5	41.7	8.3	
	500만원 이상	0.0	0.0	8.8	50.0	32.4	8.8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90〉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음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6)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따른 대응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χ^2
전체		0.1	5.5	19.3	42.6	27.6	4.9	-
성별	남	0.2	5.7	21.1	42.9	26.1	4.0	5.630
	여	0.0	5.3	17.4	42.3	29.1	5.9	
연령	만 19~29세	0.0	2.9	24.1	40.0	29.4	3.5	23.816
	만 30~39세	0.6	3.4	23.6	40.2	28.7	3.4	
	만 40~49세	0.0	6.9	15.7	46.8	25.5	5.1	
	만 50~59세	0.0	7.5	17.2	42.3	25.6	7.5	
	만 60세 이상	0.0	5.6	17.8	42.7	29.6	4.2	
가구원수	1명	0.0	5.2	20.8	40.3	31.2	2.6	12.271
	2명	0.6	5.7	19.3	46.0	25.6	2.8	
	3명	0.0	5.4	20.2	44.8	24.2	5.4	
	4명 이상	0.0	5.5	18.5	40.4	29.8	5.7	
거주지역	광역시	0.0	4.8	17.5	41.2	29.8	6.6	21.400 *
	시부	0.2	7.1	22.0	42.5	24.7	3.5	
	군부	0.0	0.0	12.7	50.6	32.9	3.8	
소득계층	하층	0.0	4.5	28.4	37.3	23.9	6.0	22.084
	중하층	0.0	5.0	20.7	42.1	29.7	2.5	
	중간층	0.2	5.8	18.6	42.4	26.9	6.2	
	중상(상)층	0.0	7.5	7.5	52.2	23.9	9.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0	3.4	19.0	43.1	34.5	0.0	6.508
	고졸	0.0	4.9	19.5	42.4	27.8	5.4	
	대졸 이상	0.2	6.3	19.2	42.7	26.6	5.0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0.1	5.8	17.1	43.4	27.7	5.8	14.835
	별거/사별/이혼	0.0	6.8	18.6	44.1	28.8	1.7	
	미혼(미혼 부·모 포함)	0.0	4.1	26.6	39.6	27.0	2.7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0	4.8	19.7	44.5	25.9	5.1	25.002
	임시일용직	0.0	0.0	30.3	33.3	33.3	3.0	
	고용주 및 자영업자	0.7	6.5	24.2	37.3	25.5	5.9	
	무급가족종사자	0.0	11.1	0.0	66.7	22.2	0.0	
	실업자	0.0	5.1	25.4	39.0	25.4	5.1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0.0	6.1	15.6	43.7	29.9	4.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0	5.0	19.2	44.6	25.9	5.2	6.840
	비정규직	0.0	0.0	31.1	35.6	31.1	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4.5	19.4	55.2	20.9	0.0	21.090
	100만원 대	0.0	5.5	18.5	40.4	31.3	4.4	
	200만원 대	0.0	4.9	19.3	44.0	26.6	5.2	
	300만원 대	0.6	5.7	21.1	37.7	28.6	6.3	
	400만원 대	0.0	12.5	12.5	45.8	20.8	8.3	
	500만원 이상	0.0	8.8	20.6	41.2	23.5	5.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91〉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음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7) 보건의료 위해 대응체계 마련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χ^2
전체		0.1	2.6	19.0	45.3	28.5	4.5	-
성별	남	0.0	2.2	19.2	44.5	29.4	4.7	2.369
	여	0.2	3.0	18.8	46.2	27.5	4.3	
연령	만 19-29세	0.6	0.6	18.2	44.7	29.4	6.5	20.921
	만 30-39세	0.0	2.3	21.3	44.8	25.3	6.3	
	만 40-49세	0.0	2.8	19.0	48.1	28.2	1.9	
	만 50-59세	0.0	4.4	20.3	41.0	29.5	4.8	
	만 60세 이상	0.0	2.3	16.4	47.9	29.6	3.8	
가구원수	1명	0.0	3.9	14.3	42.9	29.9	9.1	16.523
	2명	0.0	3.4	19.9	48.9	24.4	3.4	
	3명	0.0	1.8	23.1	43.0	29.6	2.5	
	4명 이상	0.2	2.6	17.0	45.7	29.1	5.3	
거주지역	광역시	0.2	2.1	19.4	40.3	32.1	5.9	20.228 *
	시부	0.0	3.1	19.7	49.0	24.3	3.9	
	군부	0.0	2.5	12.7	50.6	34.2	0.0	
소득계층	하층	0.0	6.0	23.9	46.3	20.9	3.0	16.037
	중하층	0.0	2.5	19.4	47.6	25.9	4.5	
	중간층	0.2	2.1	19.0	44.3	29.9	4.5	
	중상(상)층	0.0	3.0	11.9	37.3	41.8	6.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0	6.9	15.5	51.7	24.1	1.7	10.483
	고졸	0.0	1.8	19.7	46.0	28.7	3.8	
	대졸 이상	0.2	2.8	18.8	44.0	28.8	5.4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0.0	2.9	19.1	44.5	28.8	4.7	8.905
	별거/사별/이혼	0.0	3.4	13.6	47.5	33.9	1.7	
	미혼(미혼 부·모 포함)	0.5	1.4	20.3	47.3	26.1	4.5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3	1.7	18.9	48.2	24.2	6.8	24.515
	임시일용직	0.0	3.0	27.3	33.3	33.3	3.0	
	고용주 및 자영업자	0.0	3.3	22.2	38.6	34.0	2.0	
	무급가족종사자	0.0	0.0	11.1	66.7	22.2	0.0	
	실업자	0.0	1.7	18.6	50.8	27.1	1.7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0.0	3.3	17.4	45.0	30.2	4.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3	1.7	19.0	47.2	24.8	7.0	2.324
	비정규직	0.0	2.2	24.4	44.4	26.7	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3.0	17.9	47.8	31.3	0.0	18.721
	100만원 대	0.0	2.5	18.9	48.4	26.2	4.0	
	200만원 대	0.2	2.1	19.3	44.7	29.6	4.0	
	300만원 대	0.0	3.4	20.0	44.0	24.6	8.0	
	400만원 대	0.0	4.2	20.8	37.5	33.3	4.2	
	500만원 이상	0.0	2.9	11.8	35.3	44.1	5.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92〉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음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8)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χ^2
전체		0.2	2.3	16.2	49.9	26.8	4.6	-
성별	남	0.2	2.0	18.0	47.8	28.1	4.0	4.906
	여	0.2	2.6	14.4	52.0	25.5	5.3	
연령	만 19~29세	0.0	1.8	18.8	52.9	24.7	1.8	27.906
	만 30~39세	0.6	1.1	20.7	47.1	23.0	7.5	
	만 40~49세	0.0	3.2	16.2	48.1	28.2	4.2	
	만 50~59세	0.4	4.4	13.2	51.5	25.6	4.8	
	만 60세 이상	0.0	0.5	13.6	49.8	31.5	4.7	
가구원수	1명	1.3	2.6	13.0	49.4	31.2	2.6	24.091 +
	2명	0.6	1.7	17.6	48.3	28.4	3.4	
	3명	0.0	1.1	17.3	53.4	20.9	7.2	
	4명 이상	0.0	3.2	15.5	48.5	28.9	3.8	
거주지역	광역시	0.0	2.3	15.0	46.2	30.8	5.7	30.173 ***
	시부	0.4	2.5	16.8	55.2	20.7	4.4	
	군부	0.0	1.3	19.0	38.0	41.8	0.0	
소득계층	하층	0.0	3.0	23.9	43.3	25.4	4.5	27.729 *
	중하층	0.0	2.5	16.6	56.4	20.4	4.0	
	중간층	0.4	1.9	15.4	46.9	30.9	4.5	
	중상(상)층	0.0	3.0	11.9	38.8	37.3	9.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0	1.7	17.2	50.0	29.3	1.7	12.076
	고졸	0.0	1.1	15.0	52.9	26.9	4.0	
	대졸 이상	0.4	3.4	17.1	47.2	26.4	5.4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0.3	2.1	14.7	49.8	27.3	5.8	17.744 +
	별거/사별/이혼	0.0	3.4	11.9	50.8	32.2	1.7	
	미혼(미혼 부·모 포함)	0.0	2.7	22.1	50.0	23.9	1.4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0	2.3	19.4	49.3	23.1	5.9	32.984
	임시일용직	0.0	6.1	12.1	30.3	51.5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0.7	2.6	15.0	45.1	32.7	3.9	
	무급가족종사자	0.0	0.0	11.1	55.6	33.3	0.0	
	실업자	0.0	1.7	22.0	55.9	16.9	3.4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0.3	2.0	13.3	52.9	27.1	4.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0	2.3	19.5	48.4	23.6	6.1	8.760 +
	비정규직	0.0	4.4	13.3	42.2	40.0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3.0	20.9	62.7	13.4	0.0	68.457 ***
	100만원 대	0.0	0.4	13.5	53.1	30.2	2.9	
	200만원 대	0.0	3.1	16.7	50.1	25.2	4.9	
	300만원 대	0.6	3.4	17.1	46.9	25.1	6.9	
	400만원 대	4.2	0.0	16.7	29.2	50.0	0.0	
	500만원 이상	0.0	2.9	17.6	26.5	38.2	14.7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93〉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보건의료정책 중 보다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단위: %)

구분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정신건강관리 및 증진서비스 확대
전체		24.3	20.8	17.3	15.9
성별	남	24.1	20.0	16.0	15.6
	여	24.5	21.7	18.6	16.2
연령	만 19-29세	27.1	20.6	13.5	20.6
	만 30-39세	24.7	14.9	18.4	20.7
	만 40-49세	22.2	21.8	19.4	17.1
	만 50-59세	23.8	23.3	18.9	11.9
	만 60세 이상	24.4	22.1	15.5	11.3
가구원수	1명	24.7	18.2	23.4	16.9
	2명	22.2	22.7	19.3	14.2
	3명	23.8	22.4	14.8	14.8
	4명 이상	25.3	19.6	17.0	17.0
거주지역	광역시	24.8	17.1	18.9	18.0
	시부	26.3	21.0	16.2	13.9
	군부	8.9	40.5	15.2	16.5
소득계층	하층	26.9	31.3	17.9	9.0
	중하층	25.4	19.6	18.1	14.1
	중간층	23.7	21.5	17.1	17.5
	중상(상)층	19.4	11.9	13.4	22.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0.7	24.1	17.2	13.8
	고졸	23.3	22.0	17.7	16.1
	대졸 이상	25.6	19.4	16.9	15.9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23.5	20.3	18.5	14.7
	별거/사별/이혼	20.3	27.1	18.6	6.8
	미혼(미혼 부·모 포함)	27.9	20.7	13.1	22.1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24.8	16.1	19.4	15.8
	임시일용직	30.3	24.2	12.1	15.2
	고용주 및 자영업자	21.6	20.9	15.7	13.7
	무급가족종사자	22.2	22.2	22.2	22.2
	실업자	32.2	28.8	8.5	16.9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3.3	23.5	17.6	16.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24.8	16.6	19.0	15.2
	비정규직	28.9	17.8	17.8	2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4	14.9	23.9	14.9
	100만원 대	19.6	29.8	16.7	15.3
	200만원 대	26.4	20.7	16.5	16.9
	300만원 대	29.7	12.6	19.4	13.1
	400만원 대	25.0	12.5	16.7	20.8
	500만원 이상	35.3	8.8	8.8	20.6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94〉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보건의료정책 중 보다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따른 대응	보건의료 위해 대응체계 마련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X ²
전체		12.1	4.6	3.4	1.6	-
성별	남	13.8	5.1	4.0	1.4	5.815
	여	10.3	4.0	2.8	1.8	
연령	만 19~29세	10.6	5.3	2.4	0.0	34.342
	만 30~39세	10.3	6.9	2.9	1.1	
	만 40~49세	11.6	2.8	2.3	2.8	
	만 50~59세	11.9	4.8	3.5	1.8	
	만 60세 이상	15.5	3.8	5.6	1.9	
가구원수	1명	13.0	2.6	1.3	0.0	40.371 **
	2명	10.8	4.5	4.5	1.7	
	3명	14.1	1.8	7.2	1.1	
	4명 이상	11.3	6.6	1.1	2.1	
거주지역	광역시	10.7	6.4	2.5	1.6	48.095 ***
	시부	13.7	3.7	4.1	1.0	
	군부	10.1	0.0	3.8	5.1	
소득계층	하층	11.9	0.0	3.0	0.0	51.915 ***
	중하층	12.3	3.8	5.5	1.0	
	중간층	11.5	4.3	2.1	2.3	
	중상(상)층	14.9	16.4	0.0	1.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9.0	1.7	1.7	1.7	10.540
	고졸	11.7	3.8	4.3	1.1	
	대졸 이상	11.7	5.6	2.8	2.0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2.2	4.9	3.8	2.1	27.480 *
	별거/사별/이혼	16.9	1.7	6.8	1.7	
	미혼(미혼 부·모 포함)	10.4	4.5	1.4	0.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3.8	5.4	3.1	1.7	33.133
	임시일용직	15.2	3.0	0.0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15.0	6.5	3.3	3.3	
	무급가족종사자	0.0	11.1	0.0	0.0	
	실업자	10.2	0.0	3.4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9.7	3.8	4.1	1.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4.0	5.5	3.2	1.7	4.011
	비정규직	13.3	2.2	0.0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0.9	3.0	9.0	3.0	104.811 ***
	100만원 대	12.7	2.9	1.1	1.8	
	200만원 대	11.5	4.7	2.8	0.5	
	300만원 대	11.4	5.7	4.6	3.4	
	400만원 대	4.2	0.0	20.8	0.0	
	500만원 이상	5.9	17.6	0.0	2.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95〉 귀하의 동네(시·군·구 내)에 믿고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으십니까?

(1) 의원급(30병상 미만)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해당사항 없음	X ²
전체		93.3	6.6	0.1	-
성별	남	93.7	6.1	0.2	1.340
	여	92.9	7.1	0.0	
연령	만 19-29세	93.5	6.5	0.0	6.278
	만 30-39세	93.7	5.7	0.6	
	만 40-49세	91.7	8.3	0.0	
	만 50-59세	94.3	5.7	0.0	
	만 60세 이상	93.4	6.6	0.0	
가구원수	1명	92.2	7.8	0.0	3.390
	2명	94.3	5.7	0.0	
	3명	91.7	8.3	0.0	
	4명 이상	94.0	5.7	0.2	
거주지역	광역시	95.9	4.1	0.0	10.883
	시부	90.7	9.1	0.2	
	군부	94.9	5.1	0.0	
소득계층	하층	92.5	6.0	1.5	17.082 **
	중하층	92.9	7.1	0.0	
	중간층	93.0	7.0	0.0	
	중상(상)층	98.5	1.5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86.2	13.8	0.0	8.272 +
	고졸	92.6	7.4	0.0	
	대졸 이상	94.8	5.0	0.2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93.6	6.3	0.1	1.748
	별거/사별/이혼	89.8	10.2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93.2	6.8	0.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94.4	5.4	0.3	4.028
	임시일용직	93.9	6.1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92.2	7.8	0.0	
	무급가족종사자	88.9	11.1	0.0	
	실업자	94.9	5.1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92.6	7.4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94.2	5.5	0.3	0.227
	비정규직	95.6	4.4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97.0	3.0	0.0	18.268 +
	100만원 대	89.5	10.2	0.4	
	200만원 대	92.7	7.3	0.0	
	300만원 대	97.1	2.9	0.0	
	400만원 대	100.0	0.0	0.0	
	500만원 이상	100.0	0.0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96〉 귀하의 동네(시·군·구 내)에 믿고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으십니까?

(2) 병원급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해당사항 없음	X ²
전체		89.7	10.2	0.1	-
성별	남	90.1	9.7	0.2	1.264
	여	89.3	10.7	0.0	
연령	만 19-29세	91.8	8.2	0.0	9.160
	만 30-39세	92.0	7.5	0.6	
	만 40-49세	89.8	10.2	0.0	
	만 50-59세	86.8	13.2	0.0	
	만 60세 이상	89.2	10.8	0.0	
가구원수	1명	88.3	11.7	0.0	2.748
	2명	92.0	8.0	0.0	
	3명	90.3	9.7	0.0	
	4명 이상	88.7	11.1	0.2	
거주지역	광역시	96.1	3.9	0.0	35.562 ***
	시부	84.9	14.9	0.2	
	군부	83.5	16.5	0.0	
소득계층	하층	79.1	19.4	1.5	29.697 ***
	중하층	87.7	12.3	0.0	
	중간층	91.7	8.3	0.0	
	중상(상)층	98.5	1.5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86.2	13.8	0.0	2.158
	고졸	89.5	10.5	0.0	
	대졸 이상	90.3	9.5	0.2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89.6	10.3	0.1	0.711
	별거/사별/이혼	88.1	11.9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90.5	9.5	0.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88.7	11.0	0.3	6.869
	임시일용직	87.9	12.1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94.1	5.9	0.0	
	무급가족종사자	77.8	22.2	0.0	
	실업자	89.8	10.2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89.3	10.7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88.6	11.1	0.3	0.132
	비정규직	88.9	11.1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89.6	10.4	0.0	17.562 +
	100만원 대	89.1	10.5	0.4	
	200만원 대	92.0	8.0	0.0	
	300만원 대	82.9	17.1	0.0	
	400만원 대	100.0	0.0	0.0	
	500만원 이상	94.1	5.9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97〉 귀하의 동네(시·군·구 내)에 믿고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으십니까?

(3) 대형병원급(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해당사항 없음	X ²
전체		62.4	33.2	4.4	-
성별	남	61.9	33.6	4.5	0.146
	여	63.0	32.8	4.3	
연령	만 19-29세	67.1	30.0	2.9	4.560
	만 30-39세	61.5	34.5	4.0	
	만 40-49세	64.8	30.6	4.6	
	만 50-59세	58.6	36.6	4.8	
	만 60세 이상	61.0	33.8	5.2	
가구원수	1명	48.1	44.2	7.8	15.451 *
	2명	61.9	31.8	6.3	
	3명	66.4	32.1	1.4	
	4명 이상	62.6	32.6	4.9	
거주지역	광역시	85.2	14.8	0.0	455.670 ***
	시부	50.2	47.7	2.1	
	군부	10.1	46.8	43.0	
소득계층	하층	47.8	40.3	11.9	26.183 ***
	중하층	59.2	37.0	3.8	
	중간층	64.6	30.9	4.5	
	중상(상)층	80.6	19.4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58.6	41.4	0.0	19.652 ***
	고졸	59.6	33.0	7.4	
	대졸 이상	65.3	32.5	2.2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62.3	33.4	4.3	5.532
	별거/사별/이혼	59.3	30.5	10.2	
	미혼(미혼 부·모 포함)	63.5	33.3	3.2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63.7	35.2	1.1	41.449 ***
	임시일용직	54.5	27.3	18.2	
	고용주 및 자영업자	63.4	28.1	8.5	
	무급가족종사자	55.6	22.2	22.2	
	실업자	61.0	39.0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61.9	33.2	4.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63.3	35.9	0.9	34.835 ***
	비정규직	60.0	24.4	15.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7.8	52.2	0.0	26.706 **
	100만원 대	66.2	28.0	5.8	
	200만원 대	59.8	34.6	5.6	
	300만원 대	65.1	33.1	1.7	
	400만원 대	79.2	16.7	4.2	
	500만원 이상	67.6	32.4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98〉 귀하는 향후 동네 의원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중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계속)

(단위: %)

구분		신뢰할 만한 경력이 있는 의사나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	지속적 진료를 통해 나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가 있는 것	대형 병원과의 협진 체계가 잘되어 있는 것
전체		32.9	30.5	15.0
성별	남	32.0	30.6	15.6
	여	33.8	30.4	14.4
연령	만 19~29세	37.1	30.6	13.5
	만 30~39세	33.3	25.3	16.1
	만 40~49세	34.7	30.1	14.8
	만 50~59세	28.6	31.7	17.2
	만 60세 이상	31.9	33.8	13.1
가구원수	1명	33.8	33.8	10.4
	2명	34.1	32.4	13.1
	3명	32.1	28.2	17.0
	4명 이상	32.8	30.6	15.3
거주지역	광역시	29.6	26.2	17.8
	시부	38.0	29.7	13.3
	군부	20.3	59.5	10.1
소득계층	하층	35.8	28.4	16.4
	중하층	34.0	30.2	15.1
	중간층	31.8	31.3	14.9
	중상(상)층	31.3	28.4	13.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7.9	31.0	15.5
	고졸	32.5	33.6	13.5
	대졸 이상	32.7	27.6	16.3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31.7	30.6	15.9
	별거/사별/이혼	37.3	32.2	10.2
	미혼(미혼 부·모 포함)	35.6	29.7	13.5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39.4	26.8	14.9
	임시일용직	12.1	39.4	18.2
	고용주 및 자영업자	26.1	37.9	13.7
	무급가족종사자	44.4	33.3	0.0
	실업자	25.4	27.1	22.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32.2	30.7	14.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39.1	26.5	15.2
	비정규직	22.2	37.8	15.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7.3	22.4	19.4
	100만원 대	31.6	35.6	11.6
	200만원 대	33.2	32.5	13.9
	300만원 대	32.0	24.6	17.1
	400만원 대	45.8	12.5	33.3
	500만원 이상	26.5	23.5	23.5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99〉 귀하는 향후 동네 의원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중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단위: %)

구분		건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진료나 상담을 해 주는 것	첨단 시설·장비를 갖추는 것	동네 의원을 이용할 의향 없음	X ²
전체		13.2	7.6	0.8	-
성별	남	12.3	8.7	0.8	2.821
	여	14.2	6.5	0.8	
연령	만 19-29세	10.6	8.2	0.0	19.921
	만 30-39세	13.8	9.2	2.3	
	만 40-49세	13.4	6.9	0.0	
	만 50-59세	13.2	8.8	0.4	
	만 60세 이상	14.6	5.2	1.4	
가구원수	1명	9.1	9.1	3.9	16.951
	2명	11.9	8.0	0.6	
	3명	14.4	7.2	1.1	
	4명 이상	13.6	7.4	0.2	
거주지역	광역시	15.3	10.7	0.5	55.329 ***
	시부	12.0	5.8	1.2	
	군부	8.9	1.3	0.0	
소득계층	하층	11.9	7.5	0.0	6.196
	중하층	13.1	6.5	1.0	
	중간층	13.6	7.7	0.6	
	중상(상)층	11.9	13.4	1.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0.3	3.4	1.7	17.339 +
	고졸	14.8	5.2	0.4	
	대졸 이상	12.1	10.3	1.0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3.5	7.6	0.7	7.205
	별거/사별/이혼	16.9	3.4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11.3	8.6	1.4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8.5	9.6	0.8	38.101 *
	임시일용직	21.2	9.1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13.7	7.2	1.3	
	무급가족종사자	22.2	0.0	0.0	
	실업자	18.6	6.8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15.6	6.1	0.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8.7	9.6	0.9	7.204
	비정규직	15.6	8.9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3.4	7.5	0.0	37.580 +
	100만원 대	13.5	7.6	0.0	
	200만원 대	12.7	6.1	1.6	
	300만원 대	14.9	10.9	0.6	
	400만원 대	0.0	8.3	0.0	
	500만원 이상	17.6	8.8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00〉 귀하는 향후 동네 의원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중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 (계속)

(단위: %)

구분		신뢰할 만한 경력이 있는 의사나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	대형 병원과의 협진 체계가 잘되어 있는 것	건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진료나 상담을 해 주는 것
전체		26.3	22.0	20.7
성별	남	23.9	24.3	21.7
	여	28.9	19.7	19.7
연령	만 19-29세	22.9	24.7	23.5
	만 30-39세	24.1	19.0	23.0
	만 40-49세	30.4	19.6	19.2
	만 50-59세	26.1	25.7	19.0
	만 60세 이상	27.0	20.9	19.9
가구원수	1명	27.6	21.1	22.4
	2명	22.9	20.6	25.7
	3명	26.1	23.2	14.5
	4명 이상	27.6	22.0	22.2
거주지역	광역시	24.0	21.7	23.1
	시부	27.3	21.7	18.8
	군부	33.8	26.0	19.5
소득계층	하층	20.9	20.9	14.9
	중하층	23.6	22.6	21.3
	중간층	29.6	21.8	21.8
	중상(상)층	25.4	20.9	14.9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5.8	21.1	29.8
	고졸	28.8	22.0	18.2
	대졸 이상	25.4	22.1	21.9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26.7	21.8	20.5
	별거/사별/이혼	28.1	21.1	22.8
	미혼(미혼 부·모 포함)	24.8	23.0	20.7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22.3	24.6	24.6
	임시일용직	27.3	27.3	18.2
	고용주 및 자영업자	26.5	22.5	19.9
	무급가족종사자	33.3	22.2	33.3
	실업자	37.3	20.3	11.9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8.0	19.3	18.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21.9	24.9	24.6
	비정규직	28.9	24.4	2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8.8	12.1	16.7
	100만원 대	24.5	19.8	22.3
	200만원 대	27.9	25.8	22.0
	300만원 대	25.1	22.9	18.9
	400만원 대	25.0	4.2	12.5
	500만원 이상	23.5	20.6	14.7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01〉 귀하는 향후 동네 의원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중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

(단위: %)

구분		지속적 진료를 통해 나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가 있는 것	첨단 시설·장비를 갖추는 것	동네 의원을 이용할 의향 없음	χ^2
전체		19.0	10.6	1.4	-
성별	남	17.5	10.9	1.8	7.555
	여	20.5	10.2	1.0	
연령	만 19~29세	17.6	10.0	1.2	15.557
	만 30~39세	18.4	13.8	1.7	
	만 40~49세	20.1	8.9	1.9	
	만 50~59세	15.9	11.5	1.8	
	만 60세 이상	22.7	9.0	0.5	
가구원수	1명	18.4	10.5	0.0	15.900
	2명	18.9	10.9	1.1	
	3명	20.7	13.4	2.2	
	4명 이상	18.2	8.8	1.3	
거주지역	광역시	19.9	9.1	2.3	14.853
	시부	19.0	12.5	0.8	
	군부	14.3	6.5	0.0	
소득계층	하층	31.3	11.9	0.0	22.655 +
	중하층	21.1	10.7	0.8	
	중간층	14.8	9.9	2.1	
	중상(상)층	23.9	13.4	1.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2.8	10.5	0.0	11.989
	고졸	20.4	9.4	1.1	
	대졸 이상	17.2	11.6	1.8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9.1	10.2	1.7	4.125
	별거/사별/이혼	19.3	7.0	1.8	
	미혼(미혼 부·모 포함)	18.5	12.6	0.5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7.2	9.0	2.3	29.496
	임시일용직	18.2	9.1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15.2	13.9	2.0	
	무급가족종사자	11.1	0.0	0.0	
	실업자	25.4	5.1	0.0	
	비경제활동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1.3	11.8	0.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7.5	8.8	2.3	2.578
	비정규직	15.6	11.1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1.8	10.6	0.0	80.792 ***
	100만원 대	20.9	12.5	0.0	
	200만원 대	13.7	9.2	1.4	
	300만원 대	19.4	11.4	2.3	
	400만원 대	29.2	12.5	16.7	
	500만원 이상	35.3	5.9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02〉 귀하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 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 한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X ²
전체		0.1	0.2	7.5	32.6	52.2	7.4	-
성별	남	0.2	0.4	8.7	34.2	49.8	6.7	7.445
	여	0.0	0.0	6.3	31.0	54.7	8.1	
연령	만 19~29세	0.0	0.6	5.3	37.6	48.8	7.6	24.869
	만 30~39세	0.6	0.0	11.5	32.8	50.0	5.2	
	만 40~49세	0.0	0.0	8.8	27.3	58.3	5.6	
	만 50~59세	0.0	0.4	7.5	32.2	51.1	8.8	
	만 60세 이상	0.0	0.0	4.7	34.3	51.6	9.4	
가구원수	1명	0.0	0.0	3.9	33.8	58.4	3.9	24.742 +
	2명	0.6	0.6	8.5	34.1	49.4	6.8	
	3명	0.0	0.0	11.6	31.4	52.0	5.1	
	4명 이상	0.0	0.2	5.3	32.6	52.3	9.6	
거주지역	광역시	0.0	0.2	9.8	33.9	47.6	8.4	30.395 ***
	시부	0.2	0.2	6.0	29.7	58.7	5.2	
	군부	0.0	0.0	3.8	43.0	38.0	15.2	
소득계층	하층	0.0	0.0	6.0	34.3	46.3	13.4	12.742
	중하층	0.0	0.0	8.6	31.0	52.9	7.6	
	중간층	0.2	0.4	6.8	33.7	53.1	5.8	
	중상(상)층	0.0	0.0	7.5	32.8	47.8	11.9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0	0.0	6.9	36.2	41.4	15.5	17.285 +
	고졸	0.0	0.4	5.4	34.5	53.1	6.5	
	대졸 이상	0.2	0.0	9.5	30.4	52.6	7.3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0.1	0.1	8.2	31.0	53.4	7.1	7.627
	별거/사별/이혼	0.0	0.0	5.1	33.9	49.2	11.9	
	미혼(미혼 부·모 포함)	0.0	0.5	5.9	37.4	49.1	7.2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0	0.0	11.5	30.4	52.4	5.6	33.647
	임시일용직	0.0	0.0	9.1	24.2	57.6	9.1	
	고용주 및 자영업자	0.7	0.7	5.9	32.7	51.6	8.5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0	44.4	55.6	0.0	
	실업자	0.0	0.0	3.4	49.2	42.4	5.1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0.0	0.3	5.1	32.5	53.2	9.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0	0.0	11.4	30.0	53.4	5.2	2.477
	비정규직	0.0	0.0	11.1	28.9	48.9	11.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0.0	3.0	35.8	53.7	7.5	40.234 *
	100만원 대	0.0	0.0	8.4	41.5	44.7	5.5	
	200만원 대	0.0	0.2	8.2	30.6	53.2	7.8	
	300만원 대	0.6	0.6	5.1	25.1	59.4	9.1	
	400만원 대	0.0	0.0	20.8	25.0	54.2	0.0	
	500만원 이상	0.0	0.0	2.9	23.5	58.8	14.7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03〉 귀하는 의료와 관련한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

(단위: %)

구분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χ^2
전체		0.3	7.2	44.3	41.1	7.1	-
성별	남	0.2	7.5	45.7	39.9	6.7	1.473
	여	0.4	6.9	42.9	42.3	7.5	
연령	만 19-29세	0.6	7.6	41.8	40.0	10.0	10.535
	만 30-39세	0.6	6.3	49.4	37.4	6.3	
	만 40-49세	0.5	6.9	40.7	45.4	6.5	
	만 50-59세	0.0	6.2	44.5	41.9	7.5	
	만 60세 이상	0.0	8.9	45.5	39.9	5.6	
가구원수	1명	0.0	14.3	39.0	39.0	7.8	27.273 **
	2명	0.0	7.4	52.3	36.4	4.0	
	3명	0.7	6.1	49.8	38.3	5.1	
	4명 이상	0.2	6.6	38.9	44.9	9.4	
거주지역	광역시	0.0	9.8	42.1	38.3	9.8	21.716 **
	시부	0.6	5.0	46.7	42.7	5.0	
	군부	0.0	6.3	41.8	46.8	5.1	
소득계층	하층	0.0	10.4	43.3	37.3	9.0	7.619
	중하층	0.3	7.8	44.8	41.8	5.3	
	중간층	0.4	6.4	43.9	41.6	7.7	
	중상(상)층	0.0	6.0	44.8	37.3	11.9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0	15.5	58.6	25.9	0.0	20.774 **
	고졸	0.4	6.3	45.3	41.9	6.1	
	대졸 이상	0.2	7.1	41.7	42.1	8.9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0.4	6.0	44.8	42.3	6.5	14.713 +
	별거/사별/이혼	0.0	16.9	39.0	39.0	5.1	
	미혼(미혼 부·모 포함)	0.0	8.6	44.1	37.8	9.5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8	7.9	45.6	37.7	7.9	20.211
	임시일용직	0.0	6.1	39.4	51.5	3.0	
	고용주 및 자영업자	0.0	7.8	46.4	41.8	3.9	
	무급가족종사자	0.0	0.0	33.3	66.7	0.0	
	실업자	0.0	5.1	54.2	30.5	10.2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0.0	6.9	41.4	44.0	7.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9	7.9	45.8	37.3	8.2	4.586
	비정규직	0.0	6.7	40.0	51.1	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5	9.0	40.3	47.8	1.5	28.323
	100만원 대	0.0	6.9	46.9	38.9	7.3	
	200만원 대	0.5	6.1	46.8	41.2	5.4	
	300만원 대	0.0	9.1	35.4	44.0	11.4	
	400만원 대	0.0	8.3	58.3	25.0	8.3	
	500만원 이상	0.0	8.8	35.3	41.2	14.7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04〉 귀하는 의료와 관련한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X ²
전체		0.7	3.6	16.0	34.9	36.3	8.5	-
성별	남	1.0	3.8	16.6	34.0	37.4	7.3	3.768
	여	0.4	3.4	15.4	35.8	35.2	9.7	
연령	만 19~29세	1.2	2.9	11.8	41.2	35.3	7.6	27.090
	만 30~39세	0.6	1.7	13.8	45.4	31.0	7.5	
	만 40~49세	0.9	3.2	19.9	30.1	37.5	8.3	
	만 50~59세	0.0	4.8	15.9	31.7	40.1	7.5	
	만 60세 이상	0.9	4.7	17.4	29.6	36.2	11.3	
가구원수	1명	0.0	5.2	22.1	40.3	28.6	3.9	17.995
	2명	1.7	5.1	19.3	31.3	33.0	9.7	
	3명	0.4	2.9	15.5	37.9	35.7	7.6	
	4명 이상	0.6	3.2	14.0	33.6	39.1	9.4	
거주지역	광역시	0.5	3.2	13.4	29.4	40.8	12.8	103.517 ***
	시부	0.2	1.9	17.4	39.4	35.1	6.0	
	군부	5.1	16.5	21.5	38.0	19.0	0.0	
소득계층	하층	1.5	7.5	26.9	35.8	17.9	10.4	25.914 *
	중하층	0.8	3.3	17.4	35.5	35.3	7.8	
	중간층	0.6	3.6	13.9	35.6	38.2	8.1	
	중상(상)층	0.0	1.5	11.9	25.4	47.8	13.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0	5.2	17.2	32.8	41.4	3.4	21.333 *
	고졸	1.6	4.9	15.5	37.4	32.3	8.3	
	대졸 이상	0.0	2.2	16.3	32.9	39.3	9.3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0.7	3.3	16.1	32.3	38.1	9.5	21.667 *
	별거/사별/이혼	0.0	10.2	20.3	37.3	23.7	8.5	
	미혼(미혼 부·모 포함)	0.9	2.7	14.4	42.8	33.8	5.4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0	1.1	17.2	39.2	34.4	8.2	44.350 **
	임시일용직	0.0	9.1	15.2	45.5	27.3	3.0	
	고용주 및 자영업자	2.0	7.8	15.7	24.8	42.5	7.2	
	무급가족종사자	0.0	0.0	22.2	11.1	55.6	11.1	
	실업자	0.0	1.7	18.6	25.4	45.8	8.5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1.0	4.1	14.6	36.1	34.5	9.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0.0	1.2	16.6	38.8	35.0	8.5	10.871 *
	비정규직	0.0	6.7	20.0	46.7	24.4	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0.0	17.9	50.7	31.3	0.0	38.436 *
	100만원 대	1.8	4.0	14.5	34.5	36.7	8.4	
	200만원 대	0.2	4.5	18.8	33.2	34.1	9.2	
	300만원 대	0.6	2.3	13.1	36.6	38.3	9.1	
	400만원 대	0.0	0.0	8.3	37.5	41.7	12.5	
	500만원 이상	0.0	5.9	8.8	17.6	55.9	11.8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05〉 귀하는 의료와 관련한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위: %)

구분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χ^2
전체		3.6	14.2	43.8	31.1	7.3	-
성별	남	3.6	14.2	44.9	29.4	7.9	1.684
	여	3.6	14.2	42.7	32.8	6.7	
연령	만 19-29세	4.7	11.2	45.9	28.2	10.0	12.607
	만 30-39세	4.0	17.2	43.1	31.0	4.6	
	만 40-49세	3.7	12.0	43.1	34.7	6.5	
	만 50-59세	1.8	15.4	42.3	32.6	7.9	
	만 60세 이상	4.2	15.0	45.1	28.2	7.5	
가구원수	1명	2.6	14.3	49.4	23.4	10.4	17.802
	2명	4.5	19.3	44.9	26.1	5.1	
	3명	3.2	15.9	39.0	35.7	6.1	
	4명 이상	3.6	11.3	45.3	31.5	8.3	
거주지역	광역시	1.8	13.0	39.9	36.7	8.7	26.052
	시부	5.0	15.4	45.2	27.4	7.1	
	군부	5.1	13.9	57.0	22.8	1.3	
소득계층	하층	10.4	20.9	37.3	25.4	6.0	30.567 **
	중하층	4.5	16.1	44.6	29.2	5.5	
	중간층	1.9	12.8	43.9	33.5	7.9	
	중상(상)층	3.0	6.0	44.8	31.3	14.9	
최종 학력	중졸 이하	6.9	24.1	41.4	22.4	5.2	15.905 *
	고졸	3.8	14.6	47.1	28.5	6.1	
	대졸 이상	3.0	12.7	41.1	34.5	8.7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3.8	14.0	42.0	32.7	7.5	6.156
	별거/사별/이혼	1.7	15.3	50.8	28.8	3.4	
	미혼(미혼 부·모 포함)	3.6	14.4	47.7	26.6	7.7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3.7	14.1	41.7	30.7	9.9	26.160
	임시일용직	0.0	15.2	48.5	36.4	0.0	
	고용주 및 자영업자	4.6	11.8	47.1	35.3	1.3	
	무급가족종사자	0.0	11.1	55.6	33.3	0.0	
	실업자	1.7	13.6	54.2	18.6	11.9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3.8	15.3	42.2	31.2	7.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3.2	14.3	41.1	31.2	10.2	5.741
	비정규직	4.4	13.3	51.1	31.1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0.9	37.3	29.9	9.0	3.0	162.909 ***
	100만원 대	1.1	14.5	49.1	30.2	5.1	
	200만원 대	3.3	11.3	45.6	34.6	5.2	
	300만원 대	1.7	13.7	39.4	31.4	13.7	
	400만원 대	0.0	8.3	41.7	50.0	0.0	
	500만원 이상	5.9	8.8	29.4	23.5	32.4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06〉 귀하는 우리나라 보건 의료서비스에 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단위: %)

구분		암 등 중대한 질병이라도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이용을 하는 것	가까운 곳에 진료 받을 수 있는 의원(또는 병원)이 있는 것	응급 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이 충분한 것
전체		19.8	16.9	14.8
성별	남	18.6	18.8	14.0
	여	21.1	15.0	15.6
연령	만 19~29세	15.9	18.8	14.1
	만 30~39세	23.0	14.4	16.7
	만 40~49세	20.4	19.4	15.3
	만 50~59세	20.3	13.7	15.4
	만 60세 이상	19.2	18.3	12.7
가구원수	1명	11.7	23.4	15.6
	2명	21.6	14.2	13.6
	3명	16.6	13.7	14.8
	4명 이상	22.3	18.7	15.1
거주지역	광역시	18.0	16.2	13.7
	시부	19.1	18.3	18.0
	군부	34.2	12.7	1.3
소득계층	하층	20.9	16.4	25.4
	중하층	19.4	20.2	12.8
	중간층	19.2	14.9	14.7
	중상(상)층	25.4	11.9	16.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7.6	8.6	10.3
	고졸	18.8	16.1	15.2
	대졸 이상	19.8	18.5	14.9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21.1	17.0	14.3
	별거/사별/이혼	25.4	18.6	11.9
	미혼(미혼 부·모 포함)	14.0	16.2	17.1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9.4	19.7	16.9
	임시일용직	21.2	21.2	18.2
	고용주 및 자영업자	17.0	15.0	9.8
	무급가족종사자	11.1	11.1	22.2
	실업자	18.6	11.9	18.6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1.5	15.6	13.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9.5	19.5	17.5
	비정규직	20.0	22.2	13.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9	17.9	11.9
	100만원 대	16.4	14.2	13.5
	200만원 대	21.2	17.2	13.2
	300만원 대	24.0	18.3	19.4
	400만원 대	16.7	12.5	33.3
	500만원 이상	14.7	29.4	14.7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07〉 귀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에 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단위: %)

구분		지속적 진료를 통해 전반적 건강 상태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것 주치의가 있는 것	내 증상과 치료 계획에 대해 의사에게 충분히 질문하고 설명을 듣는 것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진료 받을 수 있는 것
전체		14.5	12.9	8.5
성별	남	14.4	14.8	8.1
	여	14.6	10.9	8.9
연령	만 19-29세	12.9	14.1	9.4
	만 30-39세	12.1	15.5	7.5
	만 40-49세	13.0	13.9	6.5
	만 50-59세	16.3	9.7	9.3
	만 60세 이상	17.4	12.2	9.9
가구원수	1명	18.2	11.7	7.8
	2명	13.1	11.9	9.7
	3명	17.3	17.0	6.5
	4명 이상	12.8	11.1	9.4
거주지역	광역시	17.8	12.1	10.0
	시부	12.2	13.3	6.4
	군부	10.1	15.2	12.7
소득계층	하층	10.4	9.0	9.0
	중하층	16.6	11.8	7.1
	중간층	13.6	15.6	8.3
	중상(상)층	11.9	4.5	17.9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9.0	13.8	12.1
	고졸	16.1	12.3	8.1
	대졸 이상	12.5	13.3	8.5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4.6	12.2	8.2
	별거/사별/이혼	16.9	11.9	5.1
	미혼(미혼 부·모 포함)	13.5	15.3	10.4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2.1	14.4	7.3
	임시일용직	12.1	9.1	6.1
	고용주 및 자영업자	22.9	13.7	10.5
	무급가족종사자	33.3	11.1	0.0
	실업자	23.7	11.9	10.2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11.8	11.8	9.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12.0	14.6	7.0
	비정규직	13.3	8.9	8.9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3.4	17.9	4.5
	100만원 대	19.3	14.5	9.8
	200만원 대	12.9	13.4	8.7
	300만원 대	13.1	6.3	7.4
	400만원 대	16.7	16.7	0.0
	500만원 이상	2.9	14.7	14.7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08〉 귀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에 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의사나 병원의 치료 성적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신뢰감을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서울 등 수도권에 가지 않더라도 어디에서나 우수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스마트폰, 기기 등을 활용하여 진료, 처방, 건강관리를 받는 것	X ²
전체		5.2	3.8	3.6	-
성별	남	5.5	2.6	3.2	11.288
	여	4.9	5.1	4.0	
연령	만 19-29세	5.3	4.1	5.3	28.016
	만 30-39세	3.4	3.4	4.0	
	만 40-49세	6.5	2.8	2.3	
	만 50-59세	4.4	6.2	4.8	
	만 60세 이상	6.1	2.3	1.9	
가구원수	1명	6.5	2.6	2.6	27.570
	2명	7.4	4.5	4.0	
	3명	4.7	4.7	4.7	
	4명 이상	4.5	3.2	3.0	
거주지역	광역시	4.8	2.7	4.8	46.173 ***
	시부	5.6	5.0	2.1	
	군부	5.1	2.5	6.3	
소득계층	하층	4.5	3.0	1.5	34.934 +
	중하층	5.5	3.5	3.0	
	중간층	4.7	4.5	4.5	
	중상(상)층	7.5	1.5	3.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6.9	1.7	0.0	14.602
	고졸	4.7	4.5	4.0	
	대졸 이상	5.4	3.4	3.6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5.0	4.0	3.5	15.717
	별거/사별/이혼	8.5	1.7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5.0	3.6	5.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4.8	3.1	2.3	46.701
	임시일용직	6.1	0.0	6.1	
	고용주 및 자영업자	5.2	2.6	3.3	
	무급가족종사자	0.0	0.0	11.1	
	실업자	1.7	1.7	1.7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6.1	5.6	4.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4.4	3.2	2.3	5.527
	비정규직	8.9	0.0	4.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5	7.5	1.5	56.181 *
	100만원 대	5.1	2.9	4.4	
	200만원 대	5.6	3.8	4.0	
	300만원 대	5.1	4.6	1.7	
	400만원 대	0.0	4.2	0.0	
	500만원 이상	0.0	0.0	8.8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09〉 귀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우선적으로 어떤 부분부터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장애인, 노인, 소아 등 건강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 늘려야 한다	경증 질환(감기 등)보다 중증 질환(암, 난치병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계층, 질병 경중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치료, 검사에 대한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X ²
전체		38.1	30.9	31.0	-
성별	남	38.3	31.2	30.4	0.156
	여	37.9	30.6	31.6	
연령	만 19~29세	35.9	32.9	31.2	6.312
	만 30~39세	37.4	33.3	29.3	
	만 40~49세	38.0	30.6	31.5	
	만 50~59세	36.1	33.9	30.0	
	만 60세 이상	42.7	24.4	32.9	
가구원수	1명	36.4	33.8	29.9	3.821
	2명	35.2	29.5	35.2	
	3명	41.2	28.2	30.7	
	4명 이상	37.7	32.6	29.8	
거주지역	광역시	45.6	30.1	24.4	23.486 ***
	시부	33.0	31.3	35.7	
	군부	27.8	32.9	39.2	
소득계층	하층	25.4	26.9	47.8	24.730 ***
	중하층	39.8	28.2	32.0	
	중간층	38.6	31.1	30.3	
	중상(상)층	37.3	49.3	13.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43.1	25.9	31.0	12.644 *
	고졸	39.2	26.0	34.8	
	대졸 이상	36.5	35.9	27.6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38.2	30.6	31.2	1.035
	별거/사별/이혼	42.4	27.1	30.5	
	미혼(미혼 부·모 포함)	36.5	32.9	30.6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37.7	36.6	25.6	16.466 +
	임시일용직	27.3	24.2	48.5	
	고용주 및 자영업자	35.9	27.5	36.6	
	무급가족종사자	44.4	33.3	22.2	
	실업자	40.7	25.4	33.9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39.6	28.4	32.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37.3	36.4	26.2	2.730
	비정규직	33.3	28.9	37.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8.8	22.4	38.8	13.559
	100만원 대	41.5	30.5	28.0	
	200만원 대	37.9	33.2	28.9	
	300만원 대	36.0	29.7	34.3	
	400만원 대	41.7	29.2	29.2	
	500만원 이상	20.6	29.4	5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10〉 귀하는 국민건강을 위한 라돈침대, 액상 전자담배 등에 대한 정부 개입(제조 및 판매, 수입규제 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다	②	③	④	⑤	⑥ 안전을 위해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χ^2
전체		1.2	4.2	4.3	33.9	47.5	8.9	-
성별	남	2.4	4.0	4.3	34.4	47.2	7.7	13.594 *
	여	0.0	4.5	4.3	33.4	47.8	10.1	
연령	만 19-29세	0.6	3.5	1.8	39.4	44.7	10.0	27.213
	만 30-39세	2.3	8.0	2.9	28.7	50.6	7.5	
	만 40-49세	0.9	3.2	4.2	35.2	47.2	9.3	
	만 50-59세	1.3	4.0	4.0	35.7	44.9	10.1	
	만 60세 이상	0.9	2.8	8.0	30.5	50.2	7.5	
가구원수	1명	0.0	5.2	3.9	39.0	39.0	13.0	12.684
	2명	0.6	2.3	6.8	30.7	51.7	8.0	
	3명	1.4	5.1	4.0	34.7	47.3	7.6	
	4명 이상	1.5	4.3	3.6	33.8	47.4	9.4	
거주지역	광역시	0.9	4.6	5.2	38.0	46.7	4.6	87.219 ***
	시부	1.7	4.6	3.3	30.1	51.7	8.7	
	군부	0.0	0.0	5.1	34.2	26.6	34.2	
소득계층	하층	0.0	6.0	4.5	23.9	52.2	13.4	15.476
	중하층	1.5	2.8	4.8	34.3	49.6	7.1	
	중간층	1.3	5.5	3.8	35.2	44.6	9.6	
	중상(상)층	0.0	1.5	4.5	32.8	50.7	10.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0	1.7	10.3	37.9	44.8	5.2	18.170 +
	고졸	0.4	3.1	4.9	33.6	48.4	9.4	
	대졸 이상	2.0	5.4	3.0	33.7	47.0	8.9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1.4	4.3	4.9	32.5	48.1	8.8	12.743
	별거/사별/이혼	0.0	8.5	3.4	35.6	37.3	15.3	
	미혼(미혼 부·모 포함)	0.9	2.7	2.7	37.8	48.2	7.7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2.0	5.1	2.0	36.9	46.2	7.9	44.941 **
	임시일용직	0.0	3.0	18.2	27.3	39.4	12.1	
	고용주 및 자영업자	2.0	3.3	5.2	34.6	42.5	12.4	
	무급가족종사자	0.0	11.1	11.1	22.2	33.3	22.2	
	실업자	0.0	5.1	8.5	37.3	47.5	1.7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0.5	3.6	4.1	31.2	51.7	9.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2.0	5.2	2.0	36.2	46.9	7.6	19.533 **
	비정규직	0.0	2.2	13.3	35.6	35.6	13.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0	0.0	4.5	34.3	56.7	4.5	59.072 ***
	100만원 대	0.0	1.8	5.5	35.6	45.8	11.3	
	200만원 대	1.2	4.2	3.8	35.8	46.8	8.2	
	300만원 대	4.0	8.6	3.4	25.7	50.9	7.4	
	400만원 대	0.0	16.7	4.2	29.2	29.2	20.8	
	500만원 이상	0.0	0.0	5.9	41.2	47.1	5.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11〉 귀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고 있거나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인지여부

(단위: %)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X ²
전체		69.8	30.2	-
성별	남	70.9	29.1	0.641
	여	68.6	31.4	
연령	만 19-29세	67.6	32.4	31.550 ***
	만 30-39세	77.6	22.4	
	만 40-49세	79.2	20.8	
	만 50-59세	68.7	31.3	
	만 60세 이상	56.8	43.2	
가구원수	1명	71.4	28.6	5.351
	2명	63.1	36.9	
	3명	69.3	30.7	
	4명 이상	72.3	27.7	
거주지역	광역시	70.4	29.6	2.033
	시부	68.3	31.7	
	군부	75.9	24.1	
소득계층	하층	46.3	53.7	22.325 ***
	중하층	68.5	31.5	
	중간층	73.1	26.9	
	중상(상)층	77.6	22.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60.3	39.7	20.677 ***
	고졸	63.7	36.3	
	대졸 이상	76.4	23.6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69.8	30.2	0.073
	별거/사별/이혼	71.2	28.8	
	미혼(미혼 부·모 포함)	69.4	30.6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73.8	26.2	8.581
	임시일용직	69.7	30.3	
	고용주 및 자영업자	71.9	28.1	
	무급가족종사자	88.9	11.1	
	실업자	67.8	32.2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65.2	34.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74.1	25.9	0.544
	비정규직	68.9	31.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7.8	52.2	24.230 ***
	100만원 대	70.5	29.5	
	200만원 대	71.8	28.2	
	300만원 대	73.7	26.3	
	400만원 대	83.3	16.7	
	500만원 이상	52.9	47.1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12〉 귀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고 있거나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참여의향

(단위: %)

구분		참여할 의향이 있다	참여할 의향이 없다	X ²
전체		62.7	37.3	-
성별	남	60.3	39.7	2.572
	여	65.2	34.8	
연령	만 19-29세	58.8	41.2	8.923 +
	만 30-39세	69.5	30.5	
	만 40-49세	64.4	35.6	
	만 50-59세	64.8	35.2	
	만 60세 이상	56.3	43.7	
가구원수	1명	57.1	42.9	2.196
	2명	61.9	38.1	
	3명	65.7	34.3	
	4명 이상	62.1	37.9	
거주지역	광역시	60.1	39.9	3.848
	시부	65.8	34.2	
	군부	58.2	41.8	
소득계층	하층	61.2	38.8	3.083
	중하층	64.7	35.3	
	중간층	62.5	37.5	
	중상(상)층	53.7	46.3	
최종 학력	중졸 이하	48.3	51.7	5.524 +
	고졸	63.2	36.8	
	대졸 이상	63.9	36.1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64.4	35.6	3.173
	별거/사별/이혼	59.3	40.7	
	미혼(미혼 부·모 포함)	58.1	41.9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64.2	35.8	4.456
	임시일용직	72.7	27.3	
	고용주 및 자영업자	57.5	42.5	
	무급가족종사자	77.8	22.2	
	실업자	62.7	37.3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62.1	37.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63.0	37.0	5.066 *
	비정규직	80.0	2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8.2	41.8	2.937
	100만원 대	66.5	33.5	
	200만원 대	62.1	37.9	
	300만원 대	60.0	40.0	
	400만원 대	62.5	37.5	
	500만원 이상	61.8	38.2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13〉 귀하는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청소년	청년 (20-30대)	노인 (65세 이상)	중장년 (40-50대)	아동	기타	χ^2
전체		27.7	23.9	21.6	16.2	10.5	0.1	-
성별	남	29.1	25.5	19.8	15.6	9.9	0.2	4.933
	여	26.3	22.3	23.5	16.8	11.1	0.0	
연령	만 19-29세	25.9	42.4	10.6	9.4	11.8	0.0	125.228 ***
	만 30-39세	26.4	27.0	15.5	13.2	17.8	0.0	
	만 40-49세	38.0	17.6	14.8	18.5	10.6	0.5	
	만 50-59세	24.7	23.3	24.2	19.4	8.4	0.0	
	만 60세 이상	23.0	13.6	39.4	18.3	5.6	0.0	
가구원수	1명	23.4	16.9	22.1	16.9	19.5	1.3	49.682
	2명	23.3	21.6	34.7	13.1	7.4	0.0	
	3명	30.0	23.1	22.7	14.1	10.1	0.0	
	4명 이상	28.7	26.4	16.0	18.5	10.4	0.0	
거주지역	광역시	26.0	22.8	22.3	19.4	9.3	0.2	13.382
	시부	29.5	23.9	21.2	14.7	10.8	0.0	
	군부	26.6	30.4	20.3	7.6	15.2	0.0	
소득계층	하층	35.8	16.4	19.4	19.4	7.5	1.5	23.582 +
	중하층	25.7	24.9	21.9	17.6	9.8	0.0	
	중간층	27.9	24.1	22.6	14.5	10.9	0.0	
	중상(상)층	29.9	23.9	14.9	16.4	14.9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5.5	5.2	53.4	17.2	8.6	0.0	54.748 ***
	고졸	27.6	24.4	24.0	15.7	8.3	0.0	
	대졸 이상	29.2	25.6	15.7	16.5	12.7	0.2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28.5	20.7	23.8	17.1	9.9	0.0	63.629 ***
	별거/사별/이혼	20.3	8.5	37.3	25.4	8.5	0.0	
	미혼(미혼 부·모 포함)	27.0	38.3	10.4	10.8	13.1	0.5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29.9	25.4	15.2	15.2	14.4	0.0	64.937 ***
	임시일용직	24.2	21.2	21.2	24.2	6.1	3.0	
	고용주 및 자영업자	28.1	19.0	30.1	13.7	9.2	0.0	
	무급가족종사자	33.3	22.2	33.3	11.1	0.0	0.0	
	실업자	16.9	23.7	32.2	23.7	3.4	0.0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7.4	24.8	22.3	16.4	9.2	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30.6	23.9	15.7	15.2	14.6	0.0	13.626 *
	비정규직	20.0	33.3	15.6	22.2	6.7	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8.4	14.9	37.3	11.9	7.5	0.0	42.844 *
	100만원 대	28.0	20.7	27.6	16.7	6.9	0.0	
	200만원 대	26.6	25.6	17.9	16.5	13.2	0.2	
	300만원 대	26.3	29.1	20.0	13.7	10.9	0.0	
	400만원 대	33.3	20.8	12.5	25.0	8.3	0.0	
	500만원 이상	41.2	20.6	2.9	23.5	11.8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14〉 귀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상담 전화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단위: %)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X ²
전체		31.2	68.8	-
성별	남	30.8	69.2	0.065
	여	31.6	68.4	
연령	만 19-29세	32.9	67.1	11.612 *
	만 30-39세	32.8	67.2	
	만 40-49세	38.4	61.6	
	만 50-59세	28.6	71.4	
	만 60세 이상	23.9	76.1	
가구원수	1명	29.9	70.1	8.881 *
	2명	27.3	72.7	
	3명	26.4	73.6	
	4명 이상	35.7	64.3	
거주지역	광역시	28.5	71.5	24.131 ***
	시부	29.7	70.3	
	군부	55.7	44.3	
소득계층	하층	25.4	74.6	4.941
	중하층	28.5	71.5	
	중간층	34.5	65.5	
	중상(상)층	29.9	70.1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5.9	74.1	8.452 *
	고졸	27.1	72.9	
	대졸 이상	35.5	64.5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29.8	70.2	2.662
	별거/사별/이혼	37.3	62.7	
	미혼(미혼 부·모 포함)	34.2	65.8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32.1	67.9	6.821
	임시일용직	39.4	60.6	
	고용주 및 자영업자	31.4	68.6	
	무급가족종사자	33.3	66.7	
	실업자	16.9	83.1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31.7	68.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31.8	68.2	1.221
	비정규직	40.0	6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2.4	77.6	8.601
	100만원 대	33.1	66.9	
	200만원 대	34.4	65.6	
	300만원 대	26.9	73.1	
	400만원 대	25.0	75.0	
	500만원 이상	20.6	79.4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15〉 귀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상담 전화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단위: %)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X ²
전체		22.8	77.2	-
성별	남	21.1	78.9	1.592
	여	24.5	75.5	
연령	만 19-29세	25.9	74.1	18.573 ***
	만 30-39세	22.4	77.6	
	만 40-49세	29.2	70.8	
	만 50-59세	24.2	75.8	
	만 60세 이상	12.7	87.3	
가구원수	1명	26.0	74.0	11.199 *
	2명	15.9	84.1	
	3명	19.5	80.5	
	4명 이상	26.8	73.2	
거주지역	광역시	21.0	79.0	3.478
	시부	23.2	76.8	
	군부	30.4	69.6	
소득계층	하층	13.4	86.6	9.780 *
	중하층	19.9	80.1	
	중간층	26.9	73.1	
	중상(상)층	20.9	79.1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0.3	89.7	7.898 *
	고졸	21.3	78.7	
	대졸 이상	25.6	74.4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22.1	77.9	1.438
	별거/사별/이혼	20.3	79.7	
	미혼(미혼 부·모 포함)	25.7	74.3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23.9	76.1	12.329 *
	임시일용직	30.3	69.7	
	고용주 및 자영업자	22.9	77.1	
	무급가족종사자	44.4	55.6	
	실업자	6.8	93.2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부 등)	23.0	77.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만)	정규직	23.6	76.4	1.209
	비정규직	31.1	68.9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4	89.6	8.625
	100만원 대	23.6	76.4	
	200만원 대	25.2	74.8	
	300만원 대	22.3	77.7	
	400만원 대	20.8	79.2	
	500만원 이상	14.7	85.3	

주: +p<0.1, *p<0.05, **p<0.01, ***p<0.001

부록 5. 2019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인식조사 기초분석 결과표

〈부표 5-1〉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전체		(121)	100.0
성별	남자	(74)	61.2
	여자	(47)	38.8
전공별	경상·법정	(26)	21.5
	인문·사회	(62)	51.2
	보건·의료	(30)	24.8
	기타	(3)	2.5
소속별	대학	(55)	45.5
	연구기관	(36)	29.8
	언론사	(30)	24.8
정치적 성향	보수	(27)	22.3
	중도	(40)	33.1
	진보	(54)	44.6

〈부표 5-2〉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복지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단위: %)

구분		매우 낮다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높다	매우 높다	X ²
전체		0.8	14.9	46.3	23.1	14.0	0.8	-
성별	남자	1.4	13.5	40.5	25.7	17.6	1.4	5.072
	여자	0.0	17.0	55.3	19.1	8.5	0.0	
전공별	경상·법정	0.0	26.9	46.2	23.1	3.8	0.0	17.051
	인문·사회	1.6	16.1	45.2	24.2	11.3	1.6	
	보건·의료	0.0	0.0	50.0	23.3	26.7	0.0	
	기타	0.0	33.3	33.3	0.0	33.3	0.0	
소속별	대학	1.8	14.5	40.0	25.5	18.2	0.0	15.540
	연구기관	0.0	16.7	66.7	11.1	5.6	0.0	
	언론사	0.0	13.3	33.3	33.3	16.7	3.3	
정치적 성향	보수	0.0	7.4	33.3	18.5	37.0	3.7	33.848 ***
	중도	0.0	2.5	52.5	32.5	12.5	0.0	
	진보	1.9	27.8	48.1	18.5	3.7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3〉 귀하는 전문가로서 지난 3년간(2017-2019)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정책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X ²
전체		2.5	7.4	33.9	49.6	6.6	0.0	-
성별	남자	1.4	10.8	29.7	51.4	6.8	0.0	4.987
	여자	4.3	2.1	40.4	46.8	6.4	0.0	
전공별	경상·법정	3.8	7.7	42.3	42.3	3.8	0.0	10.587
	인문·사회	1.6	8.1	30.6	51.6	8.1	0.0	
	보건·의료	3.3	3.3	36.7	53.3	3.3	0.0	
	기타	0.0	33.3	0.0	33.3	33.3	0.0	
소속별	대학	3.6	9.1	23.6	56.4	7.3	0.0	8.376
	연구기관	0.0	2.8	50.0	41.7	5.6	0.0	
	언론사	3.3	10.0	33.3	46.7	6.7	0.0	
정치적 성향	보수	7.4	11.1	29.6	40.7	11.1	0.0	9.007
	중도	0.0	2.5	40.0	55.0	2.5	0.0	
	진보	1.9	9.3	31.5	50.0	7.4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4〉 귀하는 전문가로서 다음의 각 복지정책 영역의 지난 3년간(2017-2019)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일자리 지원 확대(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X ²
전체		5.0	24.8	29.8	29.8	8.3	2.5	-
성별	남자	8.1	24.3	25.7	29.7	10.8	1.4	7.364
	여자	0.0	25.5	36.2	29.8	4.3	4.3	
전공별	경상·법정	7.7	19.2	30.8	26.9	15.4	0.0	9.347
	인문·사회	4.8	24.2	32.3	30.6	6.5	1.6	
	보건·의료	3.3	30.0	26.7	26.7	6.7	6.7	
	기타	0.0	33.3	0.0	66.7	0.0	0.0	
소속별	대학	7.3	18.2	29.1	29.1	12.7	3.6	7.162
	연구기관	2.8	27.8	33.3	30.6	5.6	0.0	
	언론사	3.3	33.3	26.7	30.0	3.3	3.3	
정치적 성향	보수	7.4	29.6	18.5	29.6	7.4	7.4	8.380
	중도	2.5	25.0	37.5	27.5	5.0	2.5	
	진보	5.6	22.2	29.6	31.5	11.1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5〉 귀하는 전문가로서 다음의 각 복지정책 영역의 지난 3년간(2017-2019)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등)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X ²
전체		1.7	9.9	28.9	43.8	12.4	3.3	-
성별	남자	1.4	9.5	27.0	47.3	10.8	4.1	1.623
	여자	2.1	10.6	31.9	38.3	14.9	2.1	
전공별	경상·법정	0.0	11.5	34.6	50.0	3.8	0.0	11.161
	인문·사회	3.2	12.9	29.0	37.1	14.5	3.2	
	보건·의료	0.0	3.3	23.3	53.3	13.3	6.7	
	기타	0.0	0.0	33.3	33.3	33.3	0.0	
소속별	대학	1.8	9.1	32.7	34.5	14.5	7.3	12.561
	연구기관	0.0	8.3	25.0	61.1	5.6	0.0	
	언론사	3.3	13.3	26.7	40.0	16.7	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14.8	25.9	33.3	18.5	7.4	9.414
	중도	2.5	7.5	22.5	57.5	10.0	0.0	
	진보	1.9	9.3	35.2	38.9	11.1	3.7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6〉 귀하는 전문가로서 다음의 각 복지정책 영역의 지난 3년간(2017-2019)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X ²
전체		1.7	15.7	35.5	33.9	9.9	3.3	-
성별	남자	2.7	14.9	35.1	36.5	5.4	5.4	8.196
	여자	0.0	17.0	36.2	29.8	17.0	0.0	
전공별	경상·법정	0.0	7.7	53.8	34.6	3.8	0.0	20.179
	인문·사회	3.2	17.7	33.9	30.6	11.3	3.2	
	보건·의료	0.0	20.0	26.7	36.7	13.3	3.3	
	기타	0.0	0.0	0.0	66.7	0.0	33.3	
소속별	대학	1.8	9.1	36.4	32.7	14.5	5.5	9.626
	연구기관	0.0	19.4	30.6	41.7	5.6	2.8	
	언론사	3.3	23.3	40.0	26.7	6.7	0.0	
정치적 성향	보수	3.7	7.4	29.6	40.7	14.8	3.7	7.807
	중도	0.0	22.5	37.5	30.0	10.0	0.0	
	진보	1.9	14.8	37.0	33.3	7.4	5.6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7〉 귀하는 전문가로서 다음의 각 복지정책 영역의 지난 3년간(2017-2019)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X ²
전체		4.1	12.4	33.9	38.0	10.7	0.8	-
성별	남자	4.1	12.2	37.8	39.2	5.4	1.4	6.648
	여자	4.3	12.8	27.7	36.2	19.1	0.0	
전공별	경상·법정	3.8	11.5	26.9	57.7	0.0	0.0	13.658
	인문·사회	3.2	11.3	37.1	32.3	16.1	0.0	
	보건·의료	6.7	13.3	33.3	33.3	10.0	3.3	
	기타	0.0	33.3	33.3	33.3	0.0	0.0	
소속별	대학	5.5	12.7	36.4	30.9	12.7	1.8	10.932
	연구기관	0.0	5.6	30.6	55.6	8.3	0.0	
	언론사	6.7	20.0	33.3	30.0	10.0	0.0	
정치적 성향	보수	7.4	14.8	29.6	33.3	11.1	3.7	9.225
	중도	5.0	5.0	42.5	37.5	10.0	0.0	
	진보	1.9	16.7	29.6	40.7	11.1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8〉 귀하는 전문가로서 다음의 각 복지정책 영역의 지난 3년간(2017-2019)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 보육·양육 지원 확대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X ²
전체		4.1	9.1	24.8	43.0	17.4	1.7	-
성별	남자	2.7	8.1	27.0	43.2	16.2	2.7	2.944
	여자	6.4	10.6	21.3	42.6	19.1	0.0	
전공별	경상·법정	3.8	3.8	26.9	61.5	3.8	0.0	20.644
	인문·사회	1.6	12.9	25.8	33.9	24.2	1.6	
	보건·의료	10.0	6.7	23.3	46.7	10.0	3.3	
	기타	0.0	0.0	0.0	33.3	66.7	0.0	
소속별	대학	3.6	12.7	29.1	30.9	20.0	3.6	19.458 *
	연구기관	2.8	5.6	8.3	69.4	13.9	0.0	
	언론사	6.7	6.7	36.7	33.3	16.7	0.0	
정치적 성향	보수	7.4	3.7	37.0	22.2	25.9	3.7	20.618 *
	중도	5.0	2.5	25.0	60.0	7.5	0.0	
	진보	1.9	16.7	18.5	40.7	20.4	1.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9〉 귀하는 전문가로서 다음의 각 복지정책 영역의 지난 3년간(2017-2019)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 노인 대상 돌봄 확대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X ²
전체		1.7	7.4	26.4	44.6	16.5	3.3	-
성별	남자	1.4	4.1	27.0	47.3	17.6	2.7	3.700
	여자	2.1	12.8	25.5	40.4	14.9	4.3	
전공별	경상·법정	3.8	0.0	42.3	46.2	7.7	0.0	22.894 +
	인문·사회	0.0	11.3	24.2	43.5	19.4	1.6	
	보건·의료	3.3	6.7	16.7	50.0	13.3	10.0	
	기타	0.0	0.0	33.3	0.0	66.7	0.0	
소속별	대학	3.6	3.6	25.5	45.5	16.4	5.5	7.930
	연구기관	0.0	8.3	25.0	50.0	13.9	2.8	
	언론사	0.0	13.3	30.0	36.7	20.0	0.0	
정치적 성향	보수	7.4	3.7	25.9	40.7	14.8	7.4	13.737
	중도	0.0	2.5	30.0	50.0	15.0	2.5	
	진보	0.0	13.0	24.1	42.6	18.5	1.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10〉 귀하는 전문가로서 다음의 각 복지정책 영역의 지난 3년간(2017-2019)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7) 장애인 대상 돌봄 확대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X ²
전체		5.0	9.1	40.5	32.2	12.4	0.8	-
성별	남자	5.4	5.4	41.9	32.4	13.5	1.4	3.844
	여자	4.3	14.9	38.3	31.9	10.6	0.0	
전공별	경상·법정	7.7	0.0	61.5	23.1	7.7	0.0	52.256 ***
	인문·사회	3.2	12.9	38.7	32.3	12.9	0.0	
	보건·의료	6.7	10.0	30.0	36.7	16.7	0.0	
	기타	0.0	0.0	0.0	66.7	0.0	33.3	
소속별	대학	9.1	7.3	40.0	27.3	16.4	0.0	10.849
	연구기관	2.8	11.1	44.4	27.8	11.1	2.8	
	언론사	0.0	10.0	36.7	46.7	6.7	0.0	
정치적 성향	보수	11.1	3.7	44.4	22.2	18.5	0.0	11.138
	중도	2.5	7.5	47.5	37.5	5.0	0.0	
	진보	3.7	13.0	33.3	33.3	14.8	1.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11〉 귀하는 전문가로서 다음의 각 복지정책 영역의 지난 3년간(2017-2019)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지원 확대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X ²
전체		0.8	10.7	32.2	43.0	12.4	0.8	-
성별	남자	1.4	9.5	32.4	41.9	14.9	0.0	3.493
	여자	0.0	12.8	31.9	44.7	8.5	2.1	
전공별	경상·법정	0.0	15.4	34.6	46.2	3.8	0.0	17.119
	인문·사회	0.0	11.3	35.5	43.5	9.7	0.0	
	보건·의료	3.3	3.3	26.7	40.0	23.3	3.3	
	기타	0.0	33.3	0.0	33.3	33.3	0.0	
소속별	대학	1.8	10.9	32.7	36.4	18.2	0.0	11.648
	연구기관	0.0	5.6	33.3	55.6	2.8	2.8	
	언론사	0.0	16.7	30.0	40.0	13.3	0.0	
정치적 성향	보수	3.7	11.1	33.3	29.6	22.2	0.0	11.265
	중도	0.0	7.5	27.5	52.5	10.0	2.5	
	진보	0.0	13.0	35.2	42.6	9.3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12〉 귀하는 전문가로서 다음의 각 복지정책 영역의 지난 3년간(2017-2019)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9)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X ²
전체		7.4	22.3	41.3	23.1	5.8	0.0	-
성별	남자	6.8	17.6	39.2	29.7	6.8	0.0	6.138
	여자	8.5	29.8	44.7	12.8	4.3	0.0	
전공별	경상·법정	7.7	15.4	53.8	19.2	3.8	0.0	8.259
	인문·사회	4.8	24.2	38.7	24.2	8.1	0.0	
	보건·의료	10.0	23.3	40.0	23.3	3.3	0.0	
	기타	33.3	33.3	0.0	33.3	0.0	0.0	
소속별	대학	7.3	20.0	40.0	27.3	5.5	0.0	6.554
	연구기관	11.1	16.7	47.2	22.2	2.8	0.0	
	언론사	3.3	33.3	36.7	16.7	10.0	0.0	
정치적 성향	보수	7.4	29.6	33.3	18.5	11.1	0.0	6.767
	중도	10.0	20.0	45.0	17.5	7.5	0.0	
	진보	5.6	20.4	42.6	29.6	1.9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13〉 귀하는 전문가로서 다음의 각 복지정책 영역의 지난 3년간(2017-2019)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0)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X ²
전체		8.3	24.0	33.1	26.4	8.3	0.0	-
성별	남자	9.5	23.0	28.4	31.1	8.1	0.0	3.223
	여자	6.4	25.5	40.4	19.1	8.5	0.0	
전공별	경상·법정	7.7	30.8	30.8	30.8	0.0	0.0	13.278
	인문·사회	6.5	22.6	37.1	27.4	6.5	0.0	
	보건·의료	10.0	20.0	30.0	23.3	16.7	0.0	
	기타	33.3	33.3	0.0	0.0	33.3	0.0	
소속별	대학	5.5	23.6	40.0	23.6	7.3	0.0	8.132
	연구기관	5.6	25.0	27.8	36.1	5.6	0.0	
	언론사	16.7	23.3	26.7	20.0	13.3	0.0	
정치적 성향	보수	14.8	18.5	33.3	22.2	11.1	0.0	3.470
	중도	5.0	22.5	35.0	30.0	7.5	0.0	
	진보	7.4	27.8	31.5	25.9	7.4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14〉 전문가로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복지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세요.

1) 일자리 지원 확대(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X ²
전체		1.7	5.8	19.0	31.4	30.6	11.6	-
성별	남자	2.7	8.1	18.9	27.0	27.0	16.2	8.551
	여자	0.0	2.1	19.1	38.3	36.2	4.3	
전공별	경상·법정	3.8	7.7	19.2	42.3	15.4	11.5	9.561
	인문·사회	1.6	6.5	17.7	32.3	32.3	9.7	
	보건·의료	0.0	3.3	23.3	20.0	40.0	13.3	
	기타	0.0	0.0	0.0	33.3	33.3	33.3	
소속별	대학	0.0	9.1	18.2	27.3	27.3	18.2	16.116 +
	연구기관	5.6	2.8	19.4	41.7	22.2	8.3	
	언론사	0.0	3.3	20.0	26.7	46.7	3.3	
정치적 성향	보수	0.0	18.5	25.9	22.2	25.9	7.4	22.614 *
	중도	2.5	5.0	22.5	40.0	27.5	2.5	
	진보	1.9	0.0	13.0	29.6	35.2	20.4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15〉 전문가로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복지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요.

2)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등)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X ²
전체		0.0	5.0	5.0	47.1	31.4	11.6	-
성별	남자	0.0	6.8	4.1	44.6	36.5	8.1	5.352
	여자	0.0	2.1	6.4	51.1	23.4	17.0	
전공별	경상·법정	0.0	3.8	3.8	50.0	30.8	11.5	10.707
	인문·사회	0.0	4.8	3.2	48.4	30.6	12.9	
	보건·의료	0.0	3.3	10.0	46.7	33.3	6.7	
	기타	0.0	33.3	0.0	0.0	33.3	33.3	
소속별	대학	0.0	7.3	10.9	43.6	29.1	9.1	10.566
	연구기관	0.0	2.8	0.0	55.6	27.8	13.9	
	언론사	0.0	3.3	0.0	43.3	40.0	13.3	
정치적 성향	보수	0.0	14.8	14.8	44.4	22.2	3.7	29.506 ***
	중도	0.0	5.0	0.0	62.5	30.0	2.5	
	진보	0.0	0.0	3.7	37.0	37.0	22.2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16〉 전문가로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복지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요.

3)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X ²
전체		1.7	5.0	8.3	28.1	43.0	14.0	-
성별	남자	2.7	6.8	6.8	27.0	43.2	13.5	3.157
	여자	0.0	2.1	10.6	29.8	42.6	14.9	
전공별	경상·법정	7.7	0.0	7.7	26.9	50.0	7.7	14.140
	인문·사회	0.0	8.1	6.5	30.6	40.3	14.5	
	보건·의료	0.0	3.3	13.3	23.3	43.3	16.7	
	기타	0.0	0.0	0.0	33.3	33.3	33.3	
소속별	대학	1.8	7.3	10.9	29.1	45.5	5.5	10.088
	연구기관	2.8	2.8	8.3	25.0	36.1	25.0	
	언론사	0.0	3.3	3.3	30.0	46.7	16.7	
정치적 성향	보수	7.4	11.1	18.5	22.2	29.6	11.1	30.626 ***
	중도	0.0	7.5	7.5	45.0	30.0	10.0	
	진보	0.0	0.0	3.7	18.5	59.3	18.5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17〉 문가로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복지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

4)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X ²
전체		1.7	0.8	8.3	36.4	26.4	26.4	-
성별	남자	2.7	1.4	5.4	32.4	25.7	32.4	7.224
	여자	0.0	0.0	12.8	42.6	27.7	17.0	
전공별	경상·법정	0.0	0.0	7.7	50.0	26.9	15.4	17.441
	인문·사회	0.0	1.6	9.7	33.9	32.3	22.6	
	보건·의료	6.7	0.0	6.7	30.0	16.7	40.0	
	기타	0.0	0.0	0.0	33.3	0.0	66.7	
소속별	대학	3.6	0.0	9.1	36.4	21.8	29.1	23.909 **
	연구기관	0.0	0.0	8.3	58.3	19.4	13.9	
	언론사	0.0	3.3	6.7	10.0	43.3	36.7	
정치적 성향	보수	7.4	0.0	14.8	29.6	11.1	37.0	16.268 +
	중도	0.0	2.5	7.5	40.0	27.5	22.5	
	진보	0.0	0.0	5.6	37.0	33.3	24.1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18〉 전문가로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복지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

5) 보육·양육 지원 확대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X ²
전체		1.7	0.0	10.7	28.9	32.2	26.4	-
성별	남자	2.7	0.0	12.2	23.0	35.1	27.0	4.483
	여자	0.0	0.0	8.5	38.3	27.7	25.5	
전공별	경상·법정	0.0	0.0	19.2	26.9	34.6	19.2	14.843
	인문·사회	0.0	0.0	8.1	30.6	38.7	22.6	
	보건·의료	6.7	0.0	10.0	26.7	16.7	40.0	
	기타	0.0	0.0	0.0	33.3	33.3	33.3	
소속별	대학	3.6	0.0	12.7	29.1	25.5	29.1	12.682
	연구기관	0.0	0.0	13.9	38.9	33.3	13.9	
	언론사	0.0	0.0	3.3	16.7	43.3	36.7	
정치적 성향	보수	7.4	0.0	11.1	25.9	18.5	37.0	15.451 +
	중도	0.0	0.0	17.5	32.5	27.5	22.5	
	진보	0.0	0.0	5.6	27.8	42.6	24.1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19〉 전문가로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복지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

6) 노인 대상 돌봄 확대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X ²
전체		1.7	0.8	5.8	38.0	35.5	18.2	-
성별	남자	2.7	1.4	6.8	36.5	36.5	16.2	2.787
	여자	0.0	0.0	4.3	40.4	34.0	21.3	
전공별	경상·법정	3.8	0.0	7.7	38.5	38.5	11.5	5.284
	인문·사회	0.0	1.6	4.8	40.3	33.9	19.4	
	보건·의료	3.3	0.0	6.7	33.3	36.7	20.0	
	기타	0.0	0.0	0.0	33.3	33.3	33.3	
소속별	대학	3.6	1.8	5.5	41.8	34.5	12.7	9.438
	연구기관	0.0	0.0	5.6	44.4	33.3	16.7	
	언론사	0.0	0.0	6.7	23.3	40.0	30.0	
정치적 성향	보수	7.4	3.7	14.8	29.6	22.2	22.2	27.134 **
	중도	0.0	0.0	7.5	52.5	25.0	15.0	
	진보	0.0	0.0	0.0	31.5	50.0	18.5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20〉 전문가로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복지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

7) 장애인 대상 돌봄 확대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X ²
전체		0.8	1.7	5.8	34.7	41.3	15.7	-
성별	남자	1.4	2.7	5.4	28.4	47.3	14.9	5.885
	여자	0.0	0.0	6.4	44.7	31.9	17.0	
전공별	경상·법정	3.8	0.0	7.7	34.6	42.3	11.5	8.036
	인문·사회	0.0	1.6	4.8	37.1	38.7	17.7	
	보건·의료	0.0	3.3	6.7	33.3	43.3	13.3	
	기타	0.0	0.0	0.0	0.0	66.7	33.3	
소속별	대학	1.8	1.8	7.3	32.7	40.0	16.4	8.302
	연구기관	0.0	0.0	5.6	47.2	38.9	8.3	
	언론사	0.0	3.3	3.3	23.3	46.7	23.3	
정치적 성향	보수	3.7	3.7	11.1	33.3	29.6	18.5	19.428 *
	중도	0.0	2.5	10.0	45.0	37.5	5.0	
	진보	0.0	0.0	0.0	27.8	50.0	22.2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21〉 전문가로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복지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

8)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지원 확대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X ²
전체		0.0	3.3	4.1	37.2	38.0	17.4	-
성별	남자	0.0	5.4	5.4	35.1	39.2	14.9	4.254
	여자	0.0	0.0	2.1	40.4	36.2	21.3	
전공별	경상·법정	0.0	7.7	3.8	42.3	30.8	15.4	14.252
	인문·사회	0.0	1.6	3.2	37.1	40.3	17.7	
	보건·의료	0.0	0.0	6.7	36.7	40.0	16.7	
	기타	0.0	33.3	0.0	0.0	33.3	33.3	
소속별	대학	0.0	3.6	5.5	36.4	41.8	12.7	5.532
	연구기관	0.0	2.8	2.8	44.4	36.1	13.9	
	언론사	0.0	3.3	3.3	30.0	33.3	3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14.8	7.4	29.6	25.9	22.2	25.317 **
	중도	0.0	0.0	7.5	50.0	30.0	12.5	
	진보	0.0	0.0	0.0	31.5	50.0	18.5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22〉 전문가로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복지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

9)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X ²
전체		0.0	0.8	7.4	29.8	37.2	24.8	-
성별	남자	0.0	1.4	6.8	33.8	40.5	17.6	6.382
	여자	0.0	0.0	8.5	23.4	31.9	36.2	
전공별	경상·법정	0.0	3.8	11.5	38.5	34.6	11.5	11.680
	인문·사회	0.0	0.0	6.5	29.0	38.7	25.8	
	보건·의료	0.0	0.0	6.7	20.0	40.0	33.3	
	기타	0.0	0.0	0.0	66.7	0.0	33.3	
소속별	대학	0.0	1.8	9.1	29.1	36.4	23.6	2.392
	연구기관	0.0	0.0	5.6	30.6	41.7	22.2	
	언론사	0.0	0.0	6.7	30.0	33.3	3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3.7	11.1	37.0	29.6	18.5	9.255
	중도	0.0	0.0	10.0	32.5	30.0	27.5	
	진보	0.0	0.0	3.7	24.1	46.3	25.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23〉 전문가로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복지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

10)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X ²
전체		0.8	0.8	5.0	30.6	38.0	24.8	-
성별	남자	1.4	1.4	2.7	29.7	43.2	21.6	5.413
	여자	0.0	0.0	8.5	31.9	29.8	29.8	
전공별	경상·법정	0.0	0.0	3.8	26.9	50.0	19.2	5.432
	인문·사회	1.6	1.6	6.5	32.3	35.5	22.6	
	보건·의료	0.0	0.0	3.3	30.0	33.3	33.3	
	기타	0.0	0.0	0.0	33.3	33.3	33.3	
소속별	대학	0.0	1.8	5.5	27.3	40.0	25.5	9.644
	연구기관	0.0	0.0	0.0	30.6	44.4	25.0	
	언론사	3.3	0.0	10.0	36.7	26.7	23.3	
정치적 성향	보수	3.7	0.0	14.8	25.9	40.7	14.8	18.730 *
	중도	0.0	2.5	5.0	40.0	32.5	20.0	
	진보	0.0	0.0	0.0	25.9	40.7	33.3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24〉 전문가적 입장에서, 국민들의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단위: %)

구분		일자리	노후 생활	주거	출산과 양육	자녀 교육	신체와 정신 건강	부채 상환	환경	안전	부모 부양	X ²
전체		60.3	14.9	9.9	9.1	2.5	1.7	1.7	0.0	0.0	0.0	-
성별	남자	58.1	14.9	13.5	10.8	2.7	0.0	0.0	0.0	0.0	0.0	9.596
	여자	63.8	14.9	4.3	6.4	2.1	4.3	4.3	0.0	0.0	0.0	
전공별	경상·법정	57.7	23.1	7.7	11.5	0.0	0.0	0.0	0.0	0.0	0.0	15.637
	인문·사회	62.9	9.7	12.9	9.7	1.6	1.6	1.6	0.0	0.0	0.0	
	보건·의료	60.0	20.0	3.3	3.3	6.7	3.3	3.3	0.0	0.0	0.0	
	기타	33.3	0.0	33.3	33.3	0.0	0.0	0.0	0.0	0.0	0.0	
소속별	대학	70.9	7.3	3.6	10.9	5.5	0.0	1.8	0.0	0.0	0.0	33.251 ***
	연구기관	63.9	25.0	2.8	2.8	0.0	2.8	2.8	0.0	0.0	0.0	
	언론사	36.7	16.7	30.0	13.3	0.0	3.3	0.0	0.0	0.0	0.0	
정치적 성향	보수	51.9	18.5	7.4	14.8	3.7	0.0	3.7	0.0	0.0	0.0	7.050
	중도	60.0	10.0	15.0	10.0	2.5	2.5	0.0	0.0	0.0	0.0	
	진보	64.8	16.7	7.4	5.6	1.9	1.9	1.9	0.0	0.0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25〉 전문가적 입장에서, 국민들의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

(단위: %)

구분		노후 생활	출산과 양육	자녀 교육	일자리	주거	신체와 정신 건강	부채 상환	환경	안전	부모 부양	X ²
전체		25.6	18.2	14.0	13.2	12.4	9.9	2.5	1.7	1.7	0.8	-
성별	남자	23.0	18.9	12.2	16.2	13.5	9.5	1.4	1.4	2.7	1.4	5.571
	여자	29.8	17.0	17.0	8.5	10.6	10.6	4.3	2.1	0.0	0.0	
전공별	경상·법정	23.1	15.4	15.4	23.1	11.5	11.5	0.0	0.0	0.0	0.0	17.691
	인문·사회	24.2	12.9	16.1	9.7	16.1	9.7	3.2	3.2	3.2	1.6	
	보건·의료	26.7	30.0	10.0	13.3	6.7	10.0	3.3	0.0	0.0	0.0	
	기타	66.7	33.3	0.0	0.0	0.0	0.0	0.0	0.0	0.0	0.0	
소속별	대학	27.3	16.4	18.2	10.9	12.7	3.6	3.6	1.8	3.6	1.8	14.131
	연구기관	27.8	19.4	13.9	13.9	8.3	16.7	0.0	0.0	0.0	0.0	
	언론사	20.0	20.0	6.7	16.7	16.7	13.3	3.3	3.3	0.0	0.0	
정치적 성향	보수	14.8	29.6	7.4	25.9	7.4	11.1	3.7	0.0	0.0	0.0	14.714
	중도	30.0	10.0	17.5	10.0	12.5	12.5	2.5	2.5	2.5	0.0	
	진보	27.8	18.5	14.8	9.3	14.8	7.4	1.9	1.9	1.9	1.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26〉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보건복지정책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단위: %)

구분		영유아 아동	노인	청년	중장년	청소년	기타	X ²
전체		45.5	26.4	16.5	5.8	3.3	2.5	-
성별	남자	48.6	24.3	17.6	5.4	2.7	1.4	2.111
	여자	40.4	29.8	14.9	6.4	4.3	4.3	
전공별	경상·법정	38.5	30.8	15.4	11.5	3.8	0.0	11.504
	인문·사회	48.4	24.2	14.5	6.5	3.2	3.2	
	보건·의료	50.0	26.7	16.7	0.0	3.3	3.3	
	기타	0.0	33.3	66.7	0.0	0.0	0.0	
소속별	대학	47.3	30.9	12.7	0.0	5.5	3.6	17.679 +
	연구기관	38.9	30.6	11.1	13.9	2.8	2.8	
	언론사	50.0	13.3	30.0	6.7	0.0	0.0	
정치적 성향	보수	29.6	33.3	7.4	11.1	11.1	7.4	20.172 *
	중도	45.0	20.0	25.0	7.5	2.5	0.0	
	진보	53.7	27.8	14.8	1.9	0.0	1.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27〉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보건복지정책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

(단위: %)

구분		노인	영유아아동	청년	청소년	중장년	기타	X ²
전체		35.5	24.8	19.0	14.9	5.8	0.0	-
성별	남자	35.1	23.0	16.2	20.3	5.4	0.0	4.819
	여자	36.2	27.7	23.4	6.4	6.4	0.0	
전공별	경상·법정	34.6	26.9	23.1	11.5	3.8	0.0	12.830
	인문·사회	32.3	19.4	24.2	16.1	8.1	0.0	
	보건·의료	46.7	30.0	3.3	16.7	3.3	0.0	
	기타	0.0	66.7	33.3	0.0	0.0	0.0	
소속별	대학	38.2	20.0	20.0	18.2	3.6	0.0	6.663
	연구기관	25.0	33.3	19.4	16.7	5.6	0.0	
	언론사	43.3	23.3	16.7	6.7	10.0	0.0	
정치적 성향	보수	40.7	29.6	18.5	7.4	3.7	0.0	4.681
	중도	30.0	22.5	22.5	15.0	10.0	0.0	
	진보	37.0	24.1	16.7	18.5	3.7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28〉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정책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단위: %)

구분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노인	장애인	이주민	기타	X ²
전체		46.3	19.0	18.2	14.9	1.7	0.0	-
성별	남자	41.9	20.3	18.9	17.6	1.4	0.0	2.042
	여자	53.2	17.0	17.0	10.6	2.1	0.0	
전공별	경상·법정	46.2	19.2	19.2	15.4	0.0	0.0	4.765
	인문·사회	46.8	16.1	17.7	16.1	3.2	0.0	
	보건·의료	46.7	23.3	20.0	10.0	0.0	0.0	
	기타	33.3	33.3	0.0	33.3	0.0	0.0	
소속별	대학	47.3	18.2	14.5	18.2	1.8	0.0	5.002
	연구기관	41.7	16.7	25.0	16.7	0.0	0.0	
	언론사	50.0	23.3	16.7	6.7	3.3	0.0	
정치적 성향	보수	48.1	25.9	11.1	14.8	0.0	0.0	6.807
	중도	42.5	17.5	27.5	12.5	0.0	0.0	
	진보	48.1	16.7	14.8	16.7	3.7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29〉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정책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

(단위: %)

구분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저소득층	이주민	기타	X ²
전체		24.8	21.5	21.5	19.8	11.6	0.8	-
성별	남자	25.7	23.0	16.2	23.0	12.2	0.0	5.297
	여자	23.4	19.1	29.8	14.9	10.6	2.1	
전공별	경상·법정	38.5	26.9	3.8	19.2	11.5	0.0	17.148
	인문·사회	24.2	16.1	30.6	19.4	8.1	1.6	
	보건·의료	13.3	30.0	20.0	20.0	16.7	0.0	
	기타	33.3	0.0	0.0	33.3	33.3	0.0	
소속별	대학	25.5	25.5	16.4	16.4	14.5	1.8	6.320
	연구기관	22.2	22.2	27.8	22.2	5.6	0.0	
	언론사	26.7	13.3	23.3	23.3	13.3	0.0	
정치적 성향	보수	22.2	22.2	25.9	18.5	11.1	0.0	17.376 +
	중도	15.0	10.0	30.0	32.5	12.5	0.0	
	진보	33.3	29.6	13.0	11.1	11.1	1.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30〉 귀하는 전문가로서 향후 소득 지원 정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 지원 강화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노인 소득보장 강화	가족 소득보장 강화	청년 자산형성 지원	기타	X ²
전체		31.4	24.8	24.8	10.7	7.4	0.8	-
성별 *	남자	40.5	18.9	24.3	10.8	4.1	1.4	11.300
	여자	17.0	34.0	25.5	10.6	12.8	0.0	
전공별 ***	경상·법정	42.3	26.9	23.1	3.8	3.8	0.0	49.480
	인문·사회	24.2	24.2	29.0	14.5	8.1	0.0	
	보건·의료	36.7	26.7	20.0	10.0	6.7	0.0	
	기타	33.3	0.0	0.0	0.0	33.3	33.3	
소속별	대학	38.2	23.6	21.8	14.5	1.8	0.0	14.959
	연구기관	22.2	25.0	36.1	8.3	8.3	0.0	
	언론사	30.0	26.7	16.7	6.7	16.7	3.3	
정치적 성향	보수	29.6	25.9	25.9	11.1	7.4	0.0	11.916
	중도	32.5	30.0	25.0	0.0	12.5	0.0	
	진보	31.5	20.4	24.1	18.5	3.7	1.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31〉 귀하는 전문가로서 향후 서비스 지원 정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돌봄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출산 및 보육서비스	아동발달 지원서비스	기타	X ²
전체		37.2	28.9	18.2	14.0	1.7	-
성별	남자	31.1	32.4	17.6	17.6	1.4	4.544
	여자	46.8	23.4	19.1	8.5	2.1	
전공별	경상·법정	38.5	34.6	15.4	7.7	3.8	10.772
	인문·사회	37.1	19.4	22.6	19.4	1.6	
	보건·의료	36.7	43.3	10.0	10.0	0.0	
	기타	33.3	33.3	33.3	0.0	0.0	
소속별 +	대학	36.4	27.3	12.7	23.6	0.0	14.644 +
	연구기관	44.4	33.3	13.9	5.6	2.8	
	언론사	30.0	26.7	33.3	6.7	3.3	
정치적 성향	보수	40.7	29.6	18.5	7.4	3.7	3.802
	중도	35.0	25.0	22.5	17.5	0.0	
	진보	37.0	31.5	14.8	14.8	1.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32〉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단위: %)

구분		현행 복지 제도 간 연계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유사·중복 사업조정, 부적정 수급 점검 등을 통한 복지재정 누수방지 향상	현행 복지 제도의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	복지 확대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복지 전달 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 정책의 체감도	민관협력 체계 강화	아직 도입 되지 않은 새로운 복지 제도 도입	X ²
전체		30.6	20.7	19.8	15.7	10.7	1.7	0.8	-
성별	남자	27.0	25.7	20.3	17.6	8.1	0.0	1.4	8.561
	여자	36.2	12.8	19.1	12.8	14.9	4.3	0.0	
전공별	경상·법정	34.6	3.8	23.1	15.4	19.2	0.0	3.8	22.582
	인문·사회	32.3	21.0	21.0	17.7	8.1	0.0	0.0	
	보건·의료	20.0	33.3	16.7	13.3	10.0	6.7	0.0	
	기타	66.7	33.3	0.0	0.0	0.0	0.0	0.0	
소속별	대학	18.2	21.8	23.6	16.4	14.5	3.6	1.8	19.315 +
	연구기관	44.4	8.3	25.0	16.7	5.6	0.0	0.0	
	언론사	36.7	33.3	6.7	13.3	10.0	0.0	0.0	
정치적 성향	보수	25.9	25.9	7.4	14.8	14.8	7.4	3.7	28.517 **
	중도	42.5	27.5	7.5	15.0	7.5	0.0	0.0	
	진보	24.1	13.0	35.2	16.7	11.1	0.0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33〉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

(단위: %)

구분		현행 복지제도 간 연계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유사·중복 사업조정, 부정적 수급 점검 등을 통한 복지재정 누수방지 향상	복지 확대에 대비한 안정적인 자원 마련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 정책의 체감도	현행 복지 제도의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	민관협력 체계 강화	아직 도입 되지 않은 새로운 복지 제도 도입	X ²
전체		30.6	20.7	19.8	19.0	5.8	4.1	0.0	-
성별	남자	29.7	23.0	17.6	20.3	4.1	5.4	0.0	2.925
	여자	31.9	17.0	23.4	17.0	8.5	2.1	0.0	
전공별	경상·법정	34.6	26.9	19.2	7.7	7.7	3.8	0.0	12.389
	인문·사회	30.6	17.7	19.4	24.2	4.8	3.2	0.0	
	보건·의료	30.0	20.0	20.0	20.0	6.7	3.3	0.0	
	기타	0.0	33.3	33.3	0.0	0.0	33.3	0.0	
소속별	대학	34.5	27.3	10.9	16.4	5.5	5.5	0.0	8.915
	연구기관	33.3	13.9	25.0	19.4	5.6	2.8	0.0	
	언론사	20.0	16.7	30.0	23.3	6.7	3.3	0.0	
정치적 성향	보수	37.0	25.9	18.5	11.1	3.7	3.7	0.0	7.719
	중도	20.0	22.5	25.0	25.0	2.5	5.0	0.0	
	진보	35.2	16.7	16.7	18.5	9.3	3.7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34〉 귀하는 전문가로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개선을 위해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대상자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를 통한 대상자 확대)	급여수준 인상 (가구균등화 개선 등을 통한 1,2인 가구 급여 상향 등)	X ²
전체		66.9	33.1	-
성별	남자	71.6	28.4	1.885
	여자	59.6	40.4	
전공별	경상·법정	65.4	34.6	0.747
	인문·사회	64.5	35.5	
	보건·의료	73.3	26.7	
	기타	66.7	33.3	
소속별	대학	76.4	23.6	4.191
	연구기관	61.1	38.9	
	언론사	56.7	43.3	
정치적 성향	보수	66.7	33.3	0.130
	중도	65.0	35.0	
	진보	68.5	31.5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35〉 귀하는 전문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생계급여 (현금 지원)

(단위: %)

구분		현형 유지가 바람직하다	조금 더 완화해야한다	전면 폐지해야한다	X ²
전체		24.8	52.9	22.3	-
성별	남자	32.4	50.0	17.6	6.709 *
	여자	12.8	57.4	29.8	
전공별	경상·법정	30.8	50.0	19.2	5.412
	인문·사회	21.0	50.0	29.0	
	보건·의료	26.7	63.3	10.0	
	기타	33.3	33.3	33.3	
소속별	대학	29.1	50.9	20.0	1.168
	연구기관	22.2	52.8	25.0	
	언론사	20.0	56.7	23.3	
정치적 성향	보수	37.0	44.4	18.5	3.261
	중도	22.5	57.5	20.0	
	진보	20.4	53.7	25.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36〉 귀하는 전문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지원)

(단위: %)

구분		현형 유지가 바람직하다	조금 더 완화해야한다	전면 폐지해야한다	X ²
전체		24.0	47.1	28.9	-
성별	남자	27.0	51.4	21.6	4.986 +
	여자	19.1	40.4	40.4	
전공별	경상·법정	23.1	50.0	26.9	7.374
	인문·사회	17.7	45.2	37.1	
	보건·의료	36.7	46.7	16.7	
	기타	33.3	66.7	0.0	
소속별	대학	27.3	45.5	27.3	2.121
	연구기관	25.0	41.7	33.3	
	언론사	16.7	56.7	26.7	
정치적 성향	보수	37.0	51.9	11.1	9.358 +
	중도	25.0	50.0	25.0	
	진보	16.7	42.6	40.7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37〉 귀하는 전문가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층에 대한 일자리 및 훈련 제공이 참여자의 근로동기 부여 및 최저생활보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근로동기 부여

(단위: %)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X ²
전체		6.6	24.8	20.7	23.1	19.0	5.8	-
성별	남자	8.1	24.3	14.9	25.7	21.6	5.4	5.021
	여자	4.3	25.5	29.8	19.1	14.9	6.4	
전공별	경상·법정	7.7	23.1	26.9	15.4	19.2	7.7	14.574
	인문·사회	8.1	25.8	21.0	30.6	9.7	4.8	
	보건·의료	3.3	23.3	16.7	13.3	36.7	6.7	
	기타	0.0	33.3	0.0	33.3	33.3	0.0	
소속별	대학	9.1	29.1	20.0	20.0	16.4	5.5	9.037
	연구기관	8.3	22.2	19.4	19.4	27.8	2.8	
	언론사	0.0	20.0	23.3	33.3	13.3	10.0	
정치적 성향	보수	7.4	29.6	11.1	18.5	22.2	11.1	10.978
	중도	10.0	25.0	22.5	17.5	25.0	0.0	
	진보	3.7	22.2	24.1	29.6	13.0	7.4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38〉 귀하는 전문가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층에 대한 일자리 및 훈련 제공이 참여자의 근로동기 부여 및 최저생활보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최저생활보장

(단위: %)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X ²
전체		0.8	13.2	24.8	27.3	28.1	5.8	-
성별	남자	0.0	16.2	23.0	25.7	31.1	4.1	4.888
	여자	2.1	8.5	27.7	29.8	23.4	8.5	
전공별	경상·법정	0.0	11.5	30.8	38.5	19.2	0.0	19.826
	인문·사회	1.6	12.9	27.4	30.6	19.4	8.1	
	보건·의료	0.0	13.3	16.7	13.3	50.0	6.7	
	기타	0.0	33.3	0.0	0.0	66.7	0.0	
소속별	대학	0.0	16.4	25.5	21.8	29.1	7.3	5.909
	연구기관	2.8	13.9	22.2	30.6	27.8	2.8	
	언론사	0.0	6.7	26.7	33.3	26.7	6.7	
정치적 성향	보수	0.0	25.9	25.9	14.8	29.6	3.7	17.407 +
	중도	2.5	12.5	17.5	40.0	27.5	0.0	
	진보	0.0	7.4	29.6	24.1	27.8	11.1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39〉 귀하는 전문가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층의 자활급여 인상에 동의하십니까?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X ²
전체		2.5	5.8	21.5	52.9	14.0	3.3	-
성별	남자	2.7	9.5	17.6	55.4	10.8	4.1	7.819
	여자	2.1	0.0	27.7	48.9	19.1	2.1	
전공별	경상·법정	3.8	3.8	38.5	53.8	0.0	0.0	25.937 *
	인문·사회	3.2	4.8	17.7	54.8	14.5	4.8	
	보건·의료	0.0	10.0	13.3	53.3	23.3	0.0	
	기타	0.0	0.0	33.3	0.0	33.3	33.3	
소속별	대학	3.6	10.9	12.7	52.7	16.4	3.6	14.335
	연구기관	2.8	0.0	36.1	50.0	11.1	0.0	
	언론사	0.0	3.3	20.0	56.7	13.3	6.7	
정치적 성향	보수	3.7	14.8	22.2	48.1	11.1	0.0	17.999 +
	중도	5.0	2.5	30.0	55.0	7.5	0.0	
	진보	0.0	3.7	14.8	53.7	20.4	7.4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40〉 귀 귀하는 전문가로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정부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직업 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지원	(일하는 경우) 정부지원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	주거 및 보육 등의 복지지원 연계	취약 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	(저축을 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기타	X ²
전체		33.1	28.1	17.4	14.0	6.6	0.8	-
성별	남자	40.5	24.3	16.2	10.8	6.8	1.4	6.399
	여자	21.3	34.0	19.1	19.1	6.4	0.0	
전공별	경상·법정	50.0	30.8	7.7	7.7	3.8	0.0	19.485
	인문·사회	19.4	30.6	21.0	17.7	9.7	1.6	
	보건·의료	50.0	16.7	16.7	13.3	3.3	0.0	
	기타	0.0	66.7	33.3	0.0	0.0	0.0	
소속별	대학	41.8	25.5	10.9	12.7	7.3	1.8	10.543
	연구기관	27.8	36.1	16.7	16.7	2.8	0.0	
	언론사	23.3	23.3	30.0	13.3	10.0	0.0	
정치적 성향	보수	48.1	37.0	11.1	3.7	0.0	0.0	15.900
	중도	32.5	30.0	20.0	7.5	10.0	0.0	
	진보	25.9	22.2	18.5	24.1	7.4	1.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41〉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누구나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확충	X ²
전체		73.6	26.4	-
성별	남자	67.6	32.4	3.510 ⁺
	여자	83.0	17.0	
전공별	경상·법정	61.5	38.5	2.960
	인문·사회	79.0	21.0	
	보건·의료	73.3	26.7	
	기타	66.7	33.3	
소속별	대학	67.3	32.7	2.087
	연구기관	77.8	22.2	
	언론사	80.0	20.0	
정치적 성향	보수	66.7	33.3	1.177
	중도	72.5	27.5	
	진보	77.8	22.2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42〉 귀하는 전문가로서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공공적 성격을 갖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X ²
전체		28.1	27.3	25.6	14.9	4.1	-
성별	남자	32.4	23.0	21.6	17.6	5.4	5.428
	여자	21.3	34.0	31.9	10.6	2.1	
전공별	경상·법정	26.9	34.6	15.4	15.4	7.7	15.532
	인문·사회	24.2	27.4	32.3	14.5	1.6	
	보건·의료	40.0	20.0	23.3	13.3	3.3	
	기타	0.0	33.3	0.0	33.3	33.3	
소속별	대학	29.1	21.8	30.9	16.4	1.8	6.372
	연구기관	30.6	25.0	22.2	13.9	8.3	
	언론사	23.3	40.0	20.0	13.3	3.3	
정치적 성향	보수	37.0	29.6	11.1	22.2	0.0	10.452
	중도	27.5	32.5	20.0	15.0	5.0	
	진보	24.1	22.2	37.0	11.1	5.6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43〉 귀하는 전문가로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지역주민	학교 및 민간 복지기관 종사자	방문형사업기관 (도시락배달 등) 종사자	기타	X ²
전체		46.3	34.7	8.3	8.3	2.5	-
성별	남자	48.6	35.1	6.8	6.8	2.7	1.327
	여자	42.6	34.0	10.6	10.6	2.1	
전공별	경상법정	46.2	30.8	15.4	7.7	0.0	26.373 **
	인문사회	56.5	27.4	8.1	6.5	1.6	
	보건의료	30.0	53.3	3.3	10.0	3.3	
	기타	0.0	33.3	0.0	33.3	33.3	
소속별	대학	45.5	36.4	10.9	5.5	1.8	3.980
	연구기관	44.4	38.9	2.8	11.1	2.8	
	언론사	50.0	26.7	10.0	10.0	3.3	
정치적 성향	보수	29.6	48.1	11.1	3.7	7.4	11.809
	중도	50.0	37.5	2.5	10.0	0.0	
	진보	51.9	25.9	11.1	9.3	1.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44〉 귀하는 전문가로서 향후 정부의 장애인 지원정책 방향으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및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의료, 재활, 건강관리 지원 강화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인프라의 확대	장애인 학대 예방 등 장애인의 안전 보호 강화	X ²
전체		45.5	19.8	13.2	9.9	6.6	5.0	-
성별	남자	51.4	14.9	14.9	9.5	4.1	5.4	6.220
	여자	36.2	27.7	10.6	10.6	10.6	4.3	
전공별	경상법정	61.5	15.4	15.4	3.8	0.0	3.8	18.456
	인문사회	38.7	17.7	12.9	12.9	11.3	6.5	
	보건의료	43.3	30.0	13.3	10.0	3.3	0.0	
	기타	66.7	0.0	0.0	0.0	0.0	33.3	
소속별	대학	50.9	14.5	14.5	9.1	5.5	5.5	8.500
	연구기관	36.1	19.4	19.4	13.9	8.3	2.8	
	언론사	46.7	30.0	3.3	6.7	6.7	6.7	
정치적 성향	보수	40.7	29.6	11.1	11.1	7.4	0.0	8.626
	중도	47.5	22.5	15.0	5.0	7.5	2.5	
	진보	46.3	13.0	13.0	13.0	5.6	9.3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45〉 귀하는 전문가로서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커뮤니티 케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재가 돌봄서비스 확충	당사자에 적합한 주거 환경 개선	동네의원을 통한 재택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안내 강화	안부 확인 등 상시적 대응 체계 구축	X ²
전체		54.5	17.4	14.0	9.1	5.0	-
성별	남자	48.6	21.6	13.5	10.8	5.4	3.948
	여자	63.8	10.6	14.9	6.4	4.3	
전공별	경상법정	46.2	26.9	11.5	7.7	7.7	10.699
	인문사회	59.7	16.1	11.3	6.5	6.5	
	보건의료	53.3	10.0	20.0	16.7	0.0	
	기타	33.3	33.3	33.3	0.0	0.0	
소속별	대학	58.2	18.2	7.3	12.7	3.6	7.542
	연구기관	55.6	11.1	19.4	8.3	5.6	
	언론사	46.7	23.3	20.0	3.3	6.7	
정치적 성향	보수	51.9	14.8	22.2	7.4	3.7	4.116
	중도	50.0	17.5	17.5	10.0	5.0	
	진보	59.3	18.5	7.4	9.3	5.6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46〉 귀하는 전문가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중장기적 재정의 안정성(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국민연금

(단위: %)

구분		매우 불안정 하다	불안정 하다	다소 불안정 하다	다소 안정적 이다	안정적 이다	매우 안정적 이다	X ²
전체		29.8	30.6	25.6	6.6	6.6	0.8	-
성별	남자	28.4	29.7	28.4	6.8	5.4	1.4	1.792
	여자	31.9	31.9	21.3	6.4	8.5	0.0	
전공별	경상법정	34.6	30.8	26.9	7.7	0.0	0.0	45.161 ***
	인문사회	27.4	33.9	22.6	6.5	9.7	0.0	
	보건의료	30.0	23.3	33.3	6.7	6.7	0.0	
	기타	33.3	33.3	0.0	0.0	0.0	33.3	
소속별	대학	29.1	30.9	25.5	3.6	10.9	0.0	10.404
	연구기관	22.2	33.3	30.6	11.1	2.8	0.0	
	언론사	40.0	26.7	20.0	6.7	3.3	3.3	
정치적 성향	보수	51.9	25.9	7.4	11.1	3.7	0.0	22.365 *
	중도	32.5	30.0	35.0	2.5	0.0	0.0	
	진보	16.7	33.3	27.8	7.4	13.0	1.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47〉 귀하는 전문가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중장기적 재정의 안정성(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건강보험

(단위: %)

구분		매우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다소 불안정하다	다소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매우 안정적이다	X ²
전체		22.3	28.9	24.0	14.0	9.9	0.8	-
성별	남자	21.6	32.4	18.9	16.2	9.5	1.4	4.188
	여자	23.4	23.4	31.9	10.6	10.6	0.0	
전공별	경상법정	26.9	42.3	15.4	15.4	0.0	0.0	48.899 ***
	인문사회	19.4	25.8	25.8	14.5	14.5	0.0	
	보건의료	23.3	23.3	30.0	13.3	10.0	0.0	
	기타	33.3	33.3	0.0	0.0	0.0	33.3	
소속별	대학	25.5	29.1	18.2	12.7	14.5	0.0	14.239
	연구기관	16.7	36.1	36.1	8.3	2.8	0.0	
	언론사	23.3	20.0	20.0	23.3	10.0	3.3	
정치적 성향	보수	51.9	25.9	0.0	18.5	3.7	0.0	32.927 ***
	중도	20.0	35.0	30.0	12.5	2.5	0.0	
	진보	9.3	25.9	31.5	13.0	18.5	1.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48〉 귀하는 전문가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국민연금

(단위: %)

구분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다소 반대한다	다소 찬성한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X ²
전체		7.4	3.3	13.2	24.8	36.4	14.9	-
성별	남자	6.8	4.1	12.2	25.7	39.2	12.2	2.025
	여자	8.5	2.1	14.9	23.4	31.9	19.1	
전공별	경상법정	7.7	0.0	11.5	19.2	38.5	23.1	15.383
	인문사회	8.1	4.8	11.3	21.0	37.1	17.7	
	보건의료	6.7	3.3	20.0	40.0	30.0	0.0	
	기타	0.0	0.0	0.0	0.0	66.7	33.3	
소속별	대학	5.5	7.3	10.9	29.1	38.2	9.1	13.651
	연구기관	13.9	0.0	13.9	19.4	38.9	13.9	
	언론사	3.3	0.0	16.7	23.3	30.0	26.7	
정치적 성향	보수	11.1	11.1	18.5	18.5	33.3	7.4	16.219 +
	중도	12.5	0.0	12.5	30.0	35.0	10.0	
	진보	1.9	1.9	11.1	24.1	38.9	22.2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49〉 귀하는 전문가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건강보험

(단위: %)

구분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다소 반대한다	다소 찬성한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X ²
전체		5.0	9.9	24.0	26.4	28.1	6.6	-
성별	남자	6.8	8.1	23.0	27.0	32.4	2.7	7.650
	여자	2.1	12.8	25.5	25.5	21.3	12.8	
전공별	경상법정	3.8	11.5	34.6	23.1	26.9	0.0	11.787
	인문사회	4.8	8.1	21.0	24.2	32.3	9.7	
	보건의료	6.7	13.3	23.3	33.3	20.0	3.3	
	기타	0.0	0.0	0.0	33.3	33.3	33.3	
소속별	대학	7.3	12.7	18.2	32.7	27.3	1.8	18.255 +
	연구기관	5.6	8.3	33.3	25.0	25.0	2.8	
	언론사	0.0	6.7	23.3	16.7	33.3	20.0	
정치적 성향	보수	11.1	22.2	11.1	37.0	18.5	0.0	20.600 *
	중도	5.0	7.5	35.0	15.0	32.5	5.0	
	진보	1.9	5.6	22.2	29.6	29.6	11.1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50〉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십니까?

(단위: %)

구분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다소 반대한다	다소 찬성한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X ²
전체		5.0	4.1	15.7	28.1	35.5	11.6	-
성별	남자	4.1	6.8	14.9	36.5	28.4	9.5	11.826 *
	여자	6.4	0.0	17.0	14.9	46.8	14.9	
전공별	경상법정	7.7	3.8	7.7	53.8	15.4	11.5	16.611
	인문사회	4.8	3.2	17.7	21.0	41.9	11.3	
	보건의료	3.3	6.7	20.0	20.0	40.0	10.0	
	기타	0.0	0.0	0.0	33.3	33.3	33.3	
소속별	대학	3.6	9.1	16.4	29.1	30.9	10.9	11.213
	연구기관	5.6	0.0	16.7	33.3	38.9	5.6	
	언론사	6.7	0.0	13.3	20.0	40.0	20.0	
정치적 성향	보수	7.4	14.8	25.9	25.9	22.2	3.7	35.987 ***
	중도	10.0	0.0	20.0	35.0	35.0	0.0	
	진보	0.0	1.9	7.4	24.1	42.6	24.1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51〉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십니까?

(단위: %)

구분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다소 반대한다	다소 찬성한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X ²
전체		2.5	5.8	17.4	26.4	35.5	12.4	-
성별	남자	2.7	8.1	17.6	29.7	32.4	9.5	4.440
	여자	2.1	2.1	17.0	21.3	40.4	17.0	
전공별	경상법정	0.0	7.7	19.2	38.5	23.1	11.5	13.286
	인문사회	3.2	1.6	19.4	22.6	40.3	12.9	
	보건의료	3.3	13.3	13.3	26.7	33.3	10.0	
	기타	0.0	0.0	0.0	0.0	66.7	33.3	
소속별	대학	3.6	9.1	18.2	29.1	27.3	12.7	6.685
	연구기관	2.8	5.6	16.7	22.2	38.9	13.9	
	언론사	0.0	0.0	16.7	26.7	46.7	1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18.5	29.6	22.2	18.5	11.1	32.140 ***
	중도	5.0	2.5	25.0	30.0	37.5	0.0	
	진보	1.9	1.9	5.6	25.9	42.6	22.2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52〉 귀하는 전문가로서 지난 3년간(2017-2019)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X ²
전체		23.1	38.8	31.4	5.0	1.7	0.0	-
성별	남자	24.3	41.9	28.4	4.1	1.4	0.0	1.546
	여자	21.3	34.0	36.2	6.4	2.1	0.0	
전공별	경상법정	11.5	53.8	34.6	0.0	0.0	0.0	11.478
	인문사회	22.6	38.7	29.0	8.1	1.6	0.0	
	보건의료	33.3	30.0	30.0	3.3	3.3	0.0	
	기타	33.3	0.0	66.7	0.0	0.0	0.0	
소속별	대학	27.3	34.5	30.9	5.5	1.8	0.0	6.020
	연구기관	11.1	41.7	38.9	5.6	2.8	0.0	
	언론사	30.0	43.3	23.3	3.3	0.0	0.0	
정치적 성향	보수	25.9	37.0	29.6	7.4	0.0	0.0	4.060
	중도	25.0	45.0	22.5	5.0	2.5	0.0	
	진보	20.4	35.2	38.9	3.7	1.9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53〉 귀하는 전문가로서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아동 돌봄 지원	고용 문제 해결	주거 문제 해결	교육 제도 개선 (사교육)	직장 내 가족친화 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확대)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기타	X ²
전체		27.3	23.1	13.2	13.2	10.7	0.8	11.6	-
성별	남자	31.1	18.9	17.6	13.5	9.5	1.4	8.1	8.113
	여자	21.3	29.8	6.4	12.8	12.8	0.0	17.0	
전공별	경상법정	38.5	23.1	11.5	15.4	7.7	0.0	3.8	16.890
	인문사회	19.4	21.0	17.7	14.5	12.9	0.0	14.5	
	보건의료	30.0	30.0	3.3	10.0	10.0	3.3	13.3	
	기타	66.7	0.0	33.3	0.0	0.0	0.0	0.0	
소속별	대학	32.7	21.8	10.9	16.4	10.9	1.8	5.5	20.502 +
	연구기관	25.0	36.1	5.6	8.3	13.9	0.0	11.1	
	언론사	20.0	10.0	26.7	13.3	6.7	0.0	23.3	
정치적 성향	보수	33.3	29.6	11.1	14.8	3.7	0.0	7.4	8.946
	중도	25.0	25.0	10.0	10.0	17.5	2.5	10.0	
	진보	25.9	18.5	16.7	14.8	9.3	0.0	14.8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54〉 귀하는 전문가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가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육아지원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시설 확충	고용관련 제도 개선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	아동수당 확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	가정 양육 관련 지원확대	보육·양육 지원 관련 현금지원 확대	기타	X ²
전체		28.1	24.0	19.8	6.6	6.6	6.6	2.5	5.8	-
성별	남자	35.1	14.9	21.6	6.8	4.1	8.1	2.7	6.8	13.134 +
	여자	17.0	38.3	17.0	6.4	10.6	4.3	2.1	4.3	
전공별	경상법정	26.9	15.4	30.8	0.0	11.5	7.7	3.8	3.8	16.952
	인문사회	27.4	32.3	14.5	6.5	4.8	6.5	1.6	6.5	
	보건의료	30.0	16.7	20.0	13.3	6.7	3.3	3.3	6.7	
	기타	33.3	0.0	33.3	0.0	0.0	33.3	0.0	0.0	
소속별	대학	34.5	21.8	20.0	10.9	1.8	5.5	1.8	3.6	13.852
	연구기관	27.8	19.4	22.2	2.8	13.9	5.6	2.8	5.6	
	언론사	16.7	33.3	16.7	3.3	6.7	10.0	3.3	10.0	
정치적 성향	보수	14.8	22.2	25.9	3.7	0.0	22.2	0.0	11.1	23.843 *
	중도	32.5	22.5	22.5	5.0	7.5	2.5	5.0	2.5	
	진보	31.5	25.9	14.8	9.3	9.3	1.9	1.9	5.6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55〉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아동의 놀이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사교육 (예체능 교육 포함)에 지나친 시간 할애	어른의 놀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아동의 외부 놀이 공간 부족	정부의 정책 부족 (홍보 및 사업의 부족)	기타	X ²
전체		58.7	20.7	17.4	2.5	0.8	-
성별	남자	56.8	21.6	16.2	4.1	1.4	2.888
	여자	61.7	19.1	19.1	0.0	0.0	
전공별	경상법정	69.2	19.2	11.5	0.0	0.0	9.400
	인문사회	58.1	19.4	19.4	3.2	0.0	
	보건의료	53.3	20.0	20.0	3.3	3.3	
	기타	33.3	66.7	0.0	0.0	0.0	
소속별	대학	69.1	9.1	14.5	5.5	1.8	16.488 *
	연구기관	50.0	36.1	13.9	0.0	0.0	
	언론사	50.0	23.3	26.7	0.0	0.0	
정치적 성향	보수	51.9	18.5	18.5	7.4	3.7	8.022
	중도	57.5	22.5	17.5	2.5	0.0	
	진보	63.0	20.4	16.7	0.0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56〉 귀하는 전문가로서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돌봄 지원 확대	정년 연장	노인소득 지원 강화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	노후 대비를 위한 정보 제공	노인건강 보험 확대	기타	X ²
전체		26.4	24.8	20.7	19.0	3.3	1.7	0.8	3.3	-
성별	남자	28.4	20.3	28.4	12.2	4.1	1.4	1.4	4.1	13.415 +
	여자	23.4	31.9	8.5	29.8	2.1	2.1	0.0	2.1	
전공별	경상법정	30.8	11.5	30.8	15.4	3.8	0.0	0.0	7.7	21.674
	인문사회	24.2	30.6	17.7	19.4	4.8	3.2	0.0	0.0	
	보건의료	30.0	23.3	13.3	23.3	0.0	0.0	3.3	6.7	
	기타	0.0	33.3	66.7	0.0	0.0	0.0	0.0	0.0	
소속별	대학	32.7	29.1	12.7	16.4	3.6	0.0	1.8	3.6	21.652 +
	연구기관	5.6	25.0	27.8	30.6	2.8	2.8	0.0	5.6	
	언론사	40.0	16.7	26.7	10.0	3.3	3.3	0.0	0.0	
정치적 성향	보수	22.2	11.1	29.6	18.5	7.4	3.7	0.0	7.4	19.328
	중도	22.5	25.0	25.0	12.5	5.0	2.5	2.5	5.0	
	진보	31.5	31.5	13.0	24.1	0.0	0.0	0.0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57〉 귀하는 전문가로서 기초연금의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정부의 정책에 찬성	현상 유지	정부의 정책에 반대	기타	X ²
전체		54.5	32.2	10.7	2.5	-
성별	남자	51.4	31.1	13.5	4.1	3.700
	여자	59.6	34.0	6.4	0.0	
전공별	경상법정	38.5	46.2	11.5	3.8	7.068
	인문사회	59.7	25.8	12.9	1.6	
	보건의료	60.0	30.0	6.7	3.3	
	기타	33.3	66.7	0.0	0.0	
소속별	대학	56.4	32.7	9.1	1.8	0.730
	연구기관	55.6	30.6	11.1	2.8	
	언론사	50.0	33.3	13.3	3.3	
정치적 성향	보수	44.4	37.0	14.8	3.7	16.627 *
	중도	35.0	45.0	15.0	5.0	
	진보	74.1	20.4	5.6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58〉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전문가로서 노인 돌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반 구축	치매안심 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확대	치매 전문 병동 확대	기타	X ²
전체		61.2	20.7	10.7	5.8	1.7	-
성별	남자	58.1	21.6	13.5	6.8	0.0	5.195
	여자	66.0	19.1	6.4	4.3	4.3	
전공별	경상법정	53.8	11.5	19.2	15.4	0.0	25.106 *
	인문사회	64.5	24.2	6.5	1.6	3.2	
	보건의료	66.7	13.3	13.3	6.7	0.0	
	기타	0.0	100.0	0.0	0.0	0.0	
소속별	대학	63.6	18.2	12.7	5.5	0.0	4.827
	연구기관	63.9	19.4	5.6	8.3	2.8	
	언론사	53.3	26.7	13.3	3.3	3.3	
정치적 성향	보수	63.0	25.9	11.1	0.0	0.0	4.080
	중도	57.5	20.0	10.0	10.0	2.5	
	진보	63.0	18.5	11.1	5.6	1.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59〉 귀하는 전문가로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형평성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규제와 감독체계 개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등급판정 제도의 개선	기타	X ²
전체		43.8	26.4	14.0	10.7	5.0	-
성별	남자	51.4	27.0	9.5	8.1	4.1	6.907
	여자	31.9	25.5	21.3	14.9	6.4	
전공별	경상법정	46.2	34.6	11.5	3.8	3.8	13.004
	인문사회	41.9	17.7	19.4	16.1	4.8	
	보건의료	46.7	36.7	6.7	3.3	6.7	
	기타	33.3	33.3	0.0	33.3	0.0	
소속별	대학	49.1	20.0	12.7	10.9	7.3	12.779
	연구기관	44.4	41.7	8.3	5.6	0.0	
	언론사	33.3	20.0	23.3	16.7	6.7	
정치적 성향	보수	44.4	25.9	7.4	11.1	11.1	8.367
	중도	37.5	30.0	12.5	17.5	2.5	
	진보	48.1	24.1	18.5	5.6	3.7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60〉 귀하는 전문가로서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때 가장 필요한 정부의 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재가요양·돌봄서비스 확대	양질의 요양시설 확대	간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경제적 지원	필요 없음	기타	X ²
전체		62.0	14.9	12.4	9.1	0.8	0.8	-
성별	남자	56.8	18.9	12.2	9.5	1.4	1.4	4.240
	여자	70.2	8.5	12.8	8.5	0.0	0.0	
전공별	경상법정	65.4	15.4	11.5	7.7	0.0	0.0	45.055 ***
	인문사회	61.3	11.3	16.1	9.7	1.6	0.0	
	보건의료	60.0	23.3	6.7	10.0	0.0	0.0	
	기타	66.7	0.0	0.0	0.0	0.0	33.3	
소속별	대학	56.4	21.8	14.5	7.3	0.0	0.0	11.013
	연구기관	69.4	11.1	8.3	8.3	2.8	0.0	
	언론사	63.3	6.7	13.3	13.3	0.0	3.3	
정치적 성향	보수	51.9	14.8	18.5	11.1	0.0	3.7	10.100
	중도	57.5	22.5	12.5	7.5	0.0	0.0	
	진보	70.4	9.3	9.3	9.3	1.9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61〉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단위: %)

구분		매우 낮다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높다	매우 높다	X ²
전체		0.8	4.1	9.1	40.5	38.8	6.6	-
성별	남자	0.0	5.4	9.5	37.8	40.5	6.8	2.830
	여자	2.1	2.1	8.5	44.7	36.2	6.4	
전공별	경상법정	0.0	7.7	11.5	46.2	30.8	3.8	25.467*
	인문사회	1.6	1.6	11.3	40.3	41.9	3.2	
	보건의료	0.0	6.7	3.3	40.0	40.0	10.0	
	기타	0.0	0.0	0.0	0.0	33.3	66.7	
소속별	대학	0.0	3.6	10.9	32.7	47.3	5.5	11.789
	연구기관	0.0	5.6	8.3	55.6	27.8	2.8	
	언론사	3.3	3.3	6.7	36.7	36.7	13.3	
정치적 성향	보수	0.0	7.4	7.4	44.4	29.6	11.1	4.858
	중도	0.0	2.5	7.5	40.0	45.0	5.0	
	진보	1.9	3.7	11.1	38.9	38.9	5.6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62〉 귀하는 전문가로서 각 보건의료정책의 영역의 지난 3년간(2017~2019)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X ²
전체		0.8	4.1	6.6	52.9	24.8	10.7	-
성별	남자	0.0	6.8	8.1	50.0	25.7	9.5	6.049
	여자	2.1	0.0	4.3	57.4	23.4	12.8	
전공별	경상법정	0.0	11.5	11.5	50.0	26.9	0.0	21.704
	인문사회	1.6	1.6	4.8	58.1	24.2	9.7	
	보건의료	0.0	3.3	6.7	50.0	23.3	16.7	
	기타	0.0	0.0	0.0	0.0	33.3	66.7	
소속별	대학	0.0	7.3	7.3	49.1	23.6	12.7	8.110
	연구기관	0.0	0.0	5.6	61.1	27.8	5.6	
	언론사	3.3	3.3	6.7	50.0	23.3	13.3	
정치적 성향	보수	3.7	14.8	3.7	55.6	11.1	11.1	19.029*
	중도	0.0	2.5	7.5	57.5	27.5	5.0	
	진보	0.0	0.0	7.4	48.1	29.6	14.8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63〉 귀하는 전문가로서 각 보건의료정책의 영역의 지난 3년간(2017-2019)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X ²
전체		13.2	19.8	40.5	20.7	5.0	0.8	-
성별	남자	17.6	20.3	32.4	24.3	4.1	1.4	7.983
	여자	6.4	19.1	53.2	14.9	6.4	0.0	
전공별	경상법정	19.2	19.2	50.0	7.7	3.8	0.0	50.212 ***
	인문사회	8.1	19.4	43.5	22.6	6.5	0.0	
	보건의료	16.7	23.3	26.7	30.0	3.3	0.0	
	기타	33.3	0.0	33.3	0.0	0.0	33.3	
소속별	대학	18.2	20.0	34.5	20.0	7.3	0.0	11.518
	연구기관	5.6	16.7	55.6	22.2	0.0	0.0	
	언론사	13.3	23.3	33.3	20.0	6.7	3.3	
정치적 성향	보수	37.0	14.8	25.9	14.8	7.4	0.0	26.702 **
	중도	15.0	22.5	45.0	17.5	0.0	0.0	
	진보	0.0	20.4	44.4	25.9	7.4	1.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64〉 귀하는 전문가로서 각 보건의료정책의 영역의 지난 3년간(2017-2019)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등)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X ²
전체		3.3	11.6	30.6	43.0	10.7	0.8	-
성별	남자	1.4	12.2	28.4	44.6	12.2	1.4	3.669
	여자	6.4	10.6	34.0	40.4	8.5	0.0	
전공별	경상법정	0.0	15.4	30.8	34.6	19.2	0.0	15.222
	인문사회	1.6	9.7	32.3	46.8	9.7	0.0	
	보건의료	10.0	13.3	26.7	43.3	3.3	3.3	
	기타	0.0	0.0	33.3	33.3	33.3	0.0	
소속별	대학	5.5	9.1	20.0	52.7	10.9	1.8	15.746
	연구기관	0.0	5.6	38.9	41.7	13.9	0.0	
	언론사	3.3	23.3	40.0	26.7	6.7	0.0	
정치적 성향	보수	7.4	11.1	29.6	37.0	11.1	3.7	7.625
	중도	2.5	15.0	35.0	40.0	7.5	0.0	
	진보	1.9	9.3	27.8	48.1	13.0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65〉 귀하는 전문가로서 각 보건의료정책의 영역의 지난 3년간(2017-2019)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 확대(자살예방,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등)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X ²
전체		11.6	24.8	34.7	25.6	3.3	0.0	-
성별	남자	9.5	23.0	33.8	29.7	4.1	0.0	2.614
	여자	14.9	27.7	36.2	19.1	2.1	0.0	
전공별	경상법정	3.8	34.6	42.3	19.2	0.0	0.0	15.631
	인문사회	9.7	22.6	35.5	27.4	4.8	0.0	
	보건의료	16.7	23.3	30.0	26.7	3.3	0.0	
	기타	66.7	0.0	0.0	33.3	0.0	0.0	
소속별	대학	10.9	27.3	23.6	32.7	5.5	0.0	15.761 *
	연구기관	2.8	22.2	52.8	22.2	0.0	0.0	
	언론사	23.3	23.3	33.3	16.7	3.3	0.0	
정치적 성향	보수	14.8	22.2	37.0	22.2	3.7	0.0	8.214
	중도	7.5	35.0	40.0	15.0	2.5	0.0	
	진보	13.0	18.5	29.6	35.2	3.7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66〉 귀하는 전문가로서 각 보건의료정책의 영역의 지난 3년간(2017-2019)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 의료서비스 질 개선(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 인력 공급 확충, 공공 의료체계 확충 등)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X ²
전체		13.2	14.0	45.5	23.1	3.3	0.8	-
성별	남자	14.9	9.5	48.6	20.3	5.4	1.4	7.527
	여자	10.6	21.3	40.4	27.7	0.0	0.0	
전공별	경상법정	11.5	7.7	61.5	15.4	3.8	0.0	22.062
	인문사회	11.3	12.9	43.5	30.6	1.6	0.0	
	보건의료	16.7	20.0	40.0	16.7	3.3	3.3	
	기타	33.3	33.3	0.0	0.0	33.3	0.0	
소속별	대학	12.7	12.7	47.3	21.8	3.6	1.8	14.802
	연구기관	2.8	11.1	61.1	22.2	2.8	0.0	
	언론사	26.7	20.0	23.3	26.7	3.3	0.0	
정치적 성향	보수	11.1	11.1	55.6	18.5	0.0	3.7	7.160
	중도	15.0	15.0	40.0	27.5	2.5	0.0	
	진보	13.0	14.8	44.4	22.2	5.6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67〉 귀하는 전문가로서 각 보건의료정책의 영역의 지난 3년간(2017-2019)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따른 대응(어린이집, 경로당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X ²
전체		6.6	22.3	33.9	33.1	2.5	1.7	-
성별	남자	6.8	24.3	25.7	36.5	4.1	2.7	7.993
	여자	6.4	19.1	46.8	27.7	0.0	0.0	
전공별	경상법정	7.7	19.2	46.2	23.1	3.8	0.0	62.876 ***
	인문사회	6.5	22.6	30.6	38.7	0.0	1.6	
	보건의료	3.3	26.7	33.3	33.3	0.0	3.3	
	기타	33.3	0.0	0.0	0.0	66.7	0.0	
소속별	대학	5.5	25.5	27.3	36.4	1.8	3.6	12.826
	연구기관	2.8	16.7	52.8	25.0	2.8	0.0	
	언론사	13.3	23.3	23.3	36.7	3.3	0.0	
정치적 성향	보수	7.4	40.7	18.5	22.2	3.7	7.4	18.608 *
	중도	5.0	15.0	37.5	42.5	0.0	0.0	
	진보	7.4	18.5	38.9	31.5	3.7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68〉 귀하는 전문가로서 각 보건의료정책의 영역의 지난 3년간(2017-2019)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7) 보건의료 위해 대응체계 마련(생활용품 및 식·의약품 불안 등)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X ²
전체		5.8	20.7	40.5	29.8	3.3	0.0	-
성별	남자	4.1	20.3	39.2	32.4	4.1	0.0	1.864
	여자	8.5	21.3	42.6	25.5	2.1	0.0	
전공별	경상법정	0.0	23.1	46.2	26.9	3.8	0.0	23.789 *
	인문사회	3.2	24.2	33.9	35.5	3.2	0.0	
	보건의료	13.3	13.3	50.0	23.3	0.0	0.0	
	기타	33.3	0.0	33.3	0.0	33.3	0.0	
소속별	대학	7.3	21.8	41.8	27.3	1.8	0.0	4.190
	연구기관	2.8	19.4	47.2	27.8	2.8	0.0	
	언론사	6.7	20.0	30.0	36.7	6.7	0.0	
정치적 성향	보수	11.1	29.6	37.0	18.5	3.7	0.0	8.204
	중도	2.5	15.0	47.5	35.0	0.0	0.0	
	진보	5.6	20.4	37.0	31.5	5.6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69〉 귀하는 전문가로서 각 보건의료정책의 영역의 지난 3년간(2017-2019)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웰다잉(well-dying),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X ²
전체		8.3	23.1	31.4	33.1	4.1	0.0	-
성별	남자	5.4	27.0	33.8	29.7	4.1	0.0	4.112
	여자	12.8	17.0	27.7	38.3	4.3	0.0	
전공별	경상법정	0.0	23.1	50.0	26.9	0.0	0.0	16.497
	인문사회	9.7	22.6	27.4	37.1	3.2	0.0	
	보건의료	13.3	23.3	26.7	30.0	6.7	0.0	
	기타	0.0	33.3	0.0	33.3	33.3	0.0	
소속별	대학	7.3	27.3	29.1	29.1	7.3	0.0	12.526
	연구기관	11.1	19.4	44.4	22.2	2.8	0.0	
	언론사	6.7	20.0	20.0	53.3	0.0	0.0	
정치적 성향	보수	7.4	29.6	33.3	22.2	7.4	0.0	8.719
	중도	10.0	12.5	42.5	32.5	2.5	0.0	
	진보	7.4	27.8	22.2	38.9	3.7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70〉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다음의 보건의료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요. 1)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X ²
전체		2.5	6.6	10.7	40.5	32.2	7.4	-
성별	남자	4.1	6.8	12.2	41.9	28.4	6.8	3.356
	여자	0.0	6.4	8.5	38.3	38.3	8.5	
전공별	경상법정	3.8	11.5	11.5	57.7	11.5	3.8	16.064
	인문사회	1.6	4.8	8.1	40.3	37.1	8.1	
	보건의료	3.3	6.7	16.7	30.0	36.7	6.7	
	기타	0.0	0.0	0.0	0.0	66.7	33.3	
소속별	대학	3.6	7.3	9.1	41.8	30.9	7.3	6.500
	연구기관	0.0	5.6	8.3	44.4	38.9	2.8	
	언론사	3.3	6.7	16.7	33.3	26.7	13.3	
정치적 성향	보수	3.7	14.8	18.5	37.0	25.9	0.0	27.656 **
	중도	5.0	7.5	15.0	52.5	17.5	2.5	
	진보	0.0	1.9	3.7	33.3	46.3	14.8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71〉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다음의 보건의료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요. 2)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X ²
전체		0.0	2.5	5.0	27.3	40.5	24.8	-
성별	남자	0.0	4.1	5.4	32.4	36.5	21.6	5.371
	여자	0.0	0.0	4.3	19.1	46.8	29.8	
전공별	경상법정	0.0	3.8	15.4	30.8	30.8	19.2	12.839
	인문사회	0.0	1.6	3.2	25.8	46.8	22.6	
	보건의료	0.0	3.3	0.0	30.0	33.3	33.3	
	기타	0.0	0.0	0.0	0.0	66.7	33.3	
소속별	대학	0.0	3.6	5.5	25.5	38.2	27.3	5.176
	연구기관	0.0	2.8	8.3	30.6	41.7	16.7	
	언론사	0.0	0.0	0.0	26.7	43.3	3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3.7	11.1	14.8	37.0	33.3	6.614
	중도	0.0	2.5	2.5	32.5	37.5	25.0	
	진보	0.0	1.9	3.7	29.6	44.4	20.4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72〉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다음의 보건의료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요. 3)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등)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X ²
전체		0.8	0.0	4.1	35.5	36.4	23.1	-
성별	남자	1.4	0.0	2.7	40.5	31.1	24.3	4.497
	여자	0.0	0.0	6.4	27.7	44.7	21.3	
전공별	경상법정	0.0	0.0	7.7	50.0	30.8	11.5	21.678 *
	인문사회	0.0	0.0	4.8	32.3	46.8	16.1	
	보건의료	3.3	0.0	0.0	30.0	20.0	46.7	
	기타	0.0	0.0	0.0	33.3	33.3	33.3	
소속별	대학	1.8	0.0	7.3	36.4	27.3	27.3	9.092
	연구기관	0.0	0.0	0.0	36.4	48.5	15.2	
	언론사	0.0	0.0	3.3	33.3	36.7	26.7	
정치적 성향	보수	3.7	0.0	7.4	25.9	33.3	29.6	12.283
	중도	0.0	0.0	2.5	52.5	27.5	17.5	
	진보	0.0	0.0	3.7	27.8	44.4	24.1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73〉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다음의 보건의료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요. 4)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 확대(자살예방,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등)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X ²
전체		0.0	0.8	3.3	29.8	34.7	31.4	-
성별	남자	0.0	1.4	4.1	31.1	39.2	24.3	5.213
	여자	0.0	0.0	2.1	27.7	27.7	42.6	
전공별	경상법정	0.0	3.8	7.7	42.3	30.8	15.4	12.719
	인문사회	0.0	0.0	3.2	27.4	35.5	33.9	
	보건의료	0.0	0.0	0.0	26.7	33.3	40.0	
	기타	0.0	0.0	0.0	0.0	66.7	33.3	
소속별	대학	0.0	1.8	5.5	29.1	32.7	30.9	15.313 +
	연구기관	0.0	0.0	2.8	41.7	41.7	13.9	
	언론사	0.0	0.0	0.0	16.7	30.0	53.3	
정치적 성향	보수	0.0	3.7	7.4	25.9	37.0	25.9	17.031 *
	중도	0.0	0.0	0.0	47.5	32.5	20.0	
	진보	0.0	0.0	3.7	18.5	35.2	42.6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74〉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다음의 보건의료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요. 5) 의로서비스 질 개선(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 인력 공급 확충, 공공의료체계 확충 등)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X ²
전체		1.7	0.8	4.1	33.9	33.1	26.4	-
성별	남자	2.7	1.4	6.8	33.8	31.1	24.3	5.631
	여자	0.0	0.0	0.0	34.0	36.2	29.8	
전공별	경상법정	3.8	0.0	7.7	50.0	26.9	11.5	15.779
	인문사회	0.0	1.6	3.2	35.5	35.5	24.2	
	보건의료	3.3	0.0	3.3	20.0	33.3	40.0	
	기타	0.0	0.0	0.0	0.0	33.3	66.7	
소속별	대학	1.8	1.8	7.3	32.7	32.7	23.6	10.781
	연구기관	2.8	0.0	0.0	47.2	27.8	22.2	
	언론사	0.0	0.0	3.3	20.0	40.0	36.7	
정치적 성향	보수	7.4	0.0	11.1	29.6	33.3	18.5	18.879 *
	중도	0.0	2.5	0.0	45.0	32.5	20.0	
	진보	0.0	0.0	3.7	27.8	33.3	35.2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75〉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다음의 보건의료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오. 6)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따른 대응(어린이집, 경로당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X ²
전체		0.8	5.0	11.6	45.5	24.8	12.4	-
성별	남자	1.4	8.1	10.8	48.6	24.3	6.8	9.874 +
	여자	0.0	0.0	12.8	40.4	25.5	21.3	
전공별	경상법정	0.0	11.5	19.2	46.2	19.2	3.8	13.058
	인문사회	0.0	3.2	9.7	50.0	22.6	14.5	
	보건의료	3.3	3.3	10.0	36.7	33.3	13.3	
	기타	0.0	0.0	0.0	33.3	33.3	33.3	
소속별	대학	1.8	1.8	10.9	49.1	23.6	12.7	8.241
	연구기관	0.0	11.1	8.3	41.7	30.6	8.3	
	언론사	0.0	3.3	16.7	43.3	20.0	16.7	
정치적 성향	보수	3.7	3.7	18.5	33.3	22.2	18.5	20.109 *
	중도	0.0	7.5	10.0	65.0	17.5	0.0	
	진보	0.0	3.7	9.3	37.0	31.5	18.5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76〉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다음의 보건의료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오. 7) 보건의료 위해 대응체계 마련(생활용품 및 식·의약품 불안 등)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X ²
전체		0.0	3.3	10.7	43.8	25.6	16.5	-
성별	남자	0.0	5.4	10.8	45.9	25.7	12.2	4.939
	여자	0.0	0.0	10.6	40.4	25.5	23.4	
전공별	경상법정	0.0	15.4	15.4	42.3	23.1	3.8	25.040 *
	인문사회	0.0	0.0	9.7	48.4	24.2	17.7	
	보건의료	0.0	0.0	10.0	40.0	30.0	20.0	
	기타	0.0	0.0	0.0	0.0	33.3	66.7	
소속별	대학	0.0	3.6	10.9	41.8	21.8	21.8	5.878
	연구기관	0.0	5.6	8.3	38.9	33.3	13.9	
	언론사	0.0	0.0	13.3	53.3	23.3	1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7.4	14.8	29.6	22.2	25.9	9.447
	중도	0.0	2.5	12.5	55.0	22.5	7.5	
	진보	0.0	1.9	7.4	42.6	29.6	18.5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77〉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다음의 보건의료정책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요. 8)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웰다잉(well-dying),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X ²
전체		0.0	0.0	7.4	36.4	33.9	22.3	-
성별	남자	0.0	0.0	8.1	41.9	33.8	16.2	4.891
	여자	0.0	0.0	6.4	27.7	34.0	31.9	
전공별	경상법정	0.0	0.0	15.4	46.2	30.8	7.7	13.511
	인문사회	0.0	0.0	3.2	38.7	30.6	27.4	
	보건의료	0.0	0.0	6.7	26.7	43.3	23.3	
	기타	0.0	0.0	33.3	0.0	33.3	33.3	
소속별	대학	0.0	0.0	5.5	41.8	29.1	23.6	3.301
	연구기관	0.0	0.0	8.3	33.3	41.7	16.7	
	언론사	0.0	0.0	10.0	30.0	33.3	26.7	
정치적 성향	보수	0.0	0.0	14.8	37.0	22.2	25.9	6.774
	중도	0.0	0.0	5.0	45.0	30.0	20.0	
	진보	0.0	0.0	5.6	29.6	42.6	22.2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78〉 귀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공공의료 체계 확충	의료전달 체계의 개편	의료 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	의료 인력 공급 확충	의료 기관별 서비스 평가 및 결과 공개	건강 보험 수가 인상	기타	X ²
전체		27.3	20.7	19.0	15.7	9.1	6.6	1.7	-
성별	남자	23.0	21.6	20.3	16.2	9.5	6.8	2.7	2.873
	여자	34.0	19.1	17.0	14.9	8.5	6.4	0.0	
전공별	경상법정	15.4	30.8	19.2	15.4	11.5	3.8	3.8	15.929
	인문사회	35.5	17.7	14.5	17.7	8.1	6.5	0.0	
	보건의료	20.0	20.0	30.0	10.0	6.7	10.0	3.3	
	기타	33.3	0.0	0.0	33.3	33.3	0.0	0.0	
소속별	대학	29.1	18.2	18.2	12.7	10.9	9.1	1.8	10.691
	연구기관	27.8	25.0	22.2	8.3	8.3	8.3	0.0	
	언론사	23.3	20.0	16.7	30.0	6.7	0.0	3.3	
정치적 성향	보수	14.8	18.5	18.5	22.2	11.1	11.1	3.7	9.485
	중도	25.0	20.0	20.0	12.5	10.0	10.0	2.5	
	진보	35.2	22.2	18.5	14.8	7.4	1.9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79〉 귀하는 전문가로서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X ²
전체		0.8	5.0	7.4	30.6	24.8	31.4	-
성별	남자	1.4	6.8	4.1	28.4	27.0	32.4	5.559
	여자	0.0	2.1	12.8	34.0	21.3	29.8	
전공별	경상법정	0.0	3.8	3.8	38.5	23.1	30.8	11.485
	인문사회	0.0	4.8	11.3	33.9	21.0	29.0	
	보건의료	3.3	6.7	3.3	20.0	33.3	33.3	
	기타	0.0	0.0	0.0	0.0	33.3	66.7	
소속별	대학	1.8	9.1	9.1	29.1	30.9	20.0	21.882 *
	연구기관	0.0	2.8	5.6	47.2	16.7	27.8	
	언론사	0.0	0.0	6.7	13.3	23.3	56.7	
정치적 성향	보수	3.7	11.1	11.1	25.9	14.8	33.3	10.941
	중도	0.0	5.0	7.5	35.0	30.0	22.5	
	진보	0.0	1.9	5.6	29.6	25.9	37.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80〉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공공의료 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	공공의료 기관의 양적 확대	공공의료 기관에 대한 거버넌스 일원화	민간의료 기관의 공익적 활동 수행 지원	의료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등 의료비 지원 확대	X ²
전체		30.6	28.1	20.7	16.5	4.1	-
성별	남자	23.0	31.1	23.0	17.6	5.4	5.571
	여자	42.6	23.4	17.0	14.9	2.1	
전공별	경상법정	26.9	23.1	19.2	19.2	11.5	10.055
	인문사회	35.5	25.8	22.6	14.5	1.6	
	보건의료	26.7	33.3	16.7	20.0	3.3	
	기타	0.0	66.7	33.3	0.0	0.0	
소속별	대학	32.7	29.1	23.6	10.9	3.6	5.337
	연구기관	33.3	30.6	13.9	16.7	5.6	
	언론사	23.3	23.3	23.3	26.7	3.3	
정치적 성향	보수	33.3	18.5	22.2	18.5	7.4	4.659
	중도	30.0	27.5	17.5	22.5	2.5	
	진보	29.6	33.3	22.2	11.1	3.7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81〉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의료와 관련한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접근성)

(단위: %)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다소 부정적	다소 긍정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	X ²
전체		0.8	2.5	10.7	31.4	36.4	18.2	-
성별	남자	0.0	1.4	8.1	33.8	40.5	16.2	5.446
	여자	2.1	4.3	14.9	27.7	29.8	21.3	
전공별	경상법정	0.0	0.0	15.4	23.1	53.8	7.7	14.232
	인문사회	1.6	1.6	9.7	37.1	32.3	17.7	
	보건의료	0.0	6.7	10.0	30.0	26.7	26.7	
	기타	0.0	0.0	0.0	0.0	66.7	33.3	
소속별	대학	1.8	1.8	9.1	30.9	34.5	21.8	8.670
	연구기관	0.0	2.8	13.9	30.6	47.2	5.6	
	언론사	0.0	3.3	10.0	33.3	26.7	26.7	
정치적 성향	보수	0.0	0.0	3.7	40.7	40.7	14.8	6.833
	중도	0.0	5.0	15.0	25.0	37.5	17.5	
	진보	1.9	1.9	11.1	31.5	33.3	20.4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82〉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의료와 관련한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보장성)

(단위: %)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다소 부정적	다소 긍정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	X ²
전체		0.0	5.0	11.6	33.9	33.9	15.7	-
성별	남자	0.0	5.4	9.5	33.8	39.2	12.2	3.914
	여자	0.0	4.3	14.9	34.0	25.5	21.3	
전공별	경상법정	0.0	7.7	7.7	46.2	19.2	19.2	6.918
	인문사회	0.0	3.2	14.5	30.6	37.1	14.5	
	보건의료	0.0	6.7	10.0	30.0	40.0	13.3	
	기타	0.0	0.0	0.0	33.3	33.3	33.3	
소속별	대학	0.0	3.6	12.7	29.1	40.0	14.5	16.779 *
	연구기관	0.0	11.1	8.3	50.0	25.0	5.6	
	언론사	0.0	0.0	13.3	23.3	33.3	3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3.7	11.1	37.0	25.9	22.2	5.890
	중도	0.0	7.5	5.0	35.0	35.0	17.5	
	진보	0.0	3.7	16.7	31.5	37.0	11.1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83〉 귀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의료와 관련한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의료의 질)

(단위: %)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다소 부정적	다소 긍정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	X ²
전체		1.7	5.8	12.4	36.4	33.9	9.9	-
성별	남자	1.4	8.1	12.2	32.4	39.2	6.8	6.201
	여자	2.1	2.1	12.8	42.6	25.5	14.9	
전공별	경상법정	0.0	15.4	23.1	30.8	26.9	3.8	24.357 +
	인문사회	1.6	3.2	12.9	37.1	37.1	8.1	
	보건의료	3.3	3.3	3.3	40.0	36.7	13.3	
	기타	0.0	0.0	0.0	33.3	0.0	66.7	
소속별	대학	1.8	3.6	9.1	36.4	43.6	5.5	11.320
	연구기관	0.0	8.3	19.4	38.9	25.0	8.3	
	언론사	3.3	6.7	10.0	33.3	26.7	20.0	
	기타	3.7	0.0	11.1	33.3	40.7	11.1	
정치적 성향	보수	0.0	5.0	15.0	37.5	32.5	10.0	5.060
	중도	1.9	9.3	11.1	37.0	31.5	9.3	
	진보	1.9	9.3	11.1	37.0	31.5	9.3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84〉 귀하는 전문가로서 동네의원 신뢰 및 이용 편리성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충분한 진료 상담 및 관리 강화	의료 수준 향상	상급병원, 타 의료기관과의 연계성 강화	야간, 공휴일 등 진료시간 확대	동네의원 인증 평가제	동네의원 운영확대	의료장비 시설·환경 개선 및 강화	기타	X ²
전체		33.1	25.6	16.5	9.9	9.9	2.5	0.8	1.7	-
성별	남자	32.4	20.3	17.6	10.8	12.2	4.1	1.4	1.4	6.042
	여자	34.0	34.0	14.9	8.5	6.4	0.0	0.0	2.1	
전공별	경상법정	42.3	23.1	7.7	3.8	11.5	7.7	3.8	0.0	21.349
	인문사회	32.3	29.0	14.5	12.9	8.1	1.6	0.0	1.6	
	보건의료	26.7	23.3	30.0	6.7	10.0	0.0	0.0	3.3	
	기타	33.3	0.0	0.0	33.3	33.3	0.0	0.0	0.0	
소속별	대학	27.3	21.8	21.8	12.7	10.9	3.6	0.0	1.8	10.628
	연구기관	44.4	25.0	11.1	5.6	8.3	2.8	2.8	0.0	
	언론사	30.0	33.3	13.3	10.0	10.0	0.0	0.0	3.3	
정치적 성향	보수	18.5	22.2	29.6	14.8	11.1	0.0	0.0	3.7	19.309
	중도	30.0	35.0	12.5	12.5	2.5	5.0	0.0	2.5	
	진보	42.6	20.4	13.0	5.6	14.8	1.9	1.9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85〉 귀하는 전문가로서 의료기관이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환자 존중의 인식 개선	의료 정보 공유 및 제공 확대	치료방법 결정에 환자 참여 증대	환자의 병원 정책 및 프로그램 확대	X ²
전체		47.9	39.7	11.6	0.8	-
성별	남자	50.0	37.8	10.8	1.4	1.061
	여자	44.7	42.6	12.8	0.0	
전공별	경상법정	50.0	42.3	7.7	0.0	8.292
	인문사회	54.8	35.5	9.7	0.0	
	보건의료	33.3	46.7	16.7	3.3	
	기타	33.3	33.3	33.3	0.0	
소속별	대학	50.9	36.4	10.9	1.8	1.870
	연구기관	44.4	44.4	11.1	0.0	
	언론사	46.7	40.0	13.3	0.0	
정치적 성향	보수	37.0	51.9	11.1	0.0	4.809
	중도	47.5	40.0	10.0	2.5	
	진보	53.7	33.3	13.0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86〉 귀하는 전문가로서 저소득층 의료보장성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대상자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의료비 지원 확대 (재난의료비, 긴급의료비 등)	고가 약, 고가 검사 등의 급여 범위 확대	기타	X ²
전체		42.1	30.6	24.0	3.3	-
성별	남자	41.9	28.4	24.3	5.4	2.855
	여자	42.6	34.0	23.4	0.0	
전공별	경상법정	46.2	26.9	26.9	0.0	14.691 +
	인문사회	38.7	32.3	27.4	1.6	
	보건의료	50.0	30.0	13.3	6.7	
	기타	0.0	33.3	33.3	33.3	
소속별	대학	52.7	23.6	21.8	1.8	10.669 +
	연구기관	44.4	33.3	16.7	5.6	
	언론사	20.0	40.0	36.7	3.3	
정치적 성향	보수	44.4	14.8	33.3	7.4	8.561
	중도	32.5	42.5	22.5	2.5	
	진보	48.1	29.6	20.4	1.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87〉 귀하는 전문가로서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의료기관 부당청구 등 사후 관리시스템 구축	재가의료급여 등 지역사회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은 대상자 사례관리 강화 및 사례관리 인력 확충	본인부담금 인상 등 비용인식 제고	기타	X ²
전체		25.6	24.8	23.1	22.3	4.1	-
성별	남자	27.0	24.3	18.9	24.3	5.4	2.724
	여자	23.4	25.5	29.8	19.1	2.1	
전공별	경상법정	26.9	7.7	23.1	42.3	0.0	20.706 ⁺
	인문사회	24.2	29.0	22.6	21.0	3.2	
	보건의료	26.7	33.3	23.3	10.0	6.7	
	기타	33.3	0.0	33.3	0.0	33.3	
소속별	대학	18.2	36.4	23.6	16.4	5.5	12.151
	연구기관	27.8	22.2	19.4	27.8	2.8	
	언론사	36.7	6.7	26.7	26.7	3.3	
정치적 성향	보수	18.5	22.2	33.3	18.5	7.4	25.286 ^{**}
	중도	25.0	10.0	17.5	45.0	2.5	
	진보	29.6	37.0	22.2	7.4	3.7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88〉 귀하는 전문가로서 향후 의료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재정지출 효율화	의료보장성 확대	X ²
전체		62.8	37.2	-
성별	남자	66.2	33.8	0.946
	여자	57.4	42.6	
전공별	경상법정	76.9	23.1	6.622 ⁺
	인문사회	53.2	46.8	
	보건의료	66.7	33.3	
	기타	100.0	0.0	
소속별	대학	56.4	43.6	2.419
	연구기관	63.9	36.1	
	언론사	73.3	26.7	
정치적 성향	보수	74.1	25.9	8.981 [*]
	중도	75.0	25.0	
	진보	48.1	51.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89〉 귀하는 전문가로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질환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등(중증질환 부담완화, 경증질환 부담강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신기술, 고가 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저소득층 및 취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노인성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기타	X ²
전체		57.0	11.6	11.6	9.9	8.3	1.7	-
성별	남자	54.1	12.2	12.2	9.5	9.5	2.7	2.050
	여자	61.7	10.6	10.6	10.6	6.4	0.0	
전공별	경상법정	65.4	11.5	15.4	3.8	3.8	0.0	10.323
	인문사회	51.6	12.9	9.7	11.3	11.3	3.2	
	보건의료	63.3	6.7	13.3	10.0	6.7	0.0	
	기타	33.3	33.3	0.0	33.3	0.0	0.0	
소속별	대학	47.3	12.7	12.7	12.7	12.7	1.8	12.925
	연구기관	75.0	8.3	5.6	2.8	8.3	0.0	
	언론사	53.3	13.3	16.7	13.3	0.0	3.3	
정치적 성향	보수	40.7	11.1	22.2	18.5	3.7	3.7	22.441 *
	중도	80.0	5.0	10.0	0.0	5.0	0.0	
	진보	48.1	16.7	7.4	13.0	13.0	1.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90〉 귀하는 전문가로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환자본인부담 인상 등 비용의식 제고	진료비 지불 제도 개선	국고 지원 확대	건강 보험료 인상	새로운 자원 마련 (의료보장 등)	기타	X ²
전체		29.8	23.1	16.5	14.0	10.7	4.1	1.7	-
성별	남자	25.7	24.3	18.9	14.9	9.5	4.1	2.7	3.493
	여자	36.2	21.3	12.8	12.8	12.8	4.3	0.0	
전공별	경상법정	26.9	38.5	11.5	11.5	7.7	3.8	0.0	32.095 *
	인문사회	33.9	21.0	12.9	14.5	11.3	4.8	1.6	
	보건의료	26.7	16.7	30.0	13.3	10.0	3.3	0.0	
	기타	0.0	0.0	0.0	33.3	33.3	0.0	33.3	
소속별	대학	29.1	23.6	12.7	16.4	12.7	5.5	0.0	15.539
	연구기관	30.6	13.9	27.8	11.1	11.1	5.6	0.0	
	언론사	30.0	33.3	10.0	13.3	6.7	0.0	6.7	
정치적 성향	보수	40.7	18.5	18.5	7.4	7.4	0.0	7.4	20.176 +
	중도	25.0	32.5	22.5	7.5	7.5	5.0	0.0	
	진보	27.8	18.5	11.1	22.2	14.8	5.6	0.0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91〉 귀하는 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생애주기별 인구집단 (모성, 영유아, 노인인구) 건강관리	금연, 절주, 운동 및 영양 등과 관련한 건강생활실천	만성 퇴행성 질환과 발병위험요인 관리	예방접종, 방역 대책 등 감염질환 관리	식중독 등 식품안전, 손상예방, 건강영양평가 등 환경보건 관리	기타	X ²
전체	46.3	36.4	10.7	4.1	0.8	1.7	-
성별	남자	40.5	44.6	6.8	5.4	1.4	9.212
	여자	55.3	23.4	17.0	2.1	0.0	
전공별	경상법정	61.5	30.8	3.8	3.8	0.0	79.623 ***
	인문사회	56.5	29.0	11.3	3.2	0.0	
	보건의료	16.7	60.0	13.3	6.7	0.0	
	기타	0.0	0.0	33.3	0.0	33.3	
소속별	대학	49.1	38.2	7.3	3.6	0.0	6.039
	연구기관	47.2	33.3	13.9	5.6	0.0	
	언론사	40.0	36.7	13.3	3.3	3.3	
정치적 성향	보수	44.4	37.0	7.4	3.7	0.0	18.722 *
	중도	32.5	42.5	15.0	10.0	0.0	
	진보	57.4	31.5	9.3	0.0	1.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92〉 귀하는 전문가로서 국민건강을 위한 라돈침대, 액상 전자담배 등에 대한 정부 개입(제조 및 판매, 수입규제 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다	②	③	④	⑤	⑥ 안전성을 위해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X ²
전체	0.8	3.3	3.3	12.4	28.1	52.1	-
성별	남자	1.4	5.4	4.1	13.5	27.0	4.195
	여자	0.0	0.0	2.1	10.6	29.8	
전공별	경상법정	0.0	7.7	7.7	11.5	38.5	13.799
	인문사회	1.6	1.6	3.2	16.1	27.4	
	보건의료	0.0	3.3	0.0	6.7	23.3	
	기타	0.0	0.0	0.0	0.0	0.0	
소속별	대학	1.8	3.6	1.8	10.9	25.5	3.925
	연구기관	0.0	2.8	2.8	13.9	27.8	
	언론사	0.0	3.3	6.7	13.3	33.3	
정치적 성향	보수	3.7	11.1	11.1	18.5	18.5	24.082 **
	중도	0.0	2.5	2.5	15.0	35.0	
	진보	0.0	0.0	0.0	7.4	27.8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93〉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증대로 인해 죽음의 질 확보를 위한 좋은 죽음(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귀하는 전문가로서 좋은 죽음(웰다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호스피스 (전문안화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질 향상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호스피스 (전문안화의료) · 연명의료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	호스피스센터의 권역별 확대 등 서비스 제공체계 및 기반강화	환자 및 가족 생애말기 준비 지원 (유산기부, 장례, 자서전 등)	X ²
전체		33.1	27.3	15.7	15.7	8.3	-
성별	남자	33.8	25.7	16.2	14.9	9.5	0.655
	여자	31.9	29.8	14.9	17.0	6.4	
전공별	경상법정	46.2	30.8	11.5	7.7	3.8	14.999
	인문사회	25.8	29.0	12.9	19.4	12.9	
	보건의료	36.7	23.3	23.3	16.7	0.0	
	기타	33.3	0.0	33.3	0.0	33.3	
소속별	대학	23.6	29.1	20.0	21.8	5.5	13.801 +
	연구기관	47.2	25.0	2.8	11.1	13.9	
	언론사	33.3	26.7	23.3	10.0	6.7	
정치적 성향	보수	14.8	37.0	25.9	14.8	7.4	7.584
	중도	40.0	22.5	15.0	15.0	7.5	
	진보	37.0	25.9	11.1	16.7	9.3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94〉 귀하는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청소년	청년 (20~30대)	노인 (65세 이상)	아동	중장년 (40~50대)	X ²
전체		46.3	19.8	15.7	9.9	8.3	-
성별	남자	54.1	13.5	14.9	10.8	6.8	7.088
	여자	34.0	29.8	17.0	8.5	10.6	
전공별	경상법정	61.5	11.5	11.5	7.7	7.7	21.744 *
	인문사회	30.6	29.0	17.7	16.1	6.5	
	보건의료	63.3	10.0	16.7	0.0	10.0	
	기타	66.7	0.0	0.0	0.0	33.3	
소속별	대학	45.5	16.4	21.8	5.5	10.9	12.857
	연구기관	44.4	13.9	13.9	16.7	11.1	
	언론사	50.0	33.3	6.7	10.0	0.0	
정치적 성향	보수	51.9	18.5	11.1	3.7	14.8	4.107
	중도	45.0	20.0	17.5	12.5	5.0	
	진보	44.4	20.4	16.7	11.1	7.4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95〉 귀하는 전문가로서 정신질환자(우울증, 조현병 등)에 의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발병 초기 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중재 지원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확대 및 운영지원	자살예방 및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확대	중독관리 통합지원 센터 운영지원	퇴원 후 지속 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정신 질환자의 권익 보호 및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가 트라우마 센터 설치 및 운영	기타	X ²
전체		26.4	20.7	13.2	11.6	11.6	9.9	1.7	0.8	4.1	-
성별	남자	21.6	17.6	14.9	16.2	8.1	12.2	2.7	1.4	5.4	12.096
	여자	34.0	25.5	10.6	4.3	17.0	6.4	0.0	0.0	2.1	
전공별	경상법정	26.9	19.2	7.7	23.1	3.8	15.4	0.0	0.0	3.8	77.947 ***
	인문사회	29.0	22.6	9.7	8.1	16.1	9.7	0.0	0.0	4.8	
	보건의료	23.3	20.0	26.7	10.0	10.0	3.3	3.3	0.0	3.3	
	기타	0.0	0.0	0.0	0.0	0.0	33.3	33.3	33.3	0.0	
소속별	대학	20.0	23.6	21.8	14.5	9.1	7.3	0.0	0.0	3.6	20.195
	연구기관	27.8	19.4	2.8	16.7	11.1	13.9	2.8	2.8	2.8	
	언론사	36.7	16.7	10.0	0.0	16.7	10.0	3.3	0.0	6.7	
정치적 성향	보수	25.9	7.4	14.8	14.8	22.2	7.4	3.7	0.0	3.7	17.732
	중도	32.5	12.5	15.0	10.0	12.5	12.5	2.5	0.0	2.5	
	진보	22.2	33.3	11.1	11.1	5.6	9.3	0.0	1.9	5.6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96〉 귀하는 전문가로서 다음의 감염병 예방 관련 과제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초기격리조치, 조기 역학조사 등 확대	체계적인 감염병 연구 및 전문가 양성	질병관리본부 위상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	무분별한 문병 등 병원문병문화 개선 및 간병 서비스 확충	국제기구와 공조 강화 (WHO, CDC 등과의 협력 강화)	대형병원 환자쏠림 방지 체계 구축	기타	X ²
전체		50.4	19.0	17.4	5.0	3.3	3.3	1.7	-
성별	남자	45.9	21.6	17.6	5.4	2.7	5.4	1.4	4.375
	여자	57.4	14.9	17.0	4.3	4.3	0.0	2.1	
전공별	경상법정	42.3	23.1	15.4	3.8	3.8	11.5	0.0	17.619
	인문사회	51.6	22.6	14.5	4.8	1.6	1.6	3.2	
	보건의료	50.0	10.0	26.7	6.7	6.7	0.0	0.0	
	기타	100.0	0.0	0.0	0.0	0.0	0.0	0.0	
소속별	대학	56.4	16.4	16.4	3.6	3.6	3.6	0.0	13.436
	연구기관	50.0	16.7	19.4	8.3	0.0	5.6	0.0	
	언론사	40.0	26.7	16.7	3.3	6.7	0.0	6.7	
정치적 성향	보수	55.6	25.9	3.7	3.7	7.4	0.0	3.7	16.004
	중도	47.5	10.0	22.5	10.0	5.0	5.0	0.0	
	진보	50.0	22.2	20.4	1.9	0.0	3.7	1.9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5-97〉 귀하는 전문가로서 의료서비스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보건 의료 기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정보통신기술 (ICT)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나노바이오기술 (Nanobiotechnology)	X ²
전체		38.8	35.5	15.7	9.9	-
성별	남자	36.5	36.5	16.2	10.8	0.506
	여자	42.6	34.0	14.9	8.5	
전공별	경상법정	42.3	34.6	15.4	7.7	7.389
	인문사회	41.9	32.3	14.5	11.3	
	보건 의료	26.7	46.7	20.0	6.7	
	기타	66.7	0.0	0.0	33.3	
소속별	대학	40.0	36.4	18.2	5.5	7.579
	연구기관	27.8	44.4	16.7	11.1	
	언론사	50.0	23.3	10.0	16.7	
정치적 성향	보수	29.6	44.4	18.5	7.4	3.406
	중도	37.5	32.5	20.0	10.0	
	진보	44.4	33.3	11.1	11.1	

주: +p<0.1, *p<0.05, **p<0.01, ***p<0.001